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8분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특별분과]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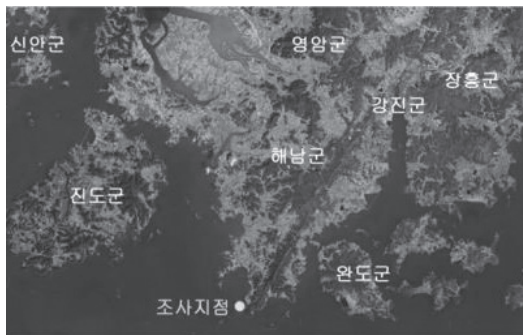
해남 송호리선 고선박 수중발굴조사	노경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섬 해양유산연구의 현황과 향후과제	최유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마도2호선 선형복원을 위한 형상변수 추정	강원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 수중 발굴의 미래	진호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난파해역 문헌자료 분석과 현지조사	김 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산 문화행사 기관협업 사례와 지속 방안	박태훈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섬 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과 전시 활용	김애경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메타버스 플랫폼(ZEP)을 활용한 해양유산 학예연구사 맞춤형 진로 체험 교육 사례 :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표수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25년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 사례와 활용방안	신주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청동 유물의 제작 기법 연구	강승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디지털 기록화 관리 일원화 프로그램 개발	최재완 양순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신안선의 열화물과 재처리 방안 연구	박창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 출수 닻돌의 암종 분류와 연구 방향	임성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중부해역 수중문화유산 탐사 현황과 과제	김하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남 송호리선 고선박 수중발굴조사

노 경 정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I. 조사개요

해남 송호리선(松湖里船)은 2023년 5월 22일 송호해수욕장 인근에서 무인항공기(드론) 촬영을 하던 개인 연구자에 의해 발견·신고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신고자는 간조기(干潮期)에 해변에 노출되어 있던 선체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신고하였다. 신고해역은 해수욕장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인 5월 23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노출된 선체의 좌우 외판(外板)에서 나무못을 사용한 흔적과 가룽목(加龍木)이 확인되는 등 일반적인 전통 한선(韓船)의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해남군청 문화예술과에서 발굴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선체의 훼손을 막기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보호조치는 노출된 선체가 파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선체 외부에 모래마대를 쌓고, 부직포를 선체 전면에 덮어 간조에 노출 및 건조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였다. 또한 부직포 위에 그물망을 씌워 선체와 유물의 유실을 방지하였다.



조사해역 위성사진



조사해역 세부 위성사진

II. 조사방법 및 내용

송호리선이 매몰되었던 해역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 내 조간대(潮間帶) 해역으로, 북쪽으로는 송호항(松湖港)이, 남동쪽으로 갈두항과 땅끝마을이, 서쪽으로는 서화도(西花島)와 함께 양식장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고선박을 중심으로 20×30m 범위의 조사구역을 설정하고, 노출된 고선박에 1×1m 크기의 그리드를 장축 17m, 단축 8m로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지점은 조간대 내에서도 가장 바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한 달 중 약 5일 정도만 드러나는 극히 제한적인 노출시간을 보인다. 또한 만조기(滿潮期)에도 수심이 최대 3m 이하로 조사선박과 수중발굴전용 바지선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간대 조사 방법이나 수중발굴조사 방법으로는 원활한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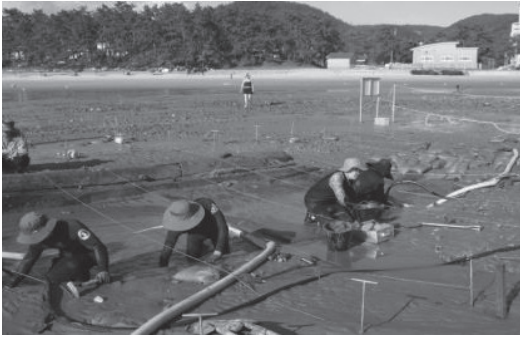


송호리선 최초 노출 상태



파도막이 및 바지선 설치

발굴조사는 현지조사를 마치고 약 한 달 후인 2023년 6월 26일 착수해 같은 해 9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앞서 파도에 의한 선체 훼손을 막기 위해 선수부(船首部) 외곽에 모래마대와 톤백을 이용하여 파도방지막을 설치하였다. 또한 송호리 어촌계의 도움을 받아 약 8×5m 크기의 소형바지선을 현장에 설치하였다. 선체 전면이 노출되는 기간은 7.2.~7.7.(6일간), 8.1.~8.5.(5일간), 8.30~9.3.(5일간)까지로 조사기간 중 1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만 하루 1시간 내외로 노출되었다.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수중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제토(除土)를 진행하였으며, 노출기간에는 삽과 호미 등을 이용하여 제토하고 금속탐지기, 3D 촬영, RTK-GPS(Real Time Kinematic-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 등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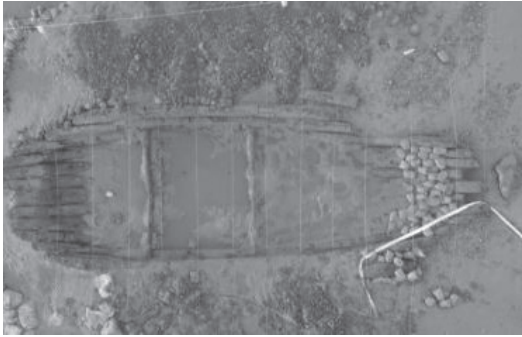
선체 내부 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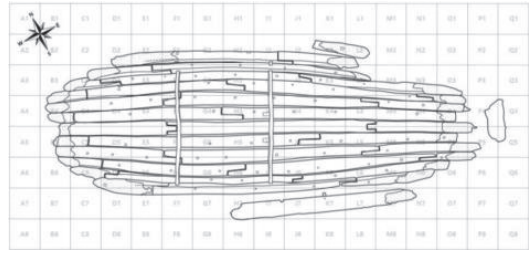
RTK-GPS 측량

선체가 매몰된 해역의 저질상태는 입자가 작은 모래층이 매우 단단하게 쌓여있어 양수기를 이용한 수중제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제토를 진행하기 전에 워터제트(water jet)를 이용하여 모래층을 분쇄한 뒤 양수기와 소형 슬러지펌프로 모래를 제토하였다. 제토조사는 선체 내부 가용목 등의 구조물과 다수의 원통목으로 인해 트랜치조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면 제토를 실시하였다. 송호리선에 대한 실측과 위치정보 기록은 대부분 선체가 노출되는 기간에 맞춰 진행하였다. 우선 RTK-GPS 장비를 이용해 선체 외곽 및 유물 출수지점의 위치정보를 기록하였으며, 무인항공기(드론)와 카메라를 이용해 선체 3D 실측을 진행하였다. 다만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선체 전면에 대한 제토가 완료되기 전에 외판부재를 먼저 인양하게 되어 선체가 온전히 제토된 상태에서의 3D 실측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체 실측도면은 기존에 촬영된 외판의 자료와 저판(底板)만 남은 상태에서 촬영된 자료를 이어 붙여 작성하였다. 또한 3D 스캐너를 이용해 선체의 3D 실측을 시도했으나 습기로 인해 반사되어 손실되는 자료가 많고, 너무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입력되어 프로그램을 통한 원활한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중단하였다.

한편 선체 노출 및 미노출 시에 드론 라이다(LiDAR)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영상을 취득하였다. 라이다는 반사되는 레이저 빔의 시간을 측정해 3D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선체가 수중에 있을 때는 해수의 높은 탁도와 해수면의 반사로 인해 선체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선체가 노출되었을 때는 반사도 차이를 통해 저질상태 구분이 가능하였다.



해남 송호리선 매몰 및 제토 상태



해남 송호리선 실측도면

선체의 인양은 외판부재를 서로 연결한 피삭(皮槩)과 저판을 연결한 장삭(長槩)을 톱으로 자른 뒤 부재 하나씩 인양하는 방식인 해체인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해체한 부재는 노출건조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부직포를 전면에 덮고 그 위에 비닐로 다시 덮어 포장하였다. 조사지점에는 화물 적재용 기중기(카고크레인)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체한 부재에 부력재를 달아 조사지점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송호항까지 이동시킨 후 기중기 차량에 상차하였다. 이후 선체 부재들은 국립해양유물연구소 보존처리시설로 이동하여 탈염(脫鹽)작업이 진행 중이다.

선체 내부의 조사가 완료된 후 해저면이 노출되었던 9월 2일에는 선미와 우현 외곽에 2×15m 크기의 트랜치를 구획하고 제토를 진행하였다. 트랜치 내부에서는 추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토층 역시 교란되어 있는 상태였다. 선체 인양 후에는 선수와 선미부에 각각 6~70cm 정도 깊이로 해저면 퇴적층을 시추(coring)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송호리선은 좌현 외판 2단, 우현 외판 3단, 저판 7열이 남아있었으며, 잔존최대 길이 13.4m, 잔존최대너비 4.7m로 기존에 조사되었던 고선박¹⁾과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선체는 북서(선수)-남동(선미)방향으로 기울어짐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매몰되어 있었다.

- 1) 십이동파도선 저판 3열, 잔존길이 약 7m, 잔존너비 약 2.5m
달리도선 저판 3열, 잔존길이 10.5m, 잔존너비 2.7m
안좌선 저판 3열, 잔존길이 14.7m, 잔존너비 4.5m
마도4호선 저판 3열, 잔존길이 약 12m, 잔존너비 약 5m
대부도2호선 저판 4열, 잔존길이 9.15m, 잔존너비 2.9m
대부도1호선 저판 5열(추정), 잔존길이 6.6m, 잔존너비 1.4m
완도선 저판 5열, 잔존길이 7.3m, 잔존너비 3.4m
마도3호선 저판 5열, 잔존길이 약 12m, 잔존너비 약 4m
마도1호선 저판 7열, 잔존길이 10.8m, 잔존너비 3.7m
마도2호선 저판 7열, 잔존길이 12.6m, 중심폭 4.4m

좌현 선미부(船尾部) 외곽에는 키(舵)가 약 1.8m 정도 노출된 상태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우현 선미부 외곽에는 탈락된 외판부재 1편이 약 1.6m 정도 노출된 상태로 매몰되어 있었다.

송호리선은 크고 두꺼운 목재를 일부분만 가공하여 사용한 선박으로 가장 무거운 부재는 길이 651cm, 너비 56cm, 두께 45cm이며, 무게는 1,335kg에 달한다. 선체 중앙과 선수부에는 가룻목이 삽입되어 있었다. 가룻목은 선수쪽에서 상하(上下) 2점, 중앙쪽에서 1점이 확인되었는데, 선수 쪽 상부에 위치한 가룻목은 심각한 부식에 의해 훼손되어 있었다. 외판의 결구방식은 좌·우 부재 연결은 상하반턱이음방식을 사용하였고, 상·하단 부재 연결은 기존 고선박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홈붙이클링커이음방식이 아니라 홈이 없이 바로 부재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저판의 결구방식은 대부분 좌우반턱이음방식이었으며, 중앙저판을 턱걸이장부이음방식으로 연결하였고, 선수 일부에서는 맞댄이음방식도 확인된다. 중앙저판을 사이에 두고 좌·우저판 1열에는 각각 돛대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인 구레짝의 구멍이 하나씩 확인되었다. 두 구멍의 사이가 72c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돛대의 두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선체 외곽에 매몰되어 있던 키는 574cm 길이이며, 좌현 선미부에서는 약 1.5m 길이의 목재 닻이 발견되었다.

Ⅲ. 출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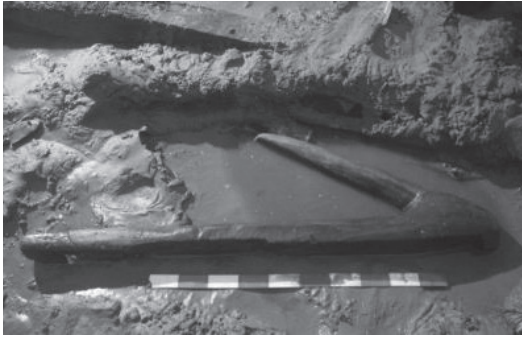
해남 송호리선 수중발굴조사에서 출수된 유물은 선체를 제외하고 총 18점이다. 선체 내부에서는 11점의 유물과 함께 선체 하부에 받침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소형 원통목이 확인되었다.

출수된 유물들은 가룻목이 위치한 F와 I그리드 사이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목재 닻, 도기호, 숯돌, 기와, 닻돌, 녹각 등이 있으며,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석판도 다수 출수되었다. 이 중 도기호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씨앗이 발견된 것도 있다. 또한 선체편 사이에서 수밀재(水密材)로 추정되는 유기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현장에서 선체편 및 나무못, 선체 내부에서 확인된 조개껍질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남 송호리선의 건조 및 사용시기는 11세기 초에서 12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도·토기	기와	석재	목재	금속	골각	합계
5점	3점	6점	1점	2점	1점	18점

해남 송호리선 수중발굴조사 출수유물 현황



목제 닻



닻돌



도기호



녹각

IV. 맺음말

해남 송호리선 수중발굴조사는 2023년 5월 22일 해변에 노출되어 있던 선체 일부에 대한 발견·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발견된 선체는 송호해수욕장 내 조간대에 위치하고 있어, 발굴조사는 일반적인 조간대 발굴조사 방법과 수중발굴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는 고선박을 중심으로 20×30m 범위의 조사구역을 설정하고 노출된 고선박에 1×1m 크기의 그리드를 장축 17m, 단축 8m로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선체가 잠겨있는 기간에는 워터제트와 양수기, 슬러지펌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제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체가 노출되는 기간에는 삽, 호미 등으로 제토를 진행하였다. 유물에 대한 기록은 RTK-GPS 측량을 통해 위치정보를 획득했으며, 매우 불량한 시야로 인해 수중실측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체가 온전히 노출되는 기간에 무인항공기(드론)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3D 촬영을 실시하였고, RTK-GPS 측량을 통해 매몰된 선체의 전반적인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다. 선체의 인양은 부재 간 연결되어 있는 장식과 피삭을 절단하여 인양하는 방식인 해체인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양된 선체들은 현재 국립해양

유산연구소에서 탈염작업이 진행 중이다.

송호리선은 좌현 외판 2단, 우현 외판 3단, 저판 7열이 남아있었으며, 잔존최대길이 13.4m, 잔존최대너비 4.7m로 기존에 조사된 선박과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반면 출수된 유물은 선체를 제외하고 총 18점에 불과하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선체편들에 대한 세부실측 및 3D 복원과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해남 송호리선 수중발굴조사는 86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두 번의 조사기간 연장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조사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값진 경험을 얻었으며, 노출시간이 극히 짧은 조간대 조사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송호리선은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뿐만 아니라 선박의 역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 해양유산연구의 현황과 향후과제

최 유 리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머리말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약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67개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섬¹⁾이다.

이들 섬은 고유한 생태계는 물론,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독특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있어 ‘해양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섬 지역 인구의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섬 지역의 전통과 생태, 공동체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07년부터 공도화 되어가는 작은 섬에 대한 해양유산의 기록을 목적으로 매년 1~2개의 섬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와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역사성을 지닌 섬을 중심으로 조사방향을 전환하였다. 하지만 조사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현재(2025)에 이르기까지 24개의 섬을 조사하였다.

한국섬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유인섬 현황조사로 본 우리나라 유인섬의 현황』에 의하면 500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는 섬이 397개로, 그 중 10~49명인 유인섬이 144개, 100~499명인 유인섬이 117개, 50~99명인 유인섬이 69개, 10명 미만의 유인섬이 67개라고 한다. 이 중 100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는 280개의 섬은 인구소멸로 공도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섬 해양유산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섬진흥원, 『2021~2024 한국섬진흥원 출범 3년 백서』, 2024

2. 섬 해양유산의 현황

2-1. 섬 해양유산의 개념과 중요성

‘해양유산’이란 해양과 관련된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유산(어업문화, 민속, 전통지식, 신앙 등)과 섬이 가진 자연유산(해양생태, 지형, 기후 등)을 포함한다. 섬은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서 이러한 유산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공간으로, 그 안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해양유산을 형성시켜 왔다는데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약 3,300여 개의 섬 중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467개이다.

그 중 가장 큰 섬은 제주도로 그 자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이룰 정도로 큰 섬이다. 유인섬의 보유는 전라남도가 272개로 압도적인 많은 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77개, 인천광역시 40개, 충청남도가 34개, 전라북도가 25개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은 10개 미만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연번	구분	유인섬	해당 지자체(기초)	비고
1	인천	40	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5	안산시(단원구), 화성시	
3	충남	34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4	전북	25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5	전남	272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6	경북	3	울릉군	
7	경남	77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8	부산	3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9	제주	8	제주시, 서귀포시	본도 제외
합계		467	41개 기초단체/9개 광역, 15개시 22개군 4개구	

※ 한국섬진흥원 유인섬 현황(2022년, 467개) 기준으로 작성
 〈참고자료〉 한국섬진흥원, 『2021-2024 한국섬진흥원 출범 3년 백서』, 2024.8.

이렇다 보니 전라남도가 섬에 대한 정책, 학술연구 등이 제일 활발한 편이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역시 총 24개의 조사대상 섬 중 16개가 전라남도의 섬이며, 경상남도 3개, 인천광역시 3개, 충청남도 1개, 전라북도 1개의 섬을 조사하였다.

2-2. 섬 해양유산 조사·연구

섬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유산조사·연구는 극히 일부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등 익히 알려진 큰 섬이나, 지정유산이 있는 섬들은 관련 주제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하나의 섬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황해섬네트워크와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통한선과 어로민속'이라는 주제로 영광 낙월도, 신안 가거도, 제주도, 강화도, 관매도, 추자도, 태도, 울릉도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권의 보고서와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초창기 섬 조사는 공도화 되어가는 작은 섬에 대한 해양유산의 기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다년간의 섬 조사 결과를 통해 작은 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는 역사적 고증과 활용을 위한 다각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총 24개의 섬을 조사하였다.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를 시작으로 우이도, 수치·사치도, 옥도, 병풍도, 재원도, 반월·박지도, 가거도, 고이도, 매화도²⁾, 영광군 안마도, 완도군 여서도, 여수시의 거문도, 진도군의 관매도 16개, 경상남도 상·하 노대도, 두미도, 전라북도 위도, 충청남도 원산도, 인천 덕적도·소야도·문갑도를 조사하였다.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은 『도서관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로 신안군 압해면, 비금면, 흑산면, 도초면, 안좌·팔금면,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하의면, 신의면, 암태면, 자은면, 장산면편을 발간하였다. 황해섬네트워크는 인천지역 섬 대상으로 『황해섬 연구총서 발간』를 발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대청도, 백령도, 장봉도, 연평도·소연평도, 승봉도 편을 발간하였다. 또한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서해 영해기점 도서인 서격렬비도, 소령도, 어청도, 직도(소피도), 상왕등도, 횡도, 고서, 홍도, 소국홀도, 소흑산도(가거도)를 대상으로 역사, 어업활동 중심으로 한 권의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400개가 넘는 전체 유인도 수에 비한다면 해양유산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각 기관별 조사 연구진행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섬 해양유산조사가 인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연유산의 심도깊은 조사는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매화도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2025년 말 보고서 발간 예정

3. 섬 해양유산조사의 향후 과제

섬은 현재 도심화로 인한 인구소멸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형 및 해양 생태계 등이 변화될 위기에 놓여있어 현재 남아있는 해양유산의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인도 467개 중 100여개³⁾만이 조사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 내용·결과 역시 조사를 진행한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 섬 해양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융합되어 이루어져 있지만, 자연유산은 별도의 조사연구로 이루어져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문화유산의 조사 역시 개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1. 통합적 연구·관리체계 구축

섬 해양유산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와 이 데이터들의 능동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야 한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유산 관련 생태·문화·역사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융합적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양유산 관련 국공립대학 및 조사연구기관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성 필요하다. 해양학, 인류학, 민속학, 생물학 등 연구관련 분야 뿐 아니라 해양유산 정책 관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 해양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화하여야 한다. ‘섬 해양문화유산 보호법’과 같은 전담 법률의 제정하여 섬 해양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디지털 기록 및 콘텐츠화

최근 연륙교가 놓여지는 섬이 늘어나고 있으나, 섬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섬 지역의 해양유산 보존을 기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소멸 위기에 놓인 전통지식과 생활문화는 현장감을 살린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보존하고, 전승을 위한 교육·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산업화 관련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3) 도서문화연구원의 조사보고서 내 유인섬 수는 〈한국섬진흥원, 『2024년 유인섬 현황조사로 본 우리나라 유인섬의 현황』, 2024, p34〉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4. 결론

섬 해양유산은 현재 도심화로 인한 인구소멸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형 및 해양 생태계 등이 변화될 위기에 놓여있어 현재 남아있는 해양유산의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조사는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해양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해양유산 관련 생태·문화·역사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가 시급하며, 융합적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양유산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통합적 연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산조사보고서(일괄), 2007~2024
 국립해양박물관, 『서해 영해기점 도서』, 2017
 한국섬진흥원, 『2021~2024 한국섬진흥원 출범 3년 백서』, 2024
 한국섬진흥원, 『2024년 유인섬 현황조사로 본 우리나라 유인섬의 현황』, 2024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누리집(<http://island.mokpo.ac.kr>)
 황해섬네트워크 누리집(yellowseaside.com)

마도2호선 선형복원을 위한 형상변수 추정

강 원 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마도2호선 잔존현황

태안해역은 우리나라 선박사 규명에 필요한 중요한 실증 자료가 발견된 곳으로 우리나라 수중 유산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2007~2008년 태안군 근흥면 대섬 해역에서 12세기로 추정되는 태안선을 시작으로 마도 해역에서는 2009~2011년 세 척의 고려시대(13세기) 선박이 확인되었고 2015년에는 조선시대(15세기) 선박인 마도4호선이 확인되었다.

마도2호선은 마도 해역에서 확인된 두 번째 선박으로 동반 출수된 목간을 통해 배에 실린 화물의 발송지가 무송현·고창현·장사현과 고부군으로 밝혀졌다. 또 이극서명 죽찰을 통해 마도2호선이 1219년 이전에 오늘날 전북 고창과 정읍 일대에서 출항하여 항해 중 침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

마도2호선의 잔존 규모는 전장 12.6m, 선폭 4.4m이며, 저판 21편, 외판 20편으로 총 41편이 남아있었고 가룻목(5점), 원통목(7점), 닻구조물(1점), 닻돌(1점)이 출수되었다.

저판은 7열이 맞대어 연결되어 있고 선수가 선미보다 비교적 넓다. 저판의 선수·선미는 부후로 유실되어 원길이는 확인할 수 없다. 저판재 크기는 부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길이 99~719cm 너비 33~47cm, 두께 30~38cm이다. 중앙저판은 3편으로 장부이음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2번 부재에 구레짝 홈이 있다. 좌·우저판은 1·3열을 맞댄이음, 2열을 반턱이음과 맞댄이음 방식으로 3편씩 연결하고 있다.

외판은 좌현 2단, 우현 5단까지 남아있으며, 중앙부 2단과 4단에는 차가룻이 걸쳐지고 상·하단은 클링커 이음 방식으로 연결하였다. 선체 내부에서 다량의 원통목이 발견되었고 이는 횡강력 유지, 화물 받침, 선내 구획 등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1) 『태안 마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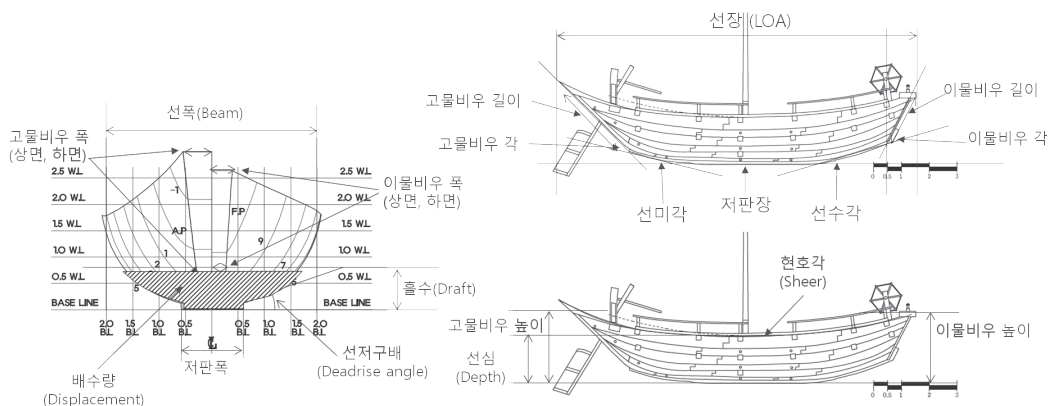
2. 선형복원을 위한 형상변수 정의 필요성

지금까지 수중발굴된 고선박들은 우리나라 선박사 규명과 전통한선 구조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들 고선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잔존선체에 대한 정밀실측 데이터에 기반하여 해당 고선박의 선형을 복원하고 상세설계와 조선공학적 분석 및 3D 모델링 과정을 거쳐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그 원형과 구조 등을 밝히고 있다.²⁾ 특히 선형복원은 대상 선박의 기본적인 형상과 구조를 밝히는 과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상세설계와 조선공학적 분석의 결과값이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고선박이 선저부를 중심으로 잔존해 있는 만큼 한정적인 데이터만으로 그 전체 형태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선박 데이터 모두를 몽둥그려 한 선박에 적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표 1. 선형복원을 위한 형상 변수 Table

항목	선장 (LOA)	선폭 (Beam)	선심 (Depth)	선저구배 (Deadrise angle)	저판장	저판폭
항목	선수각	선미각	이물비우 높이	고물비우 높이	이물비우 각	고물비우 각
항목	이물비우 길이	고물비우 길이	이물비우 폭	고물비우 폭	현호각	배수량 (Displacement)
항목	흘수 (Draft)					



〈그림 1〉 선형복원을 위한 형상변수

2) 이러한 연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 연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마도2호선의 선형 복원 방법으로서 이전 완도선 사례를 들어 선형 복원에 필요한 형상 변수 정의와 잔존선체 및 동시대 선박, 기하학적 치수비와 모델링에 따른 통계 산출 과정과 도출된 선형의 조선공학적 분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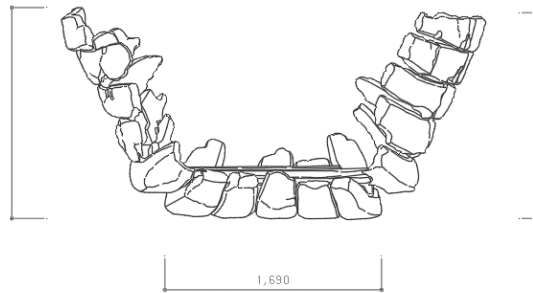
3. 완도선 사례를 통한 형상변수 추정

완도선은 선체 잔존상태가 보다 양호하여 기본 데이터가 충실한 편이다. 따라서 잔존선체 정밀 실측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저판폭과 선저구배, 선수·선미각 등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기 연구된 십이동파도선과 동시대 선박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기하학적 치수비와 모델링에 따라 Length, Beam, Depth 등 선형 및 배수량을 도출하였다.

마도2호선도 선체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저판폭과 선저구배, 선수·선미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형상 변수 산출을 위하여 마도1·3호선, 경우에 따라 선수재가 확인된 십이동파도선, 최근에 확인된 해남선 연구데이터를 추가하고 기하학적 치수비와 모델링에 따라 남은 변수 값을 도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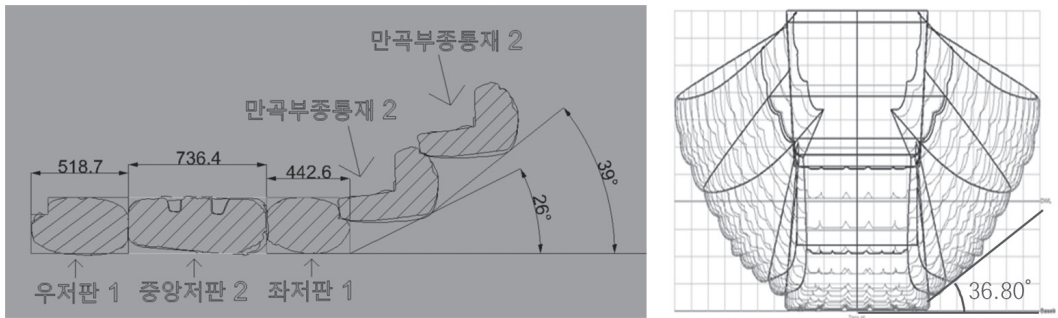
각각의 형상 변수가 완도선에서는 어떻게 정의되고 도출되었으며, 마도2호선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살펴보겠다.

저판폭은 저판 중앙의 가장 넓은 치수이다. 완도선 잔존선체 정밀실측 결과에 따라 도출된 1.695m 값을 적용하였고 마도2호선 또한 정밀실측 결과에 따른 중앙부 치수 2.71m를 적용할 예정이다. 완도선 저판은 5열인 반면에 마도2호선 저판은 7열로 구성되어 있어 약 1m 정도 차이가 있다. 다만 장식으로 결구하는 방식이나 이음방법, 평저형 저판은 동일하다.



〈그림 2〉 완도선 저판폭 정의

선저구배는 저판에서 선측으로 이어지는 경사에 대한 치수이며, 완도선은 두 가지 안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정밀실측 형상을 바탕으로 선저판과 만곡부중통재의 조립 결과에 따라 우현의 선저구배 값 36° 를 1안으로 추정하였다. 두 번째 값은 유사 시기의 고려시대 선박인 십이동파도선, 마도1·2·3호선의 선저구배 통계값 36.95° 를 추정하였다.



〈그림 3〉 십이동파도선(左)과 마도1호선(右)의 선저구배

선수·선미각은 저판이 Base line에서 선수재와 선미재의 하단과 맞닿은 부분까지의 각도이다. 정밀실측 데이터를 통해 완도선의 선수·선미각을 확인하였으며, 마도2호선 또한 정밀실측 데이터를 통해 그 값이 확인 가능하다. 그 값은 선수각 24° , 선미각 17° 이다.



〈그림 4〉 완도선 저판 우측면 정밀실측(3D스캔) 이미지

저판장과 선장은 말그대로 저판과 선체 길이이다. 기본적으로 저판장은 정밀실측 결과에 따라 측정이 가능하나 선수 선미가 일정부분 훼손된 것을 고려한다면 정밀실측값 이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완도선은 유사시대 고선박 데이터에 기반하여 저판장을 추정하였으나 저판 열수와 선형 특성 차이를 감안하여 3가지 안을 도출하였다.

마도2호선의 경우 마도1·3호선 저판의 장폭비를 토대로 추정하고자 하나 마도1호선은 선수·선미가 일부 유실되어 정확한 결과값 도출이 어렵고 마도3호선은 저판이 5열로 이루어져 있고 저판 선형이 달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선박 대부분이 상부구조가 유실된 상태로 발굴되는 만큼 선장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완도선의 경우 십이동파도선, 마도1호선, 달리도선을 대상으로 선장과 저판장 비율의 통계치를 산출하고 이를 저판장 1, 2안에 대입하였고 세 번째 안은 선체 모델링 완료 후 산출된 선장을 도출하였다. 마도2호선의 선장은 3차원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추정할 예정이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는 저판장, 이물비우와 고물비우의 높이·각도 등이다.³⁾

선펙은 선박의 가장 넓은 부분의 폭으로 갑판 혹은 현호 중 가장 넓은 부분의 우현 끝에서 좌현 끝까지의 치수로 정의할 수 있다. 선심은 선박의 깊이로 선체 중앙부 지점에서 측정하며, Base Line에서부터 갑판 하면까지의 치수이다. 완도선의 선펙과 선심은 십이동파도선, 마도1호선의 통계계를 활용하여 선박의 기하학적 치수비인(L/B, B/D)를 산출하고 이를 대입해 두 가지 안으로 추정하였다.⁴⁾

선수재와 선미재 각도는 각각 Base Line과 이루는 각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완도선은 십이동파도선과 마도1·3호선의 선수재, 선미재 각도 통계치를 기반으로 두 가지 안을 도출하였으나 자문회의를 거쳐 1안 결과값만을 적용하였다. 마도2호선의 선수재, 선미재 각도는 마도1·3호선 데이터 통계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선수재와 선미재의 높이는 Base Line을 기준으로 선수재와 선미재 상단 끝의 높이로 정의하였다. 선수재와 선미재의 높이는 선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완도선의 경우 십이동파도선과 마도1호선의 비율을 통해 추정하였고 두 가지 안으로 도출하였다. 마도2호선의 경우 마도1호선의 비율(1.05)을 적용해 각각의 높이를 추정할 계획이다.

선수재와 선미재의 길이는 각 부재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직선거리로 정의하였으며 완도선은 유사시대 선박의 통계와 앞서 결정된 주요제원을 활용하여 두 개의 안으로 결정하였다. 1안은 십이동파도선과 마도1호선의 통계에 기반하여 형상학적(3D 교차점)으로 길이를 결정하였으며, 2안은 마도3호선 저판폭에 기반한 저판장 추정치와 앞서 추정한 선수·선미각, 선수·선미재 각도 및 높이 등을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선수재와 선미재 상·하면폭은 각 부재의 좌우측 최대 거리로 상부와 하부의 치수가 다르므로 이를 나누어 정의하였다. 도출된 완도선의 저판과 외판의 확장 결과와 더불어 선수재·선미재의 길이를 고려하여 1안을 결정하였고 저판열의 수가 동일한 마도3호선의 비율을 활용하여 2안을 결정하였다.

현호각은 선체를 측면에서 볼 때 곡선을 이루는 상갑판의 선측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장과 현호의 길이 비율 LOA/Lsheer로 표현한다. 선체 중앙의 현호 높이와 갑판의 높이는 동일하고 완도선 상부가 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유사시대 선박 중 선형복원이 완료된 십이동파도선과 마도1호선의 현호각을 통계화하여 결정하였다.

3) 저판의 선수·선미각 또한 선장 추정에 영향을 미치나 정밀실측 데이터를 통해 선수각 24°, 선미각 17°로 정의하였다.

4) 기하학적 치수비에 따라 추정된 값이 유사한 경우

4. 맺음말

2024년 해남 송호리선이 발굴되면서 고려시대 선박은 17척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선박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마도4호선 발굴조사 이후 미뤄두었던 선체편 인양이 현재 진행 중이며, 마도3호선도 이어서 인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도2호선 뿐만 아니라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연구에 있어서 실물 자료가 풍부할수록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선형복원을 통해서 향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전통 한선의 변화과정을 면밀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수중 발굴의 미래

진 호 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976년 세기적 신안선 발굴 이후 한국의 수중 발굴은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30여건의 수중 발굴과 함께 15척의 고 선박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수중 발굴은 신안선 이후 1984년 완도선 발굴까지 수중고고학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92년 진도선 발굴을 시작으로 무안 도리포, 군산 비안도, 군산 십이동파도선, 군산 야미도 발굴 등을 경험하면서 장비의 혁신과 함께 방법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07년 태안선 발굴 이후 마도 1·2·3·4호선 발굴은 신안선 이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유래 없는 발굴의 르네상스기를 맞이하면서 태안 보존센터의 건립과 함께 수중 출수 유물의 다양한 연구로 커다란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 글은 지난 50년간 한국 수중 발굴이 경험한 몇 가지 특징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수중발굴이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1. 據點亭 유형

고려시대 중국 남방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기착지에서 송원대의 도자기들이 출수 되었다. 송원대 중국 남방에서 개경으로 가는 가장 전통적인 뱃길은 천주-명주(경원)-흑산-군산-안흥-영종-예성강을 연결하는 항로이며 이러한 바닷길의 주요 기착지에서 수중발굴이 실시 되었다. 흑산도에는 중간기착지 흑산정(黑山亭)이라는 객관이 있었고, 고군산군도에는 군산정(群山亭), 태안 마도에는 안흥정(安興亭), 영종도에는 경원정(慶源亭), 예성강 입구에는 벽란정(碧瀾亭) 위치하여 중국과 개경을 오가는 주요 거점 역할을 하였다. 흑산 대둔도, 군산 선유도, 태안 마도 수중 발굴은 직접적 거점정(據點亭) 발굴의 유형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신안선, 비안도, 12동파도선, 야미도, 태안선, 영흥도선, 대부도선, 원산도 발굴도 거점정에 가까운 수중발굴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거점정은 물자와 인력이동의 중심축이 되며 대부분의 대형발굴이 이러한 거

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이 예성강 입구의 碧瀾亭 유형의 수중발굴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 만월대와 같이 수중유적을 공동으로 발굴한다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나타난바와 같이 예성강 입구에는 좌벽란정과 우벽란정이 있어 사신들이 거쳐갔던 육상유적도 존재한다. 이러한 육상유적도 남과 북이 공동발굴을 할 수 있다.

黑山亭 인근의 수중유적으로 대둔도 수중유적이 있다. 대둔도는 흑산정의 직접적 근거리의 유적은 아니지만 송원대 유물이 출수되어 많은 발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흑산정은 가장 인근의 정박지 진리항이 1차적 발굴 대상이다. 예로부터 흑산도는 국제적 항구도시의 성격으로 한-중-일의 최대 중간기착지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흑산정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발굴지로서 많은 유물이 출수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경원정(慶源亭) 거점유적은 아직 탐사나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단지 간접적으로 원거리에서 영흥도선, 대부도선이 출수 되었을 뿐이다. 서공의 고려도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원정은 급수문에 접하여 많은 선박들이 정박하였던 거점 항이었다.

2. 三別抄 유형

진도 벽파항 인근의 명량대첩로 정박지에서 출수 되고 있는 중국 도자기, 닻돌, 석환 등은 고려·원대의 다국적 유물이며 이는 1271년 김방경, 혼도 등 여·몽 연합군이 벽파항 인근의 진도 용장성 삼별초 세력을 진압할 때 여·몽 연합군이 참가했던 해전유적의 흔적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 해역에서 출수된 몽고병, 중국제 닻돌, 무기류 등이 일본 다카시마 해역에서 출수 된 1274년(1차), 1281년(2차) 여·몽연합군 원정 유물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1271년 진도 삼별초 정부가 가마쿠라 막부에 보낸 외교문서의 내용이 고려침장 불심조조(高麗牒狀 不審條條) 형태로 내려오고 있다. 이 침장의 주요 내용도 진도 삼별초 정부가 가마쿠라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양식에 따라 건조된 벽파리 진도선은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 여·몽연합군에 대항하여 삼별초 정부에 파견하였던 군사적 목적의 선박이었음도 결코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진도선이 여·몽연합군과 삼별초의 전투지역에서 발견되었음도 특징적이다. 이와같이 삼별초 해전 출수 유물 중 아직도 미완의 과제가 진도선이다. 진도선은 2022년으로 발굴 30주년을 맞이 하였으나 구체적 연구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 삼별초 항전의 결과로 파악되는 진도선이 이제는 한·중·일 공동 발굴과 연구로 성격이 규명되길 바란다.

삼별초 유형의 발굴로 기대하여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적이 제주 비양도이다. 비양도는 항파

두리 주둔 삼별초 진압을 위한 여·몽 연합군의 근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삼별초 진압 100년 후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고려군이 주둔하던 곳이었다. 역사적으로 제주 비양도는 명월진성을 마주하며 정치적 변란에 접하여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 비양도 수중유적은 역사적 배경으로 보건대 수중유물이 분포하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 해역이다. 해변에 분포하는 유물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향후 잠재력 있는 수중발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다카시마 해역에서도 여·몽 연합군 수중유적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다카시마 1호, 2호선 발굴이 완료되었고 3호선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다카시마 해역에 대한 한·중·일 공동 발굴도 의미 있는 일이다.

3. 濟州 유형

원제국은 1273년 삼별초를 진압하고 제주도에 둔진군 1,700명을 주둔시킨다. 또한 충렬왕 2년 1276년 성산읍 일대 수산평에 동아막(東阿幕)을 설치하고, 충렬왕 3년 1277년에는 서아막(西阿幕)이 현재의 한경면 고산리 일대를 지칭하는 차귀평(遮歸坪)에 입지했다. 차귀평 인근 서아막 일대에는 몽고인 부락이 위치해 있었을 것이며, 항파두리에 주둔한 몽고 둔진군 1,700명을 제외하더라도 원나라에서 오는 물자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물자의 공급이 신창리 포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해 본다. 신창리 해저 출수 유물이 비록 남송대에 제작된 유물로 판단되더라도 남송은 1279년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원제국과 일정기간 동거를 하고 있어, 남송대 유물과 몽고인이 제주로 이주를 시작한 1270년대 유물은 구분하기 어려운 동시기의 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몽골의 제주지배가 시작된 이후 서아막(西阿幕) 차귀평 인근의 포구인 신창리 항구는 새로 정착한 몽골인들을 위하여 원 제국에서 물자의 공급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창리 해역 출수 유물들은 닻돌, 동전, 도자기 등이다. 이 유물들은 서아막(西阿幕) 또는 동아막(東阿幕) 등 고려시대 목장 지대의 목호(牧胡)들에게 공급했던 물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는 송원대 일본 정벌과 무역을 위한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였다. 전주-명주(경원)-제주-하카타를 잇는 남방항로는 예로부터 경원(慶元, 명주)에서 출발하여 3일이면 제주에 도착하고 다시 제주에서 일본의 해안까지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의 전통적 포구인 법환포(法還浦), 당포(唐浦), 당포(堂浦) 등 제주남방 항구들은 일본으로 항해하는 송원대 무역선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중세 제주지역 물자 공급의 중요한 거점항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전통적 중세의 항구도 수중 발굴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4. 문화적 ODA 사업과 人類共榮

문화적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 사업은 문화 인프라 지원, 미래세대 문화역량강화, 인류문화유산 보존 등 수원국의 문화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원국 주민의 문화권 향유를 증진하며 문화 역량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수원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문화·경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 협력사업을 말한다. 개도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들의 미발굴 수중유산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중 발굴 방법론, 보존처리 기법, 전시관의 건립, 사후 관리까지 수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수중 발굴의 역사적 전통으로 인하여 이 분야 선도적 지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개도국 수중발굴 지원과 양국의 우호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기술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 개도국들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지원을 바라고 있는 현실이다.

5. 맺음말

우연처럼 다가온 1976년 신안선 발굴 이후 우리나라에 이름도 생소한 학문인 수중고고학이 도입된지 곧 50주년을 맞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중발굴에 대한 과거를 회고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 만큼 시행착오를 느낄 수 있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지난 50년간의 발굴 성과를 형태별로 요약해 보면 성격에 따라 據點亭 유형, 三別抄 유형, 濟州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국 수중고고학의 미래는 이러한 유형별 수중발굴의 성과를 회고하고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백년대계를 위하여 현재의 해양유산 연구는 태안과 목포의 두 거점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두 지역 중심의 연구 거점이 기능에 맞게 다변화되어야 한다. 향후 해양유산 연구 거점지역의 다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화도에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연구의 거점이 필요하다. 태안은 수중발굴과 보존연구의 거점으로, 군산은 교육훈련 및 인재양성을 위한 거점으로, 목포는 해양 유산을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세계적 해양유산 연구의 거점으로, 제주는 해양 고고학의 거점으로, 여수는 고선박 연구의 거점으로, 동해는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동해권 해양유산 연구로 특화하여 거점지역 중심으로 특성에 맞게 다변화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만익, 2016, 「13~14세기 耽羅 牧場의 변천과 영향」,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신안선(본문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5,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대한민국 수중발굴 40년 특별전』.
- 국립제주박물관, 2017, 『삼별초와 동아시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한국의 수중 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스리랑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역량 강화사업 타당성조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3, 『제주 신창리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I』.
- 문환석, 2016, 「한국의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성과」, 『대한민국 수중발굴 40년 특별전』.
- 진호신, 2023, 「한국 중세의 바닷길과 송·원대 문화재」, 『제주문화 29』.
- 홍순재, 2009, 『진도 벽파리 출토 통나무배 성격 고찰』.



고선박 난파해역 문헌자료 분석과 현지조사

김 선 | 국립해양유물연구소

I. 머릿말

난파선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과 관련한 연구는 과거 중국과 한국을 횡단하는 항로와 조세 운송 항로를 주제로 문헌을 분석한 연구와 연관된다. 한편, 실제 난파선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탐사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과거 중국과 한국을 횡단하는 항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삼국시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항로, 즉 황해와 동해 횡단항로 등에 관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세 운송 항로와 관련된 연구는 고려시대 조세 운송 체계와 관련하여 제도적 정비와 변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육상 발굴 조사도 조창 유적을 중심으로 내륙에서 산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사 위주의 문헌 중심 연구와 내륙 중심인 발굴조사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수중을 중심으로 선박이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에 관한 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문헌조사

1. 고선박 난파와 관련된 기록

고선박 침몰·난파와 관련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태조~고종)까지 기록을 활용하였다. 각 문헌은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조선경국전』·『경국대전』·『대전속록』·『조행일록』·『을해조행록』·『각사등록』에서 난파, 조운, 침몰, 곡물 수습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총 1,202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문헌명	내 용
『삼국사기』	선박을 관리하는 부서
『삼국유사』	과거 중국과 한국을 횡단하는 항로 등
『고려사』	조세 운송 선박을 비롯한 해적의 선박 약탈 등
『고려사절요』	조세 운송 선박의 침몰 등
『조선왕조실록』	조세 운송 선박의 침몰(태조~정조)
『세종실록지리지』	선박의 항로 등
『동국여지승람』	
『조선경국전』	조세 운송 제도 등
『경국대전』	
『대전속록』	
『조행일록』	조세 운송 항로 및 조세 완납 기록
『을해조행록』	조세 운송 항로 및 조세 완납 기록
『각사등록』	선박의 침몰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 등(정조~고종)

여러 고문헌 중 난파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각사등록』을 선정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종~고종대 기사가 대부분이며, 권역으로는 경기·충청·전라·경상권으로 구분하였다.

2. 최종 추정 해역

해역	경 기	충 청	전 라	경 상
권역별 난파해역	안산	태안	영광	거제
	화성	보령	부안	부산
	인천	서천	군산	
		서산	고흥	
		당진	완도	
		홍성	나주	
		기타	강진	
			영암	
			고창	
			김제	
			무안	
			순천	
			함평	
			해남	
			기타	

고선박이 난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충청·전라·경상권역에서 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권역에는 안성·화성·인천 지역에서, 충청권역은 태안·보령·서천·서산·당진·홍성·기타 지역에서, 전라권역은 영광·부안·군산·고흥·완도·나주·강진·영암·고창·김제·무안·순천·함평·해남·기타 지역에서, 경상권역은 거제와 부산에서 선박이 난파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권역의 선박의 침몰과 관련된 기록은 각사등록『수원부유영장계등록』,『충청도수영장계등록』,『경기도감영장계등록』,『경기도수영관보첩등록』,『경기도래거안』 등이 있다. 시기는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권역의 기사에는 안산, 화성, 인천 등의 지역에서 선박이 난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선박이 난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은 경기도의 지리 특성상 내해(內海)에 위치한 섬 혹은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권역의 난파선 관련『각사등록』은「충청감영계록」,「금영계록」,「충청수영계록」,「충청도관초」,「충청수영관첩」 등이 있다. 각 기록은 현종·철종·고종대 작성되었다. 충청권에서 난파된 해역의 위치는 주로 태안·보령·서천·서산 등이다. 난파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해역에는 많은 섬과 복잡한 해안선 때문에 해류와 유속이 급속하게 변하며, 간출암 등이 산재한 곳이 대다수이다. 충청권역의 간척 사업은 고려~조선시대, 일제강점기, 1960~70년대를 거쳐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난파 추정 해역 중에서 태안·보령·서천 등의 고선박이 난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 중에는 매립된 곳도 있다.

전라권역의 관련 기록은 각사등록『충청수영계록』,『호남계록』,『경상도관초』,『통제영계록』 등이 있다. 주로 고종대에 작성되었으며, 일부 현종·철종대에 작성된 기사들도 있었다. 전라권역에서 파악된 사고해역은 주로 영광, 부안, 군산, 고흥 등의 지역에서 고선박이 난파 기록을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세선(稅船)을 운반하는 주요 항로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광, 부안 지역의 난파 추정지역은 주로 연안에 위치하여 선착장, 해수욕장 등으로 이용되는 곳이 많으며, 섬의 경우 대체로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군산의 경우 고군산군도를 제외한 대부분 난파 추정지역에 대규모 매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경상권역의 관련 기록은 각사등록『경상감영계록』,『통제영계록』 등이 있다.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와는 달리 난파된 기록이 매우 소량인데, 총 2개의 기사에 나타난 사고선박 수는 2척이며, 사고장소 역시 2곳이었다. 기록을 통해 난파선은 주로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고선박의 난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거제지역의 난파해역은 옥포항 부근으로 현재 대규모 조선소가 위치해 조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부산지역의 난파해역 역시 전체적으로 매립이 이루어져 해안선과 해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현지조사

현지조사는 고대~근현대 해난사고 추정지점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문헌조사 내용의 보완과 수중유산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지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고대~근현대 해난사고 기록 및 발견신고 내용을 사전에 전수 조사하고,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조사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서천군 해역은 수중에서 어민들이 유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내역은 있지만, 수중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현지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보완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현지에서 자료수집 및 주민 구술, 지역 전문가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 보완조사

보완조사를 통해서 서천군 해역에서 난파된 선박의 출발지와 항로 정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권역	경상	전라	충청
세부 지명	의령	영암	서천
	진주 (경상도 우조창)	영광	논산
	마산 (경상도 좌조창)	부안	부여
		정읍	공주
		익산	서산
		군산	

서천군 해역에서 난파된 선박들이 출발했던 곳은 3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창(京倉)을 기준으로 가장 먼 권역인 경상도에서는 우조창이 설치된 진주·좌조창이 운영된 마산·의령에서 출항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라도는 곡창지대인 영암·영광·부안·정읍·익산·군산에서, 충청도는 서천·논산·부여·공주·서산에서 난파된 선박들의 선단이 경창을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난파선이 사고해역까지 이동한 항로는 전라도 영암과 나주의 전세(田稅)를 함께 실은 훈련도감 소속 선박(이하 영암과 나주의 전세선)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영암과 나주의 전세선은 1865년 5월 28일 새벽에 서천군 마량리 공암에서 침몰하였다. 영암과 나주의 전세선은 2월 초10일에 경강(京江)에서 출발하였고, 4월 초1일에 전라도 영암군 이진(梨津)의 창포(倉浦)에 도착하였으며, 4월 초7일에 영암군에서 전세를 선적하고, 4월 21일에 나주의 윤포(允浦)에서 정박하였다. 이후 5월 초8일 나주목(羅州牧)에서 첨재(添載)한 세곡을 신고, 5월 초9일 출발하여 영광(靈光)의 치도(雉島)에 도착하였다. 영광에서 풍랑으로 인해 5일간 정박하였고, 다시 운항을 재개하여 5월 15일에 부안(扶安)의 가치당포(加致堂浦)에서 묘박(錨泊)하였다. 5월 16일 아침물(朝水)에 운항하던 가운데 역풍(逆風)으로 가치당포로 다시 이동하여 4일간 머물렀다. 5월 21일에 부안의 비양도

(飛洋島)에서, 5월 22일에 고군산(古群山)에서 풍랑으로 2일간 정박하였다. 3일후인 5월 25일에는 오식도(箕食島)에서, 5월 26일에 중앙(中洋)에서 풍랑으로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고, 대기하였다. 5월 27일에 저녁물[夕水]에 외연도(外煙島)에 도착해서 서풍으로 인해 표류 후 마량진 앞바다에서 정박하였는데, 야간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다. 5월 28일에서 29일 사이 새벽물[曉水]에 폭풍우와 높은 파고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정체목(碇體木)이 파손되었고, 바람에 따라 선박이 표류 후 침몰하였다. 이렇게 서천군 해역에서 난파된 선박은 대략 200여척을 상회한다.

2. 면담조사

서천군에서는 해역을 마량·비인·장항으로 3곳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마량 해역 일대는 역사적으로는 1655년(효종 6)에 보령 남포에 있던 첨사진영을 서천군 서면 도둔리(갈곶: 칠구지)으로 이전하였고, 장항읍 장항진을 지휘 감독하여, 이때부터 이 지역을 첨사진영을 명칭을 사용하여 마량리로 변천되었다. 마량의 도둔리 모래사장은 조선 세종 원년에 왜적의 배 50여척이 침입하므로 만호(萬戶) 김성길의 아들 윤(倫)과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한 곳이며, 그 후 바다로 침입하는 오랑캐를 무찌르는 관방(官房)이었다.

마량리는 도둔·갈곶·칠구지 등을 통칭하는 지명으로, 마량리 내 도둔앞·뒷바다는 마량포구의 남쪽과 북쪽바다를 가리킨다. 마량리의 동백정 해수욕장 1970년대 서해안을 대표하는 모래사장이었으나, 현재는 구 서천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해안을 매립하고 간척하면서 지형이 변화되었다. 과거 동백정 해수욕장과 서쪽의 바위로 된 작은 섬 준여사이 수로는 물살이 맴도는 곳으로 조선시대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항로상에서 위험한 구간이었다. 이 수로에서 선박이 침몰하여 난파하는 경우 조류에 의하여 마서면 남전리 백사장으로 표류할 수 있다. 또한 마량리에서는 당제를 지내는데 마량리의 동백정 근처를 지나는 선박들이 풍어와 뱃길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아 오력도와 마량리 동백정 사이 수로를 드나드는 선박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 결론

본고는 수중에서 고선박이 난파된 해역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경기·충청·전라·경상 해역에서 고선박이 난파된 것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명에 대한 이칭과 통칭을 파악하였고, 지역 주민과의 면담으로 서천 해역에서 난파 가능성이 있는 해안 지형에 관한 정보 등을 24년도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24~25년도에는 본 조사에서 파악한 고선박이 난파한 것으로 추정된 위치를 수중탐사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었다. 마침내 수중탐사를 통하여 기록상에서 난파한 조선시대 고선박 등을 실제로 수중 발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조선경국전』·
『경국대전』·『대전속록』·『조행일록』·『을해조행록』·『각사등록』
한정훈(2009), 「고려시대 조세 운송경로」,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건다』



해양유산 문화행사 기관협업 사례와 지속 방안

박 태 훈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머리말

오늘날 박물관의 역할은 단순히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민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의 명소로서 문화적 구심점 역할까지 그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는 매년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양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어린이날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행사에 있어서 지역 사회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소속 어린이 박물관 3곳을 묶어서 연계 방문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첫 방문한 어린이 박물관에서 또 다음 박물관을 방문하게 독려하여 서울의 동네를 이동하게 했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 역시 2009년부터 ‘박물관 나들이’ 투어 프로그램을 방학기간마다 실시하며 지역 내의 7개 기관이 지속적인 협업을 하고 있다. 2025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생활동자박물관과 공동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양유산 문화행사에 기관협업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원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실시된 서남권 뮤지엄페어와 2025년 어린이날 문화행사까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한 문화행사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25년 올해 진행한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집중해서 소개하고 앞으로도 문화행사에 지속적인 기관협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산 문화행사가 지역민에게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서남권 뮤지엄페어(2021~2024)

2021년 7월 15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남공룡박물관, 영암도기박물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진도남도전통미술관, 신안소금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서남권 박물관·미술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서남권 7개 기관이 전시·홍보·교육 사업 및 활용 관련 상호 교류를 협력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2021~2024년 4년간 서남권 뮤지엄페어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거점도시조성사업으로 서남권 뮤지엄페어에 연간 1~2억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연구소는 2020년대에도 지역 유관기관과 문화행사와 관련한 협업을 하였다. 연구소는 체험재료를 제공하거나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행사에 협력하였다.

서남권 뮤지엄페어(2021~2024)

연도	포스터	행사일시	내용
2021년		10.8.~10.10.	- 관광거점도시조성사업 지원금 1억 - 7개 기관 업무협약 후 첫 합동문화행사
2022년		9.30.~10.2.	- 관광거점도시조성사업 지원금 1억 - 연구소 체험부스 운영
2023년		10.13.~10.15.	- 관광거점도시조성사업 지원금 2억 - 연구소 체험재료 제공
2024년		5.4.~5.6.	- 관광거점도시조성사업 지원금 2억 - 어린이날 연휴기간 개최 - 연구소 체험재료 제공 - 연구소 어린이날 문화행사 별도 개최

3. 어린이날 축제 문화행사(2025)

2025년에 뮤지엄페어는 관광거점도시조성사업 종료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하지만 7개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은 2025년 7월 15일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어린이날 축제 문화행사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를 공동 개최했다. 기존 3일간 실시되었던 뮤지엄페어와 달리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2024년부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건물 공사로 인해 행사장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되었다.

어린이날 축제 문화행사 개요(2025)

	○ 행사명: 어린이날 축제 문화행사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 ○ 일정: 2025. 5. 5.(월) 11:00 ~ 16:00 ○ 장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야외 ○ 주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 내용 - 메인무대: 나도 일일도슨트, 마술쇼, 가족 레크레이션 - 체험부스: 부채꾸미기, 매병만들기 등 기관별 체험프로그램 - 포토존
---	--

어린이날 문화행사는 크게 3개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공연과 이벤트가 실시된 메인무대, 각 기관별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 체험부스, 캐릭터 대형 풍선으로 조성된 포토존이다. 연구소는 체험프로그램으로 2가지를 운영하였는데, 하나는 ‘나만의 부채꾸미기’이고 다른 하나는 ‘매병·목간 만들기’였다. 매병·목간 만들기는 태안 해역에서 출수된 보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과 목간을 자신만의 매병과 목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해양유물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꾸미며 체험자가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날 문화행사에서 기관협업으로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나도 일일도슨트’이다. 지역민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학생 참가자(초등학생~중학생)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뮤지엄페어에서 2023~2024년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2025년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참가자는 각 기관이 선정한 대표 유물을 선택하고 행사 당일 직접 관람객에게 앞에서 이를 설명하였다. 프로그램을 위해 참가자는 본인이 선택한 유물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교육을 받았다. 실제 도슨트(자원봉사자)가 선정된 대표 유물을 참가자에게 설명하는 시범을 설명하는 통해 유물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였다. 이후 참가자 본인이 직접 유물에 대한 설명문을 작성하고 행사 당일 관람객 앞에서 본인의 유물을 설명하였다.

‘나도 일일도슨트’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에게는 도슨트라는 직업을 경험하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자에게는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기관들의 성격과 대표유물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기관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면서 다른 기관의 성격을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

는 기회가 되었다. 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문화행사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것은 상호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에 중요한 상징으로서 역할을 한다.

		
메인무대	체험부스	포토존
		
'나도 일일도슨트'	마술쇼	가족레크레이션

4. 앞으로의 과제

가. 장기적인 문화행사 개최 협약 체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목포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한 서남권 박물관·미술관 업무협약서의 효력이 2025년 7월 15일로 종료되었다. 2021~202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거점도시조성사업 지원이 종료되면서 7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도 개최되지 못했다.

2025년에는 3개 기관이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기관이 협력한 문화행사는 끝나지 않고 이어졌으나, 추가적인 협약은 없었다. 1회만을 위한 협약이 아닌 3~5년 단위의 장기적인 문화행사 개최 협약을 통해 매년 기관 간의 문화행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기관협업 수준도 향상되고 지역민에게도 정규적인 문화행사로 인식될 것이다.

나. 문화행사 장소 순환

2021~2025년 5번의 기관협력 문화행사가 모두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문화행사 참가자에게 큰 인상을 주는 요소는 장소이다. 행사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이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또한 2025년 문화행사는 참여기관 수가 줄면서 이전보다 축소된 규모로 개최됐다. 4년간 진행된 대규모 행사가 축소되면서 이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만족도 조사 설문에서 목포자연사박물관 문화행사가 축소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순환 개최하여 매년 행사 장소를 제공한 기관에 지역민이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민에게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지속적인 문화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다. 기관협력 프로그램 개발

기관협업이 문화행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2025년 어린이날 문화행사는 ‘나도 일일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 주최 기관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자 만족도 설문에서도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언급되었다.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면서 기관 간의 소통의 증가와 협력기관의 성격과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5. 맺음말

문화행사 기관협업이 점점 늘고 있으며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행사를 참여하는 참여자에게는 지역에 다양한 박물관·미술관을 접할 기회가 되며, 기관 간 협력이 문화행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2021~2025년까지 서남권 박물관·미술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개최된 5번의 문화행사를 통해 연구소와 관련된 기관협업 문화행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2021년부터 4년간 7개 기관이 지속적인 문화행사 협업이 있었으나, 2025년 사업 예산 지원이 종료되면서 동일한 행사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축소된 규모에서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이 공동으로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은 기관협업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장기적인 문화행사 업무협약, 문화행사 장소 순환, 기관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관협업을 이어간다면, 더 큰 규모와 높은 만족도로 지역에 활력을 주는 문화행사로 거듭날 것이다. 해양유산 문화행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기관과 협력하고 지역민에게 정체성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지속적인 기관협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섬 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과 전시 활용

김 애 경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머리말

섬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며, 바다와 섬이라는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섬마다 독특한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해양문화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3,300여 개의 섬이 있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467개로 파악된다.¹⁾

최근 섬은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연의 보고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섬의 여러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섬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발전방안 마련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섬의 고유한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섬은 육지에 비해 자연환경의 영향에 민감하여 외부와의 접근성이 자유롭지 못하다. 섬 주민의 고령화와 인구 유입의 단절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어져 섬의 무인도화가 가속되고 있다. 무인화는 섬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유산의 멸실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섬의 무인화를 대비한 섬의 기록화 작업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며, 섬 해양유산 아카이브 구축은 우리나라 섬의 경쟁력을 키우는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섬의 이미지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현실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고에서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섬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방향과 이를 통한 전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024년 한국섬진흥원 통계자료 참고.

2. 섬 문화유산 조사·연구 아카이브 구축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섬의 무인화·고령화와 연륙·연도교·해저터널 설치에 따른 섬의 정체성·고유성이 위협 받고 있는 섬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육지와 교통의 접근성이 어려워 고유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무인도가 될 우려가 있는 리단위의 작은 섬을 대상으로 고고·역사·민속·지명·환경·고건축·고선박 등 분야별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은 섬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냈다. 특히,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선창²⁾, 신안군 고이도 대촌 유물산포지와 옛 선창시설³⁾,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의 유물산포지⁴⁾와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의 신석기시대 패총⁵⁾ 등은 대표적인 섬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두, 당집, 우실, 텃장, 숯가마 등 특색 있는 유산들은 섬 주민들이 전하는 구술과 함께 섬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다.

또한 섬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생업활동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며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어로 형태, 어로 활동과 관행 등은 중요한 아카이브 자료이다.

해양교통에 요충지에 위치한 섬에는 관방유적, 조운유적, 국제교류 관련 유적 등 다양한 해양유적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이유로 상호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으며, 교류와 분쟁을 반복하였다. 바다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해안과 섬을 중심으로 한 관방시설이 설치되었다. 수군진, 봉수, 산성 등 관방유적과 조운시설은 고이도, 위도, 원산도, 덕적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섬은 고대 연안항로를 잇는 주요 뱃길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고대 뱃길 복원에 중요한 섬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섬 문화유산조사를 통해 수중발굴 해역의 역사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섬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있다.⁶⁾

섬해양유산조사 아카이브는 콘텐츠 제작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섬 조사내용을 문화·관광·환경 등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섬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우이도』, pp.119~123.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고이도』, pp.76~77, pp.94~99.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재원도』, pp.45~55.

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7, 『반월도·박지도』, pp.58~61.

6)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역사 문헌에 기록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해상 활동의 주요 거점섬을 대상으로 섬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전남 신안군 재원도, 2019년 전북 부안군 위도, 2020년 충남 보령시 원산도, 2021년 인천 옹진군 덕적도를 조사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조사, 2023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조사 2024년 전남 신안군 매화도 조사가 있었다. 김애경, 2022, 「섬 문화유산 현지조사의 가치와 활용」, 『해양문화재』 제16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경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섬 해양유산 콘텐츠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아카이브 자료를 토대로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고고·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섬의 역사적 가치 제고

- ① 바닷속 문화재를 품은 섬(증도, 대둔도, 약산도, 비안도, 야미도, 십이동파도, 원산도, 마도, 대섬, 달리도, 영흥도, 대부도, 제주도 등)
- ② 근대문화 유산이 남아 있는 섬(덕적도, 거문도, 옥도, 위도 등)
- ③ 전통신앙이 남아 있는 섬(위도, 여서도, 거문도 등)
- ④ 고고역사유적이 남아 있는 섬(흑산도, 가거도, 재원도, 고이도, 위도, 원산도, 덕적도 등)

둘째, 전통 민속과 생활 자료를 활용한 섬의 고유성 제고

- ① 우설, 옛선창, 노두, 돌담 등
- ② 당제, 당집, 당신, 갯제, 풍어제, 씻김굿, 다시래기소리, 띠뱃놀이 등
- ③ 전통건축, 전통어장 등

셋째, 생업활동의 디지털 콘텐츠 보급 활용

- ① 어로활동(염전, 김양식, 낙지잡이, 덩장, 개맥이, 활어양식, 새우양식 등)
- ② 어업유산(파시, 해녀, 전통어법, 전통어구 등)
- ③ 섬 농경유산(구들장 논, 간척지 논 등)
- ④ 노동요(가거도 멸치잡이노래 등)

3. 섬 문화유산 조사 콘텐츠 개발 방안

섬 문화유산 조사 결과물은 보고서와 사진·영상다큐멘터리 형태로 기록화해 왔다. 하지만 단순히 보고서 형태로만 존재한다면 대중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 섬 조사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사라져가는 섬 문화유산 콘텐츠를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스토리텔링 영역을 보강하여야 하며, 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섬의 문화공간 조성도 중요하다. 섬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조사된 사진·영상·음성·텍스트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편리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학술 자료로, 일반 대중에게는 정보 검색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조사된 내용은 디지털 다큐멘터리 영상, VR/AR 콘텐츠,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각적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구술 영상은 섬 문화유산의 현실감을 부각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오프라인 전시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며,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섬 문화유산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교재, 워크북,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도를 높여 미래 세대에게 섬 문화유산의 가치를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기존의 정보 나열식 기록화 작업은 전문 연구자가 활용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함께 섬 문화유산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개발하여 전달해야 한다. 이는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4. 개발된 콘텐츠의 전시 활용 방안

개발된 섬 문화유산 조사 콘텐츠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전시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상설 및 기획 전시에 활용

섬 문화유산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하거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기획 전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유용성, 직관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계하고, 센서, 제스처 인

식, AR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상호작용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터랙티브⁷⁾ 미디어, 촉각 체험물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2) 온라인 가상 박물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섬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 박물관은 섬 해양유산 콘텐츠 활용에 있어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고화질 이미지, 3D 모델링, VR 투어 등을 통해 실제 전시를 관람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가상박물관은 전문성을 지닌 다채롭고 풍부한 디지털 아카이브로써 디지털 환경 내에서 여러 학술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디지털 매체와 접목되어 효율적인 전시 정보 제공은 물론 학습자에게 보다 몰입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게 한다.⁸⁾

섬 문화유산 콘텐츠와 온라인 가상 박물관의 만남은 우리나라 고유의 섬 문화유산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기타 프로그램 활용

섬 문화유산 콘텐츠는 찾아가는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섬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섬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부스를 운영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와 연계된 홍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섬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섬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오디오 가이드를 개발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5. 맺음말

7) 인터랙티브(Interactive)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자나 관객이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설계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기술,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상호작용성(터치, 제스처, 음성)을 통해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AR(증강현실) 기술이 대표적이다. 또한 몰입이론을 적용하고 다양한 분야 게임, 교육(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미디어(인터랙티브 영화), 마케팅(인터랙티브 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8) 이현민·김미수, 2022,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활용 수업 개발 및 운영 사례-가상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pp. 81~96.

섬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천혜의 문화적 자산이다. 본 고에서 제시한 섬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전시 활용 방안은 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문화적 향유와 증진에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섬 문화유산의 새로운 발굴을 이어가고,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섬 문화유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8, 『만재도』, 세인CP디자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우이도』, 세인CP디자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안마도』, 세인CP디자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수치도·사치도』, 글모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옥도』, 세인CP디자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병풍도』, 글모음디자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여서도』, (주)사람과 사람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5, 『다물도』, 세인CP디자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재원도』, 민속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7, 『반월도·박지도』, 민속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8, 『가거도』, 민속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고이도』, 민속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0, 『위도』, 디자인문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원산도』, 디자인 이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덕적도』, 디자인 이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3, 『거문도』, 디자인 중앙.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4, 『관매도』, 디자인 중앙.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 수중발견신고유물 도록, 디자인문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공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문화재 관점으로 보는 섬』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이현민, 김미수, 2020,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활용 수업 개발 및 운영 사례-가상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권 4호
 김애경, 2022, 「섬 문화유산 현지조사의 가치와 활용」, 『해양문화재』 제16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메타버스 플랫폼(ZEP)을 활용한 해양유산 학예연구사 맞춤형 진로 체험 교육 사례 :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표 수 아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서론

박물관·미술관은 오늘날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진로 탐색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진로 체험 교육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예연구사 직무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로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대면·비대면, 교구 활용형, 강연형 등 프로그램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수중발굴이나 전시기획처럼 전문성이 요구되고, 물리적 제약이 큰 분야는 실제 직무 체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중발굴과 전시기획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웹(ZEP)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의 수중발굴 현장과 전시기획 공간을 구현하고, 참여 학생들이 학예연구사의 업무를 재미있게 게임 형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교육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해양유산 진로 교육의 효과와 가능성을 분석하고, 박물관의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박물관·미술관 진로 교육 현황

1) 학예연구사 진로 교육 운영 현황

박물관·미술관은 '학예연구사'라는 전문 직무를 주제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운영하며, 자유학년

제, 학교연계 프로그램, 진로체험처 등록 등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과도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역시 2015년부터 초등·중·고등학생까지 발달 단계에 맞춘 학예연구사 진로 체험 교육을 꾸준히 제공해왔다.

다수의 국공립 박물관 및 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들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협력하여 학예연구사, 보존처리사, 전시기획자 등의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로 전시기획, 소장품 관리, 보존처리 분야의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은 모형 교구나 활동지를 활용해 ‘나만의 전시실’ 만들기, 유물 복원 체험, 전시 리플렛 제작 등 실습 중심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는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전문 직군과 역할을 소개한다. 이처럼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로 교육 기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실무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하다. 다만 상당수 프로그램이 견학 위주이고 단편적인 체험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몰입도 높은 진로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1. 국내 박물관·미술관 진로 교육 현황

교육명	기관명	분류	대상	연도	내용
신라천년보고 속 박물관 사람들	국립경주박 물관	대면교육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023	박물관 역할 및 학예연구사 직무 이해, 메타버 스(ZEP) ‘신라천년보고’ 탐험, 소장품 관리·보존처리 과정 체험
박물관 탐구생활	국립경주박 물관	비대면 교육	초등학교 3~6학년	2023	메타버스(ZEP)를 이용한 박물관 역할과 기능 이해, 진로·직업 탐색 후 박물관 대표 문화재 관찰 나만의 박물관 관람 지도 팝업카드 제작
우리는 박물관 학예연구사	서울생활사 박물관	대면교육	중학교 1~3학년	2023~ 2024	박물관 유물 및 수장고 관리 업무와 기획전시 개발과정 직접 경험
박물관 꿈상자	국립공주박 물관	대면교육	초등학교 5~6학 년/중학생 단체	2024	진로체험 교구상자 활용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전시기획’, ‘보존과학’, ‘소장품관리’ 업무에 대한 체험활동과 업무공간 탐방 *체험 3개 중 1개 선택 진행(전시기획 선택시 ‘나의 소중한 물건’ 개인 준비물 필요)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보존 과학자)	국립중앙박 물관	비대면교 육	초등학교 5~6학 년 및 중·고등학 교	2025	박물관 직업 체험과 연계한 직물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줌 접속 실시간 원격교육
박물관에서는 뭐 하는거?	세종시립민 속박물관	대면교육	초등학교 5~6학 년, 중학교 1학년	2024~ 2025	‘전시기획’, ‘소장품관리’, ‘보존과학’, ‘박물관 교육’ 등 박물관 학예연구사 업무 체험
꿈을 넓히는 박 물관	한밭교육박 물관	대면교육	초등학교 5~6학년	2024~ 2025	‘전시기획’ 체험을 통한 전시기획 과정, 이론 적용을 통한 ‘학예연구사’ 직업 이해 및 관심사 를 반영한 ‘나만의 전시실’ 만들기 체험

교육명	기관명	분류	대상	연도	내용
나도 큐레이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대면교육	중학교 1~3학년	2024	자연사박물관의 역할 및 전시물 이해 후 박물관 꾸미기 패키지를 활용한 전시기획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학예연구사	고불맹사성 기념관	대면교육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2025	‘유물 넘버링’, ‘유물 이름 붙이기’, ‘유물 관리 카드 작성’, ‘유물 포장’ 등 학예연구사 직업 탐색 및 체험
청소년 진로 교육: 큐레이터	대전시립 미술관	대면교육	초등학교 1~6학년	2025	미술관 전시관람 후, 전시 기획 과정 이해 및 나만의 미니어저 전시 만들기 체험
MMCA Edu- Run_미술관 사람들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대면교육	중학교 1학년	2024	교육 교구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전시 기획과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 모형 키트를 활용한 전시 기획 및 전시장 구성 체험
청소년 큐레이 터	김포시독립 운동기념관	대면교육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1학년	2024	학예사 강연, 박물관 조사·연구·전시기획 직무 체험 백범김구기념관 탐방, 기념관 전시연계 교육 개발 직무 체험
2019년 부산박 물관 청소년 진로교육	부산시립 박물관	대면교육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019	한예연구사 직업 소개, 활동지를 활용한 본인 적성에 맞는 학예업무 찾아보기, 토기, 기와, 도자기 등 유물 관찰 및 복원, 포장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
박물관 툐아보기	부산시정관 박물관	대면교육	초등학교 4~6학년	2021	박물관과 학예연구사 직업 이해 후 ‘유물 복원’, ‘유물 관리’, ‘전시 기획’ 체험 클레이로 만든 토기를 이용한 나만의 작은 전시장 기획 및 소개
2022청소년 진 로 체험프로그 램	부산시립 미술관	대면/비 대면교육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022	나만의 리플렛과 홍보 포스터 제작을 통한 전시기획 간접체험,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展 감상을 통한 미술관 수집 활동의 가치와 의미, 부산지역사의 이해
부산모카 반짝	부산현대 미술관	대면교육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024	미술관 조직 구성 이해 및 큐레이터, 전시디자이너 직업군 활동 프로그램 체험
해양박물관 출 근길	국립해양 박물관	대면교육	중·고등학교	2025	학예연구사의 역할 및 진로 연계 설명(강연형, 체험형) *체험형은 나의 꿈 명패, 출근길 사원증 만들기

2) 메타버스 기반 학예연구사 진로 교육 사례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수의 학습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선택과 행동이 반영되는 몰입형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박물관 진로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공립 박물관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학예연구사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대표 사례로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천년보고 속 박물관 사람들’ 프로그램은 2022년 줌(ZEP)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물관리실, 보존처리실 등의 가상 공간을 구현하고, 참여 학생들이 아바타를

통해 소장품 등록,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박물관 탐구생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주제를 기획하고, 가상 전시관에 유물을 배치해보는 활동을 통해 큐레이터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대부분 켄(ZEP), 제페토 등 상용 플랫폼을 활용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는 학예연구사의 직무에 특화된 콘텐츠가 드물고, 대개 문화유산 소개나 전통문화 체험 중심의 게임형 콘텐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에서 소개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은 해양유산을 주제로 수증발굴과 전시기획이라는 학예연구사의 전문 직무를 메타버스 내에서 연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는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직무 흐름을 반영한 체험 설계를 통해 진로 교육의 몰입도와 효과를 높이는 사례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

3.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 개발과정과 내용

1) 기획 의도와 대상 선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유산을 주제로 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초등학생 대상 <도전! 마린해설사>는 해양유산을 직접 해설해보는 도슨트 체험으로 구성되었으며, 중학생을 위한 <꿈틀꿈틀 마린스쿨>에서는 큐레이터와의 만남을 통해 직무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고등학생 대상 <하이틴 마린스쿨>은 해양 분야 직업군 소개와 문화유산 다루기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존과학자 중심의 학예연구사 진로교육을 통합 운영하였고, 2023년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전 관람 후 리플렛 제작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유물을 복원하는 체험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형 교육은 대체로 현장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소가 위치한 목포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 학생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직무의 일부만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쳐 학예연구사의 복합적인 역할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2024년부터 진행된 연구소 사무동 증축 공사로 인해 교육 공간의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에서도 제약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구소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고, 동시에 수증발굴이라는 전문성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몰입도를 결합한 새로운 진로교육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획된 것이 바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이다. 본 프로그램은 학예연구사의 대표 직무인 수증발굴과 전시기획을 주제로 하여, 메타버스(ZEP)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증 발굴 현장을 탐험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일련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상은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중학교 1~3학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시기의 학생들은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은 연구소의 전문성을 반영하면서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감형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예연구사의 직무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업 소개를 넘어, 해양유산과 관련된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2) 프로그램 개발 과정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개발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기획→맵 구성 결정→구현 전략 수립→세부 콘텐츠 설계→체험 흐름 구성→시범운영

메타버스 기반으로 학예연구사의 직무를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수집과 콘텐츠 설계부터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해양유산 분야의 특수성과 연구소 업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수중발굴과 전시기획을 두 축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줌(ZEP)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아바타가 이동하며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한 맵 구조를 설계하였다. 체험 맵은 ‘수중발굴’과 ‘전시기획’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맵은 독립적이면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중발굴 맵은 전라북도 군산 십이동파도선 발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사례로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교육적 흥미를 유도하기에 적합했다. 맵은 시굴 단계와 발굴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발굴 단계에서 학생들은 숨겨진 유물 4종을 찾아 스탬프를 찍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전시기획 맵은 연구소 기획전시실의 실제 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가상 전시공간으로 구현하였다. 학생들은 4개의 포탈 공간 중 한 곳을 배정받으며 맵에디터 기능을 활용해 자신만의 전시를 기획하고 원하는 곳에 유물을 배치하며 전시기획자의 역할을 체험한다.

각 맵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NPC(가상 안내자)와 안내판을 배치하였다. 수중발굴 맵에서는 발굴에 앞서 안내판을 통해 발굴 절차와 발굴 현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전시기획 맵에서는 전시 유물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체험 후에는 참가자가 방명록 기능을 통해 체험 소감을 작성하고, 자신이 활동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명록은 교육 효과를 평가하고 학습 결과를 기록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와 같은 개발 과정은 단순한 가상 체험을 넘어, 실제 연구소의 전문성을 반영한 콘텐츠와 학습 흐름을 교육 목적에 맞게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장 접근이 어려운 수중발굴

과 전시기획이라는 직무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은 2024년 5월 글로벌교육박람회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체험이 진행되었다. 실제 운영 결과, 전시기획 맵의 맵에디터 기능은 초등학생에게는 다소 어렵고 고등학생에게는 단순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으며, 체험 몰입도가 가장 높은 대상은 중학생으로 확인되어 중학교 1~3학년을 최종 교육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3) 수업 구성 및 진행 방식

(1) 수업 구성

과정	소요 시간	내용	관련 자료	비고
소개	10분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소개 - 3인 3색 학예연구사 VLOG 시청   ▲ 3인 3색 학예연구사 브이로그	영상	
활동	10분	○ 메타버스 로그인 준비 - 이메일 등록 및 권한 부여	메타버스 접 (ZEP)	2025년 퀴즈 신설
	25분	○ 메타버스 활동 - 수중 발굴 현장 맵 통한 수중 발굴 과정에 대한 이해, 난파선 및 출수 유물에 대한 학습 - 해양유산 퀴즈(5문제) 후 물게이미기 증정  		
	10분	쉬는 시간		

과정	소요 시간	내용	관련 자료	비고
활동	40분	○ 메타버스 활동 - 기획전시실 맵 통한 '나만의 전시 기획' 실습  	메타 버스 접 (ZEP)	2025년 퀴즈 신설
평가	5분	○ 마무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설문 작성 - 국가유산 메모리게임&영수증 사진기 기념 촬영	설문지	

2024년에는 45분 1차시 수업 구성으로 수중발굴과 전시기획 체험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운영 결과 개인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하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충분히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1차시(수중발굴 체험)와 2차시(전시기획 체험)로 나누어 총 90분 수업으로 개편하였으며, 학교 상황에 따라 1차시만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 수업 진행 방식

1차시는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로 시작되며, 이후 수중발굴·보존처리·전시기획을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3인의 직무를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시청한다. 이후 학생들은 ZEP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수중발굴 체험 맵에 접속하고, 안내판을 참고하여 가상의 시굴·발굴·인양 단계를 차례로 체험한다. 체험 후에는 방명록에 소감을 작성하고, 안내판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5문항의 퀴즈를 풀며 학습 내용을 점검한다.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해양유산 퀴즈 시간은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차시는 ZEP의 맵에디터 기능을 활용한 전시기획 활동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튜토리얼 영상과 담당자의 설명을 통해 에디터 사용법을 익힌 뒤, 각자 배정된 공간에 자신만의 전시실을 기획하고 구성한다. 전시가 완료되면 화면을 캡처해 방명록에 업로드하며, 마지막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4) 콘텐츠의 특수성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은 실제 수중발굴 현장과 전시 공간을 모델링하여 ZEP 플랫폼 내에 가상으로 재현한 점에서 기존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수중발굴 맵에서는 시굴, 제토, 유물 인양 등 실제 발굴 과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체험할 수 있고, 전시기획 맵에서는 학생이 직접 전시품을 배치하고 해설 문구를 작성하는 등 전시 기획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더불어 퀴즈와 방명록 작성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게 하고, 퀴즈 참여 시 물게임기와 같은 실물 보상도 제공되어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교육 운영 성과 및 효과

1) 운영 현황

연도	학교명	대상	인원	비고
2024년	함평군 신광중학교	중학교 2,3학년	8명	
2024년	영광군 영광중학교	중학교 1학년	24명	
			20명	
			25명	
2024년 소계			77명	
2025년	신안군 임자중학교	중학교 1학년	17명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지정된 도서 지역 학교
2025년	목포시 청호중학교	중학교 3학년	27명	
			27명	
			28명	
			23명	
2025년	영암군 영암여자중학교	중학교 2학년	23명	
			22명	
2025년	여수시 무선중학교	중학교 3학년	24명	
2025년	완도군 금일중학교	중학교 1학년	14명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지정된 도서 지역 학교
2025년 소계			205명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중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 프로그램은 학예연구사 직무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진로 체험 교육으로 작용하였으며, 메타버스 기반 체험 방식은 학생들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학예연구사 직무 이해도 향상

교육 전에는 ‘학예연구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0%(18명)에 불과했으나, 교육 후에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65.2%(184명)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영상 시청 및 수중발굴과 전시기획이라는 전문 직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 방식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2) 직무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증가

학예연구사에 대한 관심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3.89점으로 나타났으며, 4점 이상(높은 관심)을 선택한 학생은 42.6%(120명)에 달했다. 자유서술형 문항에서는 “수중발굴을 직접 해 보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직접 전시회를 만드니까 힘들지만 재미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소감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는 체험 중심의 수업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동기를 효과적으로 자극했음을 시사한다.

(3) 메타버스(ZEP)를 활용한 수업 방식에 대한 높은 만족도

메타버스 기반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평균 4.49점(5점 만점)으로, 응답자(205명)의 88.8%(182명)가 4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수중발굴 및 전시기획 맵을 아바타로 이동하며 활동하는 구성은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으며, 학생들은 새로운 방식의 직무 체험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개선 과제

설문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은 더 많은 유물을 찾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물의 종류와 수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중발굴 현장 맵을 추가 제작하여 활동의 난이도와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존과학은 브이로그 영상으로만 소개하고 있어 실제 직무 체험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유물 복원에 대한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보존과학자 체험 교육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기 때문에 인양된 유물이 어떻게 복원되고 관리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존과학 맵을 신규로 개발함으로써, 학예연구사의 주요 직무 3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콘텐츠 고도화는 학생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더욱 높이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ZEP)을 활용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중발굴과 전시기획을 주제로 한 학예연구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을 개발하고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간적 제약과 기존 진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된 본 프로그램은 해양유산 전문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과 실감형 가상체험 설계를 통해 높은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사전 이해도가 낮았던 참가자들이 교육 후에는 학예연구사 직무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과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계기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기술적 고도화와 더불어 다양한 직무군 및 콘텐츠 확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진로 교육의 범위를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 본 사례는 메타버스 기반 진로교육이 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 사례와 활용방안

신 주 혜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I. 머리말

최근 해양유산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이를 대중과 가까운 거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해양유산'전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06년부터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전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해양유산을 소개함으로써 대국민 인식 제고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해양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중에게 해양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2025년에 진행된 대표적인 세 가지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의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시 사례

1. 제1차 '수중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5.3.)

첫 번째 사례는 지난 3월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2025 수중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5)'이다. 이 박람회는 스포츠레저 및 해양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형 행사로, 해양유산이 일반 대중은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였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본 행사에 참여하여 수중발굴과 해양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를 구성하였다. 전시물은 태안과 진도 해역에서 발굴된 수중유산(복제품)인 보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을 포함한 총 22건 36점이며, 수중발굴 탐사선인 누리안호와 씨뮤즈호의 모형도 함께 전시하였다.



또한 '이동형 수중발굴 체험상자'를 현장에 설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수중발굴 과정을 체험하고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산업박람회에 문화유산 콘텐츠를 접목한 사례로서, 해양유산의 교육적·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다층적으로 드러낸 전시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차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



▲ 전시 설명

▲ 이동형 수중발굴 체험상자

2. 제2차 '전남 진도군 관매도 전시'('25.6.)

두 번째 사례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에서 개최한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초 관매도선을 재현한 모형배와 이동식 진열장을 활용한 해양유산 전시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섬 지역에서도 전문 유물 전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관매도의 풍경과 사람들》을 주제로, 연구소가 현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백 점의 사진 중 20점을 선별하여 관매도의 사진전을 함께 개최하였다. 전시는 관매도 관광쉼터에 마련되었으며, 이 공간은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장소로 지역민의 생활과 접점을 이루는 곳이다 전시 사진에는 관매8경을 비롯한 후박나무, 해녀, 미역 채취, 쑥 농사 등 관매도의 생업과 바닷가 일상이 담겨 있었다.

이번 전시는 단기간의 기획 전시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설 전시 공간으로 전환되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 종료 이후에도 철거 없이 공간을 유지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전시 운영 모델을 실현하였다. 또한 관람객 참여 콘텐츠로 관매8경의 풍경이 인쇄된 엽서에 감상을 적어보는 체험 공간을 함께 운영하였다. 관람객들은 사진전을 감상한 후 자신만의 기억을 엽서에 기록하며 관매도에서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간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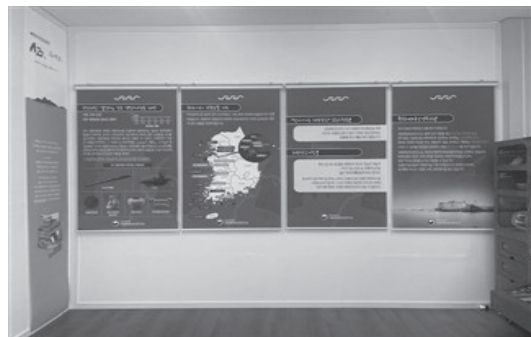
▲ 제2차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 장소
(관매도 관광센터)



▲ 관매도 어선 모형배
(20세기 초, 축척 1/15)



▲ 이동형 진열장



▲ 전시 패널



▲ 관매도 사진전
(관매도의 풍경)



▲ 관매도 사진전
(관매도의 사람들)

3. 제3차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 전시’

세 번째 사례는 7월에 진행된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 내 전시이다. 이곳은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로, 해양유산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시장소인 고하도는 명량대첩 이후 이순신 장군이 약 106일간 머물며 판옥선을 재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착안하여,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수군의 전통 선박’을 주제로 기획하였다. 전시 구성은 거북선과 판옥선 모형배를 중심으로, 관련 패널과 해설 자료를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수군의 해양기술과 선박 구조에 대한 정보를 관람객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해양유산의 역사적 깊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광지라는 특성과 역사적 장소성이 결합된 이번 전시는 해양유산을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살아 있는 이야기’로 구성하여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Ⅲ. 활용 방안 및 제언

이러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 교육적 가치 제고, 관광 콘텐츠 확장의 가능성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현장에서 해양유산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대중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용 방안은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모색할 수 있다.

【표 1】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의 활용 방안

1	지속가능한 지역 밀착형 전시 운영	- 관매도 사례처럼 철거 없는 상설 전시 모델을 확대하고, - 지역주민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전시 콘텐츠를 공동 생산하는 방식 도입
2	산업 박람회 및 상업 공간과의 협업 강화	- SPOEX 사례처럼, 다양한 산업·상업 전시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유산을 새로운 소비층에게 노출하는 전략이 필요
3	교육·체험 요소 강화	- 단순한 시각적 관람을 넘어, 유물 해설, 모형 조작, 엽서 작성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요소를 확대하여 전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IV. 맺음말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는 단순히 전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해양유산이 우리 삶 가까이
에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2025년에 추진된 다양한 사례들은 국가 차원의 해양문화 확산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 의
미 있는 사례로 작용하며, 향후 유사한 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전시가 정책적 지원 속에서 더욱 체계화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되어
해양유산에 대한 대중의 공감과 참여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청동 유물의 제작 기법 연구

강 승 희 | 국립해양유물연구소

1. 서론

고대 청동 유물의 제작 과정은 합금, 주조, 단조 및 각종 열처리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청동 합금의 화학조성과 제작 과정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고대 청동기의 독특한 기술 체계를 이루게 된다.

마도 3호선의 역사적 성격은 목간과 죽찰을 통해 밝혀졌다. 발굴된 목간과 죽찰에서 발송지가 呂水縣(현재 전라남도 여수시)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취인은 신윤희(辛允和, 고려사(高麗史)에 1260년 將軍으로 나옴), 유승제(兪承制, 승제= 承宣, 兪千遇가 1264~1268년 승선직에 있음), 사심(事審) 김영공(金令公) 등의 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마도 3호선은 1264~1268년 사이의 선박임이 밝혀졌다.

본 발표에서는 태안 마도 3호선 청동 유물과 함께 출수된 목간의 정확한 연대를 바탕으로 청동 유물의 화학조성 및 미세조직 관찰을 통해 금속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13세기 고려시대 청동 유물의 제작 과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태안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청동 유물을 대상으로 금속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청동 유물은 선체의 중앙부인 제3칸에 집중되어 있다. 이 선박의 제3칸은 선원들의 취사 행위를 비롯한 선상생활이 이루어지던 공간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이 구역에서 출수된 유물은 선박 내의 일상생활 용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청동술가락 2점, 청동용기 3점 등 총 5점을 선정하여 청동 유물의 미세조직 및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청동유물 분석 목록

연번	출수위치	유물명	샘플링 위치	수량
1	마도 3호선 K6	청동손가락(3-211)	①술부 ②술목 ③술자루	3
2	마도 3호선 K7	청동손가락(3-261)	①술부 ②술목 ③술자루	3
3	마도 3호선 K6	청동대접(3-198(1))	①저부 ②구연부 ③수리부	3
4	마도 3호선 L6	청동대접(3-240)	①저부 ②대각저부 ③대각구연부	3
5	마도 3호선 K6	청동대접(3-252(1))	①동체부 ②구연부 ③대각구연부	3
합계 5점 15건				

3. 연구 결과

태안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청동 유물에 대한 미세조직과 성분분석을 통하여 고려시대 민간에서 사용된 청동 유물의 제작 방법과 기술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동 유물의 화학적 조성 비율과 제작 기법에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세조직 관찰과 성분분석을 통하여 제작 기법을 추정할 수 있다.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청동 유물은 대부분 1mm 내외의 얇은 두께를 가지는데 이러한 얇은 벽면은 주조만으로 제작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열간가공 작업은 필수불가결하게 된다. 이들의 제작에는 주조과정-열간가공-담금질 열처리가 차례로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조공정으로 만든 청동 유물의 미세조직에서 쌍정과 martensite 조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열간가공과 담금질 열처리가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β 상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구간이 586~799℃인 점을 고려할 때 담금질 열처리는 적어도 586℃ 이상의 온도에서 수행되었을 것이다. 청동에서 martensite 조직은 β 상보다 경도가 낮으므로 유물의 취성 완화를 위해 고안한 기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동유물의 미세조직을 살펴보면 대부분 $\alpha+\beta(M)$ 상으로 되어 있지만 드물게 $\alpha+\gamma$, $\alpha+\beta(M)+\gamma$ 상으로 구성된 미세조직도 관찰된다. 이러한 변태 온도의 경계가 불명확한 미세조직이 출현하고 있어 담금질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이처럼 유물과 전통기술의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는 온도와 시간, 순서 등의 담금질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¹⁾

1) 이재성, (2009), 「한국 전통 방짜유기의 금속학적 특성과 재현실험」,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표 2.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청동 유물 분석 결과 및 제작과정(C:주조, F:열간가공, Q:담금질, Sc:서냉)

유물명	위치	Cu	Sn	Pb	개재물	미세조직	제작과정
청동손가락 (3-211)	술부	76.83	23.17	-	S	$\alpha+M$	C→F→Q
	술목	77.32	22.68	-	S	$\alpha+M$	
	술자루	78.87	21.13	-	S	$\alpha+M+r$	
청동손가락 (3-261)	술부	78.44	21.56	-	S	$\alpha+M$	C→F→Q
	술목	78.92	21.08	-	S	$\alpha+M$	
	술자루	79.11	20.89	-	S	$\alpha+M+r$	
청동대접 (3-198(1))	저부	76.50	23.50	-	S, Fe	$\alpha+M$	C→F→Q
	구연부	76.60	23.40	-	S	$\alpha+M$	
	수리부위	76.40	23.60	-	S, Fe	$\alpha+M$	
청동대접 (3-240) 청동대접	저부	77.02	22.98	-	S	$\alpha+M$	C→F→Q
	대각저부	76.31	23.69	-	S	$\alpha+M$	
	대각구연부	77.04	22.96	-	S	$\alpha+M$	
청동대접 (3-252(1))	동체부	77.31	22.69	-	S	$\alpha+M$	C→F→Q
	구연부	78.77	21.23	-	S	$\alpha+M$	
	대각구연부	77.77	22.23	-	S, Fe	$\alpha+M$	

지금까지 발표된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출토 용기류에는 미륵사지, 분황사지, 신라 왕경 출토 유물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청동유물 미세조직의 특징은 기지에 부분적으로 β 상이 관찰되지만, 완전한 조직을 이루지 않았고 가공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주조 후 청동 유물의 취성을 없애기 위한 담금질 처리가 이루어졌지만, 단조 등의 열간가공은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시 가용한 기술 수준이 열간가공과 열처리를 연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작 방법 면에서는 단순히 주조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주조와 단조 또는 주조와 담금질을 모두 병행한 경우가 발견된다.²⁾

고려시대의 방짜유기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유물에서 주조에 이어 열간가공과 담금질을 병행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동 소재에는 예외 없이 22% 근방의 주석이 첨가됐지만 납이나 비소와 같은 여타의 소재는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고려

2) 정영동, 박장식, (2004), 「신라왕경 출토 청동유물에서 확인되는 청동기 제작 기술의 변천」, 문화재, 제37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67~284.

3) 박장식, (2005), 「조선의 청동기 기술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 제15집, 83~94.

시대 사찰 터인 사뇌사지에서는 다량의 청동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서는 향완, 대접, 항아리 등의 용기류도 포함되어 있다. 출토 청동 용기류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 결과 대부분 안압지 출토 청동 용기의 제작 기법과 유사하였지만, 대접은 구리 78%와 주석 22%의 정확한 비율로 합금하여 고온에서 두드려서 형태를 만들고 담금질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방짜유기로 확인되었다.⁴⁾

이제까지의 고려 금속기들이 대부분 사찰 유적이거나 분묘에서 출토된 것과 달리, 마도 3호선 출수품은 선박이라는 제한된 일상생활 공간에서 선원들이 직접 사용하였던 선상생활 도구가 발견되었다.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청동 유물은 대부분 주석 함량이 약 22%로 고온에서 열간가공한 뒤 담금질 처리한 방짜유기이다. 이렇듯 의례 용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사용된 생활 용기까지 방짜유기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목·죽간을 통해 정확한 편년이 밝혀짐으로써, 13세기 중엽 대몽 항쟁기에도 청동 그릇이나 숟가락과 같은 생활용 금속 공예품들이 선원과 같은 민간인들 사이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청동 유물의 미세조직은 담금질 처리는 이루어졌지만, 열간가공 공정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고려시대 이후 청동 유물의 미세조직은 열간가공과 담금질의 흔적이 관찰된다. 이는 주조만으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이른 시기와는 달리 청동 유물의 용도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부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⁵⁾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에 청동 유물 분석에 대한 자료가 적은 관계로 '방짜유기' 기술이 언제부터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3. 시대별 청동 유물 미세조직 특징

유적명	시대	제작공정
경주 신라왕경	삼국시대~통일신라	주조-담금질 (520~586℃)
경주 안압지	통일신라	주조-담금질 (586℃ 이상)
상주 청리	고려시대	주조-열간가공-담금질 (586℃ 이상)
청주 산남동	조선시대	주조-열간가공-담금질 (586℃ 이상)

4) 강형태, 유혜선, 문선영, 권혁남, (2000), 「청주 사뇌사지 청동기의 과학분석(I)」, 박물관보존과학, 제2집, 국립중앙박물관, 57~68

5) 박장식, 유재은, (2004), 「이천 설봉산성 출토 청동유물에 나타난 청동기 제작 기술체계」, 문화사학, 제21집, 한국문화사학회, 321~343.

4. 결론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청동 유물에 대한 주요 성분비, 미세조직 등의 결과를 통하여 13세기 고려시대의 금속 제작 기술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짜유기의 제작 기술 체계가 언제 도입되었고 어떠한 변화양상을 거쳐 지금의 전통 기술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현재는 미비한 실정이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동 유물과 통일신라 이전의 유물을 비교할 때 이번에 분석한 자료는 시대가 명백함으로 시대 간 상호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중유산 디지털 기록화 관리 일원화 프로그램 개발

최재완 · 양순석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서론

과거에 기록물은 인쇄물, 수기(手記)로 작성된 보고서 등으로 보관되어왔다. 이후에는 개인 컴퓨터의 보급 등으로 HDD와 같은 장치에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향으로 기록방식이 전환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클라우드나 공유폴더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러 기업 등에서 활용되어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보안 문제에 의해서 공유 서버와 같은 데이터 공유방식이 제한된다.

특히,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는 발굴기능, 전시기능, 유물관리, 보존처리, 분석데이터 관리 등 새로 생성된 정보가 각 부서와 기능에 맞게 상호 간 이동하며, 위와 같이 인쇄물, 보고서, 개인 PC의 HDD 등에 난해하게 펼쳐져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가지각색이다. 최초로 찾은 원본 데이터가 결국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맞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재가공해야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애초에 최초의 데이터나 중간단계의 데이터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보존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처음 유물이 보존과학실에 인수되고 나서 상황을 기록하고, 유물의 정보와 고화질의 사진자료, 분석데이터 등을 추가로 생성한다. 이러한 정보는 보존처리기록카드라는 명칭의 기록물에 전부 기록되는데 문제는 사진자료는 jpg와 raw data 형식, 분석데이터는 각 분석기기에 따른 특수한 확장자를 갖고, 사진도 원본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유물 1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증구난방으로 섞이거나, 따로따로 보관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더 큰 어려움은,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어 보존과학실로 인수받을 때이다. 발굴유물의 특성상 발굴순서에 맞게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재질이 번호 순차별로 맞지 않게 등록 되고, 보고서에 등록되는 유물번호 또한 계속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최초 번호

와의 연동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물 재질에 따라 보존처리 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존처리 완료되어 수증발굴과로 인계인수되고, 중간에 특정 유물번호를 부여받은 유물은 남겨지는 경우도 있다. 결국 수년이 경과한 뒤에는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물번호 하나하나 전부 담당자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미 유물목록이 정리가 되어도 수량이 많다보니, 수백 mb이상의 한글문서 작성해야되고, 중간에 빠지는 유물번호도 다시 체크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미 확인된 유물도 인수인계증이나 보존처리 목록을 작성할 때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수증발굴과와의 업무에서도 이·삼중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는 점이다. 최초 발굴된 유물의 정보를 수증발굴과에서 기록하고, 보존처리로 넘겨줄 때 상호 간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존파트에서도 다시 해당 자료를 작성해서 재기록해야 한다. 유물관리 파트인 수장고에서 넘어오는 유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으로 정보들이 이동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불필요한 재작업과 통계수치 일치 및 정확한 유물 정보의 추적 관리를 위하여 2024년부터 유물과학팀에서는 유물의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발굴부터 보존·국가귀속 유물관리까지 일원화된 하나의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MS excel과 access를 활용하였지만, 유물수량과 용량이 누적되면 사용에 제한이 되는 점 및 보안·파일공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중장기적인 데이터 보관을 위해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하여 광주데이터센터에 우리 연구소에서 생성된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였다.

2. 유물관리 프로그램 세부내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유물 및 유물정보의 이동 흐름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수증발굴과-유물발굴] → [유물과학팀-보존처리] → [수증발굴과-보고서작성 및 국가귀속] → [유물과학팀-수장고격납 및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
- 2) [유물과학팀-수장고유물 보존처리요청] → [유물과학팀-보존처리] → [유물과학팀-수장고격납]
- 3) [전시교육과-전시유물 보존상태 점검 및 격납요청] → [유물과학팀-보존처리 요청] → [유물과학팀-보존처리] → [유물과학팀-수장고격납 및 재전시]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최초 발굴된 유물은 수증발굴과에

의해 기록된다. 중요한 정보는 [발굴정보] 탭에서 발굴조사명, 발굴유물번호, 발굴지역, 발굴세부 위치, 유물명, 재질 등의 기초정보를 기록하고 발굴당시 사진자료까지 작성하여 저장한다. [발굴정보]에 저장된 유물정보는 일괄처리로 유물과학팀(보존)으로 인수인계 할 수 있게 기능을 부가하였다. 인계된 유물정보는 [보존처리 정보] 탭으로 일괄로 넘어오고,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온 정보에는 비로소 보존과학 관련 자료를 추가로 작성해서 기록할 수 있다. 먼저, 보존처리 중에 유물의 세부사항이 확인 될 수 가 있으므로, 보존유물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보존처리과정, 보존처리 전 후 사진 및 상태, 분석자료, X-ray 자료 등을 작성할 수 있다.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수중발굴과로 전체 인수인계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증도 사진과 같이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유물정보는 수중발굴과 뿐만 아니라 수장고 관리 파트에서도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물관리] 탭에서도 원하는 유물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보존파트]로 보존처리 요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수인계증 자동 출력, 해당 정보 인수인계를 한 번의 클릭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발굴정보], [보존정보], [국가귀속 유물정보]는 서로 연계되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pick up 해서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유물정보]에서는 국가귀속 할 때 필요한 excel 양식으로 원하는 유물정보를 내려받아 해당 파일을 곧바로 국가귀속 신청 할 수 있게 편리성을 가하였으며, e-museum과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맞는 양식도 보완하여 수장고 유물관리 쪽에서도 더 빠르고 쉽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현재 2026년까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 광주데이터센터를 활용하여 저장되는 모든 정보들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 기관 간의 협업과 디지털 데이터 활용 통하여 기관 내실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서비스 혁신의 주요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안착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용자들이 원하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키워드만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2중 3중으로 보안관리 되는 정보는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 수중발굴 현장에서는 excel 양식에 맞춰 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유물명에 맞게 유물사진명을 작성하면, 일괄적으로 사진도 업로드하여 하나하나 유물사진을 찾아주는 번거러움도 덜어주는 기능도 업데이트하고 있다. 향후 해당 프로그램이 더 완벽하게 다듬어져서 중장기적으로 발굴부터 전시유물 대여까지 관리되고 데이터 관리도 기획운영부서에서 총괄하여 기록관리를 하여 우리 연구소에서 생성된 모든 발굴유물에 대한 정보들이 더 안전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되기를 기대한다.

신안선의 열화물과 재처리 방안 연구

박 창 현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서론

신안선은 14C 초 중국 Ningbo에서 출발해 일본의 하카타와 교토로 항해 중 전남 신안군 지도면 도덕도 인근에서 좌초되었다. 1981년부터 84년까지 신안선을 인양해 약 20년 동안 보존처리를 진행하였고 복원을 통해 현재 전시되고 있다.

신안선은 뿔 속에 매장되어 혐기성 환경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었지만, 내·외부의 철못으로 생성된 철부식물과 매장환경에서 황환원박테리아(SRB)의 활동으로 철과 황이 다량으로 존재한다.¹⁾ 이러한 철과 황은 흡습성이 큰 PEG(Polyethylene glycol)를 매개체로 일정하지 않은 전시환경 아래 상대습도의 변화로 용해와 응고되는 과정에서 확산되어 열화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²⁾ 철과 황으로 구성된 화합물인 열화물은 산성화로 인해 주로 목재의 셀룰로오스의 말단기를 가수분해시켜 가루화로 목재 표면의 손상을 유발하며, 목재의 강도 저하 및 구조를 변화시킨다.³⁾ 특히, 수화된 옥타 황(S8)의 산화로 황의 원자 당 5-10배의 부피팽창이 발생하여 표면에 추가적인 기계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⁴⁾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23, 신안선 보존 프로젝트 종합 보고서.

2) Howie, F., 1978, Storage environment and the conservation of geological material, The conservator 2: 13-19.

3) Sandström, M., Jalilehvand, F., Damian, E. et al., 2005, Sulfur accumulation in the timbers of King Henry VIII's warship Mary Rose: A pathway in the sulfur cycle of conservation concer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2(40): 14165-14170.

4) Preston, J., Smith, A. D., Schofield, E. J. et al., 2014, The effects of Mary Rose conservation treatment on iron oxidation processes and microbial communities contributing to acid production in marine archaeological timbers. PLoS One, 9(2): e84169.

이러한 열화물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 신안선의 보존 프로젝트 및 여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신안선에 존재하는 철과 황에 의한 열화물의 특성 및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열화물을 제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킬레이트제, 젤, 박테리아, 나노입자 등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체가 어려운 대형유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표면 열화물을 제거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열화물

성분 분석(XRF, ICP)을 통해 철과 황의 함량이 높게 관찰되었으며, 이들로 구성된 화합물은 주로 황화철(Iron sulfide), 황산철(Iron sulfate), 산화철(Iron oxide)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합물은 실체현미경상 표면에서 내부까지 주로 적갈색으로 관찰되었으며, SEM을 통해 전체적으로 철과 황이 검출되었다. 특히, 세포벽 내부에 철, 황, 규소 등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결정과 황화철(FeS), 황산철(FeSO₄), 산화철(Fe₂O₃) 등 이온결합화합물로 추정되는 결정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열화물에 의한 산성화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등 다당류가 가수분해되었다. 또한, PEG의 분자량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열화물이 PEG의 말단구조와 결합해 생성된 포름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실험방법

신안선의 주요 열화 요인 중 철을 제거하기 위해 킬레이트제를 넣은 하이드로젤로 표면 열화물의 제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처리 과정 및 처리 후 환경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상대습도가 유지되는 조건과 유지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료는 보존처리 후 보관 중인 신안선 편을 이용하였다. 시료는 2×2×1.5(가로×세로×높이, cm) 크기로 각 실험군당 3개를 제작하였다. 하이드로젤은 한천(agarose)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하이드로젤은 4%의 농도로 제작하였으며, 하이드로젤 내 킬레이트제는 5%의 농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킬레이트제로 사용한 약품은 Sebacate, EDTA-2Na, DTPA(Diethylene triaminepentacetic acid), DFOM(Deferrioxamine mesilate)를 사용하였다. 모든 약품은 수용성이나

DTPA와 DFOM은 알칼리 상태에서 효과가 좋으므로 pH 8.5 buffer 용액에 용해하였다.⁵⁾ 하이드로젤은 응고된 상태에서 표면을 덮는 방식으로 열화물을 제거하였으며, 실리콘 끈으로 묶어 고정 및 밀착력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킬레이트제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4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실험 후 표면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상대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이하 조절환경)은 밀폐용기에 아트소브 50%를 이용해 실험 중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상대습도가 유지되지 않은 환경(이하 일반환경)은 주변 환경에 노출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처리 횟수는 2회, 3회, 무제한으로 나눠 열화물의 제거 정도를 비교하였다. 처리가 진행된 이후 약 24시간이 지나서 다시 처리를 진행하였으며, 무제한은 횟수를 정하지 않고 철과 황의 상대적 비율 변화를 통해 실험을 반복하였다.

처리 전·후의 표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체현미경(M205 A, Leica)과 처리에 따른 철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XRF(Artax 400, Bruker)로 표면의 3부분을 처리 전과 횟수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처리 후 환경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과 표면을 물리적으로 세척된 시료군을 분석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Sebacate

처리 후 표면의 백색 열화물이 제거되었다. 특히, 일반환경 2회 시료는 황색 화합물이 관찰되었으며, 일반환경 무제한(9회) 시료는 수차례의 처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분이 주입되어 백색 화합물이 상당히 분포하였다. 또한, 환경과 상관없이 할렬이 모든 시료에서 관찰되었으며, 하이드로젤이 잔존하는 부분은 붉게 변해 처리 횟수가 많을수록 표면에 상당히 남아있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표면의 백색 열화물이 증가하였으나, 세척 이후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XRF 분석결과, 실험 후 2회에서는 철과 황의 비율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3회와 무제한으로 처리한 시료는 철의 비율이 늘고 황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는 약품이 철보다 황에 반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6개월 후, 철의 비율은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세척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세척을 통해 결정들이 제거되었다.

5) Rapti, S., Boyatzis, S., Rivers, S. et al., 2023, Desferrioxamine B: investigating the efficacy of hydrogels and ethanol gels for removing akaganeite and maghemite from dry wooden substrates. Forests 14(2): 247.

4.2. DTPA

표면의 열화물이 전체적으로 제거되었으나, 2회 처리만으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 표면의 할렬은 조절환경에서는 기존의 할렬이 더 커졌다면 일반환경에서는 추가적인 할렬이 관찰되었다. 표면에 잔류한 하이드로겔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주로 투명한 상태이었다. Sebacate 시료와 같이 6개월 동안 열화물이 형성되었으나, 세척 이후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 후, 2회에서는 철의 비율 변화가 크지 않지만, 3회 시료부터 철의 비율이 변화하였다. 무제한(14회)에서 철의 비율 변화가 시료는 모든 조건에서 감소하였으나, 조절환경의 시료가 철의 비율이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리 종료 후, 조절 무제한과 일반 3회를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철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조절환경은 대체로 세척한 이후 철의 비율이 감소했으나, 일반환경에서는 반대로 철의 비율 변화가 증가하였다.

4.3. EDTA-2Na

표면의 열화물이 제거되었으나, 백색 열화물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표면 열화물 제거로 인해 내부 열화물이 들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드로겔이 수분 함량이 많아 처리로 인한 미세 할렬이 관찰되었으나, 육안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반복된 처리로 잔여한 하이드로겔은 DTPA와 같이 대부분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처리가 완료되고 열화물 결정이 증가하였으나, 세척과정을 통해 결정이 제거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조절환경의 모든 실험군에서 철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3회 실험군에서는 일반환경이 조절환경보다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여 철의 비율이 절반까지 줄어들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철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세척 이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4.4. DFOM

해당 약제를 적용한 시료들은 다른 약품을 적용한 시료들과 달리 표면이 붉게 물들었다. 이는 DFOM이 아주 적은 철의 양으로도 색상이 바로 붉게 변화할 정도로 반응이 빨라 4시간 동안 반응 물들이 목재에 흡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이 황색으로 관찰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백색 열화물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표면의 할렬이 관찰되었지만, 다른 약품에 비해 적게 관찰되었다. 황색으로 관찰되는 부분에서 대부분 황색 결정과 투명한 결정이 관찰되었다. 표면에 잔존하는 하이드로겔은 반응이 일어났으나, 다른 약품에 비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다른 시료들과 같이 6개월 동안 열화물 결정이 증가하였으나, 세척을 통해 제거된 것을 관찰하였다.

2회와 무제한(13회) 시료는 일반환경이 조절환경에 비해 철의 비율이 더 줄어들었으며, 3회 시료는 조절환경에서 철의 비율이 더 줄어들었다. 처리 이후, 시료들은 전반적으로 철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세척을 진행한 조절환경 시료들은 철의 비율 변화가 감소하였지만, 일반환경에서는 증가하였다.

4.5. 고찰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 수분함유량이 높은 하이드로겔의 특성으로 할렬과 결정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결정은 황색과 투명한 결정이 주로 관찰되었는데 황색 결정은 수분으로 인해 표면의 수용성 황이 용해되고 재결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처리 후 6개월 동안 염화물의 결정이 증가하였으나, 세척을 통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킬레이트제가 아닌 Sebacate는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황의 비율이 감소하여 철보다 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회 처리한 시료군 중 EDTA-2Na만 처리 전·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3회 처리의 경우, 대부분의 약품에서 철의 비율 변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하이드로겔 처리의 효과를 보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XRF 분석을 통해 처리 횟수에 따른 철의 비율 변화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상당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EDTA-2Na와 DFOM이 비교적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 중 상대습도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조건을 나눠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철의 제거 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 후 환경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체로 철의 비율 변화가 증가하였다. 이는 하이드로겔의 높은 수분함유량으로 내부의 성분이 표면으로 들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의 물리적인 세척을 진행한 이후, 조절환경에서 철의 함량 변화가 감소하고 일반환경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리를 통해 철의 비율 변화가 감소하더라도 보관 중에 철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지 않으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신안선은 수중 매장환경에서 SRB의 활동으로 축적된 황이 철못의 철과 만나 반응과정을 통해 황산철(FeSO_4) 등 열화물을 형성해 열화를 발생시킨다. 이에 목재의 주요 구성성분인 다당류를 가수분해하여 구조적, 기계적 손상을 유발해 열화를 유발하는 철을 제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진행한 재처리 방안 연구에서 XRF 분석 결과에 한정하여 EDTA-2Na와

DFOM이 처리 후 철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여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소한 3회 이상의 하이드로겔 처리로 실질적인 철 제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 중 상대습도에 따른 효과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실체현미경 관찰에서 할렬과 같은 물리적 변화가 일반환경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처리 후 열화물 결정의 증가에 따른 철의 비율 변화가 증가하였지만, 세척 이후 조절환경과 달리 일반환경에서 철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열화 방지를 위해 처리 후 환경은 상대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실험은 진행 중으로 처리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상대습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또한, 실체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결정 등 열화물의 성분 및 목재 표면 성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SEM-eds, XRD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목재 표면 열화물 제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지만, 하이드로겔의 높은 수분함유량으로 제거 과정에서 열화를 촉진시키고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수분함유량이 적은 하이드로겔을 공동연구 중이다. 이를 통해 표면 열화물 제거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출수 닻돌의 암종 분류와 연구 방향

임 성 태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연구목적

닻돌은 선박의 부속구로 닻에 결합하여 선박의 묘박(닻을 바다에 투입하여 선박을 정박시킴) 시 사용하며, 닻이 해저 바닥 면에 잘 박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닻장(Shank)의 역할과 닻의 무게를 늘려주는 무게 조절의 용도를 수행한다(김순갑, 2012; 박승민, 2022). 이러한 닻돌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87점(목포)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태안보존센터 154점으로 총 241점이 출수되었다.

국내 닻돌 연구는 태안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76점의 닻돌을 대상으로 닻돌의 평면과 단면, 홈 형식을 통한 형식 분류가 시도되었으며(홍광희, 2015), 이후 박승민(2022)에 의해 서 해양 출수 닻돌 228점의 무게, 형태, 장단비를 통해 형식 분류를 실시하고, 형식별 결합 방식의 상정 및 닻돌 출수 위치를 통한 항로 파악과 묘박지 추정을 시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장준(2010)은 마도 해역 출수 닻돌에 대한 광물학적 분석을 통해서 암석 종류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양주석(2019, 2020)은 서해 중부해역에서 출수된 154점을 육안관찰을 통해 암석의 종류를 동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해해역 출수 닻돌 80점(국립해양유산연구소 목포 보관)에 대해 기초 조사로 전암대 자율과 감마스펙트로미터의 비파괴조사를 실시하여 암종을 분류하였고, 향후 닻돌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재질특성 및 광물학적 분석 등의 추가 연구를 통해서 암석의 산지 추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선박의 항로 파악 및 묘박지를 추정, 선박의 크기 추정 등에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석 내용 및 방법

2-1. 분석 내용

땃돌 제작은 암석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암석학적 연구와 동일하게 연구가 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에서 암석 연구는 비파괴 분석에서 상태 분석으로 훼손지도 작성, 초음파 물성 측정, 에코팁 경도 측정, 적외선 열화상 분석, 디지털이미지 분석 등이 있으며, 광물학적 분석으로 분석전암대자율 측정과 감마스펙트로미터가 있다. 파괴분석으로는 광물학적 분석을 위해서 편광현미경 분석과 X-선 회절분석이 있으며, 지구화학적 분석으로 주성분원소 분석과 미량원소, 희토류원소 분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추정의 기초 조사로 전암대자율측정과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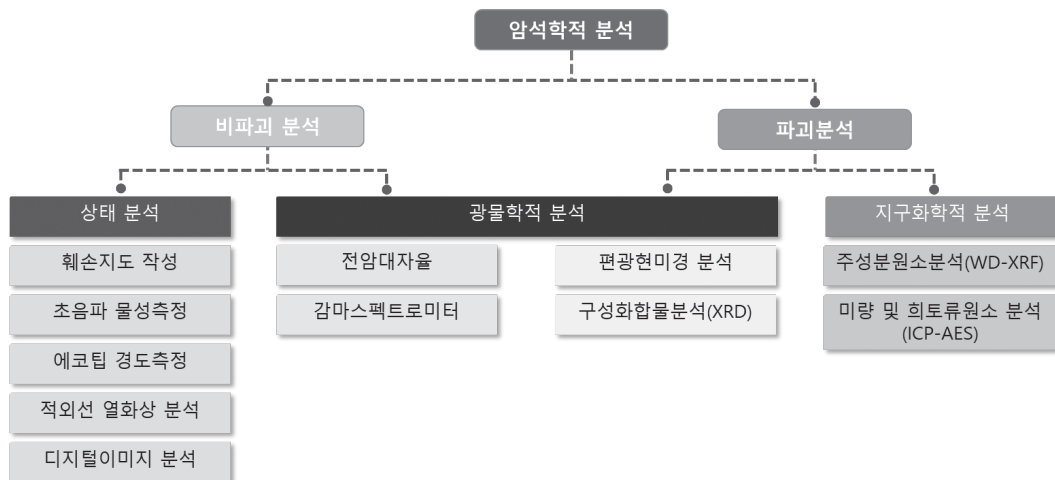


그림 1. 암석학적 분석 방법

2-2. 분석 방법

1) 전암대자율 측정

땃돌의 구성 암석의 자화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대자율 측정은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 10회 이상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따른 빈도수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이때 사용한 전암대자율기는 ZH instruments 사의 SM-30 모델이며, 단위는 10^{-3} SI unit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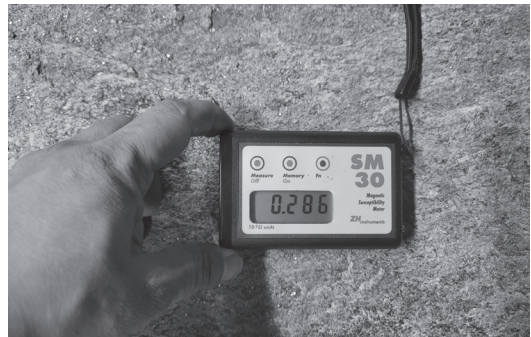


그림 2. 전암대자율 측정기 및 닛돌 전암대자율 측정

2) 감마스펙트로미터 분석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은 단채널 분석기 시스템으로서 4개창(특정한계치, K, U, Th)을 선택적으로 기록하며, 측정결과는 1) 특정한계치(threshold) 이상의 전체 카운트 수, 2) K 창에 대한 카운트 수, 3) U 창에 대한 카운트 수, 4) Th 창에 대한 카운트 수로 측정된다. 이러한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값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시료가 어느정도 균질해야 한다. 둘째, 붕괴 계열이 지속적으로 평행이어야 한다. 셋째, 시료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동일한 부재에 대하여 2분 간격으로 5회씩 혹은 3분 간격으로 3회씩 측정해야 한다. 감마스펙트로미터로 측정된 칼륨은 원소 비율(%)로 나타내며, 우라늄과 토륨은 방사성 붕괴 계열의 연속성으로 환산되는 등가함량(equivalent content, eU와 eTh로 표시)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마스펙트로미터는 ZH instruments 사의 GAMMA SURVEYOR II 모델이며, 단위는 pp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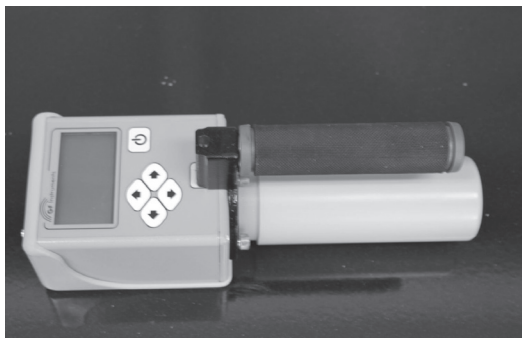


그림 3.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기 및 닛돌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

3. 분석 결과

3-1. 화성암류

화성암류는 48개(60%)이며, 암종으로는 화강암, 응회암, 유문암, 안산암, 테사이트, 규장암, 반암, 섬록암이 있다. 이들 화성암류 중 화강암 16개, 유문암 10개, 응회암 8개, 반암 6개, 안산암 5개로 화강암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4).

3-2. 변성암류

변성암류는 13개(약 16.3%)이며, 암종으로는 편암, 편마암, 슬레이트, 규암이 있다. 이들 변성암류 중 편암은 6개, 편마암은 4개, 슬레이트는 1개, 규암은 2개로서 대부분 편암과 편마암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5).

3-3. 퇴적암류

퇴적암류는 19개(약 23.8%)이며, 암종으로는 사암, 역암, 찰트, 석회암, 이암이 있다. 이들 퇴적암류 중 사암은 6개, 역암은 8개, 찰트는 1개, 석회암은 1개, 이암은 3개로 대부분 사암과 역암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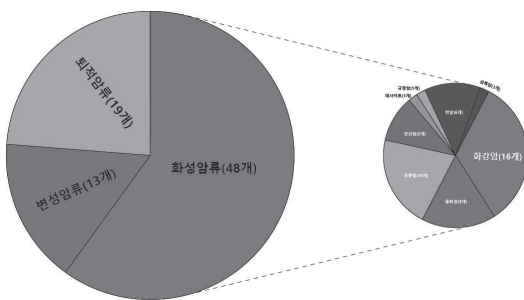


그림 4. 전체 닻돌 중 화성암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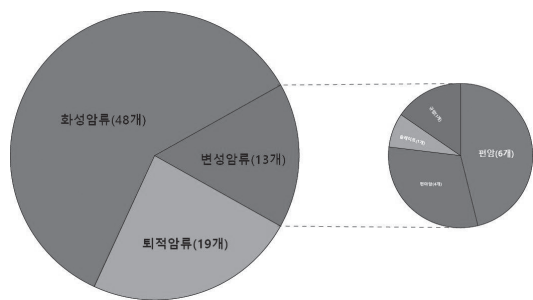


그림 5. 전체 닻돌 중 변성암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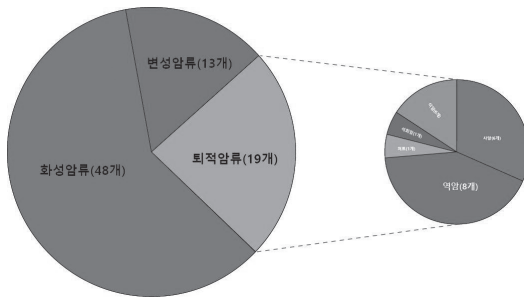


그림 6. 전체 닻돌 중 퇴적암류의 비율

4. 결론

암석은 성인에 따라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목포) 소장 닻돌의 암석 종류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화성암류는 48개, 암종으로는 화강암, 응회암, 유문암, 안산암, 데사이트, 규장암, 반암, 섬록암으로 분류되었다. 변성암류는 13개, 암종으로는 편암, 편마암, 슬레이트, 규암으로 분류되며, 퇴적암류는 19개, 암종으로는 사암, 역암, 찰트, 석회암, 이암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암종 분류 결과를 기초로 닻돌 보존관리 조사기록표를 작성 하였고, 향후 광물학적 분석등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닻돌의 산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서해중부해역 수중문화유산 탐사 현황과 과제

김 하 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I. 서론

수중문화유산 탐사는 유물과 고선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정밀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발견신고 해역에서 탐사가 이루어지며, 이 외에도 고선박 발견 해역, 과거 해전지, 도굴 발생 해역 등에서도 실시된다. 조사 방식은 잠수에 의한 육안조사가 기본이며, 다양한 장비(사이드 스캔 소나, 지층탐사기 등)를 활용한 탐사도 병행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 각지의 매장유산 발견신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중문화유산 탐사를 실시해왔다. 2007년 태안선과 마도 해역에서의 잇따른 고선박 발견을 계기로 2017년 서해문화유산과가 신설되면서 서해중부해역에 대한 자체 탐사가 본격화되었다.

서해중부해역은 고대부터 해상 항로로 이용되었으며, 보령·태안·당진·인천을 잇는 연안은 유속이 빠르고 암초가 많아 선박 침몰이 빈번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해상 활동의 흔적이 해저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중문화유산 조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2018년부터 서해문화유산과에서 실시한 서해중부해역 탐사 내용은 아직 정리되어 공개된 바가 없다. 본 글에서는 2018년부터 이루어진 서해중부해역의 수중유산 탐사의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해역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2018~2024년 서해중부해역 탐사 현황

1. 탐사 연혁

2018년 탐사는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충남 태안군과 보령시 일대의 신고해역 및 매장 추정해역 총 6개소(태안 2곳, 보령 4곳)에서 실시하였다. 태안 마도 IV지구 탐사에서는 도기 광구병편 1점이 출토된 것 외에 뚜렷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태안 파도리 통개 앞바다와 보령의 대섬 인근, 화력발전소 갑문 사이 해역, 고대도 해역 등에서도 이상체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삼시도 해역에서는 도기 소호편과 백자편 각 1점이 출토되어 해당 지역의 추가 조사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9년에는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하였으며, 충남 태안군의 8개 해역에서 탐사가 이루어졌다. 파도리 해역에서 방향타(키) 추정 목재편과 철제술, 도자기류 등 총 33점의 유물이 확인되었고, 꽃섬 인근에서는 닻돌 1점이 출토되어 침몰선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도 해역에서는 마도 2호선과 3호선 인근 지역과 남서쪽 해역을 중심으로 탐사하여 청자발과 철화매병 등 총 12점의 유물이 출수되었다. 삼시도, 죽도, 도항리, 승언리, 가의도 해역에서는 유물 발견 신고를 토대로 탐사가 진행되었으나, 유물이나 고선박과 관련된 이상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에는 5월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97일간, 충남 지역(태안, 보령, 서천, 당진) 이외에도 경기도 화성, 인천에 이르기까지 총 11개 해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였다. 태안 마도 해역에서는 청자발, 백자편 등 13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보령 지역에서는 장고도 해역에서 백자발편 1점, 삼시도 해역에서 백자발과 청자접시 등 8점의 유물이 출수되었다. 당진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사이의 조간대 조사에서는 청자와 백자류를 포함한 18점의 유물을 수습하였고, 주변 육상 지표조사를 통해 기와편, 토기류, 패총 등 주거지 흔적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화성의 입파도 해역에서는 청자병편 1점이 유물이 발견되었고, 국화리 해역 조사에서는 유물 또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7년 탐사가 이루어졌던 인천 섬업별 해역에서는 청자와 백자 219점이 출수되었고, 대이작도 해역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2021년에는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13일간, 충남 태안과 당진에 속한 5개 해역에서 탐사를 실시하였다. 태안 신진도리의 신진도와 목개도 사이 해역에서 청자접시 1점이 확인되었고, 파도리 꽃섬 인근에서는 대형 목재편과 닻돌이 발견되어 침몰선 관련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도~관장목 해역과 파도리 해수욕장 인근해역에서는 확인되는 유물이나 이상체는 없었다. 한편 당진 대난지도 해역에서는 2020년도에 이어 백자발, 청자류를 비롯하여 중국제 자기편 등 총 12점의 유물이 출수되었다.

2022년 탐사는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32일간 태안과 인천의 해역을 중심으로 4곳에서

이루어졌고, 이외에 예산군 옥계저수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신고된 지점을 탐사하여 백자접시 1점을 발견하였고, 양잠리에서는 취두 발견신고로 발굴조사가 진행된 지점에서 조사하였으나 추가적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수의 도자기편과 침몰선 돛대로 추정되는 목재가 발견신고된 인천 상공경도 해역에서는 백자편과 청자접시편 등 4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예산 옥계저수지에서는 예산군의 협조 요청으로 제24대 헌종대왕 태실비 관련 유물을 확인하기 위한 수중탐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된 유물은 없었다.

2023년도에는 발견신고에 따른 보령시 일원 해안에 대한 현지조사가 2건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태안 마도 해역 10차 수중발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해역에서의 수중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년에는 7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35일간 마도 해역에서만 탐사를 실시하였다. 자기, 도기, 기와 등 총 63점의 유물이 출수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선체외판, 청동순가락, 노지돌판 등 선상생활유물로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확인되어 마도 해역에서의 추가적인 고선박 발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주요 탐사 내용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진 서해중부해역 탐사 중 고선박과 관련된 유물(선체편, 닻돌 등)이 확인되거나 다수의 유물이 출수된 해역의 조사 내용을 인천·경기 권역과 충남 권역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탐사 및 발굴조사가 지속되어 그 성과가 꾸준히 공개되고 있는 태안 마도 해역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인천·경기 권역

(1) 인천 옹진군 섬업벌 해역

인천 섬업벌 해역은 2012~2013년 통일신라시대 선박인 영흥도선이 발굴조사된 해역으로, 추가적인 수중유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2020년 탐사를 진행하였다. 4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219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217점의 청자는 접시와 발 등 일상기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백자는 발과 철화백자 동체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해저면에 노출되거나 모래지질 또는 석재 하부에 박힌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다가 석재 사이에 포획된 것으로 해석된다.

섬업벌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서해중부해역 탐사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출수된 사례로, 출수유물로 보아 고려시대 선박의 침몰 가능성이 제기된다.



(2) 인천 옹진군 상공경도 해역

인천 상공경도 해역은 2022년 스쿠버 다이빙 중 다수의 도자기 파편과 선체의 돛대로 추정되는 구조물(지름 15cm, 길이 1m)을 발견했다는 발견신고에 따라 수중유산 탐사를 실시하였다. 6개 지점에서 수중탐색을 실시하였으며, 2개 지점에서 청자와 백자 총 4점을 확인하였다.

발견신고 당시 보고된 돛대 형태의 구조물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주변에 다수의 도자기 파편이 산재해 있었다는 제보로 미루어보아 고선박이 매장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충남 권역

(1) 태안군 파도리 해역

태안 파도리 해역은 이미 2011년도에 탐사가 진행되어 200점의 자기가 출수되었는데, 90프로가 청자이며 이외에 분청사기와 백자는 소량이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총 4차례 탐사가 이루어졌다. 2019년 파도리 남단 해역 탐사에서 방향타(키)로 추정되는 길이 6m의 목재편 1점을 비롯하여 철제술, 백자, 분청사기 등 총 33점의 유물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꽃섬 인근에서는 닻돌 1점이 발견되었다. 이후 2021년도 꽃섬 해역 조사에서도 닻돌 1점이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당시 인양은 하지 않았다. 통개 앞바다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파도리 해역은 다량의 유물이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특히 방향타(키)로 추정되는 구조물과 닻돌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선박과 유물의 집중 분포 가능성이 있다.

(2) 보령시 삼시도 해역

보령 삼시도 해역에서는 2014년과 2015년 탐사에서 다량의 청자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9개 조사지점을 설정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확인된 유물은 청자발, 청자접시, 백자 저부편 등 총 8점이며, 대부분 패각층이나 사질토, 개흙층에 피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삼시도 해역은 수심은 10~24m로 조류가 빠르고 지질이 복합적인 해역으로, 2014년 유물 다발 확인 이후 퇴적이 진행된 정황이 관찰되어 향후 반복 조사를 통한 유물 산포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3) 당진시 대난지도 해역

당진 대난지도 해역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탐사가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대난지도 남쪽 해안가 조간대에서 청자 발, 분청사기 접시편, 백자 접시편, 암기와편 등 18점의 유물을 확인하였고 이 외에도 다량의 자기편, 도기편, 기와편 등이 산재해 있었다. 또한 주변지역 육상 지표조사에서 주거지와 패총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하고 토기편, 청자접시편 등 4점을 유물을 수습하였

다. 2021년에도 지표조사와 수중탐색을 통해 10점의 유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에 토기 파수부편과 중국제 자기 1점도 포함되어있다.

조사 해역에 과거 선착장이 있었다는 주민 구술과 토기편, 중국제 자기 등이 출수된 정황으로 보아 고대 항로 및 국제무역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정밀조사 해역 제안

앞서 II장에서 정리한 탐사 내용과 2018년도 이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인천·경기 권역과 충남 권역에서 각각 정밀조사가 필요한 해역을 한 곳씩 선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인천·경기 권역 - 인천 섬업벌 해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서단에 위치한 섬업벌 해역은 동쪽의 영흥도와 서쪽의 자월도 사이에 놓여 있으며, 경기만 내 여러 도서 사이를 통과하는 강한 조류의 영향권에 있다. 전반적으로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지형을 보이며, 섬들 사이로 흐르는 조류는 매우 빠르고 방향이 일정치 않아 해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양환경적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섬업벌 해역은 조류가 강해 물이 들고 날 때 닻이 끌릴 정도로 선박 정박이 어려운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섬업벌 해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탐사 및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영흥도선’과 함께 약 9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되며 주목을 받았다.¹⁾ 출수 유물은 도기, 자기, 철제 술, 선제편으로 추정되는 목재 등이며, 이 중 청자가 전체 자기류의 97% 이상을 차지한다. 이후 2017년 실시된 탐사에서 영흥도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11점이 추가로 수습되었다.²⁾

이전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고선박 또는 유물집중매장처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2020년에 추가적인 수중 탐사가 실시되었다. 총 219점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자료용 유물을 포함할 경우 전체 확인 유물은 약 500점에 달한다. 출수 유물은 청자 접시, 백자 발, 도기류 등이며, 대부분 청자이다. 당시 결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유물 분포의 밀도와 출토 양상에 따라 퇴적층 하부에 추가 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유물 집중 분포 지점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1)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인천 옹진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4.

2) 해당 유물은 「수중문화유산 탐사해역 출수유물 보고서 I」(2021)에 보고되었다.

있다.

기존 조사에서 다량의 청자가 출수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탐사나 정밀지표조사를 진행한다면 고려시대 해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가 새롭게 확인될 확률이 높다. 특히 태안 마도 해역에서 고선박 4척이 연이어 확인된 사례처럼, 영흥도선에 이어 추가적인 고선박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 섬업별 해역은 유물 산포 범위의 확장 여부와 고선박 매장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요구되는 해역이다.

2. 충남 권역 - 태안 파도리 해역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에 소재하고 있는 파도리 해역은 태안반도 서단에 위치하고 있다. 태안반도는 여러 만과 도서가 형성된 리아스식 해안 형태를 띠고 있어 파도리 해역은 암초 분포가 많고 조류가 복잡하다. 그동안 탐사가 진행된 지점은 파도리의 남서쪽으로 통개항에서부터 꽃섬에 이르는 해역이며, 고선박 4척(마도 1~4호선)이 발견된 마도 해역과 인접하고 있다. 마도 해역은 안흥량이라는 조운로 상의 최대 난항처로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조난사고와 선박의 좌초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와 인접한 파도리 남서쪽 해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물이나 고선박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2011년 탐사³⁾에서 200점의 자기류 중 196점이 청자였는데, 청자압출양각화형접시 69점이 집중매장되어 있는 양상과 다발로 매장된 청자들을 목격했다는 발견신고 내용으로 보아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루어진 탐사에서는 자기류 이외에 닻돌, 선체편(방향타, 외·저판재 등), 철제 술 등 고선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탐사의 성과는 파도리 해역이 지리적·역사적으로 고선박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또한 2019년도 탐사에서 목재편에 ‘樊(울타리 번)’자로 추정되는 음각된 명문과 묵서흔이 함께 적힌 길이 81cm의 목재편이 수습된 바 있어⁴⁾, 이와 관련된 고선박이나 유물을 발견하고 연관성을 찾는 조사·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이전 탐사 결과까지 종합해보면, 충남 당진 대난지도 해역, 보령 삼시도 해역, 가의도 해역 등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올해 충남 서천 선도리와 월호리 일대

3) 2011년 파도리 탐사내용과 출수유물은 「수중문화유산 탐사해역 출수유물 보고서II」(2022)에 수록되었다.

4) 방사성탄소연대 분석 결과 9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선박의 부속품이나 번씨(樊氏) 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양기홍, 2022, 「한국목간학회 제37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조간대에서 실시된 지표조사에서 다량의 도기 및 자기편이 산재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인근의 마량리 앞바다에 청자완, 녹청자대접, 백자발 등의 자기류가 출수된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어 정밀 탐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태안선이 발견된 태안 대섬 인근 해역에서도 최근까지 유물 발견신고가 들어와 이 일대에 대한 재탐사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서해중부해역에서 2018년부터 지속적인 수중유산 탐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유물집 중매장처 또는 추가적인 고선박이 발견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다수 축적되었다. 본 글에서는 그간의 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태안 마도 해역 이외에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해역들을 제안하였다.

Ⅲ장에서 언급한 인천 섬업별 해역과 태안 파도리 해역은 추가 탐사 대상지로서, 향후 정밀지표 조사 및 발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서해중부해역의 고대 항로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적된 탐사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함으로써, 조사 내용을 재조명하고 임시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과제는 서해중부해역 내 수중문화유산 조사를 확장하여 해역별 유물 분포 특성과 유구 존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보존·활용 방향 수립과 중장기 조사계획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9분과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특별분과] 장보고와 21세기 II

해양사로 보는 한국사와 세계사 비교 개설

강봉룡

국립목포대학교

장보고 2.0 모델
: 해양중심형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민원

광주대학교

장보고의 다문화융합공동체 모델 연구

황상석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우리에게 바다란 무엇인가?

이 준

인하공전대학교

부산 기장오구곳에 수용된 불교의례적 요소

서정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스틸라이프〉를 통해 본 해양 문화 공간의 변화와
인문학적 성찰

김예주

경북대학교

19세기 한국과 미국의 역사 기록에서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미

최정아

경북대학교

글로벌 협력의 상징, 장보고해

궁인창

생물문화아카데미

신라 청해진 장보고의 대구전투

김명진

경북대학교

해양사로 보는 한국사와 세계사 비교 개설¹⁾

강 봉 룡 | 국립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해양사는 해양공간에서 펼쳐진 인간 삶의 다양한 양태, 예컨대 수산업과 같은 해양생업,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와 물자의 교섭, 해상에서의 갈등과 전쟁, 해양자연에 대한 인지와 조선술 및 항해술, 기타(해적, 해양집시 등) 등과 같은 바다에서 이루어진 인간 삶과 양태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삶의 모든 양태의 변화는 인간의 바다에 대한 인식과 활동 범위가 확대 변화되는 것에 의해 규정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인간의 바다에 대한 인식과 활동 범위의 변화 확대의 과정은 크게 ‘지중해의 시대’, ‘인도양의 시대’, ‘대서양의 시대’, ‘태평양의 시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제1단계의 ‘지중해의 시대’는 우리나라 해양사에 견주어 볼 때 삼국시대까지의 ‘태동기’에 해당한다.

흔히 ‘지중해’란 남유럽지중해(Mediterranean)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로 쓰고자 한다.²⁾ 보통명사로서의 지중해는 남유럽지중해 이외에 북유럽지중해, 아라비아지중해, 동남아시아지중해, 동아시아지중해, 그리고 카리비안지중해 등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역시 남유럽지중해가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해양사와 관련된 지중해로는 동아시아지중해에 해당한다.

1) 이 글은 강봉룡, 2008, 「해양인식의 확대와 해양사」, 『역사학보』200; 강봉룡, 2016, 「바다로 보는 한국사」, 『역사학보』232; 강봉룡, 근간, 「한국해양사의 전개와 전환」, 『한국해양과학기술문화사대계1-총론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 윤명철, 2002,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지중해』, 학연문화사; 권덕영, 2011, 「동아시아지중해론과 고대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 『지중해지역연구』13-2.

지중해의 시대는 지중해 해역 내의 여러 국가 혹은 지역단위 간에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면서 저마다의 독특한 해양사의 정체성을 구성해 왔다. 교류에 가장 극적인 형태는 역시 전쟁으로 나타난다. 남유럽지중해의 경우는 그리스반도와 이탈리아반도를 중심으로 치열한 갈등과 전쟁이 전개되었다. 그리스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양패권전쟁으로는 트로이전쟁, 페르시아전쟁(살라미스해전), 펠로폰네소스전쟁 등으로 이어졌고, 이탈리아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양패권전쟁으로는 포에니전쟁, 악티움해전 등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와 로마는 지중해의 해양패권을 장악하고 마침내 유럽문명의 모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아시아지중해의 해양패권전쟁을 들여다보자.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중해의 해양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던 고조선이 한(漢)나라의 공격을 받아 1년간의 전쟁 끝에 패망한 것이 그 첫 번째 해양전쟁으로 들 수 있다. 고조선 멸망 후 낙랑군이 중국 본국의 지휘를 받으며 동아시아지중해의 주도권을 장악해 갔고, 이번에는 남쪽에서 한(韓)세력집단이 저항하자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을 추가 설치하여 이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韓)세력집단은 대방군의 군사기지인 기리영을 선제 공격하기도 하는 등 한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중해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가열화되어 갔다.

낙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된 이후에는 낙랑과 대방의 고지를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가 쟁패를 벌였고, 남서해안에서는 포상팔국의 가야세력이 신라와 금관가야를 침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시발로 하여 삼국 간의 전쟁이 수 세기 동안 전개되어 극한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동아시아지중해의 바닷길은 장기간 경색의 국면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반도 해상에서 초장기간 펼쳐진 분쟁은 동아시아지중해의 문물교류를 차단·방해하였고, 그 고난의 여파는 동아시아지중해의 구성 국가인 중국(당)과 일본(왜)으로까지 파급되어 가기에 이르렀으니, 마침내 당과 왜는 삼국의 해상 분쟁에 개입하여 참전함으로써 ‘동아시아 대전’으로 확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추세는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음에 제2단계 ‘인도양의 시대’는 우리나라 해양사와 견주어 보면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융성기’에 해당한다.

7세기경부터 남유럽지중해 문화권은 여전히 지중해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서아시아에서는 이슬람제국이 페르시아 세계를 통합하면서 ‘이슬람문화권’이 형성·확산되어 가고 있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동아시아 대전’의 결과 한반도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당-신라-일본 사이에 본격적인 문물교류의 서막을 올리면서,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교문화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시아의 이슬람문화권은 육로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였고, 아프리카 북부의 지중해 연

안을 따라 서진하여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이베리아반도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해로를 통해 아라비아해, 더 나아가 인도양을 거쳐 인도, 벵골만, 동남아시아지중해, 동아시아지중해로 해상 교섭로를 확대하였다.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도 중국(당, 송, 원)을 중심으로 그 이전까지 막연히 ‘남해로’라 불리오던 동남아시아로 통하는 바닷길을 넘어 벵골만과 아라비아해, 인도양 등을 거치면서 이슬람문화권과 문물교류를 적극 전개하였다.³⁾ 그리고 일부는 홍해로 진입하여 남유럽지중해 문화권과의 교류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인도양’이라는 대양이 이슬람문화권과 유교문화권이 교차하면서 새로운 해양 활동권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인도양의 시대’라 명명하였다. 학계에서는 두 문화권이 교류하면서 지중해의 범주를 뛰어넘어 새롭게 개척한 신세계의 바닷길을 ‘해양실크로드’라 칭한다.

제2단계 융성기를 열었던 인물로는 문무왕을 들 수 있다. 그는 7세기 후반 전쟁이 동아시아 대전으로 비화되는 상황의 마지막 단계의 해전(천성해전, 기벌포해전)에서 당나라를 축출하고 삼국을 통일했을 뿐 아니라 이후 평화적인 해양 교류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선부(船府)를 설치하여 우수 무역선의 제작 기술 개발과 관리에 전념하였다.⁴⁾ 9세기 전반에 신라선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록이 다수 보이고 있고,⁵⁾ 바로 그 시점에 장보고가 완도 청해진을 거점 삼아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인산적으로 주도한 것은 문무왕에서 장보고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장보고의 암살 이후에도 장보고의 해양 유산은 한반도 서남해 지역에 남아있었으니, 신라말 차기 대권을 노리던 영웅들(능창, 견훤, 왕건 등)이 이를 선점하기 위해 이곳에 몰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여기에서 승기를 잡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그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해양강국으로 발전해 갔으니, 이에 주목하는 연구자가 증가하고 있다.⁶⁾ 고려는 거란(요)과 여진(금)의 노골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송과 공식적, 비공식적 해상교류를 교대하면서 끊임없이 이어갔고, 거란 및 여진과도 그리하였다. 고려말에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으로 성장한 몽골의 침략을 받아 ‘도서해양전략’을 구사하여 40여 년을 버텨내고 끝내 고려왕조를 유지해 냈으니,⁷⁾ 고려 해양력이 마지막 단계까지 불타오른 바라 할 것이다.

3) 존 차피 저, 윤재운 역, 2024, 『중국의 전근대 무슬림 상인들』, 평사리 참조.

4) 강봉룡, 2017, 「문무대왕의 해양정책과 21세기 ‘해양르네상스」, 『해양정책』2-1 ; 이영호, 2022, 「신라 문무왕의 해양인식과 선부의 설치」, 『신라문화』61.

5) 『속일본후기』,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신라선’ 관련 기사 참조.

6) 강봉룡, 2019, 「왕건의 제해권 장양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역사학연구』75 ; 김명진, 2024, 「고려 태조의 나주전투와 서남해 공략」, 『한국중세사연구』77.

7) 강봉룡, 2011,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 : 그 동아시아적 의의」, 『동양사연구』115.

제3단계 대서양의 시대는 이제까지 지중해에 머물러 있던 남유럽지중해 문화권이⁸⁾ 15세기 말에 이르러 이베리아반도의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대서양으로 해양 활동공간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촉발되었다.⁹⁾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순행하지 못하고 바다를 금하고(‘해금’) 섬에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공도’) 어긋난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바다를 멀리하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1492년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고 1497~8년 바스코 다 가마는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 서해안과 남해안의 희망봉을 거쳐 인도양을 항해하여 인도 캘리컷에 입항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유럽의 항해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각각 대서양 항로와 인도양 항로를 통해서 대항해의 시대를 열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추동되어 두 나라는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체결하여 대서양을 양분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세계의 제해권은 무적함대를 거느린 스페인에 넘어갔고, 이후 17세기에 잠시 네덜란드를 거쳐 18세기 중엽부터는 영국으로 넘어갔다. 15세기 말 이후 유럽의 해양사는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 해양사는 이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1368년에 건국한 명나라의 시조 홍무제는 몽골세력을 축출하는데 협력하던 강남 지역의 해양세력인 방국진, 장사성 등이 저항세력으로 돌변하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해금령’을 선포하더니, 이것이 명나라의 조법(祖法)이 되고 동아시아 사회에 파급되어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¹⁰⁾ 1392년 출범한 조선은 제3대 태종대에 명의 해금과 공도의 정책을 추수하여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안착시켰다. 이것이 대항해의 시대를 열어젖힌 유럽과는 달리 명과 조선이 해양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사회는 해양침략세력인 왜구의 침탈에 시달려야 했고, 특히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적인 해양침략 전쟁에 직면해야 했다. 조선의 경우 끝내 스스로 바다의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고, 1875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그 조약에 따라 부산, 원산, 인천항을 잇따라 개항해야 했다. 이후 조선(대한제국)은 열강들에 시달리다가 결국 1910년 일본에 강점당하고 말았다. 최남선은 이에 대하여 ‘바다를 잊은 조선의 비극’이라고 침통하게 논평한 바 있는데, 나름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

8) 다음의 저서는 15~16세기까지 이탈리아반도 동북부의 섬 도시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남유럽지중해의 해상교역의 위세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종국, 2020, 『중세 해상제국 베네치아』, 이화여대출판문화원.

9) 주경철, 2008, 『대항해시대-해양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출판부 ; 송동훈, 『대항해시대의 탄생-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모험-』, 시공사.

10) 한지선, 2009, 『명대 해금정책 연구』(전남대 박사학위논문).

제4단계 ‘태평양의 시대’는 1520년 마젤란이 처음으로 태평양에 진입하면서 그 단초를 열었으나,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태평양은 인류의 생활공간 주변부에 머무르고 인도양과 대서양이 중심 무대를 이루고 있었다. 태평양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8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었다.

유럽세력은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인도양 항로를 통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몰려들었고, 대서양 항로를 통해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폭주하였다. 그러던 중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취하고 영국의 대항해가 제임스 쿡이 태평양을 포함한 오대양에 대한 종횡무진 탐사를 진행함에 힘입어, 태평양은 비로소 영국의 주력 활동공간으로 확보되어 갔다. 영국은 여세를 몰아 북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여 동편의 대서양과 함께 서편의 태평양을 독보적 활동무대로 확보하였고, 호주대륙과 뉴질랜드 등 태평양상의 대륙과 섬들을 식민지화하면서 태평양을 영국의 독무대로 삼았다.

이러한 영국의 태평양 시대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으로부터 영국의 영원성은 이미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후 미국은 1860년대 남북전쟁을 통해서 경제 및 정치통합을 성취하더니, 20세기에 들어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승전의 주역이 되어 영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으로 대두하였다. 이로써 20세기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살벌한 냉전을 벌여 나간 자본주의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면서 어느덧 태평양은 미국과 소련 및 중국 사이에 낀 ‘냉전의 바다’로 전락해 있었다.

20세기 말에 냉전체제가 해체되더니 21세기에 들어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중국이 급성장하여 미국의 G1에 이은 G2로 부상함에 따라 태평양은 당분간 G1과 G2 양축 사이의 활발한 문물교류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지만, 점차 경쟁이 과열되면서 급히 갈등의 바다로 변모해 가는 추세에 있다.

태평양 시대 조선의 상황을 보면 먼저 초창기인 18~19세기에는 폐쇄적인 해금과 쇄국의 틀에 갇혀 세계의 급변에 무심하였다. 결국 조선은 1853년 태평양 주도세력인 미국의 함포외교로 강제 개항당한 일본에 의해 겨우 22년 후인 1875년에 판박이의 함포외교로 개항 당하였고 20세기 초두인 1910년에 그 일본에 강점당하고 말았으니, 조선은 태평양 시대의 태평양 세력인 미국 및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비극적 희생양으로 전락한 셈이 된다. 이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의 늪에 빠져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고, 그와 함께 독재 파쇼정권에 시달리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우리나라(한국)가 태평양의 시대에 편승하기 시작한 것은 60~70년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부터였다. 박정희 정권은 ‘수출입국’과 ‘주국근대화’의 구호를 내세워 대부분의 산업기지와 대규모 항만시설을 태평양 연안에 집중배치하였다.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는 태평양 중심의 개방적인 산업체제의 운용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어 서해안이 죽의 장막으로 차단되어 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서해안의 상황은 20세기 말에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 진영인 소련(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면서 바뀌었지만, 국내 태평양 연안 중심의 산업기지 배치의 구도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크게 볼 때,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뒷받침해 오던 기존 태평양 시대의 구도는 미국과 중국 양측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가면서 태평양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는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구도에서 중국의 체제가 너무 하드하여 창의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소프트파워를 앞세워 문화강국의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는 흐름은 주시해 볼만하다고 할 것이다.¹¹⁾

한편 고정휴는 근대 이후 조선~대한민국이 태평양과 금·부정적 인연을 맺으면서 발전해 온 거시적 시각을 ‘태평양의 발견’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일련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¹²⁾ 나름 신선한 시도라 생각된다.

11) CJ Enm의 Mnet 채널은 k-pop 시상식인 제25회 MAMA Awards를, 이번 11월 21일에 영화 개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 LA 돌비씨어터에서 시작하였고, 22~23일에는 일본 오사카의 고세리돔으로 자리를 옮겨 속개함으로써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한류의 파도(K-Wave)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일본에서 넘실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12) 고정휴, 2022, 『태평양의 발견과 근대 조선: 세계와 마주하다』, 나남출판; 고정휴, 2023, 『태평양시대의 서막과 신대한의 꿈: 최남선·현순·이승만』, 나남출판.

장보고 2.0 모델

: 해양중심형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 민 원 |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I. 서론: 왜 해양중심인가?

1. 변화하는 시대, 해양의 재발견

- * 대한민국은 북쪽이 막히고 동쪽, 서쪽, 남쪽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
- * 해양수산 자원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와 균형발전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요소
- * 장보고는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상징적 인물

2. 기존 균형발전의 한계와 해양의 소외

- *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은 주로 내륙 중심이었고, 해양 공간의 전략적 가치가 저평가
- * 지역개발은 파편적이고, 해양 공간의 용도 관리와 갈등 조정,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전환 등에서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
- * 전술국가의 한계: 수동적 대응, 단기 성과주의, 외생적 환경 적응에만 특화된 국가 운영 방식의 근본적 한계

3. 어떻게 해양중심 균형발전으로 전환할 것인가?

- * 해양의 잠재력을 어떻게 국가 차원의 성장·안보·기후·균형발전 전략으로 통합할 것인가?
- *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해양 기반 국가운영 시스템은?
-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 활용 전략과, 전국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통합 거버넌스는?
- * 선진국으로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해양 기반 솔루션은?



4. 장보고 2.0 모델의 통합적 해양 전략

역사적 통찰(장보고 네트워크), 현대 기술(블루카본, OCCS, 스마트 해운), 지역 맞춤형 산업전략, 그리고 강력한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한국형 해양 균형발전의 실행모델을 제시

- * 전략국가 전환: 한국형 해양전략청 설립 및 장기 전략 수립 체계
- * 기후위기 선도: 한국기후과학기술원 설립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 * 교통 혁신: 내륙-해양-세계 연결 교통망 구축 및 남부권 관문공항 조성
- * 해양공간 통합관리: 과학적 분류와 통합 거버넌스
- * 지역특화 발전: 해양기반 신산업 및 관광 생태계 구축
- * 국제협력: 동북아 해양 리더십 확보 전략

II.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의 전환 체계

1. 전술국가의 구조적 한계

가. 단기성과주의의 고착화

- * 즉각적인 여론 대응 우선시
- *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지속가능성 저해

나. 전략적 정책 부족

- *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타율적, 수동적 대응에 익숙
- * 주어진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역량 부족

2. 전략국가 전환을 위한 독립적 장기 전략기구 설립: 해양전략부서 설립

가.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 해양수산부는 개별 정책 집행에 특화, 통합 전략 수립 한계
- *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 기구 필요



나. 핵심 기능과 역할

- * 국가 해양전략 수립: 20년 단위 장기 마스터플랜 작성
- * 부처 간 정책 조정: 해수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통합 조정
- * 국제 해양 거버넌스 참여: 글로벌 해양 규범 설정 주도
- * 전략적 예측과 대응: 해양 안보, 기후, 경제 리스크 선제 대응

3. 전략국가형 정책 추진 체계

가. 신비전 수립

- * 해양 통합 전략 총괄 및 부처별 분산 정책 통합·조정
- * 국제 규범 선도 전략: 해양 탄소 표준, 블루카본 인증 등 글로벌 규범 창출

나. 정책 연속성 보장 메커니즘

- * 헌법 개정을 통한 해양국가 정체성 확립 추진
- * 해양균형발전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 정권 교체를 초월하는 장기 전략 유지 시스템

III. 선진국으로서 기후위기 해결 선도 전략

1. 한국의 역사적 책무와 현실

가. 선진국 한국의 국제적 위상

- * 한국전쟁 이후 수원국→공여국 전환의 유일한 성공사례
- * OECD 회원국으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위상
- *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아야 할 역사적 시점

나.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의 핵심 책무

- *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 *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탄소중립 전환 모델 제시 의무
- * 급속한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 맞춤형 솔루션 개발 필요

2. 한국기후과학기술원 설립: 기후위기 연구 및 인재양성 허브

가. 설립 목적

- * 글로벌 기후과학 허브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해양 연구 중심지 구축
- * 대학+연구기관 모델로 연구와 인재양성 동시 추진
- * 세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확산

나. 핵심 기능 및 역할

1) 글로벌 기후과학 허브 기능

- * 아시아-태평양 기후해양 연구 중심지 구축
- * 개도국 대상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30개국 이상 참여 국제 공동연구 컨소시엄 주도
- * 기후데이터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전 세계 공유

2) 한국형 기후솔루션 개발

- * K-기후모델: 녹색성장과 경제발전 동시 추구 모델 개발
- * 압축성장 경험 활용: 급속 산업화→탄소중립 전환 노하우 체계화

다. 입지 선정 및 운영 계획

1) 입지선정 기준

- * 해양·기후 데이터 취득 용이성
- * 지역균형 고려



2) 기존기관과의 연계

- * KIOST, KMI 등과 기능 분담 (기후과학-산업화 연결)
- * 지역 대학·지자체와 상생형 운영
- * 국제 해양기후 연구네트워크 구축

3. 블루카본 경제 및 해양 탄소중립 기술 개발

가. 블루카본 경제 활성화

- * 블루카본 인증제: 갯벌, 해조류, 염습지 복원사업의 국가 탄소감축목표 포함
- * 한국형 인증 표준: 비식생 갯벌 국제 인증 추진
- * 탄소배출권 연계: 지역 주민 수익 배분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 * 블루카본 투자펀드: 민간-공공 매칭 방식

나. 해양 탄소포집·저장 기술 확대

- * 선박 탑재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실증단지: 부산·울산 조선·해운 클러스터
- * 용존 유기탄소 기술 개발: 해상풍력단지 내 대규모 해양탄소포집 실증
- * 산업화 연계: 건축자재, 소재 등 탄소 활용 기술 개발
- * 국제 표준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의 글로벌 표준 주도

IV. 내륙-해양-세계 연결 교통 인프라 혁신

1. 교통 혁신의 전략적 의미

가. 바다로 가는 길 혁명

- * 내륙 어디서든 1시간 내 바다 도달 가능한 교통망 구축
- * 해양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 * 해양도시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며 지역균형발전 실현



나. 패러다임 전환 효과

- * 바다가 일상생활권으로 편입
- * 해양도시 간 연결성 강화로 해양 경제권 형성
- * 국제 교류의 새로운 지평 창출

2. 내륙-해양도시 간 초고속 연결망

가. 철도 해양 노선 확충

- * 기존 노선 시간 단축, 운행회수 증가
- * 완도, 군산 등 확장

나. 고속도로 해양 접근성 개선

- * 서해안 고속도로 개선: 해양관광지 연결 시스템 구축
- * 남해안 고속도로 신설: 부산-여수-목포 직결 고속도로 구축
- * 동해안 고속도로 완전개통: 속초-부산 전 구간 고속화

3. 해양도시 간 연결망 혁신

가. 주요 장애요인

- * 노후 선박·인프라: 연안여객선 및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저하
- * 정보 연계 부족: 항로·기상·교통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 부족, 이용자 불편
- * 복잡한 해상교통 환경: 다양한 선박 혼재, 충돌·사고 위험, 관제 시스템 한계
- * 기상·환경 리스크: 해무, 태풍 등 악천후 시 운항 중단 및 대체 교통수단 부족
- * 친환경 전환 미흡: 탄소중립 선박 및 저탄소 운송수단 보급 지연

나. 혁신적 연결망 구축 전략

1) 해상 고속교통망 구축

- * 동해측:속초 ↔ 강릉 ↔ 동해 ↔ 포항 ↔ 울산 ↔ 부산



- * 남해축:부산 ↔ 창원 ↔ 통영 ↔ 거제 ↔ 여수 ↔ 완도 ↔ 제주
- * 서해축:제주 ↔ 목포 ↔ 군산 ↔ 대천 ↔ 평택 ↔ 인천
- * 목표:주요 연안 거점도시 간 1시간 이내 이동 실현 => 혁신 방안:
- * 고속·친환경 선박 도입: 수소·전기·암모니아 추진 고속페리, 자율운항 시스템
- * 노후 인프라 현대화: 항만·터미널 시설 첨단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 실시간 항로·기상 정보 통합: AI·빅데이터 기반 최적 운항 경로 안내

2) 해상 고속페리 네트워크 및 서비스 혁신

- * 차량 탑재 고속페리: 30분~1시간 간격 운항, 연안도시 간 신속 연결
- * 고속 에어쿠션선: 통근형 교통수단 실증 및 확대
- * 스마트 예약·환승 시스템: 모바일 통합예약, 실시간 운항 정보 제공 => 혁신 방안:
- * AR·IoT 기반 안전·관제 고도화: 위험상황 실시간 예측 및 대응
- * 교통약자·관광객 맞춤 서비스: 무장애 선박, 다국어 안내, 스마트 티켓

3) 스마트 해양 교통 허브 구축

- * 통합 교통 플랫폼(MaaS): 내륙-해상-도시교통 원스톱 예약·결제, 실시간 연계
- * 디지털 티켓 통합: KTX-버스-페리-지하철-항공기 환승 시스템 구축
- * AI 기반 대기시간 최소화: 최적 경로 안내, 연계 대기시간 단축

4) 주요 해양 교통 허브 특화

- * 부산 메가허브: 동남권 해양교통 총괄, KTX, SRT -항만-공항 통합
- * 인천 스마트허브: 수도권-서해안 연결, 국제공항 연계
- * 여수 광양허브: 남서해안 관문, 산업단지-관광지 연결
- * 목포 서남권 해양·관광·수산 허브: 연안·도서 교통 중심, 친환경선박·수산·관광·신재생에너지 산업 연계
- * 포항 울산허브: 동해안 중심, 산업-관광-물류 복합

4. 남부권 관문공항 조성: 전라도·경상도·충청도 통합 허브

가. 설립 목표 및 기능

- * 남부권 광역 국제공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동시에 커버하는 허브 국제공항



- * 국제 물류 거점: 남부권의 항공 교통 허브 및 물류 중심지 역할
- * 복합 환승 센터: 스마트 물류 시스템, MRO 산업, 다양한 교통수단 환승 기능

나. 입지 선정 및 개발 계획

- * 지리적 접근성: 3개 권역(전라도·경상도·충청도) 중심부 위치
- * 공역 효율성: 기존 공항과의 효율적 공역 관리
- * 환경 영향 최소화: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
- * 기존 논의사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무안공항 등) 종합 검토

다. 해양 지역-국제공항 연계 교통망

- * 고속철도 직결: 남부권 국제공항과 주요 해양도시(부산, 여수, 목포, 완도, 포항) 연결
- * 공항버스 확대: 해양 지역 주요 거점과 국제공항 잇는 고품격 교통서비스
- * 통합 물류 네트워크: 해양 산업 클러스터-국제공항 간 신속 물류 시스템
- * 도심항공교통: 해양 관광지-국제공항 간 초고속 이동 수단 도입

V. 해양공간의 과학적 분류와 통합 거버넌스

1. 해양공간 관리의 현주소와 문제점

가. 제도적 성과와 한계

- *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9개 해양용도구역 분류 도입
- * 선계획-후이용 체계구축되었으나 지자체·어민·기업·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사업 지연 빈발

나. 구조적 문제점

- *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조정 메커니즘 부재
- * 선계획-후이용 체계의 실행력 미흡
- * 다목적 공간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미비



2. 해양공간 통합관리 개선 방안

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

- * 해양공간계획위원회 신설: 어민·기업·지자체·환경단체 참여 상설 조정기구
- * 중첩구역·갈등관리: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구역 등 배타성 약한 구역의 다목적 중첩 운영 원칙화
- * 해외 모범사례 벤치마킹: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선진 해양공간관리 시스템 도입

나.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 * 해양공간 GIS 데이터 플랫폼: 모든 이해관계자·국민에게 개방
- * 투명한 의사결정: 공간 계획 과정의 실시간 공개
- * 갈등 예방: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

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미지정 해역 관리

- * 단계별 지정 로드맵: 체계적 해역 지정 계획 수립
- * 시범구역 운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점진적 확대 방식
- * 전략적 기회 공간화: 미지정 해역을 신산업 실증 공간으로 활용

VI. 지역별 해양특화 발전 전략

1. 해양관광·레저: 경험의 질과 지역 고유성 강화

가. 현황 진단 및 과제

- * 경험의 질 저조: 이용요금 과다, 교통 접근성 불편, 관광 편의시설 부족, 콘텐츠 다양성 부족
- * 성공사례 부족: 부산은 국제관광객 유치, 울산은 산업도시에서 해양관광도시로의 전환, 동해안(울진 등)은 체험형·교육형 관광, 전남은 마리나, 섬 관광, 해양치유, 제주는 해양레저, 포항은 해양플랜트·레포츠 등 일부 사례 존재하나 확산 미흡
- * 해양관광객 미미: 목표 숫자가 2023년 연간 1,000만 명 정도에 불과(국내 전체 관광객 규모 연간 2억 명)

나. 해양관광 생태계 혁신 방안

1) 통합 접근성 개선

- * 공항·역-항만-관광지 간 환승 시스템: 셔틀, BRT 구축
- *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
- * 서울-주요 해양도시 2시간대 연결: 철도 해양 노선 완성으로 접근성 혁신

2) 주민 참여형 관광 생태계

- * 마을기업·협동조합 주도: 체험상품 및 숙박 운영
- * 수익 재투자 의무화: 관광 수익의 일정 비율 지역 재투자

2. 해양산업·신성장동력: 산업전환 실행 로드맵

가. 현황 진단 및 과제

- * 신산업 확장 지연: 해상풍력·스마트 해운·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확장 더딤
- * 친환경 전환 부담: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투자·인력·기술 한계
- * 전문인력 부족: 해양바이오·플랜트 분야 인력·지식재산 확보 난점

나. 새로운 실행 전략

- * 초국적 해양혁신 플랫폼: 동북아(한·중·일) 공동 해상풍력 실증, 글로벌 해양기술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조성
- * 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해양산업 전주기 데이터 오픈, AI 기반 해운·에너지 자동화
- * 블루카본 결합 신산업: 해상풍력+블루카본 복합단지, 해양바이오 탄소중립 산업화
- * 글로벌 특허·탄소거래 생태계: 해양기술 특허풀, 블루카본·탄소배출권 국제거래소
- * 미래인재 자유지대: 권역별 해양특화 자유구역, 국제 인재·창업 교류 촉진



VII. 결론: 해양 중심의 새로운 국가 도약

1. 전술국가의 한계와 해양의 재발견

- * 대한민국은 즉각적 대응의 전술국가에 머물러 해양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 해양 자원을 기후 위기 극복의 해법에 활용하여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

2. 장보고 2.0 모델'의 통합적 해양 전략

- * 전략국가 전환: 정권을 초월하는 장기적인 해양 전략 수립 체계를 구축
- * 기후위기 선도: 한국기후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기후 위기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며, 블루카본 및 해양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선도
- * 교통 혁신: 내륙-해양-세계를 잇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 국토의 해양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 해양공간 통합관리: 해양 공간의 과학적 분류와 통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난개발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의 기반 구축
- * 지역특화 발전: 지역별 해양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해양 관광·레저 산업을 고도화하고 해상 풍력, 스마트 해운, 해양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

3. 해양 중심 국가 도약의 비전

- * 해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고유한 해양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자생력 있는 성장 거점을 육성
- *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기후위기 해결 등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는 진정한 전략국가로 도약



장보고의 다문화융합공동체 모델 연구

황 상 석 | 사)장보고글로벌재단

1. 엔닌 스님이 적산법화원에서 목격한 신라만의 추석

장보고 연구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 일본 고승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¹⁾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는 9세기 헤이안 시대 일본 승려 엔닌이 당나라에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체 기행문이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사회 생활상은 물론, 재당신라인의 활동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행문은 당나라 수도 장안은 물론 해안 및 대운하 주요 지역에 정착한 신라인 집단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 신라원과 무역업자는 물론, 고급 해기사와 신라인 통역들이 당나라 관리들과 교섭을 벌였던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엔닌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산둥성(山東省) 룡청시(榮成市) 스다오진(石島鎭) 북부에 있는 적산(赤山) 남쪽에 위치한 적산법화원에서 839년 6월 7일부터 840년 2월 19일까지 약 8개월간 머물렀다. 항해사찰로 창건된 적산법화원은 대당무역, 해상교류의 중심지로, 재당 신라인들의 정신

1)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엔닌이 45세 때인 서기 838년 6월 13일 청익승(請益僧)으로 견당사선(遣唐使船)을 타고 하카타만(지금의 후쿠오카)을 떠나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847년 9월 17일 다시 하카타만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과 귀국까지 9년 7개월간의 여행을 일기체로 기록한 여행견문록이다.

적 구심점 역할²⁾을 했던 곳이다.

연구자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엔닌이 적산법화원에 머무는 동안 당 신라인들이 추석 명절을 지내는 풍습과 그 유래 등을 기록한 내용이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적산 법화원에서는 8월 15일 명절에 박돈(饅飩)과 병식(餅食) 등의 음식을 제단에 진설한다. 이 명절은 다른 나라에는 아직 없으며 오직 신라에만 있다. 노승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가 예전에 발해와 전쟁을 하였는데 이날 승리하여 명절로 삼았다. 이날은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데 오랫동안 계속하여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종류의 음식을 진설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며 잔치를 하는데 밤낮으로 계속되어 3일이 지나서야 끝이 난다. 지금 적산 법화원에서는 고국을 그리워하여 이날을 명절로 삼았다.”³⁾

위의 기록으로 보아서 적산법화원에서 많은 재당신라인들이 함께 즐긴 추석이 성대한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신라만의 풍속”이라고 내용이다.

2. 신라의 가배와 적산법화원의 추석 차이점

‘가배’에 대한 처음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권1 〈신라본기(新羅本紀)〉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AD 11년)이다. 신라 제3대 왕 유리왕 9년에 왕이 육부(六部)를 둘로 나누어 왕녀(王女)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부내(部內)의 여자를 거느리도록 하여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고 오후 10시경에 파하게 하여 8월 보름에 이르러 한 달 동안에 걸친 성적을 심사하고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며 노래와 춤으로 즐겼다. 이를 ‘가배’라 하였는데, 이것이 곧 오늘날의 한가위(秋夕)이다.⁴⁾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 있는 고려 시대의 달거리[月令禮] 노래인 속요 〈동동(動動)〉의 8월 노랫말에 다시 등장한다. “팔월 보름날은 가배(嘉俳)날이지만, 입을 뗄고 함께 지내면서 맞을 수 있다면야 오늘이 참 가배다울 텐데”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때의 가배는 ‘가운뎃날’이라는 뜻이

2) 엔닌은 적산법화원에서 체류하면서 불교 예배와 관련, 강경의식(講經儀式)과 일일강의식(一日講儀式), 송경의식(誦經儀式) 등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3) 동북아역사재단 2023년 09월호 뉴스레터, 김인희 소장 글 인용

4) 남태우, “한가위의 어원과 유래”, 교통정보신문 삶과 술, 2017. 9. 17.

며, 이 말이 변하여 ‘가위’가 되고, 여기에 ‘크다’라는 뜻의 ‘한’이 붙어 오늘날의 ‘한가위’가 되었다. 이로 보아 신라 초기에 이미 큰 명절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의 〈수서(隋書) 동이전(東夷傳)〉 ‘신라조’에 보면 음력 8월 15일 임금이 풍악을 베풀고 활쏘기 대회를 열어 우수한 사람에게 삼배와 말을 상으로 내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8월 보름날은 신라가 발해와 싸워 이긴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명절로 삼아 일반 백성들이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고 가무를 즐겨 추석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상에서 살펴봤을 때 신라시대의 명절인 추석은 고려에 와서 9대 명절(설날과 정월대보름, 삼짇날, 한식, 단오, 추석, 중앙절, 팔관, 동지)로 자리를 잡았다. 조선시대는 4대 명절로 꼽혔으며 강강술래와 줄다리기, 가마싸움과 씨름,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등도 즐겼고, 송편 등 추석 음식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반면 엔닌의 기록을 보면 장보고가 창건한 적산법화원의 추석 명절은 재당신라인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조상을 숭모하고 3일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신라의 가배와 적산법화원의 추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째, 신라 가배는 관청의 관계자 또는 마을 사람 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반면, 적산법화원은 당나라로 이주, 정착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민족 구성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했다.

적산법화원을 찾는 재당신라인사회는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쟁으로 포로는 물론, 백제 및 고구려 유민, 신라 및 통일신라, 부여 등 한민족 구성원을 일컫는다. 또한 엔닌의 기록에 따르면 불교 예배도 중국어와 신라어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화원은 당인과 일본인들도 함께 방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적산법화원의 추석은 이질적인 다민족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신라 가배는 노래와 춤을 비롯한 길쌈과 윷놀이, 씨름 등 게임을 통해 공동체의 단합을 꾀했다. 반면, 적산법화원의 추석은 게임보다는 춤과 노래 등을 즐겼다. 이는 한반도에서 7백 년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냈던 한민족 구성원들이 구원(舊怨)을 씻고 타국에서 주류 민족의 텃새와 질시를 이겨내고 나라 또는 고향을 잃어버린 설움(한)을 달래며 조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남의 나라에서 한민족 구성원으로 정체성 유지하면서 고달픔과 애달픔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춤과 노래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이질적이고 다양한

재당신라인들이 추석을 계기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장보고 대사의 융합 리더십⁵⁾ 때문이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장보고는 목숨을 걸고 당나라로 건너와서 용병에서 1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중소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재당신라인들을 규합, 적산법화원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건축 자금을 조달하는데 앞장을 섰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장보고 대사가 재당신라인사회는 물론, 당나라 사회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로 부각되면서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3. 장보고, 신라 고유 추석을 중국 및 일본 등 동남아로 전파했을까?

장보고 연구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신라만의 추석절과 중국의 중추절과 일본의 오봉절, 베트남의 쯡투 등의 관계이다. 이들 명절이 기원과 관련, 상관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적산법화원의 추석이 장보고 글로벌상단(대당매물사와 대일회역사)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김인희 소장은 ‘서로 다른 달(月), 한국의 추석과 중국 중추절 비교’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중추절의 기원은 신라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⁶⁾ 김 소장은 중국학자들도 중추절이 신라의 추석에서 기원됐다는 설과 신라기원설을 부인하는 학자들로 양분되어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중국 학자 쉰페이(熊飛)는 1996년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들어 중추절이 신라에

5) 장보고의 융합리더십은 포용력과 덕화력 등을 갖춘 휴머니스트였다. 이는 그는 불화로 원수 관계였던 정년이 청해진으로 찾아왔을 때 품어주면서 신무왕을 옹립할 때 6명의 장수 중 한 명으로 임명해서 전공을 세울 기회를 줬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신라의 중앙귀족 편에 섰던 염장이 청해진으로 귀순할 때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회식을 베풀면서 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배은망덕한 염장의 손에 암살당했던 것이다.

6) 동북아역사재단 2023년 09월호 뉴스레터

서 기원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치루사범대학 류더펑(劉德增)은 2003년 다시 신라 기원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2000년 양린(楊琳)은 “당나라 때 이미 중추절이 있었으며, 당나라는 문화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같은 소국의 명절을 수입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며 신라 기원설을 부정하였다. 온주대 황타오(黃濤) 교수는 2008년 “중추절의 기원은 당나라의 달 감상 습속에서 기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신라 기원설을 다시 비판하였다. 그는 “당나라의 중추는 소수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명절이라 볼 수 없으며, 신라의 명절이 북방유목민족(호속 : 胡俗)을 좋아하던 당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며 “2005년 한국 단오절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되어 중국의 문화유산 보호에 경종을 울렸음을 지적하고 중한(中韓) 중추절의 기원에 관한 논쟁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들 학자들은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신라기원설을 반박하고 있다.

연구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 및 일본, 베트남 등의 추석 문화가 장보고 상단을 통해 신라의 가배가 전파되어 문화적 변용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음력 8월 15일에 각 나라들이 각자의 추석을 지내고 있다는 신라의 가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김 소장은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당나라 시기 중추절은 정식 명절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며 그 이유는 “당나라 때 중추는 휴일이 아니었으며, 문헌기록이 없고, 일부 상류층만의 달 감상 습속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추가 중국에서 정식 명절로 자리를 잡은 것은 960년부터 1127년까지의 북송(北宋)때다. 북송 태종(太宗)이 “8월 15일은 중추절이다”라고 기록이 등장한다. 중추절이 명절로 지정된 것은 영종(英宗)이 1203년에 반포된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에서 8월 15일이라고 명시됐다. 이 밖에 송나라 때 달을 감상하며 먹는 과자인 완월갱(玩月羹)은 현재 중추절 음식인 월병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⁸⁾ 따라서 시기적으로 중추절은 적산법화원의 추석문화가 중국에 전파,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7)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2006년 5월 20일 중추절을 ‘국가급무형문화유산(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에 등록하고, 2008년에는 「전국 명절과 기념일 휴가 방안(全國年節及紀念日放假辦法)」을 통과시켜 중추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였다.

8) 오늘날 중추절 때 가족들이 단합하고 월병을 나눠 먹었던 시기는 몽골 통치에 항거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원나라 때 잔혹한 통치로 중국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으며 중추절을 이용해 암호를 종이에 써 월병 안에 넣어 서로 전달한 뒤 8월 15일 저녁 폭죽이 터지자 모든 사람이 함께 봉기하여 원나라 통치자를 살해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원나라를 물리치면서 중추절이 민족대명절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적산법화원의 추석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 등을 부르면서 하나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달을 감상한 풍습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흥겹게 노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는 맹원로가 쓴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1187년)에서 잘 나타나 있다.⁹⁾

신라기원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논문은 루둥(魯東)대학 런샤오리(任曉禮) 교수의 〈자오둥(膠東)반도 중추절 풍습 검토〉이다.¹⁰⁾ 런샤오리가 자오둥¹¹⁾ 반도를 주목한 이유는 첫째, 독특한 민속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둘째, 자오둥반도와 한반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런샤오리는 “자오둥반도(오늘날 산둥반도)와 한반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 연원 관계가 있다”며 “수많은 중추절의 기원설 중에서 중추절은 신라에서 유입되었다는 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8¹²⁾년 중국 CCTV에서 주최한 중추 특집 프로그램 ‘중추만회(中秋晚會)’의 주무대를 자오둥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룡청(榮成)에 설정한 이유는 이처럼 많은 요소들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언급한 룡청은 적산법화원이 소재한 도시이다.

4. 장보고의 다문화융합공동체 모델과 추석 세계화 방안 모색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은 음력 8월 15일을 각자 민족대명절을 지내고 있다. 다만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명절을 보내고 있다.

중국인들은 팔월 보름을 월석(月夕)이라 해 달 구경을 하는 절일(節日)로 삼고 달과 관련된 시와 노래를 짓곤 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음력 8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대상이 한국은 조상인 반면, 중국은 달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9) 북송(北宋) 개봉(開封)의 풍속과 변영을 기록한 이 책에는 중추절을 흥겹게 즐기는 카이펑(開封)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

10)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 Vol 27호

11) 자오둥이란 이름은 진시황이 6개국을 통일한 다음 이 지역에 설치한 자오둥군(膠東郡)에서 유래했다. ‘자오둥 반도’란 산둥성 자오라이 하(膠萊河) 동쪽, 동, 남, 북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관습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자오둥은 자오라이 곡지(膠萊谷地), 자오웨이 평원(膠濰平原)의 동쪽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지역에는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와 웨이팡(濰坊) 동쪽에 있는 창이(昌邑), 안추(安丘), 가오미(高密)가 포함된다.

12) 중국 국무원이 2008년 중추절을 법정기념일로 정했던 해이다.

일본은 매월 8월 중순을 기념하여 일본고유신앙과 불교의 우란분회가 결합된 형태로 조상의 영혼을 기리는 오봉(お盆)을 지낸다. 즉, 선조나 돌아가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이 시기에만 가족들에게 돌아온다고 믿고 가족과 일가친척들이 죽은 조상들이 힘들지 않고 성불할 수 있도록 공양하고 가문의 번영을 기원한다. 특히 밤에는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는 불단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주위에 등롱을 둘러서 조상님들이 계시는 자리를 환하게 밝혀놓는다. 또한 ‘오봉’에는 오무 카에 당고와 오하기, 소멘 등을 먹는다.¹³⁾

유교문화권인 베트남에도 텃쭙투(tet trung thu)라는 추석명절이 있다. 이때 간단하게 제수를 차려놓고 조상을 섬기고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비는 기도를 한다. 우리의 추석과 다른 점은 공휴일이 아니고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위 어린이날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는 추석이 어린이날처럼 된 배경에는 호치민 추석이 오랫동안 전쟁으로 생긴 수많은 고아와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날로 바꾸자고 제안하면서다. 또한 평소 농사일에 바빠 어린이를 돌보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추석 때 선물 주는 것 등으로 표현한다는 설이 있다.

이처럼 근대사회에서는 천신의례와 기풍(祈豐)의식, 그리고 ‘추원보본(追遠報本)’하는 조상 숭배 의식에서 마련됐으나, 근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점차 핵가족으로 변화면서 여전히 협동과 화목으로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로 입국한 국제결혼가정의 배우자와 해외유학생, 해외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때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K-추석 페스티벌을 개최, 추석을 세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만의 독특한 무형문화유산인 K-추석문화와 장보고의 다문화융합공동체 모델을 동남아시아권에서 국내로 들어온 다양한 이민족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한국의 K-추석문화를 즐겁게 지냄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로 구현함으로써 추석문화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13) 오봉의 하이라이트는 ‘봉오도리’라는 단체춤이다.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 도시에 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춤을 춘다. 해가 질 무렵 마을 공터에 모여 윷카타를 입고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다보면 세상살이의 고단함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잠시 잊을 수 있다.

우리에게 바다는 무엇인가?

이 준 |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기계공학과

1. 머리말

우리는 흔히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음을 반문해 본다. 과연 거기서 끝인가?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의 우리는 과연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그 답의 일부분은 - 사실, 대부분은 - 지나온 과거와 그 연장선인 현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찾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에, 과거의 우리에게 바다는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서 앞으로 우리가 바다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 보려 한다.

2. 역사적 배경

과거 삼국, 고려시대에는 해양 교류가 활발했다. 비록 국경 강화 기조에 따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해방(海防), 관 무역이나 민간 무역과 같이 해양 활동은 크게 국방과 해운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으로 삼국시대의 장보고, 고려시대의 개성상가(開城商賈)와 삼별초(三別抄) 등, 바다를 터전으로 한 세력을 들 수 있다.

한편, 1371년 명나라의 소위 해금(海禁)과 1392년 조선이 들어서면서 해양력(海洋力)의 쇠퇴가 시작된다.¹⁾ 이후 1592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1627년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19세기에 일

1) 민택기 (2011), 중·근세 동아시아의 해금정책과 경제 인식, 한일관계사 연구, 39, 103-129

어난 일련의 외세에 의한 쇄국 정책(1801년 신유박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6년 강화도 조약)²⁾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국권 피탈, 1950년 한국전쟁 등 해양력이 서서히 추락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2025년 현재로부터 1371년 해금까지 654년, 조선 건국까지는 633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결을 같이 해온 해금은 600여 년이라는 무거운 역사적 관성(慣性)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우리는 그 관성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떨어져 가는 해양력을 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한국전쟁 무렵을 기점으로 바다와 관련된 현대적 국가 조직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해군창설, 국회 수산/해양 관련 상임위원회 신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신설, 관련 국가 연구소의 신설, 그리고 청와대/대통령실의 해양수산비서관까지, 과거 70여 년 동안 바다를 향해 노력하였다.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겠다.

3. 문제론³⁾

문제(問題)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재 상태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상태가 달라서 생기는 일종의 갈등이다. 즉,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같아지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항상 남아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로 법이 있다. 법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기 위해 목표 상태를 설정하는 방식이며, 현재 상태를 목표 상태에 맞추는 것이다. 공학에서 말하는 설계(Design)와 같은 개념으로, 현재 상태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목표 상태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수반되어야 순기능의 법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바다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까? 바다와 관련된 문제, 즉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괴리는 바다를 직, 간접적으로 생업으로 삼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찾아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를 가동하여 규제 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⁴⁾. 그러나, 그러한 문제 해결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 맞는지는 사실 의문스럽다. 이는 뒤에 나오는 “4. 상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 미래에는 이러한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더 많이

2) 강봉룡 (2016), 바다로 보는 한국사, 역사학보, 232, 147-200

3) 김수영 (2020), 문제,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4) www.better.go.kr

생길 것이다. 바다와 관련하여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자. 바다와 관련된 것이라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분야는, 조선 및 친환경 선박 기술, 수산업 및 양식업, 해양 안전 및 환경 보호, 항만 및 해상 물류, 해양 재생 에너지(해상풍력, 조력 에너지), 해양 바이오 기술, 연안 및 해양 관광 등이 있다⁵⁾. 그러나, 현재 범부처에서 추진 중인 분야로 확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

기능 범주	주요 기능 및 정의	유관 부처
해양산업 및 물류	선박, 항만, 해양플랜트, 운송 물류망 관리	해수부, 산업부, 국토부, 해경, 국방부, 기재부
수산, 어촌, 지역경제	수산업, 어촌 정비, 연안 지역 활성화	해수부, 해경, 중기부, 문체부, 기재부
해양 신기술, 자원, 에너지	해양 자원/에너지 개발, 해양과학/ICT 기술	해수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기재부
해양 연안 환경 및 재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보호, 해안침식 방지, 재난 방재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해양 관광, 레저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 활성화	해수부, 문체부, 기재부
해양 안전, 안보	사고 대응, 인명구조, 해상안전, 해양주권 수호	해수부, 해경, 국방부, 행안부, 기재부
거버넌스, 외교	법 제정, 정책조정, 국제 협력	국회,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수부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바다와 관련된 해외의 주요 정책사례를 찾아보면, 해양 공간계획(Maritime Spatial Planning), Blue Carbon/해양 탄소시장, 극지 정책, 해양 디지털/데이터 정책, Blue Biotech, 심해정책, 도서/섬 정책, 해양 교육/인력개발, 내해 관리 정책, 해양 문화/유산보존, 해양 복지/의료정책 등이 있으며, 우리도 일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우리가 바다의 잠재력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바다를 활용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도입되면, 그에 따른 수많은 이해관계자 및 그들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차이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상태 간의 충돌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심한 현재 상태의 조사와 목표 상태의 설계, 즉, 법의 제정과 조정, 그리고 이를 통제할 수단이 중요해진다.

5) 해양수산부 (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www.mof.go.kr

4. 상태의 변화

일제 강점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625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점(1945~1953)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서 크게 변한 현재 상태가 있다. 하나는 국가 통치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특성이다. 일제 강점기까지 한반도는 군주 국가였다. 당시 바다는 외세 침략과 국부 창출의 창구였고 왕조의 존폐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군주 국가가 아니다. 바다가 외세 침략이나 국부 창출의 창구인 것은 여전히 왕조의 존폐보다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왕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바뀐 지정학적 특성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섬나라 화 그리고 우리처럼 해금 국가였던 중국, 일본을 이웃으로 둔 특수성, 나아가 미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주위 이해관계 국가들로 인해, 우리의 해양 활동은 여전히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 상태는 무엇인지, 우리의 해양 정책이 그러한 목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반추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600여 년 동안 해금의 역사를 지속해 오다 최근 들어서야 다시 바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바다의 DNA를 되찾기 위해서는 바다와 관련된 백년대계(百年大計)가 필요하다. 해금의 역사를 끊어내고, 지역과 국가를 살리며, 국민의 해양인 정신(Seamanship)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대계를 제안한다. 이는 어느 한 사람, 한 단체, 한 지자체, 한 부처의 일이 아닌 범국민적, 범사회적, 범국가적인 합의이자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에 바다가 들어가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대계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 “바다”를 넣도록 제안한다.⁶⁾ 1948년 헌법제정과 1987년 헌법 개정 때도 우리는 바다를 넣지 못했다. 우리의 역사, 지정학적 특성, 국가 전략적 접근, 국가 정체성 나아가 국민의 해양인 정신 함양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6) 예를 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바다로 한다”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부산 기장오구곳에 수용된 불교의례적 요소

서 정 매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동해안 곳은 동해안을 근거지로 연행되는 무당곳으로, 각 마을마다 일정한 주기로 연행되는 ‘동해안별신굿’, 집안의 안과태평과 재수발원을 위한 ‘재수굿’, 망자의 왕생극락을 위해 님을 천도하는 ‘오구굿’ 등으로 구분하며, 마을단위인 별신굿과 개인단위인 재수굿·오구굿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동해안 일대는 무속의 영향이 컸고, 전통적으로 가족단위인 세습무로 전승되어 왔다. 굿을 주재(主宰)하는 무당들은 별신굿, 재수굿, 오구굿 등을 모두 연행하는데, 이는 마치 불교의례에서 범패승이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49재 등을 모두 설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부산 기장 오구굿을 대상으로 하여, 기장오구굿의 절차 및 절차에 수용된 불교의례적 요소를 찾아 기장오구굿과 불교와의 관련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지역과 연행시기, 사인에(死因)에 따라 다른 오구의 명칭

‘오구’의 명칭은 일정하지 않다. 오귀, 오기, 오구자리, 오구새남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령제(死靈祭), 오구 씨غم굿 등 다양한데, 현재에는 동해안 계통은 주로 ‘오구굿’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오기굿’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한편 망자천도굿은 황해도·서울경기 지역은 진오기굿(또는 지노귀굿), 평안도는 다리굿 또는 수왕굿(十王굿), 함경도에서는 새남굿(또는 망목굿, 망무기굿, 망령굿), 전라도에서는 찢김굿, 제주도에서는 시왕(十王)맞이 등 지역별로 명칭이 완전히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나 굿의 기능은 같다.

한편 오구굿은 시기에 따라서도 그 명칭이 다르다. 죽은 직후는 ‘진오귀굿’, 사망한 후 일 년 이상 지난 뒤는 ‘마른오귀굿’, 살아있을 때 극락왕생을 미리 기원하는 ‘산오구굿’은 불교의 생전예수

재와 기능이 유사하다. 또 사인에 따라서도 명칭과 연행이 달라진다. 바다에 익사하여 시신을 못 건진 경우에는 무주고혼이 되지 않도록 낚을 건지는 ‘혼괸이’ 의식인 ‘수망(水亡)굿’이 있으며, 이때 미혼인 경우에는 같은 처지의 다른 낚을 찾아서 영혼결혼식을 시킨다.¹⁾

이처럼 오구굿은 지역, 설행 시기, 죽은 이유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지만, 목적은 오로지 망자의 원과 한을 풀어 극락세계로 인도하며, 굿을 주재하는 무녀와 바라지인 양중(南巫, 박수)은 이를 도와주는 중간자이다.

3. 기장오구굿의 절차

기장오구굿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이루어지며, 크게 청신, 오신, 송신으로 구성된다. 청신은 부정굿, 골매기 서낭굿, 입문경, 문굿, 오신은 초망자굿, 방오구굿, 하직굿, 수리굿, 시왕탄일굿, 영산맞이, 송신은 꽃노래, 뱃노래, 초룻등노래, 탐등노래, 허개등, 정정밧기, 꽃사름. 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불교적 요소가 매우 짙게 나타나는 절차는, 청신의 부정굿, 문굿, 오신의 시왕탄일굿, 영산맞이, 그리고 송신의 절차 대부분이다. 다만 최근 김동연에 의하면, 부정굿, 비나리, 입문경, 초망자굿, 방오구굿, 수리굿, 판염불, 하직굿, 영산맞이, 꽃노래·뱃노래, 등노래, 시석으로 총 12거리의 절차로 설명하였다. 결국 오구굿의 절차는 연행자와 연행상황에 따라 견기이작(見機而作)하므로, 똑같은 구성으로 연행된 바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3일간의 기장오구굿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02년 장휘주의 연구 참조)

1) 이 외에도 저승세계의 지옥을 관장하는, 즉 저승에 오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죄와 한을 씻어주는 오구신인 ‘바리데기 설화’에서 유래되었다고도 본다. 기장오구굿의 무녀 김동연은 ‘오귀’의 귀는 ‘귀신 귀(鬼)’인데, 사투리로 ‘오구’라고 발음을 하다 보니 ‘오구’로 정착되었다고 했다. 또는 ‘오귀’가 ‘오구’로 정착되면서 오구(汚垢), 즉 ‘더러운 오(汚)’·‘때 구(垢)’의 한자를 붙여서, 죽은 이의 더러운 때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기장오구굿〉의 절차

1일			2일		3일	
1	부정굿	집 안 굿	8	방오구굿	12	영산맞이
	세존굿		9	하직굿	13	뱃노래
	성주굿		10	수리굿	14	꽃노래
	조상굿너름대		11	시왕탄일굿	15	초롱등노래
	너름대		* 하직굿, 수리굿, 시왕탄일굿은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16	원등굿(탑등)
	영등(影燈)말이				17	허개등
2	넋건지기*	* 문굿은 큰굿일 때만 연행	* 문굿은 큰굿일 때만 연행		18	정정밧기
3	골맥이서낭굿				19	꽃사름
4	입문경				20	시석
5	망자혼사굿*				* 넋건지기, 망자혼사굿은 망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되는 절차임 * 굶은 글씨체는 부산·경남지역에서만 행해지는 절차 표시임	
6	문굿*					
7	초망자굿					

4. 기장오구굿의 절차에 나타난 불교의례적 요소

1) 청신에서 불교적 요소는 망자밧기, 부정굿, 문굿을 들 수 있다. 부정굿을 시작하기 전에, 돛자리를 펴서 망자의 옷을 놓고 그 위에 망자를 상징하는 넋전과 망자가 저승에서 사용할 노잣돈을 올려놓은 다음 돛자리를 말아서 망자자리를 만든다. 죽은 사람을 대신하는 무속도구인 넋전은 한지 서너 장을 겹쳐 접어서 사람 모양으로 오려서 만드는데, 이는 불교의 관욕의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관욕방에서는 영가에게 태워서 공양할 지의(紙衣)를 안치하고, 영가에게 속옷과 겹옷, 양말(버선), 신발 등을 진설한다. 즉 불교의식에서는 새 ‘겹옷과 속옷’을 공양하고 굿에서는 생전에 영가가 입었던 옷을 올리지만, 종이로 영가를 상징하여 망자의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부정굿은 굿당을 정화시키는 의례로, 무가 사설뿐 아니라 불교의 진언을 암송하여 액살을 물리친다. 이는 불교의례에서 본 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악귀를 물리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천수바라무를 통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맥락과 동일하다. 특히 부정굿에서는 도량의 청정을 위해 불교의 진언, 주로 천수경의 진언을 사설에 삽입하여 읊는데, 이는 불교 염불을 수용하여 도량정화의 의식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문(門)굿은 문굿은 청혼절차의 확대로, 주로 큰 굿에서 행해진다. 청혼은 망자가 굿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절차로, 문굿은 항상 청혼과 결부되어 문굿 앞이나 중간이나 뒤에 청혼이 연행된다. 청혼은 인로왕대를 선두로 하여 악기를 치며, 그 뒤에 위패를 든 가족들이 뒤를 따르며 굿

당 밖으로 나가서 망자의 혼백을 불러들여서 다시 굿당으로 들어온다. 인로왕보살은 영가를 극락 세계까지 인도하는 불교의 보살이다. 즉 청혼은 불교의 재 의식에서 칠보로 장엄된 연(輦)을 가지고 절 입구에 가서 불보살님과 여러 성현들을 청해 모시는 불교의식의 시련(侍輦)을 수용한 절차로, 무가의 사설도 문 열기, 청혼, 염불로 이루어지고 불경으로 끝을 맺고 있어서 이 굿의 거리는 불교적 요소가 매우 짙은 부분이다.

2) 오신(娛神)은 망자와 생자가 만나 화합하는 절차로 망자가 지옥을 면하고 극락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단계로, 방오구굿, 시왕탄일굿(시무[十巫]염불), 영산맞이(판염불)를 들 수 있다.

방오구굿은 방 안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오귀문(저승문)을 여는 절차로, 오구풀이, 즉 서사무가인 오귀대왕 바리공주풀이를 한다. 그리고 하직굿과 수리굿은 이승에 남겨진 모두에게 하직인사를 하는 절차이다. 하직굿은 무녀가 안과 밖, 마당과 방 등을 밟으면서 진행되며, 수리굿은 세존님, 조상님, 터주지신님, 성주님 등을 비롯하여 부모, 형제, 부부, 친척 등에게 하직인사를 하는 절차이다. 이 부분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약하다. 그리고 수리굿의 세존은 불가에서 말하는 세존이 아니라 신주단지, 삼신할매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마치 여래10대명호에 해당되는 ‘존경받는 자’라는 뜻의 세존(世尊)과 동일한 발음이어서 쉽게 오인할 수 있다. 어찌면 무속에서는 이러한 오인을 묵과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시왕탄일굿은 일명 시무염불(심우염불), 즉 시왕극락을 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오귀대왕풀이, 발원굿, 방심굿이라고도 한다. 열 명의 지옥대왕을 나열하여 저승의 참혹한 상황과 시왕에게 붙잡힌 망자가 지옥을 면하고 극락가기를 기원하는 절차로, 불교의 시왕신앙을 적극 수용하였다. 한편 시왕신앙이 확대된 것이 동해안의 산오구굿이다. 산오구굿에는 굿을 마련하는 사람을 ‘설판자’ 또는 ‘설판재자’라고 하고, 시주하는 관중을 ‘단월(檀越)네’라고 하는데, 모두 불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불교와 무교가 이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수용되어 존재해왔음을 보여준다.

영산맞이는 경북지역의 판염불에 해당되는데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영산맞이라고 한다. 이는 경북지역에서는 양중(男巫, 박수)만이 판염불을 담당하지만, 부산·경남은 무녀가 담당하므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명칭을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영산맞이는 무녀가 다양한 염불을 독경하여 망자가 지옥을 면하고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하는 부분으로, 주로 천수경, 아미타불사십팔원, 반야심경, 공덕회향계, 법성계 등을 읊는다. 부산·경남지역은 불교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곳이어서, 염불을 못하면 큰무당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불교의 뿌리가 깊다. 부산·경남지역 무속에서 불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짐작케 한다.



3) 송신(送神)은 망자를 극락으로 보내어, 이승과 저승이 명확하게 나누어짐을 보여주는 곳의 마지막 단계이다. 구성은 꽃노래, 뱃노래, 초롱등노래, 탐등(원등굿)노래, 허개등, 정정밧기, 꽃사름, 시석(施食)까지이다. 이 부분은 제단의 좌우를 장식했던 장엄물인 지화, 등(초롱등, 탐등, 수박등, 허개등), 용선 등의 무구를 이용하여 망자가 극락으로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사용되는 각종 장엄물은 모두 불교의례에서 수용한 것이며, 내포하는 의미는 더욱 그러하다. 즉, 등노래에서 탐등은 아래에서 위로 하나로 연결된 팔모등, 수박등, 사모등, 마늘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등을 의미하는데, 이 등의 총 마디가 총 48개로 구성되므로 탐등노래에서는 반드시 아미타불 48원(願)을 염불한다. 결국 꽃노래, 등노래, 뱃노래, 허개등의 절차는 모두 불교의례의 장엄물을 수용하였고 이것을 무속의 형식으로 다시 풀어낸 절차이다.

정정밧기는 굿당을 돌며 지장보살을 부르거나 염불을 하면서 바깥으로 모든 지물(紙物)을 소진하기 위해 이동하는 절차로, 가족이 망자의 사진과 위패가 모셔진 신태집(꽃가마, 종이가마)을 들고 이동한다. 이는 불교의례에서 소대(燒臺)로 가기 전의 의식과도 매우 흡사하다.

꽃사름은 굿에 쓰인 모든 지물(紙物)인 지화, 등, 용선을 비롯하여 망자의 몸을 상징하던 망자자리까지 모두 태우는 절차로, 불교 재 의식에서 의식에 사용된 영혼에게 입힌 옷가지 등 갖가지 지물을 태우는 소대의식(燒臺儀式)과 유사하다. 무녀는 징을 치면서 염불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소진진언을 한 후에는 가족들에게는 돌아보지 말고 굿당으로 가라고 지시한다. 이는 망자와 생자가 이승과 저승으로 완전히 분리됨을 의미한다. 시석(施食)은 굿이 다 끝난 다음, 음식을 조금씩 떼어 잡귀와 잡신들을 먹이는 절차이다.

5. 명칭에서의 불교적 요소

기장오구굿에서의 명칭 및 용어는 은어(隱語)의 사용이 빈번하다. 이는 무속인들만의 언어라는 측면에서 불교의 것과는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발음을 사용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기도 하고 불교의 용어로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존굿을 들 수 있다. 세존의 본래 명칭은 신주로, 신주단지인 삼신할매를 의미하며, 신주굿, 시존굿, 세존굿, 시존할매굿, 삼신할매굿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마치 석가세존과도 명칭이 비슷해서 혼란을 야기한다. 세존굿은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의 신이자 복을 관장하는 설화의 남자주인공인 세존의 이름을 따서 '세존굿', 일명 '중굿'이라고 하며, 바라춤까지 이루어지는 부분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외에 입문경, 시왕탄일굿, 영산맛이, 판염불 등도 불교 용어를 수용한 형태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무속적인 느낌을 주기위해 조금씩 변형을 가한다. 판염불의 경우, 불교에서는 다양하게 염불

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염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무속에서는 불교의 명칭을 수용하되 무속적으로 재탄생시켰다. 또 시무염불은 ‘영산맛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영산작법, 영산각배, 영산회상 등은 있어도 ‘영산맛이’라는 명칭은 없다. 이는 무당이 망자가 극락세계로 가기를 인도하는 염불을 하면서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라는 의미에서 ‘영산’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왕탄일곳은 저승을 관장하는 십대왕(十大王)을 모셔놓고 죽은 넋의 천도를 빌고 살아있는 사람의 발복을 기원하는 절차로, 불교에서의 시왕신앙을 그대로 수용하되 이를 무속적으로 새롭게 풀이한 형태이다.

한편 시왕신앙이 확대된 산오구굿에서는 굿을 마련하는 사람을 ‘설판자’ 또는 ‘설판재자’라고 하고, 시주·보시하는 사람을 ‘단월(檀越)네’라고 하는데, 설판자(設辦者) 또는 설판재자(設辦齋者)는 법회의 모든 비용을 마련하는 사람들이고, 단월(檀越)은 사찰이나 승려에게 재물을 베푸는 불교신자를 뜻하므로, 불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용어를 무속에서 수용하고 있는 점은 불교와 무교가 이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수용하여 존재해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불교와 다른 종교적 차별성을 만들어 무의례(巫儀禮)만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칭뿐 아니라 사설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굿에서는 불교사설을 수용하되 가사 중간에 ‘아이고 아이고, 불쌍하다’라든가, ‘이제저제 넘어오신 염불은 지장천인 나와 가소’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또 의식의 중간에 청중들과 갑자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장구반주로 유행가를 부르는 등 매우 자유롭고 민중적이다. 이는 무속에서 취약한 경전과 사설, 용어를 불교에서 수용하여 의례성을 확보하되 즉흥적으로 가사를 추가하고, 무속성을 가미하여 불교의례와 차별화하여 무의례만의 요소로 재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용과 포용, 변형은 무속이 지금까지 무속이 지속이 되어올 수 있었던 이유로 볼 수 있다.

6. 장엄물에 나타나는 불교의례적 요소

장엄물은 굿당을 장식한 모든 것으로, 대부분 불교의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굿당, 종으로 만든 각종 꽃(연화, 목단, 작약, 국화, 다리화 등), 등(초롱등, 탐등, 허개등, 돈등 등), 배(龍船), 제단의 좌우에 배치하는 각종 번(幡: 인로왕번, 삼신번, 시왕번, 오방법, 보고번, 향마번, 축상번, 시주번)과 개(蓋: 인물개, 화재, 사슬개, 보산개), 금은패전, 오방불, 칠여래, 주망공사자 등은 모두 불교의례에서 도량을 장식하는 장엄물이다. 이는 기장오구굿뿐 아니라 무속 대부분이 그러하다. 불교의례에 쓰이는 장엄물을 굿에서 수용한 이유는 굿당을 더욱 성스러운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제의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무속의 장엄물은 오구굿의 문답설법에서 잘 나타난다. 문답설법은 경북지역 오구굿에서 나타나

는 절차로, 현재 기장오구굿에서는 문답설법의 절차는 따로 없다. 그러나 절차만 없을 뿐 문답설법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굿의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문답설법은 산자들에게 망자를 보내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하늘의 유래, 사재법 땅의 유래, 나무아미타불과 육자염불의 의미, 그리고 굿당을 장식하고 있는 꽃(지화), 오색초롱등, 지전(금전, 은전), 배(용선), 허개 등의 내력 등을 묻고 답하여, 굿당에 설치된 모든 장엄물에 대한 유래와 내력을 산자에게 알려주어서 이해를 시킨다. 즉, 불교의례에서의 장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유래나 내력은 무속적으로 해석을 더한다.

즉 굿당 밖에 설치한 허개등[호개등(昊蓋燈)]은 불교의 당간과도 비슷하다. 당간(幢竿)은 연등이나 청사초롱에 끈이나 천을 길게 매단 형태로, 멀리서도 절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높이 설치한다. 이는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로, 허개등 역시 이와 맥락이 같다. 허개등은 불교의 지화장엄에 유래된 화개등(花蓋燈)으로, 굿이 열리는 곳을 신과 인간에 알리는 기능이면서 동시에 망자가 머물고 이동하는 수단이 되는 무구이다.

반야용선은 영산재, 예수재, 수록재, 49재 등의 마지막 절차에서 망자가 용선을 타고 대성인으로 왕보살의 인도를 받아 극락으로 천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 용선은 또 여러 명이 타는 큰 배에 해당되므로, 대승불교의 개념도 포함한다. 무속에서는 불교의례에서의 용선과 그 의미를 수용하되 불교에서는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반면, 무속에서는 ‘용선’이라고 칭하며, 크기도 불교의례에 비해 훨씬 작고 소박하다. 또 불교의례에서의 반야용선은 오로지 배의 형상만으로 제작하는 반면, 무속의 용선은 종이로 만든 사람형상을 붙여서 불교의 용선과 구별된다.

지화(紙花)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장오구굿의 지화는 동해안오구굿의 고(故) 김석출로부터 전승받았다. 김석출의 지화는 16종류로, 당국화(쌍별국화), 외칭출하, 고동출하, 외칭작약, 강화(가화), 사계화, 살제비(다부살제비), 옥살제비, 산함박꽃, 출하작약, 따리화, 박꽃, 덩불국화, 매화, 불두화, 연화 등이 있다. 무속의 지화는 전승과정에서 불교와의 교섭과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식장엄의 차용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교의례의 영산작법 중 ‘할화계’에서는 모란, 작약, 연꽃, 국화에 대한 계송이 나오는데 모란, 작약, 연꽃, 국화는 기장오구굿에도 제작되는 지화이다. 그러나 불교와 무속에서의 꽃은 제작 기법과 모양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처럼 무속에서는 불교의식에서의 꽃을 수용하면서도, 무속만의 지화로 더욱 발전시켰다. 한편 지화를 만드는 데는 오랜 숙련과 공력이 필요한데, 이는 불교와 무속 모두 마찬가지이다. 기장오구굿의 보유자 김동렬과 김동언이 지화보유자로 인정이 된 이유이다. 이처럼 동해안오구굿의 장엄물은 대부분 불교적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유래나 내력, 장엄물의 모양 등에 변화를 주고 무속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더하여 차별성을 지닌다.

〈스틸라이프〉를 통해 본 해양 문화 공간의 변화와 인문학적 성찰

김 예 주 | 경북대학교

1. 서론

〈스틸라이프(三峽好人, Still Life)〉는 중국 6세대 감독인 지아장커(賈樟柯)에 의해 만들어져 2007년에 방영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쑤샤(三峽)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될 처지에 놓여 있는 마을 평제(奉節)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 나오는 탄광 노동자 한산밍은 아내와 딸을 찾으러 이 지역에 오고, 간호사 셴훙은 소식이 끊긴 남편을 찾으러 이 지역에 온다. 두 인물의 스토리는 서로 연계되지 않고 옴니버스식으로 전개된다. 영화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사라져가는 시공간의 상실과 변화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지만, 그 이면엔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존재한다. 댐 건설로 인해 산샤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2천 년의 장구한 역사가 서서히 물에 잠기는 곳. 과거는 수장되고 현재는 계속해서 부서지고 미래는 안개끼듯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영화는 시작된다. 이 영화는 오늘날 중국 사회의 급격한 발전변화가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작품이다.

〈스틸라이프〉는 중국의 산업화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해양 문화 공간 속에서도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했다. 이 영화의 중국어 제목 '삼협호인(三峽好人)'을 직역하면 '쑤샤의 좋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도덕적 함의를 담고 있고, 영어 제목 'Still Life'는 '지속되는 삶(still life)'과 '정물(靜物)'이라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며, 영화의 주제를 압축하여 드러낸다.¹⁾ 지아장커 감독은 여기 제목처럼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조용히 머물러 있는 인물들의 순

1) Hedges, Inez. "copyright 2011, Jump Cut: A Review of Contemporary Media Jump Cut, No. 53, summer 2011 The Nakba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Palestinian film." 참조.

간을 담아내고, 그 속에서 삶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다.

본 연구는 지아장커 감독이 〈스틸라이프〉에서 활용한 사실주의와 초현실주의가 교차하는 영화 기법, 언어 경관(linguistic landscapes)을 중심으로, 뚏샤댐 건설로 인한 해양 문화 공간의 물리적,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고, 그런 환경을 겪는 사람들의 상실감과 고립감, 그리고 삶을 향한 끈질긴 저항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물화처럼 고요한 가운데 불안한 현실과 그 속에서 지속되는 삶의 의미를 조명하며, 격변하는 중국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존재를 재정립하는지를 고찰한다.

2. 본론

1) 뚏샤댐 건설과 공간의 파괴

뚏샤댐²⁾은 중국 양쯔강(長江)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규모로, 1993년에 착공되어 영화 개봉 당시인 2006년에는 거의 완성 단계였고, 2012년에 완전하게 가동되었다. 이 거대한 댐 건설로 뚏샤(三峽)³⁾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과 2천 년의 역사가 물에 잠기게 되었고, 백만 명 넘는 주민들이 강제 이주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생태학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영화의 주요 배경인 평제는 이러한 댐 건설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여서 건물이 끊임없이 철거되고 무너지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펼쳐졌다.

〈스틸라이프〉에서는 이처럼 공간이 파괴되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곳곳에 붉게 쓰인 ‘拆(chāi, 철거)’ 글자는 중국 정부 주도의 강제적 철거와 파괴를 의미하고, 주민들에게는 이주할 것을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표식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무덤덤하고 담담하다. ‘정부의 명령’이라는 이 간결한 대답에서 개인의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영화는 이런 비극성을 가감 없이 강조한다.

영화 속 뚏샤의 풍광은 매우 아름답지만, 지아장커는 산수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의 대상으로 찍

2) 삼협댐 : 2012년에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로 길이가 2,335m이고, 높이는 185m이다. 홍수 조절, 전력 생산, 항로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의 전력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주민이 이주해야 했고, 환경 문제도 발생했다.

3) 삼협은 후베이성(湖北省)과 충칭시(重慶市) 사이에 위치하며, 의창과 충칭 사이 약 200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구당협(瞿塘峽), 무협(巫峽), 서릉협(西陵峽)으로 구성되며, 각각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삼협은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백, 두보 같은 고전 시인들은 양쯔강과 삼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남겼다.

지 않았다. 카메라가 담아낸 썬샤의 모습은 그 풍경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인물들이 프레임 밖으로 벗어난 뒤에도 정물화를 보듯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 마치 썬샤의 소리 없는 마지막 저항을 지켜보는 증인처럼, 그렇다고 영화가 과거의 찬란함을 그리워하거나 과거를 애도하는 것도 아니다. <스틸라이프>가 바라보는 썬샤는 사라진 풍경이 아니라 현재 철거되고 부서진 공간 위에 발을 딛고 땀 흘리는 사람들 속에 있다. 이것은 지아장커 특유의 사실주의 미학과 융합되어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부서지는 건물들 사이에 파문힌 삶의 흔적들은 어떤 물리적인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더불어 공동체적 유대 관계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사람의 삶과 상실, 그리고 저항

이 영화의 중심에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개인의 삶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면, 산시성(山西省)의 광부로 있었던 한산밍은 16년 전에 헤어졌던 아내(야오메이)와 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러나 알아낸 주소지로 가보니, 그곳은 이미 호수 밑에 잠겨 있었다. 아내는 남쪽에서 일하고 있고, 이곳에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녀 오빠의 말을 듣고, 산밍은 이곳 평제에 머물면서 잠기는 도시의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에 뛰어들다. 거기서 마음씨 좋은 깡패 마크와 친해진다.

때를 같이하여 간호사인 셴홍은 썬샤의 공장에 일하러 간 지 2년이 되도록 소식 없는 남편을 찾으러 이곳 평제 항구에 도착하지만, 그녀 남편은 부재중이다. 남편은 주민의 철거를 강요하는 일을 하고 있고, 회사 내의 여자 사장과 남편이 좋은 사이라는 정보를 얻는다.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교 댄스장을 찾아가서 다음날 남편과 재회한다. 그러나 남편의 불륜에 분노하여 남편에게 “좋아하는 애인이 생겼고, 그 애인 때문에 상하이로 간다”고 말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배를 타고 썬샤를 떠났다.

한편 평제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던 한산밍은 해체 현장에 깔려 죽은 마크의 유해를 창강으로 떠나보냈다. 이 무렵 아내의 거처를 알게 되어 찾아가 보니, 그녀는 의붓오빠가 만든 거액의 빚 때문에 선주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선주는 아내를 데려가려면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 산밍은 그녀를 되찾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산시성의 탄광부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평제 마을을 떠난다.

한산밍과 셴홍은 저마다의 이유로 평제에 왔으나, 그들의 여정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라져가는 고향과 부서지는 관계 속에 상실감을 느끼는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대신에 버티고 서 있는 것으로써, 즉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이고 어쩔 수 없는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들이 삶을 지속하는 방식인 셈이다.

영화는 사람들의 삶에 스며든 자본의 논리를 계속해서 환기시킨다. 그러나 한산밍이 아내를 되

찾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과 고된 노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와 같은 교환의 논리는 통하지 않게 된다. 이는 빈곤한 노동자의 삶이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의 윤리를 발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산밍이 광산으로 떠나겠다는 선택을 했을 때, 동료들이 함께 가기로 하는 장면은 삶의 무게와 깊은 연대를 보여준다. 한편으론 땅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생존이나 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불안정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스틸라이프〉에는 ‘담배’, ‘술’, ‘차’, ‘사탕’이라는 네 가지 소재목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담아내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상징물로 기능한다.⁴⁾ 지아장커 감독은 이런 사물이 중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복 요소라고 언급하며, 단순히 물질적 교환이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와 정서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선물 경제(gift economy)”임을 제시한다.⁵⁾ 담배를 서로 나누고, 술을 함께 마시며, 차를 건네고, 사탕을 주고받는 행위는, 파괴되어 폐허가 된 공간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상징한다. 고요하게 놓여 있는 이런 사물들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자 슬픔을 담아내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영화 속 또 하나의 언어景觀인 ‘어서 오세요(환영광림, 歡迎光臨)’ 여관 간판은 사람의 이동 및 공간의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처음에 밝게 빛나던 간판은 건물이 철거되면서 불이 꺼지고 버려진 채로 벽에 걸려서 쓸모없이 방치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평제 주민들의 상실과 강제 이주를 비유하며, ‘환영’이라는 글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언어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강권력에 의해 개인의 삶이 좌우되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이동성과 정체성, 연결과 고립’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을 섬세하게 표현했다.⁶⁾

3) 현실과 비현실의 교차

지아장커의 〈스틸라이프〉에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실주의(realism)적 미학과 현실의 틀을 깨는 초현실주의(surrealism)적 요소가 있어서 독특한 세계를 구축한다. 이는 중국 사회가 산업화로 급변하는 비현실적인 상황과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표현하는 장

4) 호미. (2019). 지아장커(賈樟柯)의 〈스틸 라이프三峽好人〉(2006)에 나타난 중국 전통 문화의 함의와 문화 횡단 풍경. 현대영화연구, 36, 137-156 참조.

5) Du, C. (2022). Poetics of Still Lives: Rewalking the Ruinscape of Still Life (English version). Transtext (e) s Transcultures 跨文本跨文化. Journal of Global Cultural Studies, (17) 참조.

6) Du, C. (2022). Poetics of Still Lives: Rewalking the Ruinscape of Still Life (English version). Transtext (e) s Transcultures 跨文本跨文化. Journal of Global Cultural Studies, (17) 참조.

치로 작용한다.⁷⁾

〈스틸라이프〉에는 갑자기 UFO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건물이 로켓처럼 하늘로 발사되는 기괴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큐멘터리처럼 전개되던 화면 속에 뜬금없고, 난데없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부분의 개입은 생뚱맞아 보이는데, 이는 소외감을 의미하거나 유토피아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비관적 해석도 되지만, 폐허가 된 공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엮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의미하기도 한다.⁸⁾ 지아장커는 이 장면들이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아닌 감정, 말 그대로의 고독감”을 표현한다고 언급하며, 현대 중국의 마법 같은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사실주의의 ‘후-현대화’(postmodernization)”라고 설명했다.⁹⁾ 이는 맑은 날씨에 갑자기 비나 구름이 몰려오는 썬샤 지역의 이상한 기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측면을 현실에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두 고층 건물 사이에서 외출 타는 사람을 노동자인 한산밍이 바라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스틸라이프〉의 초현실주의 미학의 정점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외출을 타고 버터 나가거나 아니면 추락하는 사람들의 위태로운 삶을 상징한다. 외출 타는 인물은 위태로운 줄에 의지하여 미세한 발걸음을 옮기며 삶을 지탱하고 있는데, 한산밍과 같은 중국 노동자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 또 다리 아래 보스 헤(Boss He)의 임시 거주지, 산밍 아내의 배 위의 생활 등은 일상적인 거주지 형태가 아닌 데도 주거 공간으로 변모하는 친밀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들의 끈질긴 삶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4) 해양 문화 공간의 인문학적 성찰

썬샤 지역은 2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그 아름다운 풍경은 중국 돈 10위안에도 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풍광이 서서히 물에 잠기게 되었고, 영화는 이러한 상실을 통해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지아장커의 〈스틸라이프〉는 사라진 과거의 찬란함을 향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부서진 공간 위에서 발을 디디고 땀 흘리는 사람들 속에 썬샤의 진실이 있다고 말한다. 급변하는 현대화와 자본주의 흐름에 주변으로 밀려나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지아장커는 휴머니즘적 시선으로

7) Virtanen, J. (2025). Linguistic Landscapes in Jia Zhangke's Still Life (Bachelor's thesis). University of Turku, Faculty of Humanities, School of Languages and Translation Studies 참조.

8) Du, C. (2022). Poetics of Still Lives: Rewalking the Ruinscape of Still Life (English version). Transtext (e) s Transcultures 跨文本跨文化. Journal of Global Cultural Studies, (17) 참조.

9) https://cine21.com/news/view/?mag_id=42355 (2006-11-03)

이들을 보았다. 중국의 화려한 미래, 세계화의 이상과 평제 주민들의 현실의 간극에서 드러나는 소외감과 고립은 이 영화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싼샤댐으로 인해서 물에 잠길 높이를 표시한 '156.50M' 표지판은 철거와 더불어 피할 수 없는 해양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인간의 삶은 이 거대한 현실의 힘에 좌우되어야 했다. 영화의 화면은 끊임없이 파괴되는 공간과 그 속에서 무력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삶'이란 메시지를 통해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강조한다. 영화 제목인 '스틸라이프 Still Life'는 이러한 인문학적 성찰을 응축한다.

화면에 '정물화'처럼 보이는 강물은 영화 속에서 배경으로 거의 인지되지 않지만, '느린 이동성'을 통해 강물은 결국 흘러가며 정체되지 않는데, 이는 '급격한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힘'이 되는 것이다. 영화 <스틸라이프>가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 세계의 발전이 자연과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사라져가는 것들의 가치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 <스틸라이프>는 싼샤댐 건설이 해양 문화 공간에 미친 영향을 통해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너머 인문학적인 성찰을 제공했다.

3. 결론

지아장커 감독의 <스틸라이프>는 싼샤(三峽)댐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해양 문화 공간의 물리적인 파괴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충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영화는 철거(拆) 표시, 물 높이 표지판, 여관 간판의 변화 등 언어적 표식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권력과 통제, 공간의 강제적 재편성을 시각적으로 고발하면서도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겪는 상실감과 고립의 정서 역시 섬세하게 전달했다.

지아장커 감독은 담배, 술, 차, 사탕 같은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대와 끈질긴 삶의 의지를 조명하는 한편, 사실주의와 초현실주의가 넘나드는 특유의 미학으로 비합리적인 현실과 인간 존재의 위태로움을 표현했다. 특히 외줄을 타는 사람의 이미지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상징하며 깊은 잔상을 남겼다.

<스틸라이프> 영화는 다큐멘터리적 시선을 넘어, 사라져가는 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인문학적인 성찰을 제공한다. 영화 제목인 <Still Life>는 이중적인 의미를 띠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물화'처럼 굳건히 버티며 '삶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존재를 통해 역사를 담아내고, 삶의 본질적 진실을 응시하는 감독의 휴머니즘적인 시선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단지 중국 사회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따른 공간의 변화와 상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Du, C. (2022). Poetics of Still Lives: Rewalking the Ruinscape of Still Life (English version). Transtext (e) s Transcultures 跨文本跨文化. Journal of Global Cultural Studies, (17).
- Virtanen, J. (2025). Linguistic Landscapes in Jia Zhangke's Still Life (Bachelor's thesis). University of Turku, Faculty of Humanities, School of Languages and Translation Studies.
- Hedges, Inez. "copyright 2011, Jump Cut: A Review of Contemporary Media Jump Cut, No. 53, summer 2011 The Nakba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Palestinian film."
- 호미. (2019). 지아장커 (賈樟柯) 의< 스틸 라이프三峽好人>(2006) 에 나타난 중국 전통 문화의 함의와 문화 횡단 풍경. 현대영화연구, 36, 137-156.



19세기 한국과 미국의 역사 기록에서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미

최 정 아 | 경북대학교

1. 서론

오래전부터 바다는 인류에게 자연 환경이자 문명의 경계, 문화의 교류 통로로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해양 공간의 이해는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문화적 환경,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특히 19세기 동아시아의 조선(한국)과 대서양권의 미국은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조선은 해양을 외부의 침입 공간으로 보고 방어와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여 국가가 기록 주체가 되어 온 반면, 미국은 바다를 기회와 탐험과 확장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진출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해군, 외교관, 선교사 등의 다중 주체들이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미국이 남긴 공식적인 역사 기록, 지도, 항해일지, 외교 문서 등 다양한 기록물에 투영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양국의 세계관, 정치적 목적 등이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 및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 공간으로서 바다는 고립과 위협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자유와 교류의 통로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바다를 어떻게 서술하고 기록했는가는 곧 그 국가가 바다를 어떻게 상상하고 정치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의 한국과 미국의 주요 해양 관련 기록물들을 분석하여 양국의 해양 인식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기록 문화의 차이와 그 역사적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2. 조선(한국)의 해양 인식과 기록 방식

조선(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윤리에 기반하여 육지 중심의 세계관을 유지했다. 바다는 외세의 침입 경로로 여겼으며, 해금정책에 따라 민간 선박의 해외 왕래는 금지하고 있었다. 실록 등의 기록지에 따르면 바다는 “방비”, “경계”, “엄중 조치” 등의 용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된다. 19세기 중

반 서구 세력이 해양을 통해 조선에 접근한 사건들 ‘제너럴셔먼호사건’(1866)을 외세의 침입으로 기록하고 있고, ‘신미양요’(1871)를 강화도 방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외세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조선은 해양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 고종 3년 6월(1866)에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양기(洋旗) 대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으니, 형세가 심히 괴이하여, 수군과 포대를 비할 것을 명하다.”

이 기록은 당시 조선이 서양 선박에 대한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괴이하다”, “정비하라”는 표현은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서 군사적 경계 태세를 갖추다 라는 의미의 기록으로 바다를 위협의 경계선으로 보고, 지켜야 할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서는 해안선을 따라 방어 체계와 읍지 중심의 정보를 주로 기술하고 있는데 주로 해양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공간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인식은 신미양요(1871) 당시 강화도 방어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고종실록』 1871년 6월 다음과 같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도해한 외적이 강화로 진입하였으니, 이는 군율을 문란케 함이다.”

결국 조선에서 바다는 철저히 수동적 방어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기록에서 통제와 명령의 언어로서 보여주고 있다. 바다를 위기 공간으로 인식하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조선은 바다의 외국 선박을 교류 대상이 아닌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알 수 있다.

3. 미국의 해양 인식과 기록 방식

미국은 18세기 말 독립한 이후로 해양을 통한 상업, 외교력 확대를 국가 성장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해양은 자유롭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외교 핵심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연방 정부는 해군 창설과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정기적인 파견 활동을 하였다. 특히 19세기 중반 활발하게 해양 팽창 활동에 나서게 되면서 태평양 진출, 중국 및 일본과의 교역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Perry 제독의 일본 개항 요구’(1853)와 조선에 접근한 ‘제너럴셔먼호사건’(1866)과 ‘신미양요’(1871) 등이 있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태평양 진출과 함께, 미국은 해양을 적극적 ‘탐험’, “개척”, “확장”의 장으로 인식한다. 대표적인 기록은 Perry 제독의 일본 원정 보고서(Perry Report)인 『Narrative of the Expedition to China Seas and Japan』 (1856)에 사 한국 해역을 언급된 부분이 있다.

“The coast of Korean presents one of the last frontiers of Eastern Asia. Its strategic and commercial value must not be overlooked.”

(한국의 해양은 동아시아의 마지막 개척지 중 하나이다. 전략적 그리고 상업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기록에서 “frontiers”(개척지), “strategic and commercial value”(전략적 그리고 상업적 가치) 등의 단어는 바다를 자원화하고 기회의 공간으로 보는 미국의 인식을 반영한다. 동시에 해양 기록이 단순한 관찰이 아닌 정책을 가지면서 적극적이고 목적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방어적인 실록 기록과는 대조된다.

미국은 바다에 대해 국가 이외의 다양한 주체(해군, 외교관, 선교사)가 기록을 남겼다. 해군 함장의 항해일지, 외교관의 보고서, 선교사의 일기 등에서 바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미국 국무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문서에서 조선 해안 관련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It is advised that a detailed map of Korea’s western shoreline be produced to support future commercial negotiations.”

(향후 상업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서해안의 상세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단순한 해양 보고라기 보다는 조선의 해역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바다를 향후에 양국 간의 상업적 협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해양 개척을 통해 자국의 팽창과 성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4. 비교 분석

19세기 조선(한국)과 미국은 바다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여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해양 인식에서 조선은 바다를 외부 침입으로부터 막아야 하는 경계, 국가 바깥의 위험 요소로 보았다. 반면 미국은 바다를 교역, 개척, 문명의 통로로 보고 국가의 힘을 확장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것은 단순한 안보 전략 차이가 아니라, 해양을 바라보는 문명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록하는 주체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술되었다. 즉 조선은 수동적 방어로서, 미국은 능동적 개척으로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기록 어휘의 차이도 조선은 주로 “조심”, “조처”, “엄중 경계”를 사용하고, 미국은 “발견”, “확장”, “개방” 등을 주로 사용했다.

두 번째, 기록 문화가 달랐다. 조선은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적 기록을 지향하였다. 실록과 승정원 일기는 국가 권력 중심의 기록지로서 국가의 행정 보고를 목적으로 하며, 연대기식 서술을 하고 있고 해양을 전쟁, 방어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제국 확장을 위한 실용적 지식 축적과 전략적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해양 기록 주체는 함장, 외교관, 선교사 등 다양한 주체자들이 참여한 주로 사건 중심 보고서로서, 주로 항만, 무역을 초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는 바다의 상징성이다. 조선은 바다를 혼란과 침입을 불러오는 불안정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국방과 방어적 시각을 가진다. 미국은 해양을 새로운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확장과 진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근대에 진입하는 방식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즉 19세기 후반에 조선은 강제 개항과 식민지를 겪게 되고, 미국은 해양을 기반으로 한 제국주의가 확장되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19세기 조선과 미국의 해양 기록을 분석하여, 두 나라가 바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하였는지를 비교하였다. 조선은 바다를 위협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수동적 방어 중심의 기록들을 남긴 반면, 미국은 바다를 전략적 기회로 삼아 적극적 개척과 교류의 개방의 공간으로 그려냈다. 해양 기록 문화는 바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며 동시에 그것을 제도화, 정치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해양에 대한 국가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해양 인식의 차이는 기록의 방식과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해양을 ‘두려움의 공간’, 미국은 해양을 ‘자유 공간’으로 인식했다.

19세기의 조선과 미국의 해양 기록 문화를 통해 우리는 양국의 세계관과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해양 인식 비교는 단순한 역사적 흥미를 넘어, 현재의 외교 전략, 해양 정책, 기록 문화의 구조적 이해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서영희. (2022). 일제 식민사학의 [고종실록] 편찬배경과 편찬과정 연구. 사학연구, (145), 193-251.

서인원. (2022). [동국여지승람] 에 반영된 해도 인식. 영토해양연구, (24), 51-91.

李相泰. (1987).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군사, (14), 156-18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8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11321).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erry, C. M. (2000). Narrative of the Expediti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1852-1854. Courier Corporation.



글로벌 협력의 상징, 장보고해

궁인창 | 생활문화아카데미

1. 머리말

2025년은 청해진 국가유산 지정 40주년 되는 해로 완도군은 6월 26일부터 3일간 완도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 중국, 일본의 승려들은 글로벌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완도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 1994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했다. 3년 후인 2028년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건설한 지 1,200주년이 되는 해다.

세계지도의 도시와 해양 지명에는 탐험가, 발견자, 역사적 사건, 문화적 배경, 지리적 위치, 영웅, 신화 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이 많다. 베링해, 로스해, 바렌츠해, 베핀해, 아문센해, 솔로몬해, 링컨해, 태주먼해, 보버트해, 벤쿠버, 에게해, 마젤란해협, 쿡제도, 베라자노해협, 황해 등이 그런 사례이다. 해양을 보유한 국가들은 해양 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6년 4월 동해 바다 해저지명을 국제수리기구(IHO)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해저지형 60여 개에 한글 이름을 등재하였다. IHO에는 대한민국 남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2. 장보고 선단의 교역과 문헌

청해진 장보고 대사는 신라 흥덕왕의 지원을 받아 사졸(士卒) 1만 명의 병력을 모집해 828년 土地耕作, 漁撈, 製鹽, 牧畜, 畜馬, 배 건조, 자연재해 극복, 해상교통이 원활한 완도를 택해 청해진(淸海鎭)을 건립했다. 장보고는 노략질을 일삼는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세력을 키워 중국 산둥반

도 적산포와 일본 규슈 하카타(博多)에 무역기지를 마련해 무역을 활성화했다.¹⁾ 장보고 선단²⁾은 선진 조선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나침반을 사용하여 항해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남방 항로 개척으로 이슬람 상인들이 가져온 서역의 물품을 비롯하여 고급 직물과 비단, 금은 세공품, 서적, 의약품, 금, 은, 수은, 구리, 토산품 등을 상호 교역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했다.

일본 하카타 항구는 장보고 선단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동아시아³⁾ 해상 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하카타는 당(唐), 신라, 일본, 인도차이나반도를 연결하는 남방 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소비와 수요가 함께 형성된 국제적인 무역항의 종착점이었다.

장보고 대사는 남방 항로 개척 이후 일본과의 공적인 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 문성왕 2년(840)에 이충(李忠)과 양원(楊圓)을 회역사(廻易使)로 파견했다. 《續日本後紀》⁴⁾ 기록에 따르면 이충은 일본의 외교 및 무역을 관장하는 기관 다자이후(太宰府)에서 무역 활동을 하며 일본 조정의 묵인 아래 무역 활동을 넓혀가며 하카타항에 창고를 설치했다. 창고는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저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수입품과 수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해져 상업 활동이 활발했다. 회역사는 신라의 대일 무역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졌다. 그러나 일본 조정은 회역사를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신라의 신하가 외국에 사절을 보내오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례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회역사가 가져온 물품만을 교역하도록 허락했다. 장보고 선단은 월주요에서 생산된 청자를 일본에 교역하며, 청자 제조 기술을 도입해 강진 주변에서 생산했다.⁵⁾ 일본 나라현에 있는 쇼소인(정창원, 正倉院), 도다이지(東大寺), 興福寺, 국립나라박물관, 延暦寺, 東福寺 등을 방문하여 신라 장보고 선단이 해당 사찰과 직접 교역한 문서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직 확실한 사료를 찾지 못했다.

쇼무 텐노(聖武天皇, 701~756)가 생전에 아꼈던 물품을 중심으로 한 덴표문화(天平文化)의 진수를 보여주는 쇼소인(正倉院) 특별전을 여러 번 관람하면서 백제 의자왕(599~660)이 일본 황실에 선물로 보낸 진귀한 바둑판을 보았다. 바둑판의 몸체는 남아시아 스리랑카에서 크게 자란 자단

1) 鄭炳俊, 〈押新羅渤海兩蕃使와 張保臯의 對唐交易〉, 《中國古中世史研究》, 2009.

2) 新飼早樹子, 〈5~9세기 新羅의 對日 交渉 研究〉,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58p,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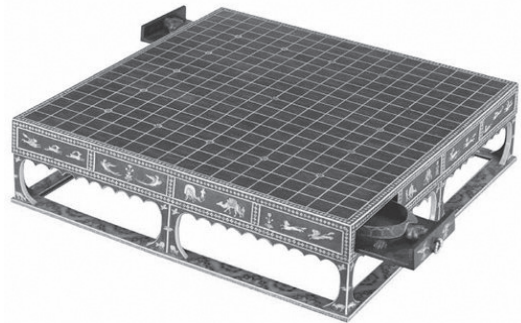
3) 黃俊杰, 국립대만대 석좌교수, 동아시아는 문화사적으로 볼 때 인도차이나반도를 포함한다.

4) 《續日本後記》는 닌보 천황 때인 덴초 10년(833년)부터 가쇼 3년(850년)까지 18년 역사를 기록했다. 분토 쿠 천황의 칙명에 따라 사이교 2년(855년)에 편찬이 시작되어 정관 11년(869년)에 완성되었다.

5) 고야마 후지오(小山富士夫, 1900~1975) 선생이 '월주요 기원설'을 처음 주장했다.

나무로 제작되었고, 바둑알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 그 외에 신라장적 문서, 청동 손가락, 新羅琴 등 여러 문화재를 보았다.

연구자는 장보고 선단이 일본에 진귀한 물품과 도자기를 교역하면서 황실과 사원, 부유한 귀족층이 선호하는 고급 말안장과 비단벌레 장식품 등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장보고는 헤이안시대 초기 840년에 지쿠젠의 태수인 미야타마로와 무역 거래를 하며 일본 조정에 말안장을 진상하였다.⁶⁾ 이에 태정관은 외국의 진상품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환하는 명령을 내렸다.⁷⁾ 태수는 말안장을 반환한 이후에도 장보고 선단에 일



백제 의자왕이 일본 황실에 보낸 바둑판
(사진:동아일보)

본 특산물인 후토오리(비단)를 주며 우호적인 교역을 지속하였다. 태수는 당나라 무역과 관련하여 모함을 받아 841년 정월에 물러났으나, 규슈를 떠나지 않고 장보고 선단과 교역을 하였다. 쇼와(承和) 10년(843)에 미야타마로는 모반혐의로 체포되어 이즈국(伊豆国)으로 유배되고, 아들 忠基는 사도(佐渡)로, 安恒은 고치현 도사(土佐)로 각각 유배되었다. 미야타마로 태수가 죽은 후 무고한 것이 밝혀져 역사적 평가가 달라졌다. 그를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은 貞觀 5年(863)에 교토 니조성 앞에 있는 신센엔(神泉苑)에서 열린 원혼을 달래는 제사 고레이카이(御靈會)에 그를 제신 오주(五柱)의 한 축으로 모셔 영혼을 위무했다. 御靈會는 헤이안 시대에 행해진 역병이나 재액을 가져온다고 생각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한 축제로 훗날 기온마쓰리를 비롯하여 일본의 2,400개나 되는 마쓰리 제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續日本後紀》에는 승려들이 말을 타고 말안장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적혀있다. 최근 일본 고고학계에서 출토된 마구를 통해 볼 때 장보고 선단이 새로운 교역 품목으로 말안장 등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는 말(馬)이 없었고 백제 근초고왕이 아직기를 통해 암수 두 마리를 보낸 것이 처음이다. 당시 신라의 말 안장은 단순한 실용적 도구를 넘어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취향을 보여주

6)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는 장보고 대사는 상인 차원이 아닌 신라왕권 외교 전개 목적을 가졌다.

7) 《續日本後紀》朝日新聞本《卷十承和八年(八四一)二月戊辰【廿七】》○戊辰。太政官仰大宰府云。新羅人張寶高。去年十二月進馬鞍等。寶高是爲他臣。敢輒致貢。稽之舊章。不合物宜。宜以禮防閑。早從返却。其隨身物者。任聽民間令得交關。但莫令人民違失沽價。競傾家資。亦加優恤。給程糧。並依承前之例。

는 공예품이었다. 신라의 황남대총 말안장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어 1994년 황남대총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은석 소장에게 말안장에 대해 질문했다. 이 소장은 “신라 시대에 유행했던 비단벌레 말안장 장식은 전승이 끊겨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고 일본에 당나라의 말안장이 공급되었다.”라고 말했다.

당나라의 말안장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금, 은, 황동으로 장식하고 작은 방울 마령(馬鈴)을 달아 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 효과를 나게 했다.

1975년 경주 황남대총 남분⁸⁾ 부곽에서 발견된 비단벌레(玉蟲, 緋緞)⁹⁾ 말안장 뒷거리개 장식은 60개의 용 문양과 2,000개의 비단벌레 날개로 꾸며져 있어 당시의 미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36년간의 작업을 통해 2011년 처음 공개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 전문가는 <황남대총 비단벌레 말안장 장식과 금동 발걸이> 유물의 제작연대를 4세기 후반~5세기 초반이라고 추정했다. 이 유물은 1600여 년 전



비단벌레 말안장 뒷거리개 장식(사진:국가유산청)

한반도에 자생하던 비단벌레 날개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비단벌레의 날개¹⁰⁾는 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건조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색깔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공개한다.

경주박물관은 뒷거리개 장식유물을 발견한 이후 보존처리기술이 없어 수장고에서 빛을 차단한 채 유물을 관리하다 2017년 보존처리기술 연구를 시작해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발굴조사의 기록을 2024년 보고서에 담았다. 비단벌레(*Chrysochroa coreana* Han and Park)는 죽어도 껍질이 바스라지지 않는 독특한 특성과 화려한 광채로 인해 의복, 마구류 등을 장식하는 치레거리로 사용되었다.¹¹⁾

8)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황남대총 남분》, 2024, .

9) 모로하시, 《大漢和辭典》에 길정(吉丁), 길정충(吉丁蟲, '타마무시'(タマムシ)라고 소개되어 있다.

10) 이시진(李時珍.1518~1593), 《본초강목》(本草綱目) 길정충(吉丁蟲), 미약(媚藥) 약물로 쓰였다.

11) 김태식, <특별기고-불사(不死)의 염원, 옥충(玉蟲)>, 《민속소식》97, 국립민속박물관, 2003. 9.

문화재청은 2008년 10월 8일 완도 등 전남 일부 지역에 있는 ‘비단벌레’를 천연기념물 제496호로 지정되었다. 비단벌레는 멸종위기종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사육할 수 없게 되었다. 생태학자들이 2019년에 처음으로 비단벌레(구슬벌레, Jewel beetle, 타마무시) 서식지인 완도 당인리¹²⁾와 해남 대흥사 팽나무 고사목을 조사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비단벌레는 17세기에 소빙기(小氷期) 때 온돌문화¹³⁾가 넓게 지방까지 확산하면서 전라도, 경상도 남부의 고목이 사라져 개체가 완전히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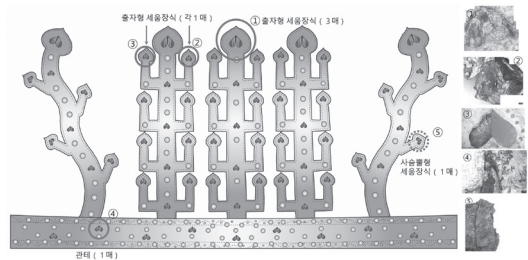


비단벌레(사진:국립생물자원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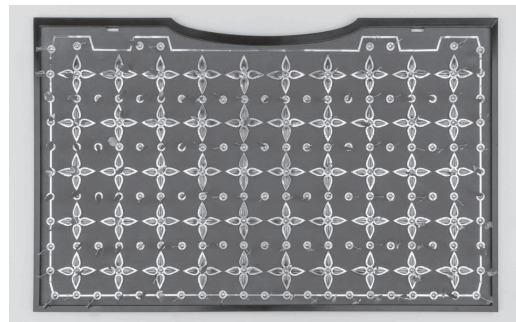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은 2025년 5월 황금대총 금동관에서 비단벌레 날개 장식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금동관의 출(出)자 모양 세움장식과 관테 거꾸로 된 하트모양의 구멍을 뚫어 장식했는데, 이 구멍 뒤쪽에 비단벌레 날개 15장이 붙어 있다.

김태식은 “비단벌레는 도교 사상 연관되며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불사(不死)¹⁴⁾를 향한 신라인들의 깊은 염원이 서려 있다.”라고 말한다.

2020년 12월 경주 황오동 죽샘 유적지구의 44호 고분에서 발견된 ‘대나무 말다래 판자’는 안장 아래 늘어뜨리는 형겹 쪼가리로 말이 달릴 때 튀기는 진흙을 막는 용도로 비단벌레 600개를 이용해 만든 꽃이 장식되어 있다. 봉분 지름이 30.8×23.1m로 크기가 신라 봉분 중 33번째인 무덤의 주인공은 10세 안팎



황금대총 금동관 비단벌레 장식(사진:국가유산청)



비단벌레 꽃잎장식 직물 말다래 재현품 (사진:국가유산청)

12) 정은영,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서식 조사 현황(전남지역)>, 《한국환경생태학회 논문집》, 2019.10

13) 김준봉, <문헌에 의해 분석된 한국 전통온돌의 역사와 특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8.

14)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2.

의 신라 공주로 추정되며, 바둑돌이 발견되어 바둑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5세기 장신구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일본 고가(古賀)시 교육위원회는 2013년 후쿠오카현 고가 시 후나바루(船原) 고분 土坑을 발굴하고 2020년에 성과를 발표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비단벌레 무늬가 있는 6~7세기 마구를 처음 발견했는데, 하카다 지역에서 중요한 외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가 시 교육위원회는 2024년 8월 27일 경주박물관 말다래를 초청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호류지(法隆寺) 대보장원(大寶藏院)에는 비단벌레 20,000마리로 만든 불감(佛龕)이 있다. 옥충주자(玉蟲廚子, たまむしずし)로 불리는 國寶는 법륭사 금당에서 불경과 경전을 보관했다. 불감 외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표현해 호랑이에게 몸을 공양하는 장면과 계송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몸을 보시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¹⁵⁾ 높이는 226.6cm, 폭 136.7, 깊이 119.1cm로 편백나무와 녹나무로 만들어 黒漆로 彩色했다. 금속 장식은 2,563마리의 비단벌레 날개를 붙여 비취색을 냈다. 비단벌레는 역사를 품은 귀중한 곤충이다.¹⁶⁾

옥충주자는 7세기 아스카(飛鳥)시대의 백제 장인들의 솜씨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연구자는 법륭사에서 실물을 보았지만. 어두워 《法隆寺》 책을 통해 내부 불상을 확인했다.



옥충주자(玉蟲廚子) 재현품과 진품(사진:法隆寺)

양수경(楊守敬, 邻苏老人, 1839~1915)은 후베이성 宜都市 출신으로 청대 민초의 뛰어난 서지학자로 중국에 없는 송판(宋版)을 일본에서 발견해 《樊川文集》을 교정하고, 조각가 陶子麟에게 책을 새기게 했다.

15) 「捨身飼虎図」, 「施身聞偈図」, 《法隆寺》 67p, 2006.

16) 영원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 비단벌레 생활사 규명(2024.3), 대량증식 가능, 문화재 복원 활용.

장보고에 관한 문헌은 당나라 문인 두목(杜牧)이 쓴 《樊川文集》 권 6〈張保臯 鄭年 傳〉에 처음 등장하며 《新唐書》《文獻通考》《三國史記》《三國遺事》慈覺大師 圓仁(794~964)의 《入唐求法巡禮行記》, 《日本後記》《續日本記》《續日本後記》에 기록이 남아있다. 엔닌은 838년 7월에 입당하여 847년까지 9년 반을 머물다 장보고 선단의 도움으로 일본에 돌아가 천태종 3대 좌주(座主)가 되었다. 임종을 앞두



楊守敬批校紅印校樣本《樊川文集》(사진:光明日報)

고 제자들에게 “赤山禪院을 세우고 赤山大明神을 모셔라.”라고 유언했다. 1934년 김상기¹⁷⁾ 교수가 장보고 논문을 처음 발표하고, 주일대사를 지낸 하버드대학교 에드윈 라이샤워¹⁸⁾ 교수가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영어로 번역하며 장보고를 ‘무역왕’이라고 불렀다.

일본 와세다 대학 경제학부 다나카 후미오(田中史生)¹⁹⁾ 교수는 “장보고 대사의 직함이 신라의 정규 관제에 보이지 않는 관명으로 唐의 舍外官(使職)²⁰⁾에 해당된다. 대사가 수행한 교역 역시 공적 성격을 지녔고, 당 후기에는 율령체제를 능가하는 역할을 하고 청해진 대사 역시 국가 기구에 속한다.”라고 주장한다.

3. 맺은말

2025년 6월 4일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북극 항로 개척을 목표로 삼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정했다.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원천이 무역왕 장보고 대사이다. 정부는 청해진 1,200주년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여 한반도 남해의 바다 지명을 장보고 해(張保臯海, The Sea of Chang PoGo)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17) 김상기, 「古代의 貿易 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 《진단학보》, 1934.

18) Reischauer, Edwin O.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1955.

19) 정병준, 「唐代의 互市와 張保臯의 對唐交易」, 《중국사연구 제69집》, 2010.

20) 일본에서 舍外官에 해당하는 관직이나 관청은 섭정(攝政), 관백(關白), 太政官의 中納言, 參議, 장인소(藏人所), 檢非違使, 勘解由使, 按察使, 鎮守府將軍, 征夷大將軍이 있다. 唐代의 舍外官은 內大臣, 中納言, 參議, 度支使, 鹽鐵使, 租庸使, 轉運使, 按察使, 采訪使 등이 있다.

신라 청해진 장보고의 대구전투

김 명 진 | 경북대학교 사학과

I. 들어가면서

신라 장보고(張保臯)가 해상을 기반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의외로 내륙인 대구(경상도 대구)에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다. 장보고는 흥덕왕 대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실력자였다. 그런데 그는 원래 해도(海島) 출신의 평민이었기에 신라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 야망을 가진 장보고는 신라에서의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당(唐)나라로 건너갔다. 당시 당은 신분적 제약이 신라보다는 나은 상태였다. 그는 정년(鄭年)과 함께 당에 가서 능력을 인정받아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말 달리며 창을 쓰는 데에 탁월하였다고 한다.¹⁾

당에서 성공한 장보고는 신라로 귀국하여 흥덕왕을 알현하였다. 그는 흥덕왕에게 신라 민(民)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어 노비로 전락되는 참상을 알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보고는 청해진(淸海鎭, 전남 완도) 설치를 제안하였다. 흥덕왕은 이를 받아들여 군사 1만 명을 장보고가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때가 828년(흥덕왕 3년) 4월이었다. 이후 신라의 바다에서 민의 매매 행위가 사라졌다.²⁾ 장보고의 명성은 오르고 세상이 평온해졌으나 오래가진 못하였다.

흥덕왕 사후에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장보고는 이러한 소용돌이에 침묵할 수 있는 상태를 갖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의외로 해상이 아닌 내륙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대구전투가 그것이다. 그 실상이 밝혀진다면 당시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1) 『삼국사기』 권44, 열전4, 장보고·정년: 당에서의 장보고 활약상은 ‘강봉룡, 『장보고』, 한얼미디어, 2004, 65~83쪽’ 참고.

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3년: 권44, 열전4, 장보고·정년.

II. 전투 배경

흥덕왕 사후에 대구전투가 발발하였다. 그런데 흥덕왕이 생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장보고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사례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흥덕왕은 청해진을 설치하고 그 이듬해인 829년에는 당은군(唐恩郡)을 당성진(唐城鎭)으로 삼아 사찬(沙漣) 극정(極正)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³⁾ 흥덕왕의 결단은 효과를 보아서 그의 치세에 바다가 안정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흥덕왕이 사망한 이후였다. 흥덕왕은 아마도 아들을 가지지 못한 듯하며, 이로 인하여 그의 사후 왕위쟁탈전이 벌어졌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836년 12월에 흥덕왕이 사망하자 그의 사촌 균정(均貞)과 또 다른 사촌 헌정(憲貞)의 아들 제룡(悌隆)이 왕위를 다투었다. 우징(祐徵)은 아버지 균정을 김양(金陽)과 함께 받들고자 했으나, 제룡을 받든 김명(金明)이 승리하여 균정은 살해되었다. 결국 제룡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희강왕이었다.⁴⁾ 이러한 왕위쟁탈전은 대체로 12월에 일단 마무리되었으리라 여겨진다. 837년 정월에 희강왕의 대사면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 판단된다. 같은 달에 희강왕은 시중 김명을 상대등, 아찬 이흥을 시중으로 삼았다.⁵⁾

837년 5월에 우징은 처자와 함께 황산진(黃山津)에서 배를 타고 청해진으로 갔다. 황산진은 낙동강 하구의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⁶⁾ 우징은 장보고에게 의탁하였다. 그런데 838년 정월, 희강왕은 왕위쟁탈의 과정에서 자신을 받들었던 김명과 이흥(利弘) 등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꾸미자, 그 자신도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궁중에서 목을 땀다.⁷⁾ 희강왕이 자결한 후에 그 자리를 김명(민애왕)이 차지하였다.⁸⁾

다음 달인 2월에 김양이 병사를 모집하여 청해진에 합류하였다.⁹⁾ 민애왕의 행위를 장보고와 우징은 김양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3)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4년 2월.

4)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희강왕 즉위년.

5)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희강왕 2년 춘정월.

6)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7)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희강왕 3년 정월.

8) 흥덕왕 사후 왕위쟁탈전에 대한 개요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27~29쪽 참고.

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민애왕 즉위년 2월.

III. 전투 실상

대구전투는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한 우징과 김양이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준비되었다. 우징과 김양, 두 사람 처지에서는 난국 타개를 위한 구원자는 장보고밖에 없었다. 장보고만이 그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보고 입장에서 명분은 좋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다. 장보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수도 금성(경주)으로 진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였다. 자신이 직접 갈 것인지, 아니면 부하 장수에게 지휘를 맡기어 가게 할 것인지였다. 또한 청해진 군사들이 진군한다면 해로로 갈 것인지, 육로로 갈 것인지였다. 이러한 때에 정년이 당에서 귀국하여 장보고를 찾아왔다. 적기에 정년이 장보고 앞에 나타났다.

가) …… 두 사람(장보고, 정년)은 당나라에 가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이 되었는데, 말을 타고 창을 쓰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¹⁰⁾

장보고와 함께 당에 건너가서 한때 성공했던 사람이 정년이였다. 특히 정년이 오히려 장보고보다 무예가 뛰어나기도 하였다.¹¹⁾ 누구보다도 장보고가 정년에 대해서 잘 안다는 점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사료 가)에 의하면 정년은 우수한 기병장수였다. 장보고는 기병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장보고의 전체 작전 구상은 이러했을 것이다. 자신은 청해진에 남아 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휘자 중 한 명은 정년으로 하고, 진군로는 기병 활용을 위해 육로로 정하였다.

청해진의 기본 병력 수는 1만 명인데 여기에 얼마간의 병력이 김양에 의해서 더해졌다. 그 절반을 나누어 김양과 정년이 이끄는 병력이 금성으로 향하고자 하였다. 1차 격돌지는 무주(전라도 광주)였다. 838년 3월에 청해진에서 출발한 군사가 무주를 습격하였다. 무주는 흥덕왕 때에 김양이 도독으로 재임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김양은 민(民)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었다. 따라서 김양이 포함된 청해진군이 무주를 장악하기에 유리하였다.¹²⁾

청해진군은 해상은 당연한 것이고 영산강 일대와 그 중심인 무주를 장악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10) 『삼국사기』 권44, 열전4, 장보고·정년, “二人如唐 爲武寧軍小將 騎而用槍 無能敵者”.

11) 『삼국사기』 권44, 열전4, 장보고·정년.

12)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올렸다. 무주를 장악한 청해진군은 다시 돌아와 기병을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¹³⁾ 같은 해 12월에 청해진군은 금성(경주)으로 향하였다. 무주 철야현(전남 나주시 봉황면 일대) 북쪽에서 청해진군과 신라 정부군이 맞부딪쳤다. 민애왕이 보낸 김민주가 이끈 정부군은 청해진군에 의해 대패를 당하였다.¹⁴⁾

나)-1. (개성) 4년(839년) 정월 19일에 (김양의) 군사가 대구(大丘, 大邱)에 이르렀을 때,¹⁵⁾

나)-2. 2년(839년) 봄 윤 정월에 밤낮으로 행군하여, 19일에는 달벌의 언덕에[달벌지구(達伐之丘)] 도착하였다.¹⁶⁾

이어서 청해진군은 경상지역에서 격돌하였는데 그곳을 나)-1에서는 대구라 하고 나)-2에서는 달벌의 언덕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 격돌 장소가 현재 경상도 대구인 것이 확실하므로 이 글에서의 전투명을 대구전투라 명명하였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장소는 어디인지 궁금하다. 그런데 대구 전투 패배로 인하여 실각된 민애왕과 관련된 납석사리호가 대구 팔공산 동화사 경내에 있는 비로암 삼층석탑 내에서 발견된 바 있다.¹⁷⁾ 따라서 사료 나)에서 달벌의 언덕, 대구(大丘)는 납석사리호 위치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 팔공산 일대라고 판단된다. 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훗날 927년에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후백제 국왕 견훤(甄萱)이 격돌한 공산동수전투(公山桐藪戰鬪) 현장이기도 하였다.¹⁸⁾

13)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14)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15)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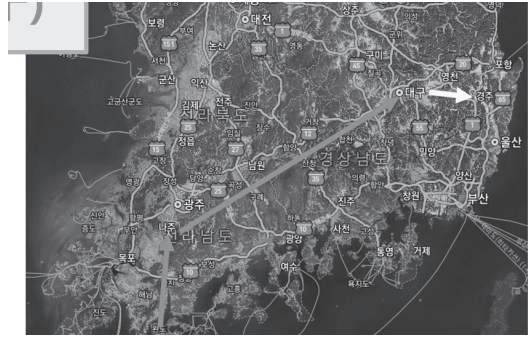
1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민애왕 2년 춘윤정월.

17) 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사리호(傳 大邱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 蠟石舍利壺, 보물). 이 납석사리호 명문에 의하면 민애왕이 839년 정월 23일에 23세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남윤, 「민애왕석탑 사리함기」 『한국고대금석문』Ⅲ(신라2·발해 편),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1992, 355~360쪽.

18)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 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남석사리호(傳 大邱桐華寺毘盧庵三層石塔蠟石舍利壺, 보물)
- 사진 출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2025년 7월 9일 검색)



* 청해진군의 진군로 - 다음 지도 인용 참고

장보고의 청해진군은 마침내 신라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민애왕을 제거하였다.¹⁹⁾ 결국 우징이 즉위하였으니, 이가 곧 신무왕이었다.²⁰⁾ 이는 장보고의 청해진군이 대구전투에서 승리한 결과였다.

IV. 나가면서

이 글은 향후 필자의 대구전투 실상에 대한 연구 구상을 거칠게 적어 본 것이다. 해도 평민 출신인 장보고는 당에 건너가 성공하였다. 이를 발판 삼아 귀국한 장보고는 흥덕왕과 의기투합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흥덕왕 사후에 벌어진 왕위쟁탈전에 장보고가 휘말리게 되었다. 신라 중앙정부에서는 희강왕이 즉위 및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다음 왕위를 차지한 민애왕 김명을 장보고는 제거하고자 하였다.

장보고의 청해진군은 신라 수도 금성으로 나아갔다. 청해진군은 기병을 앞세워 육로를 선택하여 금성으로 향하였다. 그 진군로 상에 자리한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가 대구전투였다. 마침내 청해진군이 승리하여 우징이 왕위(신무왕)에 올랐다.

이러한 대구전투의 좀 더 자세한 실상 파악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해상왕 청해진의 장보고는 왜 해로 대신 육로를 택하였는가? 장보고의 주력부대는 왜 수군이 아닌 기병이었는가? 진군로는 왜 영산강 일대와 무주를 거쳐 대구로 설정되었는가? 그리고 날짜 택일 및 군량미 문제 등의 의문점이 앞으로 해결할 사안들이다.

1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민애왕 2년 춘윤정월.

20)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신무왕 즉위년 글머리.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0분과

국립목포대학교

[특별분과] 해양생태와 문화경관
- 기후위기시대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

UAV 기반 정사영상을 활용한 섬지역 식생조사
기법연구
- 천연기념물 완도 주도 상록수림을 대상으로 -

황동규 (주)메타솔루션

위성영상을 활용한 조간대 면적 변화와 조류상 변화
분석 연구
- 조력발전소 및 매립 전후를 중심으로 -

양승빈 (주)리프

무인섬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원빈
이창훈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국립목포대학교

섬정원의 감성적 전환과 체류형 관광
: 아이스테시스 관점에서 본 생활인구 확대 전략

강병옥 동아보건대학교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 평가

조영훈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신안군 옛 돌담 보존가치에 관한 연구

김서연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기후 변화 시대, 토착지식을 활용한 '해수농업' 사례

이경아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안지역 토지이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전남 무안군을 사례로

김재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섬 음식,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생물문화
전통과 생태지식

홍선기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UAV 기반 정사영상을 활용한 섬 지역 식생조사 기법 연구

- 천연기념물 완도 주도 상록수림을 대상으로 -

황 동 규 | (주)메타솔루션 대표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수많은 섬을 보유한 해양국가로, 많은 섬들이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총 459개의 자연유산이 지정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이 도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섬 지역 식생조사는 접근성 제약, 기상 조건 의존성, 보호구역의 엄격한 출입 제한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조현길 등, 2019). 또한 기존 방식이 조사자의 개인적 경험에 크게 의존하여 객관성과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문화재청, 2011).

이러한 한계는 최근 UAV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해결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소형 무인항공기가 공간 생태학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Anderson and Gaston, 2013), 국내에서도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서 UAV 기술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UAV 기반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기존 현장 조사의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고, 비침습적 조사 방법으로 천연기념물의 정밀 보전과 과학적 연구를 효과적으로 양립시킬 수 있는 혁신적 조사 기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천연기념물 완도 주도 상록수림은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소규모 무인도로서, 1962년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장기간 엄격한 보전 관리를 받아 원시 상태의 자연식생이 잘 보전되어 있다. 해양성 아열대 기후의 영향을 받아 후박나무, 동백나무, 생달나무 등의 상록활엽수가 우점하며, 해안가와 능선부에는 소나무, 곰솔 등의 침엽수가 혼재한다.



Figure 1. 완도 주도 상록수림 대상지 위치

2. 연구 방법

2.1 UAV 촬영 방법

UAV 촬영은 2024년 8월 중순 DJI Mavic 3 Enterprise에 네트워크 RTK 모듈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격자형 자동비행 패턴으로 80% 전진 중복도와 70% 측면 중복도로 설정하여 주촬영을 실시하였다. 보완 촬영은 다중 고도(50m, 80m, 120m)에서 방사형 및 원형 궤도로 진행하였으며, 해안 절벽과 급경사 사면 등 특수 구역에 대해서는 경사 촬영을 실시하였다.

2.2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촬영된 원시 데이터는 DroneDeploy Cloud, Agisoft Metashape 2.1.1, Pix4D Mapper를 혼

용하여 처리하였다. Structure from Motion 알고리즘과 Multi-View Stereo 기법을 결합한 포토그래메트리 엔진을 사용하여 오소모자이크 정사영상, 수치표면모델, NDVI 기반 식물건강도 지도, 3차원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QGIS, ArcGIS Pro, CloudCompare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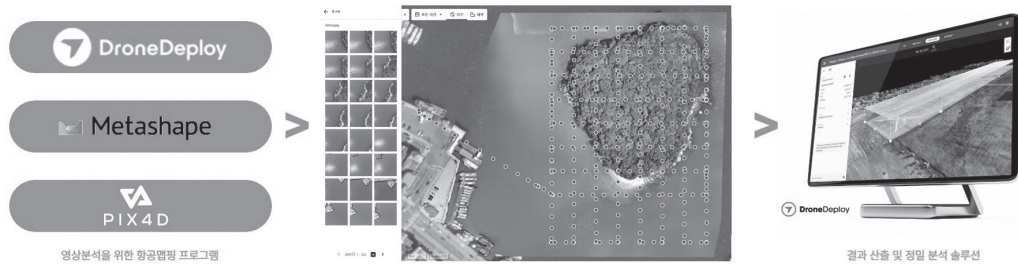


Figure 2. 촬영결과와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인 Dronedeploy/Metashape, Pix4D Mapper 프로세스 예시

III. 결과 및 고찰

3.1. 오소모자이크 정사영상 분석 결과

UAV 기반 초고해상도 정사영상 분석을 통해 완도 주도 상록수림의 전반적인 공간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였다. 섬의 전체 면적은 약 18,714㎡(약 5,660평)로 측정되었으며,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식생 피복률은 전체 면적의 약 95%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수목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명확한 구배 패턴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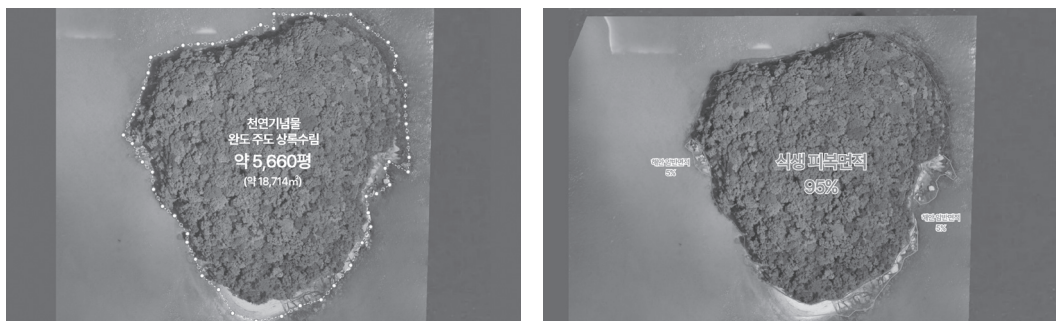


Figure 3. 완도 주도 상록수림 UAV 기반 면적 결과(왼쪽) 및 식생 피복면적 결과(오른쪽)

3.2 수치표면모델 기반 지형-식생 관계 분석

수치표면모델 분석 결과, 섬의 최고점은 중앙부 북동쪽에 위치하며 해발 약 35m로 측정되었다. 고도별 식생 분포를 분석한 결과, 0-10m에서는 해안 식물과 내염성 관목류가 우점하고, 10-20m에서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공존하는 혼합림, 20-35m에서는 대형 상록활엽수가 우점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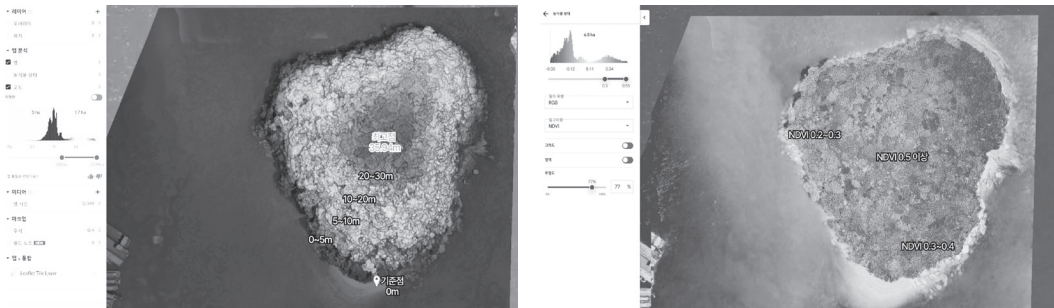


Figure 4. 완도 주도 상록수림 UAV 기반 고도(Elevation), NDVI(식생 건강도) 분석 결과

3.3 NDVI 기반 식생 건강도 및 활력도 평가

NDVI 분석을 통한 식생 건강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식생 활력도를 확인하였다. 이강국과 오태석(2020)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히스토그램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픽셀이 0.3-0.55 범위에 분포하여 건강한 식생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중앙부 고지대에서 가장 높은 NDVI 값(0.5 이상)을 보였으며, 이는 충분한 토양 수분과 양호한 성장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병기 등(2020)의 상록활엽수림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연중 안정적인 식생 활력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4 3차원 모델링을 통한 입체적 구조 분석

3차원 모델 분석을 통해 완도 주도 상록수림의 입체적 구조와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수직 구조 분석에서는 명확한 다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층 교목은 15-20m 높이의 대형 활엽수가 우점하며, 주로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으로 추정된다. 아교목층에는 8-12m 높이의 중간 교목이 상층 교목 사이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으며,

지형 적응성 측면에서는 해풍에 노출된 해안이 수목들이 내풍성을 위해 낮고 밀집된 형태로 성장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급경사 지역에서는 수목의 뿌리 체계가 토양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밀집된 수관층이 섬 내부의 안정적인 미기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5 통합 지형-식생 관계 정량화

고도 정보와 등고선을 결합한 통합 분석을 통해 지형과 식생 분포 간의 정량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고도별 식생 분포를 분석한 결과, 0-10m 고도에서는 해안 식물과 내염성 관목류가 우점하고, 10-20m에서는 혼합림 형태로 침엽수와 활엽수가 공존하며, 20-35m의 최고 지대에서는 대형 상록활엽수가 우점하는 최적 성장 조건을 보이고 있었다.

2m 간격의 정밀 등고선 분석을 통해 미세한 지형 변화가 식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계곡부와 능선부의 수분 조건 차이가 수종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종 식별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현장 조사의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다중 분광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법의 도입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UAV 기반 조사 기법은 접근 제한 지역의 생태계 연구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천연기념물 도서 생태계의 과학적 보전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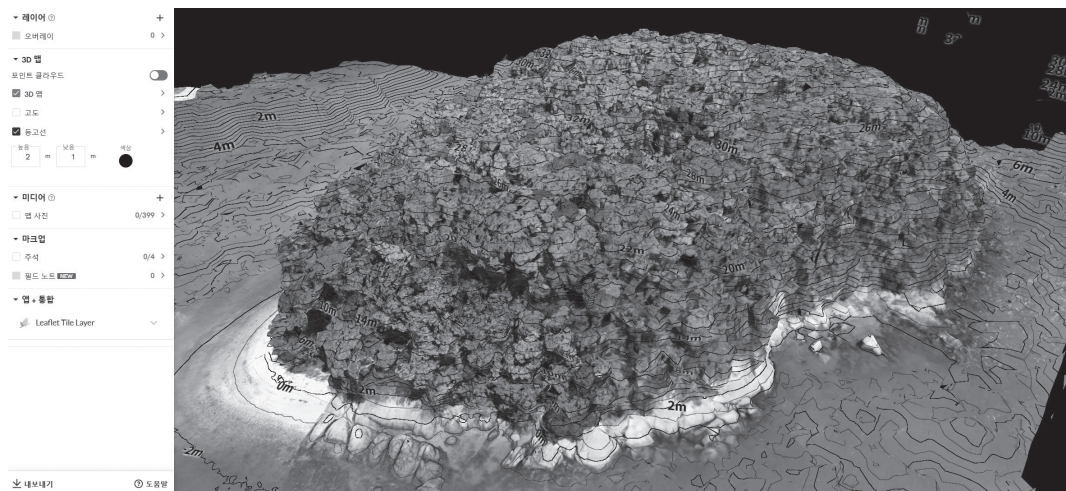


Figure 5. 완도 주도 상록수림 UAV 기반 NDVI(식생 건강도) 분석 결과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UAV 기반 조사 기법이 기존 조사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안에서 내륙으로의 식생 구배, 고도별 수종 분포 특성, 상층-아교목층-관목층의 3차원 구조 분석을 통해 기존 조사로는 불가능했던 섬 생태계의 입체적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 조사방법과 UAV 기법을 결합한 4단계 통합 조사 체계(전면적 예비조사 → 전략적 현장 정밀조사 → 통합 분석 및 모델링 → 지속적 모니터링)를 제안하며, 이는 천연기념물 보호와 과학적 연구의 완벽한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문화재청과 환경부 공동의 표준화된 UAV 조사 프로토콜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장비 공동 활용 체계와 정기 모니터링 법제화를 통해 전국 천연기념물 도서의 체계적 보전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보전 관리 체계는 변화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과학 기반의 증거 중심 의사결정을 통한 적응적 관리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향후 이러한 통합적 조사 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적용된다면, 도서 생태계 보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자연유산의 생태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V. 사사

본 논문(저서)은 2025년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대학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1] 방은석, 손정술, 강웅, 이희욱, 김창렬, 이창원, 김보나, 황세호, 노상건, 손영선, 조성준 (2020). 지질조사 및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KIGAM 드론 플랫폼 구축.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23(3), 141-148.
- [2] 문화재청(2011). 천연기념물(동물) 서식지 등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3] 송원경(2019). 도시녹지공간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 방안.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22(1), 61-72.
- [4] 우영, 권혁수, 장인영, 배해진, 정필모, 방은주, 김정인, 김목영, 서창완, 최재천 외(2016).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생태원.
- [5] 조상호, 이근상, 황지욱(2020). 식생 활력도를 고려한 드론 기반의 식생지수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3(2), 21-35.
- [6] 이용창(2018). UAS 기반, 가시, 근적외 및 열적외 영상을 활용한 식생조사. 지적과 국토정보, 48(1), 71-91.
- [7] 김승민(2014). 경관분석을 위한 UAV 활용방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213-220.
- [8] 주우영, 권혁수, 여인애, 장인영, 정필모, 이규철, 박홍준, 김정인, 서창완 외 6명(2019). 핵심 생태자산과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및 보전방안 연구. 국립생태원.
- [9] 최병기, 이진범(2015).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림의 식물생태학적 가치 제고.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4), 87-98.
- [10] Karen Anderson, Kevin J Gaston. (2013). Lightweight unmanned aerial vehicles will revolutionize spatial ecology. Frontier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11(3), 138-146.
- [11] Colomina, I., & Molina, P. (2014). Unmanned aerial systems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A review. ISPRS Journal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92, 79-97.

위성영상을 활용한 조간대 면적 변화와 조류상 변화분석 연구

- 조력발전소 및 매립 전후를 중심으로 -

양 승 빈 | (주)리프 대표이사, 환경자원학 박사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간대는 육상과 해양을 연결하는 경계 생태계로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철새의 중요한 기착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간척과 해양개발로 인해 조간대 면적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특히 시화호(1994년 방조제 완공, 2011년 조력발전소 가동)와 새만금(2006년 방조제 완공)은 대규모 간척사업의 대표 사례로, 생물다양성과 조류상 변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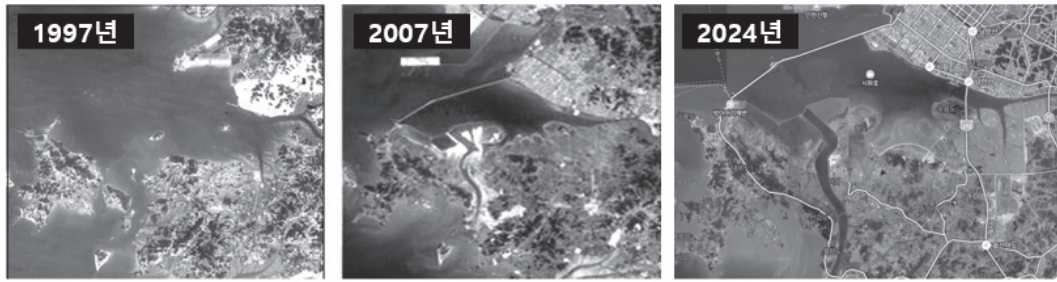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새만금 및 시화호 지역을 대상으로 간척사업 및 조력발전소 가동 전후의 조간대 면적 변화와 조류상의 변화를 위성영상을 통해 분석하였다. Landsat 및 Sentinel-2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시기별 NDWI 지수를 산출하여 조간대의 공간적 변화를 정량화하였으며,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자료를 활용하여 조류 출현종과 개체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간척 이후 조간대 면적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조류다양성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연안개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며, 향후 복원정책과 생태 모니터링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II. 조간대와 조류 서식처 관계성

조간대는 철새를 포함한 다양한 조류의 서식처 및 먹이터로 기능한다. 하지만 간척사업 및 조력발전소 운영 등으로 인해 조간대가 축소되면서 조류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시화호 간척사업 전후 위성영상 변화

시화호의 조력발전소 가동 전후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조간대 면적이 1991년 약 115 km²에서 2010년 5.6 km²로 급감한 후, 발전소 가동 이후인 2013년에는 일부 회복되어 20.3 km²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면적 회복이 조류상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동일 지역에서 조류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물을 조사한 결과, 조력발전소 가동 후 개체수 밀도는 급감했으나, 오히려 종 다양성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서식처 구조의 변화가 생물군집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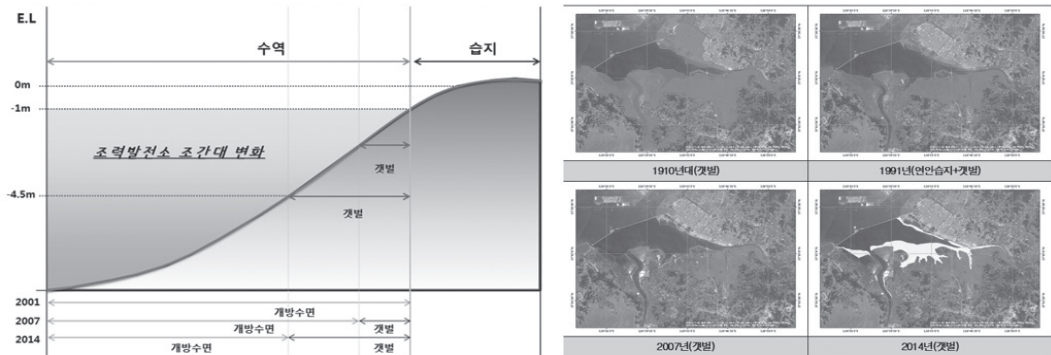
한편, 새만금 지역에서는 방조제 완공 이후 조간대 면적이 급감하면서, 도요·물떼새와 같은 습지성 철새의 개체수와 출현 종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알락꼬리마도요와 같은 국제적 보호종의 출현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위성 기반 수치지형모델(DEM) 및 물선(waterline) 분석을 통해, 새만금 조간대가 단순히 침수된 것이 아니라 인공구조물에 의해 실질적으로 단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류 서식처의 연속성을 해치고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Ⅲ. 위성영상 분석기법의 활용

본 연구는 Landsat 5/7/8 및 Sentinel-2 영상을 활용하였다. Landsat은 장기 시계열 분석에 유리하고, Sentinel-2는 10m 해상도로 정밀도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 영상은 QGIS 기반으로 SCP(Semi-Automatic Classification Plugin)를 이용해 대기보정, 클리핑, 밴드 선택 과정을 수행하였다. 조간대 추출은 조간대의 수체 구분을 위해 NDWI(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를 활용하였다. NDWI 결과를 Thresholding하여 물/비물 영역을 이진화하고, 이를 벡터화하여 시기별 조간대 면적을 정량화하였다. 시간대별 NDWI 결과를 중첩하여 조간대의 축소, 이동, 복원 여부를 시각화하였다. QGIS의 Time Manager 플러그인을 이용한 시계열 애니메이션을 통해 공간변화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였다. 조간대 변화와 조류 출현 정보를 공간적으로 연계 분석하였다. NDWI 값 급변 지역과 조류 출현지 간의 위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환경변화와 생물다양성 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IV. 결과 및 활용

본 연구에서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조력발전소 가동 전후, 매립 조성이후의 갯벌 면적과 조류상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시화호는 1990년 대비 2020년 조간대 면적 약 62% 감소하였으며,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조간대 갯벌의 면적이 미미하게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전후 조간대 변화(양덕석, 2016)

새만금은 1995년 대비 2020년 기준 조간대 면적 약 78% 감소하였으며, 간척 이후 내부 매립지는 확대되어 갯벌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조류상에서는 시화호는 1990년대 후반 출현종 수 130여 종에서 2020년대 90여 종으로 감소하였으며, 새만금은 철새의 주요 기착지였던 과거와 달리 간척 이후 출현종 및 개체수가 급감하며, 주요 우점종의 변화, 습지성 조류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화호와 새만금 모두 간척 및 조력발전 이후 조간대가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조류 출현종의 다양성과 개체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연안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며, 향후 생태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연안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조간대 복원과 간척지 공간재편에 있어 생태학적 근거와 공간 정보 기반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국토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실천적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간대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간척 예정지 및 계획지에 대한 사전 생태계 영향 예측에 생태공간적 분석기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김민규, 구본주. (2015).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조간대 면적 변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8(4), 310-316.
- [2]. Koo, B. J., & Kim, M. (2016). Changes in the macrobenthic community in Sihwa tidal flat after operation of the tidal power plant.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119, 102-110.
- [3]. Yi, J. Y., Choi, Y. H., & Moores, N. (2014). Effects of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on migratory shorebird staging in the Saemangeum and Geum estuaries, South Korea. Bird Conservation International, 24(1), 1-18.
- [4]. Laursen, K., Kurek, J., et al. (2014). Long-term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hanges in marine benthic flora and fauna in relation to the Saemangeum Embankment. Ocean Science Journal, 49(1), 55-72.
- [5]. NASA Earth Observatory. (2007). Changes to the Saemangeum Estuary, South Korea. Retrieved from <https://earthobservatory.nasa.gov>
- [6]. Kim, H., & Woo, J. H. (2022). Satellite-based observations of unexpected coastal changes due to the Saemangeum Dyke construction.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812, 152516.
- [7]. 양덕석(2016). 서식환경변화가 조류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시화호를 중심으로
- [8]. 환경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2024). 조류 출현종 시계열 데이터.



무인섬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 원 빈 | 국립목포대학교 조경·건축융복합학 협동과정

이 창 훈 | 국립목포대학교 도시계획 및 조경학부 교수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자연환경을 체험하고자 하는 생태관광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위적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무인도서(無人島嶼)는 고유의 생태적 다양성과 경관적 매력을 갖추고 있어,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안·도서 지역의 보전과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무인섬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무인섬은 일반적인 관광지에 비해 접근성과 인프라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나, 원시적 자연 보존과 지역 특화형 생태체험 콘텐츠 개발의 잠재성을 보유한 공간이다. 또한 인근 어촌이나 연안 지역 사회와 연계할 경우, 생태·문화·경제의 삼중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닌다.

최근 경상남도는 섬 관광객 유입 증가 추세에 따라 경상남도 섬 지역만의 독자적 콘텐츠 발굴을 위해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하동군을 중심으로 생태교육을 통한 무인섬 특화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무인섬은 「도서생태계법」, 「무인도서법」, 「자연공원법」등, 복수의 부처가 관련 법령을 관할하고 있으며, 행위 제한 및 출입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하동군 무인섬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의 현실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자 한다.



II. 하동군 무인섬 분포 및 특성

하동군의 주요 무인섬은 마도, 소마도, 오동도, 장도, 장장목도(혈도), 토끼섬(토도), 나물섬(채도), 장구섬(악도), 작은방아섬(소점도) 등이 분포한다. 상술한 섬은 소유권, 자연환경, 접근성의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토끼섬(토도), 장장목도(혈도), 마도는 「도서생태계법」에 따른 '특정도서'로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장구섬(악도), 장도는 「도서생태계법」에 따른 특정도서와 「자연공원법」에 따른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 더불어 장구섬(악도)과 장도는 출입금지 공고 제2022-67호, 제2023-44호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어, 생태관광 활용 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비접촉형 생태관광'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물섬(채도)와 오동도의 경우, 사유지로서 섬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물리적 시설물을 통한 생태관광 경유점으로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민 생태모니터링, 경관 및 서식지 체험 등 생태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무인섬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1. 무인섬 접근방식의 전환

무인섬 생태관광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성과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기존의 물리적 시설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비접촉형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특정도서로 지정되었거나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무인섬은 「도서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로 인해 시설물 설치, 항만 조성 등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섬 내부에 정착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탐방의 형태를 해상 중심 또는 제한적 상륙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며, 상륙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간이시설과 임시적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실제 탐방 운영 시에는 부유식 선착장이나 화장실 내장형 선박을 도입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시설은 고정식 기반시설 설치 없이도 탐방객의 이동과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오·폐수 관리 측면에서 환경영향 최소화에 유리하다. 선박 기반 위생시설은 정화조를 활용하거나 배출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원칙을 충족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서도 친환경적 운영계획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인섬 내부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신설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연 훼손과 경관 왜곡이 동반되므로, 선박 중심의 시설 운영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섬 접근에 있어서 정박 포인트와 물 때에 대한 판단은 지역 어민의 경험과 협력에 기반한 운항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무인섬은 각 섬마다 해류, 수심, 조석 변화가 달라 상륙 가능 시간이 제한되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현지 어업 종사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탐방 경로와 시기, 정박 위치 등의 세부계획은 지역 어민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사전 조율하고, 반복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정착 운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균형 전략이며, 향후 AR 기반 해양경관 감상, 비상록형 해상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 확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2. 무인섬 프로그램 개발 방향

무인섬 생태관광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탐방 자체를 단순 체험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 생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 참여형 생태 모니터링은 연간 약 4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제안하며, 사전에 생태·환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참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인섬의 식생, 조류, 해양 생태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결과는 보고서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축적되어 향후 정책 결정과 환경 보전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탐방객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생태 보전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고, 지역 사회는 비상업적·비개발적 방식으로 섬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

경관 감상과 생태교육을 결합한 차경(借景)기법 및 서식지 체험형 콘텐츠 또한 중요한 운영방식으로 제안된다. 차경기법은 특정 위치에서 바라보는 자연 경관의 구도와 감성을 해설을 통해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섬의 자연성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식지 체험 프로그램은 조간대 생물 관찰, 식생 생태계 이해, 해조류·조류 서식지 탐방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태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섬 내에서의 활동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환경부와의 협의 시 비영리·비상시적 탐방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 제한 구역 내 운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무인섬 탐방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 대상의 생태캠프 및 교육탐방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솔섬과 같이 군유지를 포함하거나 탐방 기반이 조성된 섬을 중심으로, 하동군이 주체가 되어 계절별 생태교육, 탐방안전 교육, 지역문화 해설 등을 종합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 내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미래 세대의 생태적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을 지역 교육자원으로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체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무인섬의 보전성과 활용성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하동군 무인섬을 대상으로 무인섬의 생태관광 가능성을 탐색하고, 환경 보전과 관광 활용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동군의 무인섬은 소유권, 생태적 보전 가치, 법적 규제 수준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장구섬(악도)와 장도는 출입금지 공고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어 '비접촉형 생태관광'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무인섬 접근 방식은 기존의 고정식 기반시설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성과 경관성을 보전할 수 있는 비접촉형 생태관광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유식 선착장, 화장실 내장형 선박 등의 이동형 설비 도입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합하며, 정박 위치와 물 때에 대한 판단은 지역 어민과의 협력을 통해 정교하게 조정함으로써 탐방의 안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무인섬 생태관광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생태모니터링, 차경기법, 서식지 체험 등의 교육 중심 프로그램 구성이 타당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무인섬 생태학습을 위한 참여자 사전 교육, 정량적 결과물 도출, 계절별 탐방 콘텐츠 구성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지속가능한 무인섬 생태관광 모델로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서. (2011). 무인도서의 인식과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전남해안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8(0). pp.359-388.
2. 안웅희, 김병국, 장지원. (2012). 부산의 무인도서를 활용한 입체적 해양관광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206-208.
3. 장정인, 정지호, 최지연, 김성귀. (2014). 무인도서 관광개발 잠재력 평가체계 개발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9(1). pp.13-39.
4. 이나연, 김미란, 이호, 권영수. (2017).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국립공원 도서(島嶼)생태계의 통합 접근 방법 방안 모색.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1). pp.43-44.
5. 이슬기, 윤승철, 정지호, 김찬웅, 이해영.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인도서 이용 현황 및 시사점 연구 : SNS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52.

섬정원의 감성적 전환과 체류형 관광

: 아이스테시스 관점에서 본 생활인구 확대 전략

강 병 옥 | 동아보건대학교 레저조경학과 교수

1. 서론

섬 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그리고 경제활동의 위축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이탈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체류형 관광은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일시적 방문객을 장기 체류자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섬은 지리적인 고유의 자연적 감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해, 정원이 제공하는 미적 감성은 자연적 감성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맥락에 위치한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 파도의 리듬, 염분을 머금은 바람의 촉각적 경험은 정원의 구성된 감각적 장치들과 상호 조응한다. 이는 인간의 근원적 감성을 자극하는 동일한 지각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가 제시한 '감성의 분할'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섬정원을 매개로 한 체류형 관광 및 생활인구 확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섬의 자연적 감성과 정원의 인공적 감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증폭된 미적 경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일상적 삶의 방식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섬 지역에 조성된 정원이 체류형 관광을 어떻게 유도하며, 나아가 생활인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섬이 지닌 원초적 감성과 정원을 통해 구성되는 감각적 경험의 시너지가 방문자의 지각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것이 장기 체류의 동기로 전환되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섬정원 사례를 분석하고, 감성적 공간으로서의 정원 기능을 자크 랑시에르의 '아이스테시스(aesthesis)' 개념을 통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활인구 확대와 체류형 관광의 개념

‘생활인구’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자주 방문하거나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이는 실제 거주인구 외의 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로 활용된다. ‘체류형 관광’은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한 곳에 머무르며 지역의 일상에 참여하는 형태의 관광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방문을 및 정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확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

2.2 섬정원의 개념과 특징: 자연적 감성과 구성된 감성의 융합

섬정원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정원의 경관적 요소를 결합한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경관계획, 지역 식생을 반영한 식재계획, 지역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섬이 지닌 자연적 감성과 정원이 창출하는 미적 감성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섬정원이라고 볼 수 있다.

섬은 그 자체로 강력한 감성적 공간이다. 사방을 둘러싼 바다의 무한성, 조수의 리듬이 만드는 시간성, 염분과 습기가 만드는 독특한 촉각과 후각의 경험은 육지의 일상과는 다른 감각의 질서를 구성한다. 이러한 섬의 자연적 감성은 정원이라는 의도된 미적 공간과 만나면서 더욱 증폭된다. 정원에서 세심하게 배치된 식물, 계획된 동선, 의도된 전망은 섬의 원초적 자연미와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이 둘의 상호작용은 방문객에게 고도로 집중된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

2.3 아이스테시스 이론과 정원의 감성적 전환

자크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에서 미학을 단순한 예술 이론이 아니라, 감각의 분할 방식, 즉 누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질서로 이해한다. 그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을 재구성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실천이며, 예술은 이러한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인식과 경험의 질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2】 또한 『아이스테시스』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구체적인 예술 작품과 경험에 적용하여 분석한다.【3】정원은 그 자체로 감각적인 것을 분할하고 배치하는 공간이다. 식재의 구성, 동선의 흐름, 시각적 장면, 청각·후각적 요소들은 이용자의 감각을 조직하며, 이러한 배치는 특정한 경험을 유도한다. 섬정원의 경우, 섬이 가지는 자연적 감성과 정원이 가지는 미학적 감성을 융합하여 감각 질서의 재편을 시도한다. 이러한 재편은 랑시에르가 말하는 ‘감성의 분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며, 더욱 강력한 아이스테시스적 경험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정원에서 바라보는 수평선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무한과 유한의 경계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제공하며, 정원의 꽃향기와 바다의 염분이 섞인 공기는 후각적 층위를 복잡하게 만든다. 파도 소리와 나뭇잎 소리의 조화는 청각적 리듬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복합적 감각 경험은 일상의 감성 분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방문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상상하게 만든다. 섬정원은 ‘단절된 공간’이라는 섬의 속성과 정원의 감성적 구조가 결합되며, 체류자의 감각을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경험적 무대로 기능한다. 따라서 섬정원은 ‘아이스테시스’적 공간으로서 방문자의 감성을 재분배하며, 일시적 관광에서 장기적 생활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공한다.

3. 국내외 섬정원 사례 분석

3.1 분석 기준 및 방법

섬정원의 감성적 특성과 체류형 관광 전략의 접점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국내외 주요 섬정원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분	세부계획내용
공간구성	경관, 동선, 시설, 프로그램 등 공간적 특성
감성전략	자연적 감성과 정원적 감성의 융합 방식
체류성과	평균 체류 기간
아이스테시스적 요소	감각 질서의 재편 방식과 그 효과

3.2 국내외 섬정원 사례 분석

구분			세부계획내용
국 내	여수 오동도	공간구성	•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 • 768m의 방파제와 연결 • 숲속 산책로, 야간 경관조명 시설, 음악분수 및 전망대
		감성전략	• 동백꽃의 붉은 색과 파도의 하얀 포말이 만드는 시각적 대비 • 계절별 개화 시기와 조수 간만의 리듬 결합 • 야간 조명으로 낮과 밤의 다른 감각 경험 제공
		체류성과	• 연간 방문객 약 200만 명【4】 • 평균 체류 시간 2~3시간
		아이스테시스적 요소	• 동백 터널을 통한 빛과 그림자의 감각적 체험 • 파도 소리와 음악분수가 만드는 청각적 리듬의 재구성
	완도 보길도 세연정	공간구성	윤선도가 조성한 조선시대 별서정원 세연정, 낙서재, 동천석실 등 전통 건축물 자연 지형을 활용한 원림 구성
		감성전략	• 전통 정원미학과 섬의 고립성이 만드는 명상적 공간 • 문학적 상상력과 자연 경관의 융합 • 계절별 변화하는 자연과 인공 구조물의 조화

구분			세부계획내용
국내	완도 보길도 세연정	체류성과	•문화해설 프로그램 참여자 중심 •평균 체류 시간 3~4시간
		아이스테시스 요소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통한 시각적 프레이밍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흐리는 공간 구성
	거제 외도 보타니아	공간구성	•4만 4천여 평 규모의 해상농원 •아열대 식물 3,000여 종 보유 •테마별 정원 구역(이탈리아, 프랑스 정원 등) •조각공원 및 전망대
		감성전략	•이국적 식재와 한국 해안경관의 대비적 조화 •지중해식 정원과 동양적 요소의 혼합 •사계절 다른 개화 식물로 시각적 변화 제공
		체류성과	•연간 방문객 100만 명 이상(2018년 기준)【5】 •평균 체류 시간 1.5~2시간
		아이스테시스 요소	•열대 식물과 온대 바다의 감각적 충돌 •인공적으로 조성된 이국성이 만드는 환상적 경험
일본	나오시마섬	공간구성	•베네세하우스 뮤지엄, 지중미술관, 이우환미술관등과 함께 예술작품 이 섬 전체에 분산 배치 •전통 마을과 현대 건축의 공존 및 숙박시설과 미술관의 통합
		감성전략	•건축, 예술, 자연의 경계를 해체하는 통합적 접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을 활용한 감각 경험 •일상 공간과 예술 공간의 융합
		체류성과	•연간 방문객 약 50만 명(2019년)【6】 •평균 체류 2~3일
		아이스테시스 요소	•일상적 섬 풍경을 예술적 경험으로 전환 •지중미술관의 자연광이 만드는 시간성 체험 •섬 전체가 하나의 감각 재편 장치로 기능
	사도섬	공간구성	•855km ² 의 대규모 섬, 사도금산, 계단식 논(다나다)의 경관 •따오기 서식지 및 생태공원【7】
		감성전략	•전통 농업경관과 생태계 보전의 조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통합적 활용 •계절별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체류성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증가 •평균 체류 기간 2~3일
		아이스테시스 요소	•다나다가 만드는 대지예술적 경관 •생태와 문화의 감각적 융합
	쇼도시마 섬	공간구성	•올리브 공원, 칸카케이 계곡 등 자연경관 •간장 제조 시설 및 체험장 •영화 촬영지 보존【7】
		감성전략	•올리브와 지중해적 분위기 연출 •전통 산업(간장, 소면)과 관광의 결합 •영화적 서사와 실제 공간의 중첩
		체류성과	•올리브 수확 체험 등 계절 프로그램 •평균 체류 1~2일
		아이스테시스 요소	•올리브 향과 바다 냄새의 후각적 조화 •전통 제조 과정의 감각적 체험 •영화적 상상력과 현실 공간의 융합

3.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3.3.1 감성 증폭 메커니즘의 차이

정원 요소를 더해 특정 지역을 관광 명소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이는 감각을 부분적으로 강렬히 자극하지만, 경험의 깊이나 지속성은 부족하다. 반면 일본은 섬 전체를 통합적 감성 공간으로 기획하여 문화·예술·생활이 융합된 총체적 체험을 제공한다.

체류 시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내는 평균 2~3시간의 단기 관람에 그치나, 일본은 2~3일 체류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감성 경험의 밀도와 지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오시마처럼 섬 전체가 ‘아이스테시스적 장치’로 기능할 때, 방문자는 일상의 감각 질서에서 벗어나 몰입적 감성 리듬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지역 연계에서도 국내는 주민 참여가 제한적이지만, 일본은 주민 주도형 운영이 정착되어 있다. 주민이 정원의 운영자이자 해설자,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방문객은 더욱 진정성 있는 감성 교류를 경험한다.

3.3.2 성공 요인과 한계에 대한 종합적 고찰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섬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감성 공간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섬이 가진 자연적 감성과 정원의 미적 감성이 섬 전체에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민 참여는 지속가능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사도섬처럼 전통 농업과 관광이 결합되면 주민의 일상이 곧 관광 자원이 되고, 깊이 있는 문화적 감성 경험을 가능케 한다. 셋째, 숙박과 체험이 결합된 프로그램은 감성 경험의 지속성을 높인다. 장기 체류를 통해 섬의 시간성(조수, 일출일몰, 계절 변화 등)에 동화되며, 정원 가꾸기나 수확 체험 등은 수동적 관람을 능동적 감성 체험으로 전환시킨다. 넷째, 문화·예술과 자연의 융합은 감성의 층위를 심화시킨다. 인간의 창조적 개입이 자연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할 때, 방문객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감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한계도 존재한다. 섬의 지리적 특성은 접근성과 인프라에 제약을 주며, 기상 악화에 따른 운항 중단과 계절별 수요 편차는 운영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또한, 나 오시마의 경우는 민간 대기업의 장기적 투자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사례로, 일반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장료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수익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체성과 관광 개발 사이의 균형 문제는 섬정원이 직면한 딜레마다. 과도한 개발은 섬 고유의 감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본질적 가치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전과 개발, 주민 삶과 관광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3.3.3 아이스테시스 관점의 종합 평가

분석된 사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방문객의 감각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섬의 자연적 감성과 인간이 만든 문화적·미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감각 경험을 창출한다. 특히 나오시마의 경우 섬 전체가 하나의 ‘아이스테시스적 장치’로 기능하며, 일상과 예술,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해체하는 강력한 감각 재편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며, 실제로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섬정원이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섬의 자연적 감성과 정원의 미적 감성을 융합하여 감각 질서의 재편을 실현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크 랑시에르의 ‘아이스테시스’ 개념을 통해 볼 때, 섬정원은 일상의 감성 분할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미학적·정치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섬이 지닌 원시적 감성(바다의 무한성, 고립의 친밀성)과 자연의 리듬과 정원이 창출하는 구성된 감성(의도된 아름다움, 계획된 조화, 휴먼스케일)의 만남은 단순한 중첩이 아닌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증폭된 감성 경험은 방문객의 감각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며, 일시적 방문에서 장기 체류로, 나아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성공적인 섬정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섬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감성 공간으로 기획하여 총체적인 감각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성 있는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셋째,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깊이 있는 감각적 몰입을 유도한다. 넷째, 자연과 문화,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복합적 콘텐츠를 제공한다.

‘머무름의 감각’을 설계하는 섬정원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 공간이나 인공 정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일상과 예술, 개인과 공동체가 만나는 감성적 교차점이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미학적 실험실이다. 섬의 자연적 감성과 정원의 구성된 감성이 만드는 이 독특한 공간은, 지역 재생과 감성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1]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체류형 관광의 개발 및 특성 분석과 정책적 이슈 도출. 정책연구보고서.
- [2]Ranciere, J. (2000).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 Paris: La Fabrique.
→ 자크 랑시에르. (2008). 감성의 분할 (오윤성, 역). 도서출판 b.
- [3]Ranciere, J. (2024). Aisthesis: Scenes from the Aesthetic Regime of Art.
→ 자크 랑시에르. (2024). 아이스테시스 미학적 예술체제의 무대(박기순, 역). 도서출판 길.
- [4]여주시청. (2020). 여수 관광 현황 및 발전방안. 여주시청.
- [5]거제시청. (2019). 거제 관광통계 연보. 거제시청.
- [6]Benesse Holdings. (2020). Benesse Art Site Naoshima Annual Report 2019. Benesse Art Site.
- [7]일본관광청. (2019). 離島観光の現状と課題 [도서관광의 현황과 과제]. 일본관광청 공식 보고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 평가

조영훈 |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빙하 감소, 평균 해수면 상승과 함께 집중호우·태풍·홍수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인류의 삶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훼손을 야기시킨다[1].

특히 해안 지역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 해수면이 팽창하고,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2024)에 의하면 지난 35년(1989~2023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총 10.7cm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2]. 이에 더해 기상청(2024)에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역의 미래 해수면 높이를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21세기 말(2091~2100년) 해수면 높이는 약 0.56m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3].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침수·범람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연안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강화시키고 이로 인한 훼손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연안 공간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한다[1]. 국가유산은 일단 한번 훼손 시 복원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평상시 사전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전 지구에 있는 문화·자연유산들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있다. 베네치아는 지반이 약해 서서히 가라앉고 있으며, 매년 태양과 달의 중·인력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용머리해안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기는 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용머리 해안에 접근 가능한 날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와 해풍에 의한

침식때문에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 지역 국가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주로 해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침수 피해 양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해미(2017)는 RCP8.5¹⁾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전국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영향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보령, 전라북도 고창, 인천 연수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응 전략을 제안하였다[4]. 정우송 등(2022)은 RCP8.5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해수면 상승이 해안에 위치한 해군 주요 부대 시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고, 해군 주요 부대시설 7개소 중 2개 부대시설은 운영 불가, 2개 부대시설은 일부 잠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5]. 심지우(2023)는 SSP5-8.5시나리오와 극조위값을 적용하여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 양상을 분석하고, 토지피복 유형별 영향평가를 통해 공간적 취약성을 도출했다[6]. 김찬웅(2025)은 SSP5-8.5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충청남도 태안군과 경상남도 통영시의 침수 피해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7].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해수면 상승이 주로 도시 지역 및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1)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미래의 온실가스 농도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시나리오
RCP 8.5 :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이 지속되거나 증가하여 8.5W/m²으로 이상으로 증가하는 시나리오 (가장 비관적/고배출)

Ⅲ. 지구 평균 해수면(GMSL)과 온도의 상승

1. 조위계와 위성영상을 통한 GMSL 변화 추세

조위계(tide gauge)는 해수면 높이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관측 수단으로, 특정 지점에서 장기간(보통 75년 이상)에 걸친 연속적인 수위 관측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장기 해수면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반면, 위성고도계(satellite altimetry)는 지구 전역의 해수면 높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지난 약 30년간의 위성 기반 해수면 자료를 통해 전 지구적 해수면 변화 및 해양 동역학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림 1〉 국내 연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



〈그림 2〉 전지구 연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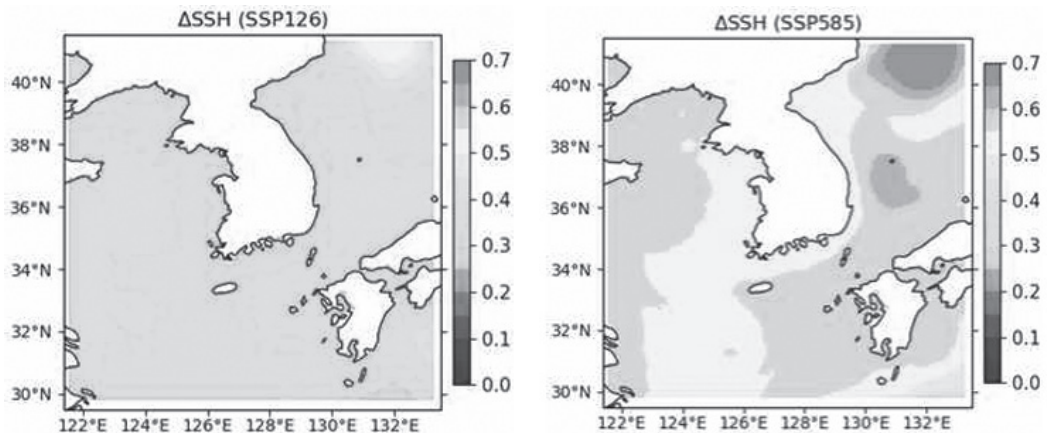
자료 : 기상청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좌)국립해양조사원, (우)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와 해수면 상승

21세기 말(2091~2100년)까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 따른 해양기후 전망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전국 평균 약 0.56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동해남부 해역은 0.58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해동부와 동해중부 해역도 각각 0.57m, 0.56m의 상승 폭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 대비 약 0.21m 더 높은 수치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흡할 경우 해안가 지형과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 상승은 연안 지역의 침수 범위 확장, 만조 수위 상승, 폭풍해일 영향력 확대 등 복합적인 재해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항만, 어항, 저지대 도시지역뿐 아니라, 해안가에 인접한 국가유산이나 습지 생태자원은 상시 침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해수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저지대 내수 배수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안선의 후퇴와 토양 염해, 인프라 노후화 가속 등 간접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 적응형 연안관리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해상도(약 8 km) 기반의 해양 시나리오 분석은 지역 단위에서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작용한다. 연안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 침수 예측지도 제작, 방재시설 설계 고도화 등이 시급히 요구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한 통합적 적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최근 10년 대비 2091~2100년 해수면높이 변화 분포도
(좌)SSP1-2.6, (우)SSP5-8.5

자료 : 기상청. (2024.12.26.). 뜨거워지는 우리 바다, 21세기 말 해양기후 급격히 변한다 [보도자료].

IV. 결론 및 제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의 국가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가유산의 피해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유산 보존·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선행연구 고찰결과, 해수면 상승이 도시 및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해군시설, 연안 도시지역, 토지이용 변화 등 인프라 피해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CP 및 SSP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한 정량적 침수예측이나 공간적 취약성 분석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국가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평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가유산 영역의 피해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구 평균 해수면(GMSL)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위계는 특정 해역의 장기적 변화를 감지하고, 대면적의 수위 변동을 정량화할 수 있어, 해양기후 변화의 척도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기상청 관측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속도는 가속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은 평균 0.56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동해남부 해역은 최대 0.58m까지 상승할 전망으로 확인되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에 위치한 국가유산으로부터 상시 침수나 염해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공간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와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우리나라 문화·자연유산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과제
- [2] 해양수산부, 2024,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 지난 35년간 10.7cm 상승, 보도자료
- [3] 기상청, 2024, 뜨거워지는 우리 바다, 21세기 말 해양기후 급격히 변한다, 보도자료
- [4] 이해미, 2017,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범람지역 영향평가 및 적응전략 연구
- [5] 정우송 외, 2022,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해안도시의 해군 부대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6] 심지우, 2023,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양상 분석
- [7] 김찬웅, 2025, 해수면 상승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충청남도 태안군과 경상남도 통영시를

사례로-



신안군 옛돌담 보존가치에 관한 연구

김 서 연 |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옛 돌담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축조된 전통적 구조물로, 단순한 경계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문화자산이자 생활 공간과 신앙, 자연이 결합된 전통 생활문화를 담고 있다[1].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많은 돌담이 현대적 재료로 교체되었으나, 제주도의 경우 돌담의 역사적·경관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제주 전통 돌담의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주민과 방문객의 약 78%가 돌담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2], 제주도청은 경관 보전 직불제의 대상에 돌담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3]. 또한 2006년에는 ‘옛 담장’이라는 명칭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가 차원의 보존 필요성이 공고히 인식되었다. 이처럼 제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돌담 보존과 정책적 대응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돌담 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신안군 또한 옛 돌담의 가치를 인식하고 흑산도 사리마을과 비금도 내촌마을의 돌담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더불어 2013년에는 신안군 돌담 문화유산 등록 추진 실태조사를 통해 돌담의 보존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2019년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와 정책은 주로 돌담의 유형과 재료, 보존 현황에 대한 정성적 서술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층적인 분석과 경관·문화적 통합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안군 옛 돌담이 지닌 경관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옛 돌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재조명하고 향후 보전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선행 문헌 고찰과 기초자료, 관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안군 옛 돌담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보존·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안군 돌담이 지닌 경관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찰하며, 향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국내 돌담 관련 연구 논문과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방월, 고란, 진리, 서산, 대리 등 5개 마을에 분포한 옛 돌담을 포함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신안군 돌담의 분포 및 보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 조사, 둘째, 구조적 특징과 축조 기법의 유형화를 위한 간접 현장자료 분석, 셋째, 보존 및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사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신안군 돌담의 분포 및 유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 조사

신안군의 옛 돌담은 비금면, 흑산면 등 군 전역에 걸쳐 분포하며, 특히 방월, 고란, 진리, 서산, 대리 등 5개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이들 돌담은 주택 주변 담장이나 경계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경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형성한다.

현황 분석 결과, 돌담의 보존 상태는 ‘완형’, ‘부분 붕괴’, ‘반파’, ‘완전 파괴’의 네 가지 유형¹⁾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전통적 특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완형 돌담은 일부에 불과하며, 완전하게 보존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4]. 다수의 돌담은 시멘트 몰탈과 블록 등이 혼용되거나 전면 교체되어 원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일부 구간은 붕괴 또는 유실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돌담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 마을 경관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1) 신안군 돌담 문화재등록 추진 연구용역(2013)에서는 담장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입면의 형태와 파손정도를 구분하였다. ① 담장이 흄김과 붕괴 없이 일정한 높리와 폭을 유지하고 있는 담장 상태를 ‘완형’, ② 높리가 일정하지 않는 구간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담장 상태를 ‘부분붕괴’, ③ 파손정도가 상당히 일부 구간자체가 붕괴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흄어지고 가옥의 신축 보수로 인해 유실된 구간이 있는 상태를 ‘반파’, ④ 돌담이 시멘트 담장으로 완전 교체되거나 담장 하부 일부만 존재하고 유실된 곳 또는 토사매립으로 구분이 어려운 상태를 ‘완전 파괴’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 인용함.

2. 구조적 특징의 유형화를 위한 간접 현장자료 분석

신안군 돌담은 도서 지역의 지리·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응회암, 장석반암, 셰일(shale) 등 지역에서 채취한 암석 자원을 활용하여 축조되었다. 이는 외부 자재 반입이 어려운 도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5].

단면 구조는 상부 폭이 약 350~500mm, 하부 폭은 900~1,200mm로, 하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돌담 높이는 가옥 주변에서 평균 1,400~1,700mm, 경사지 구간에서는 2,000mm를 초과하기도 한다. 축조 방식은 기본적으로 허튼층쌓기 방식을 적용하며, 돌과 돌 사이를 막음돌로 채워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6].

특히 고란마을의 경우, 허튼층쌓기와 더불어 돌과 흙을 혼용한 빗살쌓기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일부 구간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 기능과 지역 특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축조 기법은 지역 자원의 물리·기계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 신안군 옛 돌담만의 독창성을 나타낸다.

3. 보존·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분석

신안군은 2019년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돌담 보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는 돌담의 원형 보존, 훼손 구간 정비, 신규 조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대상 선정 절차를 통해 행정적 객관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보전 직불제 사례와 비교할 때, 신안군의 정책 도입 시점은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지원 체계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조례명에 ‘돌담’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7], 지역 고유의 축조 기법과 생활문화적 맥락을 문화경관 자산으로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에는 고란마을 등 지역성이 뚜렷한 마을을 중심으로 유형별 정비 지침을 구체화하고, 주민 참여형 보존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돌담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신안군 옛 돌담은 도서지역의 지리·환경적 조건에 적합하게 형성된 전통 축조 기법과 지역 자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경관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응회암, 장석반암, 셰일 등 지역 산 암석을 활용한 허튼층쌓기 방식과 막음돌 보강 기법은 구조적 안정성과 지역 고유성을 동시에 반영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축조 방식은 단순한 경계 시설을 넘어 마을 경관의 핵심 요소이자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전통 조정 요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 신안군 옛 돌담의 상당수는 시멘트 블록의 혼용, 부분 붕괴, 완전 파괴 등으로 원형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며, 온전한 상태의 돌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신안군은 2019년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조례는 원형 보존, 훼손 구간 정비, 신규 조성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조례는 옛 돌담을 물리적 구조물이 아닌 문화경관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향후에는 신안 도초도 고란마을 등과 같은 지역성이 뚜렷한 사례를 중심으로 세부 유형 분석과 맞춤형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점진적 복원을 통해 경관적 연속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민 참여형 보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역 공동체의 보존 의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전통돌담의 완전성이 담보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안관옥. (2019). 한겨레. 돌담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 [2] 이상영. (2007). 제주 전통돌담의 유지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33-40.
- [3] 고성보. (2007). 제주발담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경관자원 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123-133.
- [4] 신안군. (2013). 신안군 돌담 문화재등록 추진 연구용역.
- [5] 유경아, 유영석, 홍진택. (2011). 비금도와 도초도의 지질 및 해안 퇴적환경. 113-124
- [6] 정주연. (2019). 전통 취락경관의 비교연구: 제주도와 비금도의 돌문화경관을 중심으로. 149-160.
- [7] 김재훈. (2024). 제주투데이. [포커스] 돌담 보존 선두는 신안군... 뒤쳐진 제주도.

기후 변화 시대, 토착지식을 활용한 '해수농업' 사례

이 경 아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I. 들어가며

오랫동안 섬과 어촌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어민들의 마음 한켠에 늘 자리했던 것은 다름 아닌 '땅'과 '쌀농사'에 대한 갈망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유도 결국은 전답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 일념 하나로 거친 바다에서의 작업을 버텨왔다고들 했다.

섬은 간척지에 방조제 등 제방을 만들어 바닷물을 막아 농지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이 언답(堰畓), 언전(堰田)¹⁾을 개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언답을 일구기 위해서는 조수를 막기 위해 독을 쌓고 사전에 갈대를 재배하는 등의 수고가 따른다. 여기에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지리상 하천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답은 주인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개간만 성공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조세 부담이 묵은 밭[陳田]이나 개간이 안 된 채 버려진 한광지(閑曠地)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조선 후기 왕실 궁가 뿐 아니라 소농민에 이르기까지 언전의 개간에 대거 참여하였다. 물론 자본을 충당할 능력이 안되는 소농 및 임차농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이지만 말이다.

언답은 특히 지세가 완만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일대에 다수 개간되었다. 대부분 마을 인근 산을 토취장으로 만들어 거기서 나온 흙과 돌, 자갈들을 매립토로 활용해왔다. 배수 시설

1)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수리지(水利志)』에서 바닷가의 소금기가 있는 지역 가운데 독을 쌓아 밀물을 막고 빗물을 저장하여 소금기를 뺀 뒤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개간한 논을 언전(堰田)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언전을 제대로 일구기 위해서는 지세(地勢)를 헤아려 도랑을 파고 개천의 물을 끌어들이는 한편 물을 저장하는 못을 만든 뒤에야 소금기가 가시고 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을 통해 드러난 저지대를 염류 농도를 낮추고 침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매립과 복토를 통해 터돋음을 하는 것이다. 도서 지역에서 조수를 막아 독을 막고 언(堰)을 쌓아 농지를 만든 사례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소개 되어왔다.²⁾ 그러나 이들이 그 땅을 일구고 소출을 올리기 위해 어떠한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남해의 ‘다랭이’ 논이나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는 또 다른 ‘언 논’을 획득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이 있었음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 다만, 본 글에서는 지면의 제한상 자세한 구술과 내용을 담지는 못하고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II. 전통지식을 활용한 간척 농지의 관리

간척지의 개답에 의한 식량 생산 확보 문제는 거의 항구적이며 역사적인 과제이기도 했다. 이를 섬 주민들은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

바닷물을 막아 언을 쌓고 땅을 확보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해양 저지대를 매립하여 조성한 간척지³⁾는 일반 농경지와는 생산환경이 상이하다. 토양의 염농도는 높고, 유기물 함량은 낮으며, 지표배수가 불량하여 안정 영농을 위해서는 염분 제거, 땅심 증진, 배수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에 유의해야만 했다. 해양의 간척지는 토양에 소금기를 포함하고 있어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염분을 제거해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녹록치 않았다. 간척지는 저지대이기에 소금기가 비를 통해 자연적으로 씻겨 내려가기 위해서는 십수 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언전 두 배미가 내륙의 농지 한 배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간척 농지 특성상 염해⁴⁾와 습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웠다.⁵⁾ 다만 『과농소초(課農小抄)』에 따르면 농경용으로 전환할 경우를 전제로 우선은 내염성이 강한 물피를 심었다가 제염이 되는 것을 기다려 곡식을 심는 것이 좋는데 특히 짚물에서 자라는 함초를 밀생시켜 관리하면 썰물의 물빠짐을 효과적으로 지연시켜 뽕흙의 퇴적을 도울

2) 김경옥, 19~20세기 안좌도를 통해 본 제연축조와 운영실태,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김경옥, 19~20세기 도서지역 간척을 통해 본 공유와 분배, 한국사연구 제201집, 2023 등 참조

3) 간척지 토양에는 각종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염류집적토(鹽類集積土)라고 하기도 한다.

4) 염류성분은 작물의 수분흡수 과정에서 역삼투압 현상을 유발시켜 탈수현상을 초래하여 발아와 생장을 저해한다.

5) 옛 농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염성 재배법은 주로 벼에 국한하여 바다에 인접한 농경지의 작답(作畓) 및 물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바닷가 땅의 조수(潮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로를 곡선지게 내고 말뚝을 세워 유속(流速)을 늦추며 처음에는 피나 수수를 심다가 제염에 따라 벼를 심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함초(鹹草)를 심어 진흙을 붙여 모으며 논피를 심어 제염을 유도하는 과정의 설명이 부연되었다. .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물에 심는 피[稗]⁶⁾를 심고 소금 기운이 다 빠지면 벼를 심어 벼 곡식을 생산하고(『과농소초』), 식물에 대한 염분의 영향 특성을 들어서 벼보다는 골풀·갈대·줄풀·부들·삼릉초가 내성이며 우선적으로 질 낮은 품종을 심는 것이 좋다(『농정신편』)고 하였다. 즉 벼가 생육할 수 있는 용액의 농도는 함염률 0.3% 이하인데, 간척지는 그 9배에 상당하는 2.7%의 염화물을 함유하는 바닷물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작물 생육에 알맞게 되기까지 제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적고 있다.

예컨대 농지로서 사용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동원된 방법으로는 간척지 토양을 숙답화(熟沓化)하는 데 있어 담수법과 경운법⁷⁾ 등이 활용되었다. 이 경운 과정에서 객토에 영농 부산물을 섞어 함께 갈아줌으로써 염해 제거와 동시에 땅심을 높이는 효과를 보았다. 주민들이 꼽은 대표적인 영농 부산물이 보릿대와 콩(팥)대, 콩(팥)깍지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잘피’(seagrass)이다. 잘피는 ‘거머리말’, 흔히 ‘바다 잔디’라고도 하는데 주민들은 ‘진질’, ‘진지리’ 혹은 ‘멸줄’이라고도 한다. 해안가에 흔했던 이 잘피 역시 땅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잘피는 바다를 비옥하게 하기도 하지만 땅을 거름지게 하기도 했다. 비료가 나오기 전, 잘피는 훌륭한 거름으로 쓰였다.

이러한 방법은 일종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이 발휘되면서 간척지의 염해 피해를 다소 낮추고 땅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요령의 간척사업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으나 자연 친화적으로 서서히 관리하여 소출을 얻는 농토목사업이며 영농사업이라 할 수 있다. 밭 주위에 갈대밭을 조성하여 간척 이후의 밀물과 해풍의 피해를 막는 것도 현명한 이용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장기간의 전통에서 도출된 기술적 개념, 특수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관행으로 그 집단의 역사적 경험과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유지된 것이다.

6) 피(稗)는 환경적응성이 매우 뛰어나 척박한 토지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지만, 맛과 흡수율은 벼보다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잡초로 여겨지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널리 재배했지만,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를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보조하면서 식용작물로서의 피 재배는 한국 내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생육기간이 빠르며 영양분이 풍부하여 조선시대에 한때 기장, 보리, 쌀, 콩과 함께 오곡 중에 하나였다(현재는 피가 제외되고 조가 들어감).

7) 담수법에 의한 제염은 경지에 물을 담아 토양 염류를 용해시키고 담수를 배제함으로써 제염하는 법으로 담수 기간의 장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운법은 경지를 갈아 토양이 물과 접하는 면적을 확대하고 염류의 용출을 쉽게 하는 법으로 경운에는 우경 또는 트랙터를 동력으로 하는 원반쟁기를 사용하였다.

Ⅲ. 해수농업, 전통적 기술의 현대적 적용

서해안에 인접한 전라남도 무안군의 대표적인 간척지는 망운의 창포, 해제의 산길, 운남의 구일, 청계의 복길 간척지가 있다. 이중 가장 큰 면적의 간척지는 창포간척지로 방조제 길이가 1,270m로 해제 산길간척지(방조제길이 1,518m, 면적 1,355ha)보다 짧지만 간척면적은 1,544ha로 더 넓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간척농지를 활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염해(salt damage) 피해를 줄이고, 수확량을 높이는 방안을 오랫동안 강구해왔다. 그러나 반대로 해수를 활용한 농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해수가 많이 함유된 간척지나 해풍의 영향을 받은 농경지에서는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농산물 품질의 우수성이 국내·외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⁸⁾ 천일염을 포함한 바닷물에는 식물 생육에 필요한 다양한 각종 무기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작물생육 촉진 및 당도, 색도 등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⁹⁾

소금기가 많이 들어간 간척지 토양은 짠데 비해 좋은 토양은 단맛이 나는데 이는 염류가 알맞게 고루 함유된데 기인한다. 무엇보다 오랜 경험에 의해 해충들이 미네랄 성분을 싫어하고, 미네랄이 부족한 땅에 해충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고구마 농사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전남 무안군 현경면). 화학비료와 농약을 쳐서 수확하는 기존 관행농법을 탈피하고 천일염, 바닷물을 활용한 해수농법(Saltwater Farming)을 통해 당도가 30브릭스 넘는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해수농법이 나 천일염 활용 사례는 바닷물을 끓여 들여 농작물에 뿌리거나 밭갈이에 천일염을 섞어 갈아주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농작물에는 활용할 수는 없고 바닷물과 궁합이 잘 맞는 농작물에 적용 가능하다.¹⁰⁾ 고구마 농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굽벙이에 의한 피해였는데, 바닷물 속의 마그네슘과 염분이 굽벙이를 퇴치하고 당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덩굴쪼김병·선충피해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고구마를 정식하기 전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천일염과 짙겨거름, 유기질 거름, 퇴비를 섞어 밭에 뿌리고 흙을 갈아엎는 작업을 한다.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고구마를 정식하고, 7월부터 10월 초 사이에는 고구마 생육단계에 맞춰 바닷물을 민물과 희석하여 10일 간격으로 살포한다고 한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염분 피해를 입는 농지

8)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배에서 바닷물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된 건 그리 오래지 않다. 농촌진흥청에서 원예작물의 바닷물 안전사용기준을 처음 마련하여 배포한 건 2010년이며, 2011년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9) 바닷물을 작물 재배에 이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토양의 염류집적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강우 등에 의해 바닷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사실 염류집적에 따른 피해는 노지재배보다는 하우스 등 시설재배지에서 반복되는 과도한 시비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대표적으로 염분 저항성이 높은 작물은 고구마, 마늘, 양파, 감자, 보리, 밀 등이다.

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서도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해수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염소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일뿐만 아니라, 식물 성장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바닷물의 풍부한 영양소는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며, 농작물의 품질 향상과 병충해 방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해수와 천일염 이용 방식은 옛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증보산림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농토가 염농도가 낮은 토양이므로 오히려 식물에 대한 소금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고 “보리종자 한 말과 소금 한 되를 섞어 심으면 인분과 재보다 낫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사신서』에 “씨를 씻어낸 소금물을 심은 자리에 부어 준다”고 한 것 역시 오래전부터 소금을 농작물에 활용했음을 말해준다.¹¹⁾

IV. 나가며

농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학이다. 이러한 전통농업은 현대농업이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인류가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담수는 지구상의 전체 물량의 1%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전체 수자원 중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해수를 이용하면 물 부족 문제에 대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이면서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토착지식의 놀라운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수농법의 경험과 사례들을 수집하여 자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농업과학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 매뉴얼, 2011
국립농업과학원, 바닷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2012

11) 『일본 농업전서』에 의하면 바다에 둘러싸여진 일본에서는 에도(江戸) 시대부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바닷물이나 해초가 농업에 이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조의 바닷물을 채취하여 이것을 온천수와 섞은 후 밀거름에 섞어서 사용하면 보리의 잔뿌리가 많이 발생한다(百姓記16권, 시즈오카(靜岡), 아이치(愛知)).

해안지역 토지이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전남 무안군을 사례로

김재은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1. 들어가기

무안군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3개읍, 6개면, 416개행정리(103법정리)로 구성되었다. 2021년 12월 현재 무안군 전체 면적은 450.37km²로 무안읍 35.65km(7.92%), 일로읍 67.05km(14.89%), 삼향읍 45.16km(10.03%), 몽탄면 63.04km(14%), 청계면 65.52km(14.55%), 현경면 55.38km(12.3%), 망운면 19.12km(4.25%), 해제면 64.4km(14.32%), 운남면 34.97km(7.76%)를 차지한다¹⁾.

무안의 해제면, 현경면, 망운면, 운남면, 청계면의 해안은 대부분이 갯벌로 이루어져 있고 몽탄면과 일로읍 외곽은 영산강 줄기가 흐르고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서쪽은 해안을 통해 바다로 통해 있고, 동쪽은 영산강을 통해 나주와 광주까지 내륙과 연결되어 있다.

무안군은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산도 약 300m 정도로 높지 않은 산이 주를 이룬다. 전남의 면적이 작은 목포시를 제외하면 산림면적이 가장 낮은 편이다(통계청 KOSIS). 토지이용에 따른 지표면 온도차이는 여러 연구에 의해서 이미 많이 알려졌다(김재익·여창환 2005, 송봉근·박경훈 2019). 도시의 상업지역이나 아스팔트 공장지역의 지표온도가 다른 토지이용 형태 보다 지표온도 상승에 더 영향을 미친다. 송봉근·박경훈(2019)의 연구에 따르면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은 면적이 넓을수록 표면온도와 기온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1) 『2021년 무안군 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지적면적을 기본으로 작성된 통계연보자료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와는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통계연보자료를 과거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직선을 기반으로 한 자료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적면적을 바로 잡기위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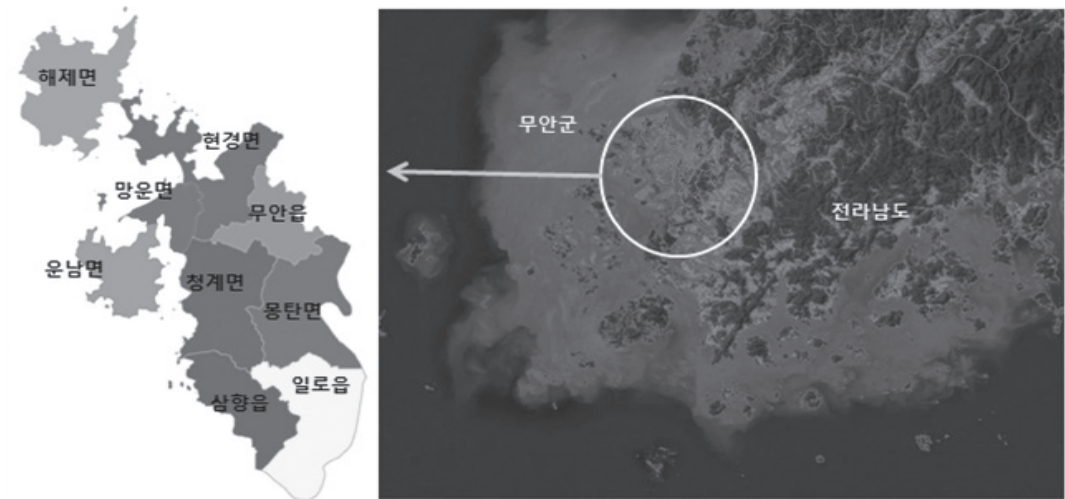


그림 1. 무안군의 위치와 무안군내 읍면별 위치

무안군은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여름에는 전반적으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며, 겨울에는 온대동계건조기후대에 속한다²⁾.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하면 서해안형에 해당되고 편서풍지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기상현상의 발생과 이동의 전초기지로서 중요성과 역할이 매우 크다(기상청 2015). 무안군은 기상청에서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여 무안군 내에서 바다와 접해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고, 이 지역의 토지 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무안군 토지이용

무안군의 토지이용(피복)도³⁾는 2021년 항공영상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에 환경부에서 제작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무안군의 논과 밭에 과수원과 기타 및 시설재배지를 포함한 면적이 각 읍·면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안군의 주요한 토지이용은 농경지로 나타났다.

2) 기상청의 기상청날씨누리(<https://devweather.kma.go.kr/>)에서 제공하는 1981~2010년의 30년간 기상청의 기후자료를 참고하였고, 측정지점이 무안과 가장 가까운 목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토지피복(이용)도는 2021년의 인공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2년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를 통해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김재은(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교수가 편집하여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무안군은 대부분 지역에서 논과 밭이 주요 토지이용으로 운남면이 가장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현경면과 해제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남면, 현경면, 해제면은 주요 산업이 농업으로 이루어져 짐작할 수 있다. 이 세지역은 논보다 밭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벼농사보다는 다른 밭작물을 기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안군은 대부분 지역이 밭과 논 면적 비율이 비슷하거나 밭의 면적 비율이 더 높지만, 일로읍은 밭면적 비율보다 논 면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보다는 주로 논농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탄면은 침엽수, 혼효림, 활엽수와 같은 산림이 무안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몽탄면은 산지가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안군 전체에서 삼향읍이 가장 교통시설과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현재 무안군의 인구와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삼향읍이다.



그림 2. 무안군 토지이용도

3. 기후변화⁴⁾

기상청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무안군내 각 지역의 기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운남면 14.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몽탄면, 무안읍으로 13.6℃으로 차이는 0.7℃이다. 무안군의 열대야일수와 폭염일수는 각각 9.6일, 9.5일로 나타나 전라남도 평균인 4.9일, 8.5일과 비교해서 열대야일수와 폭염일수가 모두 많은 편이다. 열대야일수는 운남면이 14.2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몽탄면이 6.4일로 가장 적게 발생한다. 폭염일수는 무안읍이 10.9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삼향읍에서 7.8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무안군은 연평균 일최저기온이 전라남도보다 높아서 서리일수가 71일로 전라남도 평균보다 16.9일이 적다. 무안군의 연평균 일최고기온도 전라남도보다 높아서 결빙일수는 3일로 전라남도 평균 2.6일보다 적다. 여름일수는 118.3일로 전라남도 평균보다 4.8일이 많고 식물성장가능기간은 295.3일로 9일 길게 나타났다. 서리일수는 운남면에서 56.8일로, 결빙일수는 망운면, 일로읍에서 2.5일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식물성장가능기간은 해제면에서 300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여름일수는 일로읍에서 122.9일로 가장 많고, 해제면에서 114.1일로 가장 적으며 그 차이가 8.8일로 나타났다.

4. 결론

무안군은 해안과 접해진 지역과 접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바다와 접해있는 운남면이 산림면적 비율은 10%이하로 가장 작고, 농경지 면적 비율은 90%정도 가장 높으며, 열대야일수는 가장 많고, 연평균 기온도 가장 높다. 그러나 산림면적이 가장 넓고 바다와 접하지 않은 몽탄은 평균온도는 가장 낮고, 열대야일수는 가장 적다. 따라서 해수면 온도 상승과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해안에 위치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비교해서 해양성기후의 영향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와 같이 바다가 깊지 않은 곳의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해안가의 영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4) 기상청에서 『전남 무안군 기후변화 상세분석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였다.

 참고문헌

김재익·여창환, 「도시지역 지표온도와 토지이용 및 식생상태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의 경우」, 『한국지리정보학회지』 8(2), 2005, pp. 21-30.

송봉근·박경훈, 「토지피복유형 특성과 도시 온도의 관계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2(2), 2019, pp.65-81.

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 『전라남도 무안군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Global Atmosphere Watch : <http://www.climate.go.kr>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섬 음식,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생물문화 전통과 생태지식¹⁾

홍 선 기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교양학부

1. 서론

전 세계는 지금 여러 가지 이상 현상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교란시키고 있다. 종(種)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고, 새로운 생물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한곳에 정착해 살아오던 사람들도 생태계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다. 음식은 자연 유기체 혹은 이 자원의 개량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낸다. 음식은 수확, 저장, 가공, 조리, 조미, 섭취 방식 등 다양한 하위문화의 중심에 있다. 특히 가축이나 어류를 기르는 경우에는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식은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교차하는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의 최종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생물문화다양성 개념은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라는 두 패러다임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음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설명하자면, 인간이 창조해낸 문화는 자연과 생물 자원의 다양성과 복잡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같은 섬 안에서도 해수 온도에 따라 생선이나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것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생활방식, 즉 문화도 달라진다. 이러한 자원의 종류와 활용 방식에 따라 각 섬은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니며, 이는 모든 섬에 해당된다. 생물문화다양성 개념을 초기부터 주창한 테라링구아(TerraLingua)의 루이자 마피 박사는, 생태계 내 다양한 유기체 간의 먹이사슬이 존재하듯이 인간 사회도 자연과 연결된 “생명의 그물(web of life)” 속에 존재하며, 수많은 생명체들이 인간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생명의 그물이 생물

1)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1109908).

다양성, 문화다양성, 언어다양성이라는 세 측면을 통해 표현되며, 이 세 가지가 사회생태적 적응 시스템(socio-ecological adaptation system) 안에서 하나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 세 가지 다양성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지식과 실천이 존재한다. 음식은 다양한 자연 재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지식과 실천의 결과물이다. 생물 재료의 서식지에서 출발한 음식은, 조리과 섭취 과정에서 생성되는 표현을 통해 언어로 전승되고,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다. 특히 고립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섬 지역의 음식은 전통 생태지식에 의해 고유의 구성, 식사 방식, 맛을 오랜 세월 간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외부 음식들이 섬에 유입되고, 이것이 적응되고 확산되면서 섬 음식의 고유성은 점점 희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역 해산물을 조리하는 전통 방식들은 생물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또한,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섬마다 조리 방식과 맛이 달라, 음식은 섬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2. 섬 요리: 생물문화다양성의 교차점

물고기는 전 세계 모든 섬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이다. 열대 지역의 섬에 가까울수록 식탁 위에 더 화려하고 낮은 물고기들이 등장하며, 북극에 가까운 추운 지역일수록 흰 살 생선이 많아진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생선을 날것으로 섭취하지 않으며, 연어회를 제외하면 회를 먹는 문화는 드물다. 회로 생선을 먹는 방식은 별도의 반찬이나 양념이 필요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고 원초적인 섭취 방식으로, 바이러스나 독성 미생물로부터 피하기 위한 고대의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생소고기, 생닭고기, 생돼지고기를 섭취하기도 한다. 일본 규슈 지역에는 생닭(가슴살 또는 모래주머니)을 회로 먹는 문화가 있으며, 이는 한국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Svalbard)에서는 생사슴고기, 생고래고기, 생물개고기를 먹는다. 스발바르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의 식문화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향신료이다. 한국에는 고추, 후추 등 다양한 향신료가 있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다. 향신료의 발견과 유통은 인류 역사에서 혁명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전 세계의 담백했던 요리를 더욱 흥미롭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한국 섬 지역의 기본 상차림은 계절성과 기후를 반영한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잡히는 생선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는 어획 시기와 거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섬은 툇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가 풍부하고, 또 어떤 섬은 홍합이나 따개비 같은 조개류가 풍부하다. 이로 인해 식탁에 올라오는 국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바뀐다. 섬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식사에는 섬의 자연, 문화, 지식, 실천, 언어가 오롯이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섬의 식사 시간은 이러한 모든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한국 섬은 반농반어(半農半漁) 형태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육지에서는 벼농사와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바다에서는 어업(조업과 양식), 해조류 채취, 그리고 갯벌에서의 소금 생산이 병행된다. 전라남도의 다도해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네 가지 1차 산업이 하나의 섬 안에서 계절, 지역, 지리적 조건에 따라 유지되는 곳이다. 천일염 염전은 이미 제6차 산업의 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진화하였다. 한국의 갯벌 염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인프라, 일상생활 등이 선진국형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인천 주안과 소래 일대처럼 대부분의 소금밭은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자국산 소금, 인근 섬에서 온 소금, 수입산 소금이 함께 진열된 매대는 다양한 소금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한국의 소금이 ‘건강한 소금’, ‘맛있는 소금’, ‘유기농 소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급 소금’이라는 개념을 미래 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Hong, 2015). 다양한 종류의 소금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소금과 식품용 소금의 생산은 애초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가공 단계에서는 다양한 용도에 맞춘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요리사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전통 소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요리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화학 소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일부 천일염조차 “자연 해수 소금”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 신안 다도해의 천일염 생산 방식과 미네랄 함량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한국의 소금 생산을 세계적 차원에서 조망한다면, 이는 쿠로시오 해류 문화권(Kuroshio Current Cultural Zone) 내에서 발전된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해류 문화권은 육지의 중국 및 동남아 문화와, 바다의 필리핀·일본·류큐(오키나와) 등의 해양문화가 만나는 지점이다.

한국의 소금 생산법은 이 문화권을 따라 전승되어 내려왔으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소금길(salt road)’을 하나의 해양 섬 문화의 핵심 경로로 이해해야 하며, 그 길 위에서 생성된 생물문화적 요소들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소금과 차의 문화는 오래전부터 교류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소금 생산 방식은 자연스럽게 류큐, 베트남,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하이난섬 등으로 전파되었다. 오키나와는 고대로부터 중국·일본·한국 간 국제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쿠로시오 해류와 계절풍을 따라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 접점이었다.

3. 브릿지 푸드: 섬, 바다, 내륙을 잇는 음식

바다, 섬, 육지가 만났을 때 어떤 음식이 탄생할까? 대부분의 경우, 항구 도시는 생선과 갑각류 같은 해산물 요리를 대표 음식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넓은 대양보다는 섬이 많은 항구 도시에서는 섬 주민들과의 잦은 교류로 인해 더 다양하고 퓨전적인 음식이 등장한다. 섬의 크기나 생태적 특성

에 따라 가축 사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일상 식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 마을 잔치나 의례)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가축을 도축하고 고기를 나누어 먹기도 한다. 논농사가 가능한 섬에서는 소가 노동력으로 더 중요했기 때문에 식재료보다는 농경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섬 지역 관광이 성장하고, 내륙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섬 인근 항구 도시의 음식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 섬, 육지의 음식이 서로 교류하면서 퓨전화된 요리가 등장하는 사례는 많다.

1) 세계의 브릿지 푸드 예시

지중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은 스페인의 파에야(Paella)이다. 파에야는 해산물, 육류, 쌀이 결합된 스페인 요리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안 도시에서는 어패류(생선, 조개, 새우), 내륙에서는 닭고기, 토끼고기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진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라카 해협 지역에서 유래한 락사(Laksa)라는 요리가 유명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사랑받는 이 국수 요리는 지역마다 조리법과 재료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코코넛 밀크, 향신료, 해산물 또는 닭고기, 쌀국수를 기본으로 한다. 고추, 강황, 갈랑가, 라임잎, 레몬그라스 등 동남아시아 특유의 향신료로 맛을 낸다. 락사는 말레이, 중국, 인도 문화가 섞인 혼합적 정체성을 반영한 음식이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오랫동안 생선 요리가 발달해왔다. 사시미(생선회)와 스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신선한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는 사시미와, 내륙에서 재배한 쌀을 사용한 스시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브릿지 푸드’의 상징이다.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오키나와 소바가 있다. 오키나와 소바는 일본 본토의 메밀국수와 달리 밀가루 면을 사용하며, 오키나와가 과거 류큐 왕국이었음을 보여주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돼지고기는 류큐 왕국 시대부터 중요한 식재료였으며, 돼지의 모든 부위를 요리에 사용하는 오키나와의 음식문화는 일본 본토와 구분되는 특색이다.

2) 한국의 브릿지 푸드: 홍어삼합과 소고기 낙지 탕탕이

그렇다면 한국의 바다·섬·육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 나는 전라남도의 전통 음식인 “홍어삼합”을 대표적인 예로 제안하고 싶다. 홍어삼합은 홍어(바다) + 돼지고기(육지) + 묵은 김치(채소)가 어우러진 음식으로, 발효의 풍미가 강조되는 지역 전통 요리이다. 발효 홍어의 강한 향, 수육의 부드러움, 묵은지의 시큼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잔치나 특별한 날에 자주 먹는 음식이다. 이 음식의 문화적 의미는 단순한 재료의 조합을 넘어, 발효 과정 자체에 있다. 천일염과 해산물이 만나면서 발효 음식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는 전남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을 보여주는 상

징이 되었다. 또 다른 브릿지 푸드는 “소고기 낙지 탕탕이”이다. 이는 한국의 육지(소고기)와 갯벌(낙지)의 자원을 활용한 전형적인 융합 요리이다. 소고기와 낙지의 조합은 한국 특유의 조리 철학인 ‘신선함과 영양 증시’를 반영한다. 낙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스테미나 식품으로 여겨졌고, 소고기와 조합은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형태로 발전했다. 물론 생소고기(육회)를 먹는 문화는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타르타르(Tartare)는 한국의 육회와 유사하며, 계란 노른자와 생소고기를 곱게 다져 내는 방식이다. 이탈리아의 카르파초(Carpaccio)는 생고기나 생선을 얇게 저며 올리브유와 향신료로 먹는 음식으로, 이는 한국 생고기(생육회)와 유사하다. “소고기 낙지 탕탕이”는 갯벌의 상징인 낙지와 내륙의 상징인 소고기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브릿지 푸드이다. 목포는 항구 도시로서 독특한 음식이 많지만, 이 음식은 해산물 풍미에 지친 섬 주민들에게 육지의 신선함과 영양을 공급하는 ‘균형의 음식’으로 기능한다.

4. 결론

한국의 섬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전통이 교차하는 생물문화다양성의 생생한 표현이다. 이들 음식이 지닌 독특한 맛과 조리 방식은 사람과 환경 간의 깊은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된다.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이러한 음식 전통을 보존하는 일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가운데, ‘섬 음식의 정체성과 진정성(authenticity)’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생태 지식을 보호하고, 관광과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도 조화롭게 적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음식들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남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섬 음식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 입의 음식 속에는 단순한 재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 환경,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다. 한국 섬 음식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널리 알리는 일은, 몸과 마음을 모두 살찌우는 유산을 지키는 일이자, 과거와 미래를 음식으로 잇는 깊이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다.

한국은 3,4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반도 국가이다. 그중 전라남도도 많은 섬을 품고 있으며, 목포는 바다와 섬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다. 이 지역은 깨끗한 바다, 섬, 갯벌 등의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소금 생산이 이어졌으며, 다양한 해산물이 음식 재료로 활용되어 왔다. 목포가 주요 항구 도시로 성장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고, 섬의 전통 요리와 내륙 음식이 융합되었다. 해산물에 익숙한 섬 주민들이 육류 요리를 갈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섬과 육지를 아우르는 ‘브릿지 푸드’가 탄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지와 소고기를 함께 무쳐 만든 육회(탕탕이)이며, 또 다른 퓨전 요리인 홍어삼합은 바다의 홍어와 내륙의 돼지고기를

하나의 접시에 올려놓는다. 섬 요리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경험한 결과, 나는 앞으로 섬 요리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변화를 전망하게 되었다. 여러 대내외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음식을 통한 섬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섬 음식의 순수성, 고유성, 정체성의 훼손이다. 이는 음식의 도시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식재료는 여전히 섬에서 나오지만, 맛을 결정하는 양념, 소스, 조미료가 관광객과 도시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면서 고유성이 약해지고 있다. 둘째는 식재료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음식 재료로 쓰이지 않던 다양한 해조류, 저서생물, 어류들이 새로운 조리법으로 음식화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존 섬 요리에 사용되던 전통 어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 어종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후변화는 섬의 생태·문화·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섬 지역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섬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섬 음식의 식재료, 즉 생물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고 활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1분과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특별분과]

공동체기록물로 본 한국 연안 마을공동체의 20세기 생활사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동해안 한 마을의
조직과 재정운영

이용훈

한국학중앙연구원

식민지기 마을 임야의 공동묘지로의 변화
: 울진 구산리의 사례

이옥부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동해안 어촌마을의 오래된 제정일치 사회 구축과
어른 대접
-울진 구산리를 중심으로-

송기태

국립목포대학교

1960~70년대 개발 주체로서 동중(洞中)

이민재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살펴본 구산해수욕장의
장소성 변천과 의미 형성에 관한 연구

채지선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동해안 한 마을의 조직과 재정운영

이 용 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분량 관계로 생략)

2. 구산리 마을의 변천: 마을이 기억하고자 한 것

한국 마을의 약한 공동체성을 언급할 때, 그 비교사적 근거로 여겨지는 것은 마을 내에 다양한 신분이 混居했다는 점이다. 중세 유럽, 에도 일본의 마을은 신분적·직업적으로 등질·균질한 사람들로 이뤄졌다. 이와 달리 조선후기 마을은 유력 사족에서 양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적·계층적으로 상이한 이들이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적 결집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동아시아 내에서도, 지배계층끼리 도시를 형성해 거주했던 중국, 일본과 달리 조선의 사족들은 신분간 혼거를 추구하였다.¹⁾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사상적·문화적 분석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유력 사족이 부재한 민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점이다.

구산리 자료 중에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일을 맡았던 職任 명단이 대략적으로 남아있다. 마을의 유력 사족, 심지어 유력 성관도 부재했던 잡성촌 구산리는 어떤 이들이 주도하였는지, 이를 통해 신분적·계층적으로 등질한 마을 내부의 양상은 어떠하였는지 그 특질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 구산리는 울릉도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되는 搜討使의 거점이었다. 수토사 일행은 구

1) 미야지마 히로시, 2013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산리에 머물며 순풍을 기다려 올릉도로 향하였는데, 이들이 유숙하던 공간이 待風軒이다. 이 대풍 현에는 2점의 고문서와 21점의 현판·기문 등이 남아있다.²⁾ 즉 이 기록들은 19세기 이래 구산리 주민들이 기억하고 기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한다.

우선 2건의 고문서는 각각 <完文>(1811년)과 <搜討節目>(1823년)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구산리를 비롯한 연해 9개 동은 올릉도 수토시 三陟營將과 越松萬戶의 행차 비용과 수토 봉행 절차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점차 구산리에 비용 부담이 집중되어가는 상황에서, 구산리민들은 관에 소지를 올렸다. 그 결과 관에서 9동에 120냥을 나눠주어 식리를 통해 수토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완문의 내용이다. 한편 수토절목은 供饋變通이라는 제목 아래, 수토 비용 충당을 위해 구산리 앞 포구에 드나드는 선척들로부터 稅를 받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19세기 구산리 주민들은 관으로부터 부과되는 役인 수토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심력을 쏟았고, 이에 대해 관에서 내려준 처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대풍현에 걸려있는 19세기 현판·기문들은 모두 이 같은 應役의 문제와 관련한 서사를 담고 있다. 현전하는 1851년 邱山同舍 上梁文, 同舍重修記로부터 1888년 邱山同舍記까지 10개 현판을 보면 수토 충당 비용을 내려 준 평해군수, 수토관 越松萬戶, 營吏 등의 이름을 기리고 있다. 현판의 성격이 달라지는건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부터이다. 1894년 12월, 慶尙道慰撫使 이중하의 별단에 따라 올릉도 수토가 영구 혁파되었기 때문이다.³⁾ 이제 주민들은 구산리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대풍현에는 1904년 동계완문, 1906년 동사중수기 이후로 한동안 새로운 현판이 걸리지 않다가 1938년의 동사중수기, 1959년 성황당중수기가 새로 걸렸다. 그런데 1904년 동계완문과 1906년 동사중수기에는 이제 더 이상 올릉도 수토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1904년 구산리 주민 중 동원 20명은 동계를 창설하였고, 관에서는 공납에 대해 힘을 모아 동규를 준행할 것으로 제사를 내렸다. 그런데 동계를 창설한 이들은 그 목적으로 수토, 공납과 같은 응역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들은 흥년으로 쇠잔한 주민들을 위해 洞員 상호간의 情誼를 돈독히 하고, 상호구제를 도모하고자 동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1906년에는 1891년 수해, 1903년 흥년시 재물을 출연해 마을을 회생시킨 손상섭, 손쾌운 두 사람을 기리며, 재물을 모아 동사를 중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대풍현 현판의 좌표는 마을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 외부 권력을 기리던 것에서, 내부 주민을 기

2) 이원택·정명수, 2018 <울진 대풍현 소장 「완문」과「수토절목」의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6; 이원택·정명수, 2019 <울진 대풍현 현판 영세불망지판류(永世不忘之板類) 자료의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8.

3) 《高宗實錄》 1894.12.27; 1895.1.29.

역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동사 대풍헌은 수토사들이 유숙하는 곳이 아니라, 남북으로 오가는 여객들을 대접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⁴⁾ 즉 1890년대를 지나, 20세기에 접어든 구산리 주민들은 이전과는 다소 다른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3. 마을 조직의 특징

1) 마을 조직의 위계성

19~20세기에 걸친 구산리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마을 내부 조직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대풍헌 현판에는 해당 시점 마을의 직임을 맡은 이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동계 설립 이후인 1907년 구산동 동안성책, 1925년 구산리 동안성책중창을 통해 20세기 마을 직임들의 명단 역시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산리 내부로 들어가, 주민들이 결속하던 양상과 특징을 가늠하고자 한다.

〈표1〉 19세기 후반 구산리 직임과 名數

1851년		1870년		1871년		1872년		1878년		1888년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시즌위	1	전존위	6	전존위	5	노반	5	전존위	6	증경존위	5
동장	1	시즌위	1	시즌위	1	전동수	13	전동수	7	증경동장	5
공원	1	동수	1	동수	1	시즌위	1	시즌위	1	시임존위	1
유사	1	유사	1	유사	2	동수	1	시동수	1	동장	1
증경존위	3			도장무	1	유사	1	전유사	9	유사	1
동장	8			별장무	1	도장무	1	관동장	1	도장무	2
동원	9			전동수	15			리정	3	관동장	1
별유사	1							장무	1	리정	1
도장무	1							유사	1	감고	1
별장무	1							공원	1		
구재인	2										
관동장	1										
리정	1										
감고	1										

4) “南北通衢, 逆旅之頻仍, 前後處事, 公需之多煩, 則其在洞樣接待之方, 有所難便”

대풍헌 현판은 마을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 현판에 걸려있는 직임 명단 역시 나름의 원칙대로 기재했을 것이다. 위 표는 현판 중 19세기 중후반 마을 직임과 해당 인원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마을 직임은 크게 3가지 층위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尊位 집단이다. 각 년도별로 현직 존위인 時尊位 1인과 복수의 前尊位가 확인된다. 이 전존위 집단은 증경존위 혹은 老班으로 기재되기도 하였으며, 1870년 이후로는 직임 명단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즉 이들은 마을 사무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최상위 집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존위 집단은 시기별로 4~7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로는 洞首(=洞長) 집단이다. 동수 역시 현직 시동수 1명과 전동수(증경동장)가 6~15명 존재했다. 세 번째는 有司 집단이다. 유사는 시기별로 1~2명 존재했으며, 前有司는 1878년 9명이 현판에 이름을 올렸다. 즉 존위나 동수만큼의 집단군을 이루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2〉 20세기 초반 구산리 직임과 名數

1906년		1907년		1911년		1915년		1925년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직임	名數
좌상	1	尊位	38	노반	17	座遞洞首	27	行任尊位	12
전존위	6	行任洞首	25					行任洞首	10
성공존위	1	坐遞洞首	24					坐遞洞首	12
시존위	1	有司	24					有司	7
시동수	1								
시유사	1								
전동수	16								
성공20동원	19								
별장무	1								

위 표는 1904년 동계 결성 이후 구산리 마을 직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9세기와 연속적인 면은 여전히 존위·동수·유사 3직임의 집단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전과 다른 변화로는 첫째, 시존위와 전존위 외에 성공존위, 좌상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1906년 동사중수기 존위집단 기재순은 좌상-전존위-성공존위-시존위이다. 즉 존위집단 내부에서도 나름의 구분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두 번째 변화와도 관련된다.

5) 1898년 동사와 성황당 중수를 위한 募緣文, 《鳩財成冊》 말미에는 老班會中の 手決이 확인된다. 이 노반회중이 전존위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마을의 중대사에 있어서 이들의 추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1907년과 1925년 洞案이 작성된 것이다.⁶⁾ 조선후기 동안은 동계·동약에 참여하는 양반 사족들의 명단으로, 사족지배체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양반이 없는 구산리에서 20세기가 되어, 구래 양반주도 질서를 상징하는 동안을 작성·중수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1907년 동안을 보면 尊位座目 38인, 洞首案 行任 25인, 坐遞洞首 24인, 有司左目 24인이 확인된다. 이 명단은 사망자와 새로 입록된 자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인명 수가 늘어나자 1925년 기준 새로 중수하였다.

1907년과 1925년 동안 좌목 말미에는 賻儀條目이 실려있다. 조선후기 양반들이 주도한 동안·항안의 절목에는 유교적 생활규범과 처벌조항이 실려있다. 20세기 구산리 동안은 그보다는 각 직임별 부의물목과 부조량을 차등·규정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1907년 부의조목에서 확인되는 사망시 부조량은 “行任尊位>座差尊位=行任洞首>座差洞首=行任有司”순으로 확인된다. 즉 같은 존위와 동수집단 내에서도 행임존위, 좌차존위, 행임동수, 좌차동수 등으로 위계가 세분화된 것이다.

한편 1925년 부의절목의 부조량은 “老班>座遞尊位=行公洞首>座差洞首=有司”순으로 규정되었다. 1907년 좌차존위와 구분되었던 행임존위가 1925년에는 노반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것이다. 노반이라는 명칭은 앞서 언급했듯 1872년 현판과 1898년 鳩財成冊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1872년의 노반 5명은 1871년 현판에서 시존위와 전존위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 5명 중 2명은 1878년 시존위와 전존위에 해당한다. 즉 앞뒤 시기 직임명을 고려할 때, 노반은 현직 존위와 전직 존위를 아우르는 존위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20세기 들어서는 이 존위집단 내부에 또 한단계 위계가 생기며, 그 중 최상위 집단이 노반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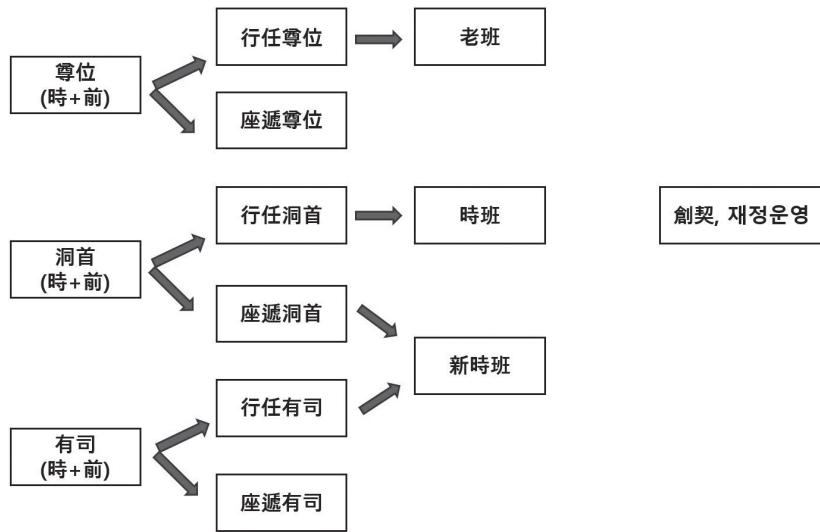
존위 중의 존위를 자처하는 노반집단은 기금을 통해 재정을 운용하는 노반계로 진화하였고, 1911년 노반계안을 따로 성책하였다.⁷⁾ 동시에 노반계는 재정운영 내역을 회계하여 1911~1936년에 걸친 회계장부를 남기며 체제를 갖추나갔다. 이러한 양상은 존위집단 하위에 있는 동수집단에서도 나타났다. 바로 時班과 新時班이라는 조직의 등장이 그것이다.

시반들이 창설한 시반계는 1913~1936년에 이르는 회계장부를 남겼고, 신시반 역시 1915년 계를 창설해 1925년까지의 재정운영 기록을 남겼다.⁸⁾ 시반과 신시반에는 어떤 이들이 속하였을까. 시반계 회계장부에서 확인되는 有司들을 추적해보면, 시반계는 행임동수들의 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3~1914년 시반계 유사였던 한성주, 손세운, 김창학, 안천석은 중 3명은 1907년 동안에서 행임동수로 확인된다. 유일하게 한성주는 좌체동수였으나 이후 행임동수로 올라가 시반계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1915년 창설된 신시반계는 행임동수보다 낮은 좌체동수와 행임유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계 창설성책에는 좌체동수와 유사에게 지급할 부의조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6) 《丁未正月 近北面 邱山洞案成冊》; 《乙丑 十二月十五日 邱山里洞案成冊重勘》

7) 《辛亥 九月 洞老班契案冊》

8) 《癸丑 十月 時班契錢分授成冊》; 《乙卯 十月 契創設成冊》; 《乙卯 十月 新時班冊 稷創設成冊》



〈그림1〉 구산리 직임 집단 위계의 세분화

이처럼 구산리 직임 집단은 1910년대 이후로 존위와 동수 집단 내부에서 다시 위계를 생성하며 분화하였고, 각 위계에 속하는 이들은 기금을 조성하고 계를 창설하여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할 정도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즉 위계의 세분화를 통해 각 위계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켜간 것이다.

이러한 사다리 체제는 마을 직임을 맡았던 이들에게, 더 높은 곳에 닿기 위한 경쟁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에서 행임존위-노반까지 오르는 길은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1907년 동안 좌목을 보면 해당 직임에서 승진한 인명에, “陞於洞首”, “陞於老班”과 같은 내용이 추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유사를 맡았던 24명 중 좌체동수에 오른 사람은 11명이고, 이중 10명은 행임동수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 5명은 존위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조선후기 구산리는 신분적으로 등질한 이들로 구성된 민촌이었다.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며 마을 일을 맡아하는 직임은 보다 세분화된 위계질서를 만들어갔고, 정치적 위계는 점차 시스템적으로 자리잡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상위 집단으로 올라가기 위한 경쟁은 이전보다 치열해졌을 것이다.

2) 마을 직임의 개방성

구산리 직임 명단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정한 연속과 단절이 확인된다. 현판을 보면 1851~1878년간 직임 명단은 연속성이 보인다. 1878년 직임 31명 중 8명은 그 앞 시기 직임 명단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1851년 유사, 장무를 맡은 3명은 1878년 전존위 명단에 올랐으며,

직임 없이 이름만 올린 2명은 각각 전존위, 전동수로 승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10년 후인 1888년 직임 18명은 이전 직임 명단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878년 직임 31명이 10년 만에 전원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88년의 직임들은 그 이후의 현판과 동안 좌목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898년 동사와 성황당 증수를 위해 작성된 구재성책에는 동임과 시임존위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1888년 유사, 동수, 존위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1888년 직임들은 1904년 동계를 설립한 20인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시기 구산리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단기간에 교체와 격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장기간 마을에 세거하며, 기반을 쌓지 않더라도 직임에 오를 수 있는 나름의 개방성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1904년 구산리 동계를 창설한 20인은 새롭게 부상한 마을 주도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 직임 명단에 확인되는 인물이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즉 1880~1890년대 격변 이후 새로 부상한 인물들이 동계를 창설하며 마을을 주도해 나갔다. 이 동계 창설 20인 중 11명은 1907년 동안에서 확인되며, 4명은 1911년 노반계 창설을 주도하였다. 또한 20명 중 7명은 1925년 동안에서도 행임존위, 좌체동수로 이름을 올렸다. 즉 새롭게 부상한 이들은 20여 년 동안 마을의 주도 세력으로 역할했던 것이다.

현재 구산리 주민들의 구술 증언에서도 1880~1890년대 인구 이동과 20세기 이후 안정국면의 단서가 엿보인다. 구산리에 세거한 주요 성관으로는 김녕김씨, 순흥안씨, 경주손씨를 들 수 있다. 안씨, 손씨 주민의 구술에 따르면 이들 가계는 공통적으로 조부대에 구산리에 이주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족보를 통해 해당 가계의 못자리를 추적해보면, 생년이 19세기 중반 이후인 인물들에서 구산리와 관련성이 엿보인다. 즉 19세기 극후반에 구산리에 이주해온 인물들도 20세기 들어 동계를 주도하고, 마을 직임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이 시기 구산리에 나름의 개방성과 역동성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4. 마을 조직의 재정운영

5. 맺음말

(최종 원고는 발표장에서 배부 예정)



식민지기 마을 임야의 공동묘지로의 변화

: 울진 구산리의 사례

이 옥 부 |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전임연구원

1. 머리말

해안을 따라가다보면 모랫사장과 인접한 곳에 소나무 숲이 있는데 그 사이로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들이 눈에 띈다. 1960년대까지 강원도였다가 경상북도로 행정구역이 바뀐 울진 기성면의 해안가 마을들도 그런 곳들이다. 특히 구산진으로 불리는 작은 포구와 조선시대 울릉도로 향하는 수토사 일행이 머물렀던 대풍헌 그리고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구산리에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해안가 솔숲 사이에 200기 정도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 언제 조성되었는지 모르는 이 공동묘지는 현재 구산리 마을공동체의 큰 수입원인 해수욕장이 개장하던 1980년 전후까지 사용되다가 지금은 매장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남아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묻힌 곳으로서 ‘공동’ 묘지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묘지화장장매장급화장취체규칙(이하 공동묘지규칙)’을 반포하면서 한국사회에 처음 도입된 매장문화로, 근대의 표상이자 대표적인 식민 정책의 하나로 간주되어왔다. 공동묘지의 이같은 역사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식민지 정부의 공동묘지 정책이 근대의 위생 담론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토지를 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전국의 분묘지를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었음을 드러냈다. 도시화와 공동묘지의 상관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도 초기에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던 것 같다.¹⁾ 다만 최근에는 식민당국의 의도에 주목하는 대신 그 결과 형성된 도시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것을 근대적 경험으로 역사화하는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경성의 근대 또는 근대적

1) 김성호 외, 『산지소유와 묘지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다카무라 료헤이,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5, 2000.

변화를 공동묘지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²⁾

한편 한국의 전통적인 매장문화와의 차별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조선인들의 저항을 강조함으로써 공동묘지 운영의 강제성을 부각하려 했다.³⁾ 이런 연구의 특징은 갈등이 전국에서 발생한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기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동묘지와 관련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은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전체상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갈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다른 연구는 갈등의 양상에 관한 것이다. 정일영은 공동묘지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간 갈등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조선인 내부의 계층간 갈등으로 변화한 사실에 주목했다.⁴⁾ 그는 배경으로 1918년, 1919년의 연이은 묘지규칙의 개정을 지목했다. 그동안 묘지규칙의 개정은 조선인들의 저항에 직면한 식민당국이 조선인들의 불만을 수용하여 한국의 매장문화를 일정부분 수용한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새로운 변화의 영향력은 훨씬 복합적이며, 이미 내재되어 있던 문제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이러한 성과들 덕분에 근대의 표상으로 간주되어온 공동묘지를 둘러싼 전체적인 그림은 어느정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도시를 제외한 농촌이나 해촌의 현장 모습은 여전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⁵⁾ 관련된 기록물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구산리도 마찬가지다. 구산리 주민들은 1897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년에 이르는 방대한 시기의 기록물을 전승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공동묘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록물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초 새로운 변화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구산리 공동묘지의 구성과 운영을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20세기 초 구산리 주민들의 생업환경과 일상을 규정한 식민정책들, 예를 들어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그리고 공동묘지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방대한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결과만 놓고보면 어떤 분야는 한 방향으로 논의들이 수렴하기도 하지만 상반된 주장이 극명하게 대치하며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연구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관심은 각각의 정책이 가져온 파장에 있지 않다. 대신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새로운 변화로 묶고 구산리 주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2) 이의성,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나타난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1.

3) 장용경, 「1910년대 일제의 공동묘지 정책과 조선인의 경험」, 『역사와 문화』 19, 2010; 한만수, 「만세전과 공동묘지령, 선산과 북망산」, 『한국문화연구』 39.

4) 정일영, 「일제 식민지기 사자공간의 배치와 이미지 형성」, 『사림』 57, 2016.

5) 강정원·이도정, 「무연고묘와 죽음권」, 『서울민속학』 4, 2017.

대응했는가를 추적할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변화를 구산리 마을에 투영시켜 마을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를 전유했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구도아래 2장은 구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변화를 토지조사사업과 임야 조사사업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특히 마을공동재산의 규모와 운영방식, 특히 마을 임야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은 그 연장선에서 공동묘지 규칙의 반포에 대응하는 구산리 주민들의 모습을 구명한다. 마을 소유의 임야를 공동묘지로 조성하고, 근대법을 통해 재확인된 입회권을 내세워 매장자를 마을주민으로 제한하는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장은 제사 문화의 정착과 가족과 친족,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안정성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싸고 유교적 전통이 지속, 강화되는 구산리의 근대를 복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민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생산된 공적 자료도 필요하지만 마을 내부의 자료가 없으면 접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점에서 구산리는 대부분 회계장부지만 1897년부터 2000년대까지 작성된 방대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산리의 근대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지만 구산리의 사례는 20세기 초 근현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마을공동체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2. 20세기 초 구산리의 새로운 변화와 마을 공동재산

구산리는 1914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근북면 구산리에서 기성면 구산리가 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의미했다. 하나는 행정리로서 구산리의 경계가 확정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리의 법인격이 인정됨에 따라 마을이 재산의 소유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말하자면 관습적으로 용인되어왔던 임야나 미역바위 등의 어업자원에 대한 이용권이나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와 다름 없었다.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는데, 성원권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누가 마을의 주민인가'라는 문제는 마을공동재산의 이용과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성원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또는 성원권의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가는 구산리 마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1912년 반포된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각지에서는 1912년부터 토지사정이 시작되었다. 구산리는 행정구역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난 1915년 12월부터 1916년까지 1년간 측량을 포함한 토지 사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1915년 7월에 손계수가 지주총대를 맡아 두 건의 토지조사부를 작성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전부터 토지사정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의 토지 사정에서 확인된 구산리 마을재산은 임야 4필지와 대지 1필지이다. 현재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

야는 4필지의 임야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

아쉽게도 구산리의 임야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1931년 기성면의 면유림 현황을 살펴보면 구산리는 15필지의 임야가 면유림으로 편입되어 다천리와 정명리를 이어 세 번째이다. 면유림으로 편입된 임야들이 주로 국유림과 동유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산리에 국유림과 동유림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유림으로 편입시키지 않은 임야들이다. 구산리 동중은 임야 세 곳에 대해 주민을 소유자로 지정하여 면유림으로 편입되는 것을 피했다. 세 곳은 현재 공동묘지가 위치한 장사임야, 그리고 성황당이 있는 성황당산, 마지막으로 냉수산이다.

추정컨대 이들 임야는 1916년에 토지를 사정할 때만하더라도 소유자를 구산리로 명시했지만 이후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주민 개인 명의로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국유림구분 조사의 시작단계부터 이미 향후 면유림으로 편입될 만한 임야에 대한 파악을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식민당국의 일관된 정책방향은 면장이 산하 마을들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처분권은 군수에게 일임함으로써 마을공동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행정리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구산리 동중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비하여 최소한 세 곳의 임야에 대해서는 동중의 관리와 처분권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주민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마을주민들의 조상을 묻은 공동묘지와 마을제사의 중심 공간인 성황당 주변의 임야는 전적으로 동중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3. 묘지규칙 반포와 구산리 공동묘지의 조성 및 운영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이어 구산리 주민들이 직면한 또다른 새로운 변화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반포한 ‘묘지화장장매장급화장취체규칙’이다. 전국 각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매장문화에 적극하도록 요구받았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조선인들의 저항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시행령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도 많았다.

경남 산청군 산하 각면은 1913년부터 공동묘지 신설원을 제출하여 동 단위의 공동묘지 신설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식민당국이 요구하는 공동묘지 관리자도 선정하여 승인의 요청했다. 통영군에 편제된 수산리와 망치리에서도 산청군과 유사하게 발빠르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된다. 수산리 마을공동체가 소장하고 있는 거제현병분견소장 발 『묘지관리자복무규정 공동묘지관리자』 자료는 산청군과 마찬가지로 수산리도 공동묘지 관리자를 선정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추첨을 통해 공동묘지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추첨명부』도 이를 뒷받침한다. 망치리는

1914년 12월에 작성한 주민 215명의 묘적계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묘지 이외에 기존의 분묘를 그대로 인정받을 사람은 공동묘지구획이 반포되고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식민당국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실시된 공동묘지구획은 한국의 전통적인 매장문화와 달랐고, 실시 과정도 강제성을 띄었지만 마을공동체는 저항보다는 유리한 방식으로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였다.

구산리는 해변가 인근의 숲숲 사이에 있는 마을 소유의 長沙임야를 공동묘지로 정했다. 전근대 시기 민촌의 주민들은 마을 인근의 임야에 죽은 조상을 묻었다. 양반들의 선산과 북망산이라 불렸던 이런 집장지는 누구라도 묻힐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곳을 無主空山이라고 부른 이유이다. 하지만 토지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는 일련의 변화 속에서 구산리는 당시 법적 효용성을 가지게 된 입회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공동묘지 이용자를 구산리 주민으로 한정했다. 공동묘지관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자료는 없지만 통영군 수산리와 산청군 오부면 산하의 마을들이 관리자를 선정한 것처럼 이들도 관리자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구산리는 입회권을 기반으로 기존의 무주공산과 다른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는 공동묘지를 창출했다. 요컨대 구산리는 식민지기에 확정된 마을의 재산권과 입회권 등 근대의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전유하여 마을 소유의 임야에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안정성을 담보하였다.

4. 마을공동체의 안정성과 중층적 근대

5. 맺음말



동해안 어촌마을의 오래된 제정일치 사회 구축과 어른 대접

-울진 구산리를 중심으로-

송 기 태 | 국립목포대학교

1. 서론

동해안 울진지역 어촌마을 일대는 존위회 또는 노반계라고 하는 마을의 상층조직이 발달해 있다. 이들 상층조직은 마을의 책임자 등을 역임하면서 ‘어른의 자격’을 획득하고, 기여와 헌신에 따른 보상으로 ‘어른 대접’을 받는다. 이를 통해 마을자산을 관리하면서 마을의 정치경제적 권한을 행사하고, 공동체 세시의례의 주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에서 오래된 제정일치 사회를 구현한다.

본고에서는 마을에서 제정일치 사회를 구축하며 지속하고 있는 울진 구산리를 주목한다. 마을 내에서 수직적 계층이 구축되는 원리와 그러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해온 과정을 살펴본다. 동시에 수직적 질서만으로 마을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기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마을의 계층구조에서 ‘어른’의 자격과 권한

구산리의 마을 운영은 수직적 계층구조를 형성하여 질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을 조직으로 존위회, 동중(마을회), 번영회, 부녀회, 자망회, 어촌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모든 조직의 상층부에 존위회가 존재하고, 행정조직으로서 동중(마을회)가 있으며, 여타의 조직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이익집단의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존위회 또는 노반계로 불리는 상층 조직은 마을의 수직적·계층적 질서체계를 구축하는 상징적 집단으로 울진지역 마을공동체를 읽어내는 중요한 대상이다.

구산리의 존위회는 ‘대존위-차존위-행공존위와 총무-시존위-동수-유사’의 순으로 차등을 두고

있고, 존위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장·어촌계장·변영회장을 2년 역임하거나 존위회의 말단인 유사를 1년 역임한 후 또다시 동수 1년, 시존위 1년을 역임해야 정상적인 존위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계층은 19세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시기에 따라 직책이나 조직의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지속되어온 전통이다.

구산리에서는 20세기 초반 존위회를 구축하는 수직적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3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노반계는 1911년 창설하여 1936년까지 회계장부를 작성했고, 시반계는 1913~1936년, 신시반계는 1915~1925년까지 운영하며 회계장부를 남겼다. 3개의 계는 수직적으로 노반계-시반계-신시반계의 상중하 관계를 형성하고, 하층과 중층의 책임자인 유사들이 단계를 거쳐 노반의 유사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표 1〉 20세기 초반에 결성한 구산리 노반계·시반계·신시반계의 유사 상승 과정

이름	신시반계 유사	시반계 유사	노반계 유사	존위 여부(成冊)
李春景	1916~1917년		1923년	
李桂秀	1917~1918년	1919~1920년		1919년~
朴云宗	1917~1918년	1922~1923년		1922년~
金相根	1919~1920년	1921년		
李永盛	1923년	1924년		
金昌學		1914년	1917년~1918년, 1921년	1907년~
安千石		1914년	1922년	1907년~
金士用		1915~1916년	1917년	1907년~
安德淳		1915~1916년	1927년	1907년~
韓定鎬		1916~1917년	1920년	1907년~
鄭厚根		1918~1919년	1927~1928년	1907년~
孫啓守		1918~1919년	1925년, 1930~1933년	1907년~
金千廉		1924년	1929~1931년	1925년~

〈표 1〉은 노반·시반·신시반계의 회계문서에 나타난 유사들의 승급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표기된 사람들은 대부분 신시반계·시반계 유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거나, 시반계·노반계 유사를 단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 시반계와 노반계의 유사를 역임한 사람들은 모두 존위들이었거나 곧바로 존위가 되었고, 신시반계와 시반계 유사를 역임한 사람들은 이후 존위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과거 노반은 존위가 동일시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개의 계는 1930년대를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존위회의 단계적 진입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존위회는 마을자치의 정치·경제적 권한과 직결되는 점에서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 마을의 행정적 운영은 이장을 비롯한 다양한 자치조직이 수행하지만, 마을 자치활동의 최종 결정권은 존위회에서 승인하고, 마을의 공동자산 또한 존위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 체계는 마을의 정치·경제적 권한과 행정적 실무를 구분하는 것으로 국가의 삼권분립에 비견되는 분권체계를 마을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분권체계를 상하관계로 구분하여 상층이 일명 ‘마을의 어른’이 되도록 하고, 하층을 일반 주민으로 구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어른의 자격’이 존위회를 존속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존위가 될 수 있는 ‘어른의 자격’은 상하층이 존재하는 구조에서 두 측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하나는 하층의 마을 운영에 핵심이 되는 이장·어촌계장·변영회장 등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존위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이렇게 하면 누가 마을 일을 3년을 하고 어른이 되느냐.”라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상층이 되어서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존위들은 마을의 책임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존위가 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일명 ‘불량스럽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층 단위의 책임자를 수행하는 것이 양적 평가라면, 존위회의 진입단계에 해당하는 유사·동수·시즌위 과정을 통해 질적 평가를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상하층의 양적·질적 평가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어른으로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어른으로서 존위의 자격과 권한은 마을 책임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노반·시반·신시반 삼반계는 모두 동중 자금을 운용하면서 마을에 경제적 기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15년에 노반계와 시반계는 마을의 기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편성하고, 신시반계는 마을 기금을 노반·시반을 거쳐 전달받아 계를 창설한다. 그리고 이들 삼반계는 1916년부터 1930년까지 한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동중으로 자금을 입금한다. 해마다 항목은 다르지만 단오고사, 중구고사, 별신제, 성황당 중수, 마을 야학, 구장, 걸립단체 등의 명목이 확인된다. 그리고 1925년 신시반계가 소멸할 때는 신시반계 잔존금 156.45냥, 시반계 163냥, 노반계 148.25냥을 모아서 마을로 이전한다. 이때 자금의 이동 경로는 신시반계와 시반계가 각각 노반계로 자금을 전달하고, 노반계가 통합해서 동중으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삼반계가 상중하의 위계간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존위회의 실질적 권한은 마을의 공동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다. 보통 마을총회를 2~3일 앞두고 ‘별추’라고 하여 존위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때 존위회원과 이장, 변영회장, 어촌계장이 자리하는데, 회의의 진행은 존위회의 동수가 마을 운영과 자금의 회계를 보고하고 이를 총무가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장, 변영회장, 어촌계장은 존위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어서 동수의 보고를 듣다가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을 한다. 별추 과정에서 존위

회와 이장·변영회장·어촌계장을 발언권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마을 운영의 정치·경제적 결정권이 존위회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존위회가 실무조직이 아닌 점에서 마을 운영의 전반을 감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상층조직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동체 세시의례의 사제권과 ‘어른 대접’

존위의 어른됨이 마을에 대한 헌신과 기여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특권은 공동체 세시의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의 세시의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전승력이 약해지고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올진 구산리는 공동체 단위의 세시의례가 현재까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산리의 세시의례는 크게 공동체의례로서 동제, 연례행사로서 세시풍속, 5년 단위로 진행되는 별신굿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의례를 간략히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올진 구산리의 세시의례

음력	의례 명칭	비고
1월	正朝告祀(正初告祀)	존위
2월(양력)	立春	존위
3월	三月 成造告祀	존위 (중단)
5월	五月 端午告祀	존위 (중단)
6월~7월	初伏, 中伏, 末伏	동민 전체
7월(양력)	해수욕장고사	존위 (신규)
8월	八月 歲儀	노·시·신시반(중단)
9월	九月 重陽告祀(新米告祀), 洞墓祭祀	존위
12월(양력)	冬至	존위
12월	十二月 歲儀(老班歲暮, 老班送年會, 老人歲饌, 老人忘年會)	존위-노인회
연중	別告祀	존위
5년 순환	別神(迎神)	동민 전체

세시의례에서 존위의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의례에서 사제권을 독점하고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동제는 존위들만 참석 가능한 의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동제는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집단적 염원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민(洞民)의 참여가 전제되지만, 구산리의 경우 존위와 예

비 존위집단인 이장·개발위원장·어촌계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참석이 불가하다. 제관도 존위들 중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선정하고, 제사 참석인원도 이들을 제외하고는 제한되기 때문에 마을의 정치·경제적 권한을 지닌 존위집단이 사제권을 독점함으로써 제정일치 사회를 공고하게 유지한다. 이는 오랜기간 친족 연구의 논의에서 핵심사항으로 주목 받았던 상속권과 제사권의 관계가 마을 단위에서도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성황당도 일명 ‘골매기’라고 하여 마을의 시조나 입향조라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를 공동체의 조상 개념으로 확대하는 점도 존위가 동제 수행의 적장자라는 ‘어른’ 인식의 한 편으로 존재한다. 또한 동제를 마치고 헌식처럼 행하는 ‘수부’ 의례도 이와 관련된다. 수부는 골매기 성황의 부하라고도 하고, 이미 작고한 존위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인식의 중첩 속에 존위가 공동체 신앙의 적장자임을 강조한다.

일반 마을 행사로 진행되는 입춘, 복날, 동지, 세의(歲儀)는 존위에 대한 ‘어른 대접’이 부각된다. 12월 세의의 경우 회계문서에 ‘老班忘年會 肴代’ 또는 ‘新正老人接 酒20升代’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도 마을에서 연말에 존위들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복날이나 동지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어른으로서 ‘존위의 자리’는 상석으로서 별도로 마련된다.

공동체 일하는 데 불러준 데가 없어요.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참석한다 할지라도 한 좌석에 앉기가 어렵지요. 우리하고 앉는 좌석이 달라요.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도 없어요.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절로 참석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누가 마을 일을 3년을 하고 어른이 되느냐. 가만히 있다가 나이 80세 되면 돈 주고 벼슬 사자 그거예요. 영원히 못 들어와요. (존위 이○성, 1948년생)

나이가 들어도 존위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재 존위의 발언은 마을행사에서 어른의 자격과 대접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세시행사를 하는데 언제나 존위와 상의를 하고 상석을 마련하여 어른 대접을 한다. 젊었을 때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기여가 마을의 세시행사 속에서 자연스레 어른 대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동체 세시의례에서 드러나는 사제권과 어른 대접은 폐쇄적이고 서열 의식을 강조하는 점에서 일반 주민들의 불만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헌신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여 지속가능한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사제권과 어른 대접이 전통에 대한 책임의식의 일환이 되어 공동체 의례가 전승력을 유지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동제의 제관이 되면 마을의 사제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수개월에서 1년 동안 부정타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책임의식과 관련된다.



4. 수평적 관계 회복을 위한 수익 분배와 별신굿

준위회가 마을의 정치경제적 권한과 의례의 사제권을 독점하는 점에서 수직적 계층성만 부각된다면 마을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분제가 존재하는 시대도 아니고, 혹여 신분제 사회라고 하더라도 수직적 계층성만 강조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격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수직적 계층성이 뚜렷한 사회에서 상층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주민들이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물리적·심리적 기제가 필요하다.

구산리에서는 수평성을 드러내는 기제로 공유재산으로 발생한 수익의 분배와 별신굿이 존재한다. 구산리의 동중 회계문서를 살펴보면 1916~1918년에 ‘民間分排條下’라고 하여 6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한 기록이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마을 재정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미역바위도 ‘麓岩放賣’라고 하여 매년 기록이 등장한다. 미역바위의 경우 마을주민이면 누구든 1년 단위로 추첨을 통해 입참금을 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현재는 해녀가 미역을 채취하기 때문에 해녀 비용을 제외하고 입참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 또 어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부터는 공유어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아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한다.

의례의 측면에서는 별신굿이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기제가 된다. 별신굿은 과거 격년제로 진행하다가 20여 년 전부터 5년 단위(만 4년)로 진행하고 있다. 구산리 회계문서 중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만 살펴보면, 마을 전체 자금에서 의례에 대한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신굿을 하지 않는 짝수년에는 의례에 대한 지출이 1년 마을자금의 10% 내외를 차지하는데, 별신굿을 하는 해에는 30%에 달한다. 여러 의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별신굿이 다른 의례의 총합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차지한다.

〈표 3〉 20세기 전반기 구산리 세시의례 회계 사항

연도/ 항목	12월 세의	입촌	정조 고사	별고사	성주 고사	단오 고사	별고사	삼복	추석 동묘	중구 고사	별고사	동지	별신굿	별고사	의례지출	마을자금 총지출	마을자금 총수입
1917	21.53	2.93	31.35		10.33	94.13	13.2			16.16			315.42	18.63	523.68	6,162.66	6,148.14
1918	16.9	2.3	45.61		15.24	74.05				31.84					185.94	3,198.54	3,193.70
1919	19.2	4	74.5		22.82	107.62				96.35			566.75		891.24	2,372.7	1,846.63
1932	10	5.7	44.5	7.87	11.5	36.4				59.4					175.37	572.6	634
1933	13	3.9	65.1		20.75	53		17	18.3	41.7			498.2	22.5	753.45	1,016.1	1,132.45
1934	25.5		34.4		17.85	43.25		20.75	18.3	34.65		8.2			202.9	649.6	572.1
1935	15.75	3.5	62.2	9.55	23.9	30		14.75		72.45		16.5	790.2	24.55	1,063.35	1,575.9	1,469.25
1936	23.25	5.9	85.25		23.4	79.4		20		75.05		20.6			332.85	4,027.85	6,371.75
1937	27		65.15		35.1	97.95		22.35		134.45		16	1,146.9	18.75	1,563.65	5,704.8	5,439.65
1938	27		90.55	21.95	24.5	253.85		27.5		553.2					998.55	10,553.55	10,525.1
1939	10	5.7	205.65		20.55	336.9		27		126.9			1,067.35		1,800.05	22,493.4	22,593.65

연도/ 항목	12월 세의	입춘	정조 고사	별고사	성주 고사	단오 고사	별고사	삼복	추석 등묘	중구 고사	별고사	동지	별신굿	별고사	의례지출	마을자금 총지출	마을자금 총수입
1940			165.05		42.7	93.5				92.85					394.1	10,061.15	10,528.9
1941		4	155.8		69.5	124.05				144.7			294		792.05	8,249.3	9,114.5
1942		8	300.3		65.2	155.45				243.55					772.5	4,843.85	3,590
1943		33.75	377.9		57.5	126.25				154			2,907.9		3,657.3	8,144.1	9,193
1944		31	202		117.25	285				409.5	12.5				1,057.25	13,238.8	13,176.25
1945	152.5	73.5	776.3		155.75	806.75				1154			10,970	255	14,343.8	47,104.8	59,339
1946		150	2,738.6		1,467.5	4,596.7		225		5390					14,567.8	106,403.8	106,916.5

별신굿은 동제와 달리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수평적 의례의 핵심이다. 별신굿의 무당 선정은 존위회에서 하지만, 계약을 비롯한 전체적인 운영은 어촌계에서 진행하고, 그동안 동제에서 배제되었던 일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굿의 진행 과정에서 존위와 어촌계장 등의 임원들은 무당이 임원이라고 하여 돈을 많이 내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에만 참석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때 주민들이 무당굿을 참관하면서 굿전을 지급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종이돈(紙錢)을 발행하여 나눠준다. 실제 2006년 촬영된 구산리 별신굿 영상을 살펴보면 마을주민 다수가 종이돈을 활용하여 굿판의 신명에 동참한다.

별신굿은 동네 전체가 평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민 전체가 참석해도 상관없어요. 고사는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날이니까 정해진 사람만 정숙해라. 몸 단장도 하고 가서 정숙하게 고사를 올려라. 마을 대표다. (존위 이○성, 1948년생)

다만, 별신굿이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기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을자치의 민주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엄연히 수직적 체계 속에서 수혜나 베푸는 행사로 존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제와 별신굿의 관계에 대해 현재의 존위는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설명한다. 동제는 마을의 체계를 구성하는 정해진 것이지만, 별신굿은 수직적 짜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지배’라는 개념과 공고히 정착한 유교적 질서도 배경으로 존재한다. 존위들이 스스로 마을을 ‘지배한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교식 의례가 아닌, 별신굿과 농악 등의 비유교식 활동은 조선시대의 양반(兩班)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존위조직을 구성했던 노반(老班)도 수직적 질서를 공고히 한 유풍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60~70년대 개발 주체로서 동중(洞中)

이 민 재 |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1. 서론

한국에서도 동계, 대동계 등 동리 단위 사회조직이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에도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¹⁾ 그러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한 동리 단위 개발에서²⁾ 이 ‘전통적’ 사회조직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해방 이후 한국의 동리 단위 개발에 관한 연구는 새마을운동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이루어진 새마을운동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70년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은 연구에 따라, 사례에 따라 편중은 있으나 분명 과거의 동리 단위 개발과 연관성을 지닌다. 특히 개별 동리 단위 사례나 개인의 구술 생애사 등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잘 드러난다.

동시에 각 동리에서는 1960~70년대 이전에도 동리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조직들이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동리를 포괄하는 사회조직은 조선 후기를 거치며 신분을 ‘통합’한 형태로 변화하여 19세기 말에는 전국적으로 존재했다가 근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 연구에서는 근현대 시기, 특히 해방 이후에도 동계, 대동계, 동중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동리 단

1) 근현대 시기 동리 단위 사회조직의 변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승진, 「나주(羅州) 초동동계(草洞洞契)의 장기지속과 변화, 1601~2001」, 『대동문화연구』5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이용기,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전남 長興郡 蓉西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이진교, 「일제강점기 마을사회의 동향과 동계의 역동성 = 전남 곡성군 B마을의 사례연구」, 『비교민속학』54, 비교민속학회, 2014; 류핑핑, 「국가 행정 체계와 마을 사회 민속의 역동: 경기도 양평군 산간마을 대동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김경옥, 「해남 통호리 대동계의 공유자원과 장기지속성 - 『桶浦大洞契』 「加利記」(1901~2015) 분석」, 『장서각』5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 등이 있다.

2) 이 연구에서 말하는 동리 단위 개발이란 community development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위 사회조직이 변화에 대응하며, 때로는 사회조직의 형태를 바꾸면서 지속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새마을운동과 그 이전의 동리 단위 개발과의 연관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다.³⁾ 그러나 과거부터 지속해오던 동리 단위 사회조직이 동리 단위 개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많은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사실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박정희 정부 역시 새마을운동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회조직을 새마을운동에 선행된 역사로서 다루긴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례에 기반했다기보다 박정희 정부 스스로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위치를 규정하는 가운데 역사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동리 단위 개발과 지속하고 있던 동리 단위의 사회조직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류핑핑이 연구한 양평군 사례를 보면 동리 단위 개발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마을 단위 대동계가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였음을 밝혔다.⁴⁾

즉, 1960~70년대 국가 주도의 동리 단위 지역개발과 동리 단위 사회조직의 관계는 단순히 국가정책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소규모 사회인 동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동리라는 사회가 국가정책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동리 단위 개발을 매개로 동리가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1960~70년대는 현재 한국 농어촌의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구산리 동중은 19세기 말부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조직으로, 구산리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이 연구는 1960~70년대 구산리 전체를 포괄하는 이 동중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동리 단위 개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주도 동리 단위 개발과 동리 단위 사회조직의 관계성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동리 기반시설 확충과 동중

해안가 마을인 구산리에서는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일상적인 자연재난은 태풍이었다. 구산리에 태풍이 닥치던 시기는 양력 9월 2일을 기준으로 전후 10일 사이였으며, 주민들은 이 태풍을 피해야만 했다. 태풍이 오면 여러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했다. 언

3)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사회』 69, 비판사회학회, 2006; 김영미, 「평택 칠원 마을이 최우수 새마을이 된 사연」, 『역사와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한도현,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 지도자들의 경험세계: 남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8, 한국사회사학회, 2010; 윤충로, 「구술을 통해본 1970년대 새마을운동 - 새마을지도가 "만들기"와 "되기" 사이에서」, 『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2011 등.

4) 류핑핑, 앞의 논문, 2023.

제든지 태풍이 올 수 있다고 할 만큼 구산리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태풍이 오면 구산리는 늘 물바다가 되었다. 특히 사라호 태풍은 음력 8월 추석 전후에 찾아왔는데, 당시 주민들이 “집이 다 없었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는 방파제가 존재하지만, 사라호 태풍 당시에는 방파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⁵⁾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는 해안가에 주택이 밀집한 구산리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었다. 구산리에 방파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8년부터이며, 그 경비에는 방파제 관련자들에 대한 접대비, 방파제 공사 자재 운반비, 공사비, 인건비, 그리고 방파제 관련 공사비 등 각종 경비가 포함된다.

또 다른 중요한 기반 시설로 도로를 들 수 있다. 도로는 구산리와 다른 지역을 이어주는 핵심 기반 시설이었다. 1918년 시점에 이미 구산리 뒷편으로 지나다니는 신작로가 확인되지만, 1968년부터 구산리 내부의 농로를 콘크리트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으로 표산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군사도로 등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도로 공사의 실제 공사비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구산리 주변의 도로, 특히 국도와 지방도 등의 건설 자체에는 동중이 별도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산리 경작지 내 농로와 해안가를 지나 봉산리 등을 잇는 농로 등에는 동중이 깊게 관여하였다. 물론 1970년에서 1971년에 걸쳐 울진군청에서 지급된 농로 건설 관련 보조금이 동중 회계에 수입으로 잡혀 있다. 이 보조금은 울진군청으로부터 이장에게 지급된 것이 최종적으로 구산리 동중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조금이 주어졌을 뿐, 농로 건설을 위한 실질적 지출은 동중을 중심으로 한 구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동중 회계의 지출 내역을 보면 시멘트 구입과 운반 그리고 인건비가 소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불도저를 사용하는 비용도 지출되었다. 여기에 농로 건설과 관련한 인부들의 식사와 보고를 위한 사진값, 각종 경비를 동중에서 부담했다.

그러나 국도의 관리에는 동중이 개입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다. 국도의 관리에 동중이 개입한 이유는 구산리 주민들이 반별로 나가서 이뤄진 부역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구산리에는 10반까지 있었다. 주민들의 기억 속에 7번 국도 관련 부역이 많았는데 월송 군무봉에서 현재 공항레미콘까지 구산리 담당이어서 이곳에 눈이 오면 눈 치우기, 도로 등에 직접 자갈을 깔고 시멘트, 모래 등을 섞어 포장을 한 기억이 있었다.⁶⁾ 도로 관련 부역은 반별로 부과되었는데 주민들을 이

5) 2025년 1월 8일, 안익순(1936년 생, 남) 구술.

6) 2025년 1월 8일, 임춘용(1951년 생, 남) 구술.

리한 부역에 동원하게 될 때, 동중에서는 술과 과자류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

이외에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1970년 8월 17일로 “국도修理費” 3200원, 1971년 4월 8일 “國道 자갈부설 人夫賃”로 2500원 등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국도의 유지 보수에는 일정 부분 동중이 개입했음이 확인된다.

3. 국가 안보 시설과 동중

구산리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동리 단위 개발에서 안보 관련 조치가 상당히 많아졌다. 잘 알려졌듯이,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울진과 삼척 지역으로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했다. 이 사건은 구산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초소 관련 비용을 동중에서 지급했다. 초소 관련 비용은 1968년 이전부터 동중이 수리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을 지불했다. 또한 초소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세, 각종 물품 역시 동중의 공동 재산에서 지출되었다.

1968년 이후 눈에 띄는 지출은 향토예비군 관련 지출이다. 향토예비군 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이후 본격화되면서 이때부터 구산리 내에서도 향토예비군 활동이 활발해졌다. 1960년대 초에는 방범대라는 이름으로 밤에 “딱딱 때리면서” 다니는 역할을 한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방범대는 오징어잡이 철이 되면 구산리 내 젊은 사람들이 모두 바다로 나가 부재했기에, 바닷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산리 주민의 치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은 주민 치안 유지를 목적하기보다, 냉전 상황에서 국가가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였다. 실제로 초창기 향토예비군은 경찰서에서 총을 받아 순찰을 돌던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동중에서 지급했다.

4. 국가의 말단(末端)과 구산리 사이의 동중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이전부터 구산리 동중은 구산리 주민들이 국가와 맺는 관계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 단적으로 동중의 공동 재산에서 국가의 말단 행정 조직에 대한 각종 접대나

7) 예를 들어 1969년 10월 15일 동중의 지출 내역 중 “道路修理關係 別會時 酒10升 및 肴代 850원”, “長小谷道路修理時 酒70升 및 別會時 肴代 2990원”, “밭초벌 道路修理時 酒70升 및 건빵代 2750원”이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전별금 등이 모두 지출되었고, 이는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산리 동중이 기반 시설 확충과 국가 안보 시설 개발 같은 동리 단위 개발에 개입한 것은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구산리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개발이 본격화되어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여러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개발이 확산된다는 점이 주목되며, 그 가운데 새마을운동 역시 포함된다. 구산리 주민들은 새마을운동 시기 주민 간 단합이 잘 되었고, 그 요인으로는 새마을운동 기간 구산리의 생활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억한다.

사실 구산리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1970년 8월 17일 회계부터 이미 “새마을가꾸기 운동 계몽”이라는 명칭의 사업에 동중의 재산이 투입되었고, 이듬해인 1971년 1월 15일 “새마을가꾸기, 시멘트 하차 및 인부비”에도 동중은 재원을 냈다. 이 외에도 구산리 동중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참가한 교육, 임원의 울진군청 출입 등에 쓰이는 각종 경비를 동중에서 지불했다. 이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동리 단위 개발 정책인 새마을운동에 구산리 동중이 단순히 동리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구산리와 국가 간 관계를 맺는 과정에도 경비 부담이라는 형태를 통해 개입하고 있음을 뜻한다.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살펴본 구산해수욕장의 장소성 변천과 의미 형성에 관한 연구

채 지 선 |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전임연구원

1장 서론

해양 공간(바다, 해변)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인간의 삶과 기억, 경제 활동, 문화체험이 중첩된 복합적 의미의 장소이다. 특히, 공유재산으로서의 바다는 공공성과 공동체적 사용을 기반으로 어업을 통한 경제 생산과 해수욕장을 통한 관광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다층적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위치한 구산해수욕장 역시 과거부터 어업 기반의 생산 중심 공간과 현대의 관광목적지로서의 소비 공간까지 다양한 장소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구산해수욕장이 지닌 장소성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으며, 구산해수욕장이 위치한 공유재산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장소를 인식하고 소비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Yi-Fu Tuan(1977, 이하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 장소화 개념을 통해 장소성 개념에 접근하고, Jean-Marie Floch(1990, 이하 플로슈)의 소비가치 사각형 이론을 분석 틀로 삼고 있으며, 구산해수욕장의 장소성 분석을 위해 구산리 마을 문서, 지형 구조, 운영 체계, 관계자 구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시대별, 기능별, 이해관계자별 등 구산해수욕장을 둘러싼 장소성 구조를 도식화하고자 한다.¹⁾

1) 본 발표문은 각주 및 참고문헌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초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인용이나 인용 표기 활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정 보완하여 논문으로 투고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 구산리 해변의 장소성의 변천사

구산해수욕장의 장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푸 투안은 『Space and Place(공간과 장소)』(1977)에서 공간의 의미 없는 비어 있는 상태로, 장소는 인간의 경험, 감정, 기억이 축적된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정의하였다.²⁾ 그는 공간이 장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장소화(place-making)’라고 설명하며,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 지점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구산해수욕장을 둘러싸고 있는 구산리 해변이 시간성에 따라 어떠한 장소성을 형성해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구산 앞바다는 울릉도와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기점이었으며, 군사적·국가적 기능이 우선되던 공간이었다. 이 시기의 구산리는 수토사(搜討使)의 출항지로서 기능하였던 바다의 장소성이 감성적이기보다는 기능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구산리는 어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강화하였다. 특히 미역, 전복, 해삼 등의 채취를 중심으로 해안 자원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어업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간이 생존과 실용 중심의 장소로 변모하였으며, 주민 간 공동작업과 협력이 강조되는 내재적 장소성이 형성되었다. ‘동계(洞契)’라는 마을 자치조직을 통해 마을 공동재산의 운용이나 의사결정, 제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집단적 규범과 협력의 틀을 유지하였다. 동계는 지역 공동체 내부의 정서적 결속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구산리의 장소성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공동체적 의미 공간’으로 확장되는 기반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하였다.

구산리 일대는 1979년 백암온천, 백암사, 월송정(月松亭) 등 관광특구 지정과 맞물려 일대가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특히, 1984년 해수욕장 지정 및 해수욕장 개장을 계기로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³⁾ 바다의 경관성과 접근성을 활용한 구산해수욕장의 개장은 지역 외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했고, 주차장 및 샤워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 외에도 오토캠핑장(야영장), 카페, 편의점 등의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었다.

이렇듯 구산리 해변을 둘러싼 공간은 어업 기반의 생계 공간에서, 감성적 체험과 관광을 수용하는 장소로 변모하면서 어민의 생계 공간, 관광객의 휴식 공간, 행정과 마을공동체의 운영 공간 등 다양한 가치가 교차하는 장소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장소성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이해관계자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이-푸 투안(1999), 공간과 장소(구동희, 심승희 역), 문창, (원본 출판 1977년)

3) 매일경제(1988.10.31. 14면), 동부지역 縱斷 취재 <6> 蔚珍 국민 종합 휴양지로 발돋움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장 기호학적 분석 방법

3.1 기호학의 이항대립 개념

구산해수욕장의 장소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구조주의 기호학의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구조주의 기호학자들 언어나 사회적 의미 체계가 종종 반대되는 개념쌍을 통해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나 사회현상, 공간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바 있다.⁴⁾

구산해수욕장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항대립이 장소의 구성 원리로 작동한다. 즉, 인간 개입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바다’와 ‘인공적으로 가공된 관광 공간’, 어업 기반의 ‘경제 생산의 공간’으로서의 바다와 관광 및 체험 중심의 ‘문화 소비의 공간’으로서의 바다, 지역 주민의 기억과 정체성에 뿌리를 둔 내재적 장소성과 관광객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외재적 장소성이다.⁵⁾

한편, 이분법은 장소성에 대한 해석을 단순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긴장과 갈등의 구조를 드러내면서 장소가 단일한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가치로 경험되고 소비되는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항대립 구조를 바탕으로 장소성의 다층적 구성과 가치 갈등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3.2 의미 분석 도구로서의 기호사각형 이론 : 플로슈의 소비가치 사각형을 중심으로

구산해수욕장을 둘러싼 장소성의 다양성을 더욱 명료하게 분석하기 위해 구조주의 기호학자 Greimas(1966)의 기호사각형(Semiotic Square)에 대입해 보았다.⁶⁾ 기호사각형은 의미 생성의 기본 단위를 네 개의 대립축으로 구분하며, 장소에 부여된 의미가 어떤 관계와 대립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보완적 관계’와 ‘중첩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장소성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호학적 분석 방법론 가운데 플로슈의 소비가치 사각형(Consumption Value Square)은 한

4) Lyons, J.(1977), Semantics,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71.; Jakobson, R.(1960), Closing statement: linguistics and poetics,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p.77.

5) 에드워드 렐프(2005), 장소와 장소상식(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논형, (원본 1976년)

6) Greimas, A. J.(1966),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re-edition Paris: PUF, 1986), pp.208-247.

장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상이한 가치로 소비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⁷⁾ 이 모델은 실제적 가치(Practical), 유토피아적 가치(Utopian), 비판적 가치(Critical), 쾌락적 가치(Ludic)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장소의 의미 소비 구조를 해석하며, 이를 통해 동일한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른 가치 체계 속에서 소비되고, 때로는 충돌하거나 공존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구산해수욕장처럼 공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생계, 관광 소비, 공동체 정체성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에서는 플로슈의 모델이 공간에 투영된 복수의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한 장소의 다층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플로슈의 이론을 구산해수욕장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적용하면 대략 다음 네 가지 가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적 가치는 공간이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활용될 때 나타나는 의미를 지닌다. 구산해수욕장의 경우,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주차장 등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토피아적 가치는 감성적인 만족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회복이나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때 나타나며, 구산해수욕장의 해변 공간이 대표적이다. 비판적 가치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윤리적 판단이 반영된 공간에서 나타나며, 지역 사회의 역사성과 공동의 기억이 담긴 공동묘지나 마을 자치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쾌락적 가치는 오락적 요소와 감각적 즐거움을 중심으로 공간이 소비될 때 드러나며, 오토캠핑장(야영장)이나 카페와 같은 공간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4장 구산해수욕장의 장소성 분석

4.1 해수욕장 공간 구성요소를 통해 살펴본 장소성

본 절에서는 구산해수욕장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구성요소를 해변, 오토캠핑장(야영장), 카페, 편의시설(주차장, 샤워시설 등), 공동묘지로 압축하고, 플로슈의 소비가치 사각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공간이 지니는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오토캠핑장(야영장)은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레저 공간으로, 감각적 즐거움과 체험 중심의 쾌락적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는 플로슈의 쾌락적 가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동묘지는 지역 주민의 조상에 대한 기억이 깃든 상징적 장소로,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공동체적 윤리와 연계된 비판적 가치로 해석된다. 또한, 편의시설은 방문자의 접근성과

7) Floch, J-M.(1990), Sémiotique, marketing et communication, Paris: PUF.

기능적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실제적 가치를 대표한다. 즉, 관광 활동의 실용적 기반이 되는 요소들이다. 마지막으로 해변 자체는 다양한 목적과 가치를 중첩하여 지닌 복합적 공간이다. 관광객에게는 자연 회복과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유토피아적 가치가 부여되고, 해수욕과 산책, 일몰 감상 등의 감각적 체험은 쾌락적 가치로 소비된다. 동시에, 어민의 미역 채취와 지역민의 생활 접근로로 사용되는 측면에서는 실제적 가치를 지닌다.

구산해수욕장을 구성하는 공간 요소들을 플로슈의 소비가치 사각형 이론에 따라 배치하면 상단 좌측에는 위치한 실제적 가치에는 카페, 주차장, 샤워시설 등의 편의시설(주차장, 샤워시설 등) 및 해변의 어업 활동 등 실용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위치한다. 상단 우측에는 유토피아적 가치로 자연 해변이 지닌 회복적 기능과 힐링의 장소로서 인식되는 측면을 대표한다. 하단 우측에는 오토캠핑장(야영장), 바다 체험 활동은 감각적 소비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쾌락적 가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하단 좌측의 비판적 가치는 공동묘지와 같은 장소에 담긴 마을의 정체성과 기억을 보존하는 공동체적 공간을 배치할 수 있다. 플로슈의 이론은 이러한 다층적 소비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처럼 공간의 장소성이 단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가치 축에서 중첩되고 충돌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해변은 단일한 가치로 환원될 수 없으며, 하나의 공간에 세 가지 가치가 동시에 중첩되는 복합적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산해수욕장이 단순한 관광지나 해변이 아닌, 다양한 가치가 경합하고 중첩되는 복합적 장소임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4.2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살펴본 구산해수욕장의 장소성

구산해수욕장은 동일한 해양 공간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가치 지향을 기반으로 공간을 소비함으로써 충돌과 공존의 양면적 장소성이 나타난다.

구산해수욕장은 단일한 의미체계로 정의될 수 없는 복합적 장소이다. 지역 어민들은 구산해수욕장을 생계 기반의 실제적 장소로 인식하며, 해양 자원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관광객은 이 공간을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외재적 장소로 소비하며, 이는 유토피아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해석된다. 변영희와 노반계는 마을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절충하고 조정하는 중재자 구실을 한다. 한편, 어촌계는 바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중시하며, 실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보다 집단적인 이익 추구에 중점을 두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플로슈의 소비가치 사각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공간 내에서도 어민에게는 실제적 가치로, 관광객에게는 유토피아적 가치 또는 쾌락적 가치로 인식되며, 지역 주민에게는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담은 비판적 가치로 해석된다.



이해관계자 간 장소 인식 차이는 장소의 의미를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권리, 소속, 정체성의 차원에서 충돌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같은 공간이 이해관계자에 따라 ‘이용 가능성’, ‘접근 권한’, ‘가치 평가’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된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 일부 어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를 의존하던 어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며, 외부 자본에 의해 카페나 편의시설(주차장, 샤워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고유의 상권이 위축되고, 마을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간 활용 방식과 수익 배분 체계에서도 조직 간의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공동묘지와 같은 역사 자산을 둘러싼 관광 개발에 대한 시각 차이 역시, 장소의 훼손 가능성과 관련한 민감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충돌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이해득실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성과 장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구산해수욕장에서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청소, 주차 관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업무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윤 창출 없이 공공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⁸⁾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플로슈의 비판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구산해수욕장은 서로 다른 가치가 긴장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실험적 공간이자, 장소의 다층적 의미 구조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의 복합 구조는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하는 동시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5장 결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의 해변 공간이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해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로 구성되고 변화되어 왔음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Yi-Fu Tuan의 ‘장소화’ 이론을 통해 공간이 감정, 기억, 사용의 축적을 통해 장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Jean-Marie Floch의 ‘소비가치 사각형 모델’을 활용하여 동일한 공간 안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공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소비하고 해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산해수욕장은 조선시대 전략적 거점인 구산항에서 출발하여, 어업 생계 기반의 실용적 장소

8) 2025.02.19. 구산리 번영회장 안OO(남, 1958년생), 번영회원 권OO(남, 1968년) 구술 인터뷰.

로 자리 잡았고, 이후 해수욕장으로 개발되면서 감성적 체험과 쾌락적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오토캠핑장(야영장), 편의시설(주차장, 샤워시설 등), 공동묘지 등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서로 다른 가치로 소비되며, 내재적 장소성과 외재적 장소성이 중첩된 복합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바다라는 공유재산이 단지 경제적 자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정체성과 기억, 자율적 운영과 봉사의 기반이 되어 장소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형성해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공유재산으로서의 해양 공간이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닌, 공동체 정체성과 문화적 기억이 축적된 장소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장소성 연구가 도시나 건축 공간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해안 지역이라는 비도시적 자연 공간을 중심으로 장소의 다층적 의미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플로슈의 소비가치 사각형 이론을 구산해수욕장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가치 인식의 충돌과 공존이라는 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장소를 둘러싼 갈등과 조정의 과정, 그리고 장소성이 형성되고 소비되는 복합적 양상에 대한 통합적 분석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본 발표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현지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마을 문서 분석 등 실증적 검증 과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구산해수욕장의 지형도와 공간 배치도, 기호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 도식 자료 등이 본문에 포함되지 않아 내용의 이해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문헌 역시 각주로 대체한 점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보조 자료들은 추후 보완하여 논문 투고 시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2분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지역학회

[특별분과] 해양치유

물로 치유하기
: 세바스티안 크나이프의 발자취를 따라

크리스토프
힌들

독일 FOM 응용과학대학교

해양치유의 또 다른 얼굴
: 절영도 절벽 식물채집과 자연치유

김혜경

실험실 C 아트디렉터
원도심 창작공간 또가또가

부산의 항구와 포구를 따라 걸어볼까?

김경화

창작공간 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염포생활권 사례
- 전남 고흥군 봉래면(외나로도) 염포마을 -

김희진

염포마을권역 현장소장

물로 치유하기

: 세바스티안 크나이프의 발자취를 따라

크리스토프 힌들 교수 | Christoph Hiendl M.D. Ph.D. M.A

FOM 응용과학대학교 건강과학 교수 및 학사과정 책임자 (독일 뮌헨 및 아우크스부르크)

단순한 화학식 H_2O 를 지닌 물은 놀라운 물리적·생물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의 쌍극자(dipole) 성질은 수소결합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를 끊임없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은 물의 탁월한 용해 능력을 가능하게 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 비타민, 영양소의 용해를 가능하게 만든다.

흥미롭게도, 물은 동일한 화학 조건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험에 따르면 산속의 샘물과 수돗물은 다르게 반응하는데, 이는 물이 자신의 환경적 이력을 일종의 ‘기억’으로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루르드(Lourdes)와 같은 치유수로 유명한 장소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곳에서는 명확한 의학적 설명 없이 6,000건 이상의 기적적 회복 사례가 기록된 바 있다.

물과 인체

물 한 잔은 몸속에서 일련의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점막을 적시고, 목을 정화하며, 소화를 돕는다. 장에서는 영양분 흡수를 도우며 원활한 배변을 촉진한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약 2.4리터의 물을 섭취하는데, 이는 혈액순환, 산소 운반, 체온 조절, 해독 등의 생리적 기능을 지원한다.

탈수는 고혈압, 산소 공급 저하,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물은 90%가 수분으로 구성된 뇌의 기능 유지, 관절 및 척추 디스크의 윤활, 근육 기능 지원, 신장과 피부를 통한 노폐물 배출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바스티안 크나이프와 수치료법

세바스티안 크나이프는 19세기 바이에른 출신의 사제로, 냉수요법으로 자신의 결핵을 치유한 후 수치료(hydrotherapy)를 부흥시키고 대중화시킨 인물이다. 그는 고대 수치료 문헌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물, 운동, 약초,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생활이라는 *다섯 가지 건강 기둥(five pillars of health)*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온수와 냉수를 교대로 사용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식은 혈류를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며, 냉수 노출 이후 몸이 스스로 다시 따뜻해지도록 훈련시킨다. 비록 당시 의료계로부터 법적 반발을 받았으나, 그의 명성은 점점 확산되었고, 저서로 정리된 그의 치유법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교황 레오 13세(Pope Leo XIII)도 그의 지지자 중 하나였다.

현대의 크나이프 수치료

크나이프 요법은 물의 온도와 적용 방식을 활용하여 신체를 자극한다. 냉수는 혈관 수축 후 확장을 유도하며,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적용법은 다음과 같다:

- 냉수 세정: 젖은 수건이나 천을 이용한 간단한 자가치료
- 붓기/분사 요법: 호스나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붓는 방법, 온냉 교대 분사는 혈관 훈련에 효과적
- 목욕: 짧고 통제된 목욕은 활력을 주고 순환을 도와줌
- 물 위 걷기/눈 위 걷기: 특히 발에 면역력을 자극하는 효과적 요법

이러한 요법은 체온 조절 능력을 높이고 신체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따뜻한 물은 몸을 진정시키고, 차가운 물은 자극 효과를 주며, 특히 따뜻하게 달궈진 부위에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어린이와 열 완화를 위한 크나이프 요법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방식이 요구된다. 물속 걷기, 팔 목욕, 이슬 또는 눈 위 걷기와 같은 놀이 기반 요법이 효과적이다. 질병을 앓을 경우, 크나이프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제안했다:

- 젖은 무릎 양말: 발열 완화용
- 따뜻한 가슴 찜질: 호흡을 쉽게 도와줌

결론

크나이프는 수치료를 처음 고안한 인물은 아니지만, 실용적 성공에 기반한 체계적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다섯 기둥(물, 약초, 운동, 영양, 생활습관)*은 오늘날 통합의학(holistic medicine)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크나이프 요법은 건강 유지에 있어 물이 지닌 필수적이고 다면적인 역할을 현대에까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Healing with Water

: In the Footsteps of Sebastian Kneipp

Christoph Hiendl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unich and Augsburg (Germany)

Water, with its simple chemical formula H_2O , possesses profound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Its dipole nature allows it to form clusters and constantly rearrange its hydrogen bonds, giving rise to its exceptional dissolving ability. This property is essential for life, enabling the solubility of minerals, vitamins, and nutrients.

Interestingly, water can form different structures even under similar chemical conditions. For example, mountain spring water behaves differently from tap water in experiments, suggesting water may retain a “memory” of its environmental history. This phenomenon is often cited in the context of healing waters, such as Lourdes in France, where over 6,000 documented miracle recoveries have occurred without clear medical explanation.

Water and the Human Body

A glass of water sets off a cascade of physiological effects. It moistens mucous membranes, helps clean the throat, and aids digestion. In the intestines, it facilitates nutrient absorption and smooth bowel movements. On average, we ingest 2.4 liters of water daily, supporting processes such as blood circulation, oxygen transport, temperature regulation, and detoxification.

Dehydration can cause high blood pressure, reduced oxygen supply, and respiratory problems. Water keeps our brains functional (comprising 90% water), lubricates joints and intervertebral discs, supports muscle function, and ensures efficient waste removal through kidneys and skin.



Sebastian Kneipp and Hydrotherapy

Sebastian Kneipp, a 19th-century Bavarian priest, revived and popularized water therapy after curing his own tuberculosis using cold water treatments. Influenced by older hydropathy texts, Kneipp emphasized regular exposure to water, movement, herbal remedies, a healthy diet, and a balanced lifestyle—his five pillars of health.

He developed a unique method of alternating hot and cold water applications. These techniques improve blood flow, stimulate the immune system, and train the body to rewarm naturally after cold exposure. Despite facing legal opposition, his reputation grew. His teachings were eventually compiled into books and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including support from Pope Leo XIII.

Modern Kneipp Hydrotherapy

Kneipp therapy uses water's temperature and application method to stimulate the body. Cold water treatments cause vasoconstriction followed by vasodilation, improving circulation. Applications include:

- Cold washes: Simple home treatments using a wet towel or washcloth.
- Pouring/casts: Water is poured using a hose or watering can; alternating hot-cold casts are effective for vascular training.
- Baths: Brief, controlled baths are energizing and support circulation.
- Treading water/snow walking^{***}: Stimulates the immune system, especially for the feet.

These therapies enhance regulation of heat balance and improve overall resilience. Warm water calms the body, while cold water stimulates it, especially if applied to already warmed areas.

Kneipp for Children and Fever Relief

Children's treatments must be gentler due to less stable temperature regulation. Activities like treading water, arm baths, dew or snow walking are playful and effective.



For illnesses, Kneipp suggested treatments like:

- Moist knee socks: For fever reduction.
- Warm chest compress: To ease breathing.

Conclusion

Though Kneipp didn't invent hydrotherapy, he formalized a structured method rooted in practical success. His five pillars—water, herbs, exercise, nutrition, and lifestyle—remain relevant in modern holistic medicine. Kneipp therapy continues to demonstrate the vital and multifaceted role of water in maintaining and restoring health.



해양치유의 또 다른 얼굴

: 절영도 절벽 식물채집과 자연치유

김 혜 경 | 실험실 C 아티디렉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센터장

1. 들어가며

절영해안산책로의 식물을 조사하러 자주 영도다리를 건넌던 시기가 있었다.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발을 디디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험실 C는 절영로에 자생하는 식물을 조사하고, 누구나 이곳의 식물을 손쉽게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식물 가이드 도감, 『절영로 식물오감』을 작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영도 남서쪽 해안,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중리해녀촌까지 이르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리서치를 위해 절영로의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던 어느 날, 바위틈에서 반짝거리는 잎 하나를 만났다. 그 잎은 강렬한 짙은 색을 지니고 있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이 해안의 바다와 식물, 그리고 그들 사이를 흐르는 감각에 집중하게 되었다. 절영로를 걷는 시간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 감각을 확장하는 여정이었다. 이름 모를 풀들을 만나고, 저마다 다른 잎사귀의 형상에서 나뭇의 지혜를 읽으며, 그들이 품은 장소의 기억을 몸으로 느끼는 일이었다.

오늘날 부산의 바닷가는 해양레저시설, 산업단지, 고층 아파트들이 해안을 대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틈에서 식물은 자라고 있고, 그들은 묵묵히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우리가 잊고 있던 감각, 다시 연결해야 할 기억을 되살려준다. 『절영로 식물오감』은 바로 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의 오감을 식물의 감각 구조에 대입해보는 상상, 그리고 그를 통해 감각을 회복하려는 실천. 우리는 그 상상을 돕기 위해 ‘군소 씨’라는 상상의 안내자를 등장시켰다. 이번 발제에서는 『절영로 식물오감』을 통해, 절영로의 식물과 함께 짙은 바다의 기운을 품은 영도의 길을 다시 걸어보고자 한다. 이 길 위에서 식물과 인간이 맺어온 관계의 감각적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감각, 기억, 장소와의 관계—을 다시 사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절영로라는 경계: 섬과 도시, 자연과 산업의 교차

영도는 섬의 정체성과 도시의 밀도가 기묘하게 포개진, 이중적 풍경을 지녔다. 특히, 절영로는 감각의 무대이자 생태의 층위를 지닌 공간이다. 그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절영로는 바다와 마을, 갯바위와 숲이 맞닿아 있는 복합적 경계 위에 존재한다. 흰여울문화마을에서 태종대까지 이어지는 7.5km의 이 길은 때로는 바다와 나란히 걷다가, 절벽 아래로 휘어지고, 다시 산허리를 따라 굽이진다. 절영로는 과거 해녀들이 물질을 하던 작업장이자, 한때는 해양경비대 면회객이 오가던 그리움의 통로였고, 피란민과 노동자의 발자국이 포개진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지금은 데크와 계단이 정비된 산책로가 되었지만, 식물들은 여전히 그 틈새마다 뿌리를 내리며 이곳을 살아간다. 축대 아래, 바위틈, 사람이 좀처럼 다가서지 않는 경사지 곳곳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라난다. 해풍에 흔들리는 곰솔, 바닷물의 염기를 품은 변행초, 거센 바람에도 굽히지 않는 사스레피나무처럼, 절영로의 풍경에는 생태적 긴장과 회복이 공존한다. 마을과 숲이 위아래로 나뉘어 조망되는 이 길은 산과 주거공간이 겹쳐 보이는 경관 위에 놓여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맞물리는 감각의 장이다. 이곳은 묘박지와 방파제, 옛 해녀들의 갯바위와 피란민의 집터, 군사기지와 관광광지 개발이 중첩된, 겹겹의 시간과 기억이 교차하는 다층적 공간이다. 절영로를 걷는다는 것은 이 복합적인 경계 위를 따라, 장소에 켜켜이 쌓인 생명과 인간의 이야기를 감각하는 일이 된다.

3. 리서치 및 오감 루트

- 리서치

『절영로 식물오감』 프로젝트는 3년에 걸쳐 현장조사와 기록, 시민 프로그램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초기에는 절영로 곳곳을 직접 걸으며 식물을 관찰하고, 마을 주민들의 구술을 수집하고, 식물의 위치와 특성을 정리해 지도화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이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단행본 『절영로 식물오감』을 기획하였으며, 책 출간과 연계된 오감소풍 투어, 식물오감 대화카드, 식물관찰 노트 등을 제작하고, 전시로도 선보였다. 오감소풍은 늦가을 절영로에서 시민들과 함께 식물을 관찰하며 장소성과 식물문화사를 체감하는 소규모 투어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들은 책과 함께 배포된 플레이 키트를 들고 산책을 하며, 관찰한 식물에 대해 기록하고 서로 이야기 나눴다. 카드와 노트는 식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뿐 아니라 감각을 환기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감각 실천을 유도했다.

- 오감 루트

『절영로 식물오감』에서는 절영로를 따라 4가지 루트를 안내한다. 1루트는 흰여울해안터널에서 해녀촌과 365계단을 지나 절영해랑길과 함지골로 이어지고, 2루트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서 시작해 돌계단을 거쳐 이송도전망대와 흰여울문화마을을 지난다. 3루트는 함지골에서 시작해 아까시나무, 붉나무, 오리나무, 산벚나무, 변행초, 동백나무 등을 따라 75광장까지 이르며, 4루트는 75광장에서 시작해 팔배나무, 산초나무, 곰솔, 노린재나무를 지나 85광장에 도착한다. 각 루트는 그곳의 대표 식물들과 풍경, 장소의 이야기를 따라 구성되었으며, 걷는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의 계절 변화와 감각적 특징들을 담고 있다.

4. 기억의 식물

절영로를 따라 걷다 보면, 그 길 위에 자라나는 식물 하나하나가 해당 장소의 기억과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흰여울문화마을 아래 절영해안산책로 초입의 바위틈에서는 염생식물인 변행초를 만날 수 있다. 변행초는 짠 바닷바람 속에서도 곳곳하게 자란다. 앞에는 유리구슬 같은 돌기가 있어 염분을 조절하며 살아가는데, 이는 짠 땅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변행초의 생존 전략은 영도라는 섬과 도시의 이중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식물적 은유이기도 하다. 또한 3루트 구간의 함지골 근처에서는 독말풀을 발견할 수 있다. 누군가는 도시 미화 작업 중 이 식물을 뽑아내려 했지만, 사실 독말풀은 오랜 민속과 약용의 기억을 간직한 존재다. 독성 식물이지만, 예로부터 고통을 덜어주는 약초로 쓰였고, 때로는 주술적 의미를 지닌 식물이기도 했다. 절영로의 식물들은 인간의 개입과 방치, 그리고 정비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살아남아왔다. 식물은 인간의 시간 바깥에서 순환과 복원의 리듬을 따른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의 식물’이라 부른다. 4루트인 75광장에서 85광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노린재나무와 사스레피나무를 만날 수 있다. 노린재나무는 특유의 매운 냄새를 풍기며, 과거에는 천연 매염제로 사용되던 민속적 감각을 품은 나무다. 사스레피나무는 3월이면 후각을 자극하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실험실 C 대표이자 숲 큐레이터인 박미라는 숲은 조용하지만, 식물의 냄새는 수다처럼 쏟아진다고 했다. 이처럼 절영로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그 자체로 감각의 충위를 지니고 있다. 각각의 식물은 장소의 기억, 역사, 민속, 생태와 연결되며, 절영로라는 복합적 공간을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구성하고 있다.

5. 군소 씨의 오감일기

『절영로 식물오감』에서 우리는 ‘군소 씨의 오감일기’라는 챕터를 통해 감각의 실험을 시도하였다. 군소 씨는 느리게 이동하는 바다달팽이 캐릭터로, 인간 중심의 감각 체계를 벗어나 식물의 감각을 상상하고 질문하는 안내자다. 그는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식물의 생리와 반응 양상에 대입해 관찰을 유도한다. 이러한 감각의 치환은 단순한 의인화가 아니다. 이는 감각의 회복을 위한 철학적 상상이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의 감각을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군소 씨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각의 층위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은 감각 너머의 생명 세계로 향한다. 예컨대 3월의 절영로에서는 사스레피나무 꽃에서 암모니아 향이 퍼진다. 식물의 냄새는 식물의 수다일지도 모른다. 사람에게 후각은 사적인 감각이지만, 식물과 동물에게는 공적인 소통 수단이다. 숲에 번지는 냄새는 어쩌면 식물들의 신호이자 교환의 언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일지도 모른다. 촉각 역시 식물에게 분명한 감각이다. 하늘타리나 칩과 같은 덩굴식물은 대상에 닿으면 감아 오르고, 파리지옥이나 미모사는 자극에 반응하거나 무시하는 학습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반응은 식물에게도 생존과 관계된 본능적인 감각임을 보여준다. 미각은 뿌리를 통해 작동한다. 식물은 뿌리로 영양분을 감지하고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이는 사람의 입맛과는 다르지만, 특정한 조성의 흙을 선호하거나 피하는 정교한 생존 전략이다. 청각에 대한 상상은 가장 도발적이다. 매미 소리로 가득한 절영로의 여름 숲에서 군소 씨는 묻는다. “식물도 들을까?” 일부 연구들은 식물이 벌의 날갯짓 진동에 반응하거나, 가뭄 상태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파장의 세계 속에서 식물은 이미 소리를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식물은 ‘빛을 본다.’ 그것도 매우 정교하게. 식물은 온몸에 분포한 광수용체로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까지 감지한다. 빛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몸을 기울이고, 색과 패턴으로 곤충을 유혹하거나 방어한다. 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감각을 통한 생존의 기술이자 식물 고유의 시각적 전략이다.

이처럼 『절영로 식물오감』에서 시도된 감각의 확장은 식물을 단순한 생태 객체가 아닌, 감각적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안한다. 군소 씨의 시선은 식물 감각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던 감각의 지층을 일깨우는 상상적 매개자다.

6. 예술로의 확장: 부유의 시간 프로젝트

『절영로 식물오감』 리서치가 진행되는 마지막 해에, 우리는 ‘부유의 시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식물과 바닷가의 감각을 예술로 번역해보는 실험을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절영해안산책로를 3개월간 관찰하고, 자생 식물과 해양 생물, 구술 인터뷰를 토대로 전시를 기획한 감각 기반 리

서치 실천이었다.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 등 7명의 참여자들은 2월부터 4월까지 워크숍을 열고 절영해안산책로의 설화, 생태, 염생식물, 저서생물 등을 다각도로 탐구했다. 전시는 총 15곳의 예술 스팟, 9곳의 식물 스팟, 2곳의 구술 스팟으로 구성되었고, 바닷가 산책길에 설치된 작품들과 함께 온라인 전시로 이원화되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해조류와 쓰레기를 사탕으로 만든 ‘비치코밍캐디’(강은경), 성적 다양성을 지닌 해양생물 이야기를 담은 ‘바다의 아이들’(김덕희), 저서생물의 생태를 담은 드로잉 ‘절영 그리고...’(김진주), 바람의 규칙을 시각화한 키네틱아트 ‘바람이 가진 규칙’(김태희), 군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5편의 영상 ‘서식지’(이재은), 만화 ‘음음음’(전지), GPS 사운드 작곡 ‘담겨지다’(정만영) 등이 있다. 식물 스팟인 〈절영로 수피카드〉는 산책 중 자주 마주치는 9종의 나무 껍질을 관찰하고 QR코드로 나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구술 스팟 〈절영로 바다와 주민의 기억〉은 풍어제, 해녀, 아카시아집, 바닷사람의 이야기 등 절영로 일대의 생활사를 담았다. 작품들은 각기 다른 감각과 기억의 방식으로 절영로를 재해석했으며, 관람객은 ‘관찰꾸러미’ 키트를 들고 자신만의 속도로 작품과 자연을 경험했다. 부유의 시간’은 단지 전시가 아닌 감각의 실험장이자, 식물과 바다, 인간과 예술이 서로 감응하는 접점이었다.

7. 나가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식물들은 결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한때 우리의 산과 해안은 심각하게 황폐했고, 오늘의 풍경은 오랜 시간에 걸친 회복과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 절영로의 식물들은 지금도 베어지고, 다시 자라며, 사라졌다가도 또다시 돌아온다. 해풍과 빛을 감지하고, 향기로 소통하며, 생태적 틈새를 점유해간다. 이들의 감각 구조는 인간의 감각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절영로 식물오감』은 이러한 세계를 다시 상상하고, 감각을 통해 장소와 존재를 새롭게 인식해보려는 하나의 실천이었다. 식물과 바다, 사람과 예술이 만나는 경계에서, 우리는 다시 사유하고 감응하는 감각의 인문학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예술이 가능하게 만드는 느린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부산의 항구와 포구를 따라 걸어볼까?

김 경 화 | 창작공간 창 이사

〈부산의 항구와 포구의 문제점〉

부산은 해안선 306.2km(자연해안선 219.5km+인공해안선)을 따라 60여개의 항구와 포구가 있다. 부산개항 이래 물류 중심의 항만정책과 근대화과정을 통해 조성된 공단들과 곳곳에 행해진 매립과 매축으로 해안의 지형은 크게 변형되어왔는데 자연 해안선은 매립과 매축으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거나 쇠락하여 방치된 곳들이 생기고, 재개발로 덧칠되거나, 어업의 쇠퇴와 어민공동체 분열과 개발에 따른 갈등들이 존재한다.

〈부산의 해양경관에 대한 재인식〉

부산항을 중심으로 설계된 물류 중심의 항만시설과 배후산업 시설들로 해안선의 본래의 모습을 잃고 부딪길은 멀게만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부산신항으로 항만시설이 이동되면서 북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의 경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산복도로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모습을 떠올리면, 북항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리라는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낀다. 현재 동구 북항 재개발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주거시설이 바다 경관을 사유화해 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상업업무지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락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이 명칭을 바꾸어 들어서며 인·허가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는 것이다. 해안 경관을 활용한 카페 및 음식점들도 해안 접근성을 저해하고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안선을 따라 카페, 레스토랑, 리브호텔 등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수없이 훼손되어왔고, 해당 업소를 거치지 않고는 바닷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



하다. 이 또한 인·허가 특혜 등의 문제에서 부산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부산지역 해안 경관에 대한 재인식과 공론화를 미룰 수 없지 않을까.

〈부산의 항구와 포구에 대한 재인식〉

우선 해안경관 디자인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바다, 차도, 주택(마을) 순으로 배치된 해안도로를 해양경관의 공공성과 안전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 인도, 주택(마을), 차도 순서로 재배치해야 한다. 기존 횃집 등 상업 건물의 디자인이나 고리원전 등의 시설물들도 보다 심미적인 디자인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해안선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개성 없이 개발되고 항만시설이나 건설들로 해안경관이 파괴되어 간다. 이를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는 다채로운 해양문화를 되찾고 포구와 마을의 이야기를 지키고 복원해야 한다. 마을도 관계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사라진다. 다양한 친수공간들의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하며, 인간적인 보행도시의 가능성을 상상해야 한다. 산업과 자본의 논리만이 아닌 해양문화와 해양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부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갈매길을 따라 다채롭게 이어지는 부산의 해안을 보통 기장권역, 송정·해운대권역, 광안리·용호권역, 부산항 영도·송도권역, 다대·장림권역, 강서·가덕권역 등 6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1. 기장권역은 기장군의 해안은 길이가 월내에서 송정까지 40.7km 아홉 개의 포구가 있어 연근해 어업이 발달했다. 낙동강 지역의 농경보다 어로의 성격이 강하다. 해녀체험, 후릿그물 등 해양체험 콘텐츠 등이 가능하다. 해안 마을마다 현재에도 마을 당집과 당산나무가 있고 당산제와 풍어제가 행해진다. 특히 동해안 별신굿(중요무형문화제 제82호)의 거점으로 기장 어촌사람들의 평안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매년 정월 대보름 전후로 5~7일간 공수, 대변, 두호, 학리, 칠암, 이천 등 6개 마을이 번갈아 가며 지내고 있다. 별신굿의 문학적 서사, 퍼포먼스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문화컨텐츠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2. 송정·해운대권역은 송정(포구), 삼포(구덕포, 청사포, 미포)와 함께 현재 거의 단절된 해수욕장과 포구의 유기적 연결을 고민해야 한다. 해운대, 동백포구는 해양레저스포츠와 해양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3. 광안리·용호권역은 친수공간과 아파트 사이에 낀 항구들이 대부분으로 재송포, 해운포, 석포 등 사라진 포구와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특히 국가지질공원인 이기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예술공원으로 개발하고자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주목해봐야만 한다. 우동항, 민락항, 감만항 등도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의 역사가 지

워져가는 지역이다.

4. 부산항 영도·송도권역은 원도심 항구로 개항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북항의 폐쇄형 항만에서 보행도시형 개발을 이끌어야 하며, 부산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의 켜를 찾고 보존해야 할 지역이다. 또한 영도의 하리포구와 중리포구의 해녀촌 보존과 제주와 영도, 기장의 해녀들을 비교·종합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5. 다대·장림권역은 바다와 공단 사이에 갇힌 포구들이 있지만, 두도, 몰운대 등 자연섬과 해안 절경이 뛰어나며, 어업을 행한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바다와 강 사이로 모래톱이 형성된 낙동강 하구, 다대포의 갯벌, 최고의 낙조 등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자원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6. 강서·가덕권역의 가덕도는 부산 해안길 306.2km의 출발점이자 모래사장과 갯벌이 발달한 해양문화의 보고이다. 다양한 어종으로 어로와 농경이 발달하고 부산시지정 동백군락지와 백년숲, 일제강점기 포진지 등 역사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그러나 가덕도 입구에는 현재 신항이 세워졌고, 대항, 세바지, 외양포 등의 마을은 신공항 예정지로 지정되어 이 모든 자원들이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재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선 강서구 명지동은 전통적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온 옛 염전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낙동강하구와 모래톱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고 복원해야 한다.

〈두 도시 이야기〉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고층빌딩과 구획된 도로, 대규모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으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도시만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려 침묵하는 도시에서 살아갈 것인지, 전통과 기억을 보존하고 장소마다 이야기와 감각이 살아 있고, 환경친화적인 친수, 친해양 공간과 각각의 포구와 마을들이 가진 서사적 의미를 회복한 도시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할 공간이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최우선시 되며, 해안 경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는 높이 관리 기준 강화, 건축 규제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장소마다의 역사와 서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치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염포생활권 사례

- 전남 고흥군 봉래면(외나로도) 염포마을 -

김 희 진 | 염포마을권역 현장소장

1.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염포마을

○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 염포생활권은 유형2 생활플랫폼 조성에 해당하며 지방어항(염포항)과 주변 지역(봉래면소재지)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 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해 도심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염포마을은 전체 인구(148명)의 약 79%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염포항을 중심으로 소규모 어업(자망, 양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규제, 기후 변화, 종사자 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어촌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 염포항 생활권 설정



2. 엮포마을 소개

○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인 외나로도에서도 가장 남쪽 끝이며 지방도 15호선의 종착지로 현지에는 도로끝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 육지와는 연륙교(고흥반도와 내나로도)와 연도교(내나로도 와 외나로도)로 1995년에 완전히 연결되었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물리적, 정서적 고립감이 있는 상태로 생활서비스의 접근이 취약하고, 인근의 관광지와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관계인구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 조선시대 나라의 소와 말을 키우던 목장이 있던 섬이라 나라도로 불렸다는 이 섬에서 엮포마을은 목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로 들어 온 소를 부르는 소리에서 소음개라 불리다가 이후 소금개로도 불리게 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자화하여 엮포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불리고 있다.

○ 엮포마을은 상촌(앵구미), 중촌(모시리), 하촌(개안)으로 긴 지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서로 간의 간격으로 인해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며, 공동체 활동이 부족한 편으로 공통된 관심사가 필요한 마을이다.

○ 그렇지만 뛰어난 자연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공동체 형성 및 관계인구를 유입해내는 새로운 활력 거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서 진행하는 하드웨어 구축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엮포마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엮포마을 하드웨어(어촌 스테이션) 구축 계획안



3. 염포마을의 지역자원

○ 염포마을은 개발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환경과 오랜 마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지리적 여건으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품고 있는 곳이다. 오히려 인적이 드물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휴식과 휴양, 멈춤과 쉼의 장소로서 해양 치유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염포마을의 자원지도



4. 염포마을 해양치유

○ 명상과 요가, 쉼과 휴식

- 장소: 염포해수욕장, 염포항 방파제, 하춘 방파제, 염포마을 편백숲, 봉래산 편백숲, 하춘 갈대숲 등
- 자연 경관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데 고요하고 여유로

- 운 환경에서 명상 또는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 특히 염포해수욕장에서는 직접 해수에 신체를 담그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이 가능하며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 질 수 있다.



○ 마을 공동체 춤 프로그램

- 염포 몽돌리안 홀라 워크숍 진행
- 장소: 청암대학 연수원(어촌 스테이션 후보지)
- 자연과 교감하며 춤추는 홀라를 활용한 오감 만족 문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해양 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공동체 춤을 통하여 신체를 움직이고 다른 참여자들과 교감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 산림 치유, 산책

- 장소: 염포마을 편백숲, 봉래산 편백숲
- 염포마을 편백숲은 현재 자연적인 상태로 남아 있으며 야자 매트와 같은 약간의 정비를 통하여 즉시 활용 가능하다.
- 인근 봉래산에 있는 편백숲 숲길은 이미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명소이다. 적당한 길이로 조성된 길을 따라 걸으며 무리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하는 운동과 휴식을 누릴 수 있다.
- 시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일깨우는 치유 활동의 공간이다.





5. 정리

○ 염포마을은 특별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마을 환경을 활용하여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하다.

○ 염포마을의 주민 특성상(고령화)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 더불어 교육을 통해 주민을 해양치유사로 발굴하여 주민 공동체가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어촌 스테이션과 어민 쉼터, 주민 쉼터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구축하게 되면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향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정주민구가 발생한다면 염포마을은 새로운 마을 정체성을 가질 것이고, 어촌 마을의 특성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미래형 마을로 거듭날 것이다.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3분과

부경사학회·호남사학회

[특별분과] 부산의 바다와 목포의 바다

고대 한일 간의 또 하나의 항로
- 오키노시마를 중심으로

이근우 부경대학교

對馬의 재지세력과 왜구
- 14세기 宗氏와 畠田氏를 중심으로 -

정영현 부산대학교

부관페리와 일본인 관광
- 포스트식민주의의 정동적 유산 -

이지현 부산대학교

고대 강진만 서안 지역~제주 지역 간
'해로'와 '탐라'·동음현·탐진

강승재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조선 전기 전라우수영의 설치와 위치 변화 연구

박세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일제강점기 목포지역 김 양식 현황과 사회 변화

탁현진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고대 한일 간의 또 하나의 항로

- 오키노시마를 중심으로

이 근 우 | 부경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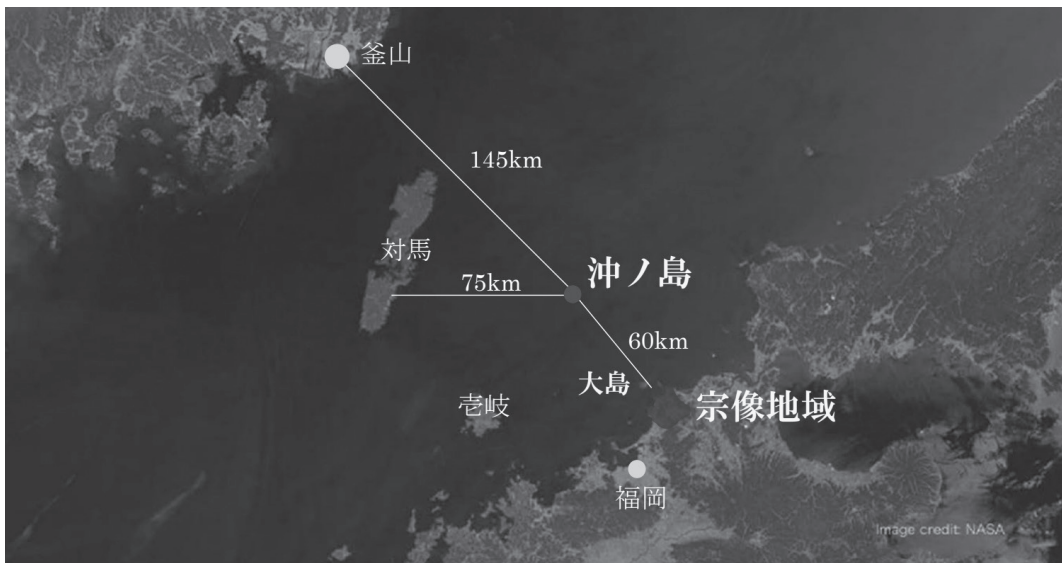


그림 1. 부산과 오키노시마·宗像

I. 머리말

고대 한일 간의 대표적인 항로는 대마도와 일기도를 경유하는 항로이다.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의 통신사가 이용했던 항로이며, 현재도 한일 간을 오가는 선박들은 부산 - 대마도 - 후쿠오카 - 오사카 항로를 주로 이용한다. 일시적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울산 - 고쿠라 항로가 개설되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4~9세기까지 사용된 또 하나의 고대 항로가 있었다. 구주의 종상(宗像, 무나카타)에서 출발해서 충도(沖島, 오키노시마)를 거쳐 대마도 북단으로 가는 항로이다. 이 항로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나, 오

키노시마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특급에 해당한다. 이 항로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일본 신화의 내용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II. 일본 신화 속의 종상신

오키노시마는 외딴 섬이고 여자는 상륙할 수 없는 금녀의 전통을 현재도 지키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고대 유물이 발견되어,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유물뿐만 아니라, 이 섬과 관련된 신화도 존재한다. 종상여신과 관련하여 『고사기』에는 스사노오와 아마테라스 사이의 서주맹약에 관한 이야기를 신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먼저 스사노오가 차고 있던 십권검(十拳劍)을 달라고 해서 쳐서 세 조각으로 쳐서 부러트린 뒤 천지진명이라는 우물에 흔들여 씻은 다음 깨물어서 뱉아내자, 안개 속에서 신이 생겼다. 신의 이름은 타기리히메인데 또한 오키쓰시마히메이라고도 한다. 다음은 이찌키시마히메인데, 또한 사요리히메라고도 한다. 다음은 타기쓰히메이다. (중략) 그래서 먼저 생겨난 신 타기리히메는 무나가타(胸形)의 오진궁(奥津宮)에 진좌하였다. 다음으로 이찌키시마히메는 무나가타의 중진궁(中津宮)에 진좌하였다. 다음으로 타기쓰히메는 무나가타의 변진궁(邊津宮)에 진좌하였다. 이 세 신은 무나카타군 등이 모시는 세 분의 신이다.¹⁾

이와 유사한 내용의 신화는 『일본서기』에도 실려 있다. 다만 신의 이름이 타고리노히메(田心姫)/오키쓰시마히메(瀛津島姫), 이찌키시마히메(市杵島姫), 타기쓰히메(湍津姫) 등으로 나타나 다소 혼란스럽다. 그러나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 사이의 서주맹약으로 태어난 세 여신이 현재의 종상신사의 제신이 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신화는 『일본서기』에도 실려 있다. 다만 신의 이름이 타고리노히메(田心姫)/오키쓰시마히메(瀛津島姫), 이찌키시마히메(市杵島姫), 타기쓰히메(湍津姫) 등으로 나타나 다소 혼란스럽다. 그러나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 사이의 서주맹약으로 태어난 세 여신이 현재의 종상신사의 제신이 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 『古事記』天照大御神先乞度建速須佐之男命所佩十拳劍 打折三段而 奴那登母母由良邇【此八字以音 下效此】振瀛天之眞名井而 佐賀美邇迦美而【自佐下六字以音 下效此】於吹棄氣吹之狹霧所成神御名 多紀理毘賣命【此神名以音】亦御名謂奥津嶋比賣命 次市寸嶋上比賣命 亦御名謂狹依毘賣命 次多岐都比賣命【三柱 此神名以音】(중략) 故其先所生之神 多紀理毘賣命者坐胸形之奥津宮 次市寸嶋比賣命者坐胸形之中津宮 次田寸津比賣命者坐胸形之邊津宮 此三柱神者 胸形君等之以伊都久三前大神者也

이들 세 여신은 현재 각각 종상신사의 변진궁 중진궁 충진궁의 제신이다. 종상신사의 제신이 천황가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두 문헌이 편찬되던 7세기 말 8세기 초 단계까지도 이미 종상신사가 중요시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가기 위한 해로 중에서 최단거리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오키노시마의 경우, 이미 4세기 중후반부터 제사를 지낸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²⁾ 이 시기의 유물은 대부분 야마토정권과 그와 연계된 세력들과 연관된 것이다. 4세기 중후반은 야마토정권이 백제와 외교 관계를 맺은 시기이자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했다고 하는 시기이다.³⁾ 그 이전의 해로는 당진반도(糸島半島, 이토시마)에서 일기도와 대마도를 징검다리처럼 이용하여 한반도로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마토정권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기내에서 세토내해를 거쳐 북구주 지역에 이른 다음, 다시 당진반도까지 서진해서 일기도 대마도를 거치는 항로는 크게 우회하는 셈이다. 종상신사 변진궁에서 당진반도·일기도를 거쳐 대마도 북단까지 가는 항로는 직선거리로만 192.8km이고, 종상신사 변진궁에서 오키노시마를 거쳐 대마도 북단까지 가는 항로는 130km이다.

한편으로 일기도·대마도 항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축전·비전·일기도·대마도 지역의 토착 세력들을 모두 복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종상신사에서 직접 대마도도 가는 경우라면, 종상지역과 대마도 지역의 토착 세력만 문제가 된다. 종상신사 및 해당 지역의 유력 호족들의 고분에서 야마토정권 중앙의 최고급 유물들이 나타나는 양상이야말로, 야마토정권과 종상지역의 유착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Ⅲ. 오키노시마 제사 유적

종래에는 22개에 이르는 유적이 각각 제사를 지낸 직접적인 현장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각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 시기가 서로 다른 물품들이 적잖이 혼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토기가 집중적으로 확인된 1호 유적, 동경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17호 유적⁴⁾처럼 특정한 물품을 모아 둔 것

2) 岩本 崇, 「鏡からみた沖ノ島祭祀の展開」, 『沖ノ島研究』9, 2023.

3) 『日本書紀』 신공기 46년조 등.

4) 17호 유적에서는 총 21매의 동경이 확인되었다. 小田富士雄, 『沖ノ島祭祀遺跡の再検討2』,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研究報告II-1, 2012, 20~25쪽.

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가 다른 물품들이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오키노시마 유적은 일정한 장소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각종 토기류는 폐기하고, 봉헌품들은 따로 각각의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일본 신사의 제사 의례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⁵⁾ 이렇게 보면, 왜 특정한 물품이 특정한 유적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유적들이 좁은 바위 위나 바위 틈과 같은 곳에 구성되어 있는 이유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또한 봉헌품들이 비치된 암석군 그 자체가 제사의 대상 즉 신체(神體) 혹은 어형(御形, 미카타)이라고 볼 수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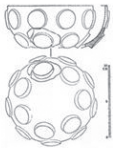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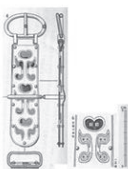
地域 段階	沖ノ島	新羅	日本本土
암상 제사 5세기 전 반			
암음 제사 1 기 5세기 후 반		 황남대총 북분  노서리 215번지 고분	 新澤126号墳
암음 제사 2 기 6세기 전 반	  	 호우총	 藤ノ木 古墳

그림 2. 박광춘, 「沖ノ島(오키노시마)出土 新羅 遺物の 研究」, 『문물연구』9, 2009. 42쪽)

5) 笹生 衛, 「日本における古代祭祀研究と沖ノ島祭祀」,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研究報告II-1」, 2012.53~55쪽.

6) 笹生 衛, 「日本における古代祭祀研究と沖ノ島祭祀」,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研究報告II-1」, 2012. 42쪽.

IV. 종상신사와 야마토왕권

종상신사 내지 종상씨가 야마토 왕권과 관련을 맺는 시기는 신공·응신기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응신 때 중국 남조와 교통하면서 일단 흉형대신 즉 종상삼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흉형대신이 공녀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북부 규슈의 해상 교통을 장악하고 종상지역의 토착세력이 항로를 통과하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두 세력이 최초로 접촉한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후 이증기에 보이는 것과 거지군이 이 지역의 백성을 빼앗았다고 한 것은 야마토 왕권이 이 지역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지부와 신호를 빼앗아 다시 종상삼신에 돌려줌으로써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기도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응신 41년(394년) 봄 2월, 이 달에 아지사주 등이 오(吳)에서 축자로 왔다. 이때 흉형대신(胸形大神; 무나카타노오호카미)이 공녀(工女)들을 원했기 때문에 형원(兄媛)으로 하여금 흉형대신을 받들도록 하였다. 이는 즉 지금의 축자국에 있는 어사군(御使君; 미츠카히노키미)의 선조이다. (하략)⁷⁾

이 기사는 오키노시마 제사의 제2단계와 대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상 지역의 세력이 야마토 왕권과 연계하여 중국 남조와 교섭을 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남조의 선진 기술을 자신들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의 제사 유적에서는 당시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는 유물들도 확인되고 있다(금동제 龍頭).

이증 5년(404년) 봄 3월 무오삭에 축자(筑紫; 츠쿠시)의 삼신(三神)이 궁중에 나타나 “어찌하여 내 백성을 빼앗느냐? 내가 지금 그대를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도는 하였지만, 제사는 지내지 않았다.⁸⁾

7) 『日本書紀』應神 卅一年 春二月甲午朔戊申, 天皇崩于明宮. 時年一百一十歲[一云, 崩于大隅宮]. 是月, 阿知使主等, 自吳至筑紫. 時胸形大神, 有乞工女等. 故以兄媛奉於胸形大神. 是則今在筑紫國, 御使君之祖也.

8) 『日本書紀』履中 五年 春三月戊午朔, 於筑紫所居三神, 見于宮中, 言, 何奪我民矣. 吾今慚汝. 於是, 禱而不祠.

V. 맺음말

오키노시마의 제사유적은 4세기 후반부터 10세기에 이르는 긴 기간동안 같은 장소에 종교적인 의례가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이 제사의 대상은 종상신 혹은 종상여신이라고 부르는 세 여신이다. 이 세 여신은 삼귀자(三貴子)라고 불리는 이자나기의 자손 중 스사노오와 아마테라스 사이에서 생성된 신들이다. 신화는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현실 속의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도 그 의미를 담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지역의 신에 대해서는 신궁(神宮)을 조영하는 한편 신군(神郡)을 설정하여 제사의 경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 신화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에 대한 제사의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비되었다. 신군은 723년 단계에서 8개소가 존재하였다. 신군의 설치는 649년(大化 5)부터 시작되었으며, 천무천황 무렵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천무천황이 종상씨의 여자와 혼인한 것도 신군의 설치, 종상신사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항로는 구주 내에서 해로나 육로로 송포(松浦, 마쓰라)로 우회하지 않고 종상(宗像, 무나가타)에서 바로 대마도 북단을 거쳐 최단 거리로 한반도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 특히 북구주에서 축자군(筑紫君) 반정(磐井)과 같이 지역 세력이 할거할 경우에도, 손쉽게 한반도로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이 항로의 존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왜적과 같이 신라를 침략해 오는 존재와 왜와 같이 신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모순적인 기록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세기에 한반도를 공격해 온 왜적이 가야와 연계된 북구주의 세력이라면, 미사흔이 인질로 갔다가 돌아온 왜는 대화 지역의 왜이고, 이때는 종상을 매개로 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후대의 사실이지만, 고려말 조선초에 왜구들이 한반도를 공격해 왔을 때, 고려와 조선은 왜구세력과 다른 구주탐제(九州探題)나 실정막부(室町幕府)와 교섭하여 왜구를 막고자 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일본도 6세기 초반까지도 그 통합력이 약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나타나는 왜도 서로 다른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오는 항로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것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對馬의 재지세력과 왜구

- 14세기 宗氏와 畠田氏를 중심으로 -

정영현 | 부산대학교

1. 머리말

왜구의 근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료에서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되는 지역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느 쪽이건 對馬가 왜구의 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對馬가 왜구의 근거지였고, 왜구가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세의 對馬에는 왜구를 주도하거나 혹은 왜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對馬에는 다양한 층위의 세력이 존재하였다. 그 중에는 이른바 ‘島主’라는 지위를 세습해 온 최고 실력자인 宗氏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宗氏를 따라 對馬에 들어와 정착한 여러 가문도 있었다. 또한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착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宗氏가 들어온 이후에도 對馬의 각 포구나 사원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세력권을 유지하면서 이들은 상황에 따라 宗氏와 협력하거나 반목하였다. 宗氏 역시 가문 내부에서 여러 세력으로 분화하였고, 그 사이에서 내분을 일어나 세력 간에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규슈 내의 남북조 내전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조선이 건국된 무렵에는 왜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對馬의 여러 인물이 조선에 투항하여 관직을 받고 양국 간의 외교나 교역 현장에서 종사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왜구의 활동과 對馬의 재지세력과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중세 초기의 阿比留 재청관인 시기의 왜구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대마도주 宗氏와 한때 큰 세력을 떨친 畠田氏라는 두 세력에 대하여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후자의 두 세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선과의 교역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고려 시기 왜구와의 관련성이나 왜구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한국의 고려 시기를 배경으로 宗氏 가문 내에서 대마도주 지위를 둘러싸고 일어난 내분과 왜구 상황, 그리고 畠田氏의 초창기 활동과 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1. 對馬 宗氏 초기 가계도(숫자는 대마도주 취임 순서)

3) 宗氏의 내분과 왜구

長節子の 연구에 따르면 宗氏는 對馬에 정착한 이후 2번의 정변을 맞았다. 이 중 1번째 정변은 ‘仁位 中村 宗家’라고 불리는 宗氏의 방계 일족이 본가의 島主 세습권을 침탈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방계 일족에서 澄茂와 賴茂라는 두 명의 ‘島主’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2번째 정변은 본가의 貞茂가 방계의 賴茂로부터 그 도주의 지위를 탈환한 것을 말한다.

長節子は 經茂에서 經茂로 권력이 넘어간 ‘첫 번째 정변’이 일어난 시기를 1374~1375년 사이로 보고 있다. 이 정변이 발생한 배경에는 宗氏의 주군인 大幸府 少貳氏에서 내분과의 연관성이 지적되었다. 당시 九州 본토에서 남북조 내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少貳氏 내부에서도 북조를 따르는 형 冬資와 남조를 따르는 동생 賴澄 두 세력이 나뉘어 있었다. 長節子は 經茂가 규슈의 남북조 내전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宗香이 형 經茂의 代官을 맡아 島政을 맡으며 세력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澄茂가 후계자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았다.

1368년(공민왕 17) 11월에 고려에 對馬島萬戶 崇宗慶의 사신이 도착하였는데, ‘崇宗慶’은 곧 經茂의 法名이며, 1361년 경 출가하여 이 법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經茂는 아들에게 도주의 지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방계의 세력에 눌러 조카 澄茂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게 되었다. 만약 對馬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經茂가 은거하게 된 계기라면, 經茂가 출가한 1361년 무렵 이미 양자 간의 권력이 점차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1361년 무렵 對馬 宗氏의 主君인 大幸府 少貳氏의 賴尙과 그의 아들 少貳冬資는 북조 측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에 宗經茂 역시 북조 편에 서서 때때로 규슈로 건너가 출진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少貳賴尙의 아들이자 少貳冬資의 동생인 少貳賴澄는 남조 편에 서서 1362년에는 征西府로부터 영지를 安堵 받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仁位の 방계 세력이 본가보다 남조 세력인 賴澄 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宗澄茂가 少貳賴澄로부터 이름의 ‘澄’ 글자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經茂로부터 도주의 지위를 세습 받지 못한 그의 아들 尙茂은 『조선왕조실록』에서 ‘(沙彌)靈鑑’이라는 법명으로 등장한다. 그가 승려가 된 것 역시 부친 經茂과 마찬가지로 방계가 권력을 차지하면서 도주의 지위를 잇지 못하도록 은거를 강요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1368년 崇宗慶이 고려에 사신을 보낸 것은 단순히 우호를 위해 파견한 것이 아니라, 經茂가 조카 澄茂를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의 관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1368년 무렵 對馬는 북조 측에서 다시 남조 측으로 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對馬가 주군 少貳氏의 내분 상황에서 북조 측인 少貳賴尙 대신 남조 측인 少貳賴澄 세력을 따랐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 무렵 도내에서 澄茂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조 측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왜구가 일시 소강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1368년 무렵 對馬 宗家 내에서 발생한 역학구도의 변화가 왜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對馬는 經茂 말기(1369~1375)에는 남조의 측에서 활동한 賴澄의 편에 가담하고 있었으나, 少貳冬資가 九州探題 今川貞世에게 모살당한 ‘水島の變’이 있었던 1375년 무렵 북조 측으로 돌아섰다. 이는 아마 九州探題 今川貞世는 水島の變 이후 少貳賴澄를 고립시키기 위해 少貳氏의 수하인 對馬 宗家を 守護職을 미끼로 회유하였고, 1375년 무렵 澄茂가 이를 받아들여 守護職에 임명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도주가 교체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이 對馬 도주가 따르는 진영이 바뀌고 있음에 따라 1399년의 宗貞茂가 고려로 보낸 문서 속에서 ‘酷吏(곧 방계)’를 임명한 ‘官’의 정체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생겼다. 長節子는 1375년 이후 澄茂와 賴茂가 북조에 속해 있었으므로 ‘酷吏’를 임명한 ‘官’은 역시 북조를 대변하는 九州探題 今川貞世일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이영은 ‘酷吏’는 ‘왜구의 배후’를 지칭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왜구를 금압하는 입장인 今川貞世(了俊)는 ‘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필자는 ‘酷吏’를 왜구의 배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시 對馬와 九州 정황상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시기	島主	도주의 직위	主君家(진영)	사용 연호
1351~1359	經茂	지두대	少貳賴尙(남조)	남조
1359~1368	經茂	지두대	少貳賴尙(북조)	북조
1369~1375	經茂(澄茂)	지두대	少貳賴澄(남조)	남조
1375~1398	澄茂, 賴茂	지두대→수호	今川貞世(북조)	북조

표 2. 남북조 시기 對馬 도주가 사용한 연호의 변화

對馬가 남조에 속한 1368~1375년 사이의 왜구의 추이를 보면, 1369년과 1375년 두 차례에 걸쳐 왜인들이 고려에 투항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 시기에 왜인(왜구)들이 투항한 것은 이들이 본국에 머물기 힘든 상황, 예를 들어 어떤 정변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對馬의 경우 이 두 시점 중 1369년은 對馬가 남조 편에 시작한 시기이고, 1375년은 반대로 북조 편에 시작한 시기이다. 對馬의 정세변화가 倭人의 투항과 교묘하게 시점이 맞아떨어진다. 1369년 투항한 왜인은 巨濟에 정착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다시 왜구가 되었다. 1375년의 경우 藤經光의 무리가 투항하였는데, 고려에서 그를 모살하려다 실패하자 돌아갔고, 이후 왜구가 더욱 잔학해졌다고 한다. 결국 고려에 투항한 무리가 곧 왜구인 것이다. 즉 왜구는 본가 쪽이건 방계 쪽이건 宗氏의 정치적 파트너로 활동하였다가 정변으로 인해 섬에 머물 수 없을 때면 일시 고려에 투항하는 식으로 몸을 의탁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본가 출신의 貞茂는 방계로부터 가문 내의 권력을 탈환하였고, 그의 아들 貞盛은 對馬 내에 세력을 굳히는 한편 한일통교자로 성장하였다. 특히 貞盛은 1443년(세종 25년) 癸亥約條를 전후하여 통해 무역 통제권을 획득하면서 對馬 내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3. 早田氏와 早田左衛門太郎

1) 朴葦의 對馬 원정과 早田丹後

早田 가문은 원래 對馬 船越(현재의 美津島町 小船越)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었으나, 어느 시기부터 尾崎의 土寄 지역에 분파를 이루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船越와 尾崎는 모두 對馬 중부에 위치하지만, 尾崎는 淺茅灣의 남쪽 입구에 해당하는 곳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며, 船越是 아소만과 맞은편의 동쪽 해안을 연결하는 지협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早田 가문의 활동을 알려주는 사료 중 하나는 고려 창왕 1년(1389)에 행해진 박위의 對馬 원정에 대한 對馬 측의 기록이다.

元中 6년(북조 康應 6년, 1389년) 기사 봄 2월 18일 고려왕 昌이 그 경상도원수 박위를 파견하여 그 병선 1백 척으로 淺茅浦를 노략질하였다. 藤宗永이 병사들을 독려하여 그를 방어하였다. 적장 金(宗)衍·崔七夕·朴子安이 잇달아 이르러 포구에 닻을 내리고 기꺼이 내려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 藤宗永이 尾崎 樋尻[히지리]에 진을 치고 현지인을 모집할 것을 의논하였다. 오두막을 열어 집의 부재를 뜯어서 불태워 바다로 던지니 적의 배 5~6척이 선 채로 불탔고, 적 또한 불을 질렀다. 바다 위에서 크게 싸우다 宗永이 전사하였다. 早田 某가 그 무리를 대신 이끌고 더 치열하게 싸우니, 무수하게 목을 베어 적이 이욕고 패주하였다. 박위는 돌아가서 우리(對馬) 배 300척을 불태웠고 포로로 잡힌 백성 100여 명을 탈환하였다고 말하니, 昌이 후하게 포상하였다. 宗永은 登太郎이라고 칭한다.¹⁾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對馬 측의 등장인물이다. 이 사료에서는 우선 對馬 측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藤宗永(登太郎)이라는 인물이 나오며, 그가 고려군과 해전을 벌이다 전사하자 早田이라는 인물이 그를 대신하여 분전하여 고려군을 몰아낸 것으로 나온다. 이 早田 某는 당시 尾崎 지역에서 활동하던 早田 가문의 인물인 것이다.

이에 대해 『対州編年略』(1723)에서는 須茂三位法眼과 早田氏が 고려군에 맞서 싸웠다고 하며, 『津島紀事』(1809)에서는 藤宗慧·宗永 형제와 早田丹後, 日下部土佐이 고려군에 맞서 싸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시기적으로 보아 早田 某 혹은 早田丹後라는 인물은 早田左衛門太郎 본인이거나 혹은 가까운 친척(부친 혹은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인물이 土寄 지역의

1) 『十九公實錄』 善勝公實錄(賴茂) 元中 6년(1389, 北朝 康應 元) 2월 18일 기사.

전투에서 早田 세력의 대표자로서 참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早田丹後는 고려군을 쫓아낸 것에 대해 당시 도주 宗賴茂의 포상으로 ‘丹後’라는 호칭을 받았고, 藤宗永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土寄 지역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早田 가문이 土寄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早田左衛門太郎과 降倭 羅可溫

조선 태조 4년(1396) 1월 倭人 表時羅 이후, 倭寇들이 조선에 투항하는 일이 잇따랐다. 태조 시기 降倭 중 대표적인 인물로 羅可溫 혹은 相田御中이라고 불리는 자를 들 수 있다. 그는 태조 5년(1396) 12월 영해에서 항복하였다가 謀殺의 위협을 느끼고 지울주사 이은을 납치하여 도주하였다. 이후 다시 투항하여 조선으로부터 ‘林溫’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수직왜인이 되었다. 태종 5년(1405) 6월까지 조선에서 생활하였다가 對馬로 돌아갔으며, 이후에도 아들과 함께 쓰시마에서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왔다. 또 기해동정이나 삼포 개항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왜구 출신의 對馬의 세력이 早田左衛門太郎임이 밝혀진 바 있다.

조선의 기록에서 그를 가리키는 ‘羅可溫’이라는 이름은 早田 씨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土寄 지방의 호족 가문인 ‘中尾[나카오]’을 음차한 것이다. 左衛門太郎가 ‘中尾’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는 것은 그가 이 시기 早田氏 뿐만 아니라 中尾氏로도 불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의 후손 중에도 ‘中尾五郎’, ‘中尾彈正’ 등의 명칭을 쓰는 자가 있다. ‘御中’은 일종의 별명 혹은 존칭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부하들이 그를 ‘소다 온추/오나카[相田御中]’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羅可溫은 이후 약 9년간의 조선 생활을 마치고 태조 5년(1405)에 對馬로 귀국하여 교역자로 활동하였으며, 1418년 宗貞茂 사후에는 對馬 최대의 실력자가 된다. 이때 佐衛門大郎은 교역회수면에서 島主 宗氏를 크게 압도하고 있었으며, 1419년(세종 1) 己亥東征 때에도 조선측과 對馬 간의 중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의 아들인 六郎次郎 역시 佐衛門大郎의 사후 그를 계승하였으며, 왜구 활동을 하면서도 조선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은 왜구 출신인 早田氏보다는 막부로부터 정식 守護로 인정받은 宗氏를 교섭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세종대 이후 조-일 교역은 완전히 宗氏 중심 체제로 진행되면서 早田氏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4. 맺음말

이상을 통해 필자는 14세기 왜구가 九州의 남북조 내전 상황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한편으로 對馬 내의 정치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①宗氏 입도 이전인 13세기 초, 토착세력인 재청관인 阿比留氏が 對馬의 실권을 가졌고, 고려 측의 요구에 따라 왜구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②14세기 對馬 宗氏 본가와 방계 사이에 對馬의 주도권(島主의 지위)을 놓고 내분이 벌어졌는데, 이는 섬 내부의 권력 구도뿐만이 아니라 九州의 남북조 내전, 특히 주군인 少貳氏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1369년과 1375년에 있었던 왜인(왜구)의 투항 시점은 對馬가 남조 측에 섰던 1368년~1375년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對馬 내의 정치적 변화에 관련된 무리가 보복을 피해 고려에 망명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그들이 다시 왜구로 활동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결국 왜구가 宗氏의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1398년(창왕 1)에 이루어진 朴葳의 원정에 대한 일본측의 기록을 통해 早田氏의 초기 활동과 土寄로의 정착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 조선 태조 대에 투항한 왜구 早田佐衛門大郎은 수직왜인으로 활동하며 세력가로 성장해갔다.



부관페리와 일본인 관광

- 포스트식민주의의 정동적 유산 -

이 지 현 | 부산대학교

1. 한일 이동의 통로, 관부연락선

본 발표에서는 1905년 개통된 이후 일본인들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이동 및 관광 수단이 되어주고, 한일 민족 이동의 길을 열어주었던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¹⁾과, 이후 1970년 운항 재개를 통한 일본인 관광 양상을 살펴보고 포스트식민주의 이후에도 남아있는 정동적 유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관부연락선은 초국적 모빌리티를 체현시키는 수단이었다. 해방 전까지 일본 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부연락선으로 부산항을 거쳐, 조선반도 만주국,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건너갈 수 있었으며, 대륙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이었다.

식민지에서 기업을 일구어 보려는 일본인 상공인, 식민지 지배 계급, 새 땅에서 생계를 위한 일거리를 찾아 나선 하층민들과, 자국민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드려는 사명을 가지고 식민지로 떠난 엘리트 교사들, 여행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일본인들이 관부연락선을 통해 조선으로 건너왔고, 조선에서는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떠나는 유학생, 신문물을 견학하기 위한 시찰단, 또한 강제 징용과 노역 등으로 많은 이들이 관부연락선에 몸을 실어야 했다.

관부연락선이 정박하는 부산항은 수많은 신체가 이동하고 연결되며 주체 및 세계가 마주치는 곳으로, 관부연락선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정동²⁾과 역학 관계가 국경을 넘나들며 유동하게 하는 통

1) 일제강점기에는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으로 칭했으며 해방 이후의 이름은 부관페리(釜関フェリー)와 관부페리(関釜フェリー)이다.

2) 정동은 기존 감정(emotion)개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감정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감정론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다.

로가 되었다.

이렇게 관부연락선은 40여년간 한일 민족 이동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일본 패전 후 귀환자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끝으로 1949년 4월 12일 운항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정기 선박 항로와 한일 직항 항공편이 모두 끊기면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의 이동길도 막히게 된다.

이후 1968년, 야마구치현(山口県)과 부산시는 양국의 우호 친선, 경제의 호혜 발전을 꾀한다는 취의서를 발표하고³⁾ 일본의 관부페리 주식회사와 한국의 부관페리 주식회사의 공동 출자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로 한다.

한일 이동의 상징적 통로였던 부관페리가 재개통되면서, 일본 패전 이후 단절되었던 한일 교류도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데, 이제는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식민자와 피식민자로서가 아닌, 정상 국가 간의 교류로 성격이 바뀌었다. 협약 취의서에서 ‘일한 신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경제의 신장과 한국 경제 부흥을 위해 또 양국 친선우호 촉진을 위해’ 관부페리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히고 있듯,⁴⁾ 과거사를 넘어 친선우호를 위한 교류도 운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듯 보인다.

페리 운항이 재개된 직후 한동안 적자 운영으로 고전하지만 곧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면서 점차 이용자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일본 중고등학생의 단체 수학 여행객들과, 일본과 한국 수입 생활용품을 실어나르는 보따리 장수들도 흔히 목격되었다. 또 배를 타고 저가에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로 부산항은 북적이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 부관페리 부활과 함께 재개된 일본인들의 관광 및 한일 교류의 양상을 어떠한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해방 후 한국과 일본 땅 사이에 작동했던 물리적 단절은 식민주의적 정동을 소거시키고, 민간 차원의 한일 교류는 1945년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까.

제국인들이 식민지로, 혹은 피식민지인들이 제국으로 이동하며 발생했던 힘 또는 마주침의 정동들이 해방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이는 일본 패전 이후 숨겨진 듯 보이다가 1970년 이후 부관페리 재개통을 통한 이동(모빌리티)의 시작으로 새롭게 유동하며 구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여기서는 정착민 식민주의 정동이 역사적, 사회 문화적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지에 관심을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3) 山口県, 『山口県史 史料編 現代4』 2014, 972쪽.

4) 위의 책, 972쪽.

2. 식민지 조선으로의 관광

그러면, 1905년 9월 관부연락선 개통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국의 식민지 조선 관광과 그 특성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관부연락선은 일본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관문인 부산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통 수단이었으며, 개통과 거의 같은 시점인 1905년 1월에 경부선이, 1906년 4월에 경의선이 완공되면서 대륙으로의 이동길도 열리게 된다. 이에 시모노세키(下関)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제국인들은 조선 철도와 만주 철도를 통해 경성, 평양 및 만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⁵⁾ 또, 이 시기는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제국주의로 성장하는 시기와 맞물리어 만주와 조선 여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던 시점이기도 하다.⁶⁾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으로의 관광 붐이 본격화된 것은 1906년 아사히 신문사가 주최한 ‘만한 순유단(滿韓巡遊團)’의 기획으로부터인데, 이는 당시 아사히 신문 광고에서도 볼 수 있듯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등 ‘해외 전적지의 탐방을 통해 전쟁 승리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고 제국 일본의 강력함과 일본 국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관광’이 가지는 속성에 대해 존 어리(John Urry)가 관광 주체의 시선을 작동시키는 강한 권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듯, 관광지란 관광 주체에 의해 보여지는 대상이 되며, 주체가 아닌 타자에, 능동이 아닌 수동의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⁷⁾ 하물며 근대 식민지로의 관광은 ‘관광객-제국주의 국가의 국민들에게 문명화된 시선으로 낙후된 식민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대문명의 우수성과 식민지의 후진성을 각인시키는’⁸⁾ 제국주의 시선을 강화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식민지인 관광지는 철저히 보여지는 대상이 되며, 타자의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

만한순유단이 성공을 거두자 일본 육군은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여행을 권장하고 또 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만주와 조선으로의 여행을 장려하게 되면서 일본은 대규모로 관

5) (즉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대한제국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그리고 남만주철도를 통해 지배권을 얻은 노선, 즉 경부선, 경의선(경성-평양-안동), 안봉선(안동, 봉천)연경선을 통해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김선희, 「근대 관광도시로서 평양과 부산에 대한 일제의 시선과 표상」, 『국토지리학회지』 Vol.55 No.3, 2021.)

6) 이것을 견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1906년 6월 23일, 아사히신문사는 『도쿄아사히신문』, 『오사카아사히신문』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적지를 중심으로 만주 한국을 둘러본다는 만한 순유단을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순유선은 약 30일간의 일정으로 요코하마를 출항하여 고베를 거쳐 한국의 부산, 경성을 돌아 만주, 대련, 여순, 장산열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왕복 여비, 숙박, 현지에서의 관광 등 가이드가 동행하는 단체 패키지 여행이었다.

7) 존 어리·요나스 라슨 지음, 도재학·이재훈 옮김 『관광의 시선』 소명출판, 2021.

8) 조성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광단을 조직하여 정부 관리나 학교, 학회 등에 시찰단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관부연락선을 타고 식민지 조선에 도착한 이들에게 근대 부산은 가장 먼저 보여지는 ‘대상’이 되었다. 관광객들은 일제가 개발한 근대 시가지와 서양풍 건물들을 보며 제국의 위상과 낙후된 조선을 목도하면서,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부산이 보여지는 객체로 위치 지어지면서 동시에 공원, 해수욕장, 온천 개발을 통해 관광 대상으로서 타자화, 상품화되어 홍보되기도 했다.

정착민이 개발한 부산 송도 해수욕장은 일본에서 절경을 자랑하는 마쓰시마(松島)를 닮았다고 하여 일본의 이상향과 같은 관광지로 홍보되었고, 또 학문의 고장이던 동래(東萊)를 당시 일본에도 없던 내탕 설비를 갖춘 여관과 요리점이 즐비한 온천촌으로 개발하여, ‘조선과 만주 제일의 별천지’로서 홍보하기도 했다. 다음은 1939년에 발간된 『朝鮮之觀光』에 실린 부산에 관한 홍보 기사이다.

“끝없는 환락경이 있다면 변화한 큰 거리도 있고, 동양 최고라고 칭송받는 도개교는 시간마다 커다란 입을 열고 거대한 배를 오가게 한다. (중략)

유명한 온천지 동래, 청초한 해운대는 불과 수십 분에 갈 수 있어 얼마나 쾌적한 관광도시인지. 못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둘러볼 시간을 만드세요.”⁹⁾

이처럼 관광지로 재해석된 근대 부산의 이미지는 토착성과 전통이 탈맥락화되어 제국을 위해 만들어진 이상향이였다. 그들이 홍보하는 이상적인 도시 부산은 조선인 빈민이 넘쳐났던 토착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착민과 일본 관광객을 위해 개발된 관광지라 할 수 있다.¹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코스는 동래 온천장에서 기생과 함께 즐기는 유흥 문화였다. 온천지에 유곽 등 성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에도 시대 이후 일본의 특징적 문화 중 하나였으며, 온천지의 성산업은 메이지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문화는 타이완과 같은 식민지에도 유사하게 이식되었고¹¹⁾ 동래에도 같은 방식으로 온천지 성산업 문화가 도입되었다.

식민지 시기 관광홍보물에서, 식민지 조선의 관광은 기생으로 상징되고 있다. 성 유흥산업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주요한 관광자원이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9) 今井晴夫編, 『朝鮮之觀光』 朝鮮之觀光社, 1939, p.189.

10) 당시 부산의 조선인 반 수 이상이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稅納入額으로 본 釜山 朝鮮人の 經濟狀態 半數以上이 窮民化」, 『동아일보』 1932년 9월 6일)

11) 曾山毅, 『植民地台灣ツーリズム』 青弓社, 2003, pp.273-285.

근대의 동래 기생은 그동안의 연구사에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근대 대중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로 긍정적으로 조명되어 온 면이 있으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관광을 즐기러 온 제국의 남성 고객과 피식민지 접객 여성의 구도 안에서 종속적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논문에서¹²⁾ 발표자는 동래 기생이 식민자 남성들을 접객하는 제국적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을 고찰해 나간 바 있는데, 동래 요정(料亭)을 당시 부산에 설립되어있던 식민지 공창이나 도시 곳곳에 퍼져 있던 유곽이나 요리집(을 빙자한 유곽)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곳에서 일하던 기생들 역시 기본적으로 성을 파는 유흥업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도시 공간 속에서, 도시 공간 전체를 통해서 피식민 여성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구성되고 강화되어 나갔다. 하지만 동래 기생을 중심으로 한 성 유흥 산업은 일본인 정착민에게만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온천장이 대중화됨에 따라 조선인들, 즉 피식민 남성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확대되어 나갔다. 낮에는 온천객과 소풍객이 찾아오고 밤에는 성 유흥 문화를 즐기는 동래의 문화는 조선인 유한자들의 생활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을 관광지로서 바라보았던 식민주의 정동은 정착민에게 뿐 아니라 피식민인에게까지 퍼져 나갔으며 자국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적국 남성들의 제국적 성폭력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그들이 참여하기도 한 것이다.¹³⁾ 이러한 정동들은 공간에 있던 신체와 의식, 기억에 새겨지며 삶의 내밀한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갔다.

3. 부관페리의 부활과 일본인 관광

이러한 관부연락선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1970년대의 부관페리로 재개된 일본인 관광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다.

부관 연락선이 재개통되면서 학생들의 단체 수학여행이 재개되었고, 제복 입은 일본 학생들로 부산항이 북적거리고, 또한 보따리 장수들에 의해 소주, 라면, 고추장, 된장, 워크맨, 전기밥솥 등을 실어나르는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일본인 관광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는 일본인 남성들의 단체 기생관광이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들어서며 엔화 가치가 올라가자 일본인들은 해외로 매

12) 이지현, 「관광지로서의 근대도시-동래 온천과 유흥 산업을 둘러싼 정착민 식민주의 정동-」 『日本思想』 제 49호, 2025.

13) 나이토 치즈코는 식민지 공창제를 군사주의와 식민주의를 양 축으로 하는 제국적 성폭력의 일환으로 보았는데, 식민지의 성 산업에 종사한 여성들과 동래의 기생들은 접객부로서 제국적 성폭력 연속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춘 관광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 대만의 신 베이터우를 중심으로 번성하던 일본인 성 관광은 대만의 물가 상승 등과 함께 점차 쇠퇴하고, 한일 이동로가 열린 1970년대 즈음부터는 한국으로 옮겨왔다.

앞서 서술했듯이 학생 단체 수학여행과 일본인들의 기생 관광은 1970년대 새롭게 생겨난 문화 현상이 아니다. 제복을 입은 일본 학생들의 단체 수학 여행 및 교원들의 연수 여행은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지배정책으로 제국주의적 시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새롭게 재개된 일본 수학여행의 방한 양상은 과거 문화 정치성이 결합되었었던 수학 여행의 기억과, 제국인으로서 바라보는 주체/보여지는 객체의 위계를 되살린다. 학생들이 배에서 내리면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환영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해방 후 한국으로 기생 관광을 오는 일본 관광객의 모습 또한, 식민지 시기 기생으로 상징되고 있던 식민지 조선으로의 관광의 모습에 다르아니다.

이러한 기생 관광 정책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 발전 전략과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관광을 주요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지정하였고,¹⁴⁾ 관광개발 전략으로 성 유흥업을 채택하여 섹스 관광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꾀하였다. 한국식 요정을 관광 휴양업에 추가하고, 국제관광협회에 요정가를 설치하여 관광 기생에게接客원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양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즉 정부가 여성의 신체를 자원으로 하는 기생 관광을 관광개발전략으로 채택한 것인데, 이로써 관광지의接客원으로, 제국주의 폭력을 입었던 식민지 기생의 몸은 현대에 다시 소환된다. 차이점은 일제 강점기에 관광을 기획한 주체가 제국이었다면, 이번에는 자국 여성의 신체를 자원으로 활용한 한국 정부이다. 일본과 한국의 예창기들과 식민지시기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기생들이 폭력적인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건강진단서를 소지해야 했던 것처럼 1970년대의 관광 기생은接客원 증명서를 소지하고, 외화벌이에 내몰렸다.

제국 일본이 일본 하층민 여성과 식민지의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을 팔면서, 공창과 성매매업소에서 올리는 수익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지지하는 재정 수입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1970년대 한국은 매춘 관광을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1973년 기준 전년 대비 324.5%나 증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된다.¹⁵⁾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기생 관광’이라는 단어이다. 기생의 존재가 이미 사라진 시대에 굳이 ‘기생’이라는 표현을 씬으로 식민지 조선에 지배자로서 성 관광을 왔던 기억 혹은 위계

14) 한국관광협회, 『한국관광의 오늘과 내일』, 1975.

15) 교통부, 『1980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0.

를 소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어느 쪽이 먼저 ‘기생 관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1972년의 『한국관광자원총람』의 부산 관광코스에는 ‘시청앞→용두산→송도→해운대→동래 온천(기생파티)’가 추천되어 있어, 한국에서도 기생 관광이라는 단어로 홍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관광지로서 젠더화하고 성애화했던 정착민 식민주의 정동은 도시의 공간과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내면에 스며들었다. 사라 아메드가 제시했듯이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집합적이며 상호 작용적 특성을 지닌 구조화되는 특성을 지닌다.¹⁷⁾ 그리고 그것은 일본 패전 후에도 식민지 땅 및 정착민과 선주민들의 기억과 몸에 흐르다가, 부관 페리 운항의 부활과 함께 다시 유동하기 시작했다.

부관 페리의 재개통을 통해 한일 민족이 다시 이동함으로 제국인과 식민지인으로서의 정동적 마주침이 발생한다.(모빌리티의 정동) 대상과의 정동적 마주침은 ‘대상과 타자에게 어떤 속성이 내재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일본 관광객은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을 1970년대에 다시 조우하고 ‘기생관광’을 기획한 한국은 즉시 식민지 조선으로 퇴행하게 된다.

몸과 마음을 규율했던 식민주의 정동은 동아시아 각지에 나가 성관광을 했던 일본 남성에게는 물론, 제국인을 접객하기 위해 자국의 여성을 중개하는데 앞장섰던 피식민 남성에게도, 또 도시 공간과 스스로를 피식민 성노예를 자처한 여성들에게도 남아 있었던 것이다.

16) 국제관광공사, 『한국관광자원총람』, 1972, 403쪽 (문재원, 조명기, 「관광의 경로와 로컬리티-부산관광담론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8, 841쪽에서 재인용)

17) 사라 아메드, 시우 역(2023)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30-200쪽.

고대 강진만 서안 지역~제주 지역 간 '해로'와 '탐라'·'동음현'·'탐진'

강 승 재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1. 머리말

고대부터 제주 지역은 화산섬이라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생필품이 부족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해 지역과의 '해상교류'를 통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였다. 전근대 시기 서남해 지역과 제주 지역 간 해상교류는 '해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지리지에서는 두 지역을 연결한 해로로 '나주 해로', '해남 해로', '탐진 해로'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해로는 고려·조선 전기에 기록된 해로이며, 그중 '탐진 해로'는 고대부터 고려 시기까지 이미 사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탐진 해로'는 고대부터 통일신라 시기 강진만 일대에서 제주 지역으로 향하던 해로를 통칭한다.¹⁾

'탐진 해로'는 백제가 서남해 지역을 장악하기 이전 시기에는 강진만 서안 지역에 있던 '탐라'를 통해 형성되었다. 백제가 서남해 지역을 장악한 6세기 이후에는 '동음현'이 설치되어 '탐진 해로'가 사용되었으며, 통일신라 시기에는 '탐진현'으로 개편되면서 지리지에 수록된 '탐진 해로'로 정립되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탐진 해로'는 서남해 지역과 제주 지역을 연결하는 해로의 '원류'로

* 본 발표문은 본인의 석사학위논문(강승재, 2025, 「고대~고려 시기 서남해 지역과 제주 지역 간 해로의 형성과 변천」, 국립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제2장 주요 내용을 요약·재구성하였음.

1) '탐진(耽津)'이라는 지명은 신라 경덕왕 시기에 공식적으로 개칭된다.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신라 양무군) 그렇기에 제주 지역 탐라와 서남해 지역 탐라 간 교류 양상을 살펴볼 때 적절하지 못한 지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탐진 해로'는 '탐라'라고 불리던 북일면 세력이 백제 시기 '동음현'으로 편제되고, 강진만 서쪽 연안에 있던 '동음현'이 신라 경덕왕 시기 '탐진현'으로 개칭되면서 강진만 북쪽으로 중심지를 옮겨갔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강봉룡, 2023,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본 고대 해남의 포구세력과 해양교류」, 『역사학연구』 89, 호남사학회, 21~29쪽) 이러한 강진만 일대에서 이루어진 해로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고대~통일신라 시기 강진만 일대에서 출항한 이 해로를 편의상 '탐진 해로'라 지칭하고자 한다.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 고에서는 ‘탐진 해로’의 원류를 천착하기 위해 통일신라 이전 고대부터 백제 시기 강진만 서안 지역에 있던 ‘대제주 관문’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헌 자료로 본 ‘탐진 해로’의 형성 배경

서남해 지역과 제주 지역을 연결한 해로의 원류는 ‘탐진 해로’이다. ‘탐진 해로’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탐진 지역과 제주 지역 간 교류 사례를 통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지역을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탐라(耽羅)’, ‘탐모라(耽牟羅)’ 계통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탐라’는 5세기 후반 『삼국사기』에 처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5세기 후반 ‘탐라’의 교류 기사는 다음과 같다.

A-1) (476) 여름 4월, ‘탐라국(耽羅國)’에서 토산물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여 사신을 은솔로 삼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4, 문주왕 2년(476) 4월)

A-2) (498) 8월, 왕이 탐라가 공물과 부세를 받치지 않는다하여 직접 정벌하려고 무진주(武珍州)에 이르니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으므로 그만두었다. <분주: 탐라는 곧 탐모라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4, 동성왕 20년(498) 8월)

위 두 기사는 백제 문주왕 2년(476)과 동성왕 20년(498) ‘탐라’와 백제 간 교류를 보여주는 기사이다. 기존 선행연구는 해당 기사에 나타난 ‘탐라’를 제주 지역에 있던 세력으로 보는 통념에 근거하여 바다 건너 제주 지역의 ‘대외교류’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근우에 의해 백제 문주·동성왕 시기 탐라 기사의 주체를 ‘제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는 이른바 ‘신설’이 처음 제기되었다. 신설은 기존 ‘통설’이 주목했던 『삼국사기』 백제 문주·동성왕 시기 기사와 함께 『일본서기』 계체 2년(508) 탐라 관련 기사에 주목하였다. 해당 기사는 아래와 같다.

A-3) (508) 12월, 남쪽 바다 가운데 탐라인(耽羅人)이 백제국과 처음으로 통교했다(初通百濟國).
(『일본서기』 권17, 계체(繼體) 2년(508) 12월)

위 기사는 계체 2년(508) 탐라가 백제와 “처음으로 통교(初通)”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은 이중 ‘초통’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였다. 『삼국사기』 백제 문주왕 2년(476) 기사에 의하면 탐라는 이미 백제에 “토산물”을 바쳤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두 사료 간 내용이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삼국사기』 문주·동성왕 시기의 ‘탐라’를 제주 지역으로 볼 경우, 바다 건너 ‘탐라’가

백제의 ‘무진주 진주’로부터 군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신설은 해당 시기의 ‘탐라’가 오늘날 통념인 제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신설은 백제의 군사적 위협을 받은 ‘탐라’의 위치를 무진주와 연결된 서남해 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서남해 지역은 백제와 다른 계통(영산강·왜계·가야계)의 고고학적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남해 지역은 백제와 다른 독자적인 세력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설은 처음에는 해당 시기 ‘탐라’를 강진·해남 지역의 세력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해남 서쪽 백포만 일대 고고학적 자료에 주목한 강봉룡의 연구, 해남 동쪽 북일면 일대 고고학적 자료에 주목한 문안식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비정되기 시작되었다. 근래에는 해남 북일면 일대의 고고학적 자료와 탐라 → 동음현 → 탐진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의 가능성을 제시한 강봉룡의 연구로 인해 『삼국사기』 문주·동성왕 시기 ‘탐라’는 해남 북일면 연안 일대로 그 위치가 정립되었다.

본고는 신설이 주목하였던 근래 ‘해남 북일면 일대’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성과를 배경으로 『삼국사기』 백제 문주·동성왕 시기의 ‘탐라’를 ‘해남 북일면 일대’로, 『일본서기』 제제 2년(508)의 ‘탐라’를 ‘제주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설이 주목하였던 ‘해남 북일면 일대’의 고고학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고고 자료로 본 강진만 서안 지역의 ‘탐라’

6세기 중반 백제계 고분인 ‘홍촌리 석정 고분’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해남 북일면 일대에는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영산강 유역’, ‘왜계’, ‘가야계’ 요소가 혼재된 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4세기 후반 현지 세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수리봉 고분’ 이후 ‘영산강 유역’, ‘왜계’, ‘가야계’ 요소가 확인된 고분으로는 ‘내동리 발삼 고분(5세기 전반)’, ‘신월리 방대형 고분(5세기 전반)’, ‘용일리 용운 고분(6세기 전반)’, ‘방산리 장고봉 고분(5세기 후반~6세기 전반)’ 등이 있다. 이 중 ‘신월리 방대형 고분’과 ‘용일리 용운 고분’의 경우 출토된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영산강 유역의 요소와 왜계 요소, 가야계 요소가 융합된 고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곧 5~6세기경 해남 북일면 일대는 영산강 유역 문물을 중심으로 가야와 왜 계 문물의 수용과 백제계 문물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해남 북일면 일대에 다국적 문물의 집산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한다.

해남 북일면 일대에 출토된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볼 때 5~6세기경 이 지역에는 백제와 다른 독자적인 세력이 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남 북일면 일대에 있는 세력을 『삼국사기』 문주·동성왕 시기의 ‘탐라’로 이해해볼 때, 후대의 ‘탐진’과 연결된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이와 함께 ‘탐진’은

백제 시기 ‘동음현’으로 불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해남 일대에 백제식 고분이 6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북일면 일대 고분의 양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신설이 제시했던 ‘5세기 전반~6세기 왜 및 가야와 독자적인 교류를 했던 탐라’ → ‘문주왕 2년(476) 백제와 관계 시도’ → ‘백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방물 중단’ → ‘동성왕 20년(498) 백제의 무진주 진주’ → ‘탐라의 사죄’ → ‘6세기 초 백제의 서남해 지역 장악’ → ‘백제 5방제 개편(6세기 전반)으로 인한 동음현 편제’ → ‘신라 경덕왕 연간(742~765) 탐진 개칭’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4. 서남해 지역과 제주 지역 간 ‘탐라’ 명칭 공유현상

고고학적 자료, 후대 군현의 지명과의 상관성을 모색해 볼 때 신설이 제시했던 서남해 지역 ‘탐라’는 강진만 서안 지역 해남 북일면 일대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아가 이는 제주 지역과 서남해 지역에는 비슷한 시기 ‘탐라’라는 명칭을 지닌 세력이 각각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제주 지역과 서남해 지역 간 지명의 동일성이 나타난다는 점은 두 지역 간 활발한 해상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제주 지역의 ‘탐라’는 해남 북일면 일대의 ‘탐라’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였고, ‘탐라’라는 이름이 공유되면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지역 간 이름의 공유현상은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탐라’와 ‘탐진’ 간 지명 유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B-1) 탐라현(耽羅縣)은 전라도(全羅道)의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그 ‘고기(古記)’에 이르기를(其古記云), …(중략) 15대손 고후(高厚)·고청(高靑)에 이르러 형제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니, 이때는 신라(新羅)가 융성하던 시절(盛時)이었다…읍호(邑號)는 탐라(耽羅)라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왔을 때 처음 탐진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蓋以來時, 初泊耽津故也). (『고려사』 권57, 지 권제11, 지리2, 전라도, 탐라현)

B-2) 본주(本州)는 전라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 그 주(州)의 ‘고기(古記)’에 이르기를(其州古記云), …(중략) 15대 손(孫)에 이르러, 고후(高厚)·고청(高靑)의 형제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렀는데, 대개 신라가 번성할 때였다…읍(邑)의 이름을 ‘탐라(耽羅)’라고 하니, 대개 신라 때에 처음으로 탐진(耽津)에 이른 까닭이었다(蓋以新羅時, 初泊耽津故也).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B-3) …(중략) 신라 때에 고을나의 후손 고후(高厚)가 그 아우 두 사람과 함께 바다를 건너와서 신

라에 조회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고후에게 성주(星主)라 칭호하고, 그 둘째 아우는 왕자(王子)라 하고, 끝 아우는 도내(都內)라 하여 탐라(耽羅)라는 국호를 내려주었다(仍賜國號曰耽羅). <고려사> 고기(古記)에 이르기를…고을 이름은 탐라(耽羅)라 하였으니, 처음 올 적에 탐진에 닿아서 신라에 조회하였기 때문이다(邑號曰耽羅, 以初來泊耽津而朝新羅也).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건치연혁)

B-4) 구십포(九十浦): 현의 남쪽 6리에 있다. 근원은 월출산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현 서쪽의 물과 합쳐 구십포가 된다. 탐라(耽羅)의 사자가 신라에 조공할 때에 배를 여기에 머물렀으므로 이름을 탐진(耽津)이라 하였다(耽羅星子朝新羅時, 泊舟于此, 因名曰耽津).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7권, 전라도, 강진현, 산천)

위 기사는 제주 지역의 고 씨 세 형제가 탐진을 통해 신라에 입조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탐라’와 ‘탐진’의 명칭은 두 지역 간 해상교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서술한 부분이다. 다만 B-1~3 기사는 “탐라라는 이름이 탐진”에서 나왔다고 서술하였으며, B-4 기사는 “탐진이라는 이름은 탐라”에서 나왔다고 서술상 차이는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탐진’이라는 지명은 ‘탐라’와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통념과는 다른 서술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B-1~3 기사의 경우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탐라라는 이름이 탐진”에서 나왔다는 서술은 곧 두 지역 간 교류의 거점은 ‘탐진’이었음을 의미하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B-1~4 기사에서 확인되는 ‘탐라’와 ‘탐진’ 간 상반된 지명의 유래와 관련해서 이를 ‘오기(誤記)’ 또는 ‘부회(附會)’로 보았다. 선행연구가 ‘오기’ 또는 ‘부회’로 해석한 데에는 전통 역사시대부터 ‘탐라’가 제주를 의미해 왔다는 통념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해당 기록이 단순한 ‘오기’ 또는 ‘부회’가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위 기사에 기록된 “신라가 융성했던 시기”를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시기로 비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그보다 앞선 6세기 초 제주 지역은 ‘탐라’라는 이름으로 백제와 교류했기에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고 보고 넘어갔다는 점이 주목하였다. 그러나 제주 지역이 한반도 육지부 국가와 교류했던 시점을 “신라가 융성했던 시기”로 기술한 부분은 ‘후대의 역사 지식의 편견’이 반영된 서술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B-1 기사(『고려사』)와 B-2 기사(『세종실록지리지』)에서 나타난 서술 구도상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B-1 기사(『고려사』)의 경우 읍호의 이름이 탐라가 된 배경에는 “그들이 왔을 때 처음(蓋以來時) 탐진에 정박”하였기 때문으로 서술하였다. B-2 기사(『세종실록지리지』)는 해당 내용에 ‘신라’를 추가하여 “대개 신라 때에 처음으로(蓋以新羅時) 탐진에 정박”하였기 때문으로 서술하였다. 편찬 시기로 볼 때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자는 편찬 과정에서 앞서 편찬된 『고려사』의 기록을 참고하면서 ‘신라 시기’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덧붙인 사례라 생각된다. 나아가 B-3 기사(『신증동국여지

승람』)는 B-1 기사(『고려사』)와 B-2 기사(『세종실록지리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탐라라는 국호를 내려주었다(仍賜國號曰耽羅)”라고 하여 아예 탐라라는 국호가 신라에서 나왔다고 서술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곧 후대의 역사 지식과 편견이 원래 기록의 문장을 수정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탐라와 탐진 간 지명 유래 관련 기록은 단순 ‘오기’ 또는 ‘부회’로만 보기는 어렵다.

‘부회’ 또는 ‘오기’로 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B-2 기사(『세종실록지리지』)와 B-3 기사(『신증동국여지승람』)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였던 B-1 기사(『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1 기사(『고려사』)는 “그들이 왔을 때 처음(蓋以來時) 탐진에 정박”하였다고만 언급하고 특정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해당 기사를 인용할 때 ‘고기(古記)’를 인용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고기’는 말 그대로 옛 기록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가 인용한 ‘고기’의 내용은 ‘탐라국 건국 신화’를 다루고 있기에 제주 지역에서 구전된 내용을 수집한 서적이거나, 제주 고씨 가문의 ‘족보’일 가능성이 있다. 『고려사』가 인용한 ‘고기’가 제주 지역의 구전이나 족보일 가능성을 통해 볼 때, 구체적인 시기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단순히 “옛날 옛적”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옛날 옛적”은 통일신라 이전 시기 서남해 지역 ‘탐라’와의 해상교류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후대에 수정된 배경에는 탐라가 서남해 지역과 교류할 당시 사용했던 구체적인 지명이 문헌상 드러나는 것은 신라 시기 ‘탐진’이 유일했기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명 유래에 관한 지리지의 기록은 곧 서남해 지역 내에서 ‘탐라’ → ‘동음현’ → ‘탐진현’으로 개편되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당시 서남해 지역과 제주 지역 간 해상교류가 ‘공간적 연속성’을 이루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508년 백제와 제주 지역 ‘탐라’ 간 이루어진 대외교섭은 ‘탐진 해로’ 형성의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지에는 ‘탐진’이 있었다. 고려 시기 이전 서남해 지역 강진 일대에는 ‘탐라’, ‘동음현’, ‘탐진현’이 있었다. 고대 시기에는 강진만 서안 지역(오늘날 해남 북일면 일대)에 있던 ‘탐라’가 ‘탐진 해로’의 중심지였다. 백제가 서남해 지역을 장악한 이후 실시된 ‘5방제 개편(6세기 전반)’에도 강진만 서안 지역에는 ‘동음현’이 설치되어 ‘대제주 관문’으로 기능하였다. 통일신라 신라가 서남해 지역을 장악한 이후에도 한동안 기존 관문인 ‘동음현’을 사용하다가 경덕왕 시기 ‘탐진현’ 개편을 통해 오늘날 강진을 일대로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진 일대는 서남해

지역과 제주 지역 간 해상교류가 ‘공간적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6세기 중반 서남해 지역 ‘탐라’가 백제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탐라’라는 명칭은 제주 지역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백제 멸망 이후 탐라는 점차 동아시아 세계로 시야가 확대되면서 ‘일본(661.05)’, ‘당(661.08)’, ‘신라(662.02)’와 다국적 해상교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문무왕 19년(679) 2월 “신라의 경략(略)” 이후 제주 지역의 탐라는 통일신라에 종속화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탐라’를 ‘종속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은 ‘탐진 해로’의 출발점인 ‘탐진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탐진현’을 통한 제주 지역과의 해상교류는 고려 시기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제주 지역은 12세기 중반 ‘탐라현’으로 편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전라우수영의 설치와 위치 변화 연구¹⁾

박 세 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조선의 수군은 왜구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설치되었다. 여말선초 이래로 왜구는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지역까지 침탈하였고, 이러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은 요해처에 主鎭·巨鎭·諸鎭을 설치하였다. 주진은 수군절도사가 파견된 곳을 말하며, 주진 아래에 첨절제사가 파견되는 곳을 거진이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제진이라 하여 만호가 파견되었다. 이 중에서 수군절도사가 파견된 수영은 주진으로서 산하 제진을 총지휘하여 왜구를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방어체계는 전라도에도 확장되었는데, 서남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전라우영이 설치되었다. 본래 전라우영은 단일조직으로 서남해안으로 침입해오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설을 거쳐 세종 22년(1440) 해남 황원곶에 자리 잡았다. 또 순천 내레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종 10년(1479)에 전라좌수영이 설치되자, 전라우영은 전라좌·우수영으로 분리되었다. 이때부터 전라우수영은 고종 32년(1895)에 廢營될 때까지 약 450여 년 동안 전라도 서남해 도서 연안지역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수군과 수군진, 해상방어체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수군에 동원된 군역 문제, 조직체계 정비, 왜구 방어를 위한 시설과 훈련, 지휘체계 등이 다뤄졌다. 수군 관련 연구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개별 수군진에 대한 사례 분석연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반면, 전라우수영에 대한 연구는 전라우수영 산하 제진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면서 전라우수영을 주진으로만 언급하거나 혹은 유적지에 대한 기초 조사가 검토된 정도이다. 전라우수영은 서남해안을 방어하였던 수군 최고의 지휘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조선 전기 독립된 병종으로서 수군이 창설되고, 이 속

1) 본 논문은 국방부 『군사』제129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에서 전라우수영이 설치되는 과정과 위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의 해상 방어 정책과 전라우수영의 특성을 단면적으로나마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왜구 방비를 위해 수군을 독립된 병종으로 창설하고 법제적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방어체계를 수립하였다. 수군진은 해변의 주요 군현에 설치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주변의 요충지에 병선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각 연해 지역의 요충지에 주진·거진·제진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전라우수영은 이 중 주진으로서 서해안 방어를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라우수영의 설치 과정을 살펴보면, 옥구에서 출발하여 대굴포, 그리고 황원곶으로 이동하면서 입지 조건을 개선해 나갔다. 최초 설치된 장소는 옥구현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은 바다와 접해있어 수상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조운선과 상선이 지나가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정박이 용이하고 바람이 적어 은폐하기 쉬운 지형으로, 수군진의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태종대 지역별 침입 횟수를 살펴보면 서남해안이 가장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구에 설치되었던 전라우수영은 서남해로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전라우수영은 옥구에서 무안현 대굴포로 이설하게 된다.

대굴포는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바다로 침입해오는 왜구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어하기에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대굴포는 강어귀에 위치해 내륙수로로 연결되는 곳이다.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은 은폐 효과가 크고, 해변으로 진입하는 왜선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방어 태세로 보여진다. 조선 초기의 해방전략은 병선이 경계와 방어에 치중했기 때문에 만 안쪽 깊은 곳에 병선을 배치하였다.

세종대에 병선을 깊은 곳에 두면서 병선 배치지역을 확대하려다 보니 병선과 수군의 증강액이 끝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병선의 경계 범위와 작전반경, 기동성을 높여 병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수동적인 거점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공격적인 방어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을 지키는 전라우수영의 이설이 필요했다. 서남해안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강어귀 깊은 곳이 아닌 전라우수영을 비롯한 수군진과 병영을 해안가로 옮겨 설치하였다. 이 당시에 해안 안쪽으로 설치된 군사 거점을 밖으로 끌어내는 전환은 전국 곳곳에 보이는 군사전략의 특징이다. 전라우수영도 내륙에 있던 대굴포에서 바닷가에 인접한 해남 황원곶으로 이설된 것이다.

해남 황원곶의 입지 환경은 전라도 해로의 중앙에 있으며, 포구에 갯벌이 없어 선박이 정박하기에 용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울돌목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장애물이었다. 특히 우수영 앞에 입지한 양도라는 섬은 수영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해

남 황원곶은 수영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해남 황원곶에 정착한 전라수영은 사랑진왜변·을묘왜변 등 빈번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우수영과 좌수영으로 분립하게 된다. 당시 전라도 순천부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따라서 조정은 남해안 지역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내례포에 전라좌수영을 설치하고, 반면 황원곶을 전라우수영으로 편제하였다. 그 결과 전라좌·우도수군절도사가 각각 전라좌·우도의 수군을 각각 통솔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즉 수군진의 이설과 편제 변화는 왜구의 성격과 관련이 있으며, 전라우수영도 왜구의 이동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서남해안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전라우수영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몇 차례의 이설 과정을 겪었다.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를 통해 당시의 해상 방어전략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목포지역 김 양식 현황과 사회 변화

탁 현 진 | 국립목포대학교 한국지방사학과 박사 수료

1. 머리말

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효자상품으로, 소위 ‘검은 반도체’라 불린다. 2023년에는 단일 수산 식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월, 김 수출 증진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 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3년 3월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신안군을, 2024년 3월에는 전남 진도군·장흥군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였다.¹⁾

김 산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지역은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는 17세기 중반, 김여익이 광양에서 김 양식을 처음 시작한 이래, 일제강점기에는 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완도는 ‘해태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김 산업의 핵심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전남 김 산업의 위상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은 54만 톤, 생산액은 8,40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위판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물김 생산량의 78%, 생산액의 80%에 해당한다.²⁾ 수출도 2024년 10월 말 현재 3억 6,0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국 대비 36%를 차지하는 등, 전남은 명실공히 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

1) 「김 수출 1조원 달성! 미래 김 산업의 핵심 전략은?」, 2024.10.31. NAVER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mof>)

2) 『남도일보』, 2025.05.13. 「전남 물김 생산량·생산액 모두 역대 최대」

3) 『kbcNEWS』, 2024.11.18. 「전라남도 김 수출 3억 달러 돌파..수산물 최초」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전남 지역 김 산업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 지역에서의 김 산업 발전 양상에 주목한다. 목포는 1896년 개항한 전남 최대의 항구도시로, 전남에서 생산된 마른김이 일본으로 수탈되는 관문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김 산업의 유통과 수출 기반이 형성되었다. 한편 전남의 김 양식은 1920년대 중반부터 관의 적극적인 양식지 개발 정책에 힘입어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확산하였고, 1930년대 초에는 목포를 비롯해 무안·신안 일대를 아우르는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김 산업의 전개는 전남 서남해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사회 변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이 글에서는 김 양식의 전개와 확산, 그리고 이를 둘러싼 어업조합의 설립 및 지역사회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전남 김 산업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전남 지역 김 양식 현황

우리나라에서 김 양식이 처음 시작된 곳은 17세기 중반 전남 광양의 태인도이다. 당시 태인도에 거주하던 김여익(1606~1660)은 바닷물에 떠내려온 나뭇가지에 김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착안하여, 바다에 나뭇가지를 세워 김 양식을 시도했다.⁴⁾ 한편 19세기 후반 완도에서는 광양과는 다른 방식의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 조약도 어부였던 정시원은 어살에 김이 자라는 것을 보고, 대나무를 엮어 바다에 세우는 방법으로 김 양식을 시작했다.⁵⁾ 이처럼 200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광양과 완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김 양식이 시작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김 양식이 확산하였다.

한편 강점을 전후해 일본의 김 양식어민들이 전남 지역으로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1907년에는 히로시마 출신의 어민이 전남 각지에서 김 양식 실태를 조사하였고,⁶⁾ 1909년에는 히로시마 출신의 에야나기[恵柳]가 장흥군에서 김 양식을 시도했다.⁷⁾ 1910년에는 일본의 해조학자 오카무라 키타로[岡村金太郎]가 전남 남해안을 시찰하고, 이 지역이 김 양식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기도 했

4)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義禁府事金公墓表」(광양 김시직지 제공) 1714년 당시 광양현감이었던 허심이 지은 김여익 묘표문에 처음으로 김 양식을 시작하였고, 또 그 양식법을 개발하여 세인으로 하여금 좋은 음식을 조리케 하였으니, 세상에 드문 식견이 아니겠는가(始殖海衣不求名利又發海衣而俾世人以調滋味眞可謂罕世之識見)"라고 적었다.

5) 김연수, 「김양식 기술 발전과정의 한·일비교」, 『한국도서연구』 29권 2호, 한국도서(섭)학회, 2017, 30~31쪽

6) 吉田敏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 박호원·김수희 옮김,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2019, 444쪽

7) 宮下章, 『海苔の歴史』, 全國海苔問屋協同組合聯合會, 1970, 744쪽

다.⁸⁾ 같은 해 히로시마 출신의 나카무라 쿠기치[中村來吉]를 비롯한 6명이 완도 조약도와 장흥 회진면에서 김 양식을 시작했으며,⁹⁾ 1911년에는 히로시마 출신 어민 20명과 후쿠오카 출신 어민 2~3명이 광양 태인도와 완도 조약도에 진출하였다.¹⁰⁾ 1912년에는 히로시마 어민들이 완도 고금도에서 조합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양식에 착수하였다.¹¹⁾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김 양식이 확산하면서 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11년에는 광양에 해태제조개양전습소를 설치하고 일본인 교수를 초빙해 김 양식과 가공 기술을 전수하였다. 이어 1913년에는 완도와 장흥에서는 완도장흥연합해태제조전습소를 설립하고, 일본인 양식업자들로 하여금 조선인들에게 김 양식과 가공 기술을 지도하게 했다. 이러한 전습소의 목적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마른김 가공법은 전수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마른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있었다.¹²⁾ 또한 1926년 「김·굴 양식장려에 관한 건」, 1927년 「수산증식장려 보조에 관한 건」을 제정하고, 김 양식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이루어졌다.¹³⁾

한편, 1911년 어업령과 1912년 어업조합규칙·수산조합규칙이 공포되면서 어업조합 설립이 잇따랐다. 1917년 11월에는 광양·완도·장흥에서 해태수산조합이 설립되었고, 1922년 11월 이를 해태어업조합으로 전환하였다. 같은 시기 고흥과 강진에서도 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어 1925년 8월에는 진도군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어민들의 헌신과 조합의 노력, 그리고 관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1916년 2만 근에 불과하던 김 생산량은 1923년에는 136만 근으로 크게 증가했다. 1925년 당시 전라남도 수산기수였던 오이자과 쓰요시[相澤毅]는 전남의 김 산업을 두고 ‘앞으로 가장 유망한 품목’이며, ‘근래에 이례적인 발전을 이루어 수년 사이에 중요 수산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김을 전라남도의 ‘독점’ 산업이라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¹⁴⁾

8) 木浦商工會議所, 『木浦の乾海苔』, 1935, 1쪽

9) 鄭文基, 『朝鮮海苔』, 『朝鮮之水産第四百四十四號別刷』, 1937, 1쪽; 朝鮮漁業組合中央會, 『朝鮮漁業組合要覽』, 1942, 248쪽, 254쪽

10) 木浦商工會議所, 위의 책, 1쪽

11) 박호원·김수희 옮김, 위의 책, 444쪽

12) 마른김[乾海苔]은 가공 방식에 따라 조선식과 일본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시 문헌에서는 조선식을 在來海苔, 일본식을 改良海苔로 불렀다. 일본식 마른김은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일본의 방식대로 가공한 것으로, 조선식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탁현진, 「일제강점기 마른김[乾海苔] 개량과 김사규칙의 운영 양상」, 『역사와 세계』 59, 효원학회, 2021, 306쪽~313쪽

13) 朝鮮總督府殖産局水産課編, 『朝鮮水産例規集』, 朝鮮水産會, 1931, 862쪽~866쪽

14) 相澤毅, 「全南の海苔(一)」, 『朝鮮之水産』 17호, 朝鮮水産會, 1925.08. 7쪽

3. 전남 서해안으로의 확산과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의 설립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김 양식은 차츰 서해안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1924년 7월 설립된 전남수산물시험장은 신규 어장 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고, 목포를 중심으로 한 근해에서 김 양식 시험을 시도했다. 1925년에는 미개척 어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앞 바다에서 양식 시험을 실시했다.¹⁵⁾ 이후 목포와 무안을 중심으로, 멀리 영광 지역까지 김 양식 재배 시험을 확대하였고, 시험 결과 김 양식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었다.¹⁶⁾ 이에 따라 다수의 어업자들이 김 양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30년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¹⁷⁾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의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27년 가을, 압해면 대천리와 송공리의 김 양식업자가 중심이 되어 최초로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어 1929년에는 목포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목포해태상회를 조직하고 김 양식과 가공에 착수하였다. 그 뒤를 이어 목포해태생산조합이 설립되어, 압해면 신장리와 장감리 일대에서 어업권을 취득하고 김 양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 세 단체가 동시에 활동하면서 김 양식업자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생산 또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양식업자들 사이에서는 어업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29년 목포에 거주하던 기노시타 시게하루(木下重治) 외 4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압해면해태어업조합을 설립되었다. 조합이 설립되자 기존의 개별 단체들은 해산하였고, 소속 어업자들은 모두 압해면해태어업조합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김 양식지가 무안군 전역에 산재한 현실에서 보다 광역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1930년 4월 30일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같은 해 8월 11일에는 기존의 압해면해태어업조합을 병합하여 무안군 단위의 조직으로 통합하였다.¹⁸⁾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의 사무소는 목포부 북교동 117번지에 두었다. 조합 설립 당시의 구역은 석진면·박곡면·외읍면·흑산면을 제외한 무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⁹⁾ 이는 김 양식이 어려운 석진면·박곡면(현 무안군 몽탄면), 외읍면(현 무안군 무안읍), 흑산면을 제외한 것이다. 1930년 5월 「조선어업령」이 공포되면서 어업조합의 구역은 어촌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 지역인 부(府) 지역까지 확대되었다.²⁰⁾ 이에 따라 무안군해태어업조합도 구역 변경이 이루어져, 1934년 당시에는 '전라

15) 木浦商工會議所, 위의 책, 4쪽~5쪽

16) 목포문화원, 『完譯 木浦府史』, 2011, 325쪽 ~ 326쪽

17) 『조선총독부관보』 제1024호, 1930.06.04

18) 朝鮮漁業組合中央會, 앞의 책, 251쪽

19) 『조선총독부관보』 제1024호, 1930.06.04

20) 최병택·이영학·류창호 지음, 『일제의 임업 및 수산업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4, 340쪽

남도 무안군(흑산면 태도 제외) 및 목포부²¹⁾로 구역이 확장되었다.²¹⁾ 한편 흑산면 태도가 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지역에서 하태도어업조합이 별도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김 양식의 확산에 따른 목포지역의 사회 변화

1920년대 중반, 목포지역에서는 새로운 김 양식지 개발이 이루어졌고, 1930년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양식지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1932년 31,576원에 불과했던 무안군해태어업조합의 김 어획고는 1940년 215,338원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며, 불과 8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²²⁾

한편 전라남도는 마른김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를 위해 「전라남도마른김검사규칙」을 제정했다. 그리고 완도에 전라남도해태검사소를 설치했으며, 목포에는 지소를 두었다. 목포지소는 목포와 무안, 영암, 진도에서 생산된 김의 검사와 판매를 담당하였다.²³⁾ 이에 따라 목포는 서남해 지역에서 생산된 김이 집산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목포항은 마른김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대표적인 수탈항으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부터 김은 목포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자 목포로 반출되는 대표적인 수탈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목포는 흔히 ‘3백(白) 1흑(黑)’의 도시로 불렸다. 이때 ‘3백’은 쌀·면화·고치[繭]를, ‘1흑’은 김을 뜻하는데, 김이 포함된 이 표현은 1931년 6월 9일자 『조선신문』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²⁴⁾

전남의 쌀과 목화의 집산지로 자타가 공인하는 목포는, 한편으로 다도해를 끼고 있어 해산물 면에서도 한여름의 취급액이 5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근래 가속도로 발흥하고 있는 김 양식사업은 미개척 여장이 풍부하여 전남의 특산인 쌀·면화·고치[繭]의 3백에 해태의 1흑을 더하는 것도 머지않은 추세이다.

이렇듯 목포는 쌀·면화·고치의 집산지일 뿐 아니라, 김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의 성장과 함께 서남해 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갔다.

21) 東京府水産會, 『朝鮮ニ於ケル海苔糧食業ニ取テ』, 1934, 19쪽

22) 全羅南道, 『全南の水産』, 1932, 115쪽; 朝鮮漁業組合中央會, 앞의 책, 252쪽

23) 탁현진, 위의 논문, 330쪽

24) 『朝鮮新聞』, 1931.06.09. 「務安郡海苔製造業者懇談會」

5. 맺음말

일제강점기 전남 지역 김 산업의 전개는 단순히 지역 경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 지역사회의 구조와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인의 진출과 관 주도의 양식지 개발, 어업조합의 설립은 김 산업의 조직화와 생산 확대를 가능케 했으며, 이는 김이 지역 특산품을 넘어 일제하 대표적인 수탈품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목포는 전남에서 생산된 쌀, 면화, 고치의 집산지이면서도 김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목포항을 통한 마른김의 일본 반출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일제의 수탈 구조 속에서 김 산업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2025년 4월, ‘김 양식 어업’이 전라남도 지정 국가유산으로 공식 고시된 것은 상징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⁵⁾ 한편 목포는 2025년 현재 3년 연속 김 수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김의 수도, 목포’를 내세우고 있다.²⁶⁾ 이는 김 산업이 일제강점기 목포 지역 사회의 구조와 경제를 변화시키며 형성된 목포의 역할과 위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목포를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여전히 대한민국 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25) 「전남도, 도지정 국가유산 2건 고시」, 2025.04.23. 전라남도 보도자료

26) 『목포MBC』, 2025.06.12. 「“김의 수도는 목포!”...3년 연속 수출 1위」



 참고문헌

- 남도일보, 목포MBC, KBC, 朝鮮新聞, 『朝鮮之水産』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知義禁府事金公墓表」(광양 김시식지 제공)
 全羅南道, 『全南の水産』, 1932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宮下章, 『海苔の歴史』, 全國海苔問屋協同組合聯合會, 1970
 朝鮮漁業組合中央會, 『朝鮮漁業組合要覽』, 1942
 朝鮮總督府殖産局水産課編, 『朝鮮水産例規集』, 朝鮮水産會, 1931
 木浦商工會議所, 『木浦の乾海苔』, 1935
 東京府水産會, 『朝鮮ニ於ケル海苔糧食業ニ取テ』, 1934
 鄭文基, 『朝鮮海苔』, 『朝鮮之水産第百四十四號別刷』, 1937
 목포문화원, 『完譯 木浦府史』, 2011
 박호원·김수희 옮김,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2019
 최병택·이영학·류창호 지음, 『일제의 임업 및 수산업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4
 김연수, 「김양식 기술 발전과정의 한·일비교」, 『한국도서연구』 29권 2호, 한국도서(섬)학회, 2017
 탁현진, 「일제강점기 마른김[乾海苔] 개량과 검사규칙의 운영 양상」, 『역사와 세계』 59, 효원사학회, 2021
 네이버 블로그,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4분과

한일관계사학회

[특별분과] 조선과 일본, 바다를 통한 갈등과 교류의 역사

조선은 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였는가?	한문중	전북대학교
조선후기 쓰시마(對馬)의 화재와 조선의 대응 - 왜관을 중심으로	장순순	전북대학교
18세기 후반 이후 조·일 사무역과 무역품의 변화	이승민	국민대학교
17세기 후반 조일관계와 右京圖書 교섭	유채연	전북대학교
己酉約條(1609) 이후 규정 외 일본사신의 渡海와 조선의 대응	심민정	부경대학교 해양인문학연구소
근세 왜관의 의사소통 경로에 대한 일고찰 : 재판차왜를 중심으로	이형주	국민대학교
임란기 조선의 도요토미씨 인식과 그 활용	임현채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해사행과 왜관 : 귀로에서의 일을 중심으로	이재훈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조선시대 제주지역 역관(譯官) 설치 및 운영 양상	김나영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조선은 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였는가?

한 문 종 | 전북대학교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의 대사관이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입국허가증인 비자(visa)를 받아야 한다. 조선시대에도 왜인이나 여진인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서계(書契)·도서(圖書)·문인(文引) 등의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했다. 그런데 조선전기에는 서계·도서·문인 등의 도항증명서를 교묘한 방법으로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도항하는 왜인들이 매우 많았다. 이는 전근대 국가 간의 외교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한일관계의 특수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으로 도항한 통교위반자에 대한 이해는 조일외교의 성격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1. 왜인들의 입국을 통제한 배경

조선전기 대일외교의 근간은 왜구문제의 해결과 통교왜인에 대한 통제라 할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왜구대책의 실시와 외교적인 교섭의 결과 왜구는 점차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하여 1409년(태종 9)을 전후하여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일본 각지로부터 도항하는 왜인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통교왜인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통교왜인들이 해안지방을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교역을 하고, 각 지방에 분치된 항왜(降倭)들과 접촉하면서 연해 병선의 허실을 정탐하는 등 치안상의 폐단이 야기되었다.

또한 조선에 도항하는 왜인은 통교무역자이지만 진상과 회사의 조공무역을 행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 조정은 그들이 조선으로 도항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접대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게다가 왜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포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폐단이 발생하자 접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매매하였는데, 이는 조

선 조정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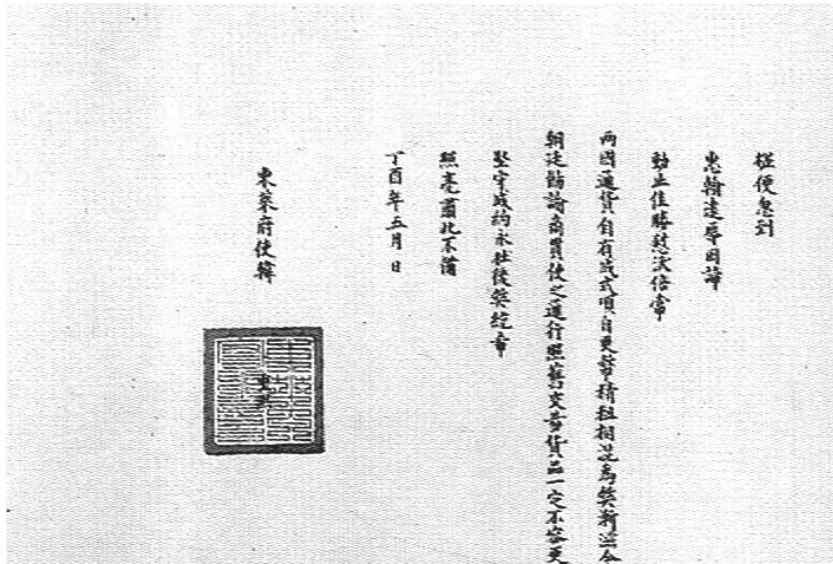
이같이 통교자의 증가는 조선의 치안상의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조선조정은 통교왜인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대마도정벌이후 왜구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왜선이 도항하여 정박할 수 있는 포소를 제한하는 한편 서계·도서·문인·계해약조 등의 왜인통제책을 정비하였다. 그와 아울러서 사선(使船)의 정수와 승선인원, 체류기간, 과해량(過海糧), 급료, 각종 연회의 장소와 횃수에 이르기까지 등 왜인접대규정을 상세하게 정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왜인들의 횡포와 무질서한 행동을 규제하였다. 이러한 통제와는 달리 왜구의 진압과 피로·표류인 송환에 협력한 자, 외교상의 공로자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수도서제도와 수직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조선정부가 왜인들에 대한 통제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①통교자의 증가에 따른 치안·경제상의 부담과 ②대마도정벌 이후 왜구에 대한 자신감 ③일본의 국내정세에 대한 지식의 확대 등이었다. 특히 조선정부는 대일사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 예를 들면 일본의 국내정세, 막부 장군과 지방호족과의 세력관계, 일본 내의 해적의 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대일외교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다.

2. 왜인들이 입국할 때 소지해야 할 도항증명서

조선시대에 통교왜인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서계·도서·문인을 소지하여야 했다. 그 중 서계(書契)는 조선의 예조와 일본의 통교자가 주고받았던 일종의 외교문서로, 조선에 오는 통교왜인은 반드시 서계를 지참하여야 했다. 서계에는 통교자의 관직 및 성명, 도항인원, 도항목적 등과 조선국왕에게 진상하는 물품을 기록한 별폭(別幅) 그리고 도서가 찍혀있어야 했다. 서계는 대마도정벌 이후부터 조선에 도항하는 왜인의 통제수단으로도 이용되어 대마도로부터 도항하는 통교자는 대마도주의 서계를, 구주지방의 통교자는 구주절도사의 서계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書契 1717년(숙종 43) 동래부사가 대마도주에게 보낸 것으로 사무역에 사용되는 은화의 복구에 대한 답서이다. 『朝鮮後期 通信使와 韓日交流史展』(1991) 전제

그러나 서계에 의한 통제는 대마도주의 정치적 불안정과 구주절도사의 지배력 약화, 그리고 조선정부의 철저히 하지 못한 통제책의 시행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인제도를 실시하였다.

도서(圖書)는 조선국왕이 일본의 지방호족이나 통교상의 공로자에게 지급한 일종의 사인(私印)으로, 통교자가 도항할 때에 가지고 오는 서계에 찍어 통교상의 증명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 도서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통교왜인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한편, 도서는 여진인에게도 사급되었는데, 왜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교상의 증명으로 사용되었다.

문인(文引)은 일종의 도항증서로, 오늘날의 비자(visa)와 유사한 것이다. 문인(行狀·路引이라고도 하였다)은 본래 국내에서 상인에 대한 통제와 세금의 징수 그리고 국경의 요새나 나루터(關津)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행증명서이다. 문인은 후에 조선에 입국하는 왜인과 여진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확대되었다.

문인 이전의 단계인 노인은 원래 흥리왜인에게 사용되었다. 이 노인은 1426년(세종 8) 왜인들의 도항증서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436년에는 서계와 문인을 위조해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문인에 사송선의 크기와 각 선의 정관(正官), 격왜(格倭)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인원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후 1438년(세종 20)에 왜사의 통제를 요청하기 위해 경차관 이예를 대마도에 파견하였는데, 그때 대마도주와 문인제도를 정약하였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도항하는 모든 통교자는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문인을 가지고 와야만 접대와 교역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고 도주로 하여금 일본 각지로부터 오는 통교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반면에 대마도주는 문인제도를 이용하여 각지의 통교자를 통제하고 문인 발행에 대한 수수료(吹噓錢)를 받음으로써 대마도내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문인제도는 조선 조정과 대마도주의 이해가 상응하였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었으며, 이후 조선의 주요한 왜인통제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의 문인의 발급은 호조·병조·예조를 비롯하여 서울은 한성부와 유후사가, 외방은 도관찰사·도순문사·수령·만호 등의 지방관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문인의 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 준 이유는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의 중간지역에 위치하면서 간사한 무리를 단속하는 남쪽 울타리(藩屏)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대마도주가 왜구의 재발을 방지하고 도내의 정치, 경제적 지배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문인발행권을 준 대신 그를 조선의 외교질서 속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이는 조선 조정이 지방에 파견하였던 경차관·체찰사·선위사 등을 대마도에도 파견하였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인제도는 대마도주를 통해 통교왜인을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계해약조는 대마도주의 통교를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계해약조의 주 내용은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세견선은 일본의 통교자가 1년 동안에 파견할 수 있는 사송선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국이 외이(外夷)에 대해서 조공의 회수를 제한하고 무역선의 내조시기 및 선수 등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세견선 정약은 이미 고려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기록상 조선시대에는 1424년(세종 6)에 구주절도사 원의준(源義俊)과 세견선을 정약하였다.

대마도주와는 1443년(세종 25)에 맺은 계해약조에 의해서 세견선을 정약하였다. 계해약조의 체결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계해약조는 1443년 파견되었던 통신사의 서장관 신숙주가 정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체결 당시의 상황과 『조선왕조실록』 및 신숙주의 「졸기」, 일본의 『대마세계사기(對馬世系私記)』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계해약조는 1443년(세종 25) 8~10월경에 대마도에 파견되었던 체찰사 이예가 주도하여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숙주는 대마도주를 설득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계해약조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전하여지는 것은 ① 대마도주에게 매년 2백석의 세사미두를 하사한다는 것과 ②도주의 세견선을 50척으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수외 특송선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 등 2항목뿐이다.

그 후 일본의 모든 통교자들에게 적용하여 대마도주처럼 세견선을 정약하여야만 조선에 도항하여 접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심치왜(深處倭)는 물론 독자적인 통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도서왜인도 세견선을 정약하였으며, 1477년(성종 8)에는 모든 수도서왜인에게 확대 적용되어 그

들도 세견선을 정약해야만 조선에 도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견선의 정약이 사송선의 통제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후 세견선을 정약하지 않은 자가 도서와 서계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접대를 거부하는 등 불법 도항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처럼 계해약조는 조선과 대마도간의 외교관계를 정례화함으로써 이후 대일통교체제의 기본이 되었고, 또한 대마도주를 비롯한 일본의 지방호족들을 기미관계(羈縻關係)의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계해약조와 문인제도는 일본과의 외교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계해약조와 문인제도는 임진왜란 후에 체결된 기유약조에 계속 유지되어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근간이 되었다.

3. 통교위반자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 조정이 서계·도서·문인 등 왜인통제책을 정비하여 시행하자 입국이 제한된 통교왜인 중에는 왜인통제책을 교묘하게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도항한 자들이 많았다. 특히 불법으로 도항한 왜인이 매우 많아 1439년(세종 21)경에는 1년 동안의 왜인 접대비용이 무려 10만석에 달하여 연해의 국고가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다한다.

그러나 통교위반자의 위반 수법이 너무 다양하고 교묘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그들의 위반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통교 위반자로 의심이 되더라도 그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접대를 허용하였다. 심지어는 위반 사실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상경시켜 접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조정이 통교 위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이유는 멀리서 온 사절을 박대할 수 없다는 명분론과 일본과의 불화 및 왜구의 재발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는 왜인들이 서계·도서·문인을 소지하고 진상·회사라는 조선의 외교의례에 따른다면 통교 위반자의 진위 여부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조선에서는 통교위반자가 많이 나타나자 그에 대한 처리를 대마도주와 의논하거나 위반 사실을 대마도주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는 통교위반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마도주로 하여금 문인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고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조정이 대마도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교왜인을 제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즉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어 통교자를 통제하려 하였지만 대마도주가 제대로 문인을 발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마도주를 통한 간접 통제방식과 문인제도의 한계점이 불법적으로 도항하는 통교위반자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문중,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6.
- 한문중,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일본사상』7,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4.
- 한문중, 「조선에 불법 도항한 왜인들」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근세, 경인문화사, 2006.
- 中村榮孝, 「室町時代の日鮮交通と書契及び文引」 上·下 『史學雜誌』42-10·43-11, 1931(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東京, 1965 소수)
- 米谷均,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偽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697, 1997.



조선후기 쓰시마(對馬)의 화재와 조선의 대응

- 왜관을 중심으로

장 순 순 | 전북대학교 강사

I. 머리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관한 총 33종에 이르는 각종 謄錄類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등록은 대부분 예조의 속사인 전각사에서 편찬되거나 보관하였으므로, 예조등록이라고도 한다. 『同文彙考』의 편찬에 기초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증정교린지』나 『변례집요』도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島中失火』와 「島中失火謄錄」이라는 문건도 이 등록류에 포함되어 있다. 『도중실화』와 「도중실화등록」은 1660년(현종 1) 1월부터 1714년(숙종 40) 2월까지 54년간에 걸쳐 부산의 두모포왜관 및 초량왜관, 쓰시마번(對馬藩)의 藩廳이 위치한 후추(府中),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치소였던 에도(江戸)에서 발생한 화재의 보고와 그에 대한 조선 정부의 구호 조치에 관한 전말이 정리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도중실화』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왜관에서의 화재 발생과 그에 대한 조선정부의 구호 내용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異國人的 공간이었던 왜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조선의 대일인식 및 대일정책 실태를 밝히는데 미력하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왜관에서의 화재 발생

1. 왜관 건물의 조영과 수리

왜관은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들이 머물던 곳으로 조일 간의 외교 의례와 무역이 이루어진 공간이다. 조선 후기에는 부산에만 있었다. 임진왜란 후 조일 국교가 재개되면서 1607년에 이른바 두

모포왜관(舊館)이 설치되어 70여 년간 지속되었고, 이후 1678년(숙종 4)부터 1876년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 체결까지는 초량왜관이 있었다.

본래 조선 정부의 왜관 설치 목적은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쓰시마인)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다. 왜관 내 건물은 크게 조선이 지어준 것과 일본 측, 즉 쓰시마번에서 물자와 비용을 조달하여 지은 건물로 나뉜다. 조선은 일본에서 도항한 외교사절의 숙소나 관수가·재판가·개시대청과 같이 무역이나 외교 업무상 중요한 기능을 갖는 관사나 업무 종사자(役人)들의 숙소, 연향대청과 같은 부속 시설의 조영 및 비용을 담당하였다. 그 밖의 건물들은 일본 측, 즉 쓰시마번에서 마련하였다.

조선 측이 조영한 건물이 낡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요 경비의 조달은 경상좌수영에 소속된 동래지역의 7개의 진 가운데 主鎭인 부산진이 주관하였으며, 객사도 훼손되는 대로 각 진이 힘을 합하여 보수하였다.

2. 화재 발생과 조선의 구호

『도중실화』에는 1667년부터 1713년에 이르기까지 왜관 및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보고가 12건 기록되어 있다. 공간별로 나뉘보면 두모포왜관에서 7건, 초량왜관에서 4건, 그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가 1건이다.

왜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부산진과 동래부는 화재 진압에 신속하게 개입하였으며, 조정에 대한 보고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공문서 전달체계에 따르면, 동래부사의 보고는 동래부사→경상감사→한양 조정으로의 보고 절차가 일반적이었다. 조정에서 내려보내는 회신도 역시 이 과정을 역순으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사에게는 긴급 사안의 경우, 상부 기관인 경상감사를 경유하지 않고 한양 조정에 바로 장계를 올릴 수 있는 권한, 즉 直啓權이 있었으며, 화재에 관한 보고도 이 범주에 해당되었다.

왜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선의 구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정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왜관의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수리 및 재건을 해주었다. 요컨대, 왜관 건물 중 관수가·재판가·개시대청 등 동관 삼대청과 서관 삼대청 등 일본에서 도항한 외교사절의 숙소, 무역이나 외교업무상 중요한 기능을 갖는 건물이나 役人들의 숙소, 연향대청과 같은 부속시설의 경우,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조선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또는 재건해 주었다. 이 건물들은 왜관 설치 당시부터 조선정부가 직접 지어 준 건물이었다.

『증정교린지』 권3 「감동」에는 초량왜관 당시 왜관 건물에 관한 조선 측의 수리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680년 화재로 소실된 관수가는 1684년부터 1690년까지, 1708년 화재로 소실된 서관 동대청 서행랑 56칸은 1714년부터 1715년까지 재건되었다. 한편, 이후의 화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733년 화재로 소실된 서관 동대청 동행랑 56칸은 1738년에, 그리고 1780

년과 1822년 화재로 소실된 서관 동대청 서행랑과 서관 중대청도 1791년, 1825년부터 1828년까지 각각 재건해 주었다. 그러나 代官家, 서승왜가, 통사왜가를 비롯하여 각종 창고 등 관왜들의 생활공간은 쓰시마번에서 물자 및 경비를 모두 조달하여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1684년 대관가의 화재, 1706년 만송원송사 수목선의 화재, 1713년 造泡長 行廊의 소실, 1732년, 1768년 제1선 下房에서의 화재에 대한 조선의 조치를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왜관 화재에 대한 조선의 구호에는 왜관 건물의 재건 외에 공목과 공작미의 지급, 그리고 역관 문위, 예단 증물 등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전례, 즉 정해진 기준에 준하여 이루어졌는데, 화재 피해의 규모와 피해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조일외교와 무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왜관에 체류 중이던 정례사절이나 차왜와 같은 송사왜, 무역을 주관했던 대관 등에게는 공목과 공작미의 지급 외에도 별도로 왜관에 역관을 파견하여 위문하고 예단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713년(숙종 39) 화재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두부 만드는 곳에서 시작된 화재가 번져 하급도왜가 거처하는 2호, 釀酒長 行廊, 격왜가 거처하는 3호 등 합하여 90여 칸이 타버렸다. 조정에서는 화재로 훼손된 건물은 쓰시마번에서 지은 것이며, 하왜들이 머무는 곳으로 역관의 문위와 ‘증물’을 논할 바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불에 탄 건물이 100여 칸에 이르는 대규모 화재에 대해 “끝내 홀전을 내리지 않는 것 또한 몰인정(終靳恤典 亦涉埋沒)하다”고 하면서 공목 2동, 공작미 30석을 특별히 마련해 줌으로써 ‘조정의 德意’를 표하기도 하였다.

III. 맺음말

조선은 왜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화재가 발생하면 부산진과 동래부는 곧바로 화재 진압에 개입하였다. 화재 사실을 곧바로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관왜, 즉 쓰시마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행하였다. 경상도 각 군의 물력을 동원하여 임시로 거주할 가건물을 지어주고, 취사도구마저 불에 타버려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왜관 주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밥을 지어 제공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 주었다.

그리고 왜관의 주요 건물, 즉 일본에서 도항해 온 외교사절의 숙소나 무역 및 외교 업무상 중요한 기능을 갖는 건물, 연향대청 등 부속시설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조선 측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수리하거나 재건해 주었다. 또한, 화재의 규모와 피해 대상에 따라 전례에 준하여 공목과 공작미를 지급하고, 역관을 통해 위문하거나 예단과 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왜관에 체류 중 화재 피해를 입은 정례사절, 차왜, 무역을 주관하던 대관 등에게는 별도로 역관을 파견해 위문하고 예단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 논리는 “먼 나라 사람을 대하는 제왕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대마도인을) 구

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변정에 관계된 일이므로”, “재앙을 물리치고 이웃을 구휼하는 도리에서 별도로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고 구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해가 큰 상황에서 홀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매물찬 일이므로”, 그들에게 ‘조정의 진념의 뜻’, ‘조정의 덕의’를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조선은 전기부터 왜관, 즉 일본인이 거주한 지역의 재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조선 전기에도 삼포왜관이나 쓰시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의 피해가 확인되면, 예조에 서는 郎官을 보내 진휼하거나 경상도 관찰사가 진휼하는 것이 구례였다.

1429년(세종 11) 내이포에 머물러 사는 일본인 37호가 화재로 가재와 미곡이 모두 타 버렸을 때 조정에서는 양식이 떨어진 자를 가려서 환자곡(還上穀)을 지급해 구휼하였으며, 1458년(세조 4) 경상도 제포에 거주하는 항거왜인의 막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조정에서는 피해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事目이 논의되었다. 1461년(세조 7) 3월에는 제포왜관에서 38호가 화재로 연소되었는데, 경상도관찰사의 진휼이 있었다. 이듬해인 1462년에도 제포의 항거왜인 三未時羅의 집에서 불이나 30호가 연소하였는데, 이때에도 피해의 경중에 따라 경상도 관찰사의 진휼이 행해졌다.

조선 정부가 왜관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진휼과 구호를 다한 것은 비록 쓰시마가 영토적으로는 일본에 속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조선의 번속국으로 간주되었던 쓰시마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삼포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編氓과 같이 보므로 그 失火한 사람을 의리상 당연히 구휼하는 것은 본디 별다른 은혜가 아니다”라고 예조의 서계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조선은 국초부터 쓰시마인에 대해 편맹, 즉 조선의 호적에 편입한 백성, 조선 국왕이 그 품안에서 ‘一視同仁’하여 어루만져 보살펴주는 존재로 파악하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이러한 조선의 쓰시마에 대한 인식은 관념상으로나마 조선후기까지도 여전히 유효했으며, 결과적으로 쓰시마 관련 지역, 즉 왜관의 화재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이후 조·일 사무역과 무역품의 변화

이 승 민 | 국민대학교

1. 18세기 후반 이후 조·일 사무역의 변화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은 크게는 공무역과 사무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중 사무역은 부산 倭館 안에서 이루어지는 開市貿易을 말하는 것으로, 禁制品을 제외하면 큰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물품 거래가 이루어졌다. 17세기 이후 사무역은 조선산 人蔘과 일본산 銀의 직교역, 그리고 중국산 生絲(白絲)·絹織物과 일본산 銀의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이중구조로 전개되었다. 특히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던 물품 중 백사·견직물과 인삼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즉, 인삼과 은 이 두 물품이 대일 사무역의 주요 물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조·일 사무역 물품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특히 19세기 사무역 수출품은 牛皮·牛角爪·黃芩·乾海蔘, 그리고 수입품은 銅이 중심 물품이 되어 갔다.¹⁾

18세기 후반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조·일 사무역이 크게 쇠퇴해가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선의 인삼 생산 부진, 일본의 인삼 국산화 성공, 일본의 은 수출 통제와 그에 따른 생사 유통의 부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1770년대 중반 이후 조·일 사무역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 그리고 쓰시마가 사무역 단절을 명분으로 막부로부터 永續手當金 12,000냥을

1) 田代和生, 『幕末期日朝私貿易と倭館貿易商人 -輸入四商品の取引を中心に-』, 『徳川社會からの展望』, 同文館出版, 1989.

2)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71; 森山恒雄, 『對馬藩』, 『長崎縣史(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中村質, 『近世日朝私貿易論の再檢討』,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1992 등이 대표적이다.

받았는데, 사실 이는 막부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쓰시마의 고육지책이었고,³⁾ 사실 상 조·일 사무역은 1876년 개항 때까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⁴⁾

조선후기 조일무역은 己酉約條의 체결로 무역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었고 17세기 중반 兼帶 制의 실시로 외교와 무역이 분리되면서 이러한 틀 안에서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후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점점 쇠퇴하게 된다. 조선후기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인삼이었다. 그러나 1710년대부터의 청나라 인삼 수입, 1720~1730년대의 일본 국내산 인삼 재배에 따른 수입 대체 성공, 1740년대부터의 아메리카 人蔘 수입, 18세기 중반 이후의 국내 자연삼 절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1750년대를 기점으로 18세기 중반 이후의 인삼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고,⁵⁾ 일본 국내에서 인삼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일무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인삼은 더 이상 대일무역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제까지의 개시 무역은 조선산 인삼 수출과 함께, 중국산 견직물·생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개 무역 구조를 띠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던 중국산 생사의 유입이 매우 부진해졌고, 인삼과 함께 중국산 생사 또한 일본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대일무역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조일무역도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일무역이 18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무역상의 근본적 모순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戰後 복구사업과 함께 경제적 발전으로 대일무역도 발전해 갔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정부, 특히 조선의 재정 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교역관계를 발전시킨 것은 대일무역의 교린적 측면과 함께 양국 정부가 정권안정을 꾀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결국 그 정책은 양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18세기 중반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줄고 오히려 강력한 통제가 계속되면서 무역의 확대 발전을 크게 제약했다.⁶⁾

사실 조·일 사무역은 조선·청·일본 삼국의 교역이 연동되어 있었다. 17세기 후반 청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를 통한 직교역 실시 이후에도 일본의 대외무역 정책의 기조는 일본의 은 유출을 차단하는 통제정책이 유지되고 있었고, 1715년 正徳新令 실시 이후에는 무역을 가능한 억제하고 자급경제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의 은 유출 통제 대상에는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고, 결국 그 결과가 조·일 사무역의 쇠퇴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은 일본 은 유입 격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

3) 森晋一郎, 「近世後期對馬藩日朝貿易の展開 -安永年間の私貿易を中心して-」, 『史學』 56-3, 1986, 145쪽.

4)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200쪽.

5) 오성, 「조선후기 인삼무역의 전개와 잠상의 활동」, 『세종사학』 1, 1991, 41~59쪽; 정성일, 「조선삼 인삼 종자와 일본의 인삼 수입대체」, 『춘계 박광순박사 화갑기념 경제학논총』, 1993, 185~187쪽.

6)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58쪽.

기 위해 청에 대해서 은 유출을 최대한 줄일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청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紋緞과 같은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18세기 중반 이후 조·일 사무역과 무역품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의 쇠퇴는 무역차액 감소와 무역량 축소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무역의 쇠퇴와 함께 조선과 일본의 무역차액은 전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쓰시마의 재정을 압박했고,⁷⁾ 조선쪽에서 보아도 공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며, 무역량의 측면에서도 19세기 이후 開市率은 10~20%대에 머물고 있었고, 조선으로의 무역선 도항 횟수도 전보다 크게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시마에서는 조선과의 사무역이 단절되었고 이것이 藩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막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1772년 쓰시마로부터 조일무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쓰시마 현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쿠마 진파치(佐久間甚八)가 파견되었다. 하지만 사실 중개무역이 중단된 것이지 사무역 자체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으며, 사무역은 쇠퇴한 것 뿐이었다.

2. 19세기 무역품의 변화

: ‘人蔘↔銀’에서 ‘牛皮↔銅’ 중심의 무역으로

중개무역의 중단과 사무역의 쇠퇴에 따라 18세기 후반 이후 사무역으로 거래되는 수출품과 수입품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760년대 이후 조선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은에서 동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인삼·생사·견직물에서 黃芩을 중심으로 하는 약재와 말린 해삼(乾海蔘·煎海鼠)으로 변했다.⁸⁾ 그리고 특히 19세기에 접어들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牛皮·牛角爪·黃芩·煎海鼠의 4가지 물품으로 정착되었는데,⁹⁾ 그중에서도 특히 우피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19세기 대일무역을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¹⁰⁾

특히 이러한 무역품 변화의 양상은 사무역 담당상인, 즉 왜관에서 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동래상인들의 인식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1813년 1월 동래부사 趙貞喆이 『慶尙道東萊府商賈等救

7) 1790년의 경우를 보았을 때, 쓰시마가 조선과 무역을 해서 거두어들인 무역차액은 銀을 기준으로 해 보았을 때, 막부의 재정 보조금이나 領地에서 거두어들이는 재정수입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성일, 위의 논문, 254쪽.

8) 森晋一郎, 앞의 논문, 1986, 145쪽.

9) 田代和生, 앞의 논문, 1989.

10) 김동철,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3.

弊節目』을 작성해 비변사에 보고했는데,¹¹⁾ 주요 골자는 동래부 商賈가 왜관 개시, 즉 사무역에서 거래되는 조선의 우피와 우각, 그리고 일본의 동을 독점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 동래상인의 무역 성쇠 여부는 조선산 우피·우각의 수출과 일본산 동의 수입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조선의 우피, 그리고 일본의 동이 주요한 수출·수입품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출품 중에서 대가로 지불된 동의 비율로 보아도 우피가 무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피는 일본 海防 체제의 강화로 인한 武具用 우피 수요의 증대로 인해 18세기 말부터 개시되어 19세기 이래 일본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다.¹²⁾ 쓰시마에서 수입한 우피는 시기별로 적게는 11,000여 매에서 많게는 25,000여 매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피의 수입량은 쓰시마의 입장에서 보면 대조선 사무역 수입 물품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¹³⁾

또한 『一代官每日記』를 근거로 1844~1849년의 6년 동안의 商賈都中의 수출 현황을 파악한 연구에 따르면, 역시 물량으로 보았을 때 당시 우피의 일본 수출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6년 동안 13명의 상고도중이 12만장에 이르는 우피를 일본으로 수출했을 정도로,¹⁴⁾ 우피는 대일 사무역의 중심 물품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말린 해삼은 長崎會所에서 다와라모노(俵物)의 請負制度를 근간으로 1785년부터 도맡아서 1804~1808년까지 평균 37,000여 근을 수입하고 있었다.¹⁵⁾ 다와라모노는 쓰시마 부근에서도 생산되고 있었지만, 쓰시마에서 생산되는 것은 많아도 3,000근을 넘지 않아 대부분이 조선으로부터 수입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말린 해삼의 수입량은 1780년에 30,306근, 1781년에 37,758근 5습이 일본으로 수입되어 나가사키로 수송되었고, 이후 1787년에 11,000근, 1830년대 초반에 20,000근, 1844년에 7,163근, 1845년에 18,653근 5습 5勺, 메이

11) 『慶尙道東萊府商賈等救弊節目』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奎18109의4). 해당節目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철(위의 논문, 1989)과 양홍숙(『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 : 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85~87쪽)의 논문이 참고된다.

12) 田代和生, 앞의 논문, 1989. 일본이 武具 제작을 위해 牛皮를 수입했다는 田代和生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塚田孝는 牛皮가 군수용이 아니라 신발 등 민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アジアにおける良と賤 -牛皮流通を手掛りとして-』,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I, 東京大學出版會, 1992, 251~252쪽).

13) 김동철, 위의 논문, 404쪽.

14)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에 참가한 商賈都中의 규모와 활동(1844~1849)』,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1998, 94~95쪽.

15) 小川國治, 『江戸幕府輸出海産物の研究』, 200~204쪽(田代和生, 위의 논문, 25(289)쪽에서 재인용).

16) 田代和生, 위의 논문, 25(289)쪽에서 재인용.

지(明治) 초반에 30,000근으로 대량으로 꾸준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⁷⁾

19세기 조선의 주요 대일수출품 중의 하나였던 黃芎도 주목할 만한데, 우피를 제외하고 쓰시마의 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황금이였다. 사쿠마가 쓰시마에 파견되었던 1772년에도 인삼 외 약종인 황금이 상당수 수입되어 오사카의 돈야(問屋)에서 취급되었다고 한다.¹⁸⁾ 1778년에 일본으로 수입된 조선 약재는 인삼 외에 黃芎·黃芪·遠志가 있었는데, 1778년 그 한해에만 전체 약재 수입량 116,306근 중 황금이 115,236근으로 전체 약재 수입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서, 18세기 후반 이후 황금이 약재 수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선 황금 대량 수입은 계속 이어져서, 이후 황금의 수입은 1787년에 50,000근, 1830년대 초에 46,000근, 1844년에 33,040근, 1845년에 23,680근, 메이지 초반에 10,000근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일 사무역의 중요한 물품의 하나였던 것이다.¹⁹⁾

18세기 후반,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도 조선 수입품에 대한 결제수단은 銅이었다. 대금의 일부를 大錢²⁰⁾으로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이었던 것이다. 1678년 常平通寶가 발행되면서 조선에서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는데, 鑄錢의 주원료인 동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품질이 좋지 않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에서는 대일 동 무역과 국내로의 유통을 국가에서 통제하고자 했고, 공·사무역의 대금으로 사용되던 동은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조달해야만 했다.²¹⁾

즉, 조일 사무역에서는 1750년대 이후 일본이 은을 대신해 동을 조선으로 수출하게 되고, 기존의 인삼·생사·견직물 위주였던 대일 수출은 우피·황금·말린 해삼·우각조의 4가지 품목이 중요한 사무역 물품으로 대체되게 되면서, ‘人蔘↔銀’ 체제로부터 물량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牛皮↔銅’ 교역 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19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17) 森晋一郎, 앞의 논문, 143(405쪽).

18)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47쪽.

19) 森晋一郎, 앞의 논문, 142(404쪽); 한편 당시 일본에서 빗이나 비녀의 원료로 사용되던 牛角爪의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양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20) 정성일은 大錢을 조선 돈인 常平通寶라고 보고 있다. 1752년 무렵 쓰시마의 표류민 조사 기록에서 상평통보라는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 바 있고,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1749년에는 쓰시마가 일본에서 상평통보를 주조해 왜관에서 그것을 유통시킬 것을 구상한 적도 있었다(정성일, 「상평통보를 소지한 조선의 표류민과 대마도(1693~1862)」,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101, 2016 참고). 또한 19세기 초반 이후 공무역의 결제수단으로 銀(上銀)과 동전(大錢)이 추가 결제수단으로 활용된 사실이 밝혀내기도 했다(정성일, 「19세기 대일공무역 결제수단의 변경과 금납화: 1841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참고).

21) 조선정부의 주전사업과 일본 銅 수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록의 논문(「17~18세기 대일銅무역과 정부의 주전사업」,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2018)을 참고.

17세기 후반 조일관계와 右京圖書 교섭¹⁾

유 채 연 | 전북대학교 사학과

1. 머리말

17세기 후반 한일관계는 교린 체제의 안정기로 구분된다. 조선은 임진왜란에 이어 병자호란의 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청과의 관계도 안정되었다. 대내적으로도 전쟁의 여파를 극복하며 사회·경제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조세의 금납화를 촉진한 대동법의 실시로 상품화폐 경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변화를 바탕으로, 조선은 1609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누적된 조일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무오절목(戊午節目)의 성립, 1682년 통신사 파견과 계해약조 체결, 울릉도 영유권 문제 처리 등은 이후 변화를 상징하는 주요 사건이다. 본고에서는 17세기 후반 대마도주 宗義眞의 아들 右京의 도서 발급에 대한 교섭을 중심으로 조선의 변화된 대응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1678년 문위행의 파견과 戊午節目의 강정

圖書은 일본에서 조선에 왕래할 때 지참하는 서계와 文引에 찍어 통교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조선 전기 주로 조선에 협조하는 왜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회유책에서 시작하였다. 도서를 받은 사람[受圖書人]은 조선에 도항할 수 있는 통교권과 使送船을 약속받음으로써 무역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와서도 도서는 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다.

1) 본고는 「17세기 후반 조일관계와 右京圖書 교섭」, 『한일관계사연구』73, 2021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 도서가 대마도가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 소개되었다. 최근 도서에 대한 연구는 교섭 과정에 주목하여 조일 관계의 추이를 파악하는 단서로서 도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1678년(숙종 4) 대마도에서는 江戶에 들어갔던 도주가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도주의 아들 右京[宗義倫]이 막부장군을 알현하고 承嫡을 허락받은 일을 조선에 전하였다. 이에 조선은 당상역관 김근행과 박유년, 당하역관 안신휘로 선발하여 대마도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대일외교 현장에서 실무와 교섭에 경험이 있으며, 1675~78년까지 초량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을 주선하면서 조선이 새로운 왜관 운영에 대해 구상하는 바를 잘 아는 인물들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두모포 왜관을 초량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왜관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두모포 왜관은 전체적으로 지세가 낮고 장소가 협소한 편이었는데, 왜관에 상주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왜관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밀무역, 倭債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도 높았다. 이에 조선은 왜관 이전을 계기로 양국인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흐트러진 왜관 통제를 재정비하고, 기유약조 이후 누적되어 온 대일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초하에서 1678년 문위행은 당시 동래부사 이복이 왜관 관수와 논의하여 정리한 왜관 규제에 관해 조정에 올린 7개의 조목을 바탕으로 대마도로 건너가서 협의하여 답서를 받아 귀국하였다. 이른바 ‘무오절목’이다. 이를 근간으로 조선은 1682년 통신사를 통해 ‘계해약조’를 체결함으로써 새 왜관의 운영 방침을 마련하였다. 이는 왜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향후 조선의 대일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하였다.

3. 右京도서 교섭과 대마도의 ‘억지 전략’의 한계

1678년 문위행의 귀국 이후 1683년부터 대마도는 도주의 아들 右京의 도서를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대마도는 ‘보통 도주의 아들로 대개 10세 이전에 도서를 발급하는데, 右京의 나이가 13세 임에도 소식이 없으므로 이전의 사례를 들며 도서를 청한다’ 면서 右京도서를 요청하였다. 대마도가 언급한 사례는 1612년 彦三도서, 1642년 彦滿도서가 발급된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도주 宗義眞이 그의 아명도서[彦滿圖書]를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먼저 彦滿圖書를 반납한 후에 처분을 기다리라고 대마도에 통보하였다. 본래 조선이 도주의 아들에게 아명도서를 발급한 후에 그가 도주가 되면 그에 따른 도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도서[아명도서]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 조선이 제시한 규정이었다. 실제로 1642년 彦滿도서 교섭 때에도 조선은 당시 도주였던 宗義成의 아명도서[彦三도서] 반납을 주장하였다가 두 개의 아명도

서를 모두 허락하였다. 이번에도 이전에 받았던 아명도서를 반납해야만 새로운 아명도서를 허락한다는 것이 조선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마도는 이는 전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며 1642년 조선에서 彦滿도서를 허락할 때 함께 도주 宗義成의 아명도서[彦三도서]를 다시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彦三의 사례에 따라 宗義眞이 살아 있을 때까지 그의 아명도서[彦滿도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은 앞선 사례는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으로, 이후로는 전례로 삼지 말라’는 선대의 뜻을 분명하게 주지시키며 彦滿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결코 右京도서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마도는 조선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차 재판차왜를 파견하며 右京도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1683년 처음 右京도서를 언급한 이후 대마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판차왜를 통해 右京도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런데 右京도서 요청이 재판차왜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왜관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늘어났다. 조선의 도서 발급에 대한 방침이 확고한 만큼이나 대마도의 右京도서 요청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판차왜의 장기 체류로 인한 폐해가 나타났다.

당시 도서 발급을 요청한 재판차왜는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외교 사안들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귀환이 늦어질수록 조선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판차왜의 태도는 국교가 재개된 이래 대마도가 지속해 왔던 것처럼,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별도의 사안으로 조선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교섭방식이었다. 다양한 외교사안을 내놓고 체류기간을 늘리면서 조선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끝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것이었다.

조선도 그동안 대마도가 보여온 교섭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조선은 右京도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차왜가 右京도서를 요청할 때마다 아무리 오래 머문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나아가 조선은 재판차왜가 장기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재판차왜의 접대가 1특송선의 예에 따른 만큼, 체류 기한도 그에 준하는 110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재판차왜가 업무 처리를 이유로 1년 혹은 2년을 머물렀던 것은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오히려 이것을 근거로 삼아 지체하며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판차왜의 장기체류와 함께 앞의 차왜가 가기 전에 뒷 차왜가 오는 중복 도항[疊到]도 큰 문제가 되었다. 이들의 체류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겹치면서, 조선에서는 재판차왜에 대한 접대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래서 조선은 재판차왜가 겹쳐서 도항하는 경우에는 규례대로 먼저 온 차왜는 공급을 중단하고, 뒤에 온 차왜에게만 공급하는 규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과 대마도 양측의 주장과 대응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右京도서 교섭은 점차 장기적인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4. 조선의 右京도서 거부와 강경한 대응

右京도서를 얻기 위해 대마도가 보여온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조선이 원칙을 세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1688년 4월 재판차왜 平成尙이 조선표류민의 破船과 越前州 漂倭船을 들여보낸 데에 대한 回謝의 일로 조선에 건너왔다. 당시 平成辰이 右京도서를 요청하며 1년째 왜관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두 재판차왜의 疊到와 체류기간, 접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하였다. 조선은 대마도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이유를 대며 계속 머물고 있었던 재판 平成辰에게 한 달간의 말미를 주고, 기한 내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撤供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였다. 그럼에도 平成辰이 주어진 한 달의 기한을 넘기고도 돌아갈 생각이 없자, 조정에서는 撤供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平成尙에게는 지참한 서계와 路引을 돌려주고 접대 불허를 지시하였다. 특히 신재판에 대한 접대를 불허하는 지시는 접대를 시작으로 차왜에게 제공되는 日供米, 渡海糧米, 宴享贈給禮單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마도는 재판차왜를 파견하여 右京도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때마다 체류를 연장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조선은 그에 대한 접대 중지와 철공을 단행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은 右京도서 발급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차왜의 귀국을 촉구하였다. 그 내용은 1. 1특송선에 대한 접대 전례에 따라 재판차왜의 체류기한을 110일로 규정하고 지킬 것. 2. 연례송사를 겸대할 것(1특송선과 세견제1선이 6~7송사를 겸대). 3. 右京도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彦滿도서를 반납할 것이다. 이는 앞서 대마도가 右京도서를 요청했을 때부터 나온 내용으로 대마도의 무리한 교섭방식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도서 교섭은 조선의 적극적인 대일 정책의 일환 속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1692년 6월에 도주 宗義眞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右京[宗義倫]이 도주가 되면서 右京도서 교섭은 예상치 못하게 종결되었다. 이제 右京이 도주가 된 이상 조선이 도주의 아들에게 발급하는 아명도서를 허락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조선은 右京도서를 거듭 요청하는 平成尙에게 “도서의 일은 右京이 이미 도주가 된 후 마땅히 도주 도서가 있을 것인데, 아명도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그리고 右京의 사례는 이후 아명도서를 발급, 운영하는 전례로 확립되었다.

5. 결론

17세기 후반 이전보다 운신이 폭이 넓어진 조선은 대일외교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해 나갔다. 이러한 조선의 변화에 대해 雨森芳洲는 ‘天龍院(宗義眞, 1657~1702)대 중기 이후에는 조

선인이 일본인에게 익숙해지면서 “타고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위엄이 조선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쪽이 오히려 비굴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 형세가 되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이 시기 조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초량왜관으로의 이전이었다. 조선은 왜관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조일관계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7개 조목을 1678년 문위행을 통해 대마도와 ‘무오절목’을 협의하였고, 1682년 통신사행을 통해 강력한 규제력을 부여한 ‘계해약조’의 체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도가 요청한 右京도서 발급에 관한 교섭과정은 조선의 대일외교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조선이 주장하였던 彦滿도서의 반납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10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右京도서 교섭을 통해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도서 규정을 확인시키는 한편 대마도가 그동안 보여왔던 불합리한 교섭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나아가 조선은 대일외교자세의 변화와 의지를 대마도에 확실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변화는 이전과 확실히 다른 대응이었으며, 이후 조일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己酉約條(1609) 이후 규정 외 일본사신의 渡海와 조선의 대응

심민정 | 부경대학교 해양인문학연구소

1. 머리말

임진전쟁 종결 후 국교회복 과정에서 대일외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쟁 후 달라진 조일 양국의 외교적 상황 및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인식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 사신에 대한 조선 측의 처우일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국교재개 과정에서 일본사신 왕래가 다시 시작되는 과정을 살핌과 동시에 접대 규정 변화를 통해 양국의 외교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보고자 한다.

일본사신에 대한 접대는 조선의 인식과 주변 외교관계의 변화에 따라 논의를 거듭한 뒤 접대의례, 규칙 등이 점차 규정화되고 정례화되어갔다. 조선후기 일본사신 접대가 규례화되는 첫 번째 변화의 시기는 己酉約條(1609)에 日本國王使 및 대마도주 送使, 受職人船 등 조선으로 도해할 수 있는 선박을 규정한 시기이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사신 도해 규정이 생긴 기유약조 이후부터 차왜에 대한 접대의 시작 및 겸대제 시행까지의 시기에 주목했다. 이 시기 연구를 통해 겸대제 시행 전후로 일본사신 중 연례송사에 대한 접대가 규정되고 이 규정에 맞게 접대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차왜에 대한 접대가 정례화되는 과정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조선의 공식적인 접대를 받지 못하던 차왜가 겸대제 전후 정식으로 접대를 받는 사신이 된 것이다. 즉 차왜에 대한 접대 규정이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규례화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선에 도해한 일본사신 중 규정 외 일본사신에 집중하였다. 규정 외 일본사신은 조선의 접대 규정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 상에 있었던 사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이 인식한 '규정 외 사신'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들에 대해 접대를 허가하였는지의 여부, 만약 허가하지 않았다면 왜 규정 내로 들어오지 못했는지, 접대를 허락하였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규정 내 일본사신으로 자리매김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확인하려 한다.



2. 규정위반 일본사선 사례

기유약조로 인해 일본사선의 왕래 및 접대 규정이 갖추어진 이후 대마도주와 柳川調興 사이의 분쟁이 진행되고 종결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을 목적으로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도항하던 歲遣船인 연례송사의 兼帶制가 시행되었다. 겸대제는 해마다 조선으로 파견되었던 대마도의 세견선 20척에 매 사선마다 정관의 직함을 가진 사신이 승선하였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겸대제 시행으로 인해 연간 8~9척의 연례송사선에만 정관이 승선하였고 나머지 세견선은 겸하여 접대함으로써 조선의 접대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겸대제는 기유약조로 연례송사에 대한 규정의 틀이 마련된 이후 변화된 외교관계 상에서 연례송사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접대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존에 겸대제 시행 이후의 일본사선의 왕래, 교역, 접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겸대제 시행 이전의 일본사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목하지는 않았다. 겸대제의 배경이 되었던 柳川一件이나 기유약조의 조문을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겸대제 이후 일본사행과의 연속상선에서 조망하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유약조의 약정 이후 여러 세부 규정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일본사신 접대례는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겸대제 시행을 통한 접대례 개정에도 이런 경험의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연례송사 접대례는 1635년 12월부터 새로이 정례화된 差倭 접대례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즉 차왜를 접대할 때 특송사선례, 세견1선례, 세견4선례 등 연례송사선 접대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유약조 시행 후 겸대제 시행 전까지 일본사선에 대한 접대례 규정을 어떻게 수정·보완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정 외 일본사선에 대한 조선 측 대응에 주목하였다. 규정 외 일본사신 중에는 접대를 허락하지 않아 사라진 사신들도 있지만, 조선이 접대를 허락하여 규정 내 사신의 범주에 들어오거나 차왜처럼 새로운 규정 내 사신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 일본사선에 대한 조선의 처우가 왜 달라지게 되었는지, 이것이 일본사신 접대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여 도래한 사선은, 路引을 지참하지 않거나 대마도주의 圖書를 찍지 않은 서계를 지참하는 등 기유약조의 규식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접대례의 세 가지 식례인 國王使, 島主送使, 受職人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선을 말한다. 다음 <표 1>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내도한 사선을 표기하였다.

-<표1>



1) 路引, 圖書 등의 규식 위반 사례

- 1, 2, 7, 8번 사례
- 1번 사례. 1611년 11월, 원신안(源信安)의 사후선(伺候船)이라 하며 일본 小船 1척이 건너 왔다. 書契 지참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圖書가 찍히지 않아 접대를 거부하였다. 특히 규정 이외의 선박이었으므로 선창(船滄)에 들어와 정박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며, 왜 관 앞바다에 배를 정박해두도록 하였다.
- 2번 사례. 1612년 2월, 왜선(倭船)이 왔는데, 대마도주가 예조에 바치는 書契에 圖書를 찍지 않았으므로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 7번 사례. 1636년 4월, 飛船 1척이 내도했는데, 路引을 지참하지 않아 격식을 어겼으므로 책유하여 돌려보냈다.
- 8번 사례. 7번 사례처럼 규정 외 선척인데다가 노인 문제로 격식을 위반한 사례이다. 대마도 부중(府中)의 민가 300여 가구가 불에 타는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알리기 위해 내도한 倭船이었다. 노인을 지참하기는 했지만 곁면에 쓴 문자가 전례와 달랐으므로 책유하여 돌려보낸 사례이다.

2) 규정 외 선척 - 접대 허락/ 접대 불허

- 4, 6번 사례. 평언삼송사(平彦三送使, 受圖書船)
- 4번 사례. 1612년 9월, 평언삼송사(平彦三送使)가 정관 1인, 반종 5인, 격왜 26명과 함께 서계를 지참하고 처음으로 나왔다. 평언삼은 대마도주 宗義智의 아들로 1611년 兒名送使로서 圖書를 받았으므로 사선을 파견한 것이다. 평언삼송사는 기유약조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사송선이었지만, 차후 조선에서 도서를 발급해주어 규정 내의 사선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처음으로 도해한 이 시기에 접대례도 결정하였다. 평언삼송사는 대선(大船)으로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大船의 범주에 있던 세견1선~6선과 동일한 접대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평언삼송사는 이듬해(1613)에 조선 전기의 세견선 왕래 규정으로 접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1612년 뚝의 선척을 추가로 파견하기도 했다. 조선 전기에는 1년에 3척의 선박이 도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접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만약 접대를 한다면 1613년 뚝으로 접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언삼송사는 유관 기간보다 더 머무르면서 돌아가지 않고 여러 달 동안 접대받기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조선 측으로부터 추가로 접대받을 선척을 허가받을 수는 없었다.
- 5번 사례. 1612년 10월부터 1614년 7월까지. 본 사례에서는 규정상 접대의 범주에 들지 않

있던 특송선의 副船이 장기간 留館 하면서 접대 요청을 거듭하여 조선으로부터 접대 허락을 이끌어내어 잘못된 규례가 생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一·二·三特送使와 副特送使 등은 각기 그 배를 타고 다른 배는 帶同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간에 四船이 來朝할 때에 副船이나 水木船이라 하면서 각기 배 2척을 대동하고 온 일이 있었다. 조정에서 規例에 없는 일이라 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으니 倭人들이 무수히 懇請하며너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東萊府에서 狀啓를 올려 接待함이 좋을 듯하다 하니, 諭示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해마다 대동하고 와서 인하여 그릇된 規例가 되었는데 水木船은 接待함을 허락하지 않았다.”(『度支志』外篇 卷6, 「經費司」 五禮部4 賓禮下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年例送使’)

3) 규정 외 선척 - 접대 여부 확인 불가

- 3번 사례. 1612년 6월, 왜선 1척이 상물(商物)을 실으려 한다고 하면서 대마도주의 서계를 가지고 왔는데, 규정 외의 선척이므로 서계를 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예조에 문의하였다. 일단 예조에서는 서계를 접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접대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자료에서도 사선 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접대는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3. 求請 및 求質

조선에서 허용한 연례송사선은 기본적으로 외교관계 하에서 파견되지만 주 목적은 교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역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지만 求請, 求質 등과 같이 대마도의 직·간접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형태의 교역은 겸대제 시행 이후에는 대체로 연례송사선에 순부하는 형태로 요청이 이루어졌지만, 이전에는 송사선을 통하기 보다 별도의 사선을 파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파견된 사선들은 조선 측의 접대를 유도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공식적인 접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간단한 다례나 糧饌를 지급하기도 했다.

다음 <표 2>는 求請, 求質의 일로 도해한 倭船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정리한 것이다.

- <표 2>

기유약조 이후 특별한 구청이나 구무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頭倭가 서계를 지참하고 도래하는 규정이 있었다. 약조로 인해 송사선척이 감소하였으므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구청



과 구무 물품을 송사선에 순부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규정 외의 사선에 서계를 지참하게 한 것이다. 위의 <표 2>에서 1632년 차왜 橘成全이 路引을 지참하고 온 사례(13번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왜나 차왜가 書契를 지참하고 구무나 구청을 하고 있다. 차왜 橘成全의 경우는 일본 측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요청했던 약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규정 외의 차왜이기는 하지만 노인만 지참하고 왔어도 접수하였고, 동래부로 하여금 별도로 다례를 베풀고 糧饌도 지급하게 하였다.

대체로 구청이나 구무의 경우 별도로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잘 지켜졌다. 1611년 2월 매매 등의 일을 전담하기 위해 온 3명의 두왜 같은 경우는(1의 사례) 약조 이후 처음 도래하였으므로 접대예는 하지 않았지만 料米는 지급하였던 조선 전기의 방침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곧 규정 외의 사선에는 일절 접대가 없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料米의 지급을 철회하였다. 접대 방침을 재확인하는 일은 이듬해(1612)에도 발생하였다. 白苧布 등의 구청을 위해 건너온 두왜의 경우 규정 외의 사선이므로 최종적으로 접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지만, 조선 전기 『해동제국기』의 예에 따라 조선 측에서는 渡海糧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두왜는 도주의 분부라고 하며 도해량조차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특별한 사례로 1634년 11월~12월에 도해한 사선의 사례(14번 사례)처럼 물품이 아닌 사람을 요청하며 도해한 사신도 있었다. 당시 柳川一件으로 인해 대마도주에게 유리한 마무리를 위해 관백의 요청으로 馬上才人을 구청한 경우였다. 처음에 두왜가 와서 藤智繩이 마상재인 구청을 위해 올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였을 때 조선에서는 규정 외의 사선이라 하여 수책(水柵) 밖에 정박하도록 하고 회답서계를 작성하여 전달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였다. 회답서계를 전달하면서 조선 측은 서계는 세견선 편에 순부(順付)하도록 한 약조를 왜 지키지 않았냐고 책유하였으나 대마도에서는 세견선이 파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차왜 藤智繩이 도해하자 상황의 중요성을 인지한 조선은 기존에 구청을 위해 건너온 사선에 대한 접대를 불허하였던 것과는 달리 동래부로 하여금 茶禮와 上船宴을 설행하도록 하고, 糧饌까지 지급하여 접대예를 갖추었다.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구무·구청이 있을 때 조선의 대응은 접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한편 『접왜식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求貿’라는 용어가 정착되는 것은 1626년 9월 차왜 十兵衛가 書冊과 良馬의 구무를 요청한 사례(11번 사례) 부터가 아닐지 생각된다. 그 이전까지는 구체적으로 求貿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貿事’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변례집요』에는 별도로 ‘求貿’조가 있고, 1609년부터 일본에서 무역을 요청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1637년 겸대제가 시행된 후부터 ‘求貿-許貿’의 절차가 성립되면서 용어도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유약조 이후 구무나 구청, 혹은 이를 재촉하기 위해 도해하는 倭船에 대해 조선은 일관되게 규정 외 사선으로 인식하고 접대 불허의 방침을 고수하여 추가적으로 규례화되는 송사선을 막고자 하였다.

4. 규정의 사전에서 정례화된 차왜로

점대제 시행 전에 점대규정 상 가장 많은 예외를 낳았던 일본사신이 바로 두왜와 차왜였다. 앞서 구청과 구무의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기유약조에서 규정한 사선 외에 구무·구청을 포함하여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두왜나 차왜가 서계를 지참하고 파견되었다. 이들이 특별한 일이나 요청으로 도해하는 사례는 被擄人이나 漂流民의 송환, 에도에서 대마도주가 환도한 상황을 고지하거나 私書의 전달 등으로 다양했다. 처음에 조선에서는 송사선에 붙여 보내지 않는 것은 모두 약조에 어긋난다 하여 규정 외 사선으로 처리하여 물리쳤다. 被擄人이나 漂流人을 데리고 온 경우에도 점대를 허락하지 않고 약간의 糧饌만 지급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대마도주와 調興의 소송으로 인해 파견된 차왜에 대해 점대를 허락하면서 차왜 점대례가 정례화되었다. 본 장에서는 점대가 정례화된 차왜 및 두왜 점대를 허용하지 않았던 차왜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 피로인, 표류민 송환 → 표인영래차왜

다음의 <표 3>에 의하면 규정 외 일본사선 중 피로인이나 표류민을 데리고 온 경우, 1613년 두차례의 사례(1, 2번 사례)에서는 약조에 위배된다하여 점대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기유약조가 약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피로인을 데리고 온 두왜나 차왜에게 약간의 양식을 지급하여 厚意를 표하였다.(3, 6번 사례) 하지만 차왜가 정례화된 이후 피로인을 데리고 오는 두왜나 차왜는 점대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 <표 3>

하지만 표류인을 데리고 오는 차왜는 점대례의 범주에 포함되어 갔다. 기유약조 이후 표류인을 처음 데리고 온 차왜인 平成久의 경우, 피로인 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양찬을 점대받았다. 피로인이나 표류인을 데리고오는 경우 대마도 측이 사사로이 경비를 지출하여 식량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있었던 것이다. 점대제 시행 후 1641년 10월 차왜가 표류민을 데리고 오자 조선에서는 동래부로 하여금 다례를 행하고 약간의 양찬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 1645년 차왜 兵右衛門이 표민을 데리고 오자 조선에서는 세견1선례로 향접위관에게 점대하게 하면서 漂人領來差倭의 점대를 정례화하였다.

2) 도주 환도 고지 → 도주환도고지차왜

→ 1635년 12월 차왜접대례가 시행된 이후로 1636년 2월 신사청거차왜는 경상도 도사를 접위관으로 삼아 1특송례로, 같은 해 4월 도해역관 호송차왜는 동래부가 세견1선례로, 같은 해 8월 신사迎候의 일로 도해한 차왜는 향접위관이 세견1선례로, 9월 신사 도해일을 약정하러온 차왜는 향접위관이 세견1선례로 접대하게 하였다. 하지만 대마도주 고환 차왜는 접대의 범주에 넣지 않고, 늦은 시기(1653. 2. 차왜 藤成重)에 접대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때 향접위관이 세견1선례로 접대하도록 하였다.

- 〈표 4〉

3) 私書 전달 및 기타

- 〈표 5〉

→ 전체 표 자료는 차후 첨부

5. 맺음말



근세 왜관의 의사소통 경로에 대한 일고찰

: 재판차왜를 중심으로 *

이 형 주 | 국민대학교

1. 시작하며

근세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진 왜관에서는 조선의 관료와 쓰시마번의 관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¹⁾은 근세 조일 간의 공식 의사소통 경로가 쓰시마번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쓰시마번은 직접적으로 조선 조정에 외교 현안을 제기할 수 없었고, 반드시 ‘왜관⇔동래부사⇔경상감사⇔비변사·예조⇔국왕’의 경로를 거쳐야만 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 의사소통 경로는 쓰시마번 입장에서 중요한 외교적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제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훈은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왜학역관들의 개인적 인맥을 활용한 사적 의사소통 경로의 존재를 밝혀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왜관에서는 양국 관계자들 사이의 선물(音物) 증답과 향응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양국 사이의 선물 교환과 향응은 조선과 일본 간의 물질·문화적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²⁾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선물 교환과 향응이 갖는 의미를 양국 간의 문화·문물 교류에 기여한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외

* 본 발표문은 한일관계사학회 2025년 3월 발표문의 구성과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1)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2) 이즈미 조이치(泉澄一), 「1767(明和4)~1824(文政7)年における對馬藩より朝鮮への音信物等をめぐって」,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편,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下)』, 탐구당, 1992;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日朝食文化の交流」, 『新・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2011.; 허지은, 「근세 왜관과 朝鮮語通詞를 통한 조·일간의 교류—『通譯酬酢』의 「風儀之部」·「酒禮之部」·「飲食之部」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4, 2019; 사카이 마사요(酒井雅代), 「朝鮮通詞の著作と最前線での日朝交流—『通譯酬酢』を中心に—」,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 吉川弘文館, 2021 등.

교 교섭과 갈등 조정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왜관에 파견된 재판차왜(裁判差倭, 쓰시마번의 외교절충 담당관)가 선물 증답과 향응을 매개로 사적 의사소통 경로를 개척하고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왜관에서 이루어진 선물 증답과 향응의 역할을 주로 물적·문화적 교류의 맥락에서만 논했던 선행연구의 이해를 외교적 기능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조일 간 ‘사적 의사소통 경로’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이훈의 연구를 쓰시마번의 시각에서도 확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사례들을 통해 재판차왜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던 일부 선행연구의 견해³⁾에 대한 반론으로서 재판차왜가 조일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까지 재확인하고자 한다.

2. 선물 증답의 전략적 이용

왜관에 파견된 재판차왜는 조선 측의 관계자에게 수시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裁判記録」을 살펴보면, ‘내 접대를 맡은 왜학역관 변판사가 병에 걸렸다고 하기에, 문안차 사자를 통해 된장 한 상자와 간장 한 되를 보냈다⁴⁾’는 등 단순한 문안 인사를 목적으로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정례적 선물 증답은 일반적으로는 양국 관계자 간의 친선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이 단순한 관계 유지의 차원을 넘어, 특정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공식 의사소통 경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였다.

예를 들어 1736년 10월 19일 재판차왜 우치노 이치로자에몬(内野一郎左衛門)은 일특송사에 대한 연회에 참가한 동래부사에게 스기주(杉重)와 술을 보냈다.⁵⁾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한반도에 표착한 일본인 표류민에게 ‘5일마다’ 지급하던 구호물자를 ‘5일 동안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쓰시마번에 통보한 상황이었다. 당연히 쓰시마번에서는 이에 반발했고, 구호물자 지급 규정을 구레

3) 이즈미 조이치(泉澄一)는 재판차왜의 임용에서 외교적 능력보다 경제적 원조(扶助)가 우선되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차왜를 조일 외교의 핵심으로 파악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對馬藩士の朝鮮使行と「扶助」について』『史泉』81, 1995). 다만, 최근 연구를 통해 재판차왜가 조선과 일본의 외교 교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중재자였음이 재확인되고 있다(이형주, 「18세기 쓰시마 번의 재판(裁判) 파견에 관해: 1736년 오일잡물 교섭을 사례로」『일본공간』32, 2022; 同, 「18세기 조일 외교 속 쓰시마 번 裁判役의 역할」『일본역사연구』61, 2023).

4) 「裁判記録 四」, 작성자: 龍田權兵衛,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1709년 10월 27일 조.

5) 「五日糧裁判記録 二」, 작성자: 内野一郎左衛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1736년 10월 19일 조. 이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사료는 게재하지 않음.

로 돌리기 위한 교섭을 맡은 것이 우치노였다.⁶⁾

우치노가 1736년 6월 왜관에 도착한 이래로 동래부 측에서도 교섭에 신속한 대응을 보이며 8월에는 동래부사가 조정으로 보고를 올렸으나 10월이 되도록 조정의 답변이 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우치노는 왜학역관을 통해 동래부사가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재촉했지만, 동래부사는 아직 조정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보고를 꺼리고 있었다. 이에 우치노는 동래부사가 연회 참석을 위해 왜관을 방문한 기회를 이용하여 선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즉, 교섭이 지연됨에 따라 자신이 번 당국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으며, 표류민이 어쩔 수 없이 표착지에 장기간 머물게 되는 경우, 5일분의 구호물자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우니, 조정에 신속히 추가로 보고를 올려 기존처럼 5일마다 구호물자가 지급되도록 방침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쓰시마번이 제기하는 외교 현안이 조선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동래부사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동래부사는 통상적으로 재판차왜와 직접 대면하여 외교 현안을 교섭하지는 않았다. 조선 조정은 동래부사가 왜관 측과 직접 외교 현안을 논의하거나 문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했으며, 쓰시마번 사자에게 배푸는 연회에 참석할 때조차 왜관 측이 동래부사를 만나 현안을 직접 제기하려고 하면 병을 핑계로 연회에 불참하려 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재판차왜와 동래부사 간의 의사소통은 왜학역관을 통한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차왜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동래부사와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로, 왜학역관을 통한 추가 보고 요청에 동래부사가 응하지 않자, 우치노는 선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왜학역관이라는 공식 채널이 아닌 별도의 경로를 통해 동래부사와의 더욱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창출한 것이다.

3. 향응의 전략적 이용

재판차왜에게 있어서, 경상도 전체를 관할하며 동래부사를 지휘·감독하는 경상감사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경상감사가 순견(巡見)을 목적으로 동래부를 방문할 때에도 경상감사는 사자를 파견하여 재판차왜에게 간단한 문안 인사와 선물을 전달했을 뿐, 공식적으로 재판차왜가 경상감사와 직접 대면하여 사안을 논의하는 일은 없었다.

6) 해당 교섭에 대해서는 이훈(『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雜物(五日糧) 지급과 조·일 교섭왜곡』, 『한일관계사연구』9, 1998)과 이형주(앞의 논문, 2022)를 참조.

7) 이훈, 앞의 책, 2011, 150~151쪽.

이러한 제약 속에서 재판차왜는 경상감사의 사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특히 기도 로쿠에몬(幾度六右衛門)이 1726년 신금사(申禁使)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당시 조선과 쓰시마번은 신금사의 정식 사절 인정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었다. 신금사는 1720년대 발생한 밀무역 사건을 통보하고, 조선 측 연루자의 처벌을 요청한다는 막부의 의향을 받아서 파견된 사절이었다.⁸⁾ 쓰시마번은 신금사를 막부의 요청에 따라 파견한 사절로서 참판사(參判使)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측에서는 신금사가 전례 없는 사절이며, 참판사 격으로 파견된다는 점에서 접대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식 외교 사절로 인정하는 것을 꺼렸다. 이에 따라 동래부사는 신금사를 정식 사절로 인정할지 논의해 달라는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도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지시받아 우선은 공식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지만, 왜학역관을 통한 의사소통만으로는 동래부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기도가 기회로 삼은 것이 경상감사의 순견이었다. 기도가 번 당국에 보낸 서장(초안)⁹⁾에 따르면, 1726년 9월 22일 경상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왜관을 방문한 사자들은 장차 각 처의 지방관으로 임명될 정도로 신분이 높고, 경상감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측근들이었다. 이에 자신의 거처로 초대하여 향응을 베풀고 대면한 것이었다.

기도는 신금사 문제를 논의할 공식 의사소통 경로가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상감사의 측근인 사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는 먼저 조선과 일본 간 외교 교섭에서 경상감사가 동래부사의 상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금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감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참판사 즉 신금사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경상감사가 마침 동래부에 순견을 위해 내려와 있으니, 양국 통교의 성신(誠信)을 고려하여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도가 경상감사의 사자들을 직접 향응하고 주선을 요청한 것은, 해당 사료에서 직접 언급하는 대로 신금사에 관한 보고를 거부하고 있던 동래부사에게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면 교섭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즉, 왜학역관을 통해 재판차왜와 동래부사가 의사소통하는 기존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자, 경상감사를 통해 동래부사를 움직이려 한 것이다. 쓰시마번이 외교 현안을 조선 조정에 직접 전달할 수

8) 윤유숙, 「근세 朝日통교와 非定例 差倭의 조선도해」, 『사총』70, 2010, 127쪽.

9) 「裁判記録 五」, 작성자: 幾度六右衛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1726년 9월 23일 조.

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동래부사가 이를 조정에 보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동래부사는 신금사 문제를 조정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중개자인 왜학역관을 통한 교섭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도는 공식 의사소통 경로에서 벗어나, 경상감사의 권위를 활용하여 동래부사를 설득하려는 차선책을 강구한 것이다. 다만, 경상감사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사자로 파견된 측근들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기도는 경상감사의 사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접점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신금사 문제를 경상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보름여가 지난 10월 22일 왜학역관이 조선어통사의 거처를 찾아와 신금사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다. 동래부사가 신금사를 조정에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으며, 보고는 이번 달 7일이나 8일에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¹⁰⁾ 결과적으로, 신금사 문제는 조선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물론, 경상감사의 측근들이 실제로 로쿠에몬의 이야기를 경상감사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경상감사가 이를 근거로 동래부사를 설득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판차왜가 향응을 활용하여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상감사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했고, 이를 통해 동래부사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4. 나오며

본 연구는 재판차왜가 조선 측과의 외교 교섭에서 선물 증답과 향응을 단순한 의례적 행위로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조일 간 선물 증답과 향응이 양국의 물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다고 평가해 왔으나, 본 연구는 그것이 조일 외교에서 제한된 공식 의사소통 경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혔다.

먼저, 2장에서 다룬 선물 증답의 사례를 통해, 재판차왜가 수행한 선물 교환이 단순한 의례적 관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일 외교의 구조 속에서 일정한 외교적 수단이 되기도 했음을 확인하였다. 즉, 선물이 조선 측 관계자와의 비공식 의사소통 경로 개척에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3장에서 다룬 향응 또한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1726년 기도 로쿠에몬의 사례는

10) 「裁判記錄 六」, 작성자: 幾度六右衛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1726년 10월 5일 조.

이를 잘 보여준다. 기도는 신금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공식 교섭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상감사의 측근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경상감사를 설득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재판차왜가 능동적인 협상가로서 왜관이라는 제한된 외교 공간과 공식 의사소통 경로 속에서, 실로 다양한 교섭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선물 증답과 향응의 외교적 수단이라는 측면을 조명함으로써, 이를 주로 물적·문화적 교류의 맥락에서만 논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가 조선 측(왜학역관)의 사적 인맥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사적 의사소통 경로를 확장하여, 일본 측(재판차왜)에서 구사한 사적 의사소통 경로를 밝혀냈다. 셋째, 재판차왜가 공식 외교 경로가 제한된 상황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조일 관계에서 재판차왜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재판차왜가 선물 증답과 향응을 활용하여 조선 측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개척하려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어떠한 외교적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즉, 재판차왜가 수행한 이러한 비공식적 교섭 방식이 실제로 조선 측 관리들의 대응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일 외교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임란기 조선의 도요토미씨 인식과 그 활용¹⁾

임 현 채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I. 들어가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한반도를 무대로 하여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다. 최근 들어서는 동아시아 국제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임진전쟁(壬辰戰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발맞추어 관련 연구에서는 개별 전투가 중심이었던 연구 풍토 및 일국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관점을 강조한 연구에서는 일본이 명으로 대표되는 중화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조선과 명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봉공질서에 기초한 동아시아 패권 구도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당대에 어떠한 수단을 통해 일본이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이전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는지, 조선이나 명이 그러한 지점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시 일본에서는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 1536~1598]가 히데요시는 豊臣氏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 확충에 고심을 기울였다. 히데요시는 하시바 묘지를 쓰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구 오다[織田] 가문이나 센고쿠 다이묘[戰国大名]들, 심지어 하시바 묘지를 받지 않은 武家 대다수에게도 豊臣氏를 주었다. 따라서 조선에 출정한 다이묘급 무사 대다수는 豊臣氏를 쓸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실제로 朝鮮王朝實錄에서 豊臣氏의 활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임진왜란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임진왜란 관련 연구의 핵심 인물인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한일을 막론하고 메이지[明治, 1868~1912]기를 거치면서

1) 본 자료는 저자가 발표한 임현채, 「壬辰倭亂期 조선과 일본의 豊臣氏 활용과 그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71, 2021을 요약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한 것임.

묘지와 성씨를 단일화한 ‘근대 일본인’의 표기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豊臣氏 문제를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만 보는 시야에서 벗어나, 일본에게는 새로운 국제 무대인 조선(과 명)에서 豊臣氏를 어떻게 활용하고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朝鮮王朝實錄』에 드러나는 豊臣氏

조선 침공군 제1진 대장을 맡은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 역시 豊臣氏를 하사받은 인물이었다. 유키나가는 조선이나 명을 상대로 많은 글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유키나가는 豊臣氏를 적극 활용하였다.

일본국에서 차출되어 온 先鋒 토요토미 유키나가[豊臣行長] 및 요시토시[義智]는 漢陰大人 閣下 李德馨에게 아뢰다. (중략) 팔도에 나누어 보낸 우리 제장의 성명을 대략 기록하여 태람(台覽)에 대비하겠다. 토요토미 테루모토[豊臣輝遠](輝元의 오기: 필자)는 경상도로 보냈고, 타카카게[隆景]는 전라도로 보냈고, 이에마사[家政]는 충청도로 보냈고, 카츠타카[勝隆] 및 모토치카[元親]는 경기도로 보냈으며, 도성을 진호하는 자는 토요토미 히데이에[豊臣家秀](秀家の 오기: 필자)이다. 토요토미 요시나리[豊臣吉成]는 강원도로 보냈고 토요토미 이에마사는 【위에 보인다. 혹 옮겨 쓸 적에 잘못 쓴 것인가?】 황해도로 보냈고 키요마사[清正]는 영안도로 보냈다. (중략) 일본 덴쇼(天正) 임진 6월 11일. 【토요토미 유키나가·토요토미 요시토시.】²⁾

이 글은 1592년 7월 尹根壽(1537~1616)가 명에 보고하기 위해 인용한 유키나가의 편지 내용으로, 유키나가와 그의 사위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가 조선 왕실의 항복을 종용하는 글이다. 이 편지에서 유키나가는 스스로를 토요토미 유키나가로, 공동으로 편지를 보낸 요시토시도 마찬가지로 토요토미 요시토시라 칭하였다. 그 외에 수많은 일본군 장수들에게 유키나가는 토요토미씨를 붙이는 식으로 서한에서 밝혔다. 유키나가가 자신의 묘지[名字]인 코니시[小西]를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³⁾ 대부분의 경우 이름(名)이나 우지[氏]만을 사용하였다.

2) 『宣祖實錄』卷28, 25年(1592) 7月 1日, “日本國差來先鋒豊臣行長及義智, 謹白漢陰大人閣下李德馨.(중략) 吾諸將分遣八道者, 粗錄其姓名, 以備台覽. 豊臣輝完遣慶尙道, 隆景遣全羅道, 家政遣忠清道. 勝隆及元親遣京畿道, 鎮護城中者, 豊臣家秀也. 豊臣吉成遣江原道, 豊臣家政【見上或傳書之際, 錯書耶?】遣黃海道, 清正遣永安道, (중략) 日本, 天正壬辰六月十一日, 【豊臣行長, 豊臣義智】.”

3) 『宣祖實錄』卷30, 25年(1592) 9月 8日 참조.

한편 조선에 널리 알려진 제2진 대장이었던 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도 독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서한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키요마사는 히데요시로부터 豊臣氏를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 등은 키요마사가 스스로를 토요토미 아손[豊臣朝臣]을 칭하며 베이징의 대왕에게 칙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하였는데,⁴⁾ 이는 키요마사가 ‘豊臣朝臣’을 칭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키요마사는 그 이전에 오다계나 하시바계가 사용하던 타이라[平]를 썼으며, 조선 측에도 타이라노 키요마사[平清正]라는 이름으로 서한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키요마사가 특수한 사례에 가까우며, 당시 豊臣氏를 하사받았던 다이묘들은 외교문서상으로는 대개 토요토미씨로 불렸다.

III. 조선의 豊臣氏 배제와 平氏 활용

위 사례는 모두 일본 내부 기록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 조선은 충분히 일본에서 豊臣氏라는 정보가 갖는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明國은 곧 豊臣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히데요시의 冊名을 ‘豊臣平秀吉’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 측 인물들의 기록에서는 豊臣氏에 대한 고찰이 보이지 않는다.

1595년, 접반사 李時發(1569~1626)이 일본에 다녀온 浙江省 출신 홍 통사와 문답한 내용에서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홍 통사는 일본에 豊臣・朝臣 등의 職號가 있으며, 豊臣는 天皇에게 품의할 수 있지만 朝臣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⁵⁾ 이 내용은 豊臣가 ‘우지[氏]’이고 朝臣이 ‘카바네[姓]’이며, 히데요시가 豊臣朝臣을 함께 썼음을 고려하면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명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豊臣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측 답변자인 이시발은 인용문에서는 위 내용을 그대로 따랐지만, 자신의 견해를 다룬 부분에서는 일본 측 지배자들을 모조리 平氏로 불렀다.

이를 두고 단순히 조선 측이 정보를 잘못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 전기에 조선은 수많은 일본의 제세력을 통제하는 일종의 ‘소중화’적인 위치에 서 있었는데, 일본 제세력이 조선에 보내는 서한에서는 일본의 4대 우지인 겐페이토키츠[源平藤橘], 그 중에서도 源氏와 平氏が 많이 보였다. 그럼에도 조선은 통교 초기에 소[宗]를 쓰던 쓰시마를 두고 宗氏를 쓰는 족속이라고 파악했

4) 北島万次, 『加藤清正: 朝鮮侵略の真像』, 東京: 吉川弘文館, 2009, 133頁.

5) 『宣祖實錄』卷60, 28年(1595) 2月 10日.

으며, 이들이 완전히 平氏로 우지를 바꾼 후에도 조선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오우치도노[大内殿]들은 스스로가 백제계의 후예임을 강조하면서 그 증거로 타타라[多々良] 씨를 쓰고 있음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과는 별개로 조선은 그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적었다.⁶⁾ 이로 미루어 보면 조선은 상대방의 권위와 그 원천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초기에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며 그를 ‘관례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에 직접 건너갔으며 조선의 대일관계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숙주조차도, 일본 무사(귀족)계층의 독특한 관습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칸파쿠라는 음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타이코[太閤]라는 관명에 대해 아는 이들이 극히 적은 등 초기에 입수한 정보에 의지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히데요시의 케이스다. 히데요시는 조선에 직접 자신이 平氏임을 밝힌 적이 없으며, 통신사에게 주는 회답서에서도 자신을 日本國關白秀吉이라고 지칭하였다.⁷⁾ 쓰시마 측도 통신사를 요청할 때 히데요시를 일컬어 ‘新王이 즉위’하였음을 강조하였는데,⁸⁾ 여기에서는 히데요시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이 ‘관례적으로’ 히데요시를 平秀吉로 칭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592년 4월 기사 이후로 히데요시를 반드시 平秀吉로 지칭하였다.⁹⁾ 일례로 『西厓集』에는 1591년(조선 선조 24) 조선이 명에 보낸 주문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조선은 平氏의 이미지가 일종의 괴뢰정권인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 조선은 당시 쓰시마의 도주였던 요시토시를 ‘平秀吉이 보낸 平義智’로 칭하면서, 본래 도주였던 ‘宗義調’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자라고 보았다. 이 주문에는 浙江巡撫御史의 보고서도 같이 실려 있는데, 정작 이 보고서에서도 히데요시는 그저 ‘日本倭奴關白’으로만 불렸다.¹⁰⁾ 이 이전까지 히데요시가 平氏라고 불릴 외교적 선례는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平秀吉’은 조선의 창조물인 셈이다.

전쟁 중에 조선이 平氏를 사용하는 맥락은 철저히 히데요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조

6) 이와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현채, 「조선 전기 조선 조정의 일본 지배층 인식: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人名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82, 2023을 참조.

7) 「江雲隨筆」 天正 18年(1590) 11月. 히데요시가 류큐에 보낸 서한에서도 동일하다(『統善隣國寶記』 天正 18年(1590) 2月 28日). 시기상으로도 직책상으로도 히데요시가 칸파쿠직을 맡으면서 平秀吉로 불릴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 시기 이미 히데요시는 후지와라[藤原]를 받았으며, 그를 계기로 칸파쿠에 취임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豊臣氏를 받았기 때문이다.

8) 『宣祖實錄』卷21, 20年(1587) 9月 7日; 10月 20日, 『宣祖實錄』卷23, 22年(1589) 8月 4日; 12月 3日.

9) 다만 조선왕실에서도 平秀吉이 히데요시의 자칭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선조는 히데요시의 항표를 보고 ‘문법과 체제가 아국(조선) 것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 항표의 모두에 히데요시는 日本前關伯臣平秀吉을 자칭하였던 것이다(『宣祖實錄』卷48, 27年(1594) 2월 11일).

10) 柳成龍, 『西厓集』卷3 奏文, 「陳倭情奏文」.

선은 일본 ‘국왕’의 정통 권력은 곧 源氏이며, 히데요시는 그 源氏를 멸문시킨 왕실의 원수와의 같은 존재였다. 경상도 어사 徐滄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일본에 源氏가 존재한다면 조선은 마땅히 그들을 지원해 히데요시의 권위를 뒤흔들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키요마사에게 군사지원까지 해줘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세웠다.¹¹⁾ 조선의 이러한 접근법은 의도적인 거짓 정보를 ‘지극히 조선다운 방법으로’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판을 조선이 주도하려는 정보전의 일환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IV. 마무리를 대신하여: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이 글은 앞서 출처를 밝혔지만, 2021년에 이미 본 학회의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다. 따라서 같은 결론을 반복하는 건 현재로서는 필자의 향후 연구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궁금증을 위 과제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을 담는다.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국 필자의 뇌리를 자극하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분기점이 “임진왜란”이어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석사학위논문으로 조선-청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조선이 정축하성 이래 대청외교에서 경직된 자세를 전쟁을 겪은 세대가 세상을 떠난 18세기 말까지도 바꿀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다.¹²⁾ 그만큼 전쟁이 가져다주는 ‘폭력’은 크나큰 상처를 남긴다. 심지어 스스로를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다면, 제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조그마한 위험신호에도 경직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청이 삼번의 난을 거치면서 중원을 제패하고, 조선이라는 제1번국에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더라도 이는 ‘청의 사정’일 뿐이다. 조선이 그 의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실제로 그게 가능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어떠했는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임진왜란의 물질적 피해에 집중하였지만, 외교적으로는 7년이 지나지 않아 에도 막부와 화친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한일관계의 평화기를 부각시키는 듯하다. 하지만 전쟁의 규모에 비해, 조선의 대일관에 대한 지성사적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점이 아쉽다. 아무리 조선이 베이징을 제1외교국으로 보았다지

11) 『宣祖實錄』卷52, 27年(1594) 6月 19日.

12) 해당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이자 핵심은 임현채, 「英祖代 朝鮮人 범월사건 처리방침을 통해 본 朝鮮의 對淸 태도」, 『명청사연구』48, 2017에 실려 있다.

만, 임진왜란의 충격은 병자호란과 정축하성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부작용까지 있다. 이에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한일관계의 ‘평화’는 조선 전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야스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천명하였고 조선도 그 점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조선과 에도 막부의 관계는 전쟁 이전과 동일하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는 비교적 가치가 없던 정보일지라도, 전후 한일관계에서는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지 않으면, 임진왜란은 히데요시의 광기가 만들어낸 “한때의 해프닝”으로 취급받을 우려조차 든다.

아직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거친 표현으로밖에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에 제현의 가르침을 통해 용기와 발상을 얻어갈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기해사행과 왜관

: 귀로에서의 일을 중심으로¹⁾

이 재 훈 |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장시간 선학들이 이루어온 조선통신사(이하, 통신사) 관련 연구는 대개 한양-조선내 경로-부산-해로-쓰시마번(對馬藩)-해로-육로-에도(江戸)를 배경으로 하여 일본내 지역별 접대, 사행원 선발 시스템, 일본 인식, 통신사 구성, 오고가는 서계를 비롯한 음물(音物), 각 역직의 역할, 외교적 교섭, 예술적/학술적 교류 등 그 연구사를 정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연구 성과들을 남겼다. 또한 조선 후기 조일 교류 관련 연구에 있어 또 다른 큰 축을 이루는 왜관 관련 연구 역시 적지 않은 성과가 쌓였는데, 이는 ①지방사적인 측면에서 왜관 통제를 비롯한 제도, 문화교류, 왜관을 포함한 지역 변천(발전), 동래부 지역 주민과의 관계(범죄, 상업, 종교)에 주목한 연구들, ②한일 관계의 측면에서 근세를 비롯하여 구한말 외교적·군사적 충돌의 공간, 무역과 표류민 송환을 위한 창구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 ③왜관을 독립적으로 놓고 역관(통사), 인물, 행사, 시설 공사, 수행 역할, 생활상에 주목한 연구들, ④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왜관과 일본 정부와의 행정적 처리에 주목한 연구들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²⁾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신사 관련 연구든 왜관 관련 연구든 대개 통신사행이 이루어지기 전 강정(講定)과 사행 그 자체에만 그 관심이 치우쳐 있었고, 사행이 일본으로 떠난 이후의 왜관과, 사행이 돌

1) 본고는 줄고, 「통신사 파견과 왜관의 역할 -기해사행 시기 관수매일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사연구』85, 한일관계사학회, 2024, pp.267-296에 투고했던 것을 바탕으로 일부를 발췌, 요약한 글이다.

2) 왜관 관련 연구의 정리는 '이훈 「왜관 연구의 회고와 전망-1990년대 이후 한국측 연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54, 한일관계사학회, 2016, pp.3-76'에 자세하다.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는 생략한다. (단, 위 분류는 필자에 의함)

아온 이후의 모습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각자 별개의 연구로 취급되는 경향이 짙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기해사행(己亥使行, 1719)의 귀로 시기인 1720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관수(館守) 아사이 요자에몽(淺井与左衛門)의 매일기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통신사행의 뒤처리가 왜관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살핀 글이다.³⁾

2. 사스나(佐須奈) 미경유 사건

본래 통신사행은 귀로에 반드시 사스나(佐須奈)를 들르는 것이 관례였는데, 기해사행에 들어 사스나에 경유치 않고 바로 부산포로 직행한 사건이 발생한다.

a. 날이 밝자 부교(奉行)가 말을 전하기를 ‘오늘은 바람이 순조로울 것 같으니 배에 오르시라’고 청하였다. 여섯 척의 배가 마침내 일제히 바다 어구로 나와 돛을 걸고 매우 빠르게 나아갔다. 도요우라(豊浦)를 지나 와니우라(鰐浦) 석뢰(石瀨)에 내려오니, 동풍이 매우 거세지면서 파도는 고요해졌다. 종사가 말을 전하기를 ‘부산으로 향하자고 하였으나 이미 부교들과 상의도 않았으니, 일이 자칫 경솔하게 될까 하여 마침내 배를 멈추고서 통사를 보내어 부교와 상의한즉 바람의 형세는 비록 순조로우나 사스나 참관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갈지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다. 그런데 바람이 결국 순해져 참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종사의 배 또한 이미 먼저 떠나버린 마당에, 우리만 갈지 아니면 남아 있을지를 달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사와 말을 주고받은 끝에 마침내 부산으로 배를 돌렸으니, 이때는 이미 사(巳)시 초였다.⁴⁾

b. 사스나로 가던 종사의 명령으로 조선땅을 향해 달리게 된다. 뒤이어 정사선과 부사선까지 따르게 되자, 통사들이 사스나의 막부의 관소이고 역대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며 설득하는 와중에 정사선의 통사가 참판사 선으로 건너가 무언가를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다시 국서를 뒤에서 내버려 두고 이렇게 도해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설득하였다. 그러자 종사관의 군관이 국서를 뒤에 두고 가는 것은 안 되겠다며 정사선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기에, 조금 더 설득했더니 종사가 납득하여 사스나 쪽으로 배를 돌리는 순간에 정사선에서 포를 울리며 나아가기 시작해 종사선도 다시 조선땅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⁵⁾

3)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자료(WA1-6-34) 毎日記六(享保5.1~2.), 毎日記七(享保5.3~4.), 毎日記八(享保5.5~6.), 毎日記九(享保5.7~8.)을 이용(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기에 이하 인용문에서는 날짜만 명기)

4) 홍치중, 허경진 역 『해사일록』 보고서 pp.232-233.

5) (0108) 종사선 통사와 승조원(朝鮮最兵衛, 村田正八)의 구상서로 지면상의 제약으로 필자가 요약하였음.

인용문 a.는 귀국 당일 (01.06.) 정사 홍치중의 기술로서, 종사관이 먼저 제안을 하자 정사가 머뭇거렸는데 그 사이에 종사관이 이미 떠나버렸기에 정사가 어쩔 수 없이 뒤따랐다고 되어 있다. 인용문 b.는 익일(01.07.) 사스나에서 건너온 신사호송참판사(信使護送參判使)가 종사선에 타고 있던 쓰시마번의 통사에게 받은 진술서에 해당한다. 종사선이 배를 멈춘 곳은 미쓰시마(三ツ島) 앞 바다로 쓰시마의 최북단에 해당한다. 쓰시마 동쪽의 니시도마리(西泊浦)에서 서쪽의 사스나로 가려면 실상 최북단인 미쓰시마에서 다시 남서쪽을 향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기왕 미쓰시마까지 간 것이라면 사스나로 가지 말고 부산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다만 미쓰시마 앞 바다에서 사스나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동일하게 북서쪽으로 가는 모양새인지라 종사관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선, 정사는 종사가 이미 부산을 향해 떠났다고 생각하여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도착한 이튿날, 관수는 삼사선과 복선(卜船)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연락을 비선을 띄워 쓰시마에 보고하고, 양역(訓導, 別差)을 불러들여 “그런데 이번 삼사 기선 항해 중 니시도마리라고 하는 인근 항구에서 바로 이곳(부산포)로 직항하셨음을 알고 또한 매우 놀랐습니다. 막부가 정해놓은 관소를 벗어나 인근 항구(脇浦)에서 마음대로 도해하신 것은 고금에 있어 그런 예는 들질 못하였고 (중략) 특히 호송사보다 먼저 당도하셨다고 하시면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고 말하곤, ‘통신사는 외국의 중요한 사자이기에 통신사가 지나는 곳은 모두 일시까지 하나하나 보고되는데, 이를 들으면 도주가 매우 난처해 할 것이다.’고 말한 후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말할 것을 요구한다.⁶⁾

그런데 문제는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삼사가 9일에 부산포를 떠나 동래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10일 아침에 한양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었다. 당상역관(堂上訳官) 3인도 12일에 떠날 예정이기에, 11일날 왜관에 들어와 호빙사(護聘使) 도선주(都船主)와 관수를 차례차례 만나며 금번 사태에 대해 잘 해결해 달라고 청하였다.⁷⁾ 사정이 이렇게 되니 자연히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관수와 동래부사로 바뀌게 되었다. 실제로 당상역관이 자리를 비운 13일부터는 동래부사가 훈도를 보내 여러모로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6) 此度御帰帆之義灘廻り之内西泊浦と申脇浦ち直ニ爰へ御欠乗被成候段致承知、切々驚入奉存候。公儀ニ預リ候間所を御外し被成、脇浦ち御心任ニ御渡海被成候段、古今其例終ニ及承不申、(중략) 殊ニ護送使ち茂達而御留申上たる由ニ御座候得共、御承引不被成候』由、信使之義ハ外国之重キ御使者ニ候得者、東武ニ茂別而被入御念御事御座候故、三使御着之所々及案内、勿論対府并閑所之御出入、釜山浦御着船之月日等一々及案内義ニ御座候処、様之被成方、太守被承候ハ、別而難義可被存候。

7) (0111) 我々義明日致発足候付、為御暇乞致入館候、然者、此度三使欠乗リ之次第、今日三判使・都船主迄罷出、段々断申達し置候趣申間、何分ニ茂無事故相済候様仕くれ候得之由申間候付、(후략)

3. 왜관에서의 사행 뒤처리

사실 사행이 한창일 때부터 숙종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정사는 부산을 떠나기 전에, 동래부사에게 “교묘하게 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찍이 국왕의 병환이 중하다고 들어, 한시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은 마음에 일본에 보고치 않고 직행하여 도해하였다.”⁸⁾고 말하며 후회해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아무쪼록 잘 말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임금이 병환이 있어 일찍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상에야 동래부사 입장에서는 아마 더 이상 이를 문제 삼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관수는 이에 납득치 않고 쓰시마에서 뭔가 이야기가 올 것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3월 9일, 참판사가 ‘도주가 동래부사에게 보내는 서간’을 11일 봉진연 자리에서 구상서로 밝히겠다고 하곤, 도주가 직접 보내는 직서(直書)이기에 우라오이가시라(裏老頭)에 창을 들린 상하 6명을 동행시키고 서간에는 와카도(若童) 1명에 인부(人夫) 한 명을 붙여서 대청에 갖고 오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번에 한양에 보고하시고 서면의 내용을 전달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이후로 없도록 명하시겠다.’고, 한양에서 답하시는 답신을 내려 주십시오.”⁹⁾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쓰시마번주의 위신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다.¹⁰⁾

물론 동래부사는 ‘뜻하지 않은 항해를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며, 통신사 일행의 귀국도 무사히 잘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뭔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쓰시마에 잘 이야기해 달라.’고 말을 한다.¹¹⁾ 이 말을 들은 관수는 ‘도주가 직접 막부에 보고하여 예조에 사자를 보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자 동래 부사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알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동래부사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관수는 수 차례에 걸쳐 계문을 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애초에 동래부사 입장에서 계문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삼사가 동래에 있다면 모를까 이미 조정으로 돌아간 뒤에다가 삼사가 1월 24일에 벌써 세자를 만나 노고를 치하받고(慰諭), 이튿날 숙종

8) (0113) 三使被申候ハ、何ぞ趣意を巧ミ仕たる義ニ而無之、兼而国王御病氣被差重候段承之候付、片時も早ク致歸国度存念ニ而、日本向之儀ハ不案内ニ有之、直ニ乗流、致渡海候。

9) (0311) 此段、都表へ被遂御註進、書面之趣御聞通被成、様之仕形、以来無之様ニ可被仰付与之、都表ら御答之趣御返書被遊可被下。

10) (0311) 公儀ら被設置候間所江御立寄不被成候段、東武江相響キ候者、太守首尾之程も無心元、彼是別而氣毒ニ被存候。

11) (0311) 今度、三使久乘之義ニ付、太守ら私方迄御書簡を以被仰下候由御口上之趣委細致承知候。早速御書面可致拝見義ニ候得共、此度之儀ハ任順ニ不図久乗り被仕、於拙子も別而氣毒千万ニ存候。向後、様之仕形例ニ可罷成義ニ無之、殊ニ信使一行之折渡りも万端首尾能敏相濟候処、今更何角与仕候段至而難儀ニ存候故、於爰元、護送正官人江委細之訳申入候間、何分ニも宜致相談、御国へ可然様ニ申上くれ候得与」之返答

이 정사와 부사는 가자(加資)하였고 종사관은 승진하여 서용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이었다.¹²⁾ 더군다나 동래부사의 말에 따르면, 홍치중은 귀경한 후에 예조참판이 되었기에¹³⁾ 계문을 해봤자 정작 정사 본인이 받게 되니 곤란하다며 계속 거절한다.¹⁴⁾ 사실 최초에 정사의 서간은 훗날의 전례가 될 것을 대비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둘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을 텐데, 도주가 직접 서간을 보내도 동래부사가 계문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관수의 교섭 실패로 돌아갈 터이니, 관수의 입장만 난처해 질 판이었다.¹⁵⁾

이후에도 수차례 관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래부사가 계속하여 거부만 하니 다시 또 이 건은 양역이 가운데에서 동래부사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¹⁶⁾

그런데 6월 13일, 숙종이 지난 8일 병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이 새벽녘에 양역을 통해 전해진다. 이에 따라 왜관 내에서는 노래, 춤, 산놀이, 수렵이 금지되었고, 주먹다짐, 말싸움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물론 연석과 조시(朝市), 쌀의 구입(買米)도 당분간 중지되었다.

쓰시마번에서도 사실 예조에 정사가 올라간 것을 알게 되거나선 더이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숙종의 죽음을 핑계삼아 이 문제를 종결지를 결심을 내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래부사가 계속해서 거절한 경위를 모두 적어서 보내면, 즉 ‘동래부의 기록에 명확히 남긴다면 관수 자신이 잘 주선을 하겠노라’ 관수가 말하게끔 지시를 내린다.¹⁷⁾

동래부사도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 이를 받아들인데, 굳이 이를 조정에는 알리지 않고 단

12) 숙종실록 65권(숙종 46년 1월 24일 신묘 2번째 기사) 信正使洪致中、副使黃璫、從事官李明彦等、還自日本、世子召見慰諭。(1월 25일 임진 1번째 기사) 上命洪致中、黃璫加資、李明彦陸銑。用奉使日本勞也。(같은 해 4월 27일 계해 2번째 기사에 홍치중은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

13) 비변사등록 숙종 46년 2월 11일)「堂上과 有司堂上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司啓曰、近來備局之坐、因堂上多故、出令還止者、屢矣、事體殊涉未安、漢城判尹權·大司諫李宜顯·大司憲沈宅賢·禮曹參判洪致中、堂上竝爲差下、有司堂上有關之代、堂上中知敦寧閔鎮遠·吏曹判書李觀命、使之兼察、何如、答曰、允。

14) (0403) 殊ニ御間及茂有之候哉、正使事帰京以後、礼曹之参判ニ被任候故、及啓聞候得ハ、此一件則正使茂被相聞候付、何程ニ致了簡見候而も、私々致啓聞候義ハ難仕事ニ御座候段、貴様ニも得与御思案被成被下候。

15) (0416) 又々申達候ハ、「被仰聞候趣、一通り御尤成様ニ相聞候得共、此度、太守被差越候書簡之儀ハ兩國御誠信ニ関リ、別而重キ儀ニ候処、正使御一人ハ被对候御会釈を以御請取難被成与被仰聞候とて、直ニ对州ハ申遣し候義ハ、私儀茂別而難義ニ存候。

16) (0611) 此方申達候度毎ニ府使ハ可被致告達与者存候得共、実府使右之通いつ不相交御返答ニ候ハ、各達爲念候間、責而伝令を以委細被仰渡被下候得かし。其御紙面、館守江致持参、又々御断之趣逐一申達見可申など可被申事ニ候得共、左様之訳茂無之、何とやら不審存候。

17) (0626) 今度不存寄、貴国御凶变有之、新王御即位茂有之候。此砌ハ格別之事ニ候得ハ、欠乗等之義相争可申時節とも不存候故、兼々東萊被仰聞候御断之趣を皆達書附可被差遣候。左候ハ、早速对州江遣し、何とそ右欠乗之義、是迄ニ而相済候様可致候。

독으로 처리한 듯 해당 문서에 대한 초안을 갖고 와 이에 대한 첨삭을 부탁하였고,¹⁸⁾ 이 문서는 이후 수정 작업을 걸쳐 7월 23일에 쓰시마로 전달된다.¹⁹⁾

4. 나가며

본 발표는 기존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사행과 이전 강정에 치중하는 것을 벗어나,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사행 이후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 것이다. 금번에는 기해사행의 귀로 중에 일어난 사스나 미경유 사건을 다루며, 통신사행 중의 문제가 왜관과 동래부사와의 문제로 고스란히 옮겨가는 사례를 확인해 보았다. 앞으로 전 사행의 매일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핀다면 이런 왜관과 동래부사의 교섭이 다음 사행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이 가능케 될 것이고 통신사행의 전모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18) (0702) 兩訳、通詞屋迄罷出、昨日申渡候真文案致持参、何分ニも致筆削呉候様ニ与、小田四郎兵衛を以達而申聞候ニ付、多田新蔵相招キ、存知寄之所為致添削、四郎兵衛ニ相渡ス。

19) 관련기사는 『分類紀事大綱十四』「享保五信使西泊より欠乗被致候付、東萊江御書翰を以被相届候事」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제주지역 역관(譯官) 설치 및 운영 양상

김 나 영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조선시대 외교정책인 사대교린(事大交隣)은 중국(명·청)과의 사대 외교와 일본·여진·유구 등 주변국과의 교린 외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동아시아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때 이러한 외교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뒷받침한 이들이 바로 ‘역관(譯官)’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국인의 표류 및 이양선 출몰 등 다양한 외교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선 정부는 전국의 주요 거점 해안을 중심으로 역학훈도(譯學訓導)와 별차(別差), 역학겸군관(譯學兼軍官)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 후기 해방(海防)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역원의 외임(外任) 정책의 일환이었다.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한 제주도는 조선의 여타 지역에 비해 일본·중국·유구국 등 다양한 국적의 이국인(異國人)들이 표도(漂到)되어 오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빈번하였다. 이때 제주 표도 이국인들에 대해서는 당시 동아시아 해역에 있어 운용되던 해난구조 시스템 및 유사 표도 사례를 근간으로 구호 및 이송·송환 절차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언어 구사가 가능한 역관(역학겸군관)을 제주도로 파견하여 표도 이국인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을 비롯한 표도 경위 등에 관한 문정(問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좀처럼 해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는 이국 표도인들에 대한 문정과 그들이 타고 온 선박 조사를 통해 외부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이색적인 물품 등을 입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역동적으로 변화하던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원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역관’에 대한 기존의 거시적 담론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제주지역 파견 역관의 역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역관 설치’가 곧, ‘제주도에 표도한 이국인의 사건 처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작동되었음을 구체화하였다.



2. 제주지역 역관(譯官) 설치 배경과 변천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외교정책 하에서 실질적으로 외교 실무의 한 축을 담당한 관원은 바로 ‘역관(譯官)’이었다. 이들은 통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사신 및 수행원들을 응대·영접하는 일을 주선하였다. 또한 사행(使行)과 수행(隨行)을 통해 외국인과의 실제 접촉은 물론, 첩보활동을 통해 주변 국가의 주요 정보를 입수해 유사시 대비하였으며, 군관으로서 적국의 동태를 살펴 본국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교린 문서 작성 및 모든 외교 실무와 함께 표류 이국인의 문정(問情)과 송환(送還), 공사 무역의 관리 책임까지 도맡았다. 그 외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비롯해 선진 외국 문물을 수용하여 자국에 전파하고, 자국의 문화를 수출하기도 하는 문화전달자의 역할도 했다.

하지만 사역원의 기본 관제만으로는 모든 역관을 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관제에 충당할 수 없는 역관 정원은 원적(原籍) 외에 각종 체아직(遞兒職)과 위직(衛職), 외임(外任) 등을 통해 역관 충원 및 예비 역관들을 마련(보유)해 두고자 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이국인의 표류 및 이양선 출몰 등 다양한 외교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은 전국 해안에 거점을 설정하고, 외임으로 역학훈도(譯學訓導)와 별차(別差)를 배치하였으며, 주요 수군진(水軍鎭)을 중심으로 역학겸군관(譯學兼軍官)을 두었다. 이는 조선 후기 해방(海防) 정책과 연계된 사역원의 외임(外任) 정책이었다.

전근대 시기 당시 해금(海禁)과 공도(空島) 정책을 취하는 등 쇄국(鎖國)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조선과 달리, 동아시아 각국은 국제적인 무역항을 거점으로 한 광역의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때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의 중앙에 자리한 제주도는 이들의 이정표(里程標)이자, 기항지로서 급수처(汲水處)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동시에 항해의 위험 요소가 산재한 주요 표착 다발 지역으로서, 해역을 오가는 많은 여러 다국적 이국인들이 빈번하게 제주도에 표도되어 왔다. 이들 표도 이국인들을 당시 동아시아 해역에 운용되고 있던 해난구조 시스템과 유사 표도 사례를 바탕으로 구호 및 이송·송환 처리해야 했다. 이렇듯 조선시대 예고 없이 빈번하게 제주에 표도해 오는 이국인들의 선박 조사 및 문정 업무를 수행한 주체[관리]가 바로 ‘역관’이었다.

이때 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이후 청학)의 사학(四學) 역관 가운데 제주도에 가장 먼저 설치된 역관은 ‘왜학역관’이었다. 이는 왜구 및 표류 왜인 발생에 대비해 1478년(성종 9) 7월 대사간 이약동(李約東)의 진언¹⁾에 따른 것이다. 이후 최부의 추쇄경차관 재임 시기인

1) 『성종실록』 성종 9년(1478) 7월 30일조.

1487년(성종 18)~1488년(성종 19)에는 왜학훈도 김계옥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전속록』(1492)에 기재된 제주의 왜통사(倭通事) 차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약동은 약 2년 10개월간[1470년(성종 1) 10월~1473년(성종 4) 8월] 제주목사로 재임한 바 있었다. 당시 제주도는 왜구(倭寇)들이 한반도 본토와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 그들이 뺨감과 물, 식량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지이자,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 말부터 왜구 침입이 빈번했으며, 진상선 약탈 및 노략질을 일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조선 정부는 이러한 제주의 왜구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및 해안 방어시설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주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대사간 이약동은, 제주목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군관(軍官)을 겸한 왜통사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 왜학역관에 이어 설치된 것은 한학역관이다. 『통문관지』(1720)에는 1672년(현종 13) 제주목사 윤계(尹堦) 재임 당시 표류한 중국인의 사정을 심문하기 위해 기존의 왜학역관 1명 외에 한학역관 1명을 추가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그 설치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제주목사 윤시동의 『증보탐라지』(1766)를 비롯한 여러 읍지 자료에서도 한학역관이 1672년 제주목사 윤계(尹堦) 때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앞선 『통문관지』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이때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845) 제주, 구례조에는 보다 구체적인 한학역관의 설치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즉, 제주에 한학역관이 부재하던 시기, 7세에 중국에 표류되었다가 생환되어 온 이덕산(李德山)이 중국말을 구사할 수 있었기에 그의 통역을 통해 제주에 표도한 중국인들을 심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덕산 사후에 이를 전수할 도리가 없어지게 되자, 제주목사 윤계가 데리고 온 역학이 제주사람 중 총명한 자를 선발하여 가르쳤다고 한다.²⁾ 해당 기록을 통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학역관이 새로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제주도에 유구역관의 존재 양상도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시대 조·유 간의 통교는 중국·일본에 비해 매우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유구어 관련 역관(통사) 또한 존재하지 않아 여타 표도 이국인들과 달리 언어적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시대 유구인들이 제주도로 표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그때마다 제주도에 파견되어 있던 역관 모두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때 1794년(정조 18) 유구인 11명(3명 생존, 8명 사망)이 공무차(문서 운송) 요나국도(與那國島)를 향해 가던 중 제주 대정현 가파도에 표도한 사례가 발생한다. 당시 제주통사 이익청(李益靑)이 일찍이 제주도에 표류해 왔던 유구인에게서 그 나라 말을 배워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들을 문정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정조는 이익청에

2) 이원조, 『탐라지초본』, 제주, 구례(舊例)조.

게 상을 내리는 한편,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따로 요과(料窠, 급료를 받는 하급의 벼슬자리)를 마련하도록 전교하였다.³⁾ 하지만 유구역관(통사)은 제도적으로 공식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845) 제주, 구례조 말미에는 1687년(숙종 13) 안남[베트남]으로 표류해 간 제주인 고상영(高尚永)이 5년이 지나 귀국한 후 그 나라 말을 전했고, 그 이후에 안남통사(安南通事)가 생겼다고 서술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료 외의 다른 관·사찬 사료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에 따라 제주의 안남역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고증이 필요할 것을 보인다.

요컨대 조선시대 당시 국제 정세 및 여타 지역과 달리 빈번하게 출몰하는 왜구와 표도 이국인들로 인해 제주도에는 왜학역관 및 한학역관 등이 설치·운영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통사 이익청처럼 제주 표도 유구인들을 통해 유구어를 습득하였거나 혹은, 안남[베트남]에 표류하였다가 현지 언어를 익힌 후 송환된 제주 사람 고상영을 통역 및 외국어 교육에 활용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방에 파견되었던 역학(역관) 등은 1895년(고종 32) 3월 18일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관제가 개혁되면서 혁파되어졌음을 『승정원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3. 제주지역 역관청(譯官廳) 설치와 운영

제주 관·사찬 읍지에 기록된 역관청의 명칭을 비롯한 위치 및 규모 등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역관청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①제주목사 이익태의 『지영록』(16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헌에 따르면, 1694년(숙종 20) 7월에 부임한 이익태 목사가 같은 해 9월, 역관청인 삼학청(三學廳)의 청사 6칸을 새롭게 건립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후 ②제주목사 이형상(1702년 3월 부임)이 쓴 『남환박물』(1704)에서도 동일한 관청명인 삼학청이 언급되는데, 이 시기의 규모는 6칸이 아닌, 12칸으로 기록되는 등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좌위랑(左衛廊) 48칸 내에는 역생(譯生)이 거처하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기재하고 있다. 이후 ③제주목사 윤시동(1765년 8월 부임)의 『증보탐라지』(1766)에는 이전의 삼학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던 역관청으로, 제주목 관아 내 군사 훈련과 과거 시험 등 공식 행사 등이 이뤄졌던 주요 건물인 관덕정(觀德亭) 남쪽 찬주헌(贊籌軒, 판관

3)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 9월 11일조;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0월 21일조.

집무처) 부근에 왜학방이, 북쪽에는 역학방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앞선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역관청의 구체적인 위치를 처음으로 명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편찬된 ④『제주읍지』(1785~1793)에는 역학방·왜학방 모두 관덕정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앞서 서술된 『증보탐라지』의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반면 ⑤『제주대정읍지』(1793)의 제주, 공해(公廨)조에는 역학청을 역학당과 왜학당을 합쳐 ‘한왜학당(漢倭學堂)’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어 ⑥제주목사 이원조(1841년 윤3월 부임)의 『탐라지초본』(1845)의 제주, 공해조에는 한학역관(漢學譯官)이 거거하는 ‘역학당(譯學堂)’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공간을 왜학(역관)들도 함께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⑦제주목사 장인식(1848년 3월~1850년 6월 재임)은 2년 3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제주목사 이원조의 사찬 읍지인 『탐라지초본』을 보완하여 『탐라지』(1850)를 저술하였다. 해당 『탐라지』의 제주, 공해조에는 기존의 삼학청·역학당(방)·왜학방(당)이 아닌, ‘지어당(芝魚堂)’이라는 새로운 역관청 명칭이 등장한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어당은 관덕정의 좌우위랑(左右衛廊)에 위치한 역학과 왜학이 같이 거주하는 역관청으로, 1848년(헌종 14) 3월 장인식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자 한학역관 이인화(李寅和)와 왜학역관 김계진(金繼進)이 낡은 역관청 증건을 요청하였고, 이듬해인 1849년 봄 두 역관의 감독 아래 증건이 이뤄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초와 물고기도 또한 함께 감화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존 ‘역학당’이란 이름 대신, ‘지어당’이라 편액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때 이인화만이 『역과방목』에 수록되어 있는데, 방목에서 이인화의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춘보(春輔)로, 1784년(정조 8)에 태어나 36세인 1819년(순조 19) 식년시 문학 전공으로 합격했고, 이후 통정대부 절충장군의 품계를 받고 관직으로는 원체아(元遞兒)를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제주지역에 설치되었던 역관청은 시기에 따라 [17~18세기 초] 삼학청(三學廳)→[18세기 중엽] 역학방(譯學房)·왜학방(倭學房)→[18세기 후반] 한왜학당(漢倭學堂)→[19세기 중엽] 역학당(譯學堂)→지어당(芝魚堂) 등으로 그 명칭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위치 또한 변화를 겪어 초기에는 관덕정을 중심으로 남쪽에 왜학방, 북쪽에 역학방이 각각 존재하였고, 이후에는 관덕정 북쪽에 함께 병존하는 형태로 변모하였으며, 19세기 중엽에는 관덕정 좌우위랑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4. 왜역서 『첩해신어(捷解新語)』의 제주 간행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는 예기치 않은 외국 선박의 표도와 이국인의 유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해방(海防) 정책과 맞물려 제주 표도 이국인들의 심문과 쇄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관의 필요성과 임무는 더욱 중시되었다. 이와 함께 향후 역관을 대신할 능력 있는 역생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역관 후보생이었던 제주지역의 역생들은 외국어 역량을 갖춘 역관으로 양성되기 위해 어떠한 교재를 활용하여 훈련받았을까? 19세기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구례조, 역학생에는 1672년(현종 13) 5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윤계(尹堦)가 데리고 온 역학이 제주 사람 중 총명한 자를 선발하여 가르쳤고, 이때 제주지역 역생에게 가르쳤던 교재는 『노걸대(老乞大)』와 『첩해신어(捷解新語)』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등장하는 『노걸대』는 사역원에서 간행한 중국어 실용 회화 교습책이며, 『첩해신어』는 조선 중기의 사역원 역관 강우성(康遇聖)이 일본어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으로 일본어 학습서이자 역학 시험 교재이다. 이렇듯 1672년(현종 13) 당시, 제주도 내 역생 양성의 중국어, 일본어 학습용 교재로 『노걸대』와 『첩해신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제주도 내에서의 책판 간행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에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역학서 책판 간행 실태를 살펴보면, 1720년 간행 『통문관지』 제8권 짐물(什物)조에 수록된 기록을 통해 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역원에서 중국어 학습과 사행을 위해 간행한 역학서인 『상원제어(象院題語)』를 1699년(숙종 25) 제주역학 오진창(吳震昌, 1683년 증광시 23세에 한학 전공으로 역과 합격)⁴⁾이 제주에서 복각하여 간판한 것을 사역원에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00년(숙종 26) 제주검군관 박세영(朴世英)에 의해 일본어 교재인 『첩해신어(捷解新語)』 목판본이 제주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왜학역관은 일본과의 외교적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지역에만 파견되었는데, 그중 본토 멀리에 위치한 제주에서 제일 먼저 『첩해신어』가 간행된 점은 제주에서 왜학(倭學)의 중요성이 특히 높았음을 시사한다. 이때 역학 오진창과 제주검군관(왜학) 박세영은 『남환박물』 지명환(誌名宦)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702년(숙종 28)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시기에 역관 이희(李禧) 및 왜학(倭學) 최수종(崔壽宗) 등과 함께 근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舊 산기문고본(山氣文庫本)] 『첩해신어』로서, 권10 말미에는 「강희

4) 제주 역학 오진창인 경우, 1798년(연산군 4)~1891년(고종 29) 역과(譯科) 단과의 입격자 명단인 『역과방목(譯科榜目)』에 수록되어 있음.

38년기묘맹춘제주역학박세영감동개간(康熙三十八年己卯孟春濟州譯學朴世英監董開刊)」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즉, 강희 38년(1699년, 숙종 25) 음력 1월 역학 박세영이 주자본을 복각하여 제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첩해신어』 제주 목판본 간행연도와 관련하여 『통문관지』의 기록에는 1700년이라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해당 책의 복각 목판본 말미에는 1699년으로 기재되는 등 양자 간에는 1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아마도 제주에서 1699년에 간판한 목판을 1700년에 박세영이 다시 간행하여 서울로 올려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선시대 제주지역에서 간행된 역학서 관련 책판 목록을 연도별 읍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책판 목록(유학·예술·역사·문집·병학·의학류) 가운데 역학서 관련 책판은 왜학서 『첩해신어』 1종에 한정되어 있다. 즉, 이원진의 『탐라지』(1653) 이후, 윤시동의 『증보탐라지』(1766)에 수록된 책판 목록에는 앞서 간행 사실이 확인된 『상원제어』와 『첩해신어』 등의 역학서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제주목사 윤시동이 부임하기 전인 갑진년(1724, 경종 4) 향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책들이 소실⁵⁾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첩해신어』 또한 그 당시 소실된 자료 중 하나였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왜학서인 『첩해신어』는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간행된 전체 책판 가운데 불과 2~3% 정도의 비중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제주지역의 열악한 출판 환경과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된 사실⁶⁾은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해방(海防)상 중요성과 더불어 역관 인재 양성에 있어 특히 왜학(倭學)[역관]의 절대적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사역원의 역관 양성과 그들의 활동상을 거시적으로 조명해 온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다국적 이국인의 표도(漂到) 다발 지역이자, 해방(海防)의 주요 요충지로 인식되었던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에 주목하여 제주지역의 역관(譯官) 설치 배경과 그 운영 양상을 미시사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역관 및 역관청 설치, 그리고 왜역서 『첩해신어』의 간

5) 제주 역학 오진창인 경우, 1798년(연산군 4)~1891년(고종 29) 역과(譯科) 단과의 입격자 명단인 『역과방목(譯科榜目)』에 수록되어 있음.

6) 윤시동, 『증보탐라지』, 제주 「창고조」 중 책판고, 「갑진년(1724, 경종4) 성묘(聖廟, 향교)가 화재의 번고를 당했는데 많은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행'은 곧 '제주도에 표도(漂到)한 이국인의 사건 처리', 즉 이들을 문정·구호·송환하기 위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되었던 조선시대의 대외 여건 속에서 제주 파견 역관들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정보를 선제적으로 인지하였고, 이를 조선 사회에 전달하는 핵심 매개자로 기능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5분과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반

[특별분과] 섬의 토지와 어장, 그리고 교역

동북아 해상 실버로드(Silver Road)의 일그러진 원형
: 1622~1637년 기간중 가도(瑕島)에서의 은교역을
중심으로

김태욱

인하대학교

1871년 진도군의 섬 간척과 행심책

최윤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개항 이후 조선 연해에 진출한 일본 어민의
출신 지역

이영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한제국기 강화부 장봉도 공토를 둘러싼
인식과 갈등

남기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 해군의 군함 기술 도입과 제해권 연구

김경남

경북대학교

일제시기 대지주의 간척·개간 사업과 성격

최원규

부산대학교

캔에 갇힌 바다
: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과 해양공간의 재편

김예림

연세대학교

1920년대 초중반 독립운동가의 ‘국내’ 진입 루트
: 해로를 중심으로

주지훈

경북대학교

조선운송주식회사의 경영과 미국운송

김민화

민주공원

1930년대 어선보험과 수난어선구제사업

류창호

인하대학교

동북아 해상 실버로드(Silver Road)의 일그러진 원형

: 1622~1637년 기간중 가도(蝦島)에서의 은교역을 중심으로

김 태 욱¹⁾ | 인하대학교

1. 머리말 : 일그러짐과 원형

17~18세기 동북아시아는 은(銀)을 매개로 한 국제적 무역질서, 이른바 ‘실버로드(Silver Road)’의 핵심 경로 중 하나였다. ‘실버로드(Silver Road)’는 명대 이후 은(銀)을 매개로 세계 경제가 연결된 글로벌 무역 경로를 일컫는다. 은(銀)은 명대 이래 국제 무역의 핵심 매개이자 가치 척도로 기능했다.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은에 대한 막대한 수요는 중국 상품에 대한 세계적인 유행과 맞물려서 세계 곳곳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동양과 서양의 교역 활동 증대에 따라서 은(銀)의 지구적인 흐름은 세계경제의 등장을 촉발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은 교역을 계기로 등장한 세계경제는 육상 및 해상 교역로를 통해 이전에 분절되어 있었던 경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17세기는 중국 대륙에서의 명청교체기에 따른 끊임없는 전쟁과 대규모 농민 반란, 조선에서의 정묘·병자 호란, 일본에서의 도쿠가와 막부의 등장 등 정치·군사적으로 대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동북아 전역을 휩쓴 이 시기의 열전(熱戰) 속에서 평안북도 철산군에 속한 가도(蝦島)는 은 교역의 핵심 해상 루트로 부상하였다. 가도는 1622년 명의 장수 모문룡이 동강진을 설치한 이후, 조청연합군에 의해 동강진이 함락되는 1637년까지 약 15년간 독특한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17세기 전반 후금의 흥기로 조선과 명의 육상 교통로가 단절되었을 때 철산의 가도에서 산동의 등주까지 연결되는 바닷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이 시기 가도는 명청 교체기 동북아 3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다투던 전쟁의 도화선 같은

1) 인하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역할을 한 최전방이었으며, 동시에 은(銀)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공식 교역 활동이 전개된 ‘비제도권 경제지대’이기도 하였다. 특히 명나라의 요동지역 실지 이후, 가도의 동강진은 모문룡(毛文龍)의 통제 아래 사실상 독립적인 군벌로서 기능하였으며, 조선과의 외교관계 및 은 교역을 통해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전쟁과 교역이 교차한 일종의 회색지대라 할 수 있다.

가도 동강진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주변 국가의 정상적인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모문룡과 그의 후계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탐욕을 위하여 폭력과 탈취가 결합된 왜곡된 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일그러졌다’라고 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이후 시대의 은 기반 중개무역 체계의 전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가도에서의 은 교역 자체를 연구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며, 일본산 은, 조선의 인삼, 명의 비단 사이의 삼각 순환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은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중개무역 체계의 ‘일그러진 원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가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동강진의 정치·군사적 위상

가도(槓島)는 오늘날의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을 해안으로부터 남쪽 약 2km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면적은 약 19.2km², 해안선 길이는 42.94km에 이르며, 최고봉인 연대봉은 해발 345m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피도(皮島)라 부르기도 한다. 이 섬은 수심이 깊으며,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해 있어 우수한 천연항구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는 대화도·신미도·신도 등이 병렬하여 ‘서한다도해(西韓多島海)’라는 군도를 형성한다. 17세기 전반, 후금이 요동을 장악하면서 조선과 명 간의 육로가 단절되자, 조선 철산 앞바다의 가도는 명과 산둥 등주(登州)를 잇는 새로운 해상 루트의 출발점으로 주목받았다. 가도는 그 지리적 특성 덕분에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고, 동시에 해상 연결이 용이해 해군 전초기지 및 해상 상업거점으로 선택되기에 이상적이었다.

모문룡(毛文龍)은 절강성 항주 전당현 출신이다. 1605년 요동총병 이성량에게 발탁되어 안산 백호에 임명되었다. 1621년, 후금이 요동을 점령하던 시기에 안산에 살던 모문룡의 일가 100여명이 후금군에게 학살당했다. 당시 명나라 유격(遊擊)이었던 모문룡은 광녕순무 왕화정의 명령에 따라 압록강 하구를 통해 조선에 진입하여 일시적으로 진강아문을 점령하였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이를 진강대첩이라 하여 높게 평가하였다. 이후 후금의 반격에 조선내로 철퇴한 모문룡은 당시 조선 정부의 승인 하에 철산 가도에 주둔하게 되었다. 명 조정은 모문룡을 ‘평료총병관(平遼總兵官)’으로 임명하고, 가도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가도는 명군이 조선 영내에 설치한 유일한 공식 군사기지로 기능하였으며, 이후 명에서는 이를 동강진(東江鎭)이라 불렀다.



3. 모문룡이 구축한 가도 중심 동북아 해상 무역 네트워크의 실체

후금의 요동 점령 이후 명으로의 육로 사행길이 막히자 조선은 해로를 이용하여 對明 사행에 오르게 되는데 1621년부터 1629년까지 사행의 출발점에 가도가 있었다. 당시 사행길은 출항기지인 郭山의 선사포에서 출항하여 인근 철산 椴島에 이르고, 중국영토인 遼東반도 연안 石城島와 長山島, 黃鹿島와 旅順口를 거쳐 渤海 해협을 廟島와 山東반도 登島를 지나 登州[현 봉래시]항에 상륙하였다. 그 뒤 등주에서 육로로 燕京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행길의 반대노선이 명에서 동강진으로 물자가 수송되는 노선이었다. 즉, 바닷길을 통해 동강진으로 수송되는 물자는 등주와 천진에서 출발하여 廟島列島를 지나는 노선으로 운송되고 있었다. 이 해상노선을 통해 모문룡은 등주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가도 동강진 산하 병사와 요동 요민의 생계와 군사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모문룡은 군수 명목으로 유통되는 은(銀)을 해상 교역로를 통해 조달하였고, 조선과의 교역에서 얻은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모문룡은 당시 ‘왕(王)’ 또는 ‘해외천자(海外天子)’라 불릴 정도로 정치·군사·경제 전반에 걸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도 동강진 무역 체제의 핵심은 조선과의 공식·비공식 교역이었다. 모문룡은 가도에서의 교역시 명과 조선의 상인들에게서 빠짐없이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조선에서는 가도에서의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에게 과세하지 못하였다. 이는 조선 정부와 명나라 지방 관리들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묵인은 인조 반정 이후 명의 책봉을 모문룡이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조선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모문룡이 당시 명나라 실권을 장악한 환관 위충현(魏忠賢)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공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모문룡은 생존과 개인적인 탐욕에 기반하여 명말 동북아 해상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가도를 단순한 군사적 요새가 아닌 경제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모문룡은 가도를 중심으로 명청교체기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동북아 4국(명, 조선, 후금,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군사, 정치, 경제가 복합된 독특한 국제무역지대를 만들게 된다.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교역로는 육로 위주였으며, 해상을 통한 본격적인 교역체계 구축은 모문룡의 가도 시절이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조선, 후금, 일본의 가도 은교역 참여 방식

1) 은(銀) : 명, 후금, 조선, 일본의 국제 통화

17세기 모문룡의 가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북아 4국(명, 후금, 조선, 일본)간의 은(銀) 교역은 이들 국가를 밀접하게 연관시켰으며, 은(銀)을 통해서 조선은 세계와 연결되었다. 은은 상품경제를 활성화시켜 이격시간 상품의 교류를 촉진하였으며, 그러한 상품들이 만나는 교차점에 시장이

세워졌다. 이러한 상품 교류는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활성화되기도 하였는데 명청 교체기 북방 전쟁 와중에 군수물품의 이동과정에 시장의 역할을 한 곳이 모문룡의 가도였다. 이 시장의 대표 상품은 은, 비단, 인삼이었다

모문룡이 가도에 동강진을 운용한 시기에 이미 1609년 기유약조이후 동래 왜관에서는 조선과 일본사이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일본은 ‘당화(唐貨)’라 불리는 명나라 물품에 대한 수요가 컸으며, 당시 명의 해금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을 통한 간접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 역시 조선과 교역을 할 경우 기본적인 거래 물품이 은(銀)이었다. 후금의 요동 점령이후 조선과 명의 육로길이 막히면서 일본의 은은 해상길의 거점이었던 가도로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명과 일본의 사정에 따라서 1622~1637년 사이 가도는 명과 일본의 은(銀)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은이 넘쳐나면서 은과 교환되는 상품 역시 가도로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명과 일본의 은(銀)을 모이게 하는 자들이 동북아 4국의 상인들이었다. 의주와 동래 출신의 잠상(潛商)들은 가도에서 획득한 명의 주단을 왜인에게 중개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다. 이들은 왜관에서 획득한 은(銀)을 갖고 가도에 들어가 중국물화(唐貨)를 구입해 왜관에 이를 되팔았다. 일본 상인의 주축은 동래 왜관에 상주하던 대마도인이었다. 왜관은 상인들로 늘 붐볐는데 광해군 10년의 경우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숫자가 거의 1천명에 이를 정도였다. 명나라에서 동강진의 무역과 관련이 있었던 상인들은 徽州와 淮安의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동강진이 필요로 한 곡물류외에 비단, 도자기, 약재 등 고급품을 배에 실어 가져왔으며, 이들 물품들은 가도에 몰려든 조선 상인들에 의해서 후금과 일본으로 퍼져 나갔다.

모문룡 시대 가도에서의 동북아 삼국간 은교역은 명-후금간 전쟁중임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조선의 기록외에도 명의 기록에서도 가도내에서 “매일 시장이 열리고, 시장에는 고려, 섬라, 일본에서 온 물건들이 가득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²⁾ 가도의 동강진 시대는 반세기 이후 청-조선-일본 삼국사이에 나타나는 은-비단-인삼 중개무역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자면 조선은 가도 동강진 당시 일본에서 호초(胡椒), 단목(丹木), 종이를 구입하여 후금과 교역하여 은(銀)을 얻고, 이 은을 이용하여 가도에서 청포를 구입하여 후금의 사신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중개무역을 진행하였다.³⁾

은은 동북아 4국의 경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은을 통해서 물화는 국가간에 이해될 수 있는 통일된 가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교역의 확대로 이어졌다. 교역의 확

2) 서원익, 「명청교체기(明清交替期) 동강진(東江鎭)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 『명청사 연구』, 제53집, 명청사학회, 2020.

3) 인조 6년 2월 4일 戶曹啓曰: “今此中江開市, 已定日期, 而京中商賈, 絕無入往者云, 胡人不無發怒之端, 今差解事算員, 齎紙地, 胡椒, 丹木, 靑布等物, 前往開市處, 換買銀兩, 回還之時, 轉入梔島, 抵換靑布, 以爲胡差贈給之用, 而終若得贏, 則京商之願赴者必多, 請以此行會于平安監司, 管餉使, 義州府尹.” 從之.

대는 상호간 이해의 심화와 이를 통한 외교의 시간을 가능케 하였다. 은은 서로 다른 격리된 경제 질서로 움직이던 동북아 4국을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동하게 된다.

2) 비단길 : 실버로드의 역행

1622년부터 동강진 개시가 이루어지면서 명-조선(-후금)-일본으로 연결되는 국제적인 비단무역이 이루어졌다. 산둥(山東) 및 강남에서 출항한 중국 상선들이 가도(槎島)로 몰려들면서 중국 직물을 구하기가 쉬워졌다. 당시 조선에서 수입하였던 직물로는 화사주(花絲紬), 청남포(靑藍布), 모단(帽緞), 사단(絲緞), 백사(白絲) 등 다양하였으나 가장 많이 교역되었던 것은 비단과 청포(靑布) 그리고 백사(白絲)였다. 이런 직물들은 가도를 통해서 제도 정비를 위해 주변 국가에 하사할 망룡단(蟒龍緞) 및 채단과 청포가 꼭 필요하였던 후금으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국가를 건립한 후금은 복속된 주변민족들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에서 생산된 망룡단이나 백사, 청포 등의 직물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명과 전쟁을 벌이던 후금은 조선 상인의 도움을 받아서 은을 지급하고 가도에서 이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역시 조선을 통해서 명이 생산한 백사를 수입하였다. 일본은 백사를 직조(織造)뿐 아니라 밧줄을 만들 때도 사용하여 조선이 가도에서 수입한 백사는 거의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일본의 백사 수입 대가로 일본산 은이 가도를 통해서 명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양상속에서 중국산 백사·견직물의 무역 루트는 대체로 동북아 실버로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인삼 : 동북아 3국의 만병통치약에서 전략자원으로

17~18세기 동북아 실버로드에서 지속적으로 은(銀)의 대척점에 있는 주요물품중 하나가 조선의 인삼이었다. 조선의 인삼은 동북아 3국 모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명약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명이 요동을 상실하기 전 조선과 후금 지역의 인삼은 명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후금지역 인삼의 명 유입이 차단되자 조선의 인삼이 독점적으로 명의 시장으로 유입되어지게 되었다. 명이 요동을 상실한 이후 인삼의 집결지는 모문룡의 가도이었다. 모문룡은 명 조정의 유력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조선의 인삼을 탐하여 조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이었다.⁴⁾

4) 《仁祖實錄》 권 8 인조 3년 2월 戊子

禁關西賣蔘商賈時詔使壓境，蔘價踊貴，商賈等深藏不市，以索高價而潛相買賣槎島。戶曹請令平安監司，設法關津禁之。上許之

17세기 후반에는 일본 국내 시장에서 인삼이 대유행하면서 중요한 대일 무역품으로 부상하였다. 조선에서 채취된 인삼은 명과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조선에 있어서 인삼은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주변국가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조선 정부가 통제 가능한 몇 안 되는 전략 자산 중 하나였다.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銀과 人蔘을 교환하고, 은을 다시 중국의 비단과 교환하는 중개무역에 투입하였다. 조선의 인삼은 동래의 왜관을 경유하여 일본 에도의 쓰시마번이 운영한 약재상으로 전달되었다. 모문룡의 가도 시기에 가도에서 시작해 한양, 동래(왜관), 쓰시마, 에도로 이어지는 ‘인삼의 길’이 형성되었으며, 그 길에 은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5. 맺음말 : 실버로드의 원형

모문룡이 구축한 가도 체제는 군벌적 자율성과 상업적 실리를 결합한 독자적인 교역권이었다. 이 체제는 명 조정의 군수품 보급과 후금의 끊임없는 물자 수요, 조선의 인삼자원, 일본의 은 공급이 상호 얽힌 복합적 구조 위에서 작동했다. 특히 모문룡은 조선의 상인들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삼을 기반으로 한 은 유입 통로를 장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공과 무역, 공납과 사익, 공적 제도와 사적 거래가 모호하게 얽힌 회색경제지대를 운영하였다. 가도는 제국 질서의 가장자리에서 작동하는 ‘비공식 실버로드’의 중요한 사례로 기능하였다. 동북아 3국은 가도 시기를 거치면서 은(銀)을 통해서 각국 경제간 동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은의 유통은 3국간 동일한 경제 언어로 상호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쟁 중에도 교역은 지속되었고, 은(銀)은 동북아 3국간 외교를 가능케 한 매개체였다. 가도는 17~18세기 동안 동북아 3국이 은을 기반으로 한 외교의 시간을 전쟁이라는 굴곡진 조건 속에서도 실현했던 원형 사례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모문룡 체제를 단순한 변방 군벌의 존재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군사와 상업이 교차하며 형성된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질서의 출발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북아 실버로드의 각 거점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의미와, 은을 기반으로 한 상품 유통 구조의 실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17~18세기를 관통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동북아시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1871년 진도군의 섬 간척과 행심책

최 윤 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 머리말 - 진도군 가사도 행심책의 제작 배경

1871년(고종 8) 진도군에서 작성한 제도면 가사도 전답 양안이다. 겉표지에는 『諸島面加士島行審』¹⁾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도면 가사도 양안으로 이용된 행심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면에는 ‘同治10년(辛未) 12월 제도면 가사도 행심’이라고 하여 1871년 조사 기록된 행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亥字, 黃字 袞袞島坪의 행심 기록을 포함하여 총 4개 섬의 토지 정보를 담고 있다(이하 가사도 행심으로 약칭함).



〈그림 1〉 『여지도서』(1757~1765)의 진도와 가사도

〈그림1〉에 표시된 제도면 가사도는 현재 진도군의 조도면으로 개편되어 가사도 출장소에서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²⁾ 〈그림1〉의 아래 쪽 제일 큰 섬이 가사도이고, 행심책의 순서를 보면 가사도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혈도, 송도, 양덕도를 돌아 가사도 동쪽의 간척 토지를 기록하고 있다.

1) 『全羅道珍島郡諸島面加士島行審』(奎18999). 고종8년(1871), 1책(97장) 필사본. 규장각 해제에는 加士島라고 하여 소속처 미상이라고 보았지만, 加士島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s://www.grandculture.net/korea>). 기존의 지역사를 집대성한 지역문화백과사전으로 읍지 등의 조선시기 정보와 이후 근현대 시기 행정구역 재편과정을 담고 있다.

혈도穴島, 송도松島, 양덕도兩德島 등 3개 섬도 모두 조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 섬으로써, 총 4개 섬의 토지 정보가 본 가사도 행심책으로 묶여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본 행심책은 양안의 형식을 빌렸지만, 양안과 다르다. 즉 양전사업 후의 양안 작성과 그것을 행심책으로 필사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행심책으로 작성된 것이 지속적으로 필사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1871년의 행심책은 개항기 이후 해양 도서 방어목적 상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기에 이 시기를 반영하는 자료로 추정한다.⁴⁾

행심책 농민층의 전답 경작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본 행심책의 전답에는 가대家垸 전답도 포함되어 있기에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한다.⁵⁾

본 자료는 과거 진도의 위기를 잘 보여주는 자료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진도와 관련된 고려 말 원 침략과 삼별초(1270~1273) 사건은 진도를 비우고 본토로 강제 이주시킨 공도령(空島令), 그리고 왜적의 노략질과 임진왜란 시기 진도 울돌목 명량해전(1597년) 등에서 벌어졌던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진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진도는 호남지역 방어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이다.

또한 19세기 이후 부쩍 증가한 이양선의 출몰과 개항 이후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해양과 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진도군 역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조선 시기 이래 섬 관리와 해양 방어책의 연장선에서 해결되어야 할 방안이었다.

1871년 진도군 가사도 행심책 제작은 이와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간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1871년 전국 읍지발간(『호남읍지』, 규 12175)과 1872년 지방지도 편찬 제작은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방어하려는 수단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하 1871년 행심책의 토지와 인구 파악을 통해 19세기 해양 방어책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섬 간척과 농업생산에 관한 대안적 문제제기를 통해 마무리하고자 한다.

3) 진도의 177개 섬과 조도면 4개 섬의 농지 간척 상황 전반에 대한 것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고 가사도의 간척 상황만 다룬다.
4) 행심책은 양안을 필사한 것이다. 단, 진도군 가사도 양전이 행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양안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간척 과정을 거치면서) 행심책으로 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5) 현재 2025년 거주자 통계를 활용하여 1871년 이후 154년 간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서, 제도면 4개 섬의 농업 형편이나 거주민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진도군 간척과 해양 방어책

1) 진도의 지리적 위치와 수군 방어체제

옥도(玉島)로 불리기도 했는데, 진도는 섬 치고는 상당히 토질이 비옥한 편이라서 예로부터 농업만으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며 어업도 함께 발달하였다. 게다가 겨울에도 따뜻하여 1년 간 농사가 가능한 곳이다. 진도만의 독특한 역사문화가 자리잡게 된 것도 이같은 지리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섬 자체의 문화가 가장 뚜렷하고 나아가 예향이라 불리기도 한다.

조선시기에 들어 해남현과 합하여 해진군으로 칭하여 오다가(태종 9년, 1409년), 세종19년(1437년) 해남현과 분리하여 다시 진도군으로 명명되었으며, 1440년 진도읍에 관부를 옮겨 자리를 잡게 되었다. 1866년 진도군은 진도부로 승격, 4군 9진을 거느리고 해남 화원면을 복속시켰으며 읍내면은 부내면이 되었으나 1873년 다시 군으로 강등되었다. 1896년 진도군이 전라남도에 속하면서 3등군이 되었다. 이 시기에 가사도면과 조도면을 각각 신설하여 17개면이 되었다.

진도의 해양 방어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라좌수영과 전라우수영과의 관계이다. 특히 전라우수영은 진도를 포함한 서남 해안에 위치한 해남, 완도, 고금도 등의 주요 방어 거점으로 서 진도 방어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진도에 설치된 진도군수영은 왜구 방어 뿐 아니라 제반 군사작전, 물류 운반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의 언급에 의하면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는 이상적인 수군 조직이라하여 전라좌수영과 우수영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알 수 있다. 진도에는 가사도, 고금도 등에 수군 진영을 설치하여 지방군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방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순신의 명량대첩(1597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해양방어책의 핵심이었다. 임진왜란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진도와 해남 사이의 울돌목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진도진은 당시 수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명량대전 승리 후 수군 재건의 전진기지로 강화되었다.

2) 이양선의 출현과 해양방어 체제

섬의 이용과 개발은 조선조에 들어 더욱 강조되었다. 경작지를 확충하여 둔전을 설치하고 나아가 군마를 기르는 목장으로도 활용하였다. 특히 18,19세기 이양선의 출현으로 해양방어의 기점으로서 섬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하게 되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섬을 ‘해방’조에 수록하여, 섬을 국토 방어 기능(시설)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내륙의 성곽은 ‘관방’조에 수록했다. 따라서 섬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섬에 전선(戰船)과 방수군 배치, 봉수 설치 등의 정책이 제안된다. 섬을 국토 방어의 전

진기지로 인식하여, 섬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방어 시설을 설치하려는 방처체제와는 다른 섬 인식이 나타난다.⁶⁾

18세기까지 간간히 등장하던 이양선은 19세기에 들어 항해의 거점을 차지하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 세계 열강의 각축전이 되었고, 조선에서도 이양선의 출몰 건수가 더욱 잦아지는 가운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함선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1866년 병인양요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안전한 정박지를 우선 마련하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섬을 거점으로 삼아 내륙으로 쳐들어 오는 방법이었다.

1871년 6월 신미양요 때 미국은 프랑스 신부 리텔을 길잡이로 삼아 5척의 군함과 1,200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강화도 앞 물치도에 함대를 정박시킨 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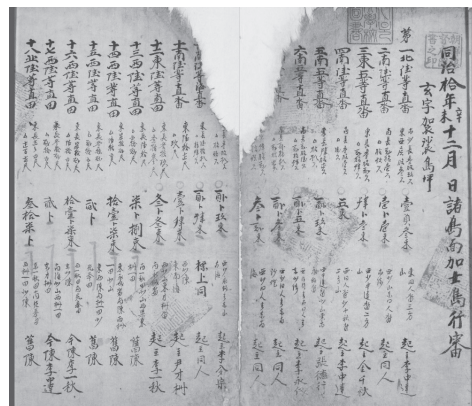
3. 가사도 행심책의 제작과 토지인구 파악

1) 가사도 행심책의 작성과 간척 상황

1871년의 진도 가사도 행심책은 이같은 이양선의 출현과 해양 방어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진도의 군사와 토지를 간척하고 나아가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이다.

가사도 행심책의 토지가 일부 개간한 농지를 포함하여 그 주변 전체를 간척해서 얻은 농지인지 혹은 단기간의 대단위 간척인지는 명확치 않다. 섬 개간과 간척은 모두 토지를 확장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토지조사이지만,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간은 기존의 토지를 정비하여 농경지를 만드는 것으로서 숲이나 나무, 잡초, 돌을 제거하고 농토로 만든 것을 일컫는다. 주로 무인도나 작은 섬의 산림을 없애고 전답으로 개간하는 경우가 많다. 간척은 바다나 갯벌을 막고 물을 빼어 농지로 만드는 것으로써 보통 제방



〈그림 2〉 가사도 행심책

6) 박종기, 2017 「조선시기 관찬 지리지의 섬 인식과 변화」, 『한국학논총』48; 김경옥, 2003. 「朝鮮後期 西南海 島嶼에 대한 國家의 政策 변화」 『국사관논총』102.

을 쌓는 대규모 노동력과 토목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물을 빼고 농지를 조성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간은 소규모 섬 개간의 경우가 많고, 간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며 간척비용이 많이 든다. 주로 군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도 행심책은 필사본으로써 어떤 것을 저본으로 했는지 알기 어렵다. 진도군이 주체가 되어 개간과 간척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양안, 행심책의 형식을 빌렸다는 것에서 전통적인 양전사업의 결과물이고 또한 양안의 형식 그대로였다는 점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가사도 행심책이 어느 시기 양전사업의 결과물인지, 또는 진도군의 전체 양전사업의 결과물인지, 혹은 면, 또는 섬(혹은 리 단위) 양전인지도 명확치 않다.

면 단위 양안의 30~40개 자호에 비하면 가사도 2개 자호는 리 혹은 평坪 단위(가사평)의 소규모 농지에 속한다. 따라서 제도면 가사평의 행심책은 일부 개간지를 포함한 간척지 양전의 결과물으로써 만들어진 행심책으로 보인다. 농민의 숫자 혹은 해당 농민의 경작지 규모는 4개 섬 개간에 참여했던 농민층 모두 기주로 기록되어 있고, 작인층이 없는 자경지 중심의 개간지와 간척지라고 할 수 있다. 즉 개간 주체는 아마 진도군 내의 주민들이 기주, 전답주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주체였으며, 그것을 진도군에서 양안 - 행심책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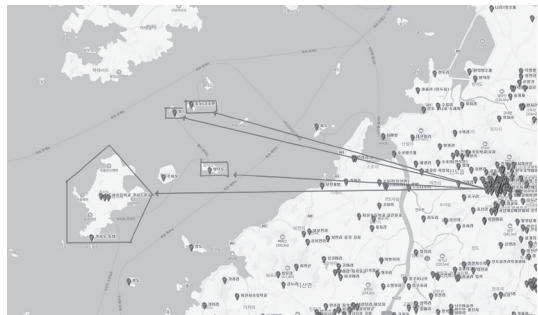
2) 가사도 행심책의 전답과 거주자

가사도 행심의 특징은 첫째, 양안 형식으로 작성되었지만 행심책으로 명명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양안 형식으로 매 필지를 조사하여 기재하였지만 총 필지가 여타 양안에 비해 많다. 세 번째로는 가대를 기재하고 있어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는 전답도형 가운데 해답(海畝)을 기록하고 있어 해산물 생산도 기록했다.

양안의 기재내용은 일반 양안과 마찬가지로 地番, 量田方向, 土地等級, 地形, 長廣, 結負, 四標, 起主 등이며 陳起의 구별이 기록되어 있다.

字號는 玄字, 黃字의 두 字이며 玄字 끝에는 同字內의 田畝이 집계되어 있으나 黃字는 뒷 부분이 떨어져 나가 확인할 수 없다. 지번 역시 필지 면적이 작은 탓도 있지만 1288번에 이를 정도로 가사도평의 필지수가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필지가 작은 토지가 많고 그것을 양안의 5결 1자호 방식으로 작성하려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4개 섬의 규모는 현자 답에 가사도 390필지, 혈도 11필지, 송도 7필지, 양덕도 18필지를 합하



〈그림 3〉 현 진도군청과 가사도,혈도,송도,양덕도

여 총 426개 지번, 8결 44부 2속에 이른다. 보통 면 단위 양안의 30~40개 자호에 비하면 2개 자호는 리 혹은 평坪 단위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농지에 속한다.

현자 답의 가사도,혈도,송도,양덕도 전답은 총 8결 44부 2속에는 금진전 67부6속, 금진답 1부2속, 구진전 1결80부가 포함되어 있다. 진전답을 모두 합하면 2결48부8속으로 수취할 수 있는 전답은 5결95부4속(70%)에 불과하다. 황자 답은 총1286필지까지 파악되어 있으나 뒷 부분이 떨어져 나가 총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앞의 현자 답 426개 지번 8결44부2속과 비교하면 필지수 만으로 3배의 크기이다. 필지수는 1812필지에 이른다.

행심책의 토지 파악 방식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가사도에서 시작하여 혈도, 송도, 양덕도를 거쳐 다시 가사도 동쪽의 간척 토지를 기록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玄字 가사도평 390필지를 앞쪽에 기재하고, 뒤를 이어 송도의 총 7필지 밭은 기주 서광석 1인에 의해 개간된 것으로 보인다. 기주는 1명이고 7필지의 밭이 모두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개간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로 보인다. 양덕도 총 18필지의 전답 9결44부1속은 4인(송중양, 박상철,박남철,이인환)의 기주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黃字 내 가사도평은 총1300필지(분필지 포함)에 이르며 뒷 부분 낙장 때문에 기주 숫자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기주의 숫자를 대략 500~600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거주지가 모두 가사도라고 하기 어렵고, 아마 섬에 가까운 진도군 읍내 서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가사도 행심책의 가대 숫자는 총 134채에 이르며, 2채 이상을 가진 가대주를 제외하면 그 숫자는 108명에 이른다. 2채 이상을 가진 인물은 모두 26명이며, 이맹원과 이맹달은 3채, 이영의는 5채를 갖고 있다.

4. 마무리 - 간척지 증산인가? 섬 갯벌 보존인가?

진도군 가사도의 경작민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추이를 통해 오늘날의 진도 농촌사회의 소멸과 그 위기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다만 자료 상의 한계로 인해 정밀한 추적이 어렵고 현재의 조사를 바탕으로 감소 상황을 확인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가사도와 3개 섬 역시 다른 곳처럼 간척으로 토지와 인구를 확보하던 시기가 있었다. 오늘날에 들어서서는 그 정점을 지나 농촌과 농민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맞게 되었다. 과거의 간척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발상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2025년 진도의 인구수는 28,329명(남14,147, 여14,182)이다.⁷⁾ 주목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읍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42~52%에 이른다는 것이다. 가사도 인구수는 1980년대 약1000명 전후였으나, 2023년에 파악된 인구는 242명으로 진도의 1% 미만이다.

가사도의 동북쪽에 위치한 간척지가 가장 비옥하여 주로 쌀,보리,콩 이외에 고구마 재배를 하며 어업을 겸하던 지역으로 해양방어의 일환으로 개발되면서 주목되었다. 현재 가사도의 농업생산은 인구 감소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규모 간척사업 역시 막을 내리는 상황이다.

이같은 간척사업의 시대적 성격은 21세기에 들어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의 급격한 파괴로 인해 기로에 서게 되었고, 계획의 수정 변경을 통해 급격한 생태 변경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었다. 갯벌(개펄)의 보존을 통해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구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7) 2021년의 진도군 인구 30,066명이었고 이후 3만 이하로 감소 중이다.



개항 이후 조선 연해에 진출한 일본 어민의 출신 지역

이 영 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해에 와서 어업을 행한 것은 183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며, 개항 이전에 이 미 야마구치현(山口縣)과 오이타현(大分縣)의 어민들이 부산 근처의 조선 연해에 와서 밀어(密漁)를 행하였다.¹⁾ 그러다가 1883년 조일통상장정 이후 일본 어민의 조선 연해 어업이 합법화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1889년 조일통어장정 이후 일본 어민들의 조선 연해 진출이 활발해졌다. 1889년의 조일통어장정에는 “조선 연해 해변가 3리 이내에서 어업하기를 원하는 일본 어선은 영사관을 경유하여 통상 항구의 지방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어업세를 납부한 뒤 어업허가증을 수령하여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²⁾하였다. 일본 어선의 탑승인 10명 이상은 10원, 5명 이상 9명 이하는 5원, 4명 이하는 3원의 어업세를 납부하고 조선 연해에서 어업을 행하도록 하였다.³⁾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해에 본격적으로 진출해가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조선 연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조선 연해 진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1892년에 일본의 대표적 수산전문가인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에게 의뢰하여 조선 연해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에 세키자와 아케키요는 1892년 11월에 도쿄를 출발하여 히로시마현과 야마구치현을 들러 이 지방에서 조선해로 돈벌러 간 어업자에 대해 사전조사를 행한 후, 1892년 12월 13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조선 연해를 조사하고, 부산에서 인천·경성에 들러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인천에서 일본 군함을 타고 소안도, 고금도, 제주도, 거문도를 거쳐 1893년 1월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다시 부산

1) 關澤明清, 1894, 『조선근해어업시찰개황보고』 제1회, 외무성 통상국(이영학, 2022, 『수산업-어업(1)-개항기 일제의 어업 침탈』 동북아역사재단, 41쪽.

2) 「조일통어장정」(1889) 제1조

3) 「조일통어장정」(1889) 제2조

항에서 정기 우편선을 타고 원산을 갔다오면서 동해안을 시찰한 후에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경상남도 남해안을 시찰하고 3월 10일에 일본 오사카에 귀환하면서 총 8차례의 보고서를 일본 외무성에 보고하였다.⁴⁾

세키자와 아케키요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일본 어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경상도 부산항 서쪽에서 전라도 진도까지라고 하였다.

조선근해 출가어업을 하는 일본 어업자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경상도 중 부산항 서쪽에서 전라도 진도 북쪽이다. 그 사이 소위 조선의 3대 섬 즉 거제도, 남해도, 제주도를 비롯하여 무수한 섬이 배열되어 있어서 그 형세가 마치 우리나라(일본) 주고쿠(中國)와 시고쿠(四國) 사이에 있는 세토나이가이(瀬戸内海)와 같다. 그곳은 양호한 어장이 풍부할 뿐 아니라, 어선의 경우에는 소형 선박이 항행하기도 쉽고 계박할 장소도 부족함이 없다.⁵⁾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해로 와서 어획을 하게 된 이유는 일본 어민들이 주로 어획하던 세토 내해 지역의 해산물이 고갈되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고쿠(中國)와 시고쿠(四國) 사이의 세토 내해(瀬戸内) 지역은 해상의 면적이 협소하고 어민은 호구가 매우 많으며 어구와 어법은 점점 발달하여 연래 이미 해산물이 고갈되어 가는 상태로 거두는 이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어부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조업해야만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세토 내해처럼 온난 지방에서 성장한 자가 홋카이도처럼 추운 곳에서 조업하기는 어렵다. 홋카이도는 멀고, 조선은 가까우며 더욱이 조선 남부의 여러 섬은 형세가 마치 세토 내해와 비슷하고 해산물의 종류도 세토 내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어업하는데 그동안 사용해왔던 어구 어업으로 곧바로 그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일찍이 보지 못한 어류를 포획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편리하다.⁶⁾

일본에서 어선과 어구 및 어법이 발달하면서 어민들이 주로 어업을 행하던 세토내해 지역의 해산물이 고갈되어가자, 일본 어민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어업을 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북쪽의 홋카이도로 가야 했는데, 홋카이도는 날씨가 춥고, 거리도 멀었다. 반면에 조선 연해는 홋카이도보다 거리가 가깝고, 날씨도 세토내해와 비슷하며, 세토내해와 비슷한 형상으로 섬들이

4) 關澤明清, 1894, 『조선근해어업시찰개황보고』, 외무성 통상국.

5) 關澤明清, 1894, 『조선근해어업시찰개황보고』, 제5회, 외무성 통상국.

6) 關澤明清, 1893, 『조선통어사정』제1 총론.

많이 둘러싸였으며 해산물의 종류도 세토 내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동안 사용해왔던 어구 어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어업하기 유리하였다.

세키자와 아케키요의 조사에 의하면 1892년에 조선 연해에 와서 어업을 행하는 일본 어선 수는 약 1,600여 척에 이르렀다.⁷⁾ 그 중 일본영사관을 경유하여 부산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어업세를 납부한 뒤 어업허가증을 수령하고 어업을 행하는 일본 어선 수는 700척에 불과하였다.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1,600여 척의 어선 중 부산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면허세를 내고 어업면허장을 받은 일본 어선은 708척이고 승무원원은 3,146명이었다.⁸⁾ 실제 조선 연해에 와서 활동했던 일본 어선수의 44%에 불과하였다. 그 내역을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선 연해에 몰려온 일본 어민들은 대체로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國) 사이에 있는 세토(瀬戶) 내해(內海)에서 어업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19세기말에 세토 내해의 어족 자원들이 고갈되면서 그 곳에서 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해로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중 야마구치현 출신이 200척, 히로시마현이 195척이었다. 두 현 출신의 어선수가 전체 면허장을 받은 일본어선수의 56%에 해당하였다. 그 위에 가가와현(85척), 에히메현(36척), 오카야마현(12척), 도쿠시마현(11척), 효고현(3척)을 합하면 542척으로 세토 내해에서 출범한 어선수가 조선 연해에 진출한 총 어선수 708척의 77%에 해당하였다. 즉 조선 연해에 진출하는 일본 어민은 세토 내해에서 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 부산세관에서 면허장을 받은 일본어선수

소속지방	척수	소속지방	척수
야마구치현	200	도쿠시마현	11
히로시마현	195	구마모토현	4
나가사키현	89	효고현	3
가가와현	85	시마네현	2
오이타현	54	후쿠오카현	2
에히메현	36	사가현	1
가고시마현	13	시즈오카현	1
오카야마현	12	합계	708

출처: 「朝鮮沿海漁業の景況」, 『通商彙纂』 2호, 1893.

7) 주1)과 같음.

8) 「朝鮮沿海漁業の景況」, 『通商彙纂』 2호, 1893.

〈표 2〉 일본어선의 어구

어업종류	척수	어업종류	척수	어업종류	척수
도미 승	209	상어 승	132	박망	74
수조망	72	잠수기	70	모구리	26
고등어낚시	26	외줄낚시	18	멀치 그물	17
타뢰망	15	건망(建網)	15	유뢰망	10
꽂치 그물	6	문어 그물	4	전갱이 그물	3
견간망	2	범인망	2	아나고 그물	2
고치 그물	2	저인망	2	바닷장어 승	1
합계	708				

출처: 「朝鮮沿海漁業の景況」, 『通商彙纂』 2호, 1893.

처음에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해에 와서 가장 많이 잡은 어류는 도미, 상어, 꽂치, 송어, 해삼, 전복 등이었다.⁹⁾ 조선 연해는 어업의 보고였다.

지금 일본 어민이 이익을 얻는 지역은 조약상 일부분의 지역에 불과하므로, 허락된 지역에 전부 간다면 이익은 몇 배나 될 것이다. 조선해(朝鮮海)에서 어류가 풍부한 것은 조선 연해 토인(土人)의 어업이 줄렬하여 그것을 잡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만, 지세상(地勢上) 조류 등으로 인하여 어류가 많이 모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의 어류를 제외하고는 잡아도 끝이 없어서 실로 우리들의 보고(寶庫)이다.¹⁰⁾

조선 연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면서 어족이 다양하고, 어류가 매우 풍부하여 일본 어민들의 희망지가 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세토내해는 어족이 고갈되면서 일본 어민의 어업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연해로 일본 어민들이 침입해들어오고자 하였다.

당시 한국의 바다에는 어족이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리하여 배 1척이 하루밤 동안 고기를 잡으면 수 천마리를 낚았고,¹¹⁾ 고기 떼의 길이가 수백 미터나 될 정도였다. 조선 바다에 어족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890년대에는 일본 어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보

9) 關澤明清, 1894, 『조선근해어업시찰개황보고』 제1회, 외무성 통상국(이영학, 2022, 『수산업-어업(1)-개항기 일제의 어업 침탈』 동북아역사재단, 41쪽.

10) 關澤明清 竹中邦香, 1893,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총론.

11) 「朝鮮沿海漁業ノ景況」 『通商彙纂』 2호, 1893년.

다 발달된 어선과 어구를 갖고 와 조선 연해에서 고기잡이를 하여 조선 어민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상어: 일본 어민이 상어를 잡으면 상어가 너무 많이 잡혀서 지느러미를 잘라서 취하고 몸통은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지느러미를 실은 배를 일본으로 가서 판매를 하였다. 소안도가 상어의 좋은 어장.

도미: 4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이 어획기. 많이 잡을 때는 하루에 1만 마리. 대개 1척 이상의 것. 초창기에는 경상도의 남해안. 점차 넓혀감.

도미는 제1회 보고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봄에 70일 정도 어획기이고, 많이 잡을 때는 1일 1만 마리 내외를 잡는다. 그것을 한인에게 판매하면 최저 한전 6-7문이다. 그것을 15% 비율로 계산하면 일본돈 1전 내외에 해당한다. 평균 1전 2리 정도로 판매한다면 현재 70일간의 어획기 중 50일 출어하고 1일 평균 5천 마리를 어획하여 1마리당 1전 2리씩 판매한다면 합계 3천원이다. 도미의 그물 어획기를 넘으면 대부분 낚시어업을 한다. 그 어선수는 대개 1백 척이다. 1척의 수확 6백원 씩으로 간주하면 합계 6만원이 된다.(제7회 보고)

전복, 해삼 : 일본어민이 잠수기를 가지고 와서 남해안에서 전복과 해삼을 싹쓸이하였다. 제주도 어민들이 조선 정부에 항의하고, 서울 경복궁에 가서 상소를 하기도 하였으며 일본 어민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토지가 척박하여 인민 역시 경작에 힘쓰지 않는다. 식량은 다른 지방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원주민이 업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해물 채취이다. 그 해물은 전복, 해삼, 우뚝가사리, 미역, 조개 및 해조류 등이다. 원래 이 섬의 주변에는 모두 암석으로 이러한 산물이 풍부하며 원주민은 맨 손으로 그것을 채취한다. 특히 해조를 채취하는 것은 대개 부녀자의 일이다. 일본 어부가 오는 목적도 전복과 해삼이고, 대개 잠수기계를 사용하여 그것을 채취한다. 우뚝가사리, 미역은 채취하지 않고 기타 어류도 적지 않다. 어물을 어획하는 자는 매우 적다. 작년까지는 일본 어민이 잠수기계선으로 조선해에 출가하는 것이 1백대 정도였는데, 작년 가을부터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으로 출가했던 잠수기계를 철수하여 조선해로 온 것이 27대이어서 모두 120대 정도이다. 그중 제주도 주위에서 어업하는 것이 70~80대이다.(제3회 보고 제주도)

고등어낚시: 매년 5월경이 어획기이다. 가고시마, 나가사키의 두 지방으로부터 온 사람이 많고, 1척당 5~6명이 승조하고 장소는 쓰시마와 조선 사이에 부산과 가장 가까운 지방이다. 모두 외출

낚시(一本釣)이고, 하루 밤에 수천 마리를 낚는다.¹²⁾

그 후 해마다 조선 연해로 들어가는 일본 어선수가 증가하여 1903년에는 3천여 척, 15,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가까운 조선 반도 연안에는 세토우치(瀬戸内海), 규슈(九州), 산인(山陰), 산요(山陽)의 각지로부터 출어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해서 지금 출어자가 속하는 지역은 20여 부현, 어업종류는 30여 종이고(어선은) 3천여 척, (어부는) 15,000명에 이르고 있다. 1개년의 어획고는 200만 엔에 이르고 있다.¹³⁾

1904년 2월에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1905년 5월에 쓰시마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의 발틱함대에 승리를 거둔 것은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를 이겼던 것이다. 그 후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테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맺으며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세계 열강들에게 양해받았다. 그 것을 바탕으로 1905년 11월에 조선에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1905년 12월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조선의 침탈을 본격화해갔다.

그와 함께 일본 정부의 조선 연해의 침탈도 본격화해갔다. 첫째, 일본 지방정부에서 조선 연안 지방을 매입하여 일본어민의 이주어촌을 건설하고 일본어민을 이주시켜 어업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미 일본정부는 1897년 4월에 ‘원양어업장려법’을 공포하여 일본 통어자를 보호 육성할 목적으로 원양어업장려금을 지불하면서 일본어민의 원양어업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 위에 더하여 1906년부터 아마구치현을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조선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연안지방을 매입하여 일본 어민의 이주어촌을 건설하고 일본 어민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통감부에서는 1908년에 「어업에 관한 협정」과 「어업법」을 공포하여 일본어민에게 조선 어민과 똑같이 먼허어업의 어업권을 부여하여 어업권을 상속, 양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해수산조합 통계에 의하면, 1909년 조선 연해 어획고와 어업 이익에서 일본어민이 조선어민을 능가하였다. 즉 1909년 조선 어민의 어업상황을 살펴보면 어선 1만 2,441척, 어업자 6만 8,520명, 수확고 313만 9,100원이었는데, 일본 어민은 어선 3,898척, 어업자 1만 6,644명, 수확

12) 「조선 연해 어업의 정황」, 『통상휘찬』 2호, 1893년.

13) 「漁業の植民(中)」, 『大阪毎日新聞』 1903년 3월 8일

고 341만 8,850원이었다. 어선 1척 당 평균수확고는 조선어민은 1척당 252원이었는데 반해, 일본어민은 1척당 수확고가 877원이어서 조선어선의 3.5배에 달하였다. 일본 어민의 자본력이 커서 어선과 어구가 조선보다 발달하여 우월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제국기 강화부 장봉도 공도를 둘러싼 인식과 갈등

남 기 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조선시대 장봉도

장봉도(長峯島)는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에 속하는 섬으로, 강화도 북서쪽 약 10km 해상(위도 37.6°N, 경도 126.3°E)에 위치한다. 이 섬은 조선 시대 강화부의 관할 하에 포함되었으며, 목장 운영과 군사적 중요성을 함께 지녔던 섬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장봉도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세종 11년(1429)에 나타난다. 예조에서 국가가 제사하는 산천과 도서의 목록을 정비하며 장봉도를 포함한 연해의 여러 섬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 19년(1437) 예조의 보고에서도 장봉도는 강화에 속한 섬으로서 국가의 관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종 22년(1527)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자 국가 기우제의 장소로 지정되었다. 조선 정부의 공적인 관리의 대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장봉도는 조선 초기부터 국가의 마정(馬政)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세종 18년(1436) 감목관 제도를 폐지하고 정포만호가 장봉도 목장을 직접 겸임하게 되었다. 세조 3년(1457)년에는 사복시에서 목장 운영 및 번식마의 선발, 관리를 책임졌다. 이 시기 장봉도 목장은 우수 개체 선발, 다른 목장과 연계 관리가 이루어진 대표적 목장이었다. 선조 31년(1598), 임진왜란 이후 국가 군마(軍馬) 재건 논의 과정에서도 장봉도는 신도, 매음도 등과 더불어 군마 방목의 중요 거점으로 반복되어서 언급되었다. 이후에도 목장의 기능은 이어졌다. 현종 5년(1664)에는 제주산 종자마가 진강 목장에서 길러졌는데, 진강의 잡종마 일부가 장봉도에 옮겨져 방목되었다. 정조 13년(1789) 기록에는 강화 길상 목장에 있던 말을 장봉도 등으로 이관해 방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까지 국영 목장의 지위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봉도는 해상 전략상 요충지로서도 인식되었다. 숙종 4년(1678) 병조 판서 김석주 등은 강화도 순시 뒤 장봉도에 대해 “토지가 비옥하고, 다수의 선박 정박이 가능하며, 1보(堡) 설치에 적합

하다”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어업과 염전 등 생업이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장봉도가 목장 뿐 아니라 생업과 군사적 기반이 함께 조성된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장봉도는 15세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국영 목장, 국가 제사, 군사-해상 방어 등 다양한 국가 기능의 중심지였으며, 18~19세기에는 개간과 어업, 목장 운영, 탁지부 및 내장원의 토지 관리 등 국가의 정책이 강하게 표출되는 섬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강화 장봉도 공토 및 어장 사용권을 둘러싼 청원과 분쟁

1900년(광무 4년) 10월, 강화부 장봉도 주민 이희서, 정정기, 박경오, 윤학교, 나영신 등은 내장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장봉도 내의 논과 밭, 그리고 목장에 딸린 논 등 대부분의 토지가 내장원 관할 하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이곳에서 매년 결세와 도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봉도는 원래 염분이 많고 척박한 땅이어서, 풍년이 들더라도 수확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1900년 올해에는 가뭄이 심하여 조기 이앙을 시도할 수 없었고, 수확도 거의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장봉도 전체에 8천여 호가 있으나 실거주 인구는 600~700명에 불과했고, 이미 23가구가 섬을 떠났으며, 가을이 지나면 80여 가구가 추가로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들은 “올해도 논밭에 대한 세와 도세를 예년처럼 부과한다면 남아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황폐한 논밭에 대한 세금과 도세를 특별히 감면해달라고 내장원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내장원의 공식 답변은 “과거의 일을 다시 번거롭게 꺼내지 말라”는 간단한 문구로,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하였다.¹⁾

같은 해 12월, 장봉도에 거주하는 최만여, 박대성, 이춘실, 김화서, 박원병, 이순여 등도 내장원에 청원을 올렸다. 이번에는 만두리 어망 기지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만두리 어망 기지는 장봉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직접 어망을 설치해 생업을 유지하던 곳으로, 원래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1900년 봄, 강화부윤이 어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어망 기지가 자기 소유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섬 전체에 명령을 내려 매년 생선 40마리, 백화염[소금] 한 항아리, 소어염[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한 항아리, 저어염[소금에 절인 기타 어류] 한 항아리씩을 부윤의 집에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은 엄격하게 집행되었다. 관속들은 현지에 내려와 온갖 부정행위까지 자

1) 李希西·鄭鼎基·朴景五 等 → 內藏院卿, 『京畿道各郡訴狀 2』, 1900.10.

행했고 주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주민들은 본래 내장원에서 관할하는 어장을 사적으로 부윤이 세금을 거두었고, 그 결과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욱 큰 피해가 쌓일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주민들은 내장원이 원래의 권한대로 이 어장에 대한 세금 징수를 직접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특히 어장 사용권을 박원병이라는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해주고, 기준에 맞추어 어장 소득의 일부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고, 강화부에 이를 분명하게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장원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청원 내용에 따라 완문을 작성하고, 강화부에 명령을 내려 처리하라고 회신한 것이다.²⁾

그러나 그 뒤에도 사건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원병의 아버지인 박승일은 내장원에 청원서를 올렸다. 그는 내장원에서 만두리 어망 기지의 사용권을 박원병으로 지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령이 현지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강화부윤은 박원병이 “관립 어장을 내장원으로 이관하려 한다”는 혐의를 씌우고 잡아가 심하게 매질하고 감금하였다고 밝혔다. 박승일은 이대로 가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장원이 강화부에 엄정한 명령을 내려 즉시 박원병을 석방하고, 어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내장원은 “즉시 강화부에 명령을 내려 박원병의 석방 등을 처리하게 하라”는 답신을 내렸다.³⁾

장봉도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중앙 기관인 내장원에 청원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내장원도 일부분에서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서는 강화부와 의마찰, 주민에 대한 부당한 처벌 등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장봉도 공토(公土) 위조매매 사건

대한제국 정부는 외국인 토지 매매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연해의 크고 작은 모든 섬, 공토 및 사토를 불문하고, 외부의 허가과 지방관 인장이 없으면 외국인에게 토지를 매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사건이 장봉도 인근에서 일어났다. 장봉도 동쪽과 서쪽에 있는 동만도(東巒島)와 서만도(西巒島)는 본래 버려진 땅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1900년 현재, 일부 섬 주민들이 고기잡이 도구인 어살을 설치하고 어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터

2) 崔萬汝·朴大成·李春實 等 → 內藏院卿, 『京畿道各郡訴狀 2』, 1900.12.

3) 朴承一 等 → 內藏院卿, 『京畿道各郡訴狀 5』, 1901.5.

전을 서로 사고파는 일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장봉도에 유입해 거주하던 강필주(姜弼周)는 ‘성교당(천주교) 신도’를 자칭하며, 동·서만도와 인근 어업기지의 소유권을 먼저 5,000냥에 사들였다. 그리고 이를 프랑스 총영사 블랑시(葛林德)에게 넘기고 완문을 발급받았다. 강화부윤 한인호는 이를 발견하고 관련 문서와 계약서를 회수한 뒤 사건 전모를 외부에 보고했다.⁴⁾

외부대신 박제순은 1900년 8월 20일, 법부대신과 법부협판에게 공식 조회문을 보내, 통상구 조계 10리 이내 토지는 관계 관청의 문서 없이는 매매가 불가하며, 연해의 크고 작은 모든 섬의 공토와 사토 역시 외부 인허나 지방관 인장이 없는 한 외국인 매매를 금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강화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강필주가 동·서만도와 어업 터를 프랑스 총영사에게 넘기고 서류를 받았으나, 실제 돈은 받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까지 상세히 정리했다. 동시에 외부는 프랑스 공사관에 공식 질의를 하였는데, “매매 계약서는 과거 고용인 최홍식이 위조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프랑스 측 요청에 따라 최홍식을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박제순은 문제가 된 곳은 등록되지 않은 공토라고 강조하였다. 세금 명목으로 완문을 만들어 낸 건 사례는 결코 평범하게 넘길 일이 아니며, 엄정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외부는 사건을 법부로 이첩할 것이며, 최홍식의 우선 체포, 강필주 등 관계자 일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리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⁵⁾

1900년 8월 23일, 법부는 외부로 답신이 보냈다. 법부대신 서리(署理) 겸 법부협판 이근호는 박제순 외부대신에게 앞서 접수한 외부의 조회문에 대한 처리 상황을 상세히 알렸다. 법부는 외부가 요청한 대로 매도인 강필주와 위조 계약서를 만든 최홍식을 즉시 체포하고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홍식에 대해서는 한성부 재판소에 즉각 체포 명령을 내렸으며, 강필주에 대해서도 “곧바로 구금하고 상부 지시에 따라 압송하라”는 명령을 강화부에 하달했다고 공식 통보하였다.⁶⁾ 사건은 법부의 최홍식의 체포 및 강필주의 구금·압송 명령이 실제로 집행에 들어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1900년 9월 1일, 한성부 재판소 검사 김정목은 법부대신 대리 겸 법부협판 이근호에게 ‘보고서 제79호’를 제출하였다. 그는 강화부 장봉도 동·서만도 어살 기반지 매매와 관련된 완문 위조 사건과 연관하여 최홍식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아 사건을 처리 중임을 밝혔다. 최홍식을 신속히 체포해 송치하기 위해 경무청에 인계하였으나, 현재 체포 및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한성부 재

4) 韓麟鎬 → 外部大臣, 『京畿道來去案 2』, 1900.8.4.

5)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 李根濤, 『法部來案 10』, 1900.8.20.

6)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 李根濤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法部來案 10』, 1900.8.23.

판소는 경무청에 다시 통보해 조속히 최홍식의 체포·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다.⁷⁾

1901년 1월 12일, 외부주사 박승빈은 법부 주사 이풍의 앞으로 조회를 보냈다. 이 문서에서 1900년 8월 20일 발생한 강화부 장봉도 어업 기지 위조 매매 사건에 대해 이미 외부대신이 공식 공문을 발송했고, 법부로부터 회답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강필주와 최홍식 두 사람에 대한 이후 처리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⁸⁾ 5일후인, 1월 17일, 법부 주사 이원국은 외부 주사 박승빈 앞으로 답변서를 보냈다. 이 답변에서 법부는, 강필주와 최홍식 두 사람 모두 이미 관할 재판소에 지시하여 체포 수색 중이라고 하였다. 다만, 아직 사건 처리에 관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외부대신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⁹⁾

1901년 5월 24일, 강화부윤 이완용(李完鎔)은 외부대신에게 장봉도 동·서만도 사건에 대한 경과를 다시 보고했다. 이와 동시에 강필주의 상황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강필주는 강화부에 계속 구금되어 있는데, 원래 타지에서 흘러온 유민인 데다 여러 해 옥살이와 병, 굶주림에 시달리며 이제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강화부윤은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법부로 사건을 다시 이첩하고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외부는 이미 사건을 법부에 통보했고, 법부에서도 “강필주를 인계받아 상부로 호송하라”라는 훈령이 강화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하였다. 법부 훈령이 이미 내려왔으면 곧바로 법부에 직접 보고해 처분을 기다리고, 만약 훈령이 없다면 외부를 통해 다시 전달하겠으니 법부 공문 유무를 재차 조사하고 확인하라고 하였다.¹⁰⁾ 사건을 해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구금에 따른 강필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과 중앙 간 반복되는 행정적 확인과 처분 지시의 모순과 지연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1901년 6월 7일, 강화부윤 이완용은 외부대신 앞으로 다시 장봉도 동·서만도 사건에 대한 상황을 보고했다. 피의자 강필주가 지금까지 계속 구금되어 굶주리고 병들어, 이제는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임을 상세히 알렸다. 이완용은 이에 대해 법부로 다시 통지하여 조속한 처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화부는 이미 강필주가 거의 1년 가까이 장기 구금 상태에 있음에도, 법부의 최종 처분 지시가 여전히 내려오지 않은 상황임을 다시 한번 보고하고 검토해달라고

7) 漢城府裁判所檢事 金正穆 →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 李根濤 閣下, 『司法稟報(乙)』 26, 1900.9.1.

8) 外部主事 朴勝彬 → 法部主事 李豐儀, 『法部來案 11』, 1901.1.12.

9) 法部主事 李豐儀 → 外部主事 朴勝彬, 『法部來案 11』, 1901.1.17.

10) 李完鎔 → 外部大臣, 『京畿道來去案 3』, 1901.5.24.

요청했다. 외부는 법부의 처분만을 기다림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¹¹⁾

1901년 6월 15일,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박제순은 법부대신 신기선 앞으로 조회를 발송했다. 박제순은 이 공문에서, 강화부 장봉도 거주민 강필주가 프랑스 공사의 공식 문서를 위조하여 동란도·서란도 어업기지를 불법 매도한 사건에 대해, 이미 프랑스 공사관에 공식 조회를 보낸 결과, 전 고용인 최홍식이 위조한 것이라는 답장을 받았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1900년 8월 20일 법부에 이 사건의 체포 및 처분을 요청하는 조회를 했고, 8월 25일 법부로부터 “최홍식은 한성 재판소에 지시하여 체포 수색 중이고, 강필주는 곧바로 구속하고 적당하게 송치하라는 명령을 강화부에 내렸다”는 답신도 받았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강화부윤에게 “강필주가 굶주리고 병이 들어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이에 관한 답으로 법부의 훈령이 있으면, 법부에 직접 보고해 처분을 기다리고, 만약 법부의 훈령이 없으면 외부를 통해 다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였다.¹²⁾ 박제순은 강필주의 석방 여부를 현 단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즉 법부에 사건의 과정을 밝히고, 강화부에 훈령을 공포했는지 여부, 이후 사건의 처리 방향을 상세히 검토해 신속하게 회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3일 후인, 6월 18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신기선은 외부대신 박제순 앞으로 ‘조복 제12호’라는 공식 답신을 보냈다. 이 문서에서 신기선은, 이미 1년 전 강필주를 구속하라는 지시가 강화부로 내려갔으나, 강화부에서 ‘구속했다’라는 보고가 없었으므로 법부도 실제 구속 여부를 몰랐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송치와 심문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부는 강화부윤에게 즉시 경위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반복되어 발생하는 보고 누락과 강화부의 법부의 훈령이 없었다는 주장에 큰 유감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기선은, 현재 평리원에 훈령을 내려 강필주를 압송해 심사하도록 조치하였고 하였다. 최홍식의 경우에는 한성 재판소에 체포를 계속 지시했으나 여전히 잡지 못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경무청에 수차례 통보해 반드시 체포·송치토록 했다고 하였다.¹³⁾

1901년 9월 20일, 평리원 검사 안종덕은 법부대신 신기선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안종덕은, 외부의 공식 질의와 법부 훈령에 따라 강화부에 구금되어 있던 강필주를 평리원으로 압송하여 직접 심문했다고 하였다. 동시에 주범으로 지목된 최홍식의 신병을 확보해 심문 후 보고하라는 지시가 거듭 내려졌지만, 끝내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문 과정에서 강필주는 자신이 평생 섬에서 어업에 종사해온 노인이며, 장봉도 동·서만도는 본래 황무지였다고 진술했다. 1899년 어느 날, 한양

11) 李完鎔 → 外部大臣, 『京畿道來去案 3』, 1901.6.7.

12)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議政府贊政法部大臣 申箕善, 『法部來案 11』, 1901.6.15.

13) 議政府贊政法部大臣 申箕善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法部來案 11』, 1901.6.18.

에서 찾아온 최홍식이 프랑스 공사관 서기를 자처하며 완문을 들고 어업을 같이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완문 또한 자신의 집에 그냥 두고 간 것이었으며, 그 문서를 실제로 본 마을 사람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관청에 체포되어 심문받던 당시에도 그는 그저 어세를 낼 생각만 했지 실제 금전 거래나 적극적인 매매 관여는 없었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자신은 바다 섬에 사는 무지한 노인으로, 형벌이 두려워 혼란스럽게 진술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리원 검사는, 오랜 기간 최홍식의 행방을 쫓았으나 실질적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고, 강필주가 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71세라는 나이에 오랫동안 구금되어 병약해졌고, 심신의 고통까지 얻은 점을 고려하면 강필주를 방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¹⁴⁾

1902년 2월 19일, 의정부 찬정 법무대신 한규설은 의정부 찬정 육군참장 박제순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에서 평리원에서 강필주에 대한 추가 심문이 진행되었지만, 공토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명확한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필주는 나이가 많고 병세가 심해 곧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 중 한동안 일시적으로 석방하여 돌봄을 받다가, 사건 결론에 따라 1901년 음력 12월 27일에 다시 평리원으로 환송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송이 된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럽게 지병이 악화되어 급사하였고 이에 법부는 즉시 시신을 검시하고 매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⁵⁾

이 보고에서 장봉도 공토 위조매매 사건의 마지막 결말을 볼 수 있다. 강필주는 공식적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 장기간의 구금과 병약 속에 결국 평리원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주범 최홍식은 끝내 체포되지 못했고, 현장에서 구속된 강필주만이 오랜 구금과 조사 끝에 재판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것이다. 대한제국기에 발생한 해안 도서의 불법 매매와 문서 위조에 관한 한 사건은 지방, 중앙 행정의 혼란과 사법 시스템의 미비, 피의자의 생명권 문제 등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재이다.

14) 平理院檢事 安鍾惠 → 議政府贊政法部大臣 申箕善, 『司法稟報(乙)』 31, 1901.9.20.

15)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高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陸軍參將 朴齊純, 『法部來案』 11, 1902.2.19.

일본 해군의 군함 기술 도입과 제해권 연구

김 경 남 | 경북대학교 교수

I. 머리말

근대 일본 해군의 성립과 식민지 요새지대는 일본 제국주의 해군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후 식민지 지역에 어떻게 군사적으로 침투·거점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이다. 일본의 해군 기술력 성장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서구식 해군을 도입하면서 전개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1869년 해군성(海軍省)을 설치하였고, 영국 해군을 모델로 한 군제 개혁을 시작하면서, 조선소와 해군사관학교 설치와 교육, 장비의 영문화, 사세보 요코스카 구레 마이즈루 등의 군항(軍港)을 정비하였다. 일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4대 해군기지 체계를 구축하였다.¹⁾

주지하듯이 일본제국주의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확보하였으며, 해군은 제해권 확보에 성공하였다. 특히 일본 해군이 열강의 반열에 올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러일전쟁에서 진해만 요새지대를 기반으로 한 쓰시마 해전(1905)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일본은 식민지 요새 지대를 대만의 기륭요새, 조선의 진해만요새를 비롯하여, 1905년 이후에는 관동주의 뤼순요새로 확대하면서 제국 해군으로서 제해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군은 더욱 함선과 항공함, 잠수함 등의 기술력을 발전시켜, 남양군도는 물론,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까지 그들의 제해권을 확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참전으로 인한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의 해군력이 궤멸하지만, 현재의 해상자위대는 무적 함대와 항공모함을 가지고 세계 속으로 복귀하였으며,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 제국주의가 해군력을 강화하고 세계 열강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계기를 서

1) 김현숙, 「일본 해군력의 성장과 제국주의 확대」, 『한국일본학회논총』 제49집, 2001.

구의 기술 도입으로 보고, 어떻게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 스코틀랜드의 군사 건조(建造)기술을 받아들이지를 살펴보고, 쓰시마요새와 진해만요새 설치를 통해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기초를 다져나가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력이 세계와의 경쟁구도 속에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일본 해군성의 설치와 서구 군사 모델의 도입

19세기 일본이 제국화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던 것은 해군력의 강화와 섬들과 항구를 점령하는 요새지대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해군성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해군성이 설치되는 과정은 약 4년에 걸친 과정이 필요했다. 당시 최고 행정기관은 태정관(太政官)이었으며, 최고 행정 수반은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1837-1891)였다.²⁾ 1869년 7월 兵部省 내에 해군 담당 부서가 있었는데, 1872년 4월 18일 병부성을 폐지하고, 해군성과 육군성을 각각 독립 부처로 신설하였다.³⁾ 이 조치는 일본 근대 군제의 확립을 위한 구조 개편의 일환이었다.

초대 해군대신은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로서, 그는 실질적 해군 책임자였다. 그러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병부성 장관을 맡으면서 육해군 전체를 관장하게 되었다.⁴⁾ 1886년에는 군령부(軍令部)를 설치하여 작전과 군사령 관련 조직을 만들었고, 1893년에는 군령부를 독립하여 ‘천황’ 직속기관으로 강화하고,⁵⁾ 해군 사관 교육을 위해 서구의 모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조선의 육군이 신식군대를 받아들일 때 발빠른 해군력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동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초창기 해군은 그 조직과 군사모델로서 영국과 프랑스 모델을 수용하였다. 먼저 1873년부터 1879년까지 일본 메이지 정부는 해군 사관 교육을 위해 영국 더글라스 사절단(Douglas Mission)

2) 산조는 교토의 전통 귀족 출신으로 1850년대부터 존양양이 운동에 참여하여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1889.10-12월 내각총리대신 대행) 내각제 도입, 왕정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國會圖書館 電子史料, 近代日本人の肖像, 2004.

3) 太政官布告 第252号:「兵部省ヲ廢シ陸軍省及海軍省ヲ設ケ陸海軍ノ事務ヲ分管セシム」, 『法令全書 (明治五年)』, 明治 5年 4月 18日.

4) 中野文庫, 『明治政府高官職制表』: 伊藤隆·季武嘉也 編,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辞典』, 吉川弘文館, 2005, pp.86-89: 防衛省防衛研究所 編『戦史叢書 第88巻 海軍軍政史 第二部』, 朝雲新聞社, 1975, pp.25-29:

5)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戦史叢書 第88巻 海軍軍政史 第二部』, 朝雲新聞社, 1975, pp.20-21: 山本義正, 『日本近代軍制史研究』, 吉川弘文館, 1991, p.53: 高橋雄豊, 『日本海軍と軍政軍令分離の起源』, 軍事史学会, 1980, pp.18-19.

을 초빙하여 군사고문단으로 활용하였다.⁶⁾ 일본 정부는 장교 아치볼드 더글라스 (Archibald Lucius Douglas)를 초빙하여, 해군사관학교 교육 제도와 지휘체계 전반을 영국식으로 개혁하였다. 이는 일본 해군의 근대적인 군사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편 1880년대에는 프랑스 해군 내부의 혁신적 전략 사조로서, ‘조형함대(Jeune École)’ 전략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대함 전투 중심의 해군론에 대한 반발로서, 핵심 전략 요소는 소형 고속함을 대량 배치하여 기동성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이었다.⁷⁾ 1886년부터 1887년까지 테오도르 르 그랑(Théophile Aube) 해군장관과 앙리 듀포이 드 롬(Henri Dupuy de Lôme)이 조형함대 이론을 공식 해군 정책에 반영했고, 상선을 공격해 통상파괴 전략(Guerre de Course)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잠수함을 사실상 해양 전략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개발을 추진하였다.⁸⁾

하지만, 잠수함은 기술이 불안정하고 유효성이 부족하여 전함 중심 해군국가들인 독일과 영국의 방어 전술에 제압당하면서, 조형 함대 이론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1890년대 이후 프랑스는 잠수함 순양함 Milan, Sfax, 어뢰정 약 70척 건조 등 전함 건조를 재개하여 전통적 해군으로 회귀하였다.

Ⅲ. 사세보와 구레의 해군공창 확대와 군함 기술 이전

1. 사세보 해군공창 설립과 스코틀랜드의 기술 이전

일본 해군이 해군력을 기르기 위해 핵심적인 것은 조선소와 훈련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동양에서는 최초로 일본 해군은 히로시마의 구레(呉)와 규슈(九州) 사세보(左世保)에 조선소 기술 기반을 완비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초기 해군력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사세보 해군공창은 1886년 해군 구역 설치 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889년 건조 전용 독(dry dock)을 완비하면서 1897년 조선부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해군 공창은 건립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베르탱(Louis-Émile Bertin) 감독의 지휘하

6) 渡邊義浩, 『明治初期の海軍創設とイギリス海軍モデル』, 『軍事史学』 第31卷 2号, 1995.

7) 정구 전함 대신 고속 순양함, 어뢰정, 어뢰 구축함 등을 조직하고, 어뢰 및 통상파괴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격력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술 목표를 설정하였다.

8) 그 사례는 Gymnote, Narval이다. Gymnote는 1888년 9월 24일 세계 최초의 전기 잠수함이며, Narval은 1899년 10월 21일, 이중선체와 이중동력 체계로 잠망경을 설치한 이후 50년간 모델이 된 획기적 구조였다. Roberts, Stephen S. French Warships in the Age of Steam 1859-1914: Design, Construction, Careers and Fates. Barnsley, UK: Seaforth Publishing, 2021.

에 진행되었으며, 프랑스 해군 기술을 일본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베르탱은 프랑스 해군 기술자문관으로서 일본 해군공창의 설계는 물론 운영까지 깊이 관여했으며, 해군 무기 및 설비의 기술 발전의 흐름을 분석하였고, 일본 해군공창의 구축 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다.⁹⁾

베르탱은 1882년부터 2년간 프랑스 해군 최초의 방호순양함 스팅스(Sfax)를 설계한 인물이다. 스팅스는 러일전쟁기에는 훈련용 또는 해외 순찰 임무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일본 해군의 중추로 활약한 마쓰시마형(松島型)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쓰시마급은 베르탱이 일본 해군에 기술 고문으로 참여했을 때 제안한 설계로, 중앙에 대구경 단일 포를 배치한 독특한 구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본은 당시 예산 부족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함선을 건조했고, 이를 통해 서구 기술을 빠르게 흡수했다. 특히 러일전쟁에서는 마쓰시마급이 실전 배치되었고, 특히 제해권 확보와 연안 공격에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일본 해군의 전력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 기술은 일본 해군 전략의 방향성과 기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다. 당시 프랑스는 중립국이었으나, 함선 기술 이전으로 일본제국주의 전쟁에 일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1894년에 조선부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에 조선소에서 공창으로 승격되었다. 1903년 공식 해군공창 명칭으로 법제에 적용되었다.

사세보 해군공창을 확장하기 위해 1913년 약 250톤급 Titan형 캔틸레버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였다. 이 크레인은 영국 Sir William Arrol사 제작하였는데,¹⁰⁾ 다테가미 계류장에 설치하여 대형 군함의 건조 및 정비에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해군은 대형 군함 변환 능력과 수리 능력을 확보하였다. 이 크레인의 설계에 직접 참여한 인물은 Dr. Brian Newman (Newcastle Univ.)으로서, 사세보 Titan 크레인의 설계 및 제작 기록을 Sir William Arrol Collection에서 분석했다.¹¹⁾

사세보에는 1920년대에 이미 방공(防空)지휘소를 건설하였고, 태평양전쟁기인 1942년 해군 방공시설로 배치하고 활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잠수함, 구축함, 경순양함, 항공기 966대의 생산과 수리를 담당하였다.

9) Louis-Émile Bertin, "Évolution de la puissance défensive des navires de guerre(전쟁 함선의 방어력 진화)" (1906). 19세기 후-20세기 초 해군 건축과 군함 방어력의 진화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

10) 산업혁명기 스코틀랜드 공학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유럽·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에 걸쳐 구조물을 수출하였다. 기술적 정밀성과 대형 구조물 시공 능력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1) Miles Oglethorpe·Brian Newman, Japan's Uplifting Heritage: Giant Cantilever Cranes, 2024.

2. 구레 해군공창(Kure Naval Arsenal)의 설립과 확대

해군 공창이 세워진 구레는 1860년대까지 인구 6만 명의 작은 항구도시였으나, 1889년 7월 1일 구레 진수부가 창설되어 본격적으로 해군 도시가 되었다. 1889년 구레해군공창은 구레해군 구역(Kure Naval District)과 함께 설치되었는데, 기존 고베 오노하마 조선소 장비 이관으로 시작되었다.¹²⁾ 일본은 영국의 대형 함대를 배웠으나, 실제로 구레와 사세보에 해군 공창을 만들 때는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 루이-에밀 베르탱(Louis-Émile Bertin)의 감독하에 추진되었다. 베르탱은 구레와 사세보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운영 감독까지 수행한 인물로서, 일본 해군의 초기 전력 강화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구레 해군 공창의 인프라 규모는 1897년 경 특수 전함 미야코를 건조할 정도로 완비되었다. 정촌제의 시행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구레정(呉町)은 1902년 10월 1일 구레시로 승격되었다. 1903년 해군공창법에 따라 “구레 해군공창”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3년 11월 10일, 구레 해군 공창이 설립되면서부터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 1910년대 인구 20만 명이 넘었다.

1921년 1월 15일, 구레 해군 공창의 부지는 더 확대되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군항으로 발전했으며, 야마토급 전함 등 상당수의 일본 군함이 구레항 소속이었다. 구레공창은 대형 전함 야마토·나가토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능력을 갖춘 본격적 군수조선소로 변모하였다. 대형 철강용 용광로와 해군포·탄약 생산 설비를 갖추었다.

도시규모는 점점 커져 1941년 4월 21일 니가타정(仁方町), 히로촌(広村)을 편입하여 히로시마 현 제1의 도시가 된 이후로 1943년 현재 인구가 404,257명이 되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국의 구레 군항 대공습으로 인해 야마토 침몰 이후 남아있던 전함들은 함재기 공격으로 대부분 궤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만 미군 폭격으로 70 % 이상 시설이 손실되었다.

IV. 맺음말 : 일본의 군함 기술 도입과 제해권 확보

일본 해군 창설 초기의 함선 기술 기반은 프랑스와 영국, 스코틀랜드 등 해외 기술이 도입이었다. 특히 구레와 사세보 모두 감독자가 프랑스 엔지니어 베르탱이었으며, 그의 지도 하에 군수 조선(造船)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해군공창이라는 명칭을 도입하고, 공창의

12) 사세보시청 연혁 소개.

지휘나 생산조직을 공식화한 것은 1889년부터이나, 사세보의 경우 해군공창법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은 러일전쟁 직전인 190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로부터 배운 군함 기술력은 러시아와의 결전에 크게 활용이 되었으며, 이에 더해 일본은 대한해협, 라오둥반도 등에 군사요새를 몰래 만들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¹³⁾

〈그림 1〉 러일전쟁기 일본해군공창과 요새지대의 설치



현재 지도를 기반으로 19세기 후반 요새지대와 군수공장, 정치중심지를 표기함.
<https://www.google.com/maps>

1880년대부터 1905년 러일전쟁까지 일본정부는 사세보와 구레에 해군공창을 만들었으며, 대한해협에는 쓰시마요새, 진해만요새, 뤼순요새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해군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⁴⁾ 또한 일본이 제국화된 것은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대식 조선소 기술을 도입하고 해군 사관학교 훈련, 군사 요새 활용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 1913년에는 사세보에 250t

13) 1899년부터 한국 육군성은 한국 농상공부 장관 민영기와 협상(協商)을 하여 거금 2만엔을 주고 토지를 잠매하여 진해만 요새지대를 불법으로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경남, 「한말 일제의 진해만 요새 건설과 식민도시 개발의 변형」, 『항도부산』 28, 2012, pp.1-51 참조.

14) 増田雅宏, 『日本帝国海軍と軍事戦略』, 防衛大学校出版部, 2010.

크레인과 경충실 등 대형시설과 인프라 장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그리고 실제로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 능력을 발휘한 것은 미야코, 야마토 등 대형 전투함이었으며, 구레에서 야마토를 설계하고 건조하였다. 방공 통신용 네트워크는 사세보 해군공창에 구축되었는데 1924년부터 시험을 시작하였다. 사세보에 방공사령부를 두고 무선망을 구축하였으며, 1942년에 지휘소로 이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구레와 사세보 조선소는 단순한 군수기지가 아니었으며, 프랑스의 베르탱, 영국, 스코트랜드 등 해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근대 군수 기술을 일본 전역에 전수하고 발전시킨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기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제국 해군은 대형 군함 설계·건조·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기술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이후 일본 해군이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확립하고,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거나, 잠수함을 만들고, 방공체계(防空體系)를 고도화하는 등 전략적 전력을 구축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양군도, 태평양제도까지 침략하는데 핵심적인 요건을 만들어주었다.

15) ICOMOS Japan, Japan's Uplifting Heritage: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Meiji Japan, 2014, p. 61.

참고문헌

- 太政官布告 第252号 「兵部省ヲ廃シ陸軍省及海軍省ヲ設ケ陸海軍ノ事務ヲ分管セシム」, 『法令全書 (明治五年)』, 明治 5年 4月 18日.
- Louis-Émile Bertin, *Évolution de la puissance défensive des navires de guerre*, 1906.
- 김현숙, 「일본 해군력의 성장과 제국주의 확대」, 『한국일본학회논총』 제49집, 2001.
- 増田雅宏, 『日本帝国海軍と軍事戦略』, 防衛大学出版部, 2010.
- 김경남, 「한말 일제의 진해만 요새 건설과 식민도시 개발의 변형」, 『항도부산』 28, 2012,
-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계와 부산의 요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유병호, 「진해 해군기지화와 일제의 대륙전략」, 『군사연구』 제92호, 2016.
- 김경남, 「전시체제기 일본의 항공정책 변화와 조선내 항공기지의 건설」 『역사와경계』 124, 2022,
-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戦史叢書 第88巻 海軍軍政史 第二部』, 朝雲新聞社, 1975
- 高橋雄豊, 『日本海軍と軍政軍令分離の起源』, 軍事史学会, 1980,
-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戦史叢書 第88巻 海軍軍政史 第二部』, 朝雲新聞社, 1975, pp.20-21: 山本義正, 『日本近代軍制史研究』, 吉川弘文館, 1991
- 渡邊義浩, 『明治初期の海軍創設とイギリス海軍モデル』, 『軍事史学』 第31巻 2号, 1995.
- 増田雅宏, 『日本帝国海軍と軍事戦略』, 防衛大学出版部, 2010.
- ICOMOS Japan, *Japan's Uplifting Heritage: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Meiji Japan*, 2014,
- Anthony Tully, *Japanese Navy*, Oxford Bibliographies, 2018.
- Roberts, Stephen S, *French Warships in the Age of Steam 1859-1914: Design, Construction, Careers and Fates*. Barnsley, UK: Seaforth Publishing 2021.
- Miles Oglethorpe·Brian Newman, *Japan's Uplifting Heritage: Giant Cantilever Cranes*, 2024.

일제시기 대지주의 간척·개간 사업과 성격

최 원 규 | 부산대학교

일제는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을 통해 조선의 토지 소유 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산미증식계획(1920~1934년)을 추진하며 조선을 일본제국의 식량 공급 기지로 삼고자 했다. 간척사업의 주요 목적은 갯벌이나 저습지를 농경지로 전환하여 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었다.

일제는 간척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첫째 ‘국유미간지이용법’(1907년)으로 구래의 무주지였던 미간지를 국유지로 선언하는 한편, 종래 ‘起墾者爲主’로 누구에게나 허용되었던 개간 즉 소유지로 인정했던 것을 3정보 이상의 개간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 개간한 뒤 불하받도록 규정했다. 1911년에는 3정부 이상이라는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미간지에 적용했다. 이들을 체제적으로 도와주기 마련한 법이 ‘수리조합 조례’와 ‘조선수리조합령’이다. 일제는 이를 국책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마련하고, 법적장치로 1923년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일본의 1921년 ‘공유수면매립법’을 조선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의 핵심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육지로 만드는 행위와 그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매립 허가제) 이 법은 대규모 간척을 통한 농지나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 제도는 일본계 대지주들이 조선의 토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반면, 이 법령은 전통적으로 공유수면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과 연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법은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간척사업의 법적 근거로 기능했다.

일제시기 수리조합 사업을 동반한 대규모 간척사업은 주로 서해안의 넓은 갯벌 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아래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서해안은 광범위한 간척사업으로 원래 해안선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일제는 1920년부터 15년간의 1차 산미증식계획에서 총 80만 정보의 토지 개량을 목표로 했으며, 이

중 20만 정보는 개간과 간척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다. 간척지를 포함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배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리조합도 대거 설립했다.

일제가 주도한 간척지는 아래 제시된 표와 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전라북도의 만경경과 동진강 일대의 평야지대에 중점적으로 시도되었다.

〈표 1〉 일본인 주요 간척지(〈표3, 4〉는 제외함)

장소	시기	주도자	내용	비고
강화도 간척지	19세기 말 ~ 일제강점기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이곳 간척은 고려때부터 시작되어 일제때도 계속되었다.	한강하류·강화군 일대
화원농장	1920년대 후반 ~ 1930년대	일본인 농장주 (예: 야마모토 농장)	일본인 대지주가 국유 미간지(未墾地)와 간척을 통한 농지 확장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대
서산 간척지	일제시기추진 (대규모 간척은 해방 후 진행)	일부 일본인 소유주	충남 서해안의 넓은 갯벌 지역 대규모 간척의 잠재력을 보고 조사 및 일부 사업 추진	충남 서산시 일대 (천수만 일대)
김제군 광활면	1925년 설립 1	동진농업주식회사	1928년 방조제 설립 대규모간척 10년간 염분제거작업	김제군 일대 동진수리조합지구
김제군 죽산면	1920년대	일본인 지주	벽골제 지역, 아리랑의 무대	
김제군 진봉면 부량면	1920년대 이후	일본인 지주	1915년 진봉방조제 1923년 동진방조제	

여기서 조선인 간척지는 해남 윤씨가의 간척지, 현준호의 학파농장, 고창의 삼양사 해리 간척지, 일본인 간척지는 불이흥업(주)의 간척지를 다룰 것이다.

1. 해남 윤씨가의 간척 사례

〈표 2〉 해남 윤씨가의 간척 사례

인물	활동 시기	주요 간척지	규모	주요 특징 및 의의
윤의중 (윤선도 조부)	16세기중반 1524~1590	장흥, 강진, 해남, 진도 등 서남해안	주변 언전을 거의 모두 소유했다고 비판받음	윤씨가 간척사업의 시작 민간 주도의 대규모 간척의 선구자
윤선도	1587~1671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완도군 노화도 석중리	각각 약 300정보 (총 약 200만 평)	간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실행력 가문의 경제적 기반 확충
윤이후 (윤두서의 부)	1668~1715	해남 산이면 속금도 현산면 백포	백포 간척은 〈백포벌서도〉에 묘사될 정도이다.	윤이후의 《지암일기》기록 실경산수화 묘사된 간척
윤정현 (종손)	1920·30년대	해남군 북일면, 강진군 도암면	약 15만 평	일제시기 종가 재산 증식 해언전 개발 방식을 계승
	1922.2~1924.12	강진군 도암면 벌정리	17.7정보	

해남 윤씨가는 조선시대부터 간척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호남의 명문가이다. 그들은 조선후기부터 수백 년에 걸친 간척으로 가문의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고 유지하였다. 윤씨는 노비를 동원하고 인근 인부를 고용하는 한편, 관의 인력 동원에 힘입어 간척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간척사에서 타인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계획하고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반 대지주였지만 단순히 재력과 권력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농업 경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자세는 집안의 전통이기도 했다. 철종 연간 후사가 끈기고 관권에 시달리는 등 종가가 무너질 위기에 닥쳤을 때도 가문의 농업경영 전통에 근거하여 대지주로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씨는 1894년 농민전쟁 때는 정부 측의 일원이었으며, 일제시기에는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윤정현은 토지 매매는 물론 간척사업으로 대지주로 성장했다. 간척지와 토지는 해방 후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었지만, 광주 해남지역의 정치 권력의 실세이며 종가라는 지위로 농지개혁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간척지는 염전 또 간척 중이라는 이유, 기존 토지는 위토라는 이유로 위기를 넘기고 지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2. 현준호의 간척지 사례

영암 출신인 현기봉은 목포와 광주를 중심으로 부를 축적했다. 그의 자 현준호는 호남 유수한 기업인이며 금융인(호남은행장), 그리고 대지주로 간척사업에 참여했다. 현준호는 중추원 참의를 지내 해방후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반민특위 해체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한국전쟁 중 1950년 광주에서 인민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학파농장은 그의 아들인 현영원(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부친)이 공사를 재착수하여 1962년에 최종 준공 인가를 받았다. 현씨의 간척사업은 당시 조선인 기업가가 일제 식민지 체제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현준호는 해남물산(주)를 설립하고 전남 해남군 송호리에서 갯벌의 농경지화를 식산은행 대출을 받아 시행했다. 1932년에는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의 간척사업을 완공하였다. 가장 주목되는 간척사업은 1939년 영암군 서호면 성재리와 군서면에 실시한 서호 간척사업, 즉 학파농장이다. 1961년 우여곡절 끝에 최종 완성하였으며, 270만 평 정도이다.

학파농장은 농지개혁이후 지주제 해체라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소작인에게 물권적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소작료를 수확량의 30%로 책정하고 더 낮게 받았으며, 소작인에게 토지 점유권을 주고 소작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물권으로 인정했다. 간척사업을 할 때 농민들이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후기 이래 왕실이나 지주가 농민 노동력을 동원하여 간척할 때부터의 농촌관행이었다.

현씨의 학파농장은 1988년 무렵, 소작인들이 소작료 납부거부 운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국

면을 맞이했다. 간척 당시 현준호가 간척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땅을 20년 후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들 현영원이 상속받은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농지개혁이 시행되면서, 일찍 간척된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의 약 30만 평은 경작자들에게 넘겨졌으나, 학파농장 200여만 평은 간척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때문에 소작운동이 일어나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정투쟁의 결과 1994년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양도되면서 소작쟁의가 마무리되었다.

3. 삼양사(김연수(金季洙; 1896~1979)의 간척사업

삼양사가 추진한 간척사업은 주로 농지 확보와 공장 부지 조성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었으며, 삼양그룹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인촌 김성수의 동생인 김연수는 1924년 삼양사의 모태인 '삼수사(三水社)'를 설립한 이후, 호남 지역 일대에 농장을 조성하며 농토를 확장했다. 초기 삼양사의 호남 지역 농장은 기존농지를 바탕으로 고창농장 외에 장성농장 줄포 농장, 신태인 농장, 명고농장, 고창 농장 등 여러 농장을 개설한 전북 지역의 유수한 대지주였다(표 3). 1930년대 간척을 통한 농지 확보에 주력했다. 첫시도는 1931년 함평간척지 사업이었다(손불농장). 1936년에는 전북 고창군 해리면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인 약 95만 평(일부 자료 240만 평)에 달하는 해리농장과 염전을 조성하여 근대적인 기업형 농업을 시도했다. 간척 과정에서 식은과 동척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소작인의 지위는 일본인 농장처럼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간척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물권적 권리도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표 3〉 김연수 삼양사의 호남 지역 주요 농장과 간척지 현황

농장 명칭	위 치	개설 시기	주요 특징 및 간척 여부	비고
장성농장	전남 장성군	1924년	삼양사의 첫 사업(기존 농지)	삼양그룹 모태
줄포농장	전북 부안군	1927년	간척 사업, 자가 정미 시설	첫 간척 사업
고창농장	전북 고창군	1920년대 후반	초기농장 기존 농지	
해리농장(해리염전)	전북 고창군 심원면/해리면	1936년 4월	간척사업 총240만평(염전 90만 평, 답 90만평, 조림지 60만 평)	현재 염전의 흔적이 남아 있음.

또하나의 계기는 일제가 만주사변(1931년) 이후 만주국을 수립하고, 이곳을 식량부족 문제와 공업 원료 확보를 위한 기지로 삼으려 한 것이다. 남만주철도(주)를 비롯하여 불이흥업과 같은 일본계 회사가 간척 개간으로 대농장을 조성했다. 김연수도 동참했다. 그는 1936년 남만방적(주)을 설립하고, 남만방적의 원료인 면화 재배와 연계된 형태로 농장을 설립했다. 1937년 잉커우(營口)의 천일농장(天日農場 1782정보), 지린(吉林)성의 반석농장(磐石農場: 700정보), 매화농장(梅花農

場: 380정보), 유하강변의 유하농장, 1938년 봉천 교하농장(奉天 蛟河農場), 1939년 평토편(奉天)성의 구대농장 등을 마련했다. 이 농장경영은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에 편승한 ‘무장개척 이민’의 성격을 띠었으며, 일제의 금융지원과 정책지원(중추원 참의이며, 만주국 명예총영사)이 뒤따랐다. 삼양사는 해방과 6.25전쟁과 농지개혁으로 만주와 국내 농장을 잃고 재건에 나섰다. 이때 울산 제당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1955년 경남 울산군 방어진읍 매암리 해안을 간척하여 대규모 제당공장을 건설했다. 삼양사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4. 불이흥업의 간척사업

불이흥업(不二興業株式會社, Fuji Kogyo Co., Ltd.)은 사장은 후지이 간타로(藤正寛太郎)이다. 그는 도쿠시마현(徳島縣) 출신으로 오사카에서 상점 점원으로 조선에 파견되면서 토지경영에 본격 착수했다. 등본합자회사를 설립했다가 불이흥업(주)로 회사체를 변경했다. 그는 한국에서 미간지를 개간한 농장경영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그때마다 수리조합을 설립하여 ‘수리왕’이라고 불렸으며, 간척과 더불어 거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불이흥업의 주요 간척사업은 <표 4>와 같다. 전북 군산(옥구) 일대의 옥구간척지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넓은 갯벌로 간척사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불이흥업은 1920년부터 1923년까지 군산시 옥구군 미면(현 산북동)과 옥구읍, 옥서면 일대의 갯벌에 총 1,850정보(약 550만 평)에 달하는 방대한 농토를 조성했다. 간척지 중앙에 100만 평 규모의 옥구저수지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총 1,850정보 중 남쪽의 850정보에는 불이흥업의 불이옥구농장으로 조선인 소작농을 모집하여 지주경영을 했다. 북쪽의 1,000정보에는 일본의 각 지역에서 농민을 이주시켜 불이농촌을 건설했다. 이들에게는 1호당 약 3정보의 토지와 주택 1동, 이주 자금을 지원하며 ‘이상촌(理想村)’ 건설, 즉 ‘조선의 일본화’를 추진했다.

<표 4> 불이흥업의 주요 간척사업

명칭과 위치	수리조합명	시기	면적	총 자금	금융지원	비고
불이흥업 옥구간척지 (전북 옥구군)	익옥수리조합	1920년 ~ 1923년	1,850 정보 (약 550만 평)	불이흥업 자체 자본 + 총독부 지원 추정	조선총독부 (정책적 지원 및 보조금)	‘불이농촌’과 불이농장
불이흥업 철원농장(강원도 철원군)	중앙수리조합	1920년대 이후	개간의 직접 시행보다 수리 지원	총독부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지원	조선총독부, 동척, 식산은행 등	불이흥업 ‘철원농장’에 수리시설 제공.
불이흥업 서선농장(평북 용천군)	대정수리조합 (간척은 1911년부터 시작)	1913년 ~ 1927년	약 11,093 정보(조합구역 면적)	불이흥업 자본 + 조선총독부와 동척 지원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후지이가 불이서선농장을 위해 수리조합 설립

후지이 간타로는 평안북도 용천 지역의 갯벌에 주목하여 간척을 통해 불이서선농장을 조성해 갔다. 그는 1911년부터 간척사업을 시작하여 1913년에는 평북 용천 지역의 국유 간척지와 초생지의 개간허가를 받고 약 4,000여 정보의 토지를 확보했다. 1921년에는 외하면 석곶(石串)의 간척지 약 1,000여 정보를 추가로 불하받았다. 1914년에는 대정 수리조합의 인가를 받아 1918년 7,000여 정보의 몽리구역을 갖는 수리사업을 완료하였다. 1927년 조합 구역은 11,093정보였다. 불이흥업은 '간척지 개간 규정'을 내걸고 1,500여 호의 소작농민을 모집하여 이들의 노동력으로 간척지를 개간했다. 소작농민들에게 과도한 수리조합비와 소작료를 부과하여 1925년부터 1932년까지 다섯 차례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일본인은 서남해안 각지에서 대·중·소 규모로 간척을 시행했다. 대규모 간척은 주로 일본인 기업가가 담당했다. 강진군의 경우 1925년 도암면과 대구면에서 미야사토 구마고로(宮里熊五郎)가 1930년 공사를 완료하였다. 도암면 3개리 108정보이고, 대구면 2개리 110정보였다. 이케타 신타로(池田信太郎: 중국신타주식회사)는 1928년 면허권을 받아 1939년 강진읍 칠량면 군동면에서 520정보의 간척지를 확보하고 강진군 최대 지주로 등장했다.

* 결론에 대신하여 : 호남 지역 간척사업의 특징은 한말 왕실과 농민이 소유권 다툼을 한 균전수도 지역이고, 일본인 대지주가 대거 침투한 지역이다. 일본인들의 간척사업의 특징은 첫째, 자본과 무력으로 확보한 토지(기간지)를 토대로 한 개량과 종래 제언·보 등 수리사업을 근간으로 출발했다. 둘째, 간척은 일본 제국을 위한 식량증산이 목표여서 조선 농민들에게는 소득증대의 효과가 없었다. 셋째, 필요 자금은 식산은행과 동척 저리자금 대부분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간척지 지주들은 금융자본 지배하 지주로 그의 흥망이 금융자본에 달려있었다. 넷째 일본인 대지주가 사업의 핵심이었지만, 조선인 대지주도 여기에 편승했다. 마지막으로 간척지 농장경영은 자본가가 직영하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농민이 임금노동자처럼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간척지 농장은 성립과정에서 농민의 노동력 동원의 대가로 이들에게 물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권리 때문에 소작 쟁의가 빈발했다.



캔에 갇힌 바다

: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과 해양공간의 재편

김 예 림 | 연세대학교

1. 들어가며

한국에서 통조림 제조는 1890년대 조선 연해에 진출한 일본 잠수기업자들에 의해 함경도 북관(北關) 지방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후 1900년경 일본 업자들은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조선 남해안에서 전복, 소라 등으로 통조림을 만들었다. 유럽과 일본에서 통조림이 주로 전쟁 식량이나 자국 소비를 염두에 둔 보존기술이었다면, 한국(조선)에서 통조림은 제국주의하 일본 업자들이 조선 연해에서 침탈한 수산자원을 동아시아와 서구 시장으로 수이출하기 위해 활용했던 기술이었다.

이 글은 한일병합 이후 수산물을 중심으로 확장된 일제하 통조림 산업에 주목한다. 특히 일본 및 해외 시장을 겨냥한 수산물 통조림 산업이 수산자원 침탈, 해안가 공장 남설, 과도한 어획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를 초래했음을 보이고자 한다.¹⁾ 통조림 산업은 어획과 가공뿐 아니라 캔 생산, 진공 처리, 포장 등의 공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일제하 통조림 산업의 발달은 조선 해안을 단순한 어장을 넘어 제국 및 세계 경제와 연결된 ‘어획-가공-통조림 생산-수이출’의 공간으로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은 식민지기 수산물 수이출 동향 연구와 부산의 수산가공업 연구에서 부론으로 다루어졌지만,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 전반과 그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 글은 한일병합 이후부터 1930년대 초까지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을 살피고자 한다. 이 시기는 식민지 조선에서 통조림 업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조선 해안에 통조림 공장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시기이다. 이 글은 1930년대 초까지 수산물 통조림 수이출 현황과 공장 남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조치를 살핌으로써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 ‘성장’의 이면을 보고자 한다.

1) 이 글에서 말하는 ‘수산물 통조림 산업’은 당대 표현으로는 ‘수산물환업’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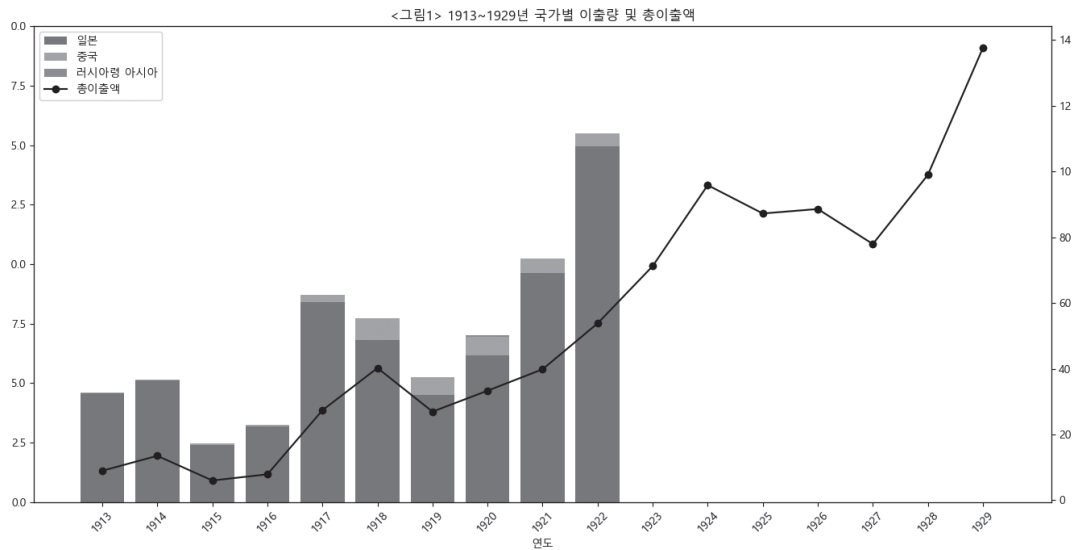
2. 1910~20년대 수산물 통조림 수이출 현황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장려와 일본인 통조림 업자들의 활발한 진출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수산물 통조림 산업은 점차 확대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 초기부터 통조림 생산을 일반에게 권장했고, 관할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수산물 통조림 산업을 장려했다. 1913년 7월에는 각 도장관에게 수산물 통조림 제조자 및 공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산과를 통해 통조림 원료 산지의 생식 상태를 조사하고 제조 시험도 실행했다.

일본 본국에 있는 업자들도 1910년대부터 조선의 수산물 통조림 산업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인 통조림 업자들은 조선에 진출하여 연안에 공장을 설립했고 어업자와 특약을 맺어 각종 수산물 통조림을 생산했다. 개인업자뿐 아니라 일본 대기업 수출식품주식회사 또한 전라남도 청산도에 고등어 통조림 제조소 설립을 계획했다. 1915년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대일본관할업자연합대회의 관계 당국이 부산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들에게 참가와 출품을 권유할 만큼 이 시기 조선의 수산물 통조림 산업은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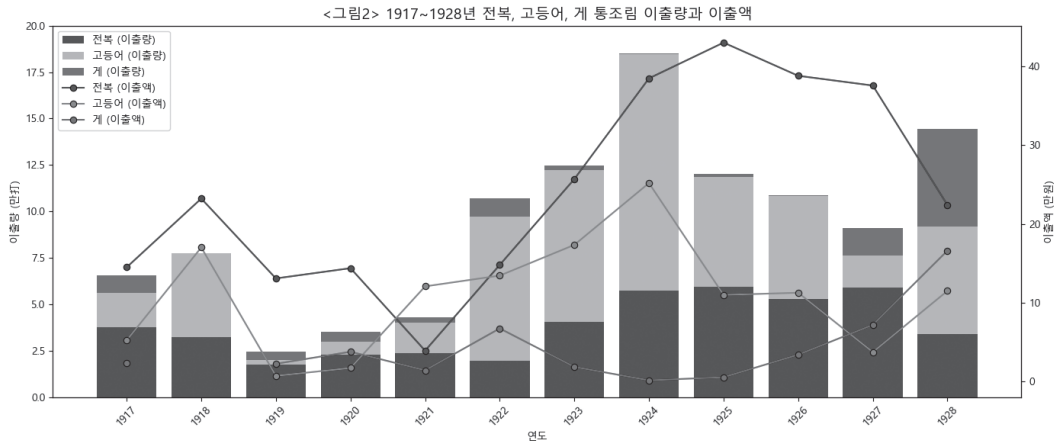
1910~20년대 조선에서 생산된 수산물 통조림은 주로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1918년 5월 공포된 「수산제품검사규칙」에 따라 이들 제품은 이출 전 세관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주로 부산항과 목포항을 통해 이출했다. 다음은 『조선무역연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1910~20년대 수산물 통조림 이출량 및 이출액 그래프이다. 1923~1929년은 이출량 수치가 없어 빈칸으로 표시했다.²⁾

2) 수산물 통조림 수이출 통계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조선무역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조선무역연보』 통계를 사용했다. 두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관련 통계는 『조선무역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후자가 이출국별 통계, 통조림 종류별 통계 등 더 자세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두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무역' 항목에 수록된 '罐詰及罐詰食物' 수치가 일반 통조림(육류, 과일류 포함)이 아닌 수산물 통조림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확인했다. 『조선무역연보』의 '罐詰及罐詰食物種類別'에 수록된 전복, 고등어, 뱀장어, 조개, 게, 복기패, 소라, 기타 품목을 합산한 총액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동일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는 1913~1926년 사이의 수이출 수량 및 가격만 확인되며, 『조선무역연보』에서는 1929년까지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두 자료 모두 1923~1929년 수이출량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1927년 이후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무역' 부문에서 '罐詰及罐詰食物' 항목은 사라졌고, 1930~1933년 『조선무역연보』에서는 계통조림, 전복통조림 등 일부 품목만 개별적으로 수록될 뿐 전체 수산물 통조림에 대한 이출량, 이출액은 수록되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 정어리통조림을 비롯하여 수산물 통조림 생산이 급증하고 1930~40년대 전쟁식량으로서 수산물 통조림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통계에서 관련 항목이 사라진 점은 여러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육류, 과일 통조림 생산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수산물 통조림 중심 통계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통조림이 군수 혹은 내수용으로 전환되면서 통조림 수이출 통계를 정책적으로 비공개하거나 혹은 무역통계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조심스러운 추정이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산물 통조림 수출액은 꾸준히 상승했고, 대체로 일본으로 수출했음을 알 수 있다. 1923~1929년 수출량 통계는 부재하지만, 수출액을 통해 수출량 역시 증가했으리라 추정된다. 1920년대에 비해 1910년대 수출량 및 수출액 증가율은 낮은데, 그 이유는 1914년 8월 일본군의 칭다오 공격과 자오저우만 조차지 봉쇄에 따른 전쟁 여파와 통조림 제작 시 필요한 철판(葉鐵) 값의 폭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1920년대에는 수산물 통조림 수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생산 측면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통조림 캔 제작 비용의 감소와 어획량 증가 그리고 통조림 공장 설립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1917년 6월 일본에서 타카사키 타츠노 스케(高崎達之助, 1885~1964)가 동양제관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본은 자체적으로 캔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10월 조선에서 통조림 캔의 제조 원료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다. 한편 1920년대 대규모 동력선을 이용한 어업이 이루어지면서 어획량이 급증했으며 1920년대 중반부터 통조림 공장 설립 또한 가속화되었다.

1910~20년대 수수출된 주요 수산물 통조림은 종류는 전복, 고등어, 게였다. 그중 전복 통조림은 동아시아 수산물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전복 통조림은 인천, 신의주를 거쳐 중국 북부로 수출되거나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등을 거쳐 중국 중부 및 남부로 수출되었다. 나가사키를 거치는 경우 주로 상해나 홍콩으로 재수출되었는데, 1916년 6월부터 1917년 12월까지 나가사키에서 검사한 전복 통조림 총 11,462상(箱) 중 9,995상이 조선산이었다. 한편 1930년대 조선에서 대량 생산되었던 정어리 통조림은 1910년대에는 많이 생산되지 않았다. 조선 동해안에 정어리 어군이 나타나고 동력선을 이용한 대규모 어업이 이루어진 것이 192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3. 1920년대 수산물 통조림 공장 남설과 해양공간의 재편

1920년대 수산물 통조림 이출량과 이출액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조선에서 수산물 통조림 산업은 빠르게 확대했다. 통조림 제조업자 또한 증가했고 이들은 ‘공동 이익 증진’과 ‘개량 발달’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했다. 1925년 3월에는 전조선의 통조림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부산에서 조선관할업자조합을 조직했으며 1930년 6월에는 털게통조림 제조업의 개량발달을 목적으로 조선蟹관할업수산조합이 설립되었다. 이 조합은 이듬해 정어리토마토통조림 제조업자를 포함한 조선관할업수산조합으로 개칭했다.

그러나 수산물 통조림 산업 확장과 함께 통조림 제조공장 수가 급증하면서 문제도 발생했다. 1927년 식산국장은 “최근 이 업종의 유리함에 착안하여 경영에 착수하는 것이 점차 증가”했다며 “3년 내 그 경향이 현저하게 되어 제조업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 결과 1930년 9월 18일 조선총독부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선수산물관할제조영업취체규칙」을 부령으로 공포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에서 수산물 통조림 공장이 ‘남설’되는 과정에서 공장 설비가 소홀했다는 점,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인지도를 잃었다는 점, 경영의 건전성이 부족하고 어장이 황폐해졌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부령에 따라 수산물 통조림 제조업자는 반드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허가받은 자라도 조선어업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 제한,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었다.

부령 발표 이후 수산물 통조림 공장 설립 추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1933년 실재한 공장 기준으로 만들어진 『日本水産物罐詰製造業要覧』에 따르면, 일본 제국 전체 수산물 통조림 공장 수와 비교했을 때 조선에 설립된 통조림 공장 수는 많은 수를 차

지하고 있었다.(<표 1>)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수산물 통조림 공장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군산 이하부터 서수라까지 해안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통조림 종류별로 보면 전복통조림 공장이 가장 많았고, 생산량으로 보면 정어리 토마토 통조림이 가장 많았다. 전복통조림 공장이 많았던 제주도는 공장주가 대체로 조선인이었지만 그 외 지역 공장주는 일본인 개인업자 혹은 회사였다. 생산량이 많았던 핵심 제조업자는 강원도 강릉군의 마루헤이 토마토사단(丸平トマトサーヂン)주식회사(대표자: 奥村平太郎), 강원도 고성군의 하야시카네 쇼텐(林兼商店)주식회사(대표자: 中部幾次郎), 경상남도 부산부의 우에다 에이사쿠(植田榮作)였다.

구분	공장수	조업공장수	제조합수
内地計	325	263	1,604,085
工船	27	9	243,640
樺太	33	19	32,863
朝鮮	99	57	116,304
臺灣	2	2	470
植民地計	134	78	149,637
露領	34	31	1,206,478
合計	520	381	3,203,840

※ 내지의 경우 현(縣)별로 자료가 있으나 내지 총합만 정리함.

조선 해안에 통조림 공장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해안 경관 역시 바뀌었다. 「조선수산물관할제조영업취체규칙」 제6조에 따라 제조공장은 원료 처리장, 수도, 배수장치, 폐기물 설비 등을 갖추어야 했고, 제1조에 따라 제조공장의 건물, 기계 기타 설비의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게통조림공장의 경우 원동기, 고열한온계, 가압살균부, 권체기, 배기장치 등을 추가로 두어야 했다. 결국 조선의 해안가에 통조림 공장이 즐비했다는 것은, 점차 해안이 통조림의 생산, 가공, 출하, 폐기를 위한 산업 공간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어촌 생태계에 미친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통조림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가 인근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고 공장 주변이 살균기, 원동기 등 각종 기계음으로 채워졌으리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수산물 통조림 산업의 확대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로도 이어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32년 경상북도 당국이 발표한 「포채취금지」 성명서와 조선총독부 경상북도령으로 공포한 「포채취금지령」이다. 전복통조림 산업이 증대되면서 경상도에서 전복 남획이 이어지자 경상북도는 2년간 포채취금지령을 내렸다. ‘통조림’ 기술이 수산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했지만, 반대로 부패하기 전에 팔아야 하는 제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수산물을 어획하도록 한 것이다. 식민지 조

선에서 그 양상은 수산자원의 변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했고, 이는 해양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4. 나가며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은 식민지배 초기부터 조선총독부의 장려 속에 빠르게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 수산물 통조림 공장은 조선 해안에 무분별하게 설립되었고, 조선의 해안은 어장뿐 아니라 수산물 통조림 수이출을 위한 산업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수산물 통조림 공장 설립의 증가는 곧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장 남설 과정에서 경비를 부당하게 절감하거나 조잡한 상품을 생산하면서 조선산 통조림은 시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어장의 황폐화 또한 초래했다.

끝으로, 일제하 수산물 통조림 산업이 식민지 조선 남성 노동력과 해양자원에 대한 착취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의 착취 위에서도 운영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가장 많은 공장을 가진 전북통조림 공장은 해녀의 노동력 위에, 조선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냈던 정어리통조림 공장은 여공의 노동력 위에 운영되었으며 수산물 통조림 생산 모두 조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어획을 기반으로 했다. 1928년 함경남도 흥원군에서 미야모토 준조(宮本潤三)가 운영하던 통조림 공장(정어리, 게 통조림 생산)의 여공들은 하루 16시간 노동에 월 30전밖에 되지 않는 임금에 분노하며 공장주를 상대로 파업했고, 1930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쿠라사와 쇼타로(倉澤松太郎)가 운영하던 게통조림공장의 여공들은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라즈 파텔(Raj Patel)과 제이슨 무어(Jason Moore)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민지 조선에서 통조림 산업의 확대는 결국 ‘저렴한’ 노동력과 자연에 대한 착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한할 것’이라고 상상되는 수산자원의 어획은 통조림의 탄생과 함께 가속화되었고, 식민지 조선에서 통조림 생산은 무분별한 어획과 노동력 착취를 통해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참고문헌

- 『通商彙纂』, 『朝鮮總督府官報』, 『朝鮮貿易要覽』,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日本水産物罐詰製造業要覽』, 『罐詰時報』, 『長崎に於ける海産貿易』, 『毎日申報』, 『釜山日報』, 『朝鮮時報』, 『京城日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 라즈 파텔, 제이슨 W. 무어, 2020,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자본세 600년』, 북돋움 최병택·이영학·류창호, 『일제의 임업 및 수산업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4.
- 김승, 「식민지시기 부산의 수산가공업과 수산가공품 현황」, 『역사와 경계』 101, 2016.
- 김승,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이출(輸移出) 동향」, 『역사와 경계』 103, 2017.
- 코노 노부카즈(香野展一), 「일제하 中部幾次郎의 林兼商店 경영과 ‘水産財閥’로의 성장」, 『동방학지』 153, 2011.

1920년대 초중반 독립운동가의 '국내' 진입 루트 : 해로를 중심으로

주 지 훈 | 경북대학교

I. 머리말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된 이래로 일본제국(이하 일제)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 각종 법률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강하게 탄압하였다.¹⁾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이후 일제는 한반도 각지에 군대를 배치하고,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시켰다.²⁾

법률로써 집회·결사·출판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반일 활동은 제한되었고, 일부 운동세력은 활동 거점을 국외로 옮겨야만 했다. 점차 상해·만주·연해주·일본 등지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다양한 세력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조류로 구분된다. 첫째,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해 거점을 마련한 경우이다.³⁾ 류인석(柳麟錫), 이상설(李相高), 김동삼(金東三), 이승희(李承熙)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1910년 이후 한반도를 떠난 한국인들이 상해로 이주해 한인 사회를 형성하였다.⁴⁾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는 전략적 이점을 지닌 상해는 대한민

1) 조형열 외, 『일제강점기 국내 민족주의·사회주의운동 탄압사』, 2022, 동북아역사재단, pp.34-38.

2) 주지훈, 「1910~20년대 경상도 독립운동세력과 임시정부의 연계망 - 임시정부 수립 전후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4, 2023, pp.83-84.

3) 박민영, 『만주·연해주 독립운동과 민족수난』, 선인, 2016 ; 장세운,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 안동유림의 남만주 이주와 이상룡·김동삼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2017 ; 박환,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 임삼조, 『한계 이승희의 민족운동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황민호,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2024.

4)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1910-1945)』, 한울아카데미, 2012 ; 김희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上海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75, 2015.

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으로 거듭났다.⁵⁾ 셋째, 1910년대 중반 이후 재일유학생이 증가하였고, 이들은 학우회 등의 친목 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저항 세력은 ‘국외’라는 공간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운동 기반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국내와 연결되고자 했다. 가령,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를 자임하며 국내와 연결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⁶⁾ 재일유학생들은 고국순회강연, 신문 기고, 잡지 출판, 활동가 파견 등을 통해 국내 활동을 펼쳤다.⁷⁾ 요컨대, 한국 독립운동에서 국외는 단순한 망명이나 외유의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공간으로서 존재하였다.

1920년대 초반 독립운동가의 국내 진입 루트를 분석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실제 실행 양상과 운동세력의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기존의 ‘밀항’ 관련 연구는 일본으로의 도항을 주로 다루었거나,⁸⁾ 1930년대 이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⁹⁾ 한편, ‘상해 → 안동현 → 신의주 → 경성’ 경로를 규명한 임시정부의 교통망·통신망 연구는 이 분야의 선구적이고도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분석 대상이 임시정부의 일부 사례에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¹⁰⁾ 더욱 총체적인 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해 당시의 실태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20년대 초반 독립운동가의 국내 진입 루트를 분석함으로써, 국외 독립운동세력이 국내와 연결된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외 소재 독립운동가의 국내 진입 루트를 판결문, 일본 관헌의 보고,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본 발표문은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요 사례 정리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혀둔다.

5) 김희곤, 앞의 논문, 2015, pp.153-154.

6)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과 운영(1919~1921)」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활동 연구(1919~1921)」,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上海-國內간 교통·통신망」 『동국사학』 69, 2020 ; 주지훈, 앞의 논문, 2023.

7) 박찬승, 「1920년대 도일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30, 2004 ; 정미량,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문화운동 - 개인과 민족, 그 융합과 분열의 경계」, 지식산업사, 2012 ; 윤소영, 「일제의 ‘요시찰’ 감시망 속의 재일한인유학생의 2·8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2018 ; 주지훈, 「해방 이전 변희룡의 생애와 사회운동」 『역사와 경계』 131, 2025.

8) 이승희, 「조선인의 일본 ‘밀항’에 대한 일제 경찰의 대응 양상」 『다문화콘텐츠연구』 13, 2012.

9) 김승, 「일제시기 조선인의 밀항 실태와 밀항선 도착지」 『역사와 경계』 124, 2022 ; 김승, 「일제시기 밀항브로커의 활동과 밀항 과정에서 문제점」 『해방도시문화교섭학』 28, 2023.

10) 유병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동교통국과 怡隆洋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 김은지, 앞의 논문, 2020, pp.289-290.

II. 중국에서의 국내 진입 루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 잡은 상해를 비롯해, 대련, 청도, 안동현 등 중국 내 항구 도시와 접경 지역은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이질적인 치안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반일 활동가들이 일제의 감시와 추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1920년대 초 중국 곳곳에 국외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국내 진입 루트는 임시정부가 운영한 교통국 제도를 통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 5월 조지 루이스 쇼(George L. Shaw)가 운영하는 이룡양행(怡隆洋行) 내에 안동교통사무국을 설립하고, 경의선을 따라 지국을 구축하였다.¹¹⁾ 상해와 안동현 간 이동은 주로 청도, 위해위, 대련을 경유하여 선박을 타거나 철도로 중국 대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안동교통사무국과 이룡양행은 활동가들의 상해행을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국내로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 거점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문상직은 임시교통사무국 서기 황대벽의 요청을 받아 임시정부 문건 20부를 서상일에게 전달하였고, 서상일은 이 문건들을 신상태와 김재열을 통해 대구, 청도, 마산 등지에 배포하였다.¹²⁾ 이는 국외 독립운동세력의 문건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유통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룡양행을 거쳐 전달된 인물과 물자는 역체식 진전법(驛替式 進傳法), 역무원 협조, 중국인 중개인 활용, 변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¹³⁾ 일제가 식민 통치를 목적으로 구축한 철도망을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활동 수단으로 역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룡양행은 임시정부의 독점적인 진입 거점이 아니었다. 1922년, 김만겸(金萬謙)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려던 김단야(김태연),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이 이룡양행에서 최준(崔浚) 등의 출영(出迎)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은 각각 신의주와 안동현에서 체포되었으나, 이룡양행이 다양한 운동세력에 의해 활용된 국내 진입의 핵심 거점이었음은 분명하다.¹⁴⁾

의열단도 이와 유사한 루트를 활용하였다. 1920년 3월, 김원봉(金元鳳)은 곽재기(郭在驥)를 통해 폭탄을 밀양으로 송부하였다. 곽재기는 상해에서 임시의정원 의원 김대지(金大池)의 집에 머물

11) 안동교통사무국은 의주, 선천, 평양, 사리원에 지국을 설치하였다(김은지, 앞의 논문, 2020, p.266).

12)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 在内地 十』 「爆彈襲撃ノ企畫セル不逞鮮人檢舉ニ關スル件」(1920.2.25.); 이육, 『멀고 먼 영광의 길 : 동암 서상일 선생 유고를 중심으로』, 동암 서상일 선생 기념사업회, 2004, pp.50-51; 주지훈, 앞의 논문, 2023, pp.91-92.

13) 김은지, 앞의 논문, 2020, pp.277-281.

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と過激派 3』 「赤化鮮人 金泰淵 外 2名 逮捕取調 概要」(1922.06.02.)

며 김원봉, 이성우(李成宇)와 함께 폭탄을 포장한 뒤, 대련을 경유하여 안동현으로 갔다. 그가 안동현에서 원동상회의 이병철(李柄喆)에게 폭탄을 인계하였고, 폭탄은 의신공사를 통해 밀양의 김병환(金炳煥)¹⁵⁾에게 전달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이성우가 상해에서 구입한 폭탄 13개와 권총 2정을 진영으로 반입하였다.¹⁶⁾ 그는 이릉양행의 기선 계림환(桂林丸)을 이용하여 안동현에 도착한 후, 이병철에게 폭탄과 권총을 인계하였다. 이병철은 이를 부산진역 인근의 김명국 운송점을 통해 이주현(李周賢)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물자는 진영의 미국상 강원석을 거쳐 배중세에게 전달되었다.¹⁷⁾

다음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가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 총리에게 보고한 「밀도항자의 경로에 관한 건」에서 상해-국내 간 밀항 루트가 확인된다. 이는 상해에서 연태와 위해위를 거친 뒤, ① 이도(裡島)와 진남포를 통해 황해도로 진입하는 경로, ② 이도에서 초도(椒島),¹⁸⁾ 진남포를 거쳐 황해도로 들어오는 경로, ③ 초도에서 황해도로 바로 진입하는 경로로써 해로를 활용한 것이다.¹⁹⁾ 이와 관련하여 상해-국내 간 문서 밀수와 요인 밀항을 담당한 임시정부 교통부 참사 윤응념(尹應念)의 사례가 주목된다. 그가 활동을 위해 어선을 구입한 사실은 서해 도서와 중국 간의 밀항이 시도되었음을 시사한다.²⁰⁾

나석주(羅錫疇)도 해로를 통해 국내에 잠입하였다. 그는 1926년 7월 21일, 천진에서 김창숙과 한봉근을 만나 지원받은 뒤, 국내 진입을 위해 위해위로 이동하였다. 나석주는 12월 25일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이통호(利通號)에 중국인 노동자로 위장해 승선하여 인천에 도착하였고, 28일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사와 조선식산은행을 대상으로 폭탄을 투척하였다.²¹⁾ 경무국 고등경찰과의 보고와 더불어 나석주가 상해를 떠난 뒤부터 김창숙을 만나기 전까지 북경, 천진, 연태, 위해위를 전전하면서 배편을 수소문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²²⁾ 안동현과 위해위, 연태가 국내 진입 루트의 주요 교점(node)이었음이 확인된다.

15) 『고등경찰요사』에는 김병환(金炳煥)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곽재기 외 14인 판결문」(1921.06.21.)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밀양청년단장인 김병환이다.

16) 류시중 외,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p.191.

17) 류시중 외, 앞의 책, 2010, pp.363-365. : 『매일신보』 「탐정 - 밀양폭탄의 거처」(1920.10.15.)

18) 원문에는 숙도(淑島)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윤응념 외 8명의 판결문」(1923.09.25.)에서 활동지가 진남포부 및 황해도 송화군으로 기재된 것을 고려할 때, 송화군에 속하는 초도(椒島)의 오키로 보인다.

19)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密渡航者の 經路에 관한 件」(1921.08.20.)

2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1』 「121. 上海임시정부 부원의 꿈같은 계획 9명의 강도단 어선에 올라타 군자금 모집에 활동」(한국사데이터베이스), 특히 윤응념이 인천에서 체포될 당시 권총, 탄환, ‘불온문서’ 등이 함께 발견된 사실에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김성민, 「나석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51, 2019, pp.346-349.

22) 김성민, 앞의 논문, pp.340-346.

국내 진입에는 조력자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잘 알려진 조지 루이스 쇼, 최준 외에도 이룡양행과 관계된 이병철은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의 여행증명을 받는 일과 숙박을 알선하는 것을 담당”하면서 “상해와 조선 사이의 연락 교통 주임”으로 활동하였다.²³⁾ 또한, 한봉근은 1923년과 1925년에 폭탄과 무기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김창숙과 함께 국내 유림·부호가 모금한 돈을 활용해 폭탄과 권총 등을 확보한 뒤, 나석주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였다.²⁴⁾ 이는 국내 진입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함과 동시에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Ⅲ. 일본에서의 ‘국내’ 진입 루트

한일 강제 병합을 전후해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교통편이 증가하였다. 이는 식민 지배를 원활히 하고 일본인의 조선 진출을 장려하는 조치였지만, 개설된 항로를 통해 도일한 유학생과 노동자의 수도 함께 늘어갔다. 『일본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재일조선인 수는 1911년 2,527명, 1915년 3,917명, 1919년 26,605명, 1924년 118,152명, 1929년 275,2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한다.²⁵⁾ 일제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값싼 미곡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던 반면,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 일본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유학지였다.

1919년 초, 일본 내에서도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재일유학생들은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에 기대를 걸고 2·8독립선언을 단행하였다. 이후 신문기자로 활동하던 연상섭은 변희용과 ‘동포’, ‘민중’ 중심의 운동 방향을 협의한 뒤, 3월 19일 오사카 덴노지 공원에서 ‘재오사카한국노동자일동’ 명의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²⁶⁾ 이후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 학우회)는 1920년부터 고국순회강연을 개최하였다. 학우회가 주도하고 식민지 조선의 언론, 사회·청년·종교 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고국순회강연은 식민지 조선의 활동가와 재일유학생 간의 연결점이었다.²⁷⁾ 이들 사례는 유학생이 지식인으

23) 「곽재기 외 14인 판결문」(1921.06.21.)

24) 『독립운동인명사전』, 『한봉근』(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조선일보』 「폭탄가진 청년이 상해에서 경성으로 왔다」 풍설(1925.08.29.); 『동아일보』 「무사를 양성코자 만몽에 식민계획 - 김창숙사건속보」(1928.08.09.)

25) 『일본제국통계연감』, 강영심 외, 『신편 한국사 47 -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2, p.266에서 재인용.

26) 주지훈, 앞의 논문, 2025, pp.216-217.

27) 동아일보사, 조선경제회, 조선교육회, 조선노동공제회, 중앙기독교청년회, 청년회연합기성회, 천도교청년회, 엠윗청년회, 조선불교회, 불교청년회 등 관여 단체의 목록은 『동아일보』 「학우회강연단 석별의 환영회」(1920.07.20.); 주지훈, 앞의 논문, 2025, pp.219-220.

로서 독립운동세력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구실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강연단의 이동은 당시 일제에 의해 개설된 선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분이 분명한 인물들이라도 한일 간의 이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했다. 더욱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독립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밀수하는 경우, 당국의 추적을 받거나 경계가 삼엄해진 경우에는 위장, 밀항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마리아는 2·8독립선언 이후 일제의 경계가 삼엄해진 상황에서, 미농지에 독립선언서를 필사한 후 기모노의 오비[帶] 속에 은닉하여 부산 진입에 성공하였다. 이후 그는 신한청년당에서 파견된 고모부 서병호(徐丙浩)와 접촉하였다.²⁸⁾ 도쿄에 재류하던 김마리아는 도카이도선(東海道線)과 산요선(山陽線)을 거쳐,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입항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모노세키 → 부산 루트는 보편적으로 활용된 방식이었다. 임시정부 내무부 서기 정해면(鄭海冕)은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1920년 5월 1일 부산에 도착하였으나, 초량동 대동여관에서 부산수상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²⁹⁾ 1922년 3월, 황덕환(黃德煥)은 이시영의 지시를 받고 상해에서 나가사키와 시모노세키를 거쳐 부산에 도착한 뒤, 군자금 모집하던 중 피체되었다.³⁰⁾ 시모노세키 경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나가사키에서 이즈하라[이즈하라]를 거쳐 부산에 진입한 사례도 확인된다.³¹⁾ 이 루트를 활용해 국내에 잠입한 박재혁(朴載赫)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러나 활동가의 국내 진입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입 도중 발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임시정부로부터 경상북도 안동군 공채모집위원으로 선임된 류창우는 일본인 복장을 하고 국내에 잠입하던 중 나가사키에서 수상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³²⁾ 양근환(梁槿煥)은 1921년 2월 17일 민원식을 암살한 뒤 박순천에게 돈을 받아 일본인 목수로 위장하고 요코하마로 이동하였다. 이후 천진행 북령환(北嶺丸)을 타고 나가사키로 이동하였고, 이어 상해행 팔번환(八幡丸)에 승선한 상황에서 나가사키 수상경찰에 발각되었다.³³⁾

28) 「2019년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마리아」(공훈전자자료관) ; 김두천 외, 『경남의 독립운동, 그 현장과 운동가들』, 선인, 2016, pp.106-107.

29) 『동아일보』 「정해면은 = 과연 가정부원」(1920.05.10.). 그런데 『매일신보』 「가정부원피체」(1920.05.06.)에서는 1일에 입항한 임시정부원 최변완과 최상필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임시정부 자료에서 이들의 인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해면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매일신보』에서 묘사되는 최상필의 이력(전라남도 출신, 도쿄 유학, 세이쇼쿠 영어학교 수학)과 정해면의 이력이 유사하므로, 정해면이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30) 『동아일보』 「상해에서 내(來)한 황덕환」(1922.04.01.)

31) 김영범, 『의열투쟁 I - 1920년대』, 200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p.152.

32) 『매일신보』 「상해가정부 재무총장의 명으로 공채 이만원 은닉을 하고」(1920.11.07.) ; 「류창우 판결문」(1920.12.23.)

33) 윤소영, 「양근환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1, 2019, pp.195-197. ; 다만 양근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해면, 류창우, 양근환은 활동 및 이동 과정에서 수상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 지점에서 수상경찰서의 존재가 특히 주목된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시모노세키·모지[門司]·고베 등지의 수상경찰서 - 연락선 - 부산수상경찰서 - 조선 각지의 경찰서라는 조직망 속에서 감시”하였다.³⁴⁾ 수상경찰서가 독립운동가의 이동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가령, 1924년 의열단원이 일본에 잠입했다는 첩보가 접수되자, 나가사키와 모지 각 수상경찰서에서 경계를 강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³⁵⁾ 이상의 사례를 통해 시모노세키, 모지, 고베, 나가사키가 국내 진입을 위한 주요 경유지였음이 확인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1920년대 초중반 국외 독립운동세력이 국내 진입을 위해 활용한 주요 루트를 분석하였다. 임시정부 요원, 의열단원, 사회주의 운동가, 재일유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동현, 위해위, 연태, 시모노세키, 모지, 고베, 나가사키, 이즈하라 등이 국내 진입 루트에서 주요한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해 구축한 교통망을 역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독립운동가의 국내 진입은 단순한 귀환을 넘어,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회피하면서 국내 사회와 실질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다. 이 과정에서는 밀항, 위장 신분 활용, 변장, 조력자들의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었다. 국내 진입 시도가 점차 어려워지고 밀항이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일제의 감시와 추적이 점점 더 강력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국내 진입 루트는 일제의 통제망과 긴장 관계를 이루며 ‘역(逆)전유’된 정치적 공간으로 존재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루트 복원, 독립운동세력 내부 네트워크 분석, 수상경찰서 등 일제의 대응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독립운동의 실행 기반을 해명하고자 한다.

34) 김운환, 「근대 해항도시 부산의 수상경찰서와 활동 -제국일본의 지배구조와 해항도시의 교섭-」 『해항도시문화교섭학』 32, 2024c, p.83. 한반도에서 최초로 설립되고, 유일하게 존재했던 부산수상경찰서에 대한 내용은 김운환, 「근대 해항도시 부산의 부산수상경찰서 설치 - 제국일본의 지배구조와 해항도시의 교섭 -」 『동북아문화연구』 80, 2024a. ; 「근대 해항도시 부산의 수상경찰서와 조직 구조 - 제국일본의 지배구조와 해항도시의 교섭 -」 『일본문화연구』 92, 2024b를 참고할 것. 다만, 구체적인 도항 사례 및 부산수상경찰서의 초기 활동은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35) 『동아일보』 「의열단원이 일본에」(1924.06.10.)

조선운송주식회사의 경영과 미곡운송

김민화 | 민주공원

소운송업은 ‘철도, 궤도 혹은 자동차운수사업이 행하는 물품운송 또는 이들의 운송기관과 통운송을 하는 운송기관에 의한 통물품 운송의 운송취급업, 또는 운송대변업을 말하며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운수사업에 부수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영위하는 육상의 물품운송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

구체적으로 말하면 운송이란 철도, 선박, 하마차, 하차, 자동차 등 모든 운반구 및 동물력, 인력 등에 의해 하송인의 호구로부터 하수인의 호구에까지 이르는 모든 화물의 이동을 말한다. 이러한 운송을 크게 구별하여 대운송과 소운송이라고 한다. 대운송은 철도, 기선에 의한 운송을 가리키고, 기타 하송인의 호구로부터 철도 또는 선박까지, 철도 또는 선박으로부터 하수인의 호구까지의 일체 운송을 소운송이라 한다.²⁾

연도	정책	내용
1908	철도화물운송취급인승인및화물운임할려수속속 (鐵道貨物運送取扱人承認扱貨物運賃割戻手續)	소운송업자에게 철도에 일정한 보증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 신원을 보증하고 영업을 승인하여 부정업자의 자연도태를 바라는 동시에 자력, 신용 있는 자에게는 할려금(割戻金)을 지불함
1914	승인화물취급인수속순서 (承認貨物取扱人手續順序)	소운송업 승인신청 시 일본인은 시·정·촌·장(市町村長)에게, 조선인은 부윤 또는 군수에게 신원증명서, 회사나 조합조직의 定款 또는 등본과 역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함

1) 朝鮮總督府鐵道局 編, 『朝鮮小運送業及關係令規集』, 朝鮮總督府鐵道局, 1940, 2쪽.

2) 鳥栖忠安, 『小運送の研究』, 조선철도협회, 1926, 5쪽.

연도	정책	내용
1929	조선국유철도지정운송취급인규칙 (朝鮮國有鐵道指定運送取扱人規則)	소운송업을 행할 자를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선정함
1940	조선소운송업령(朝鮮小運送業令)	소운송업을 자유업에서 면허제로 하고 요금과 취급 조건을 인가제로 하며 기타 행정상의 생명, 감독, 단속 등을 규정함
	육운통제령시행규칙(陸運統制令施行規則)	전시에 중요한 물자를 우선 수송하기 위해 운송 순서 지정

조선에서 해운·철도 등이 확장됨에 따라 소운송업자도 대폭 증가했다. 1926년도 국철·사철 연선의 소운송업자는 1,566개였는데 조선인 1,080점(69%), 일본인 486점(31%)이었다.³⁾ 조선총독부는 소운송업 통제의 일환으로 승인운송점 제도를 1929년 10월까지 유지했다. 이를 더욱 강화해 1929년 11월부터 지정운송점 제도를 도입했다. 조선인 운송업자는 선운동우회(鮮運同友會) 등을 결성해 일본인 위주의 통합·통제에 저항했다.

당시 운송합동파의 3축은 국제통운주식회사, 국제운수주식회사, 일본인 중립 업자였다. 국제통운은 조선에서 쌓아올린 업적을 바탕으로 합동회사의 우월권을 주장하는 반면 국제운수는 모회사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과 만주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노렸다. 그 사이에서 일본인 중립 업자들은 경제적 권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비합동파의 반대운동이 거세졌다. 비합동파측에서는 철도국을 비난하여 운송합동반대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국제통운 또한 주요역의 다수업자가 반대하는 한 합동회사의 장래가 불안하다고 하며 운송합동위원총회에서 사퇴하였다.⁵⁾ 당시 국제통운 사장은 중역회에서 말하기를 ‘현재 통운은 한국의 육운에서 연 10만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운합이 성립되면 3, 4만 원밖에 오르지 않으니 운합에 참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에서 조선 소운송계를 모두 장악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3) 鳥栖忠安, 『小運送の研究』, 조선철도협회, 1926, 154~155쪽.

4) 朝鮮運送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十年史』, 1940, 218쪽.

5) 『동아일보』, 1929. 04. 28. 「風雲難測인 運合問題 運合總會依然紛糾中에 收穫」; 「運合委員總會 質疑가 百出」; 1929. 05. 01. 「通運, 中立業者 反對로 運合缺裂」

6) 加藤三次郎, 『朝鮮運送合同史』, 1930, 49~51쪽.

구분	세력
합동파	국제운수주식회사, 선운동우회, 합동파 일본인 중립업자
비합동파	국제통운주식회사, 비선운동우회 조선인 업자, 비합동파 일본인 중립업자

1929년 5월 29일 비합동파와 국제통운은 조선운송동맹회(朝鮮運送同盟會)를 조직하고 운송 합동에 반대하였다.⁷⁾ 그렇지만 운송합동은 철도국의 적극적인 원조와 환운(丸運)의 지원에 힘입어 1930년 3월 28일 운송합동 제2회 발기인총회를 열고, 자본금 300만 원의 조선운송주식회사(朝鮮運送株式會社)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⁸⁾ 조선운송주식회사(이하 조운)는 1930년 4월 1일 창립총회를 열고 자본금 100만 원, 총주식 2만 주의 규모로 설립되었다. 초대 사장(대표이사)은 다케시마 신타로(竹島振太郎)⁹⁾, 전무이사는 가와이 지사부로(河合治三郎)이며, 이외 이사 9명, 감사역 3명, 상담역 8명을 두었다.¹⁰⁾ 창립 당시 임원은 여기서 13명으로 줄어들었다.¹¹⁾ 이들은 주로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상선회사, 선박운송업 등 운송업에 종사한 인물들이며, 창립 이후에도 각 지역에 운송 조합장, 지점장, 철도국 직원 등 운송업에 종사했다. 회사의 본점은 경성에 두고, 주요 도시 지점 12개, 출장소 18개, 직할영업소 14개와 대행영업소를 설치하였다.¹²⁾ 1930년 4월 24일 기준 조운은 전체 소운송점 921점 중 소운송업자는 698점을 통합했다(조선인 436점, 일본인 262점).¹³⁾

7) 加藤三次郎, 『朝鮮運送合同史』, 1930, 81~82쪽; 『조선일보』, 1929. 10. 10. 「운합에 대항코자 비합파 신회사 설립계획」.

8) 加藤三次郎, 『朝鮮運送合同史』, 1930, 222~223쪽; 朝鮮運送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十年史』, 1940, 280쪽; 『朝鮮新聞』 1929. 03. 23. 「運合發起總會」; 『중외일보』, 1930. 03. 29. 「滿場一致로써 運合邁進을 決議」.

9) 사장을 선임하지 않아 곤란을 겪던 조선운송주식회사는 1932년 1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취체역(사장)으로 다케시마 신타로(竹島振太郎)를 선임했다(『朝鮮新聞』, 1931. 08. 02. 「朝鮮運送反目で店長人選行惱, 合議制の弱點曝露, 社長選任切要」; 1931. 08. 27. 「朝鮮社長人選急務, 重役の意見不一致仁川支店容易に解決せぬ」; 1931. 12. 18. 「朝鮮社長竹島氏決定」; 『京城日報』, 1931. 08. 27. 「社長を至急要する朝鮮, 合議制の不安」; 『매일신보』, 1931. 06. 24. 「朝鮮社長問題 保留된事情」; 1932. 01. 05. 「朝鮮新社長選任」).

10) 加藤三次郎, 『朝鮮運送合同史』, 1930, 229~230쪽; 『경성일보』, 1930. 04. 02. 「朝鮮創立總會役員決定; 事務は河合氏」.

11) 朝鮮運送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十年史』, 1940, 347쪽. 창립 당시 경영진은 전무이사 河合治三郎, 이사 本岡卯之吉, 太田忍, 永井寛龍, 房宗銘五郎, 白垣善四郎, 明道爽, 星野榮五郎, 金冕周, 姜昌熙, 감사역 大澤藤十郎, 立石幹, 朴南允으로 이중 일본인이 9명, 조선인이 4명.

12) 대한통운 사사편찬위원회, 『대한통운사사』, 대한통운주식회사, 1974, 129쪽; 조선운송주식회사, 「정관」, 『조선운송주식회사 영업보고서』(출처: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JP010_04_01C0058); 『조선일보』, 1930. 05. 17. 「조선운송회사(朝鮮運送會社) 본지점 영업 개시(本支店營業開始)」.

13) 朝鮮運送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十年史』, 1940, 290~292쪽.

지점	부산, 마산, 대구, 인천, 경성, 평양, 신의주, 군산, 광주, 원산, 함흥, 청진
출장소	김천, 대전, 조치원, 천안, 수원, 용산, 개성, 사리원, 진남포, 신안주, 이리, 전주, 송정리, 목포, 철원, 성진, 회령
직할영업소	초량, 부산진, 구마산, 상인천, 서빙고, 왕십리, 청량리, 서평양, 신창, 갈마, 상삼봉, 종성, 동관진, 안동
대행영업소	위 지역 외의 조선 국유철도선 각 역

자료 : 朝鮮運送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十年史』, 1940, 293쪽.

4년간 합동·비합동의 갈등 속에서 설립된 조운은 1930년 5월 12일 자본금을 220만 원으로 늘리고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소운송의 대행권을 부여받았다.¹⁴⁾ 철도국은 운송합동이 달성되자 조운을 지정운송취급인으로 지정하고, 화물취급과 운임계산 면에서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철도국은 조운에 철도화물의 적재·하역·소구취급의 운반·집배를 청구하고 취급 요금의 5%를 돌려줬다.¹⁵⁾

그러나 아직 200여 점의 비합동과 운송점이 영업 중이었으며, 그 맹주에 국제통운이 있었으므로 합동파·비합동파의 대립은 무리한 경쟁을 부추겼다. 때마침 불어 닥친 경제공황은 소운송업의 채산성을 더 악화시켰고 일본정부의 통합 요구에 1931년 5월 12일 조운·국제통운·국제운수·조선총독부 철도국·조선은행 대표는 연서로 운송합동각서를 작성했다.¹⁶⁾

조운의 운송업무를 보면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화물자동차 운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은 1930년 이후 일본의 대륙진출에 맞춰 증대했으며 육운 취급량 증대를 보면 1931년에는 6,372,627톤이었으나, 1938년에는 15,273,987톤으로 그 증가율은 2.5배에 이르렀다. 조운은 해상 운송량이 팽창함에 따라 1934년 10월에 해운과를 신설하고 해운점을 확장했으며¹⁷⁾ 항공 수송을 위해서 1932년 4월 1일에 일본항공수송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항공여객, 화물취급에 관한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영업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밖에 조선운송주식회사는 창고영업, 대변보증행위, 위탁판매업 등 부대영업도 크게 확장되었다.¹⁸⁾ 또한 조운은 철도국이 조선미(朝鮮米) 수송에 대한 철도운수의 장악력을 높이려는데 발맞춰 조운, 철도국, 일본의 성선(省線)과 연계하고 미국의 책임출하제(出荷制)를 통한 철도 유치책에 동

14) 『동아일보』, 1929. 05. 01. 「鐵道局 結局直營?」; 1930. 04. 05. 「朝鮮運送 三百萬圓增資」; 『조선일보』 1929. 05. 01. 「運合缺裂과 後聞 運合缺裂狀態와 鮮運同友會對策」; 1930. 05. 20. 「問題의 代行權을 運合에 附與乎」.

15) 朝鮮運送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十年史』, 1940, 301~303쪽.

16) 위의 책, 327~336쪽.

17) 조운의 해운관계는 국제통운주식회사 지점으로 운영(『동아일보』, 1931. 06. 26. 「合同後職制와 社員配置」) 국제통운의 조선 내 개항지 해운 양도 문제는 다케시마(竹島) 조운 사장과 나카노(中野) 통운사장이 절충 중(『조선일보』, 1934. 01. 14. 國際通運의 支配權確立).

18) 대한통운 사사면찬위원회, 『대한통운사사』, 대한통운주식회사, 1974, 134~135쪽.

참했다.¹⁹⁾ 경제호황과 철도망 확장으로 소운송업은 활기를 띠었고, 1934년 '북선철도'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이하 만철) 위탁 경영을 계기로 해륙소운송 일관 취급상 국제통운의 조선 내 해운업무를 전면적으로 양도 계승하였다. 이에 자본금을 400만 원으로 증자하고 1934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조운은 비합동 운송업자를 제외하고는 조선의 해륙소운송업을 어느 정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조운의 사업이 궤도에 오른 시점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 이하 미창)의 해운 진출, 즉 조선미창이 해항지(海港地)에서의 회조업(回漕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자 조운의 해운 관계 사업과 충돌을 초래했다. 조운은 자본력 결핍으로 해운 관계 사업에 소극적이었지만 조선미창은 풍부한 자본력과 독점적인 창고업을 배경으로 적극 활동에 나섰다.²⁰⁾ 조선미창은 미곡저장 이외의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1934년 말 보세창고(保稅倉庫)를 건설하여 본격적으로 쌀 이외 품목의 저장비율을 늘려 갔다. 1935년에는 각 지점에 운송부를 설치하고 조선미창에 입출고되는 화물의 운송 및 하역을 직접 취급하기 시작했다.

조선미창의 이러한 사업 다각화는 운송업자와 창고업자의 반발을 샀다. 조운과 비합동운송 측은 조선미창이 보조금을 받아 쌀 이출 조절을 하는 회사인데 불구하고 미곡 수송을 직영하는 것과 일반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그 창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²¹⁾ 대부분의 화물이 미곡이었기 때문에 이를 조선미창이 직접 취급하면 운송업 자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조운은 조선미창 중역진과 교섭을 시도했다. 비합동운송 측 운송업자들도 이미 조운의 출현으로 영업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조선미창까지 운송을 직영하면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고 반발했다.²²⁾

그러나 조선미창은 이러한 비난 여론을 일축했다. 설립 당시부터 정관에 '일반화물의 보관'과 '운송' 등 미곡보관 이상으로 영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이미 조선미창의 설립 준비 단계에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와의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영업범위에 관한 이 정관규정은 적은 규모의 자본금으로 시작해야 했던 데 대한 반대급부이기도 했다. 실제로 비난 여론이 일 때마다 조선미창은 '정관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며 대응했다. 오히려 일반영업창고가 점차 소멸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조선미창이 미곡 이외의 상품을 보관하는 것은 '의무'라는 입장까지 보였다.²³⁾

19) 『조선일보』, 1936. 11. 21. 「鐵道局이 朝運과 提携 米集荷誘致策」.

20) 『동아일보』, 1938. 12. 16. 「海運界를 中心으로 米倉朝運이 摩擦」.

21) 『매일신보』, 1934. 12. 23. 「米倉의 保稅倉庫 倉庫業者가 反對」.

22) 『매일신보』, 1935. 03. 20. 「米倉運送直營으로 業者間에 大衝動」; 「朝鮮人側業者 아즉 靜觀; 影響은 朝運이 緊切」.

23) 『매일신보』, 1934. 12. 27. 「米倉會社 保稅倉庫 反對는 不可」.

1930년대 어선보험과 수난어선구제사업

류 창 호 | 인하대학교

1. 문제의 제기

식민지기 조선의 수산업은 근대적 어업제도의 도입, 선진 어업 장비와 기술의 확산 등에 따라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수산업 통계가 처음 시행된 1911년과 1941년의 생산고를 비교해 볼 때, 수산업 총생산량에서는 17.5배, 생산금액에서는 38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1930년대 당시 세계 제1위의 수산 강국으로 발돋움한 식민 본국 일본의 수산업 증가율마저 뛰어 넘는 것이어서 조선총독부의 당국자들을 흥분시킬 정도였다.¹⁾

그러나 이러한 조선 수산업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식민지 구조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의 수산업은 총생산액의 3분의 1 가량이 일본과 만주 등으로 수출되는 과대소비의 경향을 갖고 있었으며, 동력선 보급률이 일본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과소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다.²⁾ 아울러 어선이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하역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어업근거지[漁港]에는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방파제, 호안, 물양장, 선착장 등)마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식민지 수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 때마다 어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선에서의 어선 조난사고는 일본의 5배에 달하였다고 한다.³⁾

해상에서의 어선 조난사고가 빈발하자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과 일본 모두 어선보험

1) 朝鮮總督府 水産局, 『朝鮮の水産業(昭和十三年)』, 1939년 3월, 3쪽.

2) 최병택·이영학·류창호, 『일제의 입업 및 수산업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4. 312~319쪽.

3) 『조선일보』 1936년 10월 27일 8면, 産調答申案内容

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어선의 동력화가 진전되고 어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어선 및 어업 활동에 따른 위험 발생도 증가되었고 동시에 그 위험의 종류도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어선보험은 그 자체로서 어업자들에게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각종 해상위험의 회피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유일한 재산인 어선의 물질적 담보 가치를 확인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1929년 1월, 「조선어업령」(제령 제1호) 반포 당시 “어업권은 물권으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5조)는 규정으로 어업자에게 처음으로 자유로운 재산권이 보장되었다. 그렇지만 당시에 물권으로 인정받은 것은 어선이 아닌 ‘어업권’이었고, 또 여기에는 질권의 설정조차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어선보험이 도입되어야만 어선의 보험가격이 산정되고, 또 이것이 담보물이 되어 금융권으로부터의 융자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일 양 지역 어업자들의 (국영)어선보험 도입 요구는 1930년대 초 치열한 논란 끝에 1937년 일본에서의 「어선보험법」(법률 제23호) 공포와 1938년 조선에서의 ‘수난어선구제사업(水難漁船救濟事業)’ 실시로 귀결되었다. 일본에서는 「어선보험법」을 비롯한 각종 예규·칙령(시행령)·省令(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으로 보장된 정식의 어선보험이 실시된 반면, 조선에서는 조선수산회와 각도 수산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으로 한정된 것이다.⁴⁾ 이 글에서는 어선보험의 도입이 이처럼 두 지역에서 차별화된 원인을 찾아보고, 또 그 시행 이후에 나타난 여러 결과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어선보험제도의 도입 요구

일본에서 해상보험이 시작된 것은 1878년 도쿄해상보험회사의 창설로부터이다. 이후 1899년 상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업 규정이 마련되고, 이듬해에는 「보험업법」이 공포되면서 10여개 회사에서 일반보험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어선보험을 취급한 곳은 1908년에 창설된 제국기범선해상보험회사(帝國機帆船海上保險會社)이다.⁵⁾ 이후 1920년대까지 16개의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어선보험을 취급했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1926년 도쿄해상보험회사가 처음으로 미쓰이물

4) 어선보험(해상보험)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회원 주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아울러 ‘共濟’는 同職者 상호 간의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다수의 경제단위가 단체적으로 결합하여 거출금을 분담하고 그 단체원이 화재,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손해를 구제하는 급부제도이다(차철균·박용섭, 「수협공제의 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5-2, 1993, 98쪽).

5) 동사는 1910년 東洋海上保險會社로 개명하였고, 이후 東明·福壽·豊國火災와 합병한 후, 현재의 日新火災海上保險會社가 되었다.

산 경성지점 보험부를 통해 5톤(50석) 이상의 어선에 대해 보험을 인수하였다고 한다.⁶⁾

이들 보험회사는 대부분 상선(商船) 위주의 보험업을 취급하는 곳이었어서 어선어업에는 맞지 않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력이 약한 어업자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어선의 동력화가 진전되고, 또 어업생산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어선보험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다. 어업 경영의 안정과 어업금융의 보증수단으로 보험업이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어선어업자들은 일반해상보험회사가 아닌 국영어선보험제도의 확립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⁷⁾

일본의 각종 수산단체로부터 국영어선보험제도의 건의와 진정을 받은 농림성은 1931년 말부터 그 조사에 들어가 제국의회에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하였다. 아울러 1933년 「농어업재해보험법안」·「농어업재해보험특별회계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1934년에는 「어선보험법안」까지 제출되었으나 모두 귀족원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농림성의 계속된 설득 노력에 의해 1936년 「어선보험실시계획요강」이 작성되었고, 제2차 「어선보험법안」과 「어선재해보험특별회계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이듬해인 1937년에는 귀족원·중의원 양원의 의결로서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근 6년간에 걸친 일본의 「어선보험법」 성안 과정은 식민지 조선의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었다. 각종 언론매체들은 일본의 「어선보험법」 성안 과정을 빠짐없이 보도할 뿐만 아니라, 신문사설란 등을 통해 조선에서의 즉각적인 어선보험제도 실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현재의 어촌 경제의 파폐가 대자본가에 의한 가혹한 계약 조건과 고리대금의 피해에서 발생된다고 하며 어선보험제도야말로 어촌 구제의 제1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⁸⁾

이에 조선총독부 식산국 수산과에서는 어선보험제에 대한 적극적 조사에 나섰고, 산업조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시설의 설계를 제안하였다.⁹⁾ 조선수산회에서는 1935년 8월에 이미 조난어선을 위한 호조보험(互助保險)을 입안하여 당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수산회 본부가 2천원, 지부가 3천원씩 출자하고 나머지를 업자가 출자하여 1936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¹⁰⁾ 일부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조선수산회의 어선보험 실시 계획은 중도에서 중단되기는 했지만 대세적인 측면에서 어선보험 도입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일부 도청에서는 어업보험

6) 『京城日報』 1926년 12월 2일 4면, 漁船保險取扱, 三井物産で

7) 漁船保險中央會, 『漁船損害補償制度史』 권1, 34~35쪽.

8) 『동아일보』 1934년 2월 18일 4면, 어선보험제를 실시하라

9) 『동아일보』 1936년 6월 11일 8면, 遭難甚多로 因하여 漁船保險制 實現

10) 『조선일보』 1935년 8월 4일, 遭難漁船爲하야 互助保險을 創設

의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기도 하였다.¹¹⁾ 아울러 일부 어업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선보험을 실시한 사례까지 나타났다. 즉, 나로도어업조합이 1935년 3월 26일 조합총대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어선 및 어업자 상호보험의 건’을 가결한 후, 동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¹²⁾ 당시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조선 최초의 어업자 상호보험이 되는 것이었다. 보험사고는 어업 중 조난에 의한 어선 유실과 승조원 사망인 경우만 해당했고, 보험기간은 1년이었다. 보험료는 연승(延繩)어선 1원, ‘양코’선(안강망 어선으로 추정)은 1원 50전이며, 보험금은 각각 25원과 35원씩 지급되게 하였다. 승조원 사망에 대한 생명보험은 1인당 10전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1937년 일본에서 「어선보험법」이 공포된 이후부터는 조선총독부 식산국과 조선수산회, 어업조합연합회 등 각종 수산단체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다. 어선보험이 순연한 손해보험인 점에서 「가축보험법」에 근거한 농어업재해보험과 다르고, 또 소위 해상보험의 일종이라고 해도 항해 중 생기는 손해뿐 아니라 육상에서 어선을 끌어올리는 중에 생긴 사고의 손해도 전보(填補)해야 하는 점, 화물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 특수한 요소가 있었다. 따라서 강제보험으로 어선보험을 실행할 경우, 기존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소위 ‘해공선(蟹工船)’의 모선이나 포경 모선과 같은 대형 어선에도 어선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행방불명과 같이 전손(全損)의 피해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 적용하는 위부(委付)의 절차상 번거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다.¹³⁾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수산 당국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의 조선 수산업의 상황에서 일본과 동일한 어선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일본의 「어선보험법」은 어선 소유자가 조직하는 어선보험조합에서 상호보험을 취급하여 조합이 보험을 인수하면 곧바로 정부와 조합이 재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었다. 재보험을 통해 정부가 보험기금을 보증하는 것이어서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요율이 높아 영세한 조선의 어업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일본과 똑같은 어선보험제도의 도입을 포기하고 1938년부터 조선수산회의 ‘공제(共濟)사업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아울러 사업 명칭은 ‘수난어선구제사업(水難漁船救濟事業)’으로 확정하였다.

11) 『朝鮮新聞』 1933년 8월 9일 3면, 平安南道, 漁船保險と副業課設置, 漁村の更生策として

12) 『조선일보』 1935년 4월 3일 6면, 全朝鮮 初有의 漁業者相互保險

13) 『朝鮮時報』 1937년 3월 10일 1면, 漁船保險法案

3. 수난어선구제사업의 실시

1938년 3월 29~30일 양일간에 걸쳐 수난어선구제사업 실시에 따른 세목(細目) 타합회(打合會)가 조선수산회 본부에서 개최되면서 조선수산회 회칙 개정 및 수난어선구제규칙 초안 등이 마련되었다.¹⁴⁾ 이에 따라 동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수난어선구제사업은 조선수산회가 주체가 되어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전문 총 15조로 구성된 수난어선구제규칙 중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¹⁵⁾

제1조. 본회는 상호구제의 취지에 따른 수난어선의 복구를 조성하기 위해 본 규정에 따라 구제사업을 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의 어선이라 함은 조선에 船籍, 또는 碇繫場을 갖고 있는 총 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筏船은 제외)으로써 道수산회원의 수산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수난어선구제규칙 제1조와 제2조는 구제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고 있다. 제1조는 어선의 충돌, 좌초 등 불가항력적인 해난을 당한 경우 그 어선을 복구하고 상호구제하는 것이 구제사업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2조는 구제 대상이 되는 어선을 ‘조선에 선적 또는 정계장’을 갖고 있는 100톤 미만의 모든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선박이 어업용이든 운반용이든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조선에서 조업하는 일본의 통어선도 포함된다.

제3조. 본회는 어선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全潰되거나 침몰한 때, 또는 행방불명되어 60일을 경과한 때는 그 회원이 소속한 도수산회의 청구에 따라 구제금을 교부한다.

제4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할 구제금은 어선 가격에 대해 3분의 2로 한다. 단 그 어선에게 보험금, 배상금 등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구제금의 일부를 교부하지 않을 것이다. 전항의 어선 가격의 결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의 ‘불가항력’이라는 뜻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 방법을 다했음에도 그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을 때를 말한다. 이는 거꾸로 생각해서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조합이 이를 보전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 「어선보험법」 제18조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14) 『京城日報』 1938년 3월 4일 3면, 水難漁船救濟事業の細目打合會(廿九,卅兩日開催)

15) 이하 수난어선구제규칙에 대한 해설은 朝鮮水産會의 『水難漁船救濟事業執務提要』(1938)와 『水難漁船救濟事業報告書』(1938)를 참조.

것이기도 하다. '전궤(全潰)'는 “선박을 수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때”를 말하며, 행방불명된 때는 최후의 소식을 들은 때부터 기산하여 61일 이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를 말한다. 구제금은 회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행방불명인 경우는 가족에게 각각 교부하는데, 제4조는 그 구제금의 기준을 선가(船價)의 3분의 2(67%)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일본 「어선보험법」에서 규정하는 80%보다 낮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의 보험요율이 1천분의 20 이상인 것에 비해 조선은 그 반액인 1천분의 10 이하여서 조합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적다. 어선 가격의 결정은 일본에서는 신조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매년 선령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본인이 신조가격과 시가를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구제금을 받는 어선이 별도의 민영보험을 들었거나 배상금을 받는 경우 구제금 일부를 교부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초과보험, 중복보험 등의 가입 후 보험금 사취를 목적으로 벌어지는 일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다.

제6조. 본 사업의 收支는 이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 다음의 수입은 구제기금으로 해서 이를 적립한다.

- ① 구제기금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 ② 구제기금에서 생겨난 이자
- ③ 본 사업의 특별회계 歲計 잉여금
- ④ 지정 기부금

제8조. 각년도의 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 ① 어선 구제할(救濟割)
- ② 지정 보조금
- ③ 기타의 수입. 단 구제기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은 제외함

전항의 경비를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同項

제1호 및 제2호의 수입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 구제기금으로 바꾸어 지출할 수 있다.

제9조. 구제금 소요액이 당해연도의 구제금 지출 예산액을 초과할 때는 그 부족액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구제기금으로부터 이월해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난어선구제사업의 회계 사항이다. 어선보험이 아닌 공제사업이기 때문에 「어선보험법」에서 규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각각 구제할(救濟割)과 구제금으로 용어를 달리하고 있다. 구제사업의 경비 개원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구제할과 국비 및 도비 보조금, 기타 이자 및 잡수입금이다. 최근 10년간 전궤, 침몰, 유실, 행방불명되는 조난 어선(全損船)의 연평균 피해액이 38만 8천원이었으므로, 그 3분의 2인 25만원을 구제액 평균연액을 삼아 당해연도 경비에서 가급적 이를 지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가(船價)의 1천분의 10 이내로 관할 회원이 납부

하는 구제할의 비중이 사업경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역시 총 250만원의 기금이 축적될 때까지 매년 10만원 내외로 적립을 해야 해서 구제사업의 경비는 거의 구제할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4. 수난어선구제사업의 결과

이처럼 수난어선구제사업은 구제금 대상을 일본 통어선까지 확대하면서 범위를 넓힌 것에 비해 경비 재원을 철저히 회원 개인에게서 걷는 구제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 또한 선원들의 인사사고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생명보험도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본 사업의 經費主體를 어업조합으로 안 한 점에 의의가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데 이 구제사업은 어업조합의 선원이고 아니고 간에 널리 수산업에 供하는 全조선의 어선을 망라하여 이 水難의 구제에 當케 하는 목적 하에 설립된 것으로 전조선의 수산자를 회원으로 한 도수산회 및 조선수산회에 當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었음으로 각 관계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이 반도 漁政上의 중요 시설의 사업 수행의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¹⁶⁾이라는 통첩을 각도 지사에게 내리며 구제사업을 철저히 지도 독려토록 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개대와 달리 구제할의 징수 성적은 매우 좋지 않았다. 1939년 1월 현재, 강원도수산회의 구제할 조정액 4만 8,624원 가운데 88%에 달하는 4만 2,959원이 미징수되었고,¹⁷⁾ 경상남도수산회 역시 구제할 총액 5만 5천원 중 60% 이상이 미납되었다.¹⁸⁾ 이에 따라 조난어선에 대한 구제금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져만 갔고, 구제할 미납자에 대한 강제처분이 뒤따르는 폐해가 이어졌다.

16) 『毎日申報』 1938년 11월 30일 2면, 水難漁船救濟事業 統制에 完璧을 企圖 各道에 指導獎勵通達

17) 『京城日報』 1939년 2월 4일 5면, 意外の不振, 水難漁船救濟金 調定額徵收 一割そこそこ

18) 『朝鮮新聞』 1939년 2월 13일 3면, 納期經過後は強制處分を斷行, 水難漁船救濟費徵收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6분과

어촌신활력앵커조직협의회 마을연구소

**[특별분과] 지속가능한 어촌 지역개발정책
- 어촌 지역개발정책 집단지성 네트워크 구축 -**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시사점	김광남	어촌신활력 해남군 송호항 권역센터
‘우해이어보’ 테마 <울티Ecomuseum> 사업모델 - ‘물고기와 조개’ 대신 ‘문화자산’으로 먹고사 는 어촌마을공동체 -	정기석	어촌신활력 창원시 울티항 권역센터
어촌활성화를 위한 미래주민 부재(不在)의 해결방안	서득수	어촌신활력 포항시 이가리항 권역센터
신어촌의 풍경 - 공공예술로 바라본 부산항만과 해양산업	김은주	거제 섬도(GEOJE SUMDO)
신활력사업 주민 갈등 해소 방안	김영호	어촌신활력 순천시 용두항 권역센터
바다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꿈 -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실험과 가능성 -	박희광	어촌신활력 포항시 이가리항 권역센터
섬 지역 변화에 따른 로컬리티 구축 방향 - 고하도 사례를 통한 실천적 접근 -	조민철	목포 고하도마을협동조합
해상풍력 발전사업 이익공유 모델 설계 방안 -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이승래	(유)메가플래닛
출렁이고 변화하는 섬 -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안종경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기존 유사사업과 비교분석을 통한 어촌신활력사업 이해증진	안동훈	어촌신활력 제주시 화북항 권역센터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시사점

김 광 남 | 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 어촌신활력 해남군 송호항권역 센터장

1. 배경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의 접근성 및 정주 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8. 6. 28.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8.27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 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의 하나로 3조 원의 예산을 300개소의 소규모 어촌·어항에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9년 8월에서야 「어촌·어항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를 신설하여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사업계획수립과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사전 준비 미흡)
- 단기간에 다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체계 미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등 문제점이 나타나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국회와 언론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

2. 어촌뉴딜300사업 및 감사 개요

어촌뉴딜300사업은 ①공모계획서 작성, ②사업지 선정, ③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④사업 시행 등 과정을 거쳐 4년 동안 1개 사업지 당 최대 150억 원을 지원(국비 70%, 지방비 30%)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해수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

애초에는 사업 기간이 2년으로 시행되었으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결국 3년 사업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말 현재도 준공되지 못한 곳이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 300개소 중 141개소(47%)에 지나지 않고 있음.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 2022.11.21.~2023.3.31.까지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시행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감사 실시.

3. 감사결과 드러난 분야별 문제

가. 사업지 선정평가 기준 미비, 임의조정

해수부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균형과 국회의원 등의 요청 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하여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있어 기존의 평가 체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 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지 선정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그러면서도 공모 가이드라인 등에 제시된 평가 기준을 따를 때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지역의 요청 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는 사유로 평가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인 사업지 선정계획을 미리 작성하거나 평가 절차 종료 후에 해수부 소속 내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한 후 형식적으로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확인.

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체계 미흡

해수부는 2020년도 사업지 선정평가부터 현장평가(배점 40점)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배점 15점)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으나 이마저도 현지 시찰의 방법으로 막연하게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21개 사업지는 애초 공모계획서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 기준으로 50% 이상이 제외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등 애초 공모계획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 그 결과 많은 예산을 들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지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됨



〈표 1〉 공모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 사항

(단위: 개, 백만 원, %)

연도	사업지	공모계획서		공모계획서 → 기본계획서					기본계획서	
		사업 수 ^{*)}	사업비 (A)	계획 사업			신규 사업		사업 수	사업비
				사업 수	사업비 (B)	비율 [(B/A)*100]	사업 수	사업비		
2019년도	70	680	756,328	239	197,940	26.2	239	141,840	703	704,430
2020년도	120	1,230	1,178,994	382	236,395	20.0	443	193,258	1,324	1,128,837
2021년도	80	689	613,991	148	64,666	12.6	183	70,048	634	638,286
2022년도	60	660	439,868	149	62,344	14.2	103	40,683	602	440,299
계	300	3,069	2,888,189	918	561,245	19.4	965	446,327	3,163	2,809,861

- 공모계획서 개별사업 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비의 비율이 50% 이상인 사례

- 강원 고성군 문암1리항: 문암 탐험길 등 10개 개별사업을 타당성 부족이나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의 사유로 문암 탐험길 등 7개 개별사업 제외, 전체 사업비(10,000 백만 원)의 70.9%가 감소(7,092백만 원)한 대신 노후 어항시설 정비 등 15개 신규 사업(7,112백만 원) 추가
- 통영시 달아항. 수변친수광장 등 12개 개별사업이 포함된 공모계획서를 지역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수변친수광장 등 10개 개별사업 제외, 전체 사업비(9,489백만 원)의 76.9% 감소(7,301백만원) 대신 여객편의시설 조성 등 10개 신규사업(7,674백만 원) 추가
- 여수시 우학항: 비령해안 자전거길 등 11개 개별사업이 포함된 공모계획서를 수요예측 및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비령해안 자전거길 조성 등 5개 개별사업이 제외, 전체 사업비(7,555백만 원)의 62.7%가 감소(4,734백만 원)한 대신 어항시설 정비 등 5개 신규 사업(4,247백만 원) 추가
- 창원시 실리도항
- 통영시 마동항 등

다. 운영관리계획 없이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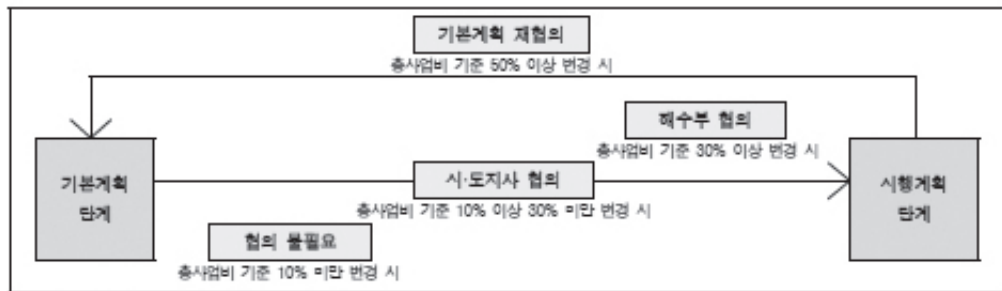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특화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하거나 기본계획 승인 후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자체에서 개별사업 명목만 유지한 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본계획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 재량범위를 조정하도록 통보

신안군은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 중 94억여 원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집행한 후 해수부에 보조금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해수부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죽도항의 주요 사업인 긴급방재로 조성 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습지행위허

가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용역을 준공 처리하였으나 해수부의 습지행위허가 신청 반려로 전체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미 체결한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

〈그림 1〉 기본계획 변경 절차



라. 수요분석에 따른 적정 수요 미반영, 수요분석 미실시, 운영관리계획 부재 사례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 수요분석에 따른 적정 수요가 반영되지 않거나 운영관리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2개 사업지의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

감사 기간에 하동군 등 61개 지자체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선정된 202개 사업지에 조성을 완료하였거나 조성 중인 285개 주요 특화시설의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

〈표 2〉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 내용 분석

(단위: 개)

연도	수요분석 반영 여부			운영관리계획 마련 여부			자부담계획 마련 여부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마련	미마련	소계	마련	미마련
2019년도	62	1	61	62	-	62	62	14	38
2020년도	119	26	94	119	30	89	119	89	30
2021년도	69	10	49	69	19	40	69	60	9
2022년도	66	18	39	66	22	33	66	49	6
계	286	62	233	286	71	214	286	202	83

- (강원 고성군 반암항 바다낚시공원 조성 시설계획) 방파제나 호안을 찾는 바다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여 안전성 및 쾌적성을 갖춘 바다낚시시설계획 및 축조
- (하동군 중평항 중평어촌문화복합센터 내 숙박시설) 구체적인 수요분석 없이 신성장사업의 도입으로 어촌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변 관광지 이용객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 사업계획 수립
- (포항시 신창2리항 해양생태놀이터) 구체적인 수요분석 없이 천혜 절경을 간직한 우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 체험연계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 사업계획 수립
- (웅진군 대이작항 어류생태체험장) 구체적인 수요분석 없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겨울철 관광객감소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성으로 해양자원 기반 관광브랜드를 개발 사업계획 수립
- (남해군 설리항 해양레포츠 계류시설) 운영 주체를 어촌계로 하고 구체적 운영 방식/관리 비용 미확보
- (고흥군 선정항 갯벌체험시설) 체험시설 운영 주체를 운영위원회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 부재
- (함평군 함평항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숙박시설 등) 숙박시설 등 다수 수익시설의 운영 주체를 어촌계 운영 위원회로기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 부재

마. 특화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미운영

37개 지자체가 73개 사업지에 소득법인 구성 및 자부담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83개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 2019년도 37개 사업지에 조성된 52개 특화시설을 대상으로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웅진군 대 이작 항에 조성한 어류생태체험장(사업비 998백만원)의 경우 2021. 12. 26. 준공 후 소득법인구성이나 운영관리계획도 없어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

〈표 3〉 특화시설 준공 후 운영 현황(2023. 2 기준)

(단위: 개)

구분	사유	다목적센터 내 소득시설	체험시설	캠핑장	계 ^{*)}
미운영	운영주체 미선정	-	2	-	2
	운영방식 미마련	1	1	-	2
	운영주체 미선정 및 운영방식 미마련	9	11	-	20
	소 계	10	14	-	24
운영	-	8	10	8	21
계	-	18	24	8	46

주: 2019년도 37개 사업지에 조성된 52개 특화시설 중 미준공 7개 시설 제외

〈표 4〉 체험프로그램 미활용 실태

(단위: 천 원)

연번	지자체	사업지	개발완료일	개발사업비	체험프로그램명	비고
1	순천시	화포항	'21. 12.	16,079	갯벌에서 노르딕 워킹, 천마 치유길 걷기 등	기존 거차 뱃세체험장과의 연계 방안 협의 중
2	부안군	대리항	'22. 8.	18,700	체험관광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법인 구성 논의 중
3	보령시	효자도항	'22. 8.	41,060	어장체험	체험기반 조성 후 활용 예정
4	서산시	중앙항	'22. 10.	118,780	1박2일 귀어귀촌 프로그램	간편활동조합과 협약 체결 후 운영 예정
5	서천군	송석항	'22. 3.	18,946	길 가공 체험프로그램 등	해의커뮤니티센터 운영 연기로 미운영
6	남해군	동갈화항	'21. 12.	7,693	새우양식파장 견학, 새우잡이체험 등	갈화낙시공원 준공 후 연계사업으로 추진 예정
7	경주시	수령항	'22. 8.	10,100	파각류 공예 체험, 보트체험	어촌계에서 운영 여부 논의 중
8	울진군	석호항	'22. 8.	8,997	전통어업 방식인 갯우리 체험 등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라 논의 예정

〈표 5〉 지역 특화상품(먹거리) 미활용 실태

(단위: 천 원)

연번	지자체	사업지	개발완료일	개발사업비	상품명	비고
1	강화군	후포항	'21. 10.	84,800	반달이튀김, 후포새우김밥 등	복잡한 조리과정과 만가 문제 등으로 미활용
2	여수시	죽포항	'22. 8.	16,729	갯도그	운영 인력 부족으로 미활용
3	순천시	화포항	'21. 12.	63,830	칠게소시지, 칠게바비큐 등	시범운영 준비 중
4	보성군	동굴항	'22. 8.	22,600	감자 프님탕, 브런치, 동파죽 등	소득법인 설립 후 활용 예정
5	영광군	송이도항	'21. 12.	21,430	보리떡, 꽃게민장수제비	음식 조리 기술을 이전한 식당 미운영
6	완도군	솔지항	'22. 10.	16,828	건강발상	판매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미운영
7	부안군	대리항	'22. 8.	46,700	돌미역, 꽃게장, 바지락	어촌계 협동조합 구성 후 활용 예정
8	보령시	효자도항	'22. 8.	41,490	간재미취무침, 봉장어튀김 등	현재 판매계획이 없음
9	서천군	송석항	'22. 3.	20,443	열처 길 강정, 새우 길 강정 등	해의커뮤니티센터 운영 연기로 미활용
10	제주시	비양도항	'22. 3.	24,600	꽃멸치 젓갈, 경단	현재 판매 및 활용 계획이 없음

〈표 6〉 인터넷 홈페이지 미활용 실태

(단위: 천 원)

연번	지자체	사업지	구축완료일	구축사업비	포털사이트 검색 가능 여부	최근 게시글 업로드 시기	비고
1	웅진군	야달항	'21. 12.	66,300	○	'21. 12.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2	웅진군	담동항	'21. 12.	26,097	X	'21. 12.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3	여수시	죽포항	'21. 12.	16,623	○	'21. 8.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4	순천시	화포항	'21. 12.	37,638	X	'21. 12.	어부정려 활성화 이후 연계 운영 예정
5	보성군	동굴항	'21. 9.	46,682	X	'21. 9.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6	완도군	가화항	'22. 10.	17,642	○	'22. 10.	특산물 판매 여건이 어려워 홈페이지 미활용
7	부안군	대리항	'22. 8.	22,200	X	'22. 7.	어촌계에서 특산물 판매 정보 등 미게시
8	부안군	석도항	'22. 8.	37,600	X	'22. 8.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9	서천군	송석항	'22. 3.	36,360	○	'22. 3.	해의커뮤니티센터 운영 연기로 미활용
10	남해군	동갈화항	'21. 12.	9,546	-	-	도메인 사용기한 경과로 접속 불가능

4. 어촌지역개발사업에 주는 시사점

- '주민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민이 가장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 되어야 함
- '모든 사업은 마을주민의 생활복지를 증진하는 것인가? 주민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가? 어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 부합되어야 함
- '시설, 사업은 누가, 어떻게 운영, 유지관리해 나갈 것인가 주체를 찾고 육성하는 것이 먼저
- '소비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전술이 바탕이 된 사업 내용이라야 실효성, 타당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어촌의 가장 큰 문제인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대안을 찾아야 함. 따라서 근본적으로 바다 생태계 복원, 공동체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면적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계획을 조금하계 구체적으로 확정해 추진하는 '마스터플랜'보다 큰 방향과 틀을 합의한 범위에서 하 나씩 사업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시나리오플랜'이 필요
-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내용이 과연 어촌 현실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기준과 정산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참여 의지를 저해하고 있음

감사원은 어촌뉴딜300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을 참고하여 해수부가 2023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 후속으로 3조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 감사할 계획임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 지침, 매뉴얼은 만능, 금과옥조가 아님. 현장에서 도출되는 상황, 문제, 개선책을 모으고, 제기하고, 개선 요구하는 진정한 상향식 어촌지역개발정책이 되어야 함.

어촌뉴딜300사업 후속 버전인 어촌신활력사업도 대상지 선정, 자문, 기본계획 심의 등 여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특히 정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태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여러 선행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어촌지역개발사업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문제를 혁신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함. 진정한 현장 기반,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해서 현장 네트워크 강화,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함

'우해이어보' 테마

<울티Ecomuseum> 사업모델

- '물고기와 조개' 대신 '문화자산'으로 먹고사는 어촌마을공동체 -

정 기 석 | 마을연구소 소장, 울티항 앵커조직 센터장

1. '우해이어보' 테마 <울티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우해이어보' 테마 울티어촌체험·휴양 프로그램

구분(구성)		프로그램 운영 내용
'탄소중립' 생태	갯벌야외체험	• 조개(바지락, 모시조개) 채취
		• 고동, 게 등 갯벌 생물 채취
	갯벌실내체험	• 패류, 조류 표본 만들기
		• 어류, 패류, 조류 실내 3D현미경 관찰
	갯벌지질체험	• 화석, 수석 등 갯벌 탐석
'우해이어보' 어업	습지철새탐조	• 창포만 습지 철새 탐조 및 사진촬영
	어선어로체험	• 어촌계 어선승선 어로체험
	낚시어업체험	• 낚시배낚시, 훌치기낚시 등
'우해이어보' 어촌	어구시연체험	• 각종 어구시연 및 실습
	어촌먹거리체험	• 와각탕, 미더덕 등 '우해이어보' 테마 요리
	어촌생활체험	• 어촌한달살이 등 귀어생활 및 어촌문화 체험
	어촌역사체험	• '우해이어보' 천주교 성지순례 및 스토리텔링 • '우해이어보' 연안 김씨 유적답사 및 스토리텔링
'우해이어보' 공방	비치코밍체험	• 비치코밍(beach-combing) 해안표류물 공예
	조개공예체험	• '우해이어보' 테마 패류 공예
	포슬린아트체험	• 도자기, 가구 등 '우해이어보' 테마 미술공예
기타	레포츠	• 남파랑길 트레킹, 자전거하이킹 등
	아웃도어	• 울티마을 해안 캠핑
	농촌	• 울티마을 주말농장 체험

■ ‘우해이어보’ 관련 핵심관계인구 특화 프로그램 구성

‘천주교 성지’ 종교문화 테마 체험프로그램	1	천주교마산교구청 방문	 2023.11.22(수) 19시30분 진해문화센터 문의: 010-7794-0500 주최: 진해문화재단 후원: 진해시, 진해문화재단, 진해문화재단 후원기관
	2	울티권역 ‘우해이어보’ 발현지 답사	
	3	‘우해이어보의 부엌’ 조리 및 식사체험	
	4	‘우해이어보’ 성물(Goods) 공방 체험	
	5	‘우해이어보’ 전시관 관람 및 아카이빙 감상	
‘연안 김씨’ 역사문화 테마 체험프로그램	1	‘김려선생의 우해이어보’ 스토리텔링 청취	
	2	울티권역 ‘우해이어보’ 발현지 답사	
	3	‘우해이어보의 부엌’ 조리 및 식사체험	
	4	‘우해이어보’ 기념품 공방 체험	
	5	‘우해이어보’ 전시관 관람 및 아카이빙 감상	
			* 뮤지컬 포스터

2. ‘우해이어보’ 테마 <울티마을공유가게 직판사업>

■ <울티마을공유가게>의 특징

매장구조 특징	• ‘Linker 제휴’ 등 ‘Shop-in-Shop’ 방식의 ‘한뼘가게’ - 마을협동조합 조합원, 권역 및 지역주민, 링커, 로컬크리에이터 등 협력사업자와 마을가게 공간 공유 및 사업장 공동운영
상품구성 특징	• ‘소량·다품목 & 저가·고품질’ 컨셉의 ‘1만원 Shop’ - 식음료류, 생활편의용품, 도서·문구류, 로컬푸드, 체험용품 굿즈, 아웃도어용품 등 ‘소량·다품목 & 저가·고품질’ 위주

■ <울티마을공유가게>의 운영 체계

구분	매장 구조	상품 구성		평균 상품가 (천원)
고객군 1 (對內 주민)	마을카페	차류 및 음료류	유기농커피, 발효차 등	~5
		간편식류	‘우해이어보’ 밀키트 등 편의식	~10
		무인자판기	차류, 음료류, 면류, 빙과류 등	~5
	마을구판장	생활용품	소비재 생활용품	10
		잡화류	생산재 공산품 등	~20

구분	매장 구조	상품 구성		평균 상품가 (천원)
고객군 2 (對外 관광객)	마을카페	차류 및 음료류	유기농커피, 발효차 등	~5
		간편식류	‘우해이어보’ 밀키트 등 편의식	~10
		무인자판기	차류, 음료류, 면류, 빙과류 등	~5
	마을책방	생태도서류	‘우해이어보’ 등 생태, 환경 도서 등	~10
		문구류	필기구, 노트 등 ‘우해이어보’ 테마	~10
	마을 특산품점	굿즈(Goods)	‘우해이어보’ 테마 모자, 쿨토시, 양말 등 체험 물품과 가방, 머그컵, 식기 등 특산품 및 공예품	~20
		로컬푸드 (Local Food)	‘우해이어보’ 테마 어류, 패류 등 수산물 배추(김치) 등 농산물 및 농식품	~10
	마을 잡화점	레포츠용품	체험, 낚시 등 레포츠용품	~20
		아웃도어용품	캠핑, 트레킹 등 아웃도어용품	~20

3. ‘우해이어보’ 테마 <울티어촌마을사업>의 특성

■ ‘TTS(Theme-Target-Synergy)’ 지역특화 및 사업차별화 전략

- 사업지역(울티권역)의 핵심 지역자산이자 사업화 테마인 ‘우해이어보 테마(Theme)-관계인구 타깃(Target)-연계사업 시너지(Synergy)’ 등 ‘TTS(Theme-Target-Synergy)’ 지역특화 및 사업 차별화 전략

‘우해이어보’ 테마(Theme)	문화	• 자산어보보다 11년 앞서 출간된 ‘국내 최초의 어보’ 테마	
	종교	• 신유박해 ‘천주교 성지 순례’ 테마	
	역사	• 저자 김려선생 후손 ‘연안 김씨 대종회’ 테마	
‘관계인구’ 타깃(Target)	• 관계인구(핵심고객층) 1 :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도 18만여명		
	• 관계인구(핵심고객층) 2 : ‘연안 김씨 대종회’ 회원 12만여명		
	• 관계인구(핵심고객층) 3 : 창원시 관내 225개 학교		
	• 관계인구(핵심고객층) 4 : ‘울티공단 입주기업 임직원		
‘연계사업’ 시너지(Synergy)	• 울티마을 탄소중립실천 시범사업 : 탄소중립홍보관 + 생태체험프로그램 등		
	• 창포만 습지보전지역 지정 추진 : 경남환경재단 등		

■ ‘자산어보’ 테마사업과 차별성

· 흑산도 ‘K-관광섬 육성사업’		· 울티권역의 모델 & 비전 ‘울티Ecomuseum’
내용	○ 자산어보 관련 과업 - 자산어보 캠프 - 자산어보 밥상 ○ 기타 - 파시 관광자원화 - 클린에이스 흑산 - 고래와 쉬어가는 섬 등	※ ‘울티Ecomuseum’ : 울티마을 지속가능발전 100년 계획 ○ 울티마을의 자연, 역사, 문화, 지리, 인문, 사회, 생활, 산업 등 유·무형의 생태적 명소와 역사문화적 자산의 야외 아카이브 ○ 특히, 울티마을 사람들의 ‘어제, 오늘, 내일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지붕없는 마을박물관’
규모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	
주요 과업	- 흑산도 유배문화공원, 사리분교 등 이용 - 가족 캠프와 체험장 등 ‘볼거리’ 조성 - 캠핑·자전거·등산대회 등 ‘즐길거리’ 제공	

4. ‘우해이어보’ 테마 <울티Ecomuseum> 사업모델

분야	테마 자원	관련 사업(P/G)	사업 공간
자연	창포만	습지보전 프로젝트	창포만 습지
	울티갯벌	탄소중립갯벌 체험	탄소중립갯벌체험장
	진동층	화석 등 지질·지형 체험	진동층 지층 일대
역사	우해이어보	‘우해이어보’ 역사 순례	울티마을 일원 
	신유박해	‘우해이어보’ 역사 스토리텔링	
	대관정	마을역사 스토리텔링	
문화	우해이어보	‘우해이어보’ 문화 답사	체험실 및 마을공유가게 
	체험·휴양프로그램	‘우해이어보’ 테마 체험	
	마을공유가게	‘우해이어보’ 먹거리, 굿즈 등	
지리	창포만	습지, 갯벌 관찰 및 경관 감상	창포만 경관
	남파랑길	남파랑길 트레킹	남파랑길 11코스
	울티리	울티마을 8경 답사 등	울티마을 일원

인문	우해이어보	‘우해이어보’ 인문학 	체험실 및 전시관
	연안 金氏	‘우해이어보’ 유적 답사	우소현, 고저암 등 발현지
	천주교 마산교구청	‘우해이어보’ 성지 순례	
사회	마을회	울티마을학, 울티주민자서전 등 마을아카이빙	전시관(아카이브) 및 마을공유가게 
	노인회		
	부녀회		
공동체	복지회관	공유 및 공동 생활복지 공간	식당, 세탁소, 건강관리실 등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책임조직	울티마을 사업 및 생활공간
	체험농장	농사체험장	울티마을체험농장
산업	어촌계	어업의 사업주체	마을어장
	울티공단	입주기업 및 생활인구 교류	울티공단
기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체험·휴양마을사업	울티마을 일원

어촌활성화를 위한 미래주민 부재(不在)의 해결방안

서 득 수 | SDG·ESG경영학석사,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 사무국장

1. 문제의 제기

2014년, 일본의 마스다 리포트가 던진 “2040년,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다”는 충격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소멸에 직면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견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농어촌 청년층의 급속한 유출로 인한 고령층 중심의 인구구조는 전통적 농어업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와 함께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농어촌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회·지리적 공간으로 전통 사회에서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삶과 노동의 주된 장소였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농어촌의 마을 혹은 촌락 단위로 집단적 주거와 생활이 이뤄졌고, 자급자족적인 농어가를 중심으로 경작과 어업활동을 위한 마을 주민들 간의 협업과 정기적인 장터가 경제 활동의 기본 구조였다. 마을 혹은 촌락 단위로 오랜 세월 한 장소에 정착하여 생활하였기에 부모세대의 농어업활동이 자연스럽게 자식세대에 이어지는 세대 순환형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즉, 노동집약형 농어업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노동력 공급을 위한 자연스런 다출산의 유지와 세대를 잇는 순환형 인구구조를 통해 농어촌은 오랫동안 주요한 주거와 생활 공간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계적 근대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진행됨에 따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도시화의 결과 지방을 중심으로 농어촌이 크게 축소 되었고, 농어민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1960년대 이후 진행된 빠른 도시화와 근대화 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어촌 인구는 빠르게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이농현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화 이후 농어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청년층 중심의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출은 전통적 농어촌 사회를 유지하여 온 미래주민의 부재로 세대 간 인구의 순환구조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농어촌의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온 세대 간 인구의 순환구조 형성에 필요한 새로운 인구가 될 미래주민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농어촌지역의 현실

농어촌의 인구가 출생과 사망의 자연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는 인구의 순환구조가 형성될 경우, 농어촌은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경제 구조에도 활력이 촉진될 수 있다. 비수도권의 많은 지방에서는 이러한 인구 순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더딘 도시지역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 지역에서는 사망률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자연적 요인에 더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사회적 요인에 따른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농어촌 전체 노동력 축소로 이어져 농어업의 쇠퇴와 소멸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3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에 처한 전국 시·군·구가 110곳을 넘어섰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2018년보다 24곳이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으로 점차 늘어나다가 최근 5년 새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인구소멸과 고령화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증가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예견된 결과로, 최근의 인구소멸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앞으로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지방소멸의 최전선이 농어촌이라는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중 경산시, 구미시 그리고 칠곡군을 제외한 20곳(전체의 약 87%)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이 중 10곳은 소멸위기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군위군과 의성군의 소멸위기지수는 각각 0.104, 0.106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농촌은 부모세대의 농어업활동이 자연스럽게 자식세대에 이어지는 세대 순환형 인구구조가 무너진 단순히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1차적인 문제에서 지역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농림어업 총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림어가는 118만5천 가구로 2015년 123만7천 가구에 비해 5만2천 가구가 줄어 4.2% 감소하였고, 농어촌 인구는 265만1천 명으로, 2015년 292만3천 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농어촌 인구 27만2천 명이 사라지면서 10%에 가까운 농림어업 종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 대한 농어촌 인구 비중은 5.7%에서 5.1%로 0.6%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농가 231만4천 명, 어가 10만4천 명, 임가 23만3천 명 순이다. 그 중 가장 많이 비중이 줄어든 것은 농업 인구로 5.0%에서 4.5%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이 농어촌 인구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로 자연적 요인인 고령화가 꼽혔지만, 산업단지와 택지조성 등의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의 축소도 주된 이유였다. 자연적 요인이 크지만 농어촌에서 도시로 인구유출의 사회적 요인에 인한 인구 변화가 컸으며 업종전환, 어선감척 등 농림어업 구조변화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으로 5년 전보다 0.2명 감소했다.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가구로 전체 가구의 54.1%가 2인 가구에 해당했다. 농어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2015년 37.8%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인 16.0%와 비교하면 2.7배 높아 농어촌의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가의 경영주 평균연령은 2015년 64.8세보다 1.0세가 높아져 65.8세로 나타났다. 농업분야는 65.1세에서 66.1세로 1세가 높아졌으며, 어업분야는 62세에서 62.9세로 임업분야는 63.5세에서 64.4세로 나타나 모두 0.9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농어촌 고령화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인구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19년 65세 농가인구 비율은 2000년 대비 연평균 1.3%포인트 증가한 46.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파라 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경연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25년과 2030년은 각각 54.4%, 59.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고령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농촌단위, 군지역에서 고령화율은 26.4%로 나타나 시나 구의 도시지역 14.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농어촌지역의 농업부문 인구 중 60대는 2015년에 비해 7.5% 증가한 반면 10세미만은 38.1%가 줄어들었고 10대 30.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비율도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농가 인구 비중은 70대 이상이 29.4%로 가장 높았고 60대 27.8%, 50대 18.1%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에서 15세부터 64세 이전까지의 청장년 인구와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각각 53.2%, 4.3%로 전체인구 대비 각각 18.9%포인트, 7.9%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분야는 인구 고령화, 어선 감척, 어족자원 감소, 어업 경영악화 등으로 2015년 대비 1만1천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가 인구는 2015년에 비해 전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50대가 38.8% 줄어들며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고 10대가 36.0% 줄었고 10세 미만은 3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어가 인구 비중은 60대가 30.3%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은 22.5%, 50대 20.0% 순이며 50대 이상이 7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인구 65세 이상 비중은 36.2%로 2015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해 전체인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5.7%로 전체인구 유소년 인구 비중 12.2%의 절반 수준이고 중위연령은 55.7세로 전체인구 중위연령 43.7세 보다 12세 높게 나타났다.

3. 내 자식도 떠나는데 청년?

2017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이 양적·질적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띄면서 총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의 핵심 고리인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주도의 지역 산업·일자리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판에 박은 듯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사업에 몰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2019년에는 국토 면적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주민등록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대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9개 지역 중에서 65.5%에 달하는 150개로 인구감소는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시작하여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도래, 청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으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에 고심하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출산장려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뺏는 주소이전 운동, 주민등록인구 찾기 등 단편적이고 경쟁적으로 지역 인구 늘리기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인구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는 본질적으로 저출산의 자연적 요인보다는 지역 간 인구이동, 즉 인구 유출의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도출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응이 일자리, 교육, 정주, 복지 등 지역발전정책으로 무게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젊은 청년인구 유치 및 유입에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진경, 2021,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지자체의 대응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o.116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2021년 3월, p1.)

2020년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관련 중앙정부의 시책 현황 중, ‘소외지역’, ‘청년층’, ‘인구의 유입·정착’이라는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시책은 7개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5개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의 2개 사업이다.

2017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이 양적·질적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띄면서 총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인구감소의 핵심고리인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주도의 지역 산업-일자리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앙정부의 여러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농촌지역 지자체는 청년층의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임금, 생활비 등의 자금을 단순 지원하는 유형의 정책 수단이 진행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이주와 정착은 ‘간단한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라는 관점이 부족하다. 청년의 지역 이주 및 정착은 여러 해 동안 정보 수집, 선택, 자원 동원 등의 다양한 행위가 연쇄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으로 청년이 자기 삶을 모색하는 학습과 구체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차원이 정책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김정섭·신소희·구본경,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18년, p64.)

농어촌지역의 경우 귀농·귀촌 부문별 실패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창출 실패와 안정적인 농어업 기반확보 실패보다, 지역사회 융화실패와 양육 및 정주환경 미비로 밝히고 있다(유형석·임오현, 2021). 특히, 지역사회 융화 실패는 크게 원주민과의 마찰, 원주민의 부정적 시선과 간섭, 지역사회 부적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주민과의 마찰은 오래 동안 도시에서 살아온 귀촌인의 농어촌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농어촌의 폐쇄적 분위기가 결합하여 발생하며, 귀농인이 친환경농어업이나 원주민에게 생소한 농어업기법을 도입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원주민이 강하게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부 원주민은 귀농인의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마을 공동시설 이용을 제한한다고 한다. 양육 및 정주환경 미비는 이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열악한 양육 및 정주환경에 실망하여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유형석·이동현, 2021년)

4. 해결방안

오늘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비해 비혼과 저출산 등 자연적 요인에 인구감소뿐 아니라 농어촌을 떠나 더 좋은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더높은 수익을 보장받는 일자리의 선택영역이 넓은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대도시는 인구가 팽창하고 일부 지방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시·군단위 농어촌은 모두 인구 소멸지역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은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 성과 없이 막대한 비용만 지출이 되고 오히려 더 소멸 위험이 가속화 되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은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설명되므로, 청년의 지역 간 유출 원인 또한 대부분 취업의 가능성, 임금의 격차, 기업의 규모 등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성장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지향하고,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다양성, 취향,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충족되는 삶의 질이 높은 곳이다. 이는 청년을 밀어내는 '원심력' 측면에서의 유출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구심력' 관점에서의 지역의 유입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도시민의 귀촌과 귀농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던 인구가 농촌으로 이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하에 다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던 당시, 귀농인의 문제는 도시 및 도시인의 시각에서 인식되었다. 즉 한국사회의 경제위기와 도시산업의 침체와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압출(壓出)요인이 귀농·귀촌 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따라서 귀농·귀촌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인 동시에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도시의 입장에서 아닌 농어촌의 인구와 생산의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오늘날 우리 농촌이 직면한 사회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하여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업생산력 감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귀농·귀어·귀촌을 농어촌 인구를 유지하고 노령화 추세를 지연 또는 완화함으로써 농어업 노동력의 감소를 막고, 농어촌 내의 비농어업 고용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제로 활용하는 농촌 전략이 대두하고 있다. 또한 MZ세대의 청년층과 은퇴를 맞아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취향이 존중되는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충족되는 삶의 질이 높은 곳을 찾아 농어촌으로 이주하거나 5都2村의 주거형태를 찾는 농어촌의 흡인(吸引)요인이 귀농·귀촌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농어촌의 인구가 줄고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몰린 것은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촌향도 현상의 이면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50~60년대 태어나 급속한 산업화 시기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시골에서 도시로 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도시생활에 지쳐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왔고 이것

이 농촌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귀농·귀촌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도시지역에서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은퇴자 또는 전원생활형이 많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소멸 위험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어·귀촌정책과 각종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서 인구감소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막대한 인구유입 대책에도 농어촌지역은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실상은 고령자들이 대부분이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도 수익이 너무 낮기에 다양한 대책을 세워도 젊은 청년들이 귀촌하여 고령자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2030 청년들에게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실상은 귀농·귀어·귀촌정책으로 청년층에게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작 농어촌으로 귀농·귀어하여 정착하는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도시생활의 피로과 고향에 대한 향수, 부모의 생업을 물려 받기 위해서이다. 특히 과거엔 도시로 나간 자식들 중 부모가 늙거나 사망시 대를 이를 자식이 없어 후계문제가 단절이 되어 결국 빈집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농어촌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오히려 자식들 중 후계를 자청해서 귀촌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부모의 농어업 규모가 큰 가구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의 중소형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귀촌하여 대를 잇게 하는 세대승계형 귀촌정책을 펼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 인구소멸 방지책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허문구·이상호(2024). 인구변동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분석, 산업연구원. 월간KIET산업경제, 2024.11.29., p67-78.

이상호·이나경(2023).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p112-119.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p99.

박진경(2021).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지자체의 대응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o.116 지방자치정책브리프,
2021년 3월, p1.

유형석·이동현(2021). 귀농·귀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경제연구
제55권, p1-22.

통계청 보도자료(2021),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 2021.09.28.

○ 인터넷 자료

디지털완주문화대전, 완주의 특별한 이야기, 귀농·귀촌.

- <https://www.grandculture.net/wanju/toc/GC07000872>(검색일: 2025.07.0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지정.

-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검색일:2025.07.02.)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백과,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정책.

- <https://www.narasallim.net/wiki/910>(검색일:2025.07.02.)

신어촌의 풍경

- 공공예술로 바라본 부산항만과 해양산업

김 은 주 | 거제 섬도 GEOJE SUMDO 대표

어촌은 단순히 어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계의 장소를 넘어서,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문화적 터전이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어촌 공동체는 오랜 시간 고유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형성해왔다. 노동과 주거, 공동체와 제의, 축제가 함께 얹혀 있고, 마을은 공동작업과 분배를 기반으로 한 상호부조를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의 어촌은 산업화와 도시화, 기후위기와 해양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급격한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어촌은 해양 문화의 뿌리를 간직한 장소로서 살아있는 아카이브 현장으로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전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어촌은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는 채집과 어업 중심의 1차 산업 공동체였다. 현대의 어촌, 특히 부산과 같은 대도시 인근의 해안 지역은 전통적인 어촌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산업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어촌의 자리는 해양물류와 항만산업, 해양 플랜트와 조선업 등 거대한 국제 제조, 유통 시스템의 일부로 어촌은 편입되었다. 항만은 물류의 거점이자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유럽의 함부르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등은 전통 어촌에서 산업 항만도시로 발전했으며, 산업 쇠퇴 이후 그 항만 공간은 문화예술 공간, 수변 주거단지, 도시 재생 거점으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다.

○ 어촌의 분류와 차이점



전통어촌, 항만 그리고 신어촌은 모두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양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기반을 가진다. 이 세 공간은 해상 교통의 거점 역할, 해양 자원의 활용 그리고 바다를 매개로 축적된 고유한 해양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각 공간은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공간의 주체, 기능의 중심 그리고 인간과 해양의 관계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통어촌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중심의 공간으로 주민 간의 관계망과 자급적 생활방식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어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해변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변은 공유자원으로서 공동체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반면 항만은 상업적, 산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물류, 어업, 군사 등 국가적 목적에 따라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항만은 전통어촌의 위에 형성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해변은 기능적으로 구획되고 보안의 논리 속에서 제한된 공간이 되기도 한다. 'A-2 유형'의 신어촌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어촌은 두 공간의 특성을 모두 일정 부분 포함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다. 특히 한국에서도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되는 'B-1 유형'의 신어촌이 향후 5~10년 사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유형은 단순한 산업 기능 확장이 아니라 거주와 생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해양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업화가 된 해양 공간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의 터전으로서 바다가 어떻게 복원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해변의 접근성과 공간의 공공성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과거 어촌이 지녔던 자연적 개방성과 공동체 중심의 공간 감각이 국가 주도의 개발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어촌은 단순한 외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해양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전통어촌 (Fishing Village)	항만 (Port)	신어촌 (Coastal Village)
공간의 기원	자연발생적 공동체 중심	국가/도시 주도 기반시설	관광+문화 재생 복합공간
주요기능	어업, 생계, 공동체 유지	물류, 수출입, 항만산업	문화관광, 해양생태, 생활 거주
해양과의 관계	생계의 터전, 생태적 의존	산업적 이용, 상업적 기능	문화적, 체험, 생활거주 중심
인구 구성	고령주민, 어민 중심	외부 노동력 유입, 유동적 인구	예술가, 관광객, 거주자 혼합
물리적 구성	포구, 어장, 마을	부두, 창고, 항로, 배후단지	고급 거주지, 카페, 문화공간, 수변공원
주체성	공동체 중심 자율 운영	행정, 기업주도 운영	거주공동체+외부조직 협력기반
지속가능성의 과제	인구감소, 어업쇠퇴	환경오염, 과잉물류	공동체의 형성, 소득수준에 따른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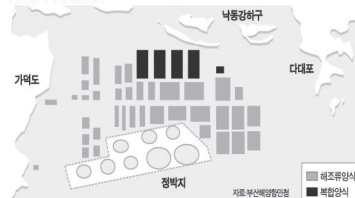
부산은 유라시아 등 한국 정보의 외교전략과 연계되는 해양 관문 도시로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 철도와 항만을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상은 유럽, 중앙아시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부산을 아시아-유럽 연결의 출발지로 상정하게 한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은 부산항을 단순한 수출입 관문이 아닌 문화, 기술, 안보, 외교가 교차하는 복합적 접점을 만들며, 그만큼 이곳에서의 도시계획, 항만개발, 해양문화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 맥락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산항을 어촌에서 발전한 물류항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곳은 해양산업과 글로벌 경제, 지정학과 지역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공간이며, 부산의 공공예술은 역시 이러한 다층적 맥락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미래의 부산항은 해양안보, 기후위기 대응, 문화 교류가 어우러진 지정학적 해양 문화거점으로서의 신어촌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공공예술 프로젝트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 부산편> 사례

2021~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는 국가관리무역항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권, 부산과 울산 경남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며, 인간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흔적을 포착한 작업이다. 바다는 오랜 시간 확장의 공간이자 축적의 장소였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시설이 들어서고, 해안이 메워지며, 도시는 바다를 침식하고 또 품으며 자라났다. 이 프로젝트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서 생성된 산업의 얼굴들을 공공예술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부산신항과 북항의 현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위한 리서치트립 항해부터 부산항만공사의 협력을 받아 북항과 신항 그 주변의 항만을 세일링 하며 진행된 세일링 포럼으로 이어진 프로젝트는 단지 예술의 관조적 시선이 아니라 현장을 따라 흐르는 시간의 궤적을 탐색하는 움직임이자 해석의 실천이었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산은 전통적인 어로 중심의 어촌 공동체, 산업화로 변화한 대규모 항만 그리고 글로벌 물류와 문화가 결합된 신어촌에 이르기까지 어촌의 변화단계를 모두 간직한 복합적 전환의 풍경을 간직한 도시이다.

신항 성막시 주변 영역상



- (부산신항: 전통어촌 → A-1 항만) 부산신항은 전통어촌의 형태와 항만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거대한 물류 선박이 다니는 곳 옆으로 항만의 개발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어업 양식을 영위하는 어촌마을이 존재한다.

- (부산 남항과 북항: A-1 항만 → A-2 신어촌) 항만에서 신어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물류창고는 창업공간의 사무실로 어선과 페리, 물류 선박이 다니던 항만은 마리나 시설과 오페라 공간으로 현재 계획되어 재편성되고 있다.

현시점의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의 어촌은 전통적인 어촌에서 산업 항만을 거쳐 '신어촌'으로 전환되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직 항만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부산의 어촌인 항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항만은 단순한 물류의 전초기지가 아니다. 거대한 선박이 부두에 닿고, 하늘을 가르며 움직이는 크레인 이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때, 그 움직임은 단순한 노동의 결과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이자 조형적 광경으로 다가온다.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이동체 중 하나인 선박과 그것을 수용하고 작동시키는 항만 공간은 산업의 결정체이자 예술적 감각이 융합된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항만은 현대기술과 디자인, 노동과 미적 감흥이 얹힌 복합적 장소로서, 단지 물류기지나 경제적 인프라로 축소할 수 없는 인문·예술적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선박제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것이 아직까지도 완전한 자동화에 이르지 못한, 극도로 정교한 수공적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항공기나 자동차와는 달리, 선박은 그 크기와 해양 조건에 따라 설계와 제작 단계에서 수많은 숙련공의 손길이 필요하다. 용접, 조립, 도장, 내부 구조 설계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장인의 판단과 기술이 동원되며, 이는 단지 기능적 목적을 넘어서 선박이라는 존재 자체에 수공예적 가치를 부여한다. 한 척의 대형 선박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하나의 조각 작품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는 조형적 여정과도 닮아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통해 인간 노동의 밀도와 정밀함, 그리고 그 안에 깃든 감각과 시간의 층위를 감지할 수 있다. 항만과 선박의 디자인적 감각 역시 중요한 미적 요소다. 항만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능적 공간인 동시에, 그 안에 예기치 않은 추상적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컨테이너들이 반복적으로 쌓인 풍경은 마치 최소주의 회화처럼 리듬과 색의 조화를 보여주며, 선박의 선체 곡선은 기능성과 유선형 미학의 경계에서 조형적 감흥을 자아낸다. 특히 대형 선박은 기술적으로 설계되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설치미술처럼 보이기도 한다. 배의 뱃머리에서 바라보는 곡면, 갑판에서 울려 퍼지는 금속음, 파도와 맞닿는 구조의 탄성은 감각의 차원에서 예술과 닿아 있다. 이러한 감흥은 산업 디자인이 순수예술의 영역과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경계 예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거제 조선소 선박제작 과정



부산신항의 풍경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서 우리가 받는 감각 중 가장 강렬한 것은 스케일의 충격이다. 신항만에서 마주하는 크레인과 선박은, 일상의 스케일을 벗어난 압도적 규모를 통해 우리에게 일종의 경외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대형 캔버스가 가까이에서 바라볼 때 단순한 색면이 아닌 깊은 감정의 장으로 확장되듯, 항만의 풍경은 그 자체로 인간 존재를 상대화시키는 거대한 장치가 된다. 고철 덩어리 같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크레인의 움직임, 끝이 보이지 않는 선박의 적재선, 수십 미터 상공에서 교차하는 화물이 모든 것들은 일상의 시야 너머로 확장된 산업적 시적 공간을 구성한다. 마치 거대한 철제 조각 작품들이 물 위에 정박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 모든 풍경은 조각적, 회화적, 공간각적 인상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선박과 항만은 단지 정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세계를 잇는 이동과 교류의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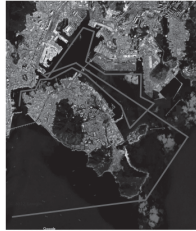
선박은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기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가로지르며, 문화를 실어 나르고 관계를 운반하는 매개체다. 그 선박 위에는 각국의 언어로 적힌 화물, 타국의 기후에서 만들어진 농산물, 이질적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해양노동자들의 삶이 얹혀 있다. 항만은 그러한 모든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정박하는 지점이며, 매일매일 세계가 입항하고 출항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이다. 다시 말해, 항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조형물이며, 가장 넓은 퍼포먼스 무대인 것이다.



부산항 세일링 포럼 현장

DAY 2
부산

일시	2022. 8. 25.	장소	종로
출발 시간	부산항만공사 > 남포대자연과학관 > 동양대해양대학 > 양곡마을 > 서산대해양수산연구소 > 부산항만공사 > 연일항 > 일대시정마을 > 동진항자연과학관 > 신산대해양수산연구소 > 한국해양대학교 > 연일항 > 동진항자연과학관 > 양곡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거리	약 71.3km (약 4시간)	출발	13:00
회차당코스	부산항만공사	입장	18:00



부산항 세일링 포럼 리플렛

항해자 ① 최현덕, 부산항만공사 홍보부 주임 부산항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상 이오리조 항해자 ② 김종훈, 한국해양대학교 총아사리학과 총학생회 교수 해양세계에서 바라본 부산의 해양 풍경 항해자 ③ 김태수, 스페이스 제너레이터 이사 선장에서 점시기획자료 항해자 ④ 김종우, (사)부산 해무선 선주협회 사무국장 해인선, 무엇을 끄는가? 항해자 ⑤ 김지수, (사)제시(mapping)대표 해양강국을 이끄는 스마트 해양해운 플랫폼 개발 항해자 ⑥ 김민서, 진해부도 CEO, 어촌활력연구소 대표 강원항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 일부력과 밀항: 부산을 둘러싼 냉전체제의 흐름과 교란	
---	--



부산항 리서치트립의 기록

과거의 어촌은 생계를 위한 노동의 장소였지만, 현재의 어촌은 ‘생산’과 ‘생활’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기후위기, 인구감소, 어획량 저하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오늘날의 어촌은 ‘살아있는

생태 공동체’로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그 전환의 핵심에는 문화가 자리한다. 특히 항만도시와 어촌의 경계가 흐려진 도시화된 어촌에서는 예술과 문화가 지역의 서사와 가치를 복원하고 미래 가능성을 실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부산처럼 대형 항만과 전통어촌이 혼재한 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공공예술은 지역 주민의 기억, 해양 생태계와의 관계, 오래된 노동의 감각 등을 시각화하고, 이를 통한 공간의 재서사를 구성한다. 이는 곧 어촌이 단순한 산업의 장소가 아닌 ‘문화적 장소’로서 전환되는 계기다. 창작자와 기획자들이 어촌을 실험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과거의 폐쇄적 공동체가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열린다. 이처럼 예술을 매개로 한 어촌의 문화적 전환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자 새로운 신어촌의 모델을 만들어어나가는 과정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흐름이 강화된다면 한국 어촌은 더이상 쇠퇴의 상징이 아닌 미래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의 어촌은 소멸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어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작고 폐쇄적이며 고령화로 사라질 운명이라는 시각)은 오히려 전환의 계기가 된다. 어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구체적으로 변화해왔으며, 특히 항만이라는 공간은 이제 단순한 어획과 정착의 장소가 아닌, 국제 물류와 해양산업, 이동과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변화된 어촌은 신어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부산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서 태평양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어촌의 지속가능성은 산업적 전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변화된 항만과 신어촌의 풍경은 예술적 언어로 해석되고, 기록되며 재맥락화되

어야 한다. 이는 단지 아카이빙이나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콘텐츠로 재구성되고 시대적 상상력으로 다시 제안되어야 한다. 결국, 신어촌은 산업과 예술, 기술과 인문이 교차하는 복합적 플랫폼이며 그 안에서 생성되는 문화는 다가오는 해양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어촌은 소멸이 아닌 전환의 공간이며, 그 끝에는 언제나 예술이 머무른다.



신활력사업 주민 갈등 해소 방안

김영호 |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어촌신활력 순천시 용두항 센터장

어촌신활력에서 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민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가부(可否)를 분명히 하며, 약속을 잘 지킬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信賴)를 받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어촌신활력 사업은 다양한 지역주민과 단체, 행정, 활동가, 전문가, 기업 등등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어촌신활력 사업은 태생적으로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서로 다른 단체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이해(理解)와 욕구(欲求)를 가진 사람과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갈등(葛藤)이다.

어촌신활력에서 갈등(葛藤)을 해결(解決)하는 방안(方案)은 각 구성원들의 협의회가 목적이 다름을 이해(理解)하고 인정(認定)하며, 서로가 솔직(率直)하게 대화(對話)하고, 가부(可否)를 분명(分明)히 하며, 약속을 잘 지킬 때 신뢰(信賴)를 바탕으로 각 구성원들이 공감(共感)하는 것이다.

갈등(Conflict)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情緒)들이 충돌되는 현상(現狀)이라고 했다(심리학용어), 갈등(葛藤)은 한자로 침과 등나무를 뜻하며, 침은 오른 쪽으로 나무를 감으며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나무를 감으며 올라간다. 단단한 침과 등나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서로 엉켜있는 상황을 말하며,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 되고,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등나무와 침이 엉켜있는 상황으로 묘사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단한 등나무와 침이 서로 엉켜있으니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엉켜있는 등나무와 침을 원 상태로 풀 수는 없으니 그 자체로 보면 엉켜있지 않는 등나무와 침보다 더 단단한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해보면 고집(固執)센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강(強)하게 충돌(衝突)해서 마찰(摩擦)도 일어나고 분쟁(紛爭)도 일어나지만,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신뢰(信賴)를 바탕으로 공감(共感)하여 고집 센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合)하면 그 누구도 꺾지 못하는 단단한 결합력(結合力)이 생기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목적이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사업을 벌이면 이해관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합하면 그 어떤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조직력(組織力)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어촌신활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 공동(共同)의 목적(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갈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마음을 합치면 공동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화합하고 단결할 것이다. 마치 단단한 칩과 등나무가 서로 꼭 엉켜있는 상태(狀態)처럼 말이다. 칩과 등나무가 단단히 얹힌 것처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칩과 등나무의 단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어촌신활력 사업을 추진할 때 어촌신활력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촌신활력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다. 행정은 거시적인 성과물이 중요하고, 주민은 경제적 이익과 혜택이 중요하다. 활동가는 현장이 중요하고 전문가는 사업 명분이 중요하며 기업은 이윤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가치가 더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두가 어촌신활력 사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치의 무게 점이 다른 집단이 어촌신활력이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다. 즉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들이 모인 곳이 어촌신활력 사업이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촌신활력 사업은 태생적으로 갈등을 안고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촌신활력 사업에서 갈등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 마치 생명이 태어날 때 DNA를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어촌신활력은 시작할 때부터 갈등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어촌신활력 사업에서 갈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할 경우 개인 민원과 집단민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어촌신활력 사업이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신활력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어촌신활력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주민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솔직함으로 대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어촌신활력 사업의 내용과 예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분명(分明)히 이해(理解)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대답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불만을 제기(提起)하는 근거(根據)가 되고 결국 갈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부(可否)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어촌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대화할 때 솔직하게 말하고, 가부를 분명하게 하고, 약속을 잘 지킬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실천되면 도시재생에서 갈등 해결 방안은 서로의 목적이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ChatGPT

갈등 해소 방안	설명	효과
1. 주민참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마련	- 사업 초기부터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등)를 구성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 특정 소수의 의견이 사업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갈등 해소 방안	설명	효과
2. 중립적 제3자 (중재자나 퍼실리테이터) 개입	- 갈등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중립 기관이 갈등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수행	-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합의점 도출 가능
3.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 사업 진행 상황, 예산,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자료는 마을 게시판, SNS, 소통 회의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함	- 불신과 오해를 예방하고, 주민 간 소문이나 오정보로 인한 갈등 감소
4.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워크숍 및 의견 청취회	- 다양한 주민집단(어업인, 비어업인, 여성, 청년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	-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만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음
5. 공익적 가치 공유와 공동의 비전 설정	-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목표를 주민 모두의 이익으로 설정	- 사업이 개인 이익 추구가 아닌 마을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갈등을 줄임

Gemini

갈등 해소 방안	내용	방법
1. 초기 단계부터 주민참여 보장 및 소통 채널 강화	- 장기적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사업의 목표, 내용, 기대효과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운영을 활성화
	-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온라인 커뮤니티, 제안함, 민원 접수처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불편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
2.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 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업 예산, 추진 일정, 선정 기준, 참여 주체 등 모든 사업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줄임
	- 객관적인 자료 기반의 의사결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
3. 주민 맞춤형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	•유사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 이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됨
	- 갈등 관리 및 해결 교육	•주민 리더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및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갈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사업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주민들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예: 마을기업 운영,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제공하여 자립심을 키워 줌

갈등 해소 방안	내용	방법
4. 객관적인 중재 및 갈등 조정 기구 활용	-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의 중재	•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될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나 중립적인 기관(예: 갈등 조정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상생 협약 체결 유도	• 사업 성공을 위해 주민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기여
5. 성과 공유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 사업성과 공유 및 주민 기여 인정	•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
	- 이익 배분 및 지역 환원 계획 명확화	•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하고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공유하여 갈등 요소를 최소화
	-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피드백 반영	•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임



바다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꿈

-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실험과 가능성 -

박 희 광 |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장

1. 들어가며: 어촌, 다시 바라보다

도시인의 눈에 비친 어촌의 첫인상

도시재생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제게, 어촌은 한때 ‘그림 같은 풍경’에 머물러 있던 곳이었습다. 육지의 공간이 도시계획과 설계, 기반 시설, 커뮤니티 디자인 등을 통해 새롭게 숨을 불어넣는 곳이라면, 어촌은 바다라는 변수 앞에 마치 자연에 내맡겨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비할 골목도, 활성화할 상권도 없고, 오히려 갈수록 사라져가는 집들과 떠나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곳. 그저 관광객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계절적 풍경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것이 솔직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참여 제안을 받고 이가리항을 처음 찾았을 때,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가리항과의 첫 만남

포항시 북구 청하하면 이라기 항구가 있는 마을, 이가리항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포항에서 살았지만,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텅그러니 서 있는 큰 카페 건물이 부두와 방파제, 인적이 드문 골목, 닫힌 식당들... 도시에서 ‘쇠퇴 지역’이라 불리던 풍경과도 유사했지만, 그 안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삶의 끈기’와 ‘자연과의 공존’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어쩌면 어촌에서는 더



절실하고도 치열하게 실천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시가 정책과 제도 위에서 재생된다면, 어촌은 사람들의 기억과 일상 속에서 조용히 버티며 살아가는 중이었습시다.

그 첫 방문 이후, 저는 이가리항을 ‘도시재생의 연장선이자, 더 본질적인 삶의 재생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능성을 도시적 언어가 아닌 바다와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저는 도시에서 살던 한 사람이자, 지역재생을 고민해 온 한 사람으로서 이가리항에서 만난 어촌의 현재와 가능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사람과 바다가 있었습니다.

2.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소개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이가리항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위치한 소규모 어촌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이곳은 2020년대 중반까지도 관광 자원화가 활발하지 않았고, 주민 다수가 고령이며 어업 기반도 점차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합 활성화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가리항은 2023년 사업 시행 첫해에 선정된 30개 사업단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외부 인구 유입, 관광 자원 개발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어촌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핵심 목표는 단순히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사람, 도시와 어촌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2) 주민과 함께 시작한 사업단 구성

처음부터, 이 사업은 외부 전문가 중심이 아닌, 포항 주민 주도형 협력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포항시 도시재생사업팀장 출신, 포항을 떠났다가 다시 포항으로 돌아온 청년 디자이너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을 구성했고, 단장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속도”를 존중했습니다.

무언가를 빠르게 바꾸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움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마을 좌담회, 해변 청소, 마을지도 그리기 등 소소한 참여 활동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 주요 추진 사업 개요

아래는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이 지난 1~2년간 진행해온 대표적인 시도들입니다:

가. 어촌 주민 돌봄 사업

- 주민 건강 돌봄 사업 (의료 봉사단 유치, 보건소 정기 검진 실시)
- 건강돌봄 체조 교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 등

나. 바다놀이터 & 해양문화체험장 운영

-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위한 해양생태 체험, 바다 놀이터 조성

다. 청년 활동가 유입 프로그램

- 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자, 여행 작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초청 및 체류 지원

라. SNS 기반 마을 브랜딩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활용해 마을 주민 이야기, 바다 풍경,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콘텐츠화
- 주요 해시태그: #이가리항 #어촌살이 #관계인구 #바다와함께

마. 직접 수산물 판매와 로컬마켓 연계

- 소규모 수산물 장터 운영 및 포항 도시 지역과 연계한 마켓 테스트 진행

바. 마을 투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시 방문객 대상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 해양스포츠 체험, 창업특강 강의 등

이러한 시도들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계인구 형성, 지속가능한 로컬경제 기반 마련, 주민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3. 새로운 연결: 마을 주민과 출향인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의 희망

1)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한 어촌

2023년, 이가리 마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이가리항은 마을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민과 출향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마을의 오랜 고민과 열망이 응축된 결정이었습니다.

수산자원 고갈, 고령화, 외부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어촌은 점점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다림보다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2) 73명의 손으로 세운 마을협동조합

2023년 12월 9일, 이가리 마을회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려 61명의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가리마을협동조합 창립총회.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심의,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마을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결정들이 이뤄졌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정장식 씨는 이가리 출신으로, 마을과 주민 사정에 밝은 지역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마을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이가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조직이 아닌, 어촌의 자립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기반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3) 폐교에서 시작하는 어촌의 재창조

이 협동조합의 상징적 출발점은 구 이가초등학교입니다.

마을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교를, 주민들은 다시 '살아 숨 쉬는 장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 구 이가초 부지를 활용한 캠핑장 조성 및 어촌체험장 운영
-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판매 사업
- 농어촌 민박, 지역 식문화 체험 등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
- 카약, 해양 생태 체험 등 해양레저 프로그램 기획

이는 더 이상 어촌이 '볼거리 없는 마을'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며 배우고 느끼고 소비하는 마을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경북교육청의 폐교활용 공모사업 선정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거치며 탄탄하게 다져졌습니다.

4)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된 어촌의 경제 자립

특히 이 협동조합에는 출향 이가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지에 거주하지만, 이가리의 과거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마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관계인구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공동의 기억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 브랜드와 경제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어촌이 꿈꾸는 미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촌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내리며, '어촌도 뭔가 해야 한다'는 시선 속에서

정작 어촌 스스로의 목소리는 작게 다뤄졌고, 마을 사람들의 삶은 뒤로 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가리항에서 우리는 달랐습니다.

바다를 품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억과 땀, 그리고 마을이 간직한 공간과 관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었습니다.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단순한 공간 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 자체를 회복하는 재생이며,

자연과 가까운 삶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존중

돈보다 오래 남는 가치

이 모든 것이 어촌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언어로,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낼 수 있다면,

어촌은 단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실험장이자 안식처, 그리고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가리항은,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마을'이 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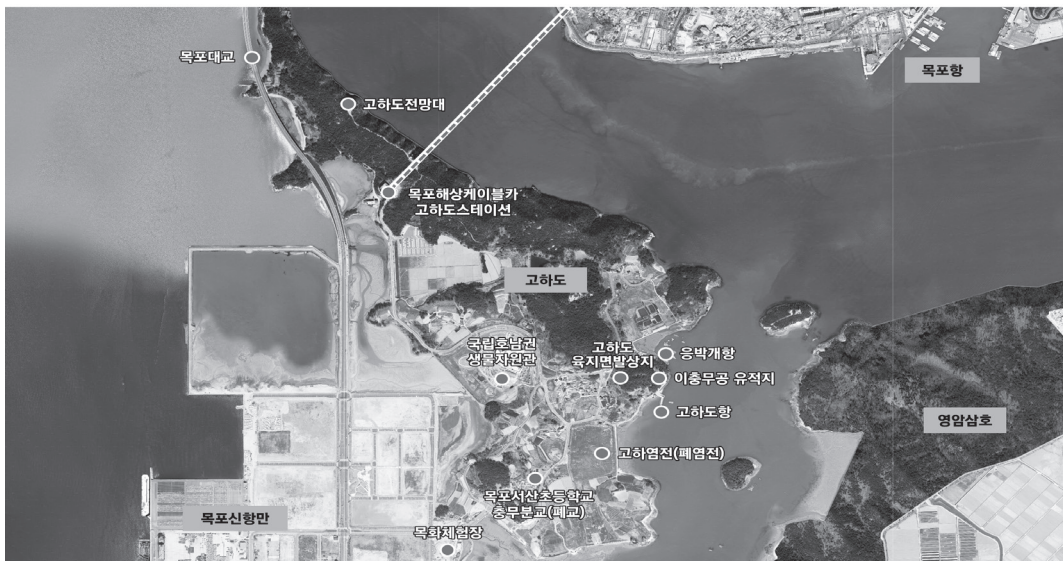
그리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섬 지역 변화에 따른 로컬리티 구축 방향

- 고하도 사례를 통한 실천적 접근 -

조민철 | 목포 고하도마을협동조합



〈그림〉 고하도 위치와 지역 자원 현황

I. 머릿말

고하도는 행정구역상 목포시 달동에 속한 섬으로, 목포항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 2012년 목포대교가 건설되며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주민등록상 인구는 약 200여명으로 집계되나 실제 거주인구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하도는 동쪽에서 흘러오는 영산강 물줄기를 정면으로 맞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목포항과 유달산을 마주하고 있다. 육지와 인접한 고하도는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해상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산강을 통해 육지로 들어가고자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자 반대로 육지에서 서해로 나아가기 위한 해상로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고하도는 보통의 다른 섬들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과 연결되었으며,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보통의 도서 지역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큰 변화들이 고하도에서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고하도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선택의 여지 없이 대부분 수용해야만 했다. 모든 변화가 그렇듯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는 주민들에게 명과 암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주민들에게 다소의 경제적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며 또 다른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변화는 지속되었다. 아울러 섬의 문화와 정체성은 점차 사라져 갔고 주민들은 다가오는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데 급급했다. 이제 고하도는 고령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맞닥뜨리며 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하도 지역의 변화가 주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발표자가 직접 주민들과 협력하며 주민들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서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하도 로컬리티¹⁾ 구축의 방향성과 실천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고하도 지역의 변화와 주민들의 삶

고하도는 역사적으로 두 차례의 중대한 사건에 등장하였으며, 해당 사건들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공간 속에 물리적으로 남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고하도가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을 드러내며, 이는 곧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최근 들어 고하도는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연륙교의 건설을 계기로 압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물리적·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국면마다 고하도 주민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화에 순응하며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생활 양식을 형성해 왔으며, 이는 도서지역 주민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1) 이번 발표에서 사용하는 로컬리티(locality)의 개념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계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도린 매시(Doreen Massey)의 '관계적 공간성(relational spatiality)' 이론에 기반하며, 지역의 정체성은 고정된 속성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의 중첩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1. 역사 속의 고하도

고하도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임진왜란 당시로, 조선 수군이 명량해전 이후 해군 전력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 고하도를 주요 거점으로 삼으면서이다. 고하도는 겨울철 군사 활동에 유리하고, 전선(戰船)을 건조하기에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으며, 군량 확보에도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고하도에 106일간 유진(留陣)하며 전선 40척을 추가 건조하고, 병력 2천여 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이후 고하도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고하도가 이충무공 유적지로서 민·관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고하도는 당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이충무공 사적지 탐방 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주민들이 매년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현재에도 고하도에는 이순신 장군의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사 유산으로 남아 있다.

한편, 고하도의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은 1897년 목포항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한 시기에 나타난다. 이 시기 고하도의 전략적 지리적 가치가 부각되며 외세의 개입과 식민지적 수탈이 본격화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고하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러시아는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부동항 확보 차원에서 고하도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맞서 일본은 민간인을 동원하여 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무안감리 진상언과 주민들은 러·일 양국의 토지 매입 시도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고하도 전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일본은 고하도의 기후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에서 재배가 어려웠던 육지면(陸地棉)의 시험 재배를 이곳에서 시도하였고, 이는 한국 최초의 육지면 재배 성공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하도는 온난하고 습윤한 기후, 200일 이상의 무상기일 등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지역에 육지면 재배가 확대 되었다. 이 같은 면화 생산은 목포가 전국 3대 향만이자 6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현재 고하도에는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목화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의 과거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산업화와 고하도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하던 시기인 1963년 고하도는 무안군에서 목포시로 편입 되었다. 이후 고하도는 목포시의 도시 공간 확장과 산업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81년 영산강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해수 염분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하도 경제의 한축이

었던 염전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하게 된다. 염전에서 일하던 일부 마을주민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모색해야 했으며, 1980~90년대에는 고하도 서쪽 일대에 맨손어업 허가 어장과 지주식 김 양식장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었다. 당시 고하도 전 가구가 맨손어업에 종사할 만큼 이 생업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목포 신항만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섬 주변 토지매립이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지주식 김 양식이 중단되었으며, 1995년 목포항이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맨손어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갯벌에 의존하던 주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또다시 새로운 생계 수단을 모색해야 했다. 이후, 고하도 주민들은 기후에 적합하고 성장 속도가 빠른 무화과 재배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이 작물은 고하도 농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하도에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건설이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고하도와 허사도 해안이 매립되어 목포 신외항이 개항되었으며, 2012년 목포 북항과 신외항을 연결하는 목포대교가 완공되었다. 이로 인해 고하도의 위치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으며, 신외항, 서해안 고속도로, 대불산단 등 주변 거점시설과의 연계성도 강화되었다. 특히, 연륙교 건설은 섬의 고립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섬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교통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고하도는 육지와의 연결이 용이해졌으며, 고하도를 통한 바다로의 진출과 도시 확장의 가능성도 확대되었다.

3. 고하도의 도시화 진행

목포대교 건설 이후 고하도는 도시 근교이면서 차로 이동이 가능하고 비교적 낮은 지가로 개발 수용의 압력을 거세게 받게 된다. 그 결과 목포 신외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이 유입되며 고하도에는 각종 민·관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2017년 고하도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어 업무, 판매, 주거 등의 항만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들이 들어섰다. 이후 2024년 미래전략산업인 해상풍력분야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국가산업발전의 전진기지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9년 목포해상케이블카가 목포 북항에서 고하도로 연결되어 운행을 시작하였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건립되어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2020년 국내 유일의 목화체험장과 어린이놀이터가 4000㎡ 규모로 조성되었고, 2021년 고하도 해상데크 개통, 2022년 고하도 전망대가 완공되며 고하도는 관광지로서 진용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갈등과 대립에 직면하게 된다.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약간의 보상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수용하는 형태로 마무리

리 되었다. 이것은 고하도에 입지한 행정 및 민간 기관과 주민간에 오해와 불신이 쌓이는 원인이 되었으며, 상호 소통과 교류가 거의 없이 새로운 관계 맺기는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고하도의 사례는 개발과 보전, 경제적 성장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고하도의 도시화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장을 넘어, 주민 참여 기반의 계획 수립과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구조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지역 주민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고하도의 도시화 과정은 향후 유사 지역 개발에 있어 교훈적 사례로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고하도 로컬리티 구축 방향

지역 로컬리티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나 지리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해당 지역이 보유한 자원들의 총합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정의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하도의 로컬리티는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변화의 중심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고하도 로컬리티 구축의 방향은 주민 스스로의 역할 강화와 자율적인 변화 추동을 핵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 커뮤니티 구조와 사회 조직 내에 주민들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어촌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전통적 조직 외에, 지역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 그리고 다수 주민들의 생업 종사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제약은 이러한 조직 형성 및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외부 인적 자원의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지원 체계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하도 주민들은 2024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주에 한 번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 자원의 활용 방안과 공동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등 주민 주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고하도 내 다양한 자원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역사성 차용이나 지역 내 기관과의 형식적인 협력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계 구조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2024년 가을 고하도 주민들은 그동안 상호소통이 부족했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고하도 쉼셋 마켓’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이 행사는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목포시 청년 기업 등이 참여하여 플리마켓 및 체험 프로그램

램을 운영하였으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장소 제공 및 전시관 무료 개방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행사는 단발성 행사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해 나가는 지속적 프로젝트로서 현재는 ‘기후행동’²⁾을 주제로 한 ‘고하도 썬셋 마켓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열린 자세로 주민과 협력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지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에도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대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고하도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고하도는 개발의 진전과 함께 구성원의 인식과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제 단순 보상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 방식에 더 이상 수용적이지 않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 속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고하도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월호 생명기억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목포시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한 사례로 공공성과 지역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고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주민 참여형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고하도 로컬리티 구축의 방향은 단순한 도시 팽창 수용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변화와 협력을 통해 정체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결국 고하도의 로컬리티 구축은 단순히 외부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수용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외부 자원들과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적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실천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급속한 도시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하도 주민들은 협동조합 설립, 자원 연계 기반의 지역축제 기획, 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지역 내부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2)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산업, 정부 및 지역 사회가 취하는 모든 노력과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말하며, 고하도 썬셋 마켓 시즌2는 지역의 행사를 넘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후 행동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IV. 맺음말

고하도는 목포대교 개통 이후 도시 인프라와 관광 시설, 국가 전략산업의 유입 등 다양한 외부 변화 속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은 지역의 물리적 변화를 촉진했지만, 주민과 행정·민간 주체 간의 소통 부재와 신뢰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주변화되었고 갈등은 일시적인 보상으로 봉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실패하였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고하도의 정체성을 단순한 지리적 특성이 아닌 ‘로컬리티’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하며, 주민들이 지역 변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천적 활동에 참여하며 고하도 내 변화가 지역 내부의 역량에 기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의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토대로 고하도 로컬리티 강화 방안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자생적 구조 개편, 자원 간 실질적 연계,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하도 쉼셋 마켓’은 주민-기관간 협력 프로젝트로 주민-기관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발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로컬리티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 다양한 외부 자원과의 연계 속에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 고하도의 변화는 단지 공간적 확장이나 산업적 성장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외부 자원에 대한 개방성, 행정의 유연한 지원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이것이 고하도 로컬리티 구축의 핵심적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참고문헌

- 도린 매시, 「공간을 위하여」, 박경환, 이영민, 이용균 옮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심산출판사, 2016.
최성환, 「일제강점기 고하도 역사유적과 활용방안」, 고하도 역사 재조명 학술대회, 2017.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조선 수군의 재건활동과 고하도」, 도서문화 제52집, 2018
최성환, 「목포 고하도 일제강점기 역사유적의 내력과 그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61(2017.6.30.), 2017.

해상풍력 발전사업 이익공유 모델 설계 방안

-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이 승 래 | (유)메가플래닛 대표이사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해상풍력은 12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발전 18.3GW 중 상당 부분을 해상풍력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상풍력 사업은 대규모 자본투자와 장기간 운영을 특징으로 하며, 신안군의 48조원 규모 8.2GW 단지, 울산시의 36조원 규모 6GW 부유식 단지 등 메가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부족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NIMBY 현상을 넘어, 지역사회는 환경적 편익은 전국민이 공유하는 반면 시각적 영향, 소음, 어업 피해 등 부담은 특정 지역이 전담하는 구조적 불공정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공유 모델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지역사회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전략적 접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햇빛연금 사업에서 16,333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누적 247억원을 배당받으며 전국 유일 2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한 것은 이익공유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2. 이익공유 모델의 이론적 기초

학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을 사회정치적, 공동체, 시장 수용성의 3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여기서 공동체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의 수용성으로

지역 이익과 정체성이 핵심 영향 요인입니다.

전통적인 NIMBY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통합 접근이 제시됩니다. 절차적 정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포용적 참여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분배적 정의는 편익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합니다.

Porter와 Kramer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출 이론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창출을 추구합니다. 이는 기존 CSR이 비용 중심의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것과 달리, 내재적 동기에 기반한 가치 창출 중심 접근입니다.

지역사회 소유권 개념은 완전 소유 모델, 공동 벤처 모델, 수익 공유 모델, 분할 소유 모델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모델은 민주적 거버넌스, 지역 이익 우선, 에너지 독립성 강화라는 공통 특징을 갖습니다.

3. 주민 참여 방식의 다양성

주민 참여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형 참여 모델입니다. 이는 가장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참여 형태로 평가됩니다. 신안군 햇빛연금 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16,333명이 가입비 1만원으로 참여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분에 참여합니다. 조합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수익 배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형 참여 모델입니다. 주민이 개인별로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에서 600명의 주민이 200억원 규모로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 한도는 일반주민 3,000만원, 인접주민과 농축산업인 4,500만원, 어업인 6,0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고용참여형 모델입니다. 지역주민의 직접 고용을 통한 이익 공유 방식으로, 건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됩니다.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12만개 일자리 창출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2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해상풍력 1MW당 약 15명의 건설 일자리와 연간 0.5명의 상시 고용이 창출됩니다.

네 번째는 특별참여형 모델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를 위한 맞춤형 참여 방식으로, 어업인 대상 어업피해보상과 연계한 참여, 농업인 대상 영농형 태양광과 연계한 참여, 청년층 대상 창업 지원과 연계한 참여 등이 있습니다.



4. 수익 배분 구조의 설계

수익 배분은 개인별 배당과 공동체 기금 조성의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개인별 배당은 참여 형태와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현행 주민참여사업에서 1인당 월평균 300만원, 연간 3,500만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배당 산정 방식은 발전량 기준과 수익률 기준으로 구분되며, 신안군의 경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공동체 기금은 개인 배당과 별도로 지역사회 공동 이익을 위해 조성됩니다. 영국 오크니 커뮤니티 윈드팜의 경우 연간 7억원 규모의 커뮤니티 베네핏 펀드를 운영하여 지역 발전 사업에 활용합니다. 기금은 교육문화 지원, 인프라 개선, 복지 확대,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활용됩니다.

수익 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거리비례, 피해비례, 기여비례, 균등배분 등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입비 면제, 추가 배당, 우선 혜택을 제공합니다.

5.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은 100MW 규모로 총사업비 5,300억원이 투입되며, 주민 참여는 루트 에너지 주관으로 전체 사업의 5% 지분에 참여합니다. 가장 인접한 수원리 마을 주민 600명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200억원을 투자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안군 햇빛연금 사업은 2018년 10월 제정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 의무적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체 군민 38,000명 중 16,333명이 참여하여 가입비 1만원으로 동일한 수익권을 갖습니다. 누적 배당 실적은 총 247억원이며, 전국 유일 2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오크니 커뮤니티 윈드팜은 3개 사이트 총 86.4MW로 오크니 제도 의회가 100% 소유하는 완전 공공 소유 모델입니다. 연간 수익은 550만 파운드에 달하며, 이 중 43만 2천 파운드를 커뮤니티 베네핏 펀드로 조성합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법을 통한 20년간 고정가격 보장과 시민 에너지 특별 조항을 통해 2016년 기준 1,024개 에너지협동조합이 등록되어 독일 풍력 설비용량의 50%를 시민이 소유하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6. 기대 효과와 정책적 함의

경제적 기대 효과로는 해상풍력 12GW 목표 달성 시 총 건설투자비 60조원 중 주민참여 5% 가정하면 3조원 규모의 주민 투자가 예상됩니다. 연 7% 수익률 기준으로 연간 2,100억원의 주민 배당이 발생하며, 12GW 기준으로 건설 단계 18만명, 운영 단계 6,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기대 효과로는 주민 수용성 제고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의 민원 제로 운영, 제주 한림의 갈등 최소화 사례는 이익공유의 갈등 예방 효과를 입증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력이 강화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환경적 기대 효과로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향상이 가능하고, 이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합니다. 해상풍력 12GW는 연간 2,400만톤 CO2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7. 정책 제언

단기 정책 과제로는 해상풍력특별법 조기 제정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야 합의를 통한 연내 통과가 필요합니다. REC 가중치 제도 안정화와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기 정책 과제로는 주민참여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또는 100MW 이상 사업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해상풍력 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하여 공공주도 개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기 정책 과제로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안군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과 주민참여를 연계해야 합니다.

8. 결론

해상풍력 발전사업 이익공유 모델은 단순한 보상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주요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이익공유는 주민 수용성 제고의 핵심 수단입니다. 신안군의 전국 유일 인구 증가, 태백 가덕산의 민원 제로 운영 사례는 사전 참여를 통한 예방적 갈등 관리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둘째, 다양한 참여 모델의 지역별 맞춤 적용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모델 선택이 성공의 관건이며, 획일적 접근보다는 지역 특성 기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제도적 기반의 체계적 구축이 선결과제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주민참여 의무화,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한 제도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경제적 실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경제적 수익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등 다차원적 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이익공유 모델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기술적 목표 달성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 확보, 지역 상생 발전,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문화학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발전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출렁이고 변화하는 섬

-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안 종 경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I. 섬의 특성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과 연결된 반도 국가로 3,383개의 유인섬과 무인섬을 포함(제주 본도 제외)하고 있다.¹⁾ 한반도의 해안 지역은 상당한 지형적, 문화적, 생태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해, 남해, 동해는 각각 특징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해류와 조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²⁾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는 울릉도와 독도 같은 화산섬이 대표적이며, 서해안과 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스 해안선과 수심이 얕아 간석지가 발달하여 세계 5대 갯벌(대한민국 서해안 갯벌,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아마존강 유역 연안, 북해 연안)*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 섬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하구로 정의되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류와 새우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고 이는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섬이란 어떤 것일까? 육지부에서는 관광과 힐링을 위해 섬을 찾아가는 경우와 섬이 삶의 터전인 주민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섬 지역은 여타 지역과 다르게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섬의 특성을 이해하여 특성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 한국섬진흥원, 2022년 12월 기준

2) 홍선기·아담 그리데호이, 「2022, 한국의 지속가능한 섬 지역 사회와 어촌: 도전, 기회, 그리고 한계」, 『기후변화에 도서의 적응성 특별호』, p.

섬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소우주으로써 섬에도 정부 각 부처의 업무가 일원화로 내재 되어 공존하고 정주하는데, 보편적인 요구(needs)로 섬 지역에서도 육지부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덧붙여 섬에 대한 개발 정책은 육지부와 달리 개별 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³⁾ 그렇다면 ‘가고 싶은 섬’과 ‘살고 싶은 섬’의 두 명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육지부에 비해 나올 것이 없는 섬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접근이 불편한 격절성, 사방이 물로 싸여있는 환해성, 섬 면적의 협소성은 생활하는데 단점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육지부와 차별화된 해안 경관의 가치, 문화 다양성의 가치, 청정의 가치를 장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섬은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작은 육지이다. 바다·강·호수 내에 존재하며 섬이라고 말한다. 간척이나 매립이 되었거나 방파제·방조제·교량 등으로 연륙이 된 섬과 제주의 본섬은 제외한다.⁴⁾ 우리나라 섬은 주로 서남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3,383개(유인섬 467개, 무인섬 2,916개)로 국토 면적의 4%가량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전라남도는 2,014개(유인섬 272개, 무인섬 1,742개)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경상남도는 552개(유인섬 77개, 무인섬 475개)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섬 중에 유인섬의 비율은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큰 섬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섬은 경상남도의 거제도(401,600㎢)이며, 무인섬은 인천광역시의 선미도(129만114㎡)이다.⁵⁾ 참고로 북한은 1,045개(유인섬 128개, 무인섬 917개)로.⁶⁾ 한반도는 총 4,428개(유인섬 595개, 무인섬 3,833개)이다.

[표-1] 전국 섬 통계

구 분	총 계(단위: 개)	유인섬	무인섬	비 율
총 계	3,383	467	2,916	100.0%
부산광역시	45	3	42	1.3
인천광역시	192	40	152	5.6
울산광역시	4	-	4	0.1
경기도	42	5	37	1.2
강원도	29	-	29	0.
충청남도	286	34	252	8.5
전라북도	130	25	105	3.8

3) 신순호, 2021, 「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 『박영사』, p.5.

4) 섬 개발 촉진법 제2항

5) 행정안전부, 2025,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종합제공,

6) 이재연, 2023, 「북한의 섬 1·2」, 『이에도』

구 분	총 계(단위: 개)	유인섬	무인섬	비 율
전라남도	2,014	272	1,742	59.6
경상북도	22	3	19	0.7
경상남도	552	77	475	16.3
제주특별자치도	67	8	59	2.2
북 한	1,045	128	917	100.0%

1) 한국섬진흥원 2022년 12월 기준(북한은 저자 재구성). 2) 제주 본도(1) 제외

섬은 육지부와 달리 육상교통 수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상교통만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삶의 정주 여건과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섬은 급속한 도시화로 지역성과 장소성이 상실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융·복합이 어우러지는 섬에서도 육지부의 유행이나 각종 정보를 쉽게 시공을 초월하여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지역 문화와 생태·관광·치유·지역산업 등이 삶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EZZ)과 긴 해안선과 대륙붕, 그리고 갯벌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으로 섬은 해양영토, 경제영토, 생활영토로서 계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섬 연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1. 섬의 지리적 특성

1) 섬의 지리적 특성

섬의 지리적 특성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육지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 고립성과 자원 제한이 한정적(공간, 생계 수단, 생활 수준 등)인데 이 글에서는 격절성, 환해성, 협소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격절성: 격절성은 섬이 육지나 다른 섬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섬 주민들이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되어 생활하는 환경을 나타내며, 특히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근성이 불편한 실정이다. 이러한 격절성은 섬의 문학적 특성과 주민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종종 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7) 신순호, 2021, 「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 『박영사』, p.28.

(2) 환해성: 환해성은 섬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을 말한다. 이는 섬이 육지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해양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환해성은 섬의 생태계, 문화,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섬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자원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환해성은 섬이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어 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협소성: 협소성은 섬의 육지부에 비해 면적이 작고, 자원도 제한적이며, 생활공간이 좁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섬 주민들이 생활하고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협소성은 섬의 적정인구를 벗어나 인구가 많아지는 경우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정부 부처별 섬 지역 관련 주요 정책

육지부와 다른 요소들 때문에 현재 섬 관련 정책내용은 정부에서는 일원화가 아닌 각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첩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일원화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섬을 관리하는 부서와 정책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정부 부처별 섬 지역 관련 주요 정책

구 분	정 책 내 용
행정안전부	도서종합 개발사업,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등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업발전,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어촌뉴딜300(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내항여객선운임보조, 가고싶은 섬 등
문화체육관광부	가고싶은섬시범사업, 국토끝섬관광자원화사업, 관광개발기본계획
국토교통부	남해안개발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신발전지역(성장촉진지역해당도서)개발촉진지구 등
환경부	특정도서관리, 식수원개발, 생태자원보호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운영 및 개선사업
교육부	섬(벽지)학교운영
산림청	조림, 숲가꾸기 등 임야관리
문화재청	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소 등 지정 및 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 명품마을사업 등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상오염방제, 해상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자료: 홍장원 외, 2018,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33을 토대로 신순호 추가·수정⁸⁾

8) 홍장원 외, 2018,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인용. 신순호, 2021, 「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 『박영사』

1) 섬의 문제점

섬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1) 기후변화와 환경적 취약성: 육지부와 다르게 섬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다. 해수면 상승, 태풍의 세기와 빈도 증가, 해양 산성화, 해양쓰레기 등은 섬 주민들의 생존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섬의 생태계와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며,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고립성과 접근성의 문제: 섬의 지리적인 고립은 육지부와 교류가 제한적이다. 의료·교육·교통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며, 이는 주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질을 저하시킨다. 특히 응급 의료서비스 부족은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섬 주민들은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목포에 의대가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경제적 의존성과 자원 부족: 많은 섬은 농업과 어업에 기반하여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은 토착 산업이 육지부에 비해 대량생산이나 자동화가 어렵고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외부 경제 상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비와 함께 경제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4) 인구 감소와 고령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세대가 육지부로 이주하면서 섬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해마다 무인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섬 지역 사회와 산업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II. 좋은 섬 만들기 사업

1. 섬 정책의 동향

우리나라「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1988년부터 시작된 섬종합개발계획(이전, 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개발촉진법(이전,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낙후된 섬 지역이 생활 및 생산 소득 기반, 복지시설 정비·확충을 통해 섬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이는 섬의 발전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섬개발촉진법을 개정(2018.03.20.)을 통해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세계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목표

전라남도는 2,014개(유인섬 272개, 무인섬 1,742개)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59.6%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타·시도보다 우위 자산인 섬과 해양자원을 널리 알리고 가꾸어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 10개년 계획(2015~2024)을 시작하였다. 전라남도 섬은 청정지역에 따른 각 섬의 독특한 환경에 따라 희귀한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남도의 음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백반밥상'문화도 힐링과 더불어 육지부와 차별된 신선한 매력을 끌고 있다. 또한,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섬 여행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를 주고 있다.

섬의 경관과 고유자원을 보존하고 정비하는 것이 섬 가꾸기의 기본 방향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하고 섬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살이 섬 여행/역사, 문화를 활용한 인문학 여행/사진대회/섬 에코투어/웰빙, 치유형 섬 밥상발굴/성지순례/청정특산물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섬 휴양마을 육성 등 이 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다수의 섬에서 2~5배 증가했으며 주민 소득(민박수입+수익 기반시설 운영)도 증가했으며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 강화 등 지역 활성화가 생겨났다. 가고 싶은 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 역사와 문화예술이 존재하는 토속적인 요소요소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 여지와 보존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시·군 뿐만 아니라 섬 주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 할 수 있으며, 가고 싶은 섬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창의성이 있고 각종 지역의 요건들과 연계하여 성공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 제반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사업 제안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전라남도에서 가고 싶은 섬을⁹⁾ 결정하였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도 그 저변에는 섬 관광이 있다. 단순한 여행으로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육지부와 공유하면서 언제나 찾아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가꾸려는 방법과 책임감 있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라남도는 섬의 개수가 2,014개가 되는 많은 섬을 활용할 방안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총 24개를 선정하였다. 2015년 10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첫해에 여수 남도를 포함하여 6개의 섬을 주민 공모를 통해 지정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2개씩 14개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2023년 4개를 선정하여 총 24개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 등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해제 이후 시행하지 못했던 부

9) 균형발전종합시스템, 2018.02.20. [전남 가볼만한 곳].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2014~2025)

분을 다시 지원하여 전라남도에서는 2029년까지 연장하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섬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지부 인구의 유입에 의한 관광과 정주 인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사업 효과 분석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전라남도의 섬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1)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 목표

(1) 사업 주요 목표

①관광 활성화: 이 사업은 섬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고흥 연흥도와 같은 섬은 매년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변모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②주민 생활환경 개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법인을 설립하고, 식당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소득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관광객이 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③생태 관광 및 자원 개발: 섬의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살려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생태 복원과 문화 관광 자원화를 통해 섬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진행한다.

④주민 역량 강화: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섬을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⑤지속 가능한 발전: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섬이 단순한 관광지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안정적인 지역산업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가 연구 필요성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향후 연구 방향에서 추가 연구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주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추가 연구 필요성

- ㉠ 주민 참여와 갈등 관리 연구
- ㉡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
- ㉢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개발
- ㉣ 성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연구
- ㉥ 정체성 및 지역 특화 연구

이러한 연구들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 유사사업과 비교분석을 통한 어촌신활력사업 이해증진

안 동 훈 |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장

1.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정리

1.1 배경 및 목적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배경은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 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제한으로 소멸위험에 처한 어촌을 본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으로 구현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한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주거기반 마련과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소외된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및 유·무형의 어촌 유산을 보전·활용하여 국민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어촌 삶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의 내용으로는 타 부처 지역개발사업과 대동소이하여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평가 및 심의 위원, 사업수행자, 행정 등)들의 상호간에 해석에 차이를 보임
-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목적 및 배경, 신청자격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요건, 세부 사업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처 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1.1.1 행정안전부: 섬지역 특성화 사업

목적 및 배경	■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등 지원
사업대상	■ 특수상황지역 內 188개 개발대상섬(섬발전촉진법 제4조)
사업규모	■ 최대 9년간 48억원 지원

세부 사업내용	■ 총 4단계로 구분하여 마을발전계획수립, 역량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인프라 구축,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 ■ 1단계(역량기반 조성) : (사업기간 2년, 연 최대 2억원 지원) 주민조직화, 섬 자원조사, 주력사업 발굴, 시범사업 운영 등, 마을발전계획수립 ■ 2단계(주력분야 조성) : (사업기간 2년, 최대 9억원 지원) 사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본격 운영(교육, 자격 취득 등), 사업확장계획 수립 ■ 3단계(확장연계 조성) : (사업기간 3년, 최대 30억원 지원) 수익 창출 위한 사업 확장, 연계 추진(규모, 다양성 등), 사업자립계획 수립 ■ 4단계(자립역량 조성) : (사업기간 2년, 최대 7억원 지원) 홍보, 마케팅 등 수익기반의 마을 자립 역량 조성
기관별 역할	■ 행정안전부 : 기획 및 사업총괄, 지침 마련, 사업 대상지 선정, 종합 홍보 등 ■ 지자체 : 사업 대상지 신청 및 지원, 마을발전계획 등 수립지원, 현장관리단(PM단) 선정 및 관리, S/W사업 및 H/W사업(시설물 등) 발주 및 감독,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 현장관리단(PM단) : 주민 소통 및 역량교육, 단계별 마을계획 수립, 마을자원 조사, 사업 진행사항 모니터링, 법인설립 지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섬 주민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단계별 마을계획 수립, 사업장(시설물) 관리·운영, 법인 설립 및 운영 등

1.1.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3개 사업 유형으로 추진)

목적 및 배경	■ 국가시범지구 : 쇠퇴한 원도심 내 기반시설 이전적지,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사업 ■ 지역특화재생 :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 신속 시행
사업규모	■ 국가시범지구 최대 250억원(5년간), 지역특화재생 최대 150억원(4년간), 도시재생 인정사업 최대 50억원(3년간)
신청요건	■ 국가시범지구 : 쇠퇴지역 요건을 2개 이상 충족 지역(법 제41조) - 쇠퇴지역 요건 : 인구감소, 총사업체 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 : 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쇠퇴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
세부 사업내용	■ 지역특화재생 : ①도시브랜드화 :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상품 개발 지원 ②상권활성화 :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공간 지원 ③창업지원 :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④로컬콘텐츠타운 조성 :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사례 : ①전북 남원 도시브랜드화 : 목재 테마 가로환경 정비 및 자연친화형 안심놀이터 조성, 목재특성을 반영한 화재 안심환경 조성 / ②부산 수영구 상권활성화 :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활동 거점공간(청소년탐구센터)조성 및 동행사업, 생활 안심길 조성 등으로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③청주 서원구 상권활성화 : 중심상권 내 가로환경 개선 및 유동인구 유입 도모(청년문화 스트리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상생 플랫폼(그림플래닛) 구축 ■ 도시재생 인정사업 : 기존에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추진(①빈집·소규모 정비사업+기반시설공급, ②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화+공공임대상가 공급, ③노후 공공건축물 재생+기반시설 공급, ④노후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기반시설))

1.1.3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목적 및 배경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규모	■ 최대 5년간 100억원 이내
신청요건	■ 어촌분야 전담 지역(31개 시·군, 124개 읍·면)
세부 사업내용	■ 행복한 삶터 조성 - 방향 : 사업대상지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 공급·전달 기능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기능별 사업내용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생활SOC시설 확충(지역소득증대사업 원칙적으로 추진 불가하나, 요건 충족시 유지·관리 비용 조달을 위한 시설 가능)
	■ 다(多)가치 일터 조성 - 방향 : 지역자원을 융·복합하여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연계 특화시설 조성으로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 내용 : 전문조직(어촌특화지원센터, 농촌융복합지원센터)의 지원 또는 마을 자체적으로 발굴된 특화사업과 연계한 H/W사업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

1.1.4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목적 및 배경	■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선 및 다양한 관광·경제·문화 등의 특화된 서비스 기능 제공을 통해 농촌의 활력창출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문화·체육 복지, 보육, 교육, 거주환경 등)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중심지활성화 : 농촌 중심지(상위거점)에 문화·복지·보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기초생활거점조성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 보완 등을 위해 기초 생활 서비스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사업규모	■ 농촌중심지활성화 : 5년 이내 150억원 이내(5인 이상 전담부서 운영시 +10억) ■ 기초생활거점조성 : 5년 이내 60억원 이내(준공 후 배후마을을 연계사업 신청시 +20억, 통합형 재생거점 조성시 +60억)									
신청요건	■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기본요건 : 농촌중심지활성화(기본형, 통합형), 기초생활거점조성(기본형, 통합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① 부지요건</td><td> - (기본형)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핵심 생활SOC 시설이 읍·면소재지 거점지구 반경 500m(중심지)·300m(기초) 이내 또는 시·군청 내지는 읍·면사무소와 복합화·단지화하여 조성하는지 여부 - (통합형) 통합형 기본형은 위의 '기본형'부지 요건을 따르며, 농촌재생거점을 그 외 인구 유입 가능지역 등에 조성가능 </td></tr> <tr> <td>② 읍면대상 사업 계속지구 유무</td><td>- (공통) '24.12.31 기준 미준공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읍·면 제외</td></tr> <tr> <td>③ 서비스(배후마을 전달 등) 운영계획</td><td> - (기본형) 총사업비의 10% 이상 거점시설 및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S/W)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통합형) 생활·관계인구까지 고려하여 관광·경제·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여부 </td></tr> <tr> <td>④ 시·군 시설 운영 지원계획</td><td>- (공통) 사업을 통해 조성된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한 시·군의 운영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td></tr> </tbody> </table> ※ 농촌협약과 개별 공모 모두 적용 * 농촌협약 외 개별 공모시에는 2개 요건을 추가로 적용 ⑤ 중심성(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예정지가 1·2계층 읍·면인지 여부 등) ⑥ 사업추진계획 근거(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에 근거 포함 여부)	구분	주요내용	① 부지요건	- (기본형)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핵심 생활SOC 시설이 읍·면소재지 거점지구 반경 500m(중심지)·300m(기초) 이내 또는 시·군청 내지는 읍·면사무소와 복합화·단지화하여 조성하는지 여부 - (통합형) 통합형 기본형은 위의 '기본형'부지 요건을 따르며, 농촌재생거점을 그 외 인구 유입 가능지역 등에 조성가능	② 읍면대상 사업 계속지구 유무	- (공통) '24.12.31 기준 미준공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읍·면 제외	③ 서비스(배후마을 전달 등) 운영계획	- (기본형) 총사업비의 10% 이상 거점시설 및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S/W)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통합형) 생활·관계인구까지 고려하여 관광·경제·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여부	④ 시·군 시설 운영 지원계획
구분	주요내용									
① 부지요건	- (기본형)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핵심 생활SOC 시설이 읍·면소재지 거점지구 반경 500m(중심지)·300m(기초) 이내 또는 시·군청 내지는 읍·면사무소와 복합화·단지화하여 조성하는지 여부 - (통합형) 통합형 기본형은 위의 '기본형'부지 요건을 따르며, 농촌재생거점을 그 외 인구 유입 가능지역 등에 조성가능									
② 읍면대상 사업 계속지구 유무	- (공통) '24.12.31 기준 미준공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읍·면 제외									
③ 서비스(배후마을 전달 등) 운영계획	- (기본형) 총사업비의 10% 이상 거점시설 및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S/W)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통합형) 생활·관계인구까지 고려하여 관광·경제·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여부									
④ 시·군 시설 운영 지원계획	- (공통) 사업을 통해 조성된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한 시·군의 운영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세부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기본형) - 방향 : 중심지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전달 확대, 주민 접근성·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복합화 생활SOC시설 조성,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운영 - 내용 : 읍·면소재지(1·2계층)에 서비스 공급 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SOC시설 확충, 서비스 공급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전달 ■ 농촌중심지활성화(통합형) - 방향 : 정주민구분만 아니라 생활·관계인구까지 고려한 관광·경제·문화 등 지역자원에 기반한 특화된 기능 제공을 통해 농촌의 활력 창출 - 내용 : 농촌재생활성화지역(생활권)에서 관광·경제·문화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명소화 및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거점공간 조성 ■ 기초생활거점조성(기본형) - 방향 : 중심지 기능 보완 기초생활 거점 육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지역주민 수요조사·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서비스 기능 복합화 생활SOC시설 조성 - 내용 : 읍·면소재지(1·2계층)에 서비스 공급 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SOC시설 확충, 서비스 공급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지원 ■ 기초생활거점조성(통합형) - 총 사업비: 60억원(기본형)+60억원(재생거점)/ 방향,내용: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통합형) 준용
------------	---

1.2 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의 비교

구분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목적 및 배경	■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 정비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유도	■ 어촌지역의 경제·교육·문화·복지·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플랫폼과 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여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어촌 사회 지속성 강화 및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 -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어촌 경제거점(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형 일자리 창출 -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년 ■ 사업비 :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개소당 평균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사업기간 : 4년 - 사업비 : 개소당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민간투자 100억원 이상 별도, 소득사업 자부담 20% 이상 등) ■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사업기간 : 4년 - 사업비 : 개소당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소득사업 자부담 20% 이상 등) ■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사업기간 : 3년 - 사업비 : 개소당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소득사업 ×)

구분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청요건	■ 공간적 요건 :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대상어항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배후어촌 : 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후 어촌지역을 설정하되, 설정 사유를 제시(과도한 설정 불가) ■ 기능적 요건 ①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 ② 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본예산 확보(무분별한 공모신청 지양, 지방재정여건 감안한 공모 유도)	■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어촌 생활권 설정) ■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신청요건	■ 공간적 요건 :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대상어항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배후어촌 : 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후 어촌지역을 설정하되, 설정 사유를 제시(과도한 설정 불가) ■ 기능적 요건 ①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 ② 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본예산 확보(무분별한 공모신청 지양, 지방재정여건 감안한 공모 유도)	■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어촌 생활권 설정) ■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전담조직	■ 지자체 전담조직 - 시·군·구 어촌뉴딜 전담조직 - 시·도 어촌뉴딜 전담조직 ■ 대상지별 지역협의체 -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 ■ 해양수산부 지원조직 - 어촌뉴딜300 자문단 -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 지자체 전담조직 등 - 행정전담조직 - 행정워킹그룹(유형1, 유형2 해당) - 지역심의단 ■ 대상지별 지역협의체 등 - 지역협의체 - 앵커조직(유형2 해당) : 민간위탁 ■ 해양수산부 지원조직 - 심의·조정위원회 - 갈등관리 자문단
특이사항	■ 유형별 구분 없음 : 신청요건에 맞는 대상지 선정 후 동일한 세부 사업내용 수립	■ 유형별 구분에 따라 신청요건에 맞는 대상지 선정 후 유형별로 세부 사업내용에 맞는 사업 추진 - '유형2'의 경우, 앵커조직(민간)이 직접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 현안문제 발굴→링커조직 발굴·지원 및 사회혁신프로그램 진행의 절차를 통해 사업 진행

2. 부처별 지역개발사업 분석 정리

구분	내용
공통점	■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 - 중앙공모→지방신청→중앙심사 및 선정→사업시행(지자체 등) -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사업 시행력 담보(중앙지원, 지자체 및 주민주도 사업추진) ■ 지역재생사업 - 지역쇠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 주민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 기반시설 개선, 지역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 일자리(소득) 창출 등 - H/W, S/W 병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종합적 지원사업 ■ 지역 활성화 마중물 사업 - 사업대상지 재생 ⇒ 배후마을 및 주변지역 확산효과(활성화) 기대 -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방안으로 활용 : 생활인구, 귀농(어)·귀촌(어) 등
차이점	섬지역 특성화 사업 ■ 지원기관 : 행정안전부 ■ 사업대상 : 특수상황지역 內 188개 개발대상섬 ■ 사업기간 : 최대 9년(장기사업) ■ 사업비 : 최대 48억원 ■ 사업내용 :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역량기반 조성 : 2년, 최대 2억원/년) : 주민조직화, 섬자원조사, 주력사업 발굴, 시범사업 운영 등 마을발전계획수립 - 2단계(주력분야 조성 : 2년, 최대 9억원) : 사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본격 운영, 사업확장계획 수립 - 3단계(확장연계 조성 : 3년, 최대 30억원) : 수익 창출 위한 사업 확장, 연계 추진, 사업자립계획 수립 - 4단계(자립역량 조성 : 2년, 최대 7억원) : 홍보, 마케팅 등 수익기반의 마을 자립 역량 조성
	도시재생 공모사업 ■ 지원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대상 : 도시지역 內 쇠퇴지역 - 인구감소, 총사업체 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中 2개 이상 충족 ■ 사업기간 : 3년~5년(단기·중기사업) ■ 사업비 : 최대 250억원 ■ 사업내용 :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국가시범지구 최대 250억원(5년간) :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 활용,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지역 조성(복합형 지구단위사업) - 지역특화재생 최대 150억원(4년간) : 도시브랜드화, 상권활성화, 창업지원,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 도시재생 인정사업 최대 50억원(3년간) : 기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소규모 점 단위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 지원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 농촌지역 內 농촌 중심지 및 배후마을 등(동·洞) 지역 제외) ■ 사업기간 : 5년(중기사업) ■ 사업비 - 농촌중심지활성화 : 150억원 이내(5인 이상 전담조직 운영시 +10억) - 기초생활거점조성 : 60억원 이내(준공 후 배후마을 연계사업 신청시 +20억, 통합형 재생거점 조성시 +60억) ■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 150억원(5년간) : 농촌 중심지(상위거점)에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기초생활거점조성 60억원(5년간) : 농촌 중심지(상위거점)의 기능 보완 등을 위해 기초생활 거점 조성,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구분	내용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 (권역단위 거점개발)	■ 지원기관 : 해양수산부 ■ 사업대상 : 어촌분야 전담 지역(31개 시·군, 124개 읍·면) ■ 사업기간 : 최대 5년(중기사업) ■ 사업비 : 최대 100억원 ■ 사업내용 - 행복한 삶터 조성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기능별 사업내용 토대로 지역 맞춤형 생활 SOC시설 확충 - 다(多)가치 일터 조성 : 전문조직의 지원 또는 마을 자체적으로 발굴된 특화아이템과 연계한 H/W사업 지원,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
차 이 점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 지원기관 : 해양수산부 ■ 사업대상 -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국가어항(연안항 여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 사업기간 : 최대 3~4년(단기·중기사업) ■ 사업비 : 최대 300억원 ■ 사업내용 :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최대 300억원(4년간) : 어촌 경제거점(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 (민자유치 100억원 이상) -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최대 100억원(4년간) :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형 일자리 - 창출(어촌 생활권 설정, 앵커조직 상주) -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최대 50억원(3년간) :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소득사업 x)



